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2014. 03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013년 5월 13일 귀 부와 계약 체결한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귀 부의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완료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년 3월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이 사 장 방 기 혁

(주) 대 양 컨 설 터 트
대 표 이 사 서 규 학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원 장 김 성 귀

목 차

요약	(1)
제1장 계획의 개요	3
제1절 계획의 개요	3
제2절 추진경과 및 계획수립 체계	7
제3절 제1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10
제2장 어촌·어항의 현주소	31
제1절 어촌·어항의 위상	31
제2절 대내·외 여건 및 전망	37
제3절 현황 및 문제점	57
제4절 개발 여건분석	135
제5절 종합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206
제3장 비전 및 정책방향	223
제1절 어촌·어항 정책방향 검토	223
제2절 어촌·어항 미래상 설정	225
제4장 부문별 추진과제	239
제1절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239
제2절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296
제3절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331
제4절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371

제5장 투자계획 및 효과분석	413
제1절 투·융자계획	413
제2절 경제적 파급효과	420
제3절 일자리 창출 효과	43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451
제1절 결론	451
제2절 정책제언	452

표 목 차

〈표 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6
〈표 1.2〉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15
〈표 1.3〉 어촌관광개발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16
〈표 1.4〉 휴먼웨어 육성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17
〈표 1.5〉 어항기본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18
〈표 1.6〉 어항정비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19
〈표 1.7〉 어항환경개선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19
〈표 1.8〉 다기능어항 개발 현황	20
〈표 2.1〉 인구규모로 보는 어촌의 위상 (2012년)	32
〈표 2.2〉 경제로 보는 어촌의 위상(2012년)	32
〈표 2.3〉 도어교류·체험관광으로 보는 어촌의 위상(2012년)	33
〈표 2.4〉 삶의 질로 보는 어촌의 위상(2012년 기준)	33
〈표 2.5〉 양륙규모로 보는 어항의 위상	35
〈표 2.6〉 축제로 보는 어항의 위상	36
〈표 2.7〉 적조 현황	42
〈표 2.8〉 FTA 추진현황	47
〈표 2.9〉 어선의 선령별 척수	50
〈표 2.10〉 항별 축제 및 행사 현황	55
〈표 2.11〉 도시근교형 어촌계 현황	58
〈표 2.12〉 연안촌락형 어촌계 현황	58
〈표 2.13〉 취락지구형(도서어촌) 어촌계 현황	59
〈표 2.14〉 어가인구	60
〈표 2.15〉 어업가구	61
〈표 2.16〉 연령별 어가인구	62
〈표 2.17〉 어촌계 현황	64
〈표 2.18〉 자율관리공동체 현황	64
〈표 2.19〉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현황	65

〈표 2.20〉 사업유형별 어업법인 수	65
〈표 2.21〉 지역별 어촌공동체 현황	66
〈표 2.22〉 귀어귀촌 지원 현황	67
〈표 2.23〉 전국 다문화가정 현황	68
〈표 2.24〉 연도별 어가소득 현황	69
〈표 2.25〉 어업소득률 현황	70
〈표 2.26〉 연도별 가계소득 현황	70
〈표 2.27〉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 소득차액	71
〈표 2.28〉 어가지출 현황	72
〈표 2.29〉 어업경영비 현황	73
〈표 2.30〉 어가부채 현황	73
〈표 2.31〉 종사자 및 사업체 현황	74
〈표 2.32〉 수산계고교 졸업생 연도별 취업현황	75
〈표 2.33〉 외국인 어선원 현황	75
〈표 2.34〉 연도별 상수도 보급 현황	76
〈표 2.35〉 어촌유형별 사용식수 현황	76
〈표 2.36〉 연도별 하수도 보급 현황	77
〈표 2.37〉 어촌유형별 오수분뇨별 처리방법	77
〈표 2.38〉 전국 빈집 현황	78
〈표 2.39〉 시도별 학교시설 현황	79
〈표 2.40〉 초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위치	80
〈표 2.41〉 교육기관·시설의 적정 위치	80
〈표 2.42〉 문화 시설 이용 빈도	81
〈표 2.43〉 어촌 유형별 취약 공공서비스	82
〈표 2.44〉 의료 현황	82
〈표 2.45〉 복지 서비스 이용현황	83
〈표 2.46〉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84
〈표 2.47〉 관광기반시설 현황	85
〈표 2.48〉 연도별 관광객 방문 현황	88
〈표 2.49〉 전국 스킨스쿠버 클럽 및 동호회 현황	89
〈표 2.50〉 전국 마리나 시설 조성향 현황	90

〈표 2.51〉 전국 마리나 계류시설 규모 현황	90
〈표 2.52〉 어항 내 마리나 시설현황	92
〈표 2.53〉 국내 레저보트 등록 현황	93
〈표 2.54〉 국가어항 낚시어선 등록현황	94
〈표 2.55〉 어촌 찾아가기 현황	96
〈표 2.56〉 바다관광 사이트 이용자 현황	96
〈표 2.57〉 바다해설사 교육 현황	97
〈표 2.58〉 수산업 경영인 양성 현황	97
〈표 2.59〉 명인 지정 현황	98
〈표 2.60〉 어항의 종류	100
〈표 2.61〉 항종별·연도별 어항지정 현황	101
〈표 2.62〉 연도별 소규모항포구 현황	101
〈표 2.63〉 시·도별 항종별 분포현황	102
〈표 2.64〉 어항지정기준 변천	104
〈표 2.65〉 어항지정기준 변천(계속)	105
〈표 2.66〉 현행 어항지정기준 (8차 개정)	106
〈표 2.67〉 국가어항 지정기준 항목별 미달 항	107
〈표 2.68〉 국가어항 투자실적	110
〈표 2.69〉 지방어항 투자실적	111
〈표 2.70〉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112
〈표 2.71〉 소규모항포구 투자실적	113
〈표 2.72〉 국가어항 어항정비사업 투자실적(최근 5년간)	115
〈표 2.73〉 지방어항 보수보강 실적(2009~2012년)	116
〈표 2.74〉 어촌정주어항 피해원인별 보수보강 실적(2009~2012년)	117
〈표 2.75〉 다기능어항 시범사업 현황	119
〈표 2.76〉 이용고도화 사업 현황	120
〈표 2.77〉 항별 입항빈도 상위 10개 항 분포도 및 항종별 어선이용실태	121
〈표 2.78〉 국가어항 도사육지별 외래어선 어선이용실태	122
〈표 2.79〉 항종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 현황(최근 3년 평균)	123
〈표 2.80〉 시도별·항종별 위판장 현황	124
〈표 2.81〉 경과 연수별 위판장 현황	125

〈표 2.82〉 위생기준별 위판장 현황	125
〈표 2.83〉 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현황	126
〈표 2.84〉 국가어항내 어촌관광구역 설정 현황	127
〈표 2.85〉 어촌관광구역내 민자유치 가능부지	128
〈표 2.86〉 유보지 설정 대상항	129
〈표 2.87〉 시도별 불법·무단 점유시설 현황	131
〈표 2.88〉 이용 단체별 잠·사용 현황	132
〈표 2.89〉 매물이 진행중인 국가어항 현황	132
〈표 2.90〉 어촌·어항 관련법률 현황	135
〈표 2.91〉 개발(정비)부문 어촌·어항관련 법률의 특성	137
〈표 2.92〉 지원부문 어촌·어항 관련 법률의 특성	139
〈표 2.93〉 관리(규제)부문 어촌·어항관련 법률의 특성	140
〈표 2.94〉 지역 경쟁력 강화 관련법률 검토	143
〈표 2.95〉 인력육성 관련법률 검토	145
〈표 2.96〉 삶의 질(정주환경) 개선 관련법률 검토	147
〈표 2.97〉 삶의 질(공공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관련법률 검토	148
〈표 2.98〉 위생 및 재해안전 관련법률 검토	149
〈표 2.99〉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51
〈표 2.100〉 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52
〈표 2.101〉 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53
〈표 2.102〉 1차 마리아항만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54
〈표 2.103〉 동서남해안 광역관광 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156
〈표 2.104〉 1차 마리아항만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57
〈표 2.105〉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58
〈표 2.106〉 2차 삶의 질 기본계획 부문별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59
〈표 2.107〉 2차 삶의 질 기본계획 부문별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60
〈표 2.108〉 2차 어장관리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161
〈표 2.109〉 영국 지역정책의 동향	167
〈표 2.110〉 일본 어촌6차산업화 사업 지원내용	171
〈표 2.111〉 어촌종합개발사업 잔여권역 현황	175
〈표 2.112〉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지정 및 신규 수요	175

〈표 2.113〉 시·도별 국가어항 지정기준 부합 현황(국가어항 대상)	190
〈표 2.114〉 시·도별 국가어항 지정 검토 대상항	190
〈표 2.115〉 국가어항 지정기준 부합항 비교	191
〈표 2.116〉 어선수용이 가능한 어항 및 항만현황	193
〈표 2.117〉 지정항 완공시 수용가능 어선척수	194
〈표 2.118〉 수용대상 어선척수 추정치 비교	195
〈표 2.119〉 어선의 안전수용률(지정항 완공 시)	195
〈표 2.120〉 국가어항 규모 개발수요	197
〈표 2.121〉 우선 순위별 대상항	199
〈표 2.122〉 국가어항 개발사업 경과년수 현황(2012년말 기준)	200
〈표 2.123〉 국가어항 시설 노후화 현황(2012년 말 기준)	200
〈표 2.124〉 다기능어항 개발 수요 검토 항목	202
〈표 2.125〉 다기능어항 개발 수요	202
〈표 2.126〉 수산물 공급 거점어항	203
〈표 2.127〉 어촌·어항 여건의 종합	209
〈표 2.128〉 어촌·어항 SWOT 요소 도출	210
〈표 3.1〉 정부의 어촌·어항관련 국정 과제	224
〈표 3.2〉 어촌·어항의 미래상(2018년)	226
〈표 4.1〉 전담기구의 인력 및 업무분장(안)	245
〈표 4.2〉 연차별 투자계획	248
〈표 4.3〉 연차별 투자계획	253
〈표 4.4〉 연차별 투자계획	259
〈표 4.5〉 연차별 투자계획	267
〈표 4.6〉 다양한 어촌의 유·무형 자산 종류 예시	272
〈표 4.7〉 연차별 투자계획	273
〈표 4.8〉 연차별 투자계획	277
〈표 4.9〉 숙박사업 비교(어촌VS농촌)	277
〈표 4.10〉 연차별 투자계획	283
〈표 4.11〉 농어촌정비법 연도별 사업대상 변화	285

〈표 4.12〉 어촌경영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	287
〈표 4.13〉 연차별 투자계획	287
〈표 4.14〉 연차별 투자계획	292
〈표 4.15〉 연차별 추진일정	295
〈표 4.16〉 연차별 투자계획	300
〈표 4.17〉 어촌지역 재능기부 인원현황	302
〈표 4.18〉 연차별 투자계획	305
〈표 4.19〉 연차별 투자계획	309
〈표 4.20〉 어촌종합개발사업 잔여권역 현황	311
〈표 4.21〉 연차별 투자계획	313
〈표 4.22〉 연차별 투자계획	317
〈표 4.23〉 연차별 투자계획	321
〈표 4.24〉 연차별 투자계획	325
〈표 4.25〉 연차별 투자계획	330
〈표 4.26〉 유형별 다기능어항 선정기준	337
〈표 4.27〉 유형별 다기능어항 예비 후보지 및 위치도	338
〈표 4.28〉 연차별 투자계획	339
〈표 4.29〉 연차별 투자계획	343
〈표 4.30〉 아름다운 미항 예비 후보지 및 위치도	348
〈표 4.31〉 연차별 투자계획	349
〈표 4.32〉 연차별 투자계획	352
〈표 4.33〉 유희부지 활용 예비 후보지 및 위치도	359
〈표 4.34〉 연차별 투자계획	360
〈표 4.35〉 수리현상 모니터링 대상항	365
〈표 4.36〉 연차별 투자계획	366
〈표 4.37〉 연차별 투자계획	370
〈표 4.38〉 국가어항 어항기본사업 대상지	373
〈표 4.39〉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대상지	374
〈표 4.40〉 연차별 투자계획	374
〈표 4.41〉 태풍에 의한 어선 및 어항시설·양식장 피해 현황	376
〈표 4.42〉 2012년 자연재해로 인한 어항시설 피해현황	377

〈표 4.43〉 우선순위 평가 대상그룹 선정기준	378
〈표 4.44〉 보수보강 대상항 및 위치도	378
〈표 4.45〉 연차별 투자계획	379
〈표 4.46〉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현황	380
〈표 4.47〉 국가어항 기본시설 노후화 현황	380
〈표 4.48〉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등급 현황	381
〈표 4.49〉 최근 3년간 방파제·갯바위 사고 현황	382
〈표 4.50〉 정비사업 대상항 및 위치도	385
〈표 4.51〉 국가어항 개발사업 완공 현황(2012년말 기준)	385
〈표 4.52〉 연차별 투자계획	386
〈표 4.53〉 연차별 투자계획	389
〈표 4.54〉 연차별 투자계획	393
〈표 4.55〉 연차별 투자계획	399
〈표 4.56〉 어항 지정기준 항목 및 미충족 국가어항 현황	401
〈표 4.57〉 어항총량제(안)	404
〈표 4.58〉 연차별 투자계획	406
〈표 4.59〉 연차별 투자계획	409
〈표 5.1〉 어촌어항 총괄 투자계획	413
〈표 5.2〉 어촌부문 투자계획	414
〈표 5.3〉 어항부문 전략과제별 투자계획	416
〈표 5.4〉 어항부문 법정사업군별 투자계획	417
〈표 5.5〉 항종별 어항개발 중기투자 계획	418
〈표 5.6〉 국가어항 신규사업 중기 세부 투자 계획	419
〈표 5.7〉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 산업 재분류	424
〈표 5.8〉 산업연관분석 대상 사업의 투자계획	425
〈표 5.9〉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426
〈표 5.10〉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	427
〈표 5.11〉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	428
〈표 5.12〉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429
〈표 5.13〉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	430

〈표 5.14〉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	431
〈표 5.15〉 어촌 및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432
〈표 5.16〉 어촌 및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	433
〈표 5.17〉 어촌 및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	434
〈표 5.18〉 어촌부문 일자리 창출	442
〈표 5.19〉 어촌부문 일자리 창출(소축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443
〈표 5.20〉 어촌부문 일자리 창출(지속가능한 어촌 구현)	444
〈표 5.21〉 어항부문 일자리 창출(총괄)	445
〈표 5.22〉 어항부문 일자리 창출(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446
〈표 5.23〉 어항부문 일자리 창출(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447
〈표 6.1〉 기초조사의 조사내용	454
〈표 6.2〉 어촌·어항정책의 신규 지표 발굴 시 착안사항	455
〈표 6.3〉 어촌·어항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개요(안)	456
〈표 6.4〉 일본 어항 위생관리기준 예시	461
〈표 6.5〉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개정(안)	463
〈표 6.6〉 어가비율별 행정리 수	464
〈표 6.7〉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안)	465
〈표 6.8〉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안)	466

그림 목 차

〈그림 1.1〉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위상	4
〈그림 1.2〉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5
〈그림 1.3〉 2차 발전기본계획의 추진경위	7
〈그림 1.4〉 계획수립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	8
〈그림 1.5〉 2차 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9
〈그림 1.6〉 1차 발전기본계획의 평가 개요	10
〈그림 1.7〉 1차 발전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과제	11
〈그림 1.8〉 제1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어항부문 주요 성과	12
〈그림 1.9〉 1차 발전기본계획(어촌부문) 사업별 목표 달성률	17
〈그림 1.10〉 1차 발전기본계획(어항부문) 사업별 목표 달성률	22
〈그림 1.11〉 1차 발전기본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	28
〈그림 2.1〉 어촌의 주요 지표별 위상	31
〈그림 2.2〉 어항의 주요 지표별 위상(2012년 기준)	34
〈그림 2.3〉 어항이용률로 보는 어항의 위상	35
〈그림 2.4〉 어촌어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37
〈그림 2.5〉 세계 및 한반도 기온변화 전망	38
〈그림 2.6〉 태풍경로 및 태풍강도 변화	39
〈그림 2.7〉 어선 및 어항시설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1990~2012년)	39
〈그림 2.8〉 한반도 연근해 어종분포 변화도	40
〈그림 2.9〉 어장여건의 변화 추이(2002년, 2012년)	41
〈그림 2.10〉 적조발생 원인 및 피해	42
〈그림 2.11〉 세계 어획어업 생산량 추이	43
〈그림 2.12〉 세계 해면어업 이용상태	43
〈그림 2.13〉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 추이	44
〈그림 2.14〉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 추이	44
〈그림 2.15〉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 전망	45
〈그림 2.16〉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 전망	45

〈그림 2.17〉 연도별 업종별 생산 추이	49
〈그림 2.18〉 수산물 수출입 현황	49
〈그림 2.19〉 어가인구 연령별 변화 추이	51
〈그림 2.20〉 1인 가구 분포	52
〈그림 2.21〉 연간 1인당 수산물·육류 소비량	52
〈그림 2.22〉 노량진 수산시장의 주별 수산물 거래물량 동향	53
〈그림 2.23〉 항별 축제 관광객 수 및 축제 매출액	55
〈그림 2.24〉 어촌의 행정구역별 현황	57
〈그림 2.25〉 어촌의 입지유형별 분포현황	59
〈그림 2.26〉 시·도·별 어가인구 비중	61
〈그림 2.27〉 시·도·별 어업가구 비중	62
〈그림 2.28〉 어가인구 연령별 변화 추이	63
〈그림 2.29〉 시·도별 고령화율	63
〈그림 2.30〉 사업유형별 어업법인 수	66
〈그림 2.31〉 어촌공동체 시·도별 현황(좌) 및 어촌공동체 해결과제(우)	67
〈그림 2.32〉 귀어·귀촌 지원 현황	67
〈그림 2.33〉 연도별 가계소득	71
〈그림 2.34〉 수산계 취업 현황	75
〈그림 2.35〉 전국 빈집 현황	78
〈그림 2.36〉 시도별 교육시설 현황	79
〈그림 2.37〉 문화여가 시설까지 소요시간	81
〈그림 2.38〉 복지시설 서비스 문제점	83
〈그림 2.39〉 복지시설 희망 프로그램	84
〈그림 2.40〉 체험마을 이용객수 현황	85
〈그림 2.41〉 관광기반시설 현황	86
〈그림 2.42〉 어촌 이용 숙박 시설	86
〈그림 2.43〉 어촌방문 지불 수단	87
〈그림 2.44〉 어촌 숙박시설 만족도	87
〈그림 2.45〉 어촌관광 희망 정보제공	88
〈그림 2.46〉 관광객 현황	89
〈그림 2.47〉 전국 마리아 위치도	91

〈그림 2.48〉 어항구역 내 마리나 위치도	93
〈그림 2.49〉 낙시잔교 현황	95
〈그림 2.50〉 어촌찾아가기 현황	96
〈그림 2.51〉 어항의 항종별·지역별(해역별) 분포 현황	103
〈그림 2.52〉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완공 현황	109
〈그림 2.53〉 시·도별 국가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	110
〈그림 2.54〉 시·도별 지방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	111
〈그림 2.55〉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	113
〈그림 2.56〉 시·도별 소규모항포구 항당 평균 사업비	114
〈그림 2.57〉 육자도서별 국가어항 외래어선 입항빈도 분포도	122
〈그림 2.58〉 위판량 및 위판금액 상위 15개 항 분포도	124
〈그림 2.59〉 국가어항 매몰사례	133
〈그림 2.60〉 어촌·어항 관련 법률 현황	136
〈그림 2.61〉 어촌·어항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관련 법률	141
〈그림 2.62〉 2차발전기본계획과 관련계획 검토	150
〈그림 2.63〉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주요 내용	151
〈그림 2.64〉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비전 및 과제	153
〈그림 2.65〉 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154
〈그림 2.66〉 동·서·남해안 광역관광 개발계획	155
〈그림 2.67〉 동서남해안 종합발전계획 기본구상	157
〈그림 2.68〉 해양관광의 단계별·권역별 추진전략	158
〈그림 2.69〉 2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159
〈그림 2.70〉 제3차 도서개발계획의 목표와 방향	160
〈그림 2.71〉 2차 어장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61
〈그림 2.72〉 국내 지역정책의 흐름	162
〈그림 2.73〉 포괄보조방식 개념도	163
〈그림 2.74〉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비전	164
〈그림 2.75〉 정책수요 변화 및 분야별 정부재정 투입 현황	166
〈그림 2.76〉 영국 지역산업위원회(LEP) 위치도	168
〈그림 2.77〉 호주 빅토리아주 Regional Growth Planning	169
〈그림 2.78〉 빅토리아주 Great South Coast 지역성장계획(안)	170

〈그림 2.79〉 일본의 어촌 6차산업화 개념	171
〈그림 2.80〉 OECD 국가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	172
〈그림 2.81〉 어촌·어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73
〈그림 2.82〉 권역별 어촌 개발방향	188
〈그림 2.83〉 어선 안전수용률 산정 흐름도	192
〈그림 2.84〉 항내 어선 대피 방법	193
〈그림 2.85〉 전국 어선안전 수용율(지정항 완공시)	196
〈그림 2.86〉 최근 5년간 국가어항 시설물의 등급별 변화 추이	201
〈그림 2.87〉 권역별 어항 개발방향	205
〈그림 2.88〉 어촌산업의 부가가치 전망	208
〈그림 2.89〉 어촌·어항 SWOT 분석	211
〈그림 2.90〉 어촌·어항의 강점 키우기	212
〈그림 2.91〉 어촌·어항의 약점 보완하기	214
〈그림 2.92〉 어촌·어항의 기회 살리기	216
〈그림 2.93〉 어촌·어항의 위기 극복하기	218
〈그림 3.1〉 정부의 국정기조	224
〈그림 3.2〉 2차 발전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225
〈그림 3.3〉 어촌의 여건에 따른 발전방향	228
〈그림 3.4〉 어항의 여건에 따른 발전방향	231
〈그림 4.1〉 어촌 6차산업화의 필요성	241
〈그림 4.2〉 어촌 6차산업화 영역간 융복합	242
〈그림 4.3〉 어촌 6차산업화 사업추진 개념	243
〈그림 4.4〉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안)	243
〈그림 4.5〉 어촌 6차 산업화의 추진절차 및 내용	244
〈그림 4.6〉 어촌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안)	244
〈그림 4.7〉 어촌 그랜드 디자인 공간적 범위	250
〈그림 4.8〉 어촌 그랜드 디자인 권역화 방향	251
〈그림 4.9〉 어촌 그랜드 디자인 권역화 방향(안)	251
〈그림 4.10〉 어촌 Grand Design 사업내용	252

〈그림 4.11〉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	253
〈그림 4.12〉 추진절차 및 내용	257
〈그림 4.13〉 어촌체험마을 지정 및 계획(안)	258
〈그림 4.14〉 해중레저 거점마을 연계개발 모델(안)	262
〈그림 4.15〉 전국 다이빙 리조트 및 포인트 위치도	262
〈그림 4.16〉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사업의 개념도	263
〈그림 4.17〉 추진절차 및 내용	264
〈그림 4.18〉 해중레저교육센터 예시(울진해양레포츠센터)	265
〈그림 4.19〉 해중레저 관광기반시설 예시	265
〈그림 4.20〉 해중경관 조성사업 예시	266
〈그림 4.21〉 추진절차 및 내용	270
〈그림 4.22〉 추진절차 및 내용	270
〈그림 4.23〉 어촌 유·무형 자원 발굴·보존·활용 프로세스 예시	271
〈그림 4.24〉 문화예술인 마을조성 예시(헤이리·저지 마을)	271
〈그림 4.25〉 추진절차 및 내용	275
〈그림 4.26〉 재능기부를 통한 경관개선 예시	276
〈그림 4.27〉 어촌특화민박 신청 절차	280
〈그림 4.28〉 추진절차 및 내용	280
〈그림 4.29〉 SEA STAY 인증(안)	281
〈그림 4.30〉 평가인증제도 관련 예시(문화체육관광부:GOOD STAY)	282
〈그림 4.31〉 선택적 예약시스템 예시	282
〈그림 4.32〉 어촌경영지원 개념도	285
〈그림 4.33〉 어촌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의 추진 프로세스	286
〈그림 4.34〉 어업인력지원 전담기구 운영방향	289
〈그림 4.35〉 현장 맞춤형 어업인력 지원 추천체계	290
〈그림 4.36〉 전문인력육성 추진체계	291
〈그림 4.37〉 추진체계 및 내용	294
〈그림 4.38〉 자매결연 활성화 체계도	298
〈그림 4.39〉 추진절차 및 내용	299
〈그림 4.40〉 재능기부 활성화 체계도	303
〈그림 4.41〉 추진절차 및 내용	304

〈그림 4.42〉 재능기부 사례	304
〈그림 4.43〉 추진절차 및 내용	307
〈그림 4.44〉 스마트 폰 활용사례	308
〈그림 4.45〉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체계도	312
〈그림 4.46〉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추진체계	312
〈그림 4.47〉 추진절차 및 내용	316
〈그림 4.48〉 원격의료진료 시현	316
〈그림 4.49〉 교육 및 문화지원 프로세스 및 시현	317
〈그림 4.50〉 장보고 쿼 서비스 센터 민원해결 시스템(안)	319
〈그림 4.51〉 장보고 쿼 서비스 센터 활용 개념도(안)	320
〈그림 4.52〉 (가칭) 장보고 쿼 서비스 센터 운영	321
〈그림 4.53〉 추진절차 및 내용	323
〈그림 4.54〉 추진절차 및 내용	324
〈그림 4.55〉 추진절차 및 내용	327
〈그림 4.56〉 갈등관리 방안 체계도	327
〈그림 4.57〉 추진절차 및 내용	328
〈그림 4.58〉 어항 특화개발 개념	332
〈그림 4.59〉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유형	334
〈그림 4.60〉 연도별 추진계획	338
〈그림 4.61〉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343
〈그림 4.62〉 어항의 현황(어구 방치 및 회색조의 단조로운 어항시설)	344
〈그림 4.63〉 경관 및 조명사업 정비사례	346
〈그림 4.64〉 어항 유형별 컨셉에 따른 조형물 설치 예시	347
〈그림 4.65〉 연도별 추진계획	348
〈그림 4.66〉 전국 마리나 현황 및 소형 요트 접안시설 조성 사례	350
〈그림 4.67〉 연도별 추진계획	355
〈그림 4.68〉 어항 유희부지 방치 현황	356
〈그림 4.69〉 친환경에너지 도입	357
〈그림 4.70〉 토요일시장	358
〈그림 4.71〉 어촌문화센터	358
〈그림 4.72〉 연도별 추진계획	359

〈그림 4.73〉 국가어항 부지이용 실태	361
〈그림 4.74〉 어항 매몰 및 어선 입출항 안전저해 현황	363
〈그림 4.75〉 침·퇴적 저감대책	364
〈그림 4.76〉 연도별 추진계획	365
〈그림 4.77〉 어항종합 정보시스템 개념도	369
〈그림 4.78〉 연도별 추진계획	369
〈그림 4.79〉 어항의 역할(어선 안전수용, 어업활동 지원, 어촌의 중심지)	372
〈그림 4.80〉 해수면 상승 변화 예상치	375
〈그림 4.81〉 태풍 무이파 내습현황(전남 가거도항)	376
〈그림 4.82〉 어항 노후시설 현황	381
〈그림 4.83〉 노후화 및 태·폭풍 피해에 따른 시설물 긴급보수 사례	381
〈그림 4.84〉 안전점검 등급변화에 따른 보수공사비 증가현황	382
〈그림 4.85〉 안전시설의 미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382
〈그림 4.86〉 어항 안전시설물 파손 및 방치사례	383
〈그림 4.87〉 어항 노후시설 정비사례	383
〈그림 4.88〉 안전시설물 설치 사례	384
〈그림 4.89〉 연도별 추진계획	385
〈그림 4.90〉 어항 환경 실태(어구, 나대지, 용도 폐기 건물 등의 방치)	387
〈그림 4.91〉 강릉항 정비 사례	388
〈그림 4.92〉 연도별 추진계획	389
〈그림 4.93〉 어항구역 내 수역 오염현황	390
〈그림 4.94〉 수질개선시스템 및 어항청소선	391
〈그림 4.95〉 연도별 추진계획	392
〈그림 4.96〉 어항이 차지하는 수산물 위판량 현황	393
〈그림 4.97〉 국내 수산물 위판 및 처리 실태	394
〈그림 4.98〉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개념도	396
〈그림 4.99〉 연도별 추진계획	398
〈그림 4.100〉 어항 지정현황과 어선척수 추이(1980~2012년)	400
〈그림 4.101〉 연도별 추진계획	406
〈그림 4.102〉 어항편익시설 유형	408

〈그림 5.1〉 어항부문 중기 투자계획	419
〈그림 5.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420
〈그림 5.3〉 일자리 정책 분류	436
〈그림 5.4〉 민간부문 신규고용 촉진 대책	437
〈그림 5.5〉 미취업자 취업애로요인 해소 및 미스매치 완화대책	438
〈그림 6.1〉 2차 발전기본계획의 정책제언	452
〈그림 6.2〉 행정구역별 어촌지역 비교	453
〈그림 6.3〉 농림수산분야 ODA 사업 지원현황	457
〈그림 6.4〉 어촌발전특별회계 도입방안(안)	459
〈그림 6.5〉 내수면 어촌 개발방향 예시	460
〈그림 6.6〉 일본의 광역 거점어항 중심의 어항관리체계	462
〈그림 6.7〉 농가구·어가구별 행정리 수 비교	464
〈그림 6.8〉 (가칭) ‘어촌발전기본법’ 의 위상	468
〈그림 6.9〉 도서지역 지원관련 법률 체계	469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요약)

I. 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및 목적

- ☐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산업간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어촌지역은 어촌경제의 침체로 인한 고령화, 공동화, 정주환경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낙후됨
- ☐ WTO-DDA, FTA, TPP 등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의 가속화로 어촌지역은 더욱 취약한 여건 속에 있어 창조경제 흐름에 맞춰 어촌의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 해양수산부 再출범 및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삶터·일터·쉼터로써의 어촌에 대한 기대감 상승
 - *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13년 4월) : 수산업의 영역을 생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로 확대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지시
- ☐ 어촌·어항법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제4조)

2 계획의 범위

-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중기 2014 ~ 2018년, 장기 2019 ~ 2030년
 - 공간적 범위
 - 어 촌 : 시군구 72개소, 읍면동 560개소
 - 어 항 : 2,298개항(국가지방어촌정주 어항 989, 소규모 항포구 1,309)
 - 내용적 범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기초조사
 -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1차 발전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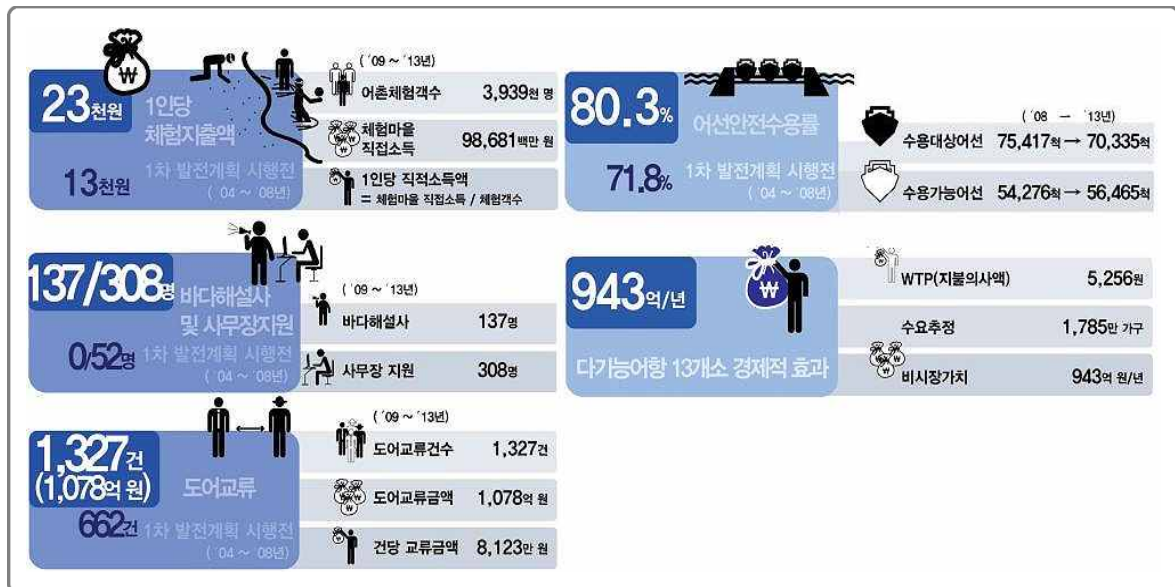
3.1 주요성과

□ 어촌·어항정책에 대한 최초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목표 및 방향 제시

○ “국민과 공존하는 활기찬 어촌·어항 창조”라는 비전하에 5대 정책 목표, 8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개발 국제협력 추진, 어촌개발사업, 어촌관광개발 사업,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어촌개발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

* (계획) 2.05조 원 → (집행) 1.6조 원, 계획대비 집행을 77.9%



〈 제1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어항부문 주요 성과 〉

□ (어촌) 어촌의 인프라 조성, 관광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지원과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 등 휴먼웨어 개발을 통해 어촌 관광인프라 구축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따른 유형화 개발과 권역단위 정비를 추진(53개소)

○ 어촌체험마을 및 도어교류 활성화를 통해 어업외 소득 제고

* 어촌체험객수(천명)/1인당 지출액(원): ('09년) 714/13,145 → ('13년) 947/22,924

* 도어교류 성과('05년~'13년) : 1,327건, 1,078억 원 (건당 8,123만 원)

○ 체험마을 사무장, 바다 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

* 사무장 채용지원 : 308명, 바다해설사 : 137명

□ **(어항)** 어항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기능 어항 개발을 통해 어항을 어업생산 기반 확충부터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까지 확대 개발

○ 어항 신규개발, 시설 확충 등으로 어선의 안전 수용 및 수산기반 확충

* 어선안전 수용률(%) : ('08년) 71.8 → ('13년) 80.3

* 수산물 위판량(M/T) : ('07년) 1,276천 → ('12년) 1,470천

○ 13개소 다기능어항 개발을 통해 관광객 증가 및 어항가치 제고

* 관광객 증가비율(%) : ('10년) 50.5 → ('12년) 64.8

* 다기능어항의 경제적 가치 : 연간 943억 원 추정

3.2 반성

□ **(어촌)** 어촌정책이 기반시설 확충과 어촌체험관광을 통한 소득창출에 국한되어 어촌산업 및 삶의 질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 한계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사업에서 후순위에 있는 경우 일부 지연

* 어촌종합개발사업(국비 80% 보조) : (계획) 61개소 → (실적) 53개소

○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이 미흡하였음

* 어촌관광사업(21.0%), 바다해설사 양성(21.4%), 체험마을 컨설팅 지원(69.8%)

○ 어촌공동체 갈등, 복지 사각지대 등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미흡

○ 하향식 개발방식(Top-down)에 따른 획일적인 소규모 마을단위 개발방식으로 사업성과 확대 한계 및 포괄보조방식 전환에 따라 어촌분야 사업추진 어려움 발생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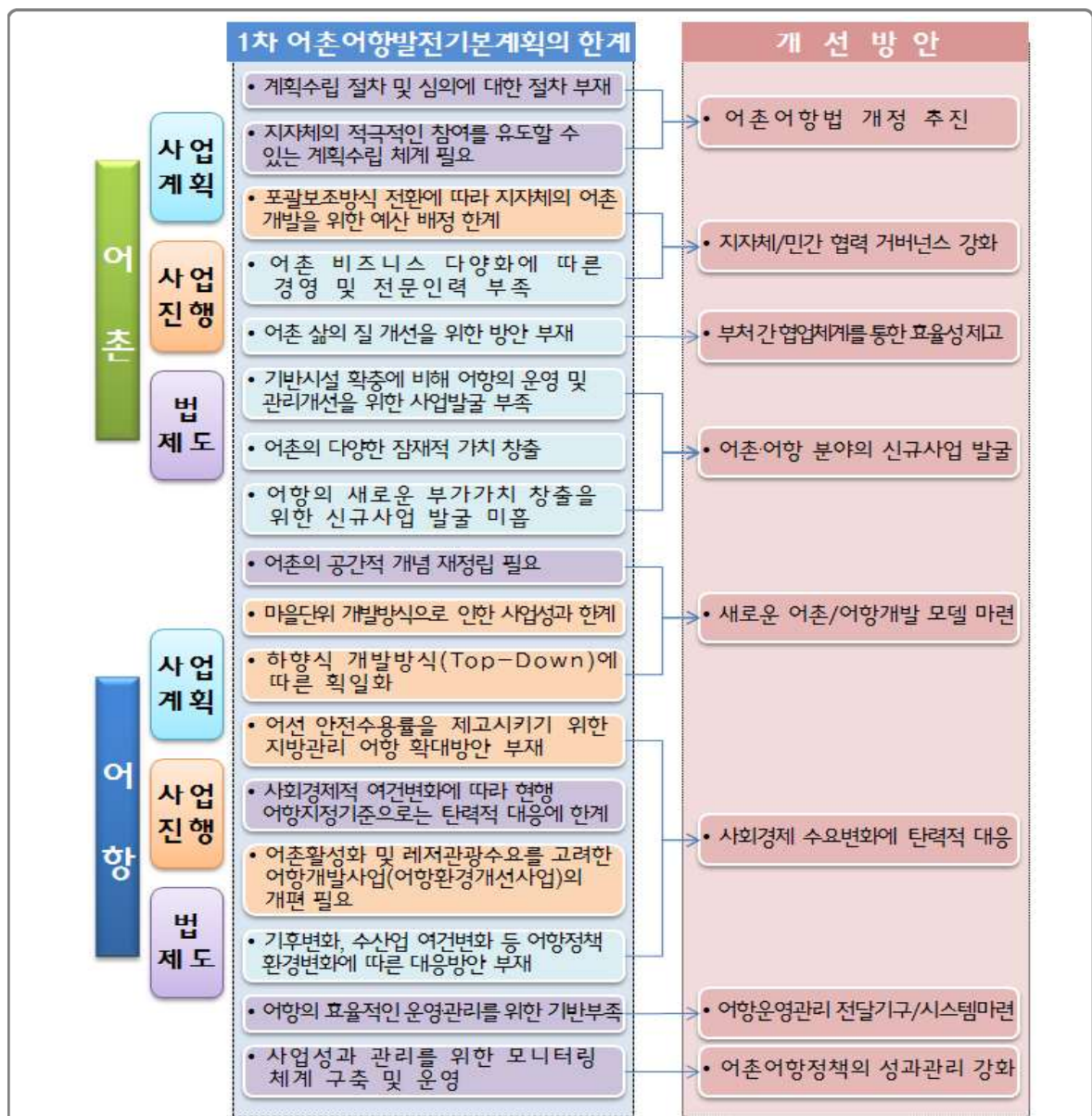
□ **(어항)**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되어 급변하는 어업환경과 수산물 위생 등 새로운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

○ 어항구역 내 수산물의 위생처리시설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어항구역 위생관리기준 부재)과 인식 부족

○ 어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미흡, 기반시설 확충에 비해 어항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발굴 부족, 기후변화, 수산업 여건변화 등 어항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 어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부족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현행 어항지정기준으로는 탄력적 대응에 한계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립 체계 필요

3.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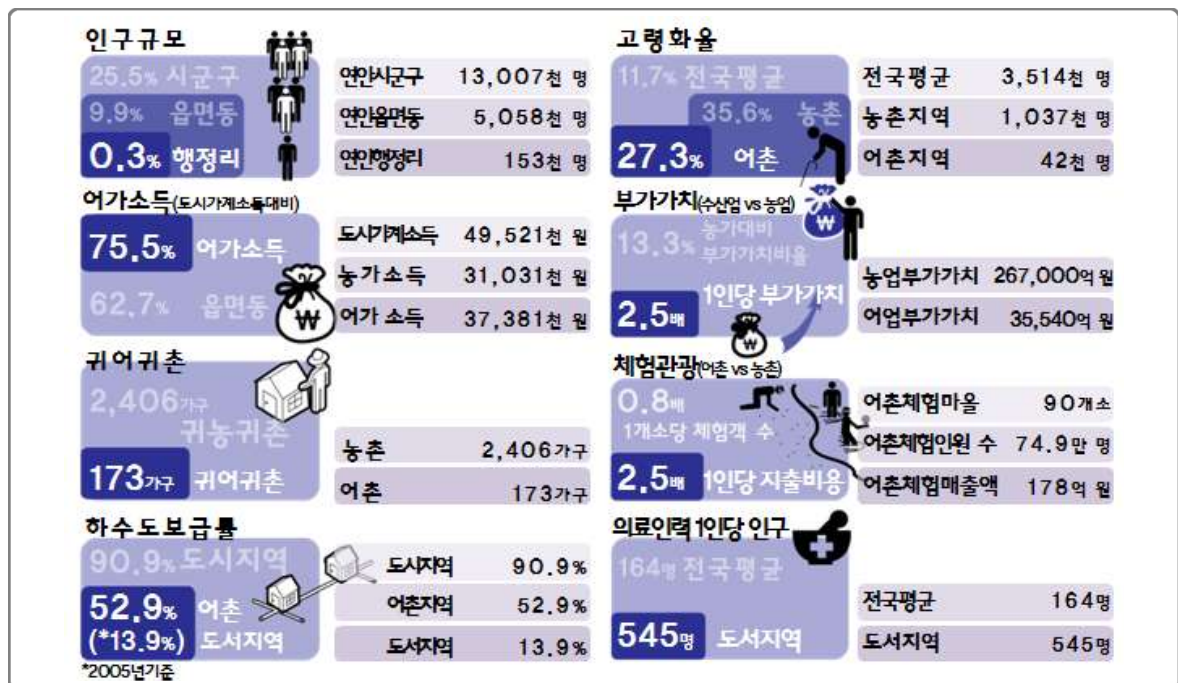
〈 1차 발전기본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 〉

II. 계획의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1.1 어촌의 위상

- 인구규모, 고령화율, 소득, 정주환경(하수도보급율), 복지부문의 지표는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수산업 부가가치와 체험관광 부분은 농업·농촌에 비해 높은 잠재적 가치를 나타냄



〈 어촌의 주요 지표별 위상(2012년 기준) 〉

1.2 어촌의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업 침체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촌 공동화 우려

- '12년 어가인구는 15만명(총 인구의 0.3%)으로 '05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고, 어촌지역의 고령화율은 27.8%로 전국 고령화율11.7%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자원 감소, 유가 상승, 어선·양식시설 노후화 등으로 어업여건은 어려워지고, 어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과 격차 심화

* 어가소득(천 원) : ('03년) 23,916 → ('12년) 37,381

* 도시가계소득(천 원) : ('03년) 32,540 → ('12년) 49,521

○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에 비해 높으나 부채 및 자산비율은 낮음

* 어가부채/농가부채(천 원) : ('12년)39,518 / ('12년)27,272

* 어가자산/농가자산(천 원) : ('12년)297,669 / ('12년)407,898

○ 어가 1인당 부가가치율은 농가에 비해 높았으나 사업체나 일자리 수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 수산업 부가가치/농업 부가가치(억 원) : ('12년) 35,540 / ('12년) 267,000

* 1인당 부가가치(천 원) : ('12년) 수산업 23,212 / ('12년) 농업 9,277

* 수산업 일자리수/ 농업 일자리수(개) : ('12년)4,274 / ('12년)19,108

□ 도시·어촌 간 교류 및 체험관광은 농촌에 비해 양적규모로 떨어지나, 어촌체험관광의 잠재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귀어·귀촌 및 자매결연(1사1촌, 1교1촌) 모두 양적 규모에서 농촌에 비해 열위에 있음

* 귀어/귀농(가구) : ('12년) 어촌173 / 농촌2,406

* 자매결연(건) : ('12년) 어촌1,200 / 농촌9,727

○ 반면, 체험관광에 대해서는 어촌체험마을 개소수와 체험객수, 마을 개소당 방문객수는 농촌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체험객 1인당 지출금액은 2.5배로 농촌에 비해 어촌의 잠재적 가치가 더 높음

* 체험인원수(천 명) 및 매출액(억 원) : ('12년) 어촌749 / 농촌6,110, ('12년) 어촌178 / 농촌751

* 체험객 1인당 지출비용(원) : ('12년) 어촌23,875 / 농촌9,345

□ 어촌은 도시와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인프라가 부족

○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 수준이 도시와 농촌지역에 비해 낮고, 특히 도서 어촌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함

*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명) : ('12년) 도서 545 / 전국평균 164

* 도서어촌의 버스 미운행률(%) : 59.6 / 배(여객) 운항 빈도(%) : 1일 2회 이하 50

* 병·의원,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어촌 : 324개소(술도서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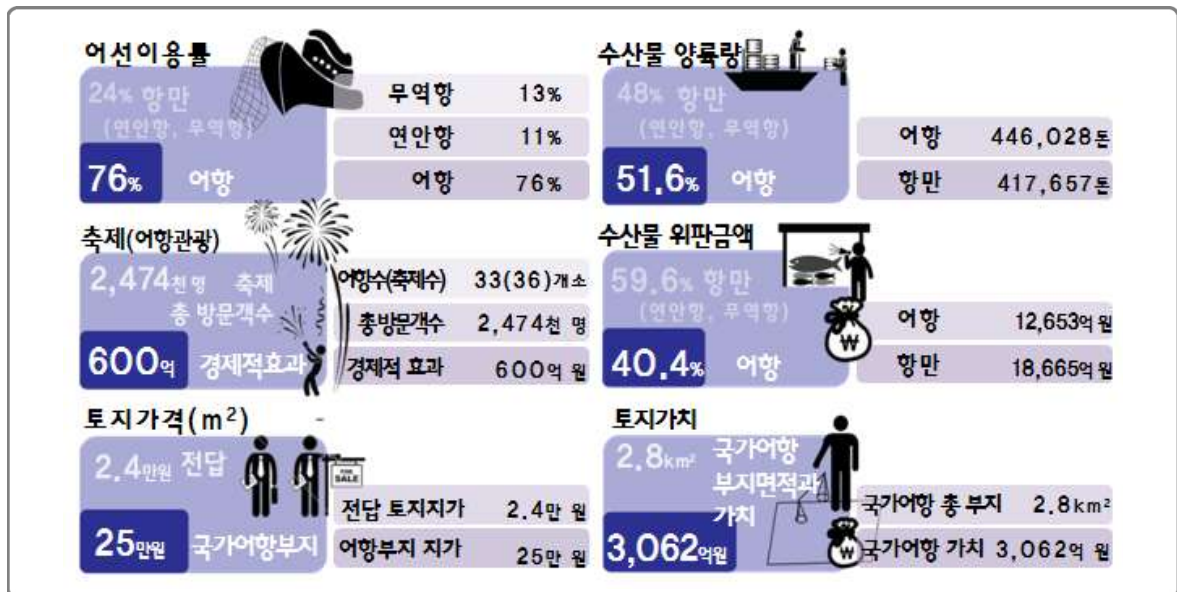
*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 소요시간 47분(도시 평균 21분)

○ 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도시 평균보다 매우 낮고, 섬 지역은 시설 부족으로 생활오수분뇨를 바다에 방류하는 등 열악한 여건에 있음

* 하수도 보급률(%) : ('10년) 어촌 52.9 / 도시 90.9

1.3 어항의 위상

- 국가어항의 어선의 어항이용률, 수산물의 양륙량 등의 지표는 항만(무역항, 연안항)보다 더 높으나, 수산물의 위판금액은 항만보다 낮음
- 어항의 토지가격은 m²당 25만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산물 관련 축제 방문객도 250만 명으로 집객력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어항의 주요 지표별 위상(2012년 기준) 〉

1.4 어항의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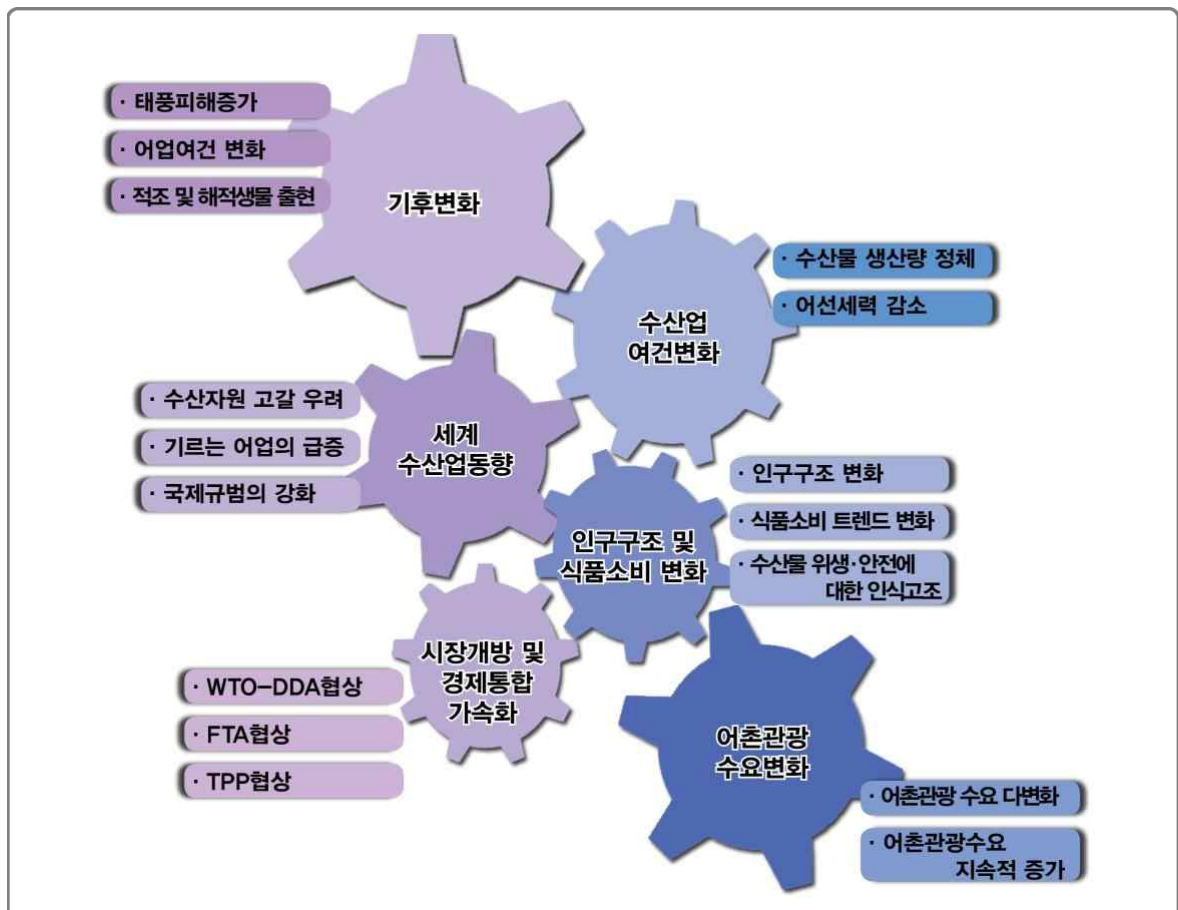
- 어항과 항만의 어선이용률은 어항이 76%, 무역항 13%, 연안항 11% 순으로 나타났음
- 어항을 통한 수산물 위판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수산자원의 변동으로 탄력적인 어항정책 수립에 한계
 - * 어항에서 수산물 위판량 : ('00년) 351,276톤(전국대비 39%) → ('12년) 410,197톤(전국대비 51%)
- 어장여건 변화로 남·서해는 어선 대비 어항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45개 국가어항은 어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
 - * 전국('12년) : 수용대상어선 71,291척, 어항수용능력 54,944척(수용율 77.1%)
 - * 전국 미(未)수용어선 16,347척 중 15,971척(97.6%)이 남·서해 지역 어선임
- 어항은 수산물의 위판량에서 항만보다 우세하나, 수산물 위판금액에서는 항만보다 다소 낮음
 - * 수산물 위판량(위판금액) : 어항 446,028톤(1조4,653억 원) / 항만417,657톤(1조 8,665억 원)

- '12년 15개 어항이 전국 수산물 위판량의 70%를 점유하였으며, 이중 6개 어항은 배후에 대도시가 있는 감포, 방어진, 다대포 등으로 나타남
- 관광수요로 어항을 보면,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는 국가어항은 총 33개소, 축제 수는 36개이며, 약 25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것으로 나타남
 - * 어항구역 내 축제 방문객수: ('13년) 2,474,380명/ 경제적 효과 : ('13년) 59,926백만 원
 - * 축제 1개소당 방문객수: 68,732명 / 경제적 효과 17억 원
- 다기능어항 시범사업(10개)을 통해 어항이 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여가레저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
 - 다기능어항 사업으로 어가 소득은 21.8%, 관광객은 124% 증가
-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항 및 어촌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투자가 부족하고, 계획사업의 완공율도 낮음
 - 지난 30년간 태풍 발생은 2배 증가(0.6회/년 → 1.2회/년)하고, 최대순간 풍속도 50% 증가함
 -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결과 취약시설 보강이 필요한 어항은 82개항 중 59개 (9,815억 원)로 조사됨
 - * 109개 국가어항 중 신규 심해파가 적용된 27개항을 제외한 82개항을 대상으로 재해대비 안전성 평가 실시('10~'13)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산물 공급의 최일선인 어항의 위생 상태는 열악
 - 위판장이 맨바닥인 어항*이 많고, 대부분의 횃집에서 어항의 해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항 정화사업** 및 어항 위생시설 개선은 미비
 - * 위판장 중 맨바닥 위판은 84개소(46.7%), 정수 처리된 해수 사용은 52개소(28.9%)
 - * 대상어항 160개 중 15개 어항(전체 9.3%)에 대해서만 수질 모니터링 실시('12년)
 - 어항 관리청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인 어항관리 한계
 - * 지자체 공무원 1인당 15~50여개 어항을 관리

2 대내외 여건 및 전망

1.1 개요

- 어촌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기후변화, 세계 수산업의 동향,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 가속화 등을 살펴보면, 대내여건은 국내수산업의 여건변화, 인구구조 및 식품소비 변화, 어촌관광 수요의 변화 등이 맞물려 있음



〈 어촌·어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

1.2 대내외 여건변화

-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대형태풍의 내습 증가, 어장여건의 변화, 적조 및 해적생물의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

* 최근 38년간 평균표층수온 0.9℃상승 → 난류성 어종 증가 / 한류성 어종 감소

-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폭풍 등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어촌 및 어항시설의 피해가 증가

* 최근 30년간 태풍빈도: 연간 0.6회 → 1.2회로 200% 증가

* 태풍의 강도: 최대순간풍속 기준 150% 증가

□ (세계 수산업 동향)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어획어업 생산량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정체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어획어업 생산량 추이(만 톤) : ('04년)9,361 → ('07년)9,118 → ('11년)9,457

○ 반면, 수산물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커짐

○ 세계 양식어업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어선어업의 생산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증가 추세임

* '11년 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만톤) : 1억 7,832 / 양식어업 : 8,373 (47%)

□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 가속화) WTO-DDA, FTA의 확대 등에 따른 국내 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신선도 및 위생 안전강화 등 부가가치 제고 방안 필요

□ (국내수산업 여건)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300만 톤 내외에서 정체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5.5% 감소하는데 비해 양식어업 생산량은 7.5% 증가함으로써 향후 양식어업 의존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천 톤) : ('07년)1,152 → ('12년) 1,091

* 양식어업 생산량(천 톤) : ('07년)1,386 → ('12년) 1,489

○ 수산물 시장개방이후 수산물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산물 수출은 2001년 이후 정체되어 수산물 무역 적자폭 증가

○ 어선감척사업에 의해 어선 척수는 감소하였으나, 어선의 척당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선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94년부터 '12년까지 17,992척의 어선 감척 (연안 15,305척, 근해 1,309척, 국제감척 1,308척)

* 어선척수(척) : ('10년) 76,974 → ('12년) 75,031 / 어선총톤수(톤) : ('10년) 600,622 → ('12년) 610,005

* 어선평균선령 : ('08년)11.2년 → ('12년) 12.8년

□ (인구구조 및 식품소비 변화) 어가인구의 감소로 인해 어가인구 고령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원전사고·지정해역 내에서의 노로 바이러스 검출 등으로 인해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12년 어가인구가 전체인구 0.3%이고, 고령화율은 총인구 고령화율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인구수 : ('12년)50,948천 명 / 어가인구수 : ('12년)153천 명

* 전체고령화율 : ('12년)11.7% / 어가인구 고령화율 : ('12년)27.8%

- 사회적 변화(고령화, 저출산, 생활여건 등)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성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

* ('11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53.5Kg, 육류소비량에 비해 크게 증가

- 일본 원전사고,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노로 바이러스 검출, 수산물 위생관리 국제규제 강화, 수입 수산물 증가 등으로 인해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수산물의 부정적 인식이 소비 감소로 이어져 어가 경제에 타격

* 2012년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1호, 2호)의 노로 바이러스 검출로 수출중단 위기

- (어촌관광수요 변화)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다양한 수요 증가함에 따라 어촌 어항은 기존 관광산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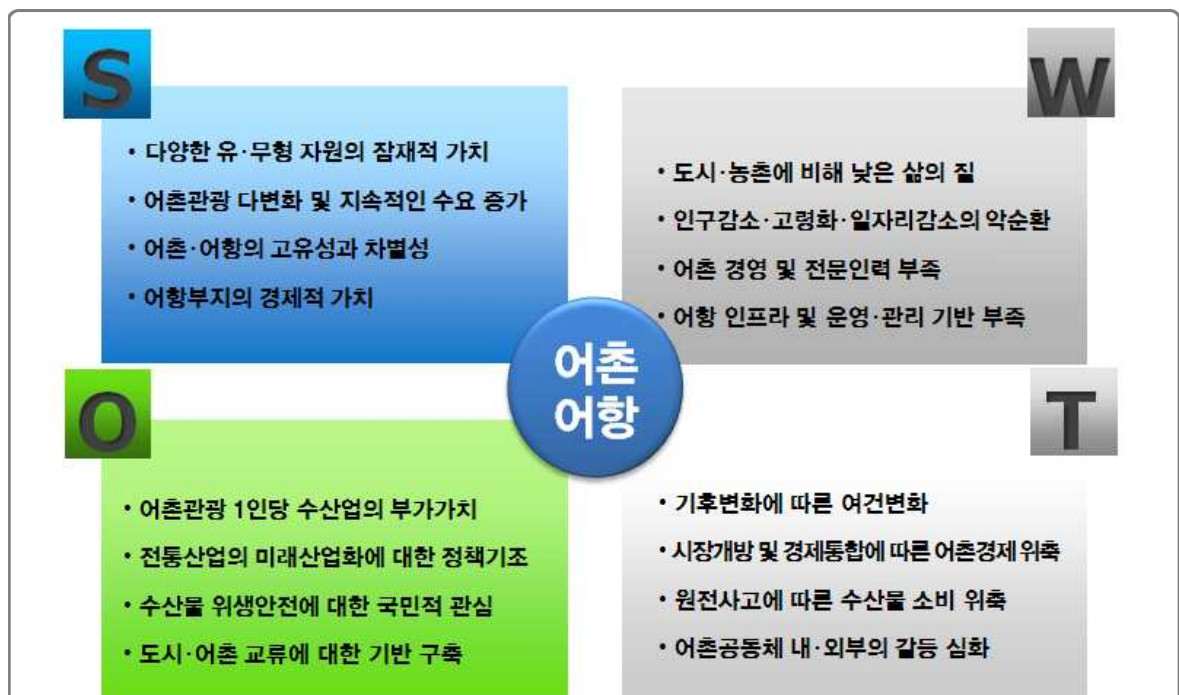
* ('13년)국가어항 33개항에서 36개 축제 개최

* 관광객 : ('13년)2,474,380명 / 매출액 : ('13년)59,925,940천 원

- 국민가계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1박 2일 이상의 체류숙박형 해양관광에 대한 시장 수요는 증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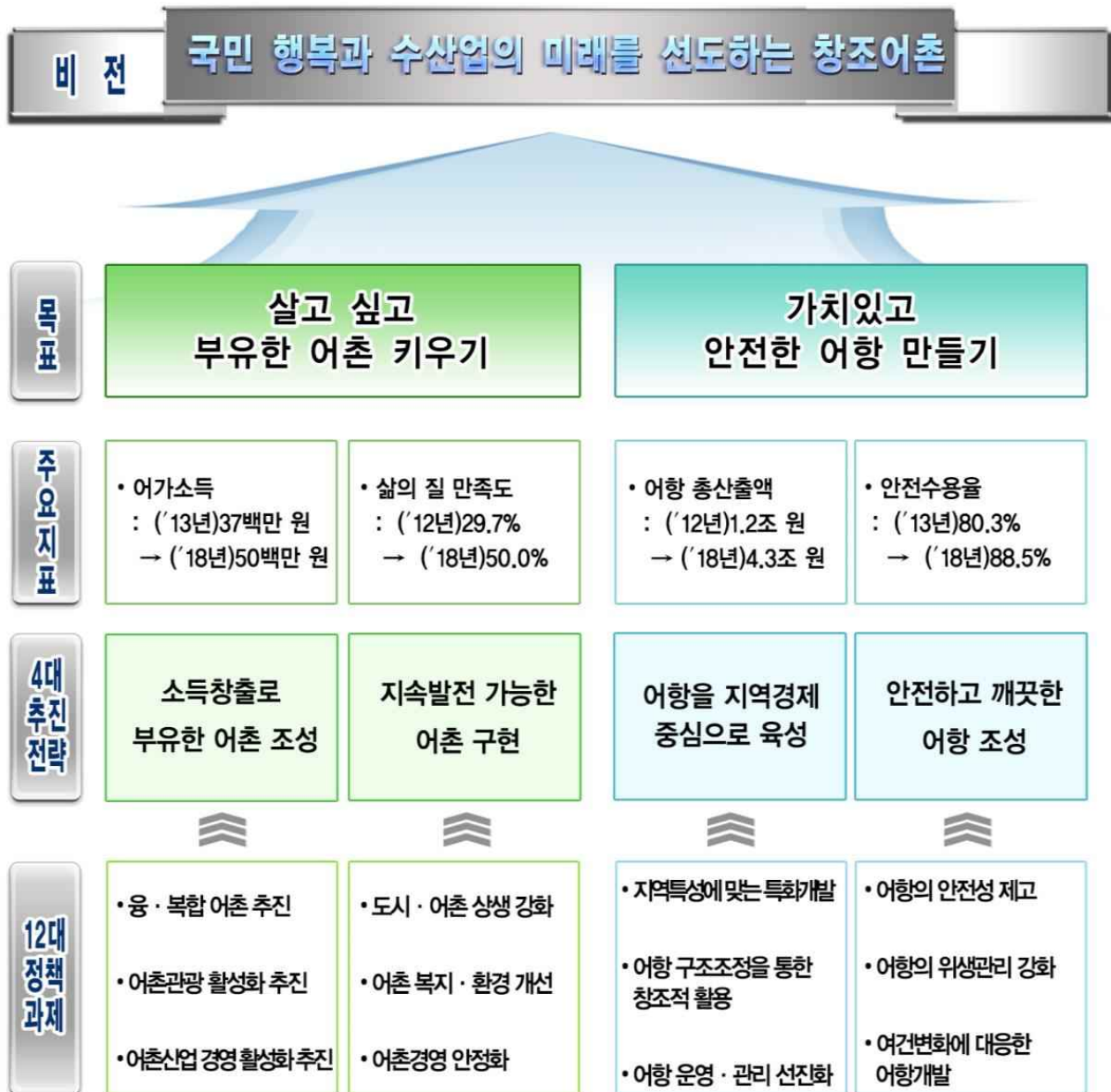
* 국민관광 총 수요 : ('17년)1,026,452천 명 / 해양관광 수요 : ('17년)379,787천 명

1.3 SWOT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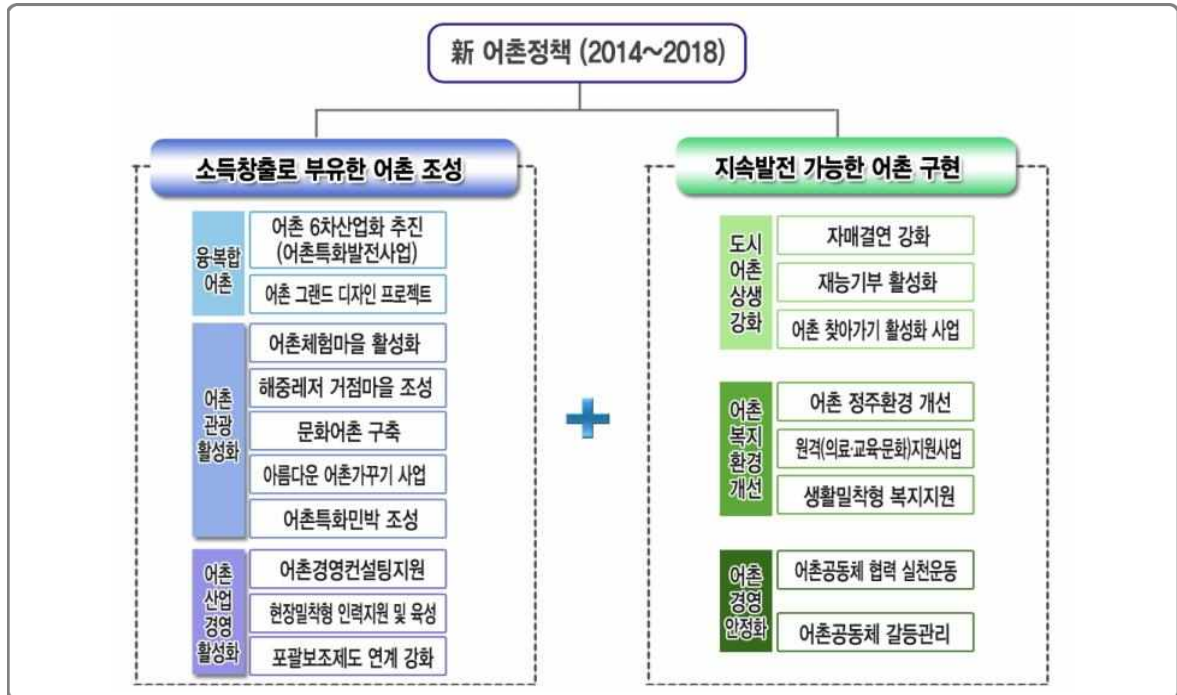
Ⅲ. 비전 및 정책 방향

1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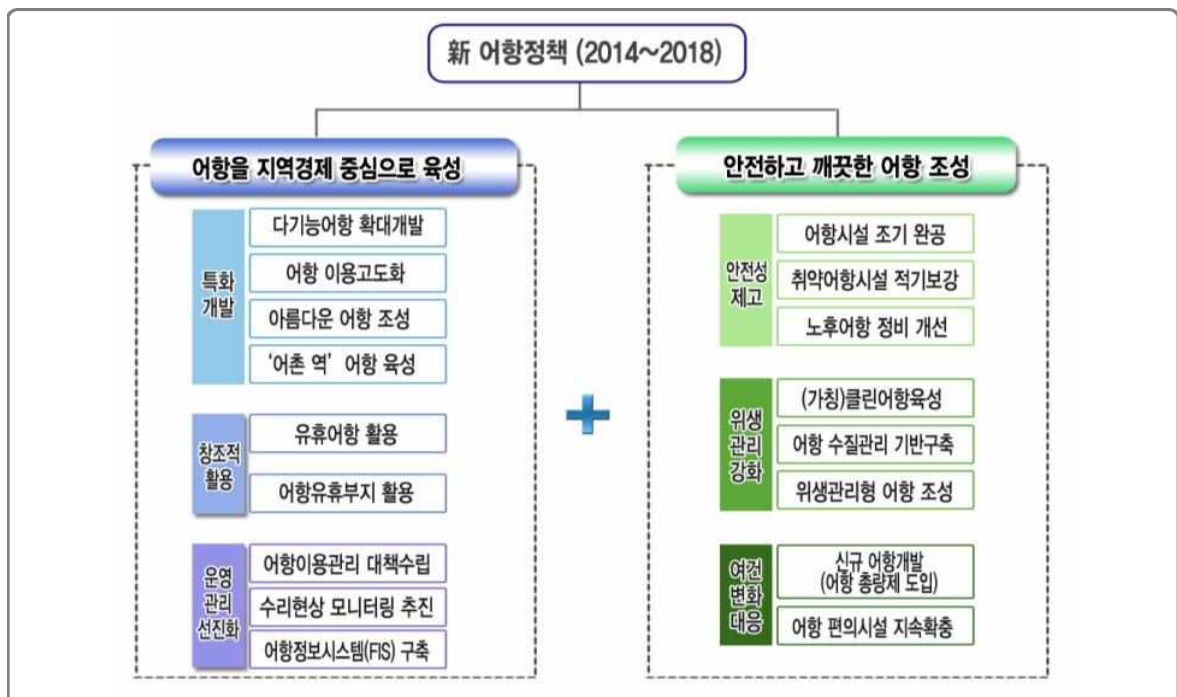


〈 2차 발전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

2 새로운 정책 추진방향



〈 새로운 어촌정책(2014~2018년) 추진방향 〉



〈 새로운 어항정책(2014~2018년) 추진방향 〉

IV. 부분별 추진 과제

1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1.1 융·복합 어촌개발 추진

□ 개 요

- 어촌 6차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모델을 개발하여 어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 연안·어촌을 새로운 발전 축(U축, 서남동해안권 72개 연안 지자체)으로 어촌자원과 농·산촌을 연계한 권역 개발* 추진

□ 목표 및 추진전략

〈 어촌 6차 산업화 〉

- 체계적인 어촌의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14년)
 - * 6차산업화 방향,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유형별 모델 등
 -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6차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14년)
- 어촌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비즈니스 생태계 조성(‘15년~)
 - * (기능) 어촌 6차산업 창업·경영·보육 지원, 기술교류 촉진 등
 - * (일본사례) 어촌 6차 산업화 서포트 센터(Support Center)를 지역별로 50개소 설치·운영중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14~’15년, 4개소)

〈 시범사업 추진전략 (예시) 〉

現 연계 수준	향후 추진 전략	
1차 × 2차	3차	(유통) 수산물식품 판매 촉진 지원
		(관광) 어촌체험, 해양레저, 경관 등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1차 × 3차	2차	(제조·가공) 가공제품 기획·홍보, 경영·기술지원, 기반시설 등 지원

-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을 마련(‘16년)하고, 6차산업화 지원 확대 추진(‘18년까지 56개소)
- 어촌주민이 6차산업화의 주체가 되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체회사 육성(‘14~’18년, 357개소)

- 어촌 6차 산업화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 지원 및 창업컨설팅 지원('15년~)

〈 어촌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

○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14년)

* 중앙정부(해수부, 농식품부, 안행부 등), 전문기관(KMI, 농어촌공사 등), 지방위, 지자체 등

○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기본계획안 마련('14년)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15년)

○ 사업 기본방침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16년~)

* 어촌 그랜드 디자인은 어장, 어항, 연안, 어촌, 농촌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입지적·공간적·브랜드화 특성에 따라 유형화 추진

* 어촌 그랜드 디자인의 권역화는 행정구역 및 어촌공동체 경계를 넘어 바다의 시각에서 주요 만(灣), 섬, 연안도시, 내수면, 내만, 해중, 농어촌통합 등 이용세력권과 어촌자원의 동질성 및 연대 등을 통해 새로운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규모화, 특성화 추진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 6차산업화(신규)>								
사업비	어촌 6차산업화	65,500	2,500	3,700	11,900	16,200	31,200	14,400
	○ 어촌 6차산업화 전략 수립 연구	1,900	300	1,000	200	200	200	2,400
	○ 지원센터 설립·운영							
	○ 6차산업화 지원	61,000	2,200	2,200	11,200	15,200	30,200	2,000
	○ 어촌공동체 회사 육성·지원	2,600	-	500	500	800	800	10,000
일 정	○ 어촌 6차산업화 전략 수립 연구							
	○ 지원센터 설립·운영							
	○ 어촌6차산업 시범사업		4개소	(계속)				
	○ 어촌6차산업 본 사업				11개소	15개소	30개소	
	○ 어촌6차산업 평가 및 관리							
	○ 어촌공동체 회사 육성·지원			57개소	60개소	80개소	160개소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신규)>								
사업비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	92,000	-	2,000	30,000	30,000	30,000	-
일 정	○ 기초연구(개념정립 및 권역화 방안 연구)							-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
	○ 사업기본방침 마련							-
	○ 시범사업 추진				1개소	1개소	1개소	-

1.2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

□ 개 요

-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해중레저 거점마을, 문화어촌, 아름다운 어촌 조성 및 어촌의 숙박 서비스 제고 추진

□ 목표 및 추진전략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 어촌체험마을 조성·운영·관리 선진화 추진
 - (조성) 34개 어촌체험마을 신규지정·회생('13년 100개소 → '18년 134개소)
 - * '14~'18년까지 신규조성사업 26개소, 회생프로그램 8개소
 -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확대 지원(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 확대)
 - (재생)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세 개의 등급마을 중 재생마을 사업추진
 - * 성공마을 및 미흡(퇴출)
 - (운영)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퇴출·회생 프로그램 추진
 - * 발전 가능 체험마을을 선정하여 광특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등)으로 추가 지원 유도('15년~)
 - (관리) 어촌체험마을 운영수익금 재투자를 통한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 및 체험자원 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어장관리 방안 마련('14년)
 - * 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갯벌 휴식년제 도입('14년~)
- 운영 효율 및 체험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전 예약제 도입('14년~)
- 체험마을의 경영 투명성 제고 향상 및 교육 등의 인큐베이팅 지원
 - * 경영·회계·회사 설립 지원('15년~)

〈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

- 해중레저활동(스킨스쿠버, 해중전망대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해중레포츠의 대중화 추진
 - 어촌공동체와 해중레저사업자 간 상생모델을 마련하여 해중레저마을 시범사업 추진('14~'15년, 1식, 10억원)
 - 해중레저거점 수요 및 타당성 조사('15년, 10억원)를 통해 해중레저거점마을 조성 추진('16년~, 3개소, 개소당 300억원)
 - * 해중레저스포츠 교육시설, 해중전망대, 해중경관조성 등 해중레저거점 기능 조성

〈 문화어촌 구축 〉

- 어촌의 폐교, 빈집 등을 활용하여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 * 예술인의 작품 전시, 재능기부사업으로 문화강좌 개최 등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계획 수립('14년), 시범사업('15년, 1개소) 추진, 개선방안 마련 및 사업확대 추진('16년~'18년, 9개소)
 - * (사례) 제주도 저지 예술인마을은 연간 100만 명,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은 연간 80만 명 방문
- 어촌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s)를 구축하여 문화자원 활용 촉진
 - 어촌의 유·무형 유산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15년) 및 실태조사 실시('16년)
 - 어촌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s)를 구축하여 단순 정보 축적이 아닌 원자료에 개인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17년~)
 - * (해외사례) 미국 VOAHA(The Virtual Aural History Archive) 시스템

〈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사업 〉

- 획일화된 경관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성(Locality)과 개성(Identity)을 살린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사업 추진('14년~'18년, 30개소)
 -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범마을 지정('14~'15년, 1개소)
 - 민관이 협력하여 마을을 정비(색채, 지붕, 담장, 어항, 해안가로 정비 등)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 관광코스 개발('16년~'18년, 29개소)

〈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 사업 〉

- 노후화된 주택 및 폐교·빈집을 민박사업 가능토록 리모델링 용자지원('15년~, 시·군별 20억원 규모)
 - * 시설(숙박)과 프로그램(체험)이 결합된 자연친화형, 교육체험형 모델 개발
 - * (유사사례) 농촌민박 : 개·보수 지원(연 3%,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 운영자금(연 3%, 2년이내 상환 조건)
- 숙박시설 평가인증제도 마련('16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17년~, 평가인증 5억원/년)
 - * 시설 및 위생관리 부분, 고객 서비스 부분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
 -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숙박시설 운영 관련 교육 실시('18년~, 서비스 교육 1억 원/년 추진)
- 웹(Web)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방문시기, 가격, 인원, 축제 등) 예약서비스 제공('15년~)
 - * '바다여행' 사이트 개편 : 어촌민박 선택적 예약시스템 마련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3,500	4,000	4,500	5,000	5,000	5,000	
	◦ 어촌체험마을 조성	16,500	3,000	3,000	3,500	3,500	3,500	
	◦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7,000	1,000	1,500	1,500	1,500	1,500	
일 정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6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신규)>								
사업비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00	500	1,500	30,000	30,000	30,000	-
일 정	◦ Pilot 시범사업		1식	(계속)				
	◦ 타당성 조사							
	◦ 본 사업				3개소	(계속)	(계속)	
<문화어촌 구축(신규)>								
사업비	문화어촌 구축	12,100	-	1,300	3,500	4,000	3,300	3,600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10,000	-	1,000	3,000	3,000	3,000	-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2,100	-	300	500	1,000	300	3,600
일 정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 문화예술인 마을 시범사업			1개소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3개소	3개소	3개소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신규)>								
사업비	아름다운어촌 가꾸기 사업	90,000	-	3,000	27,000	30,000	30,000	-
일 정	◦ 아름다운어촌가꾸기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							
	◦ 시범사업			1개소				
	◦ 본 사업				9개소	10개소	10개소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신규)>								
사업비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	20,400	-	1,300	6,000	6,500	6,600	79,200
	◦ SEA STAY 조성	19,300	-	1,300	6,000	6,000	6,000	72,000
	◦ 모니터링 및 평가인증	1,000	-	-	-	500	500	6,000
	◦ 서비스 교육	100	-	-	-	-	100	1,200
일 정	◦ 기본계획 수립							
	◦ 조성 사업			1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 평가인증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교육							
	◦ 예약서비스 제공							

1.3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추진

□ 개 요

- 현장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촌의 산업화를 이끌어갈 인력을 육성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경영기반 구축
-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어촌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사업 관리 강화

□ 목표 및 추진전략

〈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

- 기 투자되었거나 진행 중인 어촌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 어촌경영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및 전문가 인력풀 구성('14년), 경영 활성화 지원('15년~, 42개소)
 - * (대상)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 * (방식) 어촌의 문제진단(Assessment) → 처방(Solution) → 경영지원(Management Support)
 - * (내용) 생산유통·가공·관광·경영·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상품 디자인, 꾸러미 상품 개발 등을 지원

〈 어촌 현장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 〉

- 어촌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양성
 - (신규 후계인력) 수산업 종사 청장년 발굴 및 기반조성자금 지원
 - *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14) : 800명(500억, 1인당 최고 0.7억원, 연리 3.0%)
 - (수산계고교 인력) 신규진입 촉진 연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 현장실습 전문교육(학교 및 공통), (신규) 마이스터고 교육실습장비, 노후 교육실습장비 지원 등
-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지원 연계 추진
 - 현장(공동체리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바다해설사 등)의 요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 유형별 역량요소·측정지표 및 역량강화 모델 개발('15년~)

〈 포괄보조사업 관리방안 개선 〉

- 신규사업의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완료지역에 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가점을 주도록 사업성 평가지침을 마련('14년)
 - 사업완료 지역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현황을 점검(3년)할 수 있는 방안 마련('14년)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신규)>								
사업비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700	-	400	400	400	500	19,200
일 정	○ 운영계획수립·전문가 인력풀 구성							
	○ 경영활성화 지원			10개소	10개소	10개소	12개소	(계속)
<어촌현장 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신규)>								
사업비	어촌현장 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	1,800	-	300	500	500	500	6,000
일 정	○ 관계부처협의							
	○ 관계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유형별 역량 요소·측정지표 마련							
	○ 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육성							
<포괄보조사업 연계 강화(신규)>								
일 정	○ 신규사업평가 지침 마련							
	○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2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2.1 도시-어촌 상생기반 구축

□ 개 요

- 재능기부 및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어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
- 어촌찾아가기 행사를 통해 도시민에게 어촌 경험 기회를 제공

□ 목표 및 추진전략

〈 자매결연 강화 〉

- 자매결연 교류활동량 증대 등 교류 내용 확충
 - 단순 봉사의 1회성 자매결연을 벗어나, 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한 기업(단체), 아파트 부녀회 및 도시와 자매결연 확대('18년까지 1,000건)
 - * 자매결연으로 인한 어촌 방문객수 10만 명 증가 기대

〈 재능기부 활성화 〉

- 정부 3.0과 연계하여 의료·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자를 확보하고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회봉사활동 인증제도 및 포상을 추진('15년)하여 재능기부자 확대('18년까지 1천명 확보)
 - 재능기부 공급자와 수요 어촌이 쌍방향으로 정보 제공 및 매칭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바다여행 포털 개편, '16년, 5억 원)

〈 어촌찾아가기 활성화 〉

- 어촌찾아가기 행사의 방문자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서비스 수준제고
 - 취약계층(자폐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맞춤형 콘텐츠, 시·도별 특화상품, 전문화된 수학여행 프로그램 등을 개발('15년)
 -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촌관광 서비스(숙박 등 각종 편의제공) 수준을 개선('16년~)
-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가이드(Smart guide) 구축
 - 개인별로 특성화한 사용자 맞춤형 어촌방문 정보(관광지, 음식, 숙박, 교통정보 등)를 안내하는 App 개발('15년~'16년, 10억원)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자매결연 강화>								
사업비	자매결연 강화	3,000	-	600	800	800	800	9,600
일 정	○자매결연 확대						1,000건	
<재능기부 활성화>								
	재능기부 활성화	1,500	-	200	700	300	300	3,600
사업비	○재능기부 활성화	800	-	200	200	200	200	2,400
	○온라인 시스템 구축	700	-	-	500	100	100	1,200
	○인증 및 포상							
일 정	○재능기부자 확보						1,000명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어촌찾아가기 활성화 사업>								
	어촌찾아가기 활성화 사업	2,365	165	700	700	400	400	4,800
사업비	○어촌찾아가기 활성화	965	165	200	200	200	200	2,400
	○스마트 가이드	1,400	-	500	500	200	200	2,400
	○어촌찾아가기 행사		15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일 정	○콘텐츠 개발							
	○스마트 가이드 구축·운영							

2.2 어촌 복지·환경 개선

□ 개 요

- 타부처 협력을 통해 어촌의 정주환경(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및 의료·교육·문화 등 복지 여건을 개선
- 어촌의 취약계층을 위하여 현장밀착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목표 및 추진전략

〈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공간 구조 재편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에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의 정비·개량, 역사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 등
-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미추진 권역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타부처(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어촌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14년~'17년) 18개 권역 완료 추진

○ 어촌 생활오수 처리시설 지원사업(환경부 협업) 추진

- 환경부와 협의하여 생활오수처리시설 미설치 행정리(2,379개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추진방안 마련('14년)

〈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사업 〉

○ IT기술 기반으로 원격 의료·교육·문화 지원사업 추진(부처협업)

* ICT기반으로 의료(도서지역 보건진료소와 도시지역 거점병원을 연계하여 진료·처방), 교육·문화 등 복지 서비스 확대

- 부처협력 TF를 구성하여 원격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14년)

*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의가 가능토록 법적 기반 마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지원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원격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 어촌 내에서도 접근성이 더욱 열악한 도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15년~'17년, 5개소)

〈 현장밀착형 복지 지원사업 〉

○ 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생활 현장에서 생활불편 해소 등을 지원하는 센터(가칭 '장보고 쿼 서비스 센터') 운영

- 복지센터 운영 계획 수립('15년), 시범사업 추진('16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수협으로 확대('17~'18년)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정주환경개선>								
사업비	어촌정주환경개선	25,000	(20,000)	(20,000)	(25,000)	(25,000)	25,000	300,000
일 정	○ 어촌종합개발사업 잔여 권역완료		4권역	4권역	5권역	5권역		
	○ 어촌정주환경 개선						5권역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사업>								
사업비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	-	-	(1,500)	(1,500)	(1,500)	-	-
일 정	○ 관계부처 협의							
	○ 원격지원 시범사업			5개소	(계속)	(계속)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사업비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7,100	-	100	1,000	3,000	3,000	16,800
일 정	○ 운영계획 수립							
	○ 시범사업							
	○ 장보고 쿼 서비스센터 설립·운영							

※ () : 타부처 예산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정비사업 비율 적용(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포함)

2.3 어촌공동체 재생 촉진

□ 개 요

- 주민 자발적 깨끗한 어촌만들기, 어촌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 만들기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실천운동 확산
- 어촌 내부의 갈등 치료를 위해 갈등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공동체 정착을 지원

□ 목표 및 추진전략

〈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확산 〉

- 어촌주민 주도의 깨끗한 어촌만들기 운동 확산
 - 깨끗한 어촌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어촌계 참여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14년)
 - * (위원회) 15인으로 구성하고 수협중앙회에 설치('13.11월), 매년 상반기 정기회 개최
 - * 참여 어촌계에 청소도구 구입비 등 일부비용 지원(수협)
 - 전국적인 바다행사와 연계하여 깨끗한 어촌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운동 내용을 다양하게 확대('14년~)
 - * 바다의 날(5.31), 국제연안정화의 날(전국 바다대청소: 9월 셋째주)와 연계하여 실시
 - * (1단계) 쓰레기 수거 → (2단계) 앞마당 가꾸기, 꽃길 조성 등
 - 자긍심 고취 및 홍보를 위하여 깨끗한 어촌마을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포상을 추진 ('15년~)하여 '18년까지 선도마을 400개 육성
- 어촌주민 주도의 마을발전 추진 역량강화
 - 주민이 함께 마을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13년 8개소 → '18년까지 52개소 확대)
 - * 유무형의 자원발굴 및 자원지도 만들기, 마을만들기 선진사례 학습 등
 - 역량강화사업 대상이 되지 못한 마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기록한 책자를 발간배포 및 홍보('14년~)

〈 어촌공동체 내외부의 갈등 조정 〉

- 어촌의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
 - 어촌계간 또는 어촌계원내 갈등으로 정부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마을을 우선대상으로 현장포럼*을 실시하는 등 현황 파악('14년~)
 - * 어촌사랑방 운영 : 격주에 1회 어촌을 방문하여 딱딱한 회의형식이 아닌 상담소 같은 분위기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

- 갈등발생 단계별(발생 전: 예방, 발생 후: 초기단계, 갈등심화 단계 등)로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15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어촌갈등관리 연구과제('14년)와 연계하여 추진

- 갈등조정 전문가 구성 및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발족('16년)

* (관리내용) 갈등관리, 심리치료, 공동 치유 프로젝트 등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민간주도 선제적 갈등관리 시스템)

○ 귀어·귀촌인의 어촌공동체 조기정착 지원

- 귀어·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어촌의 빈집, 일자리 정보 등 온라인 제공 추진('14년)
- 국립수산물과학원에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치('14년)하여 귀어·귀촌 상담, 금융지원,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사업비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00	500	700	700	700	700	8,400
	○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800	-	200	200	200	200	2,400
	○ 주민 역량강화 교육	2,500	500	500	500	500	500	6,000
일 정	○ 깨끗한 어촌만들기 지원방안 마련							
	○ 깨끗한 어촌만들기 확대시행		20	8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 인증 및 포상							
	○ 주민역량강화 교육		8개소	8개소	8개소	10개소	10개소	
	○ 역량강화 교육과정 교재 제작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사업비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14,400
일 정	○ 현장포럼 추진							
	○ 갈등관리 방안 마련							
	○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 빈집 등 정보제공							
	○ 귀어·귀촌 지원센터 지원							

3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3.1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 특화개발

□ 개 요

-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어항 이용고도화, 3대 미항, 어촌 역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 목표 및 추진전략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

- 46개 예비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항*(10개항)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14)
 - * 복합형(3개), 자원조성형(1개), 피서리나형(5개), 낚시관광형(1개)
 - ※ 피서리나형 5개중 4개항은 민간투자 유치 추진
 - * 대상항 평가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배후부지와 연계개발 계획을 제시하는 어항을 우선 선정
- 10개항(민자유치 4개항)에 대한 실시설계 수립 추진('15)
 - * 계획수립시 시설 계획외 소프트웨어 개발과 휴먼웨어 개발계획 포함
 - * 주민, 지자체 등 이용·관리 주체가 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수립된 계획에 따라 10개항 개발 추진 및 사업평가('16~'18)

〈 어항 이용고도화 〉

- 수산업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어항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기능 강화
 - '18년까지 기 계획된 4개항 이용고도화 사업 완료
 - * 대상항 : 거진항(강원), 죽변항(경북), 방어진항(울산), 구시포항(전북)

〈 아름다운 어항 조성 〉

- 지자체 공모, 실사 등을 통해 3대 미항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14)
 - * 국가어항 109개, 지방어항 285개 등 394개 항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 * 선정 및 평가기준은 '14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
 - * 선정시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어촌과 연계 추진
- 3개항에 대한 미항 조성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15)
- 3대 미항 조성사업 완료 및 평가('16~'18)

○ 사업 평가에 따른 확대 개발 추진('19이후)

〈 '3대 미항 조성 프로젝트' 개요 〉

- 주변의 자연경관, 어촌의 문화예술이 어항과 융합된 스토리를 가진 한국형 미항 개발
- 인공적인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미항 개발
 - * 휴양과 자연을 조망하는 숙박·휴게시설, 수변산책로, 해상교량, 전망시설 등
 - * 색과 이야기를 이어주는 포토존, 야간 조명시설, 어항의 이야기를 담은 랜드마크 조형물(조형등대, 안내판)

〈 '어촌 역(驛)' 어항 육성 〉

- 어항 내 여유수역을 활용하여 소규모 요트계류 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운영중인 마리나시설과 연계한 어촌역 개발
- 사업대상항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14)
- 매년 5개소 조성하여 '18이후 20개소 조성 완료('15이후)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사업비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189,300	3,000	6,000	30,000	60,000	90,300	968,000
일정	○ 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 다기능어항 개발				5개소	5개소	(완료)	(사업확대)
	○ 사업평가						1식	
〈어항 이용고도화〉								
사업비	어항 이용고도화	71,330	4,340	12,000	12,000	20,000	22,990	-
일정	○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추진		3개소	1개소(3)	(계속)	(계속)	완료	
	○ 사업 평가						1식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비	아름다운 어항 조성	30,700	-	500	9,000	9,000	12,200	170,000
일정	○ 공모 및 선정							
	○ 개발계획 수립		1식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 3대 미항 조성				3개소	(계속)	(완료)	확대
	○ 사업평가						1식	
〈 '어촌 역(驛)' 어항 육성 〉								
사업비	어촌 역 어항 육성	40,700	500	10,000	10,000	10,000	10,200	-
일정	○ 기본계획 수립		1식					
	○ 어촌 역 어항 육성(20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 사업평가						1식	

3.2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창조적 활용

□ 개 요

- 수산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어항은 어항지정을 해제, 민간에게 매각하여 해양레저 관광단지, 청소년 해양수련원, 양식장 등으로 전환개발
- 이용이 저조한 어항부지는 수산시설(양식장, 가공시설 등), 토요시장,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등 재생사업을 통한 이용 활성화 모색

□ 목표 및 추진전략

〈 유희어항 민간 매각 〉

- 이용이 저조한 10개 국가어항 중 5개항* 선정('14)
 - 이용율에 따른 매각 등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 * 5개 대상항은 현지 어선수, 총톤수, 연간 외래어선수, 위판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횟수, 매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매각대상항 활용방안 마련('15)
 - 수산관련시설 : 해상가두리, 종패 및 치어양식장 등 관련시설
 - 해양레저시설 : 종합 해양스포츠 레저센터, 청소년 해양수련원
 - 레저·관광 단지조성 : 콘도 등 해양인접 숙소, 쇼핑센터, 워터피아, 인공해수욕장 등
- 어항 지정해제 및 매각·활용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15)
 - * 매각 대금은 신규어항 개발 등 어항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우선 대상 5개항에 대한 유희어항 민간 매각 추진('16)
- 매각 성과에 따른 추가 유희어항 매각 검토('17~'18)

〈 어항 유희부지 활용 〉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14개 국가어항 미활용 부지(면적 : 228,541㎡)의 유형별 활용계획 수립('15)
 - * 수산지원사업(양식장, 수산가공시설, 냉동창고 등)의 경우 국가어항 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유희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실시('16~'18)
 - * 친환경에너지 도입 :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어항기능시설 및 주변 수산시설에 대한 자체 전력 공급 및 잉여 전력의 판매를 통한 환경 친화형 어항 개발
 - * Fisherman's Wharf(주말토요시장) :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말에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어촌문화센터 : 어촌지역주민 및 방문 도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서관, 사랑방, 수영장, 해수탕 등 시설 포함)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유휴어항 민간 매각〉								
사업비	유휴어항 활용	-	-	-	-	-	-	-
일정	○ 공청회 및 자문							
	○ 대상항 활용방안 마련							
	○ 민간 매각				5개소	(계속)	(계속)	
〈어항 유휴부지 활용〉								
사업비	어항유휴부지 활용	20,700	-	500	2,500	10,000	7,700	50,000
일정	○ 기본계획			1식				
	○ 시범사업조성(4개소)				1개소	3개소 (1개소)	(완료)	
	○ 사업 평가 및 확대						1식	

3.3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 개 요

○ 어항관리 인력·재원 확충, 수리현상 모니터링 실시, 어항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목표 및 추진전략

〈 어항 이용·관리 대책 수립 〉

- 어항관리는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인원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대한 대책 마련
 - 어항관리, 인력·재원 확충 방안 마련('14)
 - * 이용·관리주체간 거버넌스 구축 및 어항점·사용료, 어항시설 이용료 징수 등 자원확보
 - 어항 유지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15)

〈 수리현상 모니터링 추진 〉

- 어항의 해양수리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참·퇴적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기능유지와 환경피해를 최소화
 - 국가어항 모니터링 로드맵 구축('13)에 따른 정기적인 해양수리현상 모니터링 실시('14~'16)
 - * 침·퇴적 우심어항에 대해서는 매년 모니터링 실시
 - * 그 외 어항은 정기적인(3~4년 단위) 모니터링 실시
 - ※ 현재 추진중인 '국가어항 수리현상 모니터링 조사용역('13)' 결과에 따라 우심어항 및 항별 모니터링 적정 주기 검토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해역별 참·퇴적 저감대책 수립('17)
 - * 침·퇴적 저감 시설물 설치 및 정기적인 유지준설 등 검토

〈 어항종합정보시스템(FIS) 구축 〉

-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전략계획을 수립('13)하고 이에 따라 세부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14~)
 - 어항종합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4)
 - 어항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어항운영관리시스템, 어항재난영상 통합관제시스템 등 정보종합시스템 구축('17~'18)
 - * 국가어항 수리현상 모니터링, 시설물 안전점검 등과의 연계 추진
 -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18~)
 - * 전문기관의 위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 사업 추진 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수리현상 모니터링 추진〉								
사업비	수리현상 모니터링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0
일정	○ 수리현상 모니터링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어항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어항종합정보시스템	9,100	400	650	5,850	1,200	1,000	10,000
사업비	○ 시스템 구축		1식	1식	1식	1식		
	○ 운영 및 유지보수						(계속)	(계속)

4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4.1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 개 요

- 어항의 조기 완공 및 취락시설의 적기 보수·보강 추진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어항편의시설 및 관광·레저 시설 등의 설치

□ 목표 및 추진전략

〈 어항시설 조기 완공 〉

- 어선 안전수용을 위해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93개 조기 완공('14~'18)

* 국가어항 : 9개항중 3개항 완공(6개항은 계속 투자)

년도	항수	대 상 항
'14	9	대포근포항, (도장항, 구시포항, 장고항, 이목항, 천성항, 궁평항, 노량항, 남포항)
'15	8	도장항, 구시포항, (장고항, 이목항, 천성항, 궁평항, 노량항, 남포항)
'16~'18	(6)	(장고항, 이목항, 천성항, 궁평항, 노량항, 남포항)

※ ()는 계속 투자항임

* 지방어항 : 40개항 완공

-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지속적 투자로 어촌의 정주생활 기반 조성 및 어업활동 지원

* 어촌정주어항 : 50개항 완공

* 마을공동어항 지정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등 제도개선 추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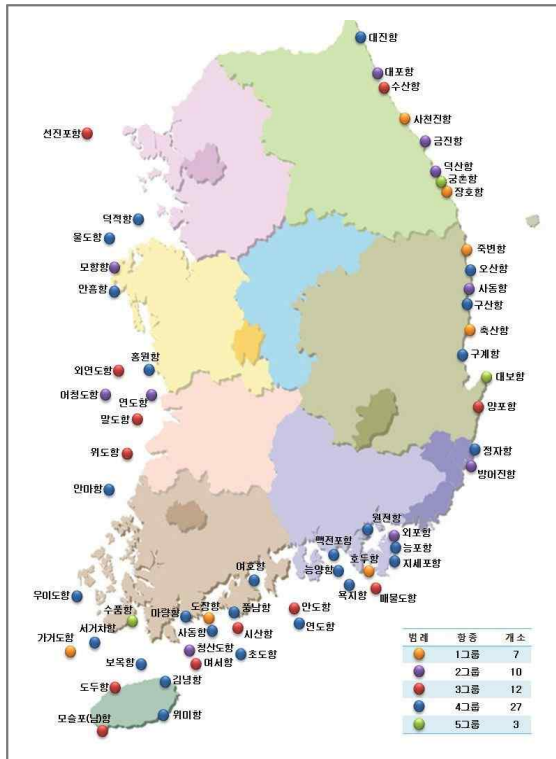
〈 취락 어항시설 적기 보강 〉

- 59개 대상항 중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포함한 15개항 완료('18)

*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보수·보강 추진

구 분	선정 기준	구 분	선정 기준
1그룹 (7개항)	·시공중 또는 보수·보강예산이 반영된 어항	4그룹 (27개항)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어항
2그룹 (10개항)	·관련용역이 시행중이거나 시급히 필요한 어항	5그룹 (3개항)	·항내 정온도가 불량하여 신규시설이 필요한 어항
3그룹 (12개항)	·태풍 피해이력 등 시설물이 취약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어항		

* 재해안전관련 외곽시설 보수·보강 및 항내 정온도 개선 대상항(59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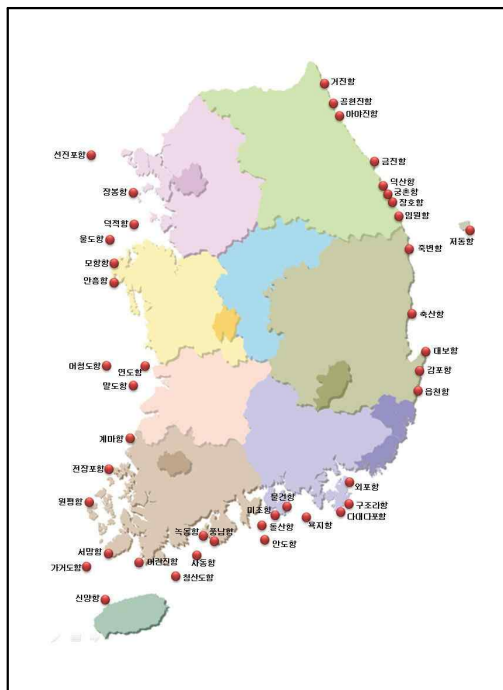


주) ____항은 '18까지 완료 예정항임(15개항)

〈 노후어항 정비 개선 〉

○ 국가어항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지속 추진('14~)

* 정비사업 대상 42개항 중 17개항 사업 완료('18년까지)



주) ____항은 '18까지 완료 예정항임(17개항)

시도	항수	항명
인천	4	선진포항, 장봉항, 덕적도항, 울도항
강원	8	거진항, 임원항, 장호항, 공촌항, 덕산항, 금진항, 아야진항, 공현진항
충남	2	안흥항, 모항항
전북	3	어청도항, 연도항, 말도항
전남	12	계마항, 녹동항, 서망항, 청산도항, 가거도항, 전장포항, 어란진항, 사동항, 풍남항, 안도항, 돌산항, 원평항
경북	6	죽산항, 죽변항, 감포항, 저동항, 대보항, 읍천항
경남	6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미조항, 옥지항, 물건항, 외포항
제주	1	신양항
계	42	

□ 사업 추진 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항시설 조기 완공〉								
사업비	개발중인 어항의 조기 완공	901,418	159,230	162,088	175,500	200,000	204,600	1,871,805
	○ 국가어항	158,218	25,330	23,888	23,000	43,000	43,000	778,405
	○ 지방관리어항	743,200	133,900	138,200	152,500	157,000	161,600	1,093,400
일정	○ 국가어항		1개소	2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계속)
	○ 지방어항		5개소	15개소	11개소	5개소	4개소	(계속)
	○ 어촌정주어항		10개소	15개소	10개소	9개소	6개소	(계속)
	○ 마을공동어항		-	-	10개소	10개소	10개소	(계속)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및 노후어항 정비 개선〉								
사업비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355,823	22,935	69,500	90,400	75,800	97,188	483,505
일정	○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	4개소	4개소	2개소	5개소	(계속)
〈노후 어항 정비 개선〉								
사업비	노후어항 정비 개선	336,577	119,039	78,466	54,072	41,000	44,000	529,354
일정	○ 노후어항 정비개선		7	3	7	(10)	(11)	(계속)
	○ 어항 유지보수사업		1식	1식	1식	1식	1식	(계속)

※ 사업량은 완공항수 기준임

4.2 어항 정화·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 개 요

- 깨끗한 어항 조성을 위한 (가칭) “클린어항 육성” 및 “클린어항 인증제 도입”, 수질관리 능력 향상 등
- 위생관리형 어항* 1개소 시범사업 추진

* 연간 위판금액이 200억 이상 또는 위판량이 2,000톤 이상인 13개 항 중 선정

□ 목표 및 추진전략

〈(가칭)클린어항 육성〉

- 클린어항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선정기준 마련('14)
- 클린어항 조성방안 마련 및 대상항 선정('15)
- 클린어항 조성사업 추진('15~'18)
 - 항내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환경개선 시설 정비

* 어구창고, 해수소통구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 * 수저질 및 악취개선 시스템 도입 및 항내오염원 제거
- 클린어항 인증제도 도입('16)
-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수 클린어항을 지정하여 홍보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

○ 사업평가('18) 후 사업확대 추진('19~)

〈 어항수질관리 기반구축 〉

- 어항내 해양쓰레기 처리 능력 개선을 위한 노후 청소선 7척 대체('16)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체선 선형 개발('14~'15)
 - 50톤급으로 세력 증강하여 대체선 건조('15~'16)
 - 대체선 운항 및 관리 대상항 확대 : 160개항 → 252개항('17~)
- 20개항에 산소 마이크로 버블장치 등 수저질 및 악취개선시스템 구축으로 어항환경 개선 ('15~'18)
 - * '15년부터 매년 5개항씩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

- 위생관리 어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15)하고 위생관리 어항개발 실시설계를 추진('16), 시범사업 1개소 조성('17~'18)
 - (사업내용) 위생관리형 위판시설 정비, HACCP 관리체계 도입, 어획물 자동화 이송시스템, 청정해수 도입시설, 항내 수질개선 등
 - * 1개소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효과 분석('18) 후 사업 확대 추진('19~)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가칭)클린어항 육성〉								
사업비	(가칭)클린어항 육성	40,200	-	10,000	10,000	10,000	10,200	110,000
일정	○(가칭)클린어항 조성(4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계속)
	○사업평가 실시						1식	
〈어항수질관리 기반구축〉								
사업비	어항수질관리 기반구축	37,855	145	2,018	10,598	15,783	9,311	111,732
일정	○청소선 대체 건조		설계	3척	4척			
	○수저질개선시스템 구축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계속)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사업비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11,100	-	300	500	5,000	5,300	129,600
일정	○기본계획 수립			1식				
	○실시설계 추진				1식			
	○시범사업 추진(1개소)					1개소	(완료)	(계속)
	○사업평가 실시						1식	

※ 사업량은 완공항수 기준임

4.3 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 개 요

- 5개 지방관리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을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 추진('14~'18)

□ 목표 및 추진전략

〈 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

- 신규어항 개발을 위한 지자체 수요 파악 및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용역을 통해 5개항 지정('14)
 - * '18년 추정 어선척수 기준 안전수용율은 88.5%로 신규로 5개항(국가어항 규모 기준) 추가 개발 필요
- 5개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15~'16)
- 신규 국가어항 개발 착수('16~)

〈 어항편익시설 지속 확충 〉

○ 어항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어항 편익시설 지속 확충(~'18)

- 어항편익시설 :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어구창고, 부잔교, 해수소통구 등

* 여객대합실이 미조성된 8개 국가어항은 '18년까지 조성 완료

[어항 기능 및 편익 시설]



□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신규어항 개발〉								
사업비	신규어항 개발	28,500	1,000	2,500	5,000	5,000	15,000	670,000
일정	○ 지정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 신규어항 개발 추진					5개소	(계속)	(계속)
〈어항편익시설 지속 확충〉								
사업비	어항편익시설 지속 확충	34,316	2,316	8,000	8,000	8,000	8,000	100,000
일정	○ 어항편익시설 지속 확충		(1식)	(1식)	(1식)	(1식)	(1식)	(계속)

V. 투자계획 및 효과 분석

1 중장기 투가계획

1.1 총괄

추진 전략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 원)						2019년 이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5,364	3,228	3,836	5,399	5,968	6,935	50,340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3,990	70	180	1,143	1,226	1,371	1,224
	융·복합 어촌 추진	1,575	25	57	419	462	612	144
	어촌관광 활성화	2,380	45	116	715	755	749	828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5	-	7	9	9	10	252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483	19	35	51	64	314	3,576
	도시·어촌상생 강화	69	2	15	22	15	15	180
	어촌 복지·환경 개선	321	-	1	10	30	280	3,168
	어촌경영 안정화	93	17	19	19	19	19	228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3,718	102	317	714	1,122	1,464	12,180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3,320	78	285	610	990	1,357	11,380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207	-	5	25	100	77	500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191	24	27	79	32	30	300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소 계)	17,173	3,037	3,304	3,491	3,556	3,786	33,360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892	1	123	211	308	248	3,513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5,996	3,024	3,156	3,230	3,198	3,388	23,147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285	10	25	50	50	150	6,700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2 어촌부문 투자계획

전략 과제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 원)						2019년 이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4,473	89	215	1,194	1,290	1,685	4,800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3,990	70	180	1,143	1,226	1,371	1,224
	어촌6차산업화 추진	655	25	37	119	162	312	144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	920	-	20	300	300	300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35	40	45	50	50	50	-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	5	15	300	300	300	-
	문화어촌 구축	121	-	13	35	40	33	36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900	-	30	270	300	300	-
	SEA STAY (어촌특화민박)조성	204	-	13	60	65	66	792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	17	-	4	4	4	5	192
	어촌현장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	18	-	3	5	5	5	60
	(소 계)	483	19	35	51	64	314	3,576
지속 가능한 어촌 구현	자매결연 강화	30	-	6	8	8	8	96
	재능기부 활성화	15	-	2	7	3	3	36
	어촌찾아가기 활성화사업	24	2	7	7	4	4	48
	어촌정주환경 개선	250 (900)	(200)	(200)	(250)	(250)	250	3,000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사업	(45)	-	(15)	(15)	(15)	-	-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71	-	1	10	30	30	168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	5	7	7	7	7	84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	12	12	12	12	12	144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 타 부처 예산

1.3 어항부문 투자계획

사업군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 원)						2019년 이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0,891	3,139	3,621	4,205	4,678	5,250	45,540
어항 기본 사업	(소 계)	9,014	1,592	1,621	1,755	2,000	2,046	18,718
	국가어항	1,582	253	239	230	430	430	7,784
	지방어항	4,851	911	940	969	1,000	1,031	3,662
	어촌정주어항	2,281	428	442	456	470	485	3,841
	마을공동어항	300	—	—	100	100	100	3,431
어항 정비 사업	(소 계)	7,139	1,424	1,490	1,465	1,268	1,492	12,064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215	5	10	20	100	80	1,935
	어항 노후시설 정비사업	3,366	1,190	785	541	410	440	5,294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4,835
어항 환경 개선 사업	(소 계)	3,331	81	343	600	920	1,387	9,761
	복합형 다기능어항	1,248	15	30	180	300	723	4,165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
	아름다운 어항조성	307	—	5	90	90	122	1,700
	어항 유희부지 활용	207	—	5	25	100	77	500
	(가칭)클린어항 육성	402	—	100	100	100	102	1,100
	위생관리 어항 조성	111	—	3	5	50	53	1,296
	어항편익시설 조성	343	23	80	80	80	80	1,000
레저 관광 기반 시설 사업	(소 계)	837	15	120	200	300	202	3,580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215	5	10	100	100	—	600
	낙시관광형 다기능어항	215	5	10	—	100	100	2,980
	‘어촌역’ 어항 육성	407	5	100	100	100	102	—
기타	(소 계)	570	25	47	185	190	123	1,417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100
	수리현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75	15	15	15	15	15	150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379	1	20	106	158	93	1,117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50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기존 소규모항포구)은 지방비 포함 금액임

2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 산업연관분석

○ 산업간 투입·산출의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특정 산업의 투자 등 최종수요 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 중 건설(토목)사업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

* 건설(토목) 관련 사업 총투자비 산정결과 : 어촌부문 중기 4,473억 원, 장기 4,800억 원, 어항부문 중기 2조 891억 원, 장기 4조 5,540억 원

□ 분석자료

○ 한국은행의 2011년 산업연관표 이용(최신 버전)

- 소분류(168개 산업분류)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 수산 및 건설부문을 포함한 총 28개 산업으로 재분류

□ 분석결과

○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중기(‘14~’18) 투자효과는 생산유발 5조 1,734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 2,141억 원, 취업유발 32,488명으로 분석

(단위 : 억 원, 명)

구 분		중기 투자효과 (2014~2018년)	장기 투자효과 (2019년 이후)	합계
생산유발효과	어촌부문	8,657	8,344	17,001
	어항부문	43,077	93,532	136,609
	총괄	51,734	101,876	153,610
부가가치 유발효과	어촌부문	4,207	4,055	8,262
	어항부문	20,934	45,454	66,388
	총괄	25,141	49,509	74,650
취업유발효과	어촌부문	5,437	5,240	10,676
	어항부문	27,051	58,736	85,787
	총괄	32,488	63,976	96,463

3 일자리 창출효과

□ 5년간('14~'18년) 어촌부문 일자리는 2,033개(신규 1,973개) 창출 예상

(단위 : 억 원, 명)

전략 과제	구 분	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일자리 수 총 계	2,033 (1,973)	110 (50)	253 (143)	1,483 (1,185)	1,550 (112)	2,033 (483)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투 자 비	3,990	70	180	1,143	1,226	1,371
	일자리 수	1,649 (1,609)	82 (42)	209 (127)	1,374 (1,165)	1,467 (93)	1,649 (182)
지속가능한 어촌구현	투 자 비	483(945)	19(200)	35(215)	51(265)	64(265)	314
	일자리 수	384 (364)	28 (8)	44 (16)	64 (20)	83 (19)	384 (301)

※ 투자비의 () : 타 부처 예산, 일자리 수의 () : 신규 일자리 창출 수

□ 5년간('14~'18년) 어항부문 일자리는 6,245개(신규 2,951개) 창출 예상

(단위 : 억 원, 명)

전략 과제	구 분	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일자리 수 총 계	6,245 (2,951)	3,754 (460)	4,307 (553)	4,974 (667)	5,532 (558)	6,245 (713)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투 자 비	3,718	102	316	714	1,122	1,464
	일자리 수	1,751 (1,691)	112 (52)	362 (250)	843 (481)	1,342 (499)	1,751 (409)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투 자 비	17,173	3,036	3,304	3,491	3,556	3,786
	일자리 수	4,494 (1,260)	3,642 (408)	3,945 (303)	4,131 (186)	4,190 (59)	4,494 (304)

※ () : 신규 일자리 창출 수

제 1 장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배 경

-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압축 성장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 특히 어촌지역은 어촌경제 침체로 고령화, 공동화가 심화되고 정주환경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낙후되어 있음
- 특히, WTO-DDA,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어촌지역은 대외여건에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어 창조경제의 융·복합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동력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음
 - 어촌·어항은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의 생산기반이 아니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융·복합되는 6차산업화로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조적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함
-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는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이는 수산분야뿐만 아니라 어촌·어항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 특히,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13년 4월)에서 “수산업의 영역을 생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로 확대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지시
 - 정부는 전통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정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2 목 적

-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어촌·어항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어촌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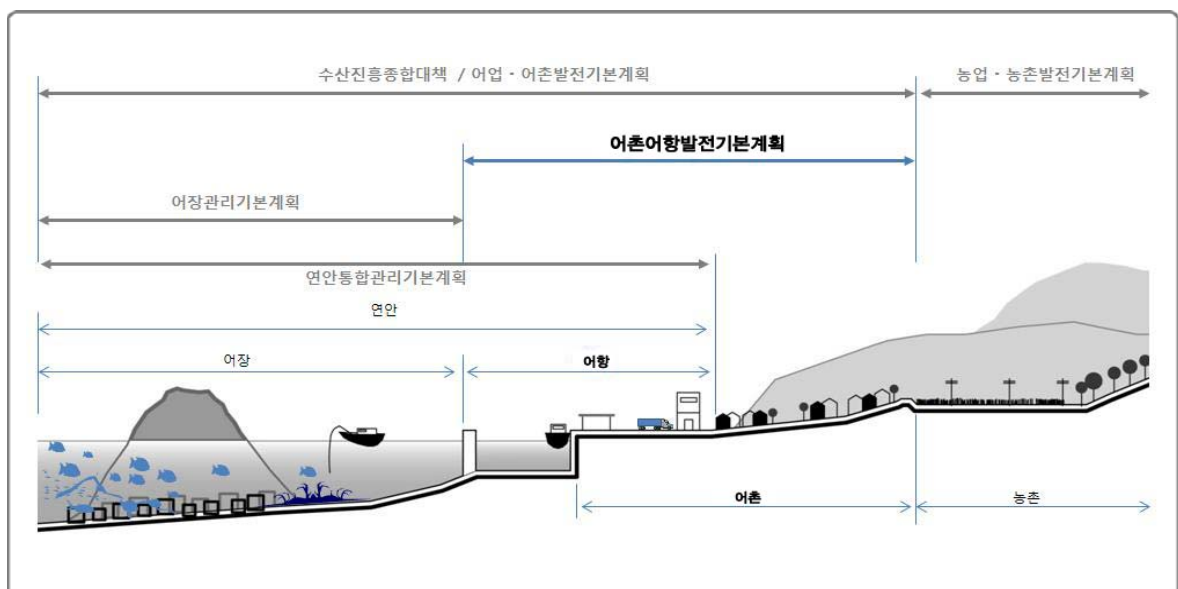
2 계획수립의 근거 및 위상

2.1 계획수립의 근거

-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2차 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2차 발전기본계획(2014~2018년)은 1차 발전기본계획(2009~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소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음
- 특히,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1차 수산물의 생산정책에서 6차 산업화를 견인하는 공간 중심의 어촌·어항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2.2 위 상

-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어업생산 기반공간인 어항과 그 배후 어촌지역에 대한 중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수산분야의 종합계획인 수산진흥종합대책(수산업법), 어업·어촌발전계획(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연계하여 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안통합관리기본계획(연안관리법) 등 관련 계획과도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가짐



〈그림 1.6〉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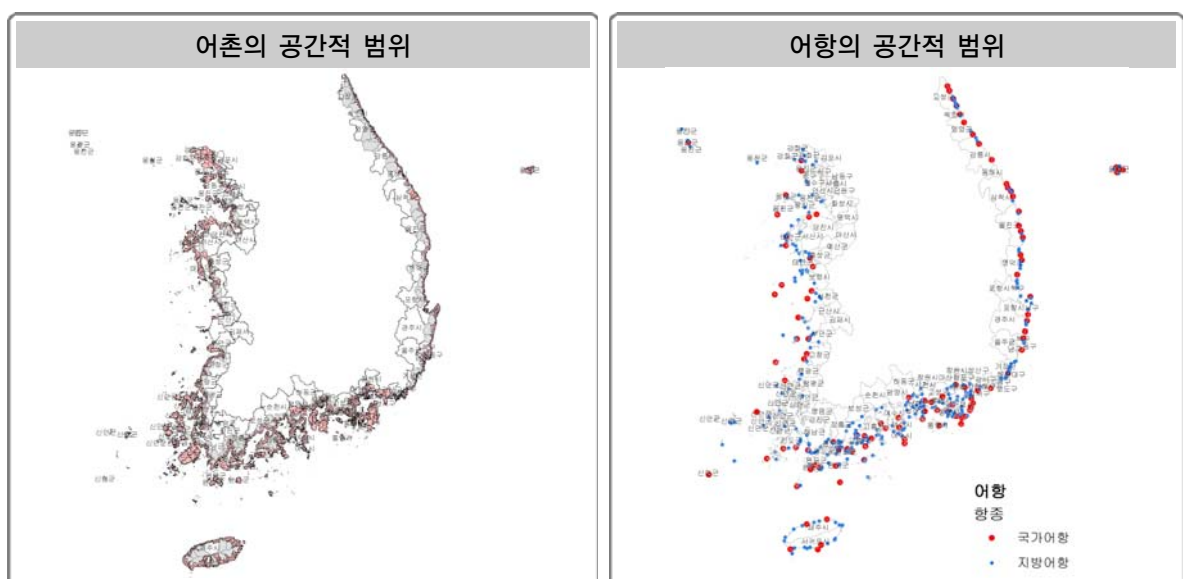
3 계획수립의 범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2년 말 기준
- 목표연도 : 중기 2014 ~ 2018년, 장기 2019 ~ 2030년

3.2 공간적 범위

- 어촌·어항의 공간적 범위는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됨
 - 「어촌·어항법」 기준에 따른 어촌은 72개 시군구, 560개 읍면동에 해당되지만 실제 어촌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행정리 단위로 살펴보면 5,374개소¹⁾로 조사되었음
-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을 의미함
 - 「어촌·어항법」에서 정의하는 어항은 총 989개소로 국가어항 109개소, 지방어항 285개소, 어촌정주어항 595개소이며, 비법정 소규모항포구는 1,309개소에 달함



〈그림 1.2〉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1) 어촌지역의 행정리 수는 어업권 소멸 또는 어촌계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단위 : 개소)

구 분			개 소	비 고
어 촌	시·군·구		72	· 어촌계 가입기준
	읍·면·동		560	· 어촌계 가입기준, 행정구분 기준
	어촌계		1,982	· 어촌계 분류평정 참고
	행정리		5,374	· 해면의 행정리 기준
어 항	법 정	소계	989	
		국가어항	109	
		지방어항	285	
		어촌정주어항	595	
		마을공동어항	-	
	비법정	소규모항포구	1,309	

주 : 개소수는 지정·해제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3.3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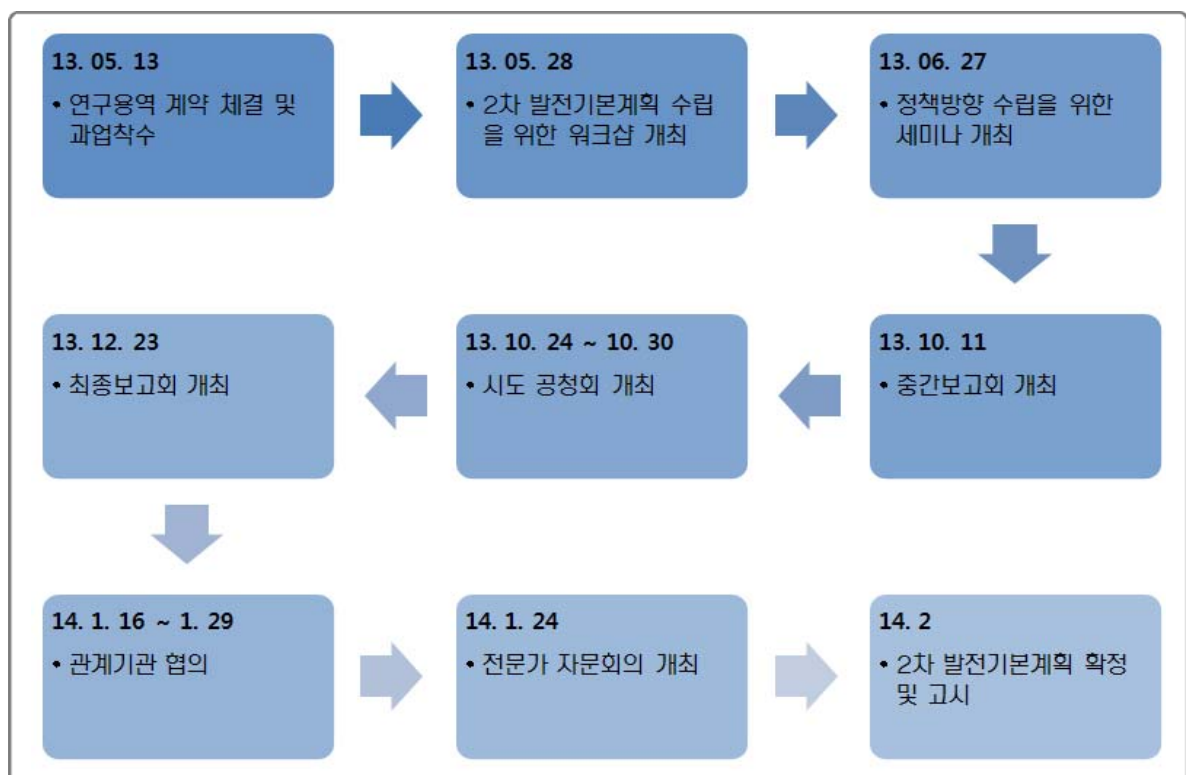
3.3.1 기초조사의 내용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기초조사는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편익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추진경과 및 계획수립 체계

1 추진경과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추진경위는 크게 정책방향 수립 단계, 보고회·공청회, 관계기관 및 발전기본계획(안) 확정·고시 단계로 구분됨
- 먼저, 정책방향 수립단계는 2013년 5월 착수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중심으로 워크숍(2013.5.28), 세미나(2013.6.27)를 개최하고 어촌·어항분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간보고회(2013.10.11), 시·도 공청회(2013.10.24~10.30), 최종보고회('13.12.23)를 거치면서 2차 발전기본계획의 방향과 세부과제를 보완하였음
- 마지막으로 2014년 1월 이후부터는 관계기관 협의(2014.1.16~1.29)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하였음
 - 관계기관 협의 시 의견을 제시한 기관은 교육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전라남도, 환경부 등이며, 해당 기관 의견 중 즉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집행단계에서 보완적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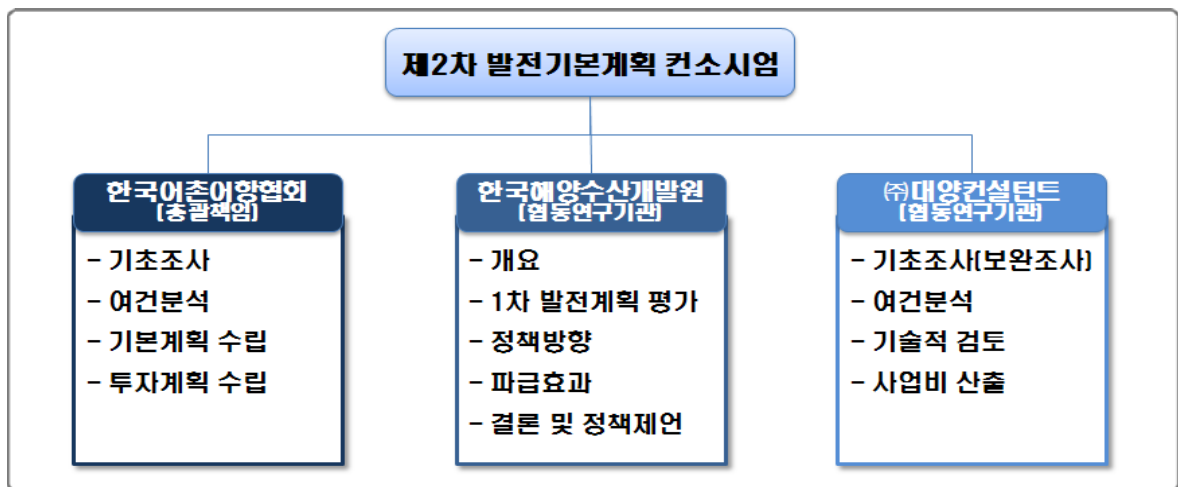


〈그림 1.3〉 2차 발전기본계획의 추진경위

2 계획수립 체계

2.1 추진체계 구축

- 2차 발전기본계획은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정책분야, 기술분야 등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었음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총괄책임기관으로 공동수행기관과의 원활한 연구추진을 위한 업무조정과 본 과업의 기초조사(여건분석), 기본계획 수립, 투자계획 수립 등을 담당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차 발전기본계획의 평가, 2차 발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정책방향, 경제적 파급효과를 담당하였음
 - (주)대양컨설팅트는 현황자료 조사, 사업비 산출, 기술적 대안 검토 등을 맡고,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해양수산개발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2차 발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책방향 및 사업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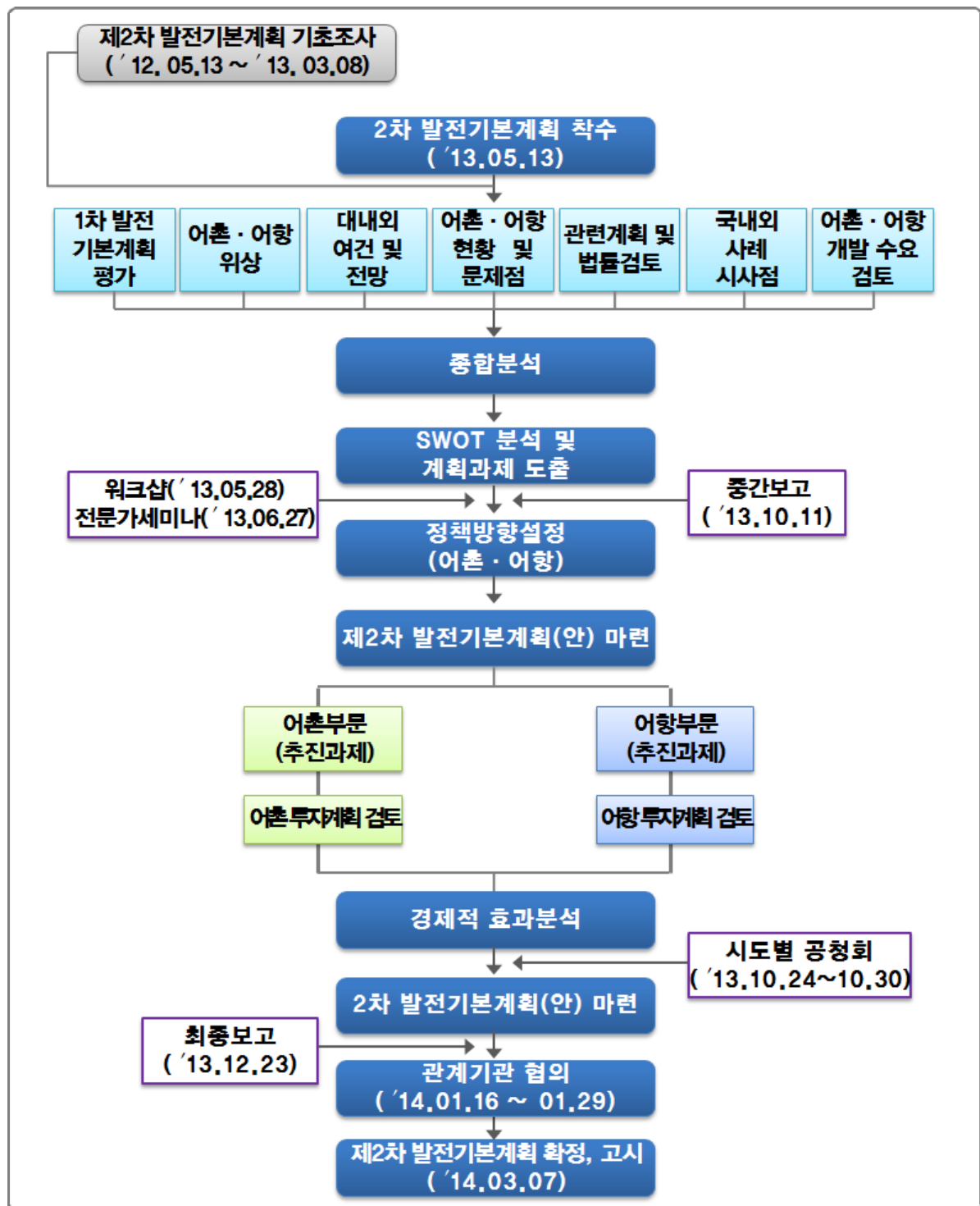
〈그림 1.4〉 계획수립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

2.2 계획수립 체계도

- 2차 발전기본계획은 <그림 1.5>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음
 - 2차 발전기본계획은 과업착수 전 기초조사²⁾를 수행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는 2차 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촌·어항의 현황 및 문제점에 활용하였음

2) 「어촌·어항법」 제3조(기초조사 등)에 근거하여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수행하였음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은 1차 발전기본계획의 평가, 대내외 여건 전망, 현황 및 문제점,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와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였음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사업의 특성상 어촌부문과 어항부문으로 분리하여 수립하였고, 시도별 공청회, 최종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14년 3월 최종적으로 확정·고시되었음



〈그림 1.5〉 2차 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절 제1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1 제1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평가

1.1 1차 발전기본계획의 개요

1.1.1 평가개요

- 1차 발전기본계획(2009년~2013년)의 평가는 i)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ii)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 iii) 1차 발전기본계획의 한계, iv) 1차 발전기본계획의 개선방안 등 크게 네 분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함
- 첫째,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세부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요성과와 각 사업별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보고자 함
- 셋째, 1차 발전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2차 발전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1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6〉 1차 발전기본계획의 평가 개요

1.1.2 1차 발전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과제

- 1차 발전기본계획은 「국민과 공존하는 활기찬 어촌·어항 창조」라는 비전과 ① 어촌의 유형화 개발, ②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③ 어촌인력 양성, ④ 어항기능의 다양화, ⑤ 해외어항개발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음
- 1차 발전기본계획의 세부과제는 어촌부문과 어항부문 각각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촌부문의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과 어항부문의 어항개발 국제협력 추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사업에 해당됨
 - 어촌부문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어촌의 유형화·특성화 개발('13년까지 61개 권역),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13년까지 어촌체험 17개소, 어촌관광 모델 15개소),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13년까지 9개소), 어촌 휴먼웨어 육성('13년까지 해설사 연간 120명, 체험마을 컨설팅 매년 16개소 등), 도어교류('13년까지 1,327건) 등을 추진하였음
 - 어항부문은 어항기본사업을 통한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13년까지 국가어항 완공률 94.5%, 지방어항 70%, 어촌정주어항 38%), 어항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어항 기능 제고('13년까지 국가어항 25개소), 어항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다기능어항 개발('13년까지 13개소, 어항기능시설 확충 5개소), 어항개발 국제협력사업(솔로몬군도 1개소) 등을 추진하였음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최종보고서(총괄편)」, 2008. p.229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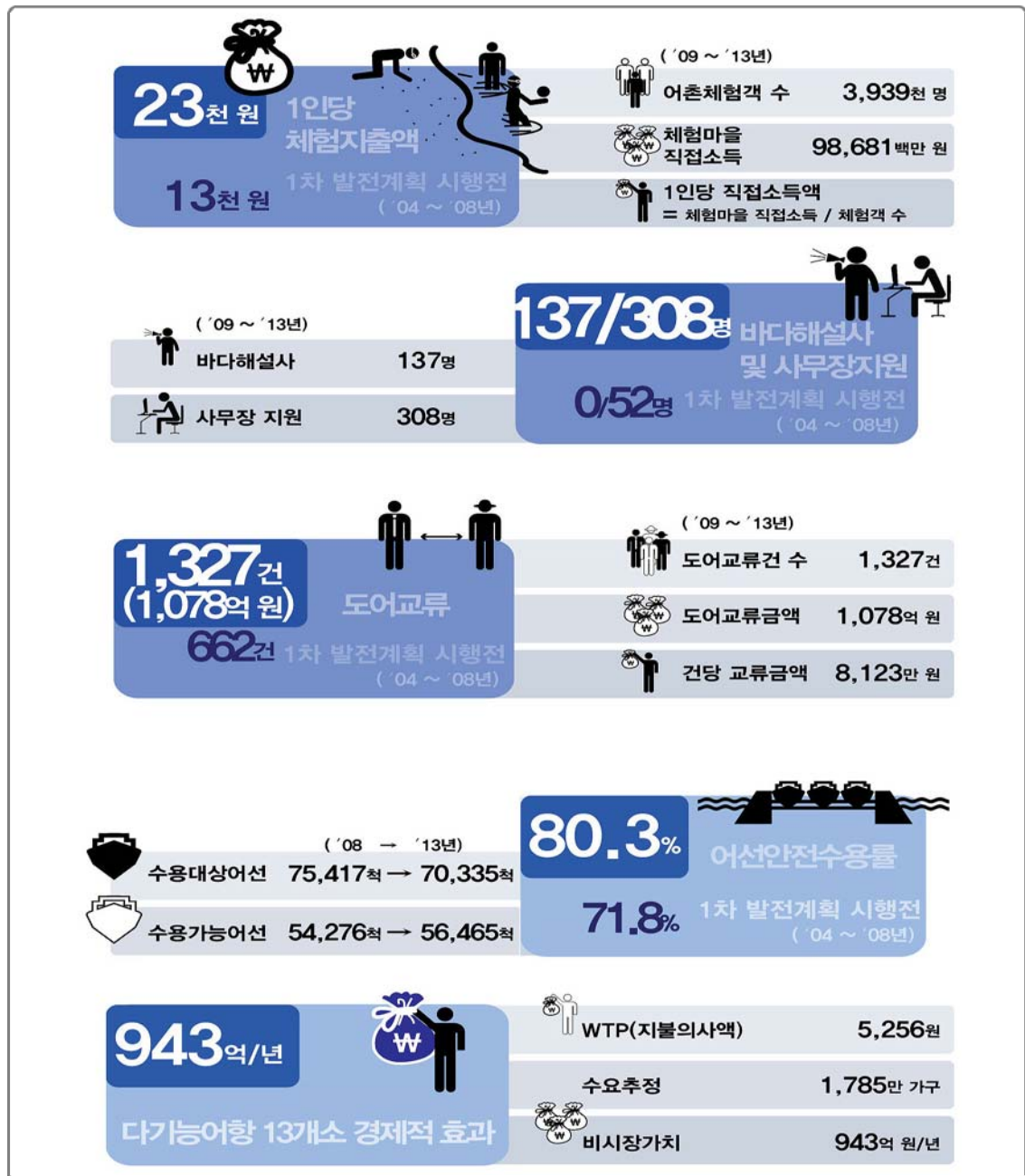
〈그림 1.7〉 1차 발전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과제

1.2 1차 발전기본계획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

1.2.1 주요성과

1) 개 요

- 1차 발전기본계획('09년~'13년)의 정량적 주요성과는 도어교류, 체험소득 및 체험객 수, 어촌관광 전문인력, 어선의 안전수용률 등에서 나타났으며, 어촌부문과 어항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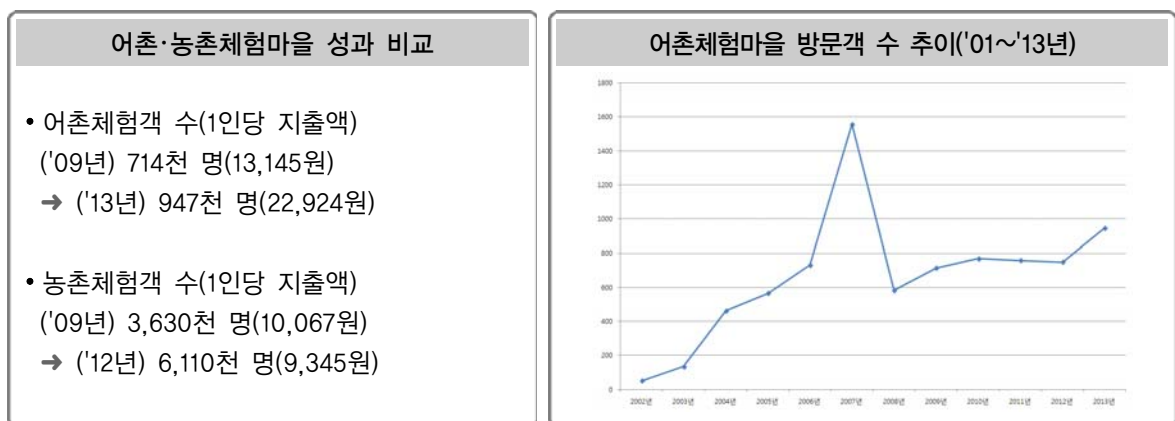


〈그림 1.8〉 제1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어항부문 주요 성과

2) 정량적 성과

(1) 어촌부문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1차 발전기본계획 시행 전('04년~'08년 기준) 1인당 체험지출액은 13,145원에 불과하였으나 '09년~'13년까지 체험객 수뿐만 아니라 1인당 체험지출액도 22,924원으로 증가하였음
- 어촌체험객 수는 2007년 1,557천 명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 자료 : 한국어촌어향협회, 내부자료(2013년 기준); 통계청, 나라지표(www.index.go.kr)

- 어촌관광 전문인력 양성은 바다해설사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구분되며, 1차 발전기본계획 시행 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만 52명 양성되었으나 '09년~'13년까지 각각 134명, 308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어촌현장에 배치되어 활동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었음
- 도시·어촌 교류촉진사업³⁾은 '05년~'13년까지 총 1,327건, 교류금액 1,078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음
- 도어교류 촉진사업은 정부가 수협에 위탁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산물직거래 502억 원, 봉사활동 222억 원, 어촌체험 184억 원, 공동물품 지원 170억 원 등의 성과가 나타남

도어, 도농 교류사업 성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어교류 성과('05년~'13년) : 1,327건, 1,078억 원 (건당 8,123만 원) 도농교류 성과('04년~'13년) : 83,358건, 6,192억 원 (건당 742만 원)
※ 자료 : 수협 내부자료; 농협연구원, 농협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의의와 과제, 2014 NHERI 리포트 제237호

3) 도시·어촌 교류촉진사업은 1차 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수협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 발전기본계획에서도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되어 제시하였음

(2) 어항부문

- 어항기본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는 어선 안전수용률이 2008년 기준 71.8%에서 2013년 말 기준으로 8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다기능어항 개발 13개소 조성에 따른 효과는 연간 943억 원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10년간 9,430억 원 이상의 효과가 기대됨

3) 정성적 성과

(1) 어촌·어항분야 최초의 중기 법정계획 로드맵 마련

- 1차 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항개발사업 등 각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어촌·어항에 대한 비전 및 목표, 정책방향을 통한 중기 로드맵을 처음으로 마련함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연안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활동 중심공간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 어장관리기본계획,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수산진흥종합대책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2) 어촌·어항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마련

- 어촌분야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어촌의 마을주민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건의하고,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특히, 어촌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로서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른 개발방식과 지원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어항분야에서는 여러 차례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어항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어촌·어항법」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를 개정하여 어항구역 내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규정 마련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개정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

(3) 어촌 6차산업화⁵⁾ 추진을 위한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추진

- 정부는 어촌산업을 미래산업화 시키기 위한 어촌 6차산업화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촌공동체의 역량강화사업 8개소 추진

4) 해양수산부, 「다기능어항 성과 평가 용역, 2013」에서 인용한 비시장가치임(CVM : 조건부가치평가기법)

5) 어촌 6차산업화는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가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변화로 1차 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제기됨

(4) 어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⁶⁾ 통해 어항과 배후지역 간 연계된 개발체계 마련

- 정부는 어항의 위생안전과 기능시설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어항 4개소(고성 거진항, 울진 죽변항, 울산 방어진항, 고창 구시포항)에 대해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 어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은 당초 1차 발전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어항과 배후지역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로정비, 관광자원 연계 등 어항과 지역계획을 묶어 보다 체계적인 어항개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1.2.2 추진실적

1) 어촌부문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정비와 3단계 어촌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었으나 2010년 균특회계가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되고, 포괄보조제도가 도입되면서 계획대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정비는 총 61개소 가운데 2013년까지 53개소가 착수·완료되어 계획대비 달성률은 86.9%로 나타났는데, 이는 포괄보조제도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른 예산배정으로 8개 권역은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음
- 특히, 정부는 포괄보조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3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약해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 분류	계 획		추진실적		달성률(%)	
	사업물량 (a)	계획예산 (b)	사업실적 (c)	예산실적 (d)	사업 (c/a*100)	예산 (d/b*100)
권역정비	61개소	278,500	53개소	278,680	86.9	100.1
3단계 어촌종합개발 계획수립	1식	300	-	-	-	-

주 : 정주환경기반조성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실적에서 제외하였음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6) 어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은 당초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2012년 수산물 위생처리 강화와 다기능어항과 차별화된 어항개발 모델 마련을 위해 Pilot 사업 추진

(2)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어촌관광사업⁷⁾으로 크게 나뉘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계획물량보다 더 많이 추진되었고 어촌관광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음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예산대비 사업성고가 크게 나타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2008년 계획 당시 17개소였으나, 2013년까지 23개소가 추진되면서 사업물량(135.3%)과 예산(181.4%)이 초과되었음
- 어촌관광사업은 1차 발전기본계획 수립 전에 완료되었거나 2014년 이후 착수되는 어촌관광사업을 제외한 12개소에 대해 318억 원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100% 달성함

〈표 1.3〉 어촌관광개발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 분류	계 획		추진실적		달성률(%)	
	사업물량 (a)	계획예산 (b)	사업실적 (c)	예산실적 (d)	사업 (c/a*100)	예산 (d/b*100)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7개소	8,500	23개소	15,418	135.3	181.4
어촌관광사업	12개소	31,824	12개소	31,824	100.0	100.0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3) 휴먼웨어 육성사업

- 휴먼웨어 육성사업은 바다해설사와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구분되며, 바다해설사는 2010년부터 신규인력 양성과 보수교육을 통해 현재까지 134명이 교육을 받았음
- 바다해설사 인증을 받은 92명 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바다해설사는 31명으로 전체의 33.7%이며, 1인당 평균 5.2회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당초 170명, 24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실제 지원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아 308명까지 지원되어 1인당 지원규모는 다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7) 어촌개발 관련 사업 통합방안(2007. 11)에 따라 어촌·어항복합공간(I 모델)과 어촌관광단지(Ⅲ모델)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통합 개칭됨

〈표 1.4〉 휴먼웨어 육성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 분류	계 획		추진실적		달성률(%)	
	사업물량 (a)	계획예산 (b)	사업실적 (c)	예산실적 (d)	사업 (c/a*100)	예산 (d/b*100)
바다해설사	146명	188	134명	188	91.8	10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70명	2,400	308명	2,196	181.2	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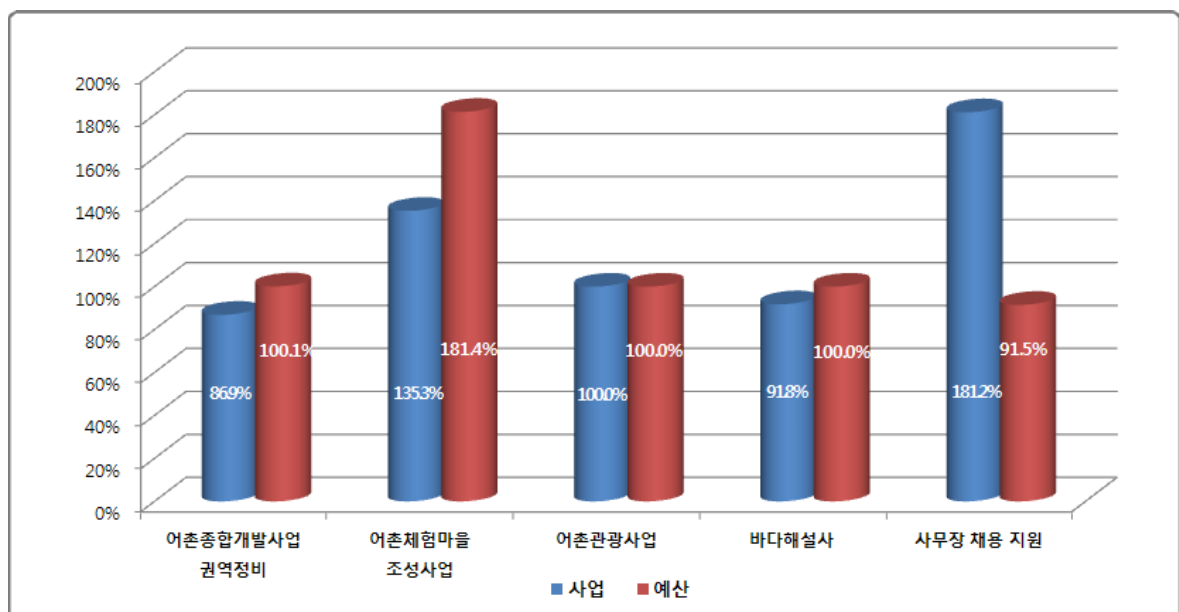
주 : 1) 어촌개발 인력육성과 자율관리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하였음

2) 바다해설사는 계획수립 당시 매년 120명, 총 600명을 계획하였으나, 2010년 사업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73개 지자체에 2명씩 총 146명을 양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4) 종합

- 1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부분 사업별 목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 사업의 사업물량과 예산이 계획대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사업실적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정비와 바다해설사 양성만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90% 내외로 나타났음
 - 특히, 어촌체험마을과 사무장 채용지원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추진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그림 1.9〉 1차 발전기본계획(어촌부분) 사업별 목표 달성률

2) 어항부문 추진실적

(1) 어항기본사업

- 어항기본사업은 항종별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물량과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표 1.5>와 같이 제시하였음
- 국가어항은 1차 발전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체 110개소 중 104개소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완공된 어항은 100개소로 사업실적은 96.2%로 나타났고, 국가어항 전체 누적 완공률은 91.7%로 나타났음
 - 2013년까지 완공예정이었던 3개 항(대포근포항, 구시포항, 도장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 2014년 대포근포항, 2015년 도장항과 구시포항이 완료될 예정임
- 지방어항은 1차 발전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체 285개소 가운데 195개소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실제 175개소를 완료하여 사업실적은 89.7%이고, 지방어항 전체 누적 완공률은 61.4%로 나타났음
- 어촌정주어항은 1차 발전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체 595개소 가운데 222개소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실제 222개소 중 148개소를 완료하여 사업실적은 59.0%이고, 어촌정주어항의 전체 누적 완공률은 24.9%로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어촌정주어항은 현재 95개 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2009년부터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국비지원을 80%로 변경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포괄보조제도하에서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지방어항과 마찬가지로 지역여건 및 민원에 의한 분산투자도 사업이 질적으로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음

<표 1.5> 어항기본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 분류	계 획		추진실적		달성률(%)		누적 완공률 (%)
	완공항/ 전체항수 (a)	계획예산 (b)	완공항/ 전체항수 (c)	예산실적 (d)	실적 (c/a*100)	예산 (d/b*100)	
국가어항	104/109	217,600	100/109	228,407	96.2	105.2	91.7
지방어항	195/285	337,500	175/285	399,480	89.7	118.3	61.4
어촌정주어항	222/595	131,800	148/595	186,399	59.0	141.4	24.9

주1 : 1차 발전기본계획 당시 국가어항은 총 110개소였으나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편입되면서 109개소로 조정

주2 : 지방어항은 당초 289개소였으나 천성항, 이목항, 남포항, 노량항 등 4개 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승격되어 285개소로 조정

주3 : 어촌정주어항은 당초 579개소였으나 16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 595개소로 조정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 어항정비사업

- 어항정비사업은 완공된 어항 내 어항시설물을 정비하는 어항시설물 정비와 설계파고 상향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표 1.6>과 같음
- 어항시설물 정비의 경우 당초 1차 발전기본계획 기간 동안에 총 23개소를 완공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실제 9개소가 완료되어 달성률이 39.1%로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어항개발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변화와 어항의 분산투자에 따라 사업투자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어항시설 노후화로 어항정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1.6> 어항정비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 분류	계 획		추진실적		달성률(%)	
	사업물량 (a)	계획예산 (b)	사업실적 (c)	예산실적 (d)	사업 (c/a*100)	예산 (d/b*100)
어항시설물 정비	23개소	396,200	9개소	255,740	39.1	64.6
설계파고 상향에 따른 정비사업	1개소	99,500	1개소	78,104	100.0	78.5

주 : 어항정비사업은 당초 24개로 계획이 되었으나 강구항은 2011년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제외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3) 어항환경개선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은 다기능어항 개발과 어항기능시설 확충으로 구분되며, 다기능어항은 1차 발전계획수립에서 당초 13개소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인천 어유정항을 제외하고 12개소가 완료되어 사업실적 92.3%, 예산 110.4%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7> 어항환경개선사업 사업물량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 분류	계 획		추진실적		달성률(%)	
	사업물량 (a)	계획예산 (b)	사업실적 (c)	예산실적 (d)	사업 (c/a*100)	예산 (d/b*100)
다기능어항 개발	13개소	127,800	12개소	141,024	92.3	110.4

주 : 어유정항은 어항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어항정비사업으로 투자되고 있음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표 1.8〉 다기능어항 개발 현황

(단위 : 백만 원)

항 명	공사기간	총 투자액	투자시설	개발계획	비 고
대변항 (부산 기장)	'08~'13년	33,754	진입도로, 부지조성, 친수시설		완료
어유정항 (인천 강화)	'07~'14년	32,615	방파제, 물양장, 호안, 선착장, 선양장		'14년 완료 예정
정자항 (울산 북구)	'06~'08년	11,671	이벤트광장, 산책로, 호안도로, 교량		완료
대포항 (강원 속초)	'06~'11년	11,453	유람선선착장, 연결교량, 친수호안, 호안확폭, 순환도로		완료
강릉항 (강원 강릉)	'08~'09년	32,006	동방파제, 남방파제 친수호안, 물양장		완료
홍원항 (충남 서천)	'08~'09년	29,776	마라나방파제, 낚시잔교, 마리나선양장, 조경공사		완료
격포항 (전북 부안)	'07~'11년	30,646	교량, 보도교, 낚시터겸전망대, 친수시설		완료
마량항 (전남 강진)	'05~'06년	39,709	도로, 수변친수시설, 접속호안, 낚시어선물양장, 친수시설		완료
국동항 (전남 여수)	'07~'13년	11,970	방파제 상부공사, 조명, 야외무대등		완료
양포항 (경북 포항)	'06~'07년	10,000	광장조경, 어촌관광레저, 해변산책로, 해상공연장, 해양레저계류시설		완료

〈표 1.8〉 다기능어항 개발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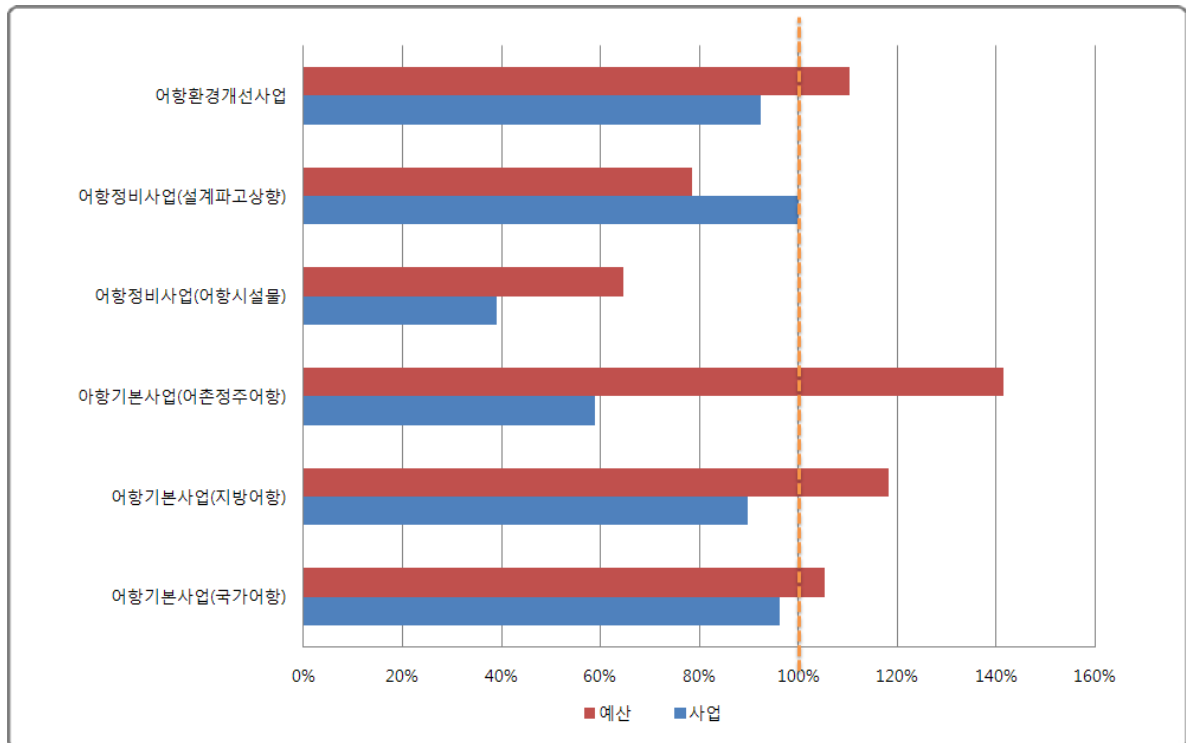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항 명	공사기간	총 투자액	투자시설	개발계획	비 고
지세포항 (경남 거제)	'08~'14년	28,618	해양레포츠, 친수공간, 낙시테마공원, 조경공사		완료
맥전포항 (경남 고성)	'08~'10년	9,408	도로, 주차장, 해상관찰, 전망, 친수공간		완료
모슬포항 (제주 서귀포)	'08~'10년	9,653	도로, 친수호안, 데크, 포장, 시설물, 다목적 포장, 공원		완료

※ 자료 : 해양수산부, 「다기능어항 성과평가」, 2013년의 내용을 재구성함

(4) 종합

- 1차 발전기본계획의 어항부분 사업별 목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어항기본사업의 경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모두 계획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은 포괄보조제도 방식에서 목표대비 예산이 초과되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했던 이유로는 지역의 여건 및 민원에 의한 분산투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어항정비사업의 경우 1차 발전계획의 사업평가에서 가장 부진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항시설 노후화와 정비사업의 대상이 급속히 증가하는 데 반해 예산투자가 수요에 맞춰 투자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설계과고 상향에 따른 어항정비사업은 목표에 맞춰 잘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다기능어항 사업을 추진했던 어항환경개선사업은 인천 어유장항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되어 목표대비 거의 사업추진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지역의 여건과 사업수요에 따라 일부 초과하여 예산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추진되었던 다기능어항 시범사업은 친수공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직접적인 시장가치와 편익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사후평가 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1.10〉 1차 발전기본계획(어항부문) 사업별 목표 달성률

1.3 1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한계

1.3.1 어촌부문

1) 사업계획

(1) 어촌의 다양한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미흡

- 어촌은 연안의 핵심적인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중요한 지역정책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관광사업,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바다해설사, 사무장 채용지원)만으로는 어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던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관광사업은 지난 5년간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으나 어촌에 내재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자원고갈, 대내외적인 위협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어촌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정주환경과 복지 등 공공서비스 접근체계 개선과 어촌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산업 육성 등 연성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어촌 비즈니스 다양화에 따른 경영 및 전문인력 부족

- 어촌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어촌 비즈니스도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으나 어촌공동체의 경영부족과 미숙으로 어촌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지만 맞춤형 인력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음
- 앞서 1차 발전기본계획의 주요성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바다해설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지난 5년 동안 각각 134명, 308명이 양성되었으나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데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있음
- 특히, 어촌 비즈니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인력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에 대한 전담기구와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3) 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부재

- 1차 발전기본계획이 추진되었던 2009년~2013년은 광역경제권 등 국가 핵심전략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조로 양극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 삶의 질 문제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삶의 질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은 단순히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정주환경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1차 발전기본계획의 세부과제들은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사업집행

(1) 획일적인 소규모 마을단위 개발방식으로 사업성과 확대 한계

-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사업 등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어촌개발의 사업규모는 어촌계 중심의 마을단위로 획일화된 소규모 분산투자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가 과소화되고 마을 간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마을단위 어촌개발 방식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공간으로 육성시키는데 한계

(2) 포괄보조방식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어촌개발을 위한 예산배정 한계

- 2010년 도입된 포괄보조방식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지역 표심(票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여건상 인구규모가 작은 어촌지역에는 사업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오히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1차 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61개 권역 중 53개 권역만 추진되는 등 국고보조의 비율이 8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하향식 개발방식(Top-down)에 따른 획일화

- 1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부문은 정형화된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이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하향식 개발방식은 특화된 어촌개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촌을 유형화·특성화시켜 개발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어촌개발에 있어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시키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전환하였음
- 1차 발전계획에서 추진되었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 중 유형화·특성화를 통해 지원한 사업들은 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이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고 사업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법·제도

(1)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관광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 목적과 기대효과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예산당국,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일자리 등 성과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별로 모니터링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무원, 지역주민의 만족도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 정량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 어촌에 대한 공간적 개념 재정립 필요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는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안의 읍면에서 실제 어가의 비중이 높지 않아 공간적 정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읍면 단위의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는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어업집락지구(漁業集落地區)’를 별도로 구획하고, 이들 지역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센서스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정확한 어촌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음

(3) 계획수립 절차 및 심의에 대한 절차 부재

-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는 계획 수립의 근거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립절차와 심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중앙정부가 수립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확정·고시가 되는 경우 이후 지자체가 추후절차로 사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계획으로서 명확한 위상이 설정되지 않음

1.3.2 어항부문

1) 사업계획

(1) 어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미흡

- 어항은 어장과 어촌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며, 수산물의 양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연안·어촌의 핵심적인 경제활동 공간으로 최근에는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생활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1차 발전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2) 기반시설 확충에 비해 어항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발굴 부족

- 1차 발전기본계획의 어항부문은 하드웨어 중심의 어항개발 사업계획으로서 어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전담기구 마련 등 어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성적 개발사업 발굴이 필요함
-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어업생산 기반확충과 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는 기여하였지만, 구축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부족함

(3) 기후변화, 수산업 여건변화 등 어항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 기후변화, 수산업 여건변화로 인한 어항의 사회·경제적 수요가 변화하고, 특히 어장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어항기능이 위축되거나 상실된 어항이 발생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어항의 효율적 개발, 이용·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2) 사업집행

(1) 어촌활성화 및 레저관광수요를 고려한 어항개발사업(어항환경개선사업)의 개편 필요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사업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각 사업의 구성내용이 사업목적과 명확하게 연계되지 않음
- 특히, 어항환경개선사업은 다기능어항 개발과 어항기능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었으나 어항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목적과 정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어선 안전수용률 제고를 위한 지방관리어항 확대방안 필요

- 국가어항 중심의 어항기본사업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어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국가어항이 아닌 지방관리어항의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안 마련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3) 법·제도

(1) 어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부족

- 「어촌·어항법」에 어항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조직 등 관련 규정이 없고,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항관리청은 「어촌·어항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사용허가 등 어항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군은 어항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중심의 어항관리 개념으로부터 어항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포함한 어항관리의 개념으로 확대가 필요함

(2)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현행 어항지정기준으로는 탄력적 대응에 한계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어항지정 조건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현행 어항지정 기준이 어선 수와 위판액 중심으로 구성되어 어항의 구조적 개편이 어려운 실정임
- 「어촌·어항법」 부칙 제3조(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한번 지정된 어항의 향후 변경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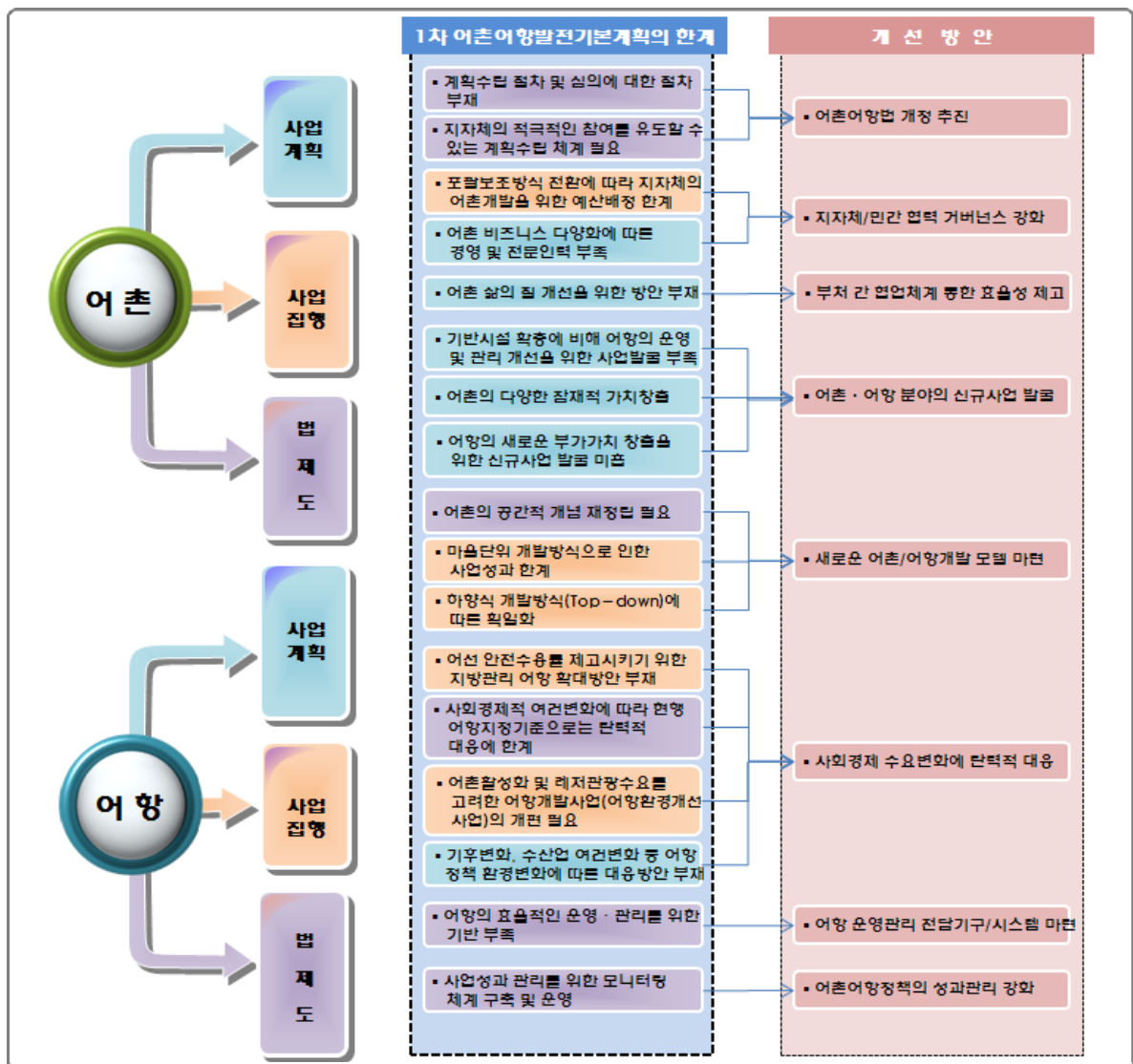
(3)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립 체계 필요

- 1차 발전기본계획의 근거 법령인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수립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중앙정부가 수립한 1차 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절차와 각 개별항의 개발·정비 등의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하향식 기본계획이 아닌 상향식 기본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창의적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어항개발 체계 개편이 필요함

1.4 1차 발전기본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

- 1차 발전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통해 그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그림 1. 1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1차 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어촌·어항의 계획수립 절차, 심의기구, 지자체와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체계 마련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필요함
 - 특히,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계획수립과 이행방안 마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안) 마련 후 이를 심의할 정책심의회 관련 규정을 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어촌·어항과 같이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예산배분 및 집행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정부주도의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어촌공동체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전문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독립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실질적인 어촌·어업인의 수혜 확대방안과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필요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넷째, 1차 발전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어촌의 열위성을 보완하고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했기 때문에 2차 발전기본계획에서는 물리적 기반확충뿐만 아니라 복지, 인력,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다섯째, 지금까지 어촌개발은 육지, 행정단위의 개념으로 권역화, 사업화되었으나 바다환경을 기반으로 독특한 자원, 어장, 문화 등 고유하게 형성해 온 특성을 기반으로 바다의 시각에서 새로운 개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어촌과 어항은 기후변화, 수산환경 변화, 어촌관광 수요 급증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
- 일곱째, 효율적인 어항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인력, 정보시스템 구축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어촌·어항분야의 사업들은 경제적인 효과 측정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한 논리가 취약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1.11〉 1차 발전기본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 2 장

어촌·어항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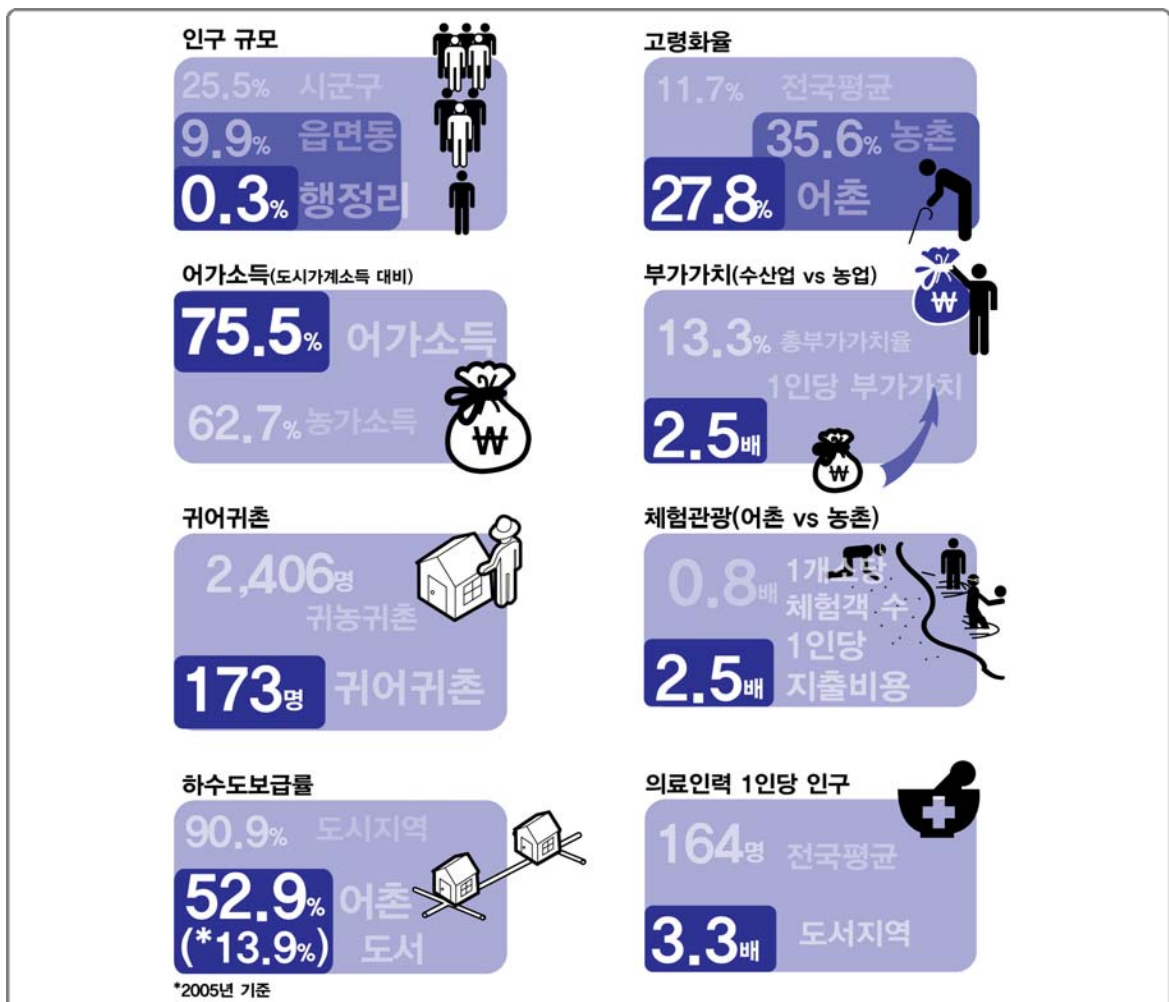
제2장 어촌·어항의 현주소

제1절 어촌·어항의 위상

1 어촌의 위상

1.1 개 요

- 어촌의 위상을 살펴보면, 인구규모, 고령화율, 소득, 정주환경(하수도보급률), 복지부문의 지표는 농촌이나 도시지역보다 현저하게 열위에 있으나 수산업의 부가가치와 체험관광 부분에서는 농업·농촌에 비해 높은 잠재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KOSIS) 각 년도; 수협 내부자료 각 년도;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그림 2.1〉 어촌의 주요 지표별 위상

1.2 주요 지표

1) 인구로 보는 어촌의 위상

- 어촌의 인구규모는 전체인구 50,948,272명 대비 연안 시·군·구 인구규모가 25.5%에 해당되고, 읍·면·동 9.9%, 행정리 0.3%, 도서지역 0.2% 순으로 나타났음
-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11.7%에 비해 어촌 27.8%, 농촌 35.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는데, 이는 지난 60년간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영향이 큼
- 반면 어촌의 고령화율이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어업의 특성상 작업환경이나 노동강도가 농업에 비해 높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이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1〉 인구규모로 보는 어촌의 위상 (2012년)

(단위 : 천 명, %)

구 분	전국 (a)	연 안			도서지역(e) (e/a)	농촌지역(f) (f/a)
		시·군·구(b) (b/a)	읍·면·동(c) (c/a)	행정리(d) (d/a)		
인구수 (비율)	50,948 (100.0)	13,007 (25.5)	5,058 (9.9)	153 (0.3)	108 (0.2)	2,910 (5.7)
65세 이상 인구수 (고령화율)	3,514 (11.7)	-	-	42 (27.8)	-	1,037 (35.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KOSIS), 2013년

2) 경제로 보는 어촌의 위상

-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에 비해 높지만, 부채비율이 농가 보다 145.0%로 높고, 자산비율은 72.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어가 1인당 부가가치율은 농가보다 250.2%로 높았으나 사업체나 일자리 수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표 2.2〉 경제로 보는 어촌의 위상(2012년)

(단위 : 천 원, %)

구 분	가계소득	부채	자산	사업체 (개소)	일자리 수 (개)	부가가치 (억 원)	1인당 부가가치
어가(a)	37,381	39,518	297,669	343	5,740	35,540	23,212
농가(b)	31,031	27,272	407,898	1,536	19,108	267,000	9,277
도시(c)	49,521	-	-	-	-	-	-
비율(a/b)	120.5	144.9%	73.0%	22.3%	30.0%	13.3%	250.2
비율(a/c)	75.5	-	-	-	-	-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KOSIS), 2013년

3) 도어교류·체험관광으로 보는 어촌의 위상

- 도시·어촌 간 교류는 귀어·귀촌, 자매결연(1사1촌, 1교1촌) 모두 농촌보다 양적 규모에 있어 현저하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체험관광은 어촌체험마을 개소 수와 체험객 수, 마을 개소당 방문객 수는 각각 농촌의 15.1%, 12.3%, 81.2%에 불과하지만 체험객 1인당 지출금액은 255.5%로 어촌의 잠재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2.3〉 도어교류·체험관광으로 보는 어촌의 위상(2012년)

(단위 : 명, 원)

구 분	귀어/귀농 (가구)	자매결연 (건)	체험마을 (개소)	체험 인원 수 (만 명)	체험 매출 (억 원)	체험마을 1개소당 방문객 수	체험객 1인당 지출비용
어촌(a)	173	1,200	90	74.9	178	8,322	23,875
농촌(b)	2,406	9,627	596	611	751	10,251	9,345
비율(a/b)	7.2%	12.5%	11.1%	12.3%	23.7%	81.2%	255.5%

주 : 어촌체험마을 개소 수는 평가자료가 있는 90개소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KOSIS),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2013년

4) 삶의 질로 보는 어촌의 위상

- 어촌의 하수도보급률은 52.9%로 도시지역 90.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지역 46.6%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전국평균이 164명인데 반해 도서어촌의 경우 545명으로 도시지역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삶의 질로 보는 어촌의 위상(2012년 기준)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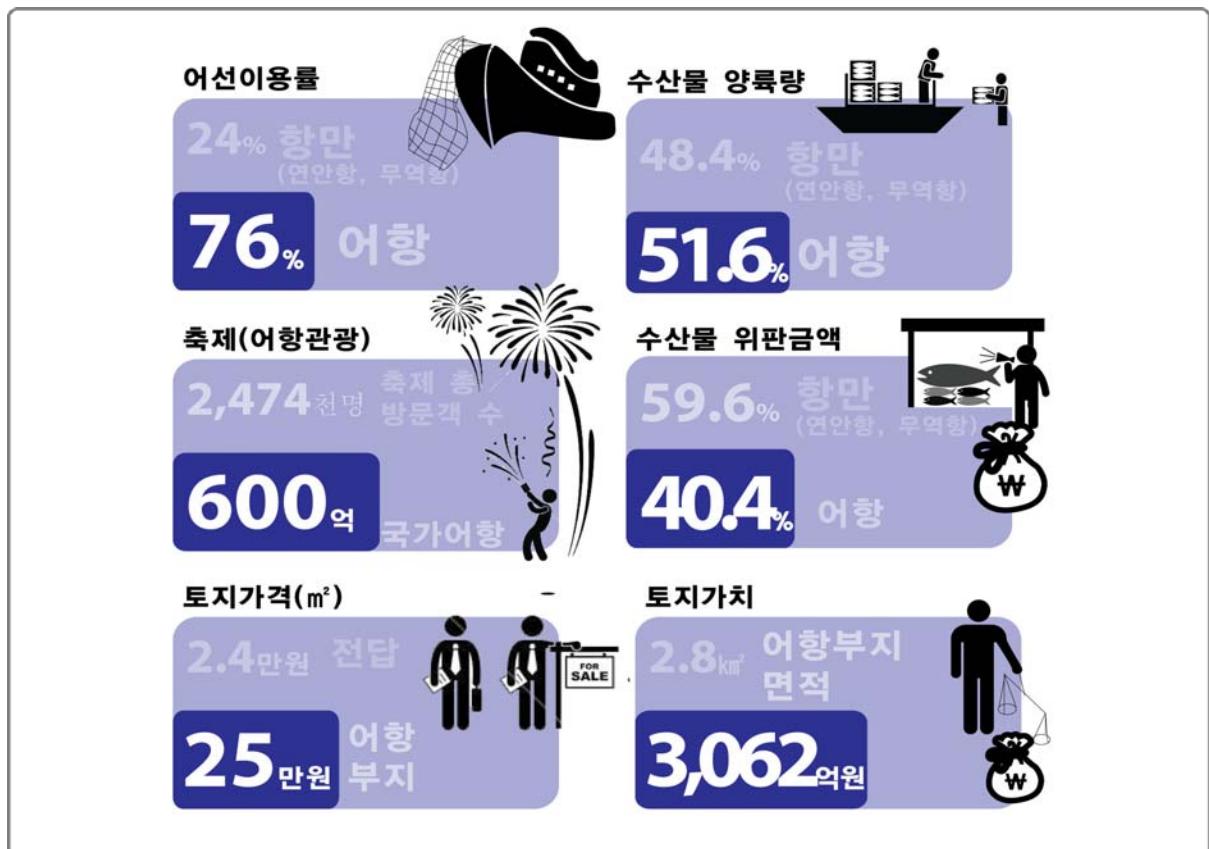
구 분	하수도보급률	구 분	의료인력 1인당 인구
어 촌	52.9	도 서	545
도 서	13.9	전 국	164
농 촌	46.6		
도 시	90.9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지역실태조사);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인용(2005년 기준)

2 어항의 위상

2.1 개 요

- 어항의 주요지표는 어항(축제, 토지가치는 국가어항 기준)을 기준으로 항만(연안항 및 무역항)과 비교하여 위상을 살펴보았음
 - 어선이용률은 어항이 76%로 전체의 2/3에 해당되며, 무역항 13%, 연안항 11% 순임
 - 수산물 양륙량은 어항이 51.6%로 항만 48.4%보다 약간 높았으나, 위판금액은 항만이 59.6%로 더 높게 나타났음
- 수산물 관련 축제가 개최되었던 국가어항을 방문한 관광객은 250만 명에 달하며, 그 경제적 가치는 총 600억 원에 달함
- 특히, 국가어항 어항부지의 m^2 당 공시지가는 25만 원으로 농업용지(전답) 2.4만 원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어항 어항부지의 면적은 2.8km^2 로 전체 어항부지의 토지가치는 3,06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토지가치에 따른 어항부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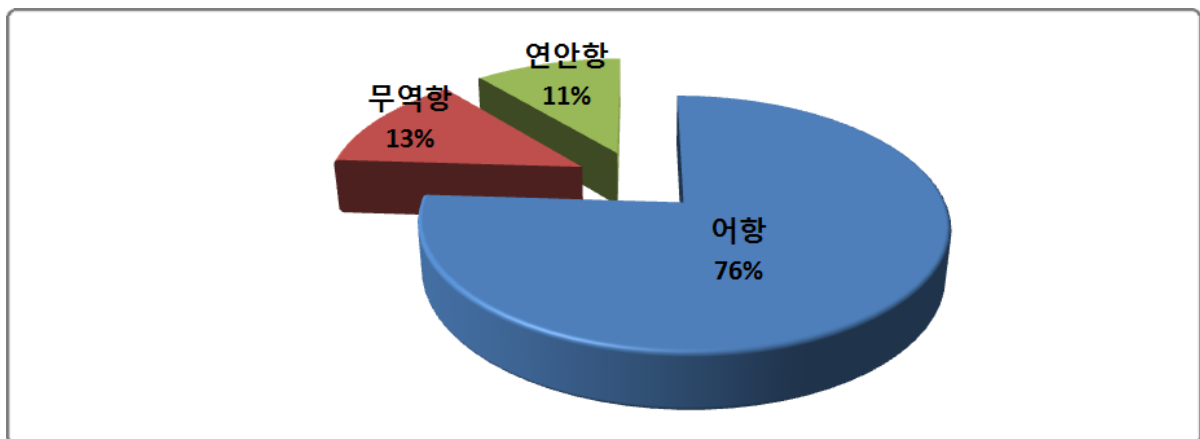


〈그림 2.2〉 어항의 주요 지표별 위상(2012년 기준)

2.2 주요 지표

1) 어항이용률로 보는 어항의 위상

- 어선의 어항 이용률을 어항, 연안항, 무역항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어항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역항 13%, 연안항 11% 순으로 나타났음
- 2012년 해양경찰청 어선입출항 자료를 기준으로 70,952척에 대한 어선의 어항이용률을 조사해 본 결과, 국가어항 15,656회, 지방어항 12,494회, 소규모항포구 11,450, 어촌정주어항 10,100회 순으로 나타났음



자료 : 해양경찰청, 어선 입출항 정보(2012년 기준)

〈그림 2.3〉 어항이용률로 보는 어항의 위상

2) 양륙규모로 보는 어항의 위상

- 양륙규모로 보는 어항의 위상은 국가어항의 위판량과 위판금액을 기준으로 항만과 대비하여 살펴보았음
- 어항의 위판량 규모는 446,028톤으로 전체 수산물 위판량의 51.6%로 나타났고, 항만은 각각 417,657톤, 48.4%로 어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어항의 위판금액은 1조 2,653억 원으로 전체의 40.4%로 나타났고, 항만은 각각 1조 8,665억 원, 59.6%로 어항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2.5〉 양륙규모로 보는 어항의 위상

(단위 : 톤, 억 원, %)

구 분	위판량	위판금액
어항(국가어항, 지방관리어항)	446,028 (51.6)	12,653 (40.4)
항만(연안항, 무역항)	417,657 (48.4)	18,665 (59.6)

주: 위판량과 위판금액은 어항구역 및 항만구역(어항구) 내 산지위판장의 자료를 별도로 산출함

※ 자료 : 수협중앙회, 산지 위·공판장 현황(2012년 기준)

3) 관광수요로 보는 어항의 위상

- 관광수요로 보는 어항의 위상은 국가어항 내 수산물 관련 축제와 그 방문객 수,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음
- 수산물과 관련된 축제가 개최되는 국가어항은 총 33개소로 이곳에서 열리는 축제 수는 36개이며, 방문객 2,474,380명, 경제적 효과가 약 600억 원에 달함
 - 어항구역 내 축제 1개소 당 방문객 수는 68,732명, 경제적 효과는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항은 어업생산 기반공간으로서 수산물의 양륙, 위판, 가공, 판매 등 복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수산물 축제를 통해서도 높은 집객력을 나타내고 있음

〈표 2.6〉 축제로 보는 어항의 위상

(단위 : 명,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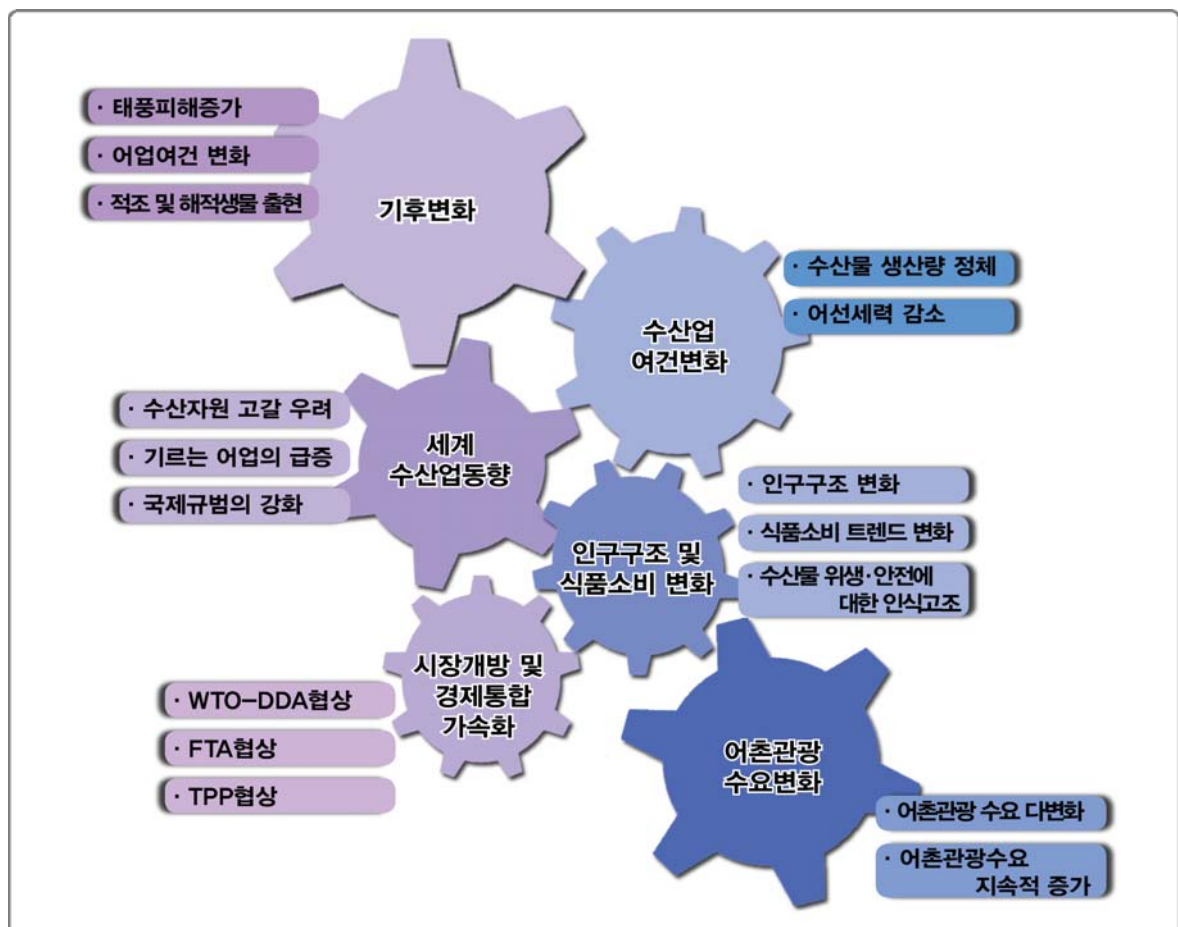
어항구역 내 축제 수	방문객 수	경제적 효과
36	2,474,380	59,926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2013년 기준)

제2절 대내·외 여건 및 전망

1 개 요

- 어촌·어항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기후변화, 세계 수산업의 동향,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 가속화 등이 있고, 대내여건은 국내 수산업의 여건변화, 인구구조 및 식품소비 변화, 어촌관광 수요 변화 등을 살펴보았음
- 어촌·어항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국제규범의 강화, 시장개방 등 어촌·어항에 있어서 약점이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반면 대내여건으로 수산업 여건변화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구구조 및 식품소비 변화, 어촌관광 수요변화는 어촌·어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어촌관광의 부가가치는 농업·농촌에 비해 높고 어촌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어촌산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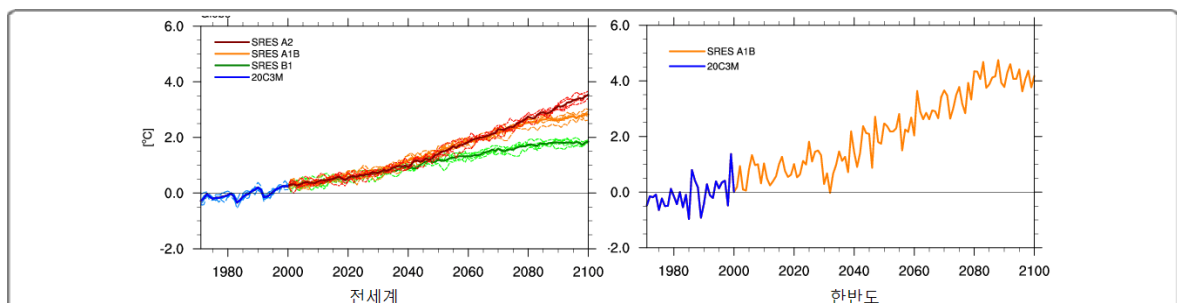


〈그림 2.4〉 어촌어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2 대외 여건변화

2.1 기후 변화

-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2013)’에서 온실가스 증가율이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경우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3.7℃,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 및 어획되는 어종과 어획량이 변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38년간 평균표층수온이 0.9℃ 상승하여, 살오징어, 멸치, 고등어, 참다랑어 등의 난류성 어종은 생산이 증가한 반면, 명태, 도루묵 등의 냉수성 어종은 생산이 감소하는 추세임
- 국립기상연구소에서 IPCC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기후 전망치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에 의하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세계 평균기온보다 1.5~2℃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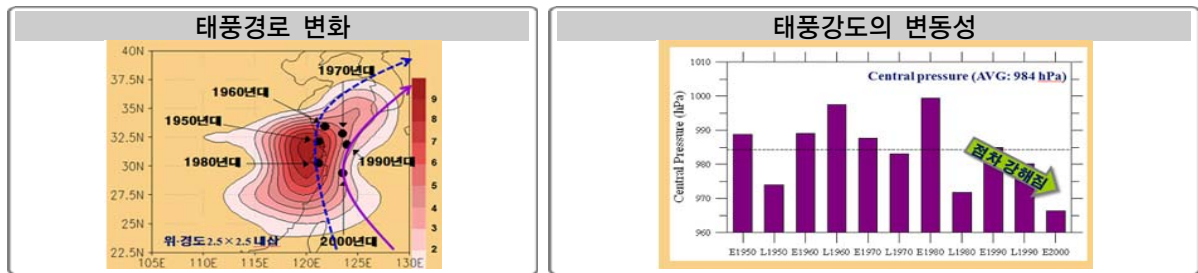


※ 자료 : 기후변화정보센터(www.climate.go.kr)

〈그림 2.5〉 세계 및 한반도 기온변화 전망

2.1.1 태풍 피해의 증가

- 국립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해수면온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0년간 태풍빈도는 연간 0.6회에서 1.2회로 200% 증가하였고, 태풍의 강도는 최대순간풍속 기준 150%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자료 : 국가태풍센터(<http://typ.kma.go.kr/index.jsp>)

〈그림 2.6〉 태풍경로 및 태풍강도 변화

- 최근 10년간 연평균 태풍 발생 수는 22.4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수는 연평균 2.8개로 2000년대 이후 발생한 태풍의 내습 빈도는 감소하였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강도 증가로 재산피해는 오히려 증가됨
- 특히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 2007년 나리, 2010년 곤파스 등 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3조 8,15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
 - 이는 동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21조 2,145억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 최근 10년간 대형 태풍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산부문의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에 태풍 매미 내습 시 어항시설 1,220억 원과 선박 3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
 - 어선의 피해는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를 제외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상예보의 정확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로 피해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어항시설의 피해규모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태풍의 내습과 장기투자에 따른 어항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것임



※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 「재해연보」 각 년도

〈그림 2.7〉 어선 및 어항시설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1990~2012년)

2.1.2 어장여건의 변화

1) 어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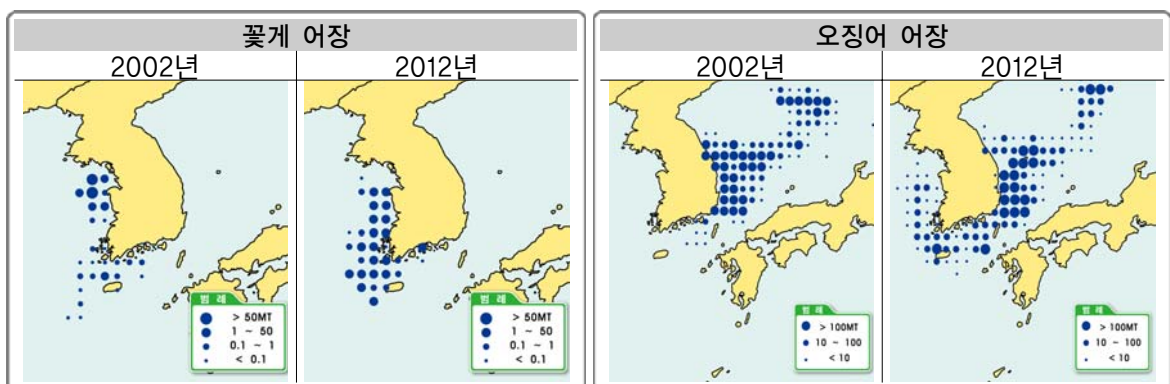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의 해수온도 변화로 명태, 참조기 등 냉수성 어종의 생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의 생산은 증가하는 등 어족자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근해에서는 개복치, 초대형 노랑가오리, 고래상어 등 열대성 어종이 어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한반도 연근해 해역에서 대부분의 어종이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서식하던 참다랑어와 갈치의 경우 서해와 동해까지 서식하는 등 어종분포의 변화가 발생함



※ 자료 : 국립수산물과학원(www.nfrdi.re.kr)

〈그림 2.8〉 한반도 연근해 어종분포 변화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꽃게, 오징어, 갈치 등 주요 어종의 어장이 과거에 비해 달라지고 있으며, 어획량 또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꽃게는 과거 서해안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서남해안 및 제주지역으로 어장이 확대되었으며 남해안 어항을 이용하는 꽃게어선이 증가하였고, 어획량은 2002년 18,659톤에서 2012년 26,861톤으로 8,202톤 증가하였음
- 오징어는 동해안에서 전국 연안으로 어장이 확대되었고, 어획량은 2002년 226,656톤에서 2012년 181,406톤으로 45,250톤 감소하였음
- 갈치는 서남해안서 제주 및 제주 이남으로 어장이 변화되어 어획량은 2002년 60,172톤에서 2012년 32,528톤으로 27,644톤 감소하였음



※ 자료 : 해양수산부, 「연근해 주요 어업자원의 생태와 어장」, 각 년도.

〈그림 2.9〉 어장여건의 변화 추이(2002년, 2012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장여건은 10년 동안 급변하였으며, 이러한 여건변화는 조업어장 변화로 어선의 이용패턴이 달라지고, 이는 기 투자되었거나 투자 중인 어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2) 어획량 변화

-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 표층수온이 상승하면서 동해안은 약 1.39℃, 남해와 서해는 약 1℃ 증가하면서 어종별 어획량이 급변하고 있음
- 주요 난류성 어종인 멸치, 고등어, 오징어의 경우 연근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냉수성 어종인 명태, 도루묵 등의 경우 연근해 어획량이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냉·난류성 어종별 어획량 변화 추이		
• 멸 치 : ('60년) 6만 톤	→ ('80년) 16만 톤	→ ('00년) 24만 톤
• 고등어 : ('60년) 8,062톤	→ ('90년) 18만 톤	→ ('00년) 15만 톤
• 오징어 : ('60년) 7만 톤	→ ('00년) 21만 톤	→ ('12년) 18만 톤
• 명 태 : ('60년) 2만 톤	→ ('80년) 8만 톤	→ ('00년) 162톤
• 도루묵 : ('60년) 4,567톤	→ ('90년) 10,950톤	

2.1.3 적조 및 해적생물의 출현

1) 적조현상

- 생활하수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거나 양식어장의 자가오염, 연안어장 퇴적물의 부영양화, 일조량과 강우량의 지역적 변이로 적조현상을 유발함



〈그림 2.10〉 적조발생 원인 및 피해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유해적조의 발생은 빈도 및 지속기간이 증가되고 있으며 발생 해역이 광역화되는 것이 특징임
- 적조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패류의 대량폐사 등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해안경관 악화로 인해 관광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침
- 매년 어패류 집단 폐사 등으로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태풍, 호우, 강풍·풍랑 등으로 적조발생 피해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적조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속기간(일)	62	30	58	36	50	62	19	8	41	87
총발생(건)	45	54	39	28	16	38	10	1	1	17
폐사량(천미)	13,088	219	1,638	702	9,570	-	-	-	-	5,675
피해액(억 원)	215	1.2	10.6	0.7	115	-	-	-	-	44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13년」

2) 해적생물

- 최초 해파리의 대량발생은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 해양인공구조물 구축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기후변동에 따른 수온상승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해파리 대량출현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기의 요인 중 수온의 상승이 해파리 대량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와 같이 수온의 상승이 급격한 지역에서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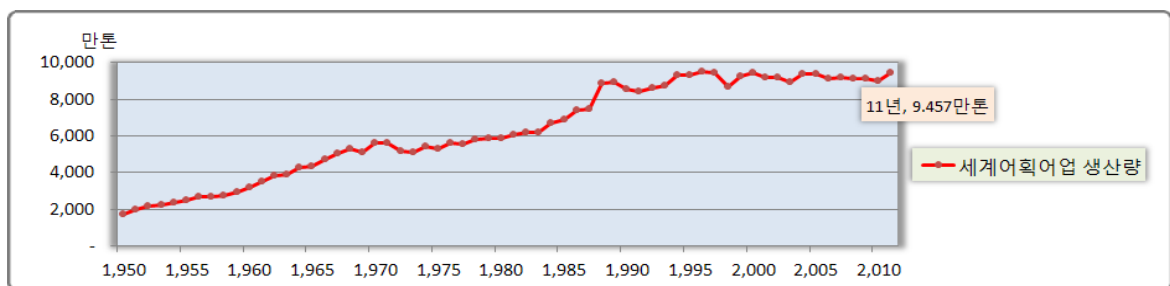
- 불가사리는 환경오염과 수산물 남획 등으로 천적이 사라진 우리나라 해안에 45~100여 종이 서식하며, 한 마리의 불가사리 당 연 200만~300만 개의 알을 산란하여 개체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수산업 및 관광레저산업 등의 다방면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2.2 세계 수산업 동향

2.2.1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

1) 세계 어획어업 생산량 추이

- 세계 어획어업 생산량은 2004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적인 정체를 보이고 있음
- ('04년) 9,361만 톤 → ('07년) 9,118만 톤 → ('11년) 9,457만 톤
-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한 피쉬플레이션, 어업기술의 발달, 수산물 남획 등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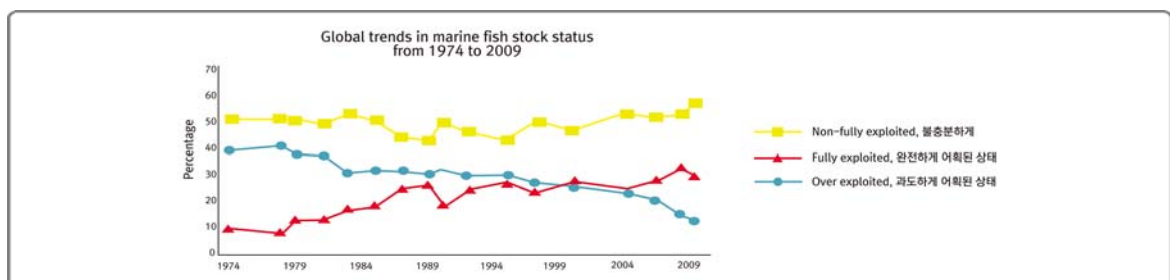


※ 자료 : FAO, FishStat

〈그림 2.11〉 세계 어획어업 생산량 추이

2) 세계 해면어업의 이용 상태

- FAO 자료에 따르면, 자원이용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어종 중 57.4%가 완전하게 어획된 상태이며, 29.9%가 과도하게 어획되었거나 고갈된 상태이고, 12.7%만이 불충분하게 어획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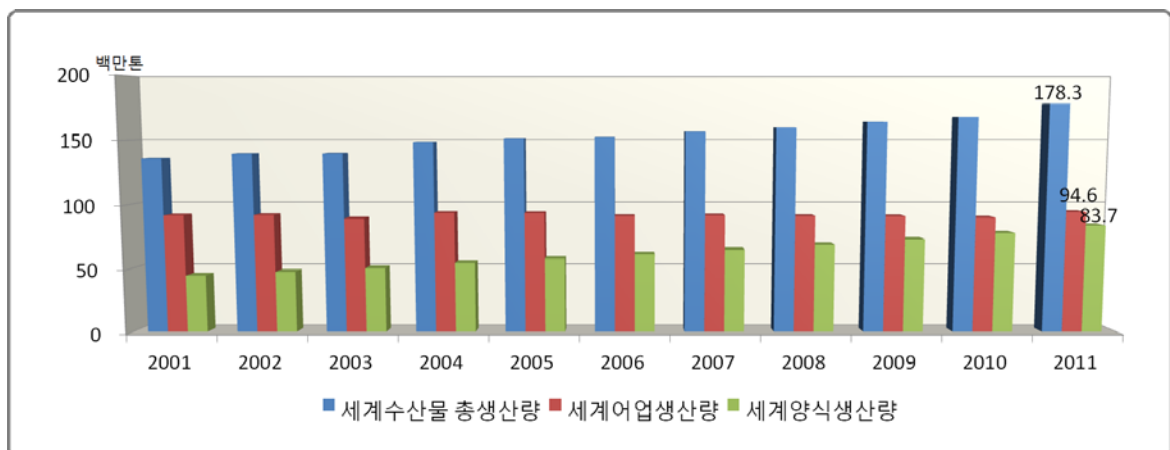
※ 자료 : FAO, Review of the state of world marine fisheries resources, 2011

〈그림 2.12〉 세계 해면어업 이용상태

2.2.2 기르는 어업의 급증

1) 세계 양식 생산 현황

- 세계 양식 생산량의 지속적으로 증가로 어선어업의 생산량이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증가 추세임
- 2011년 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1억 7,832만 톤으로 이 중 양식어업 수산물 생산량은 8,373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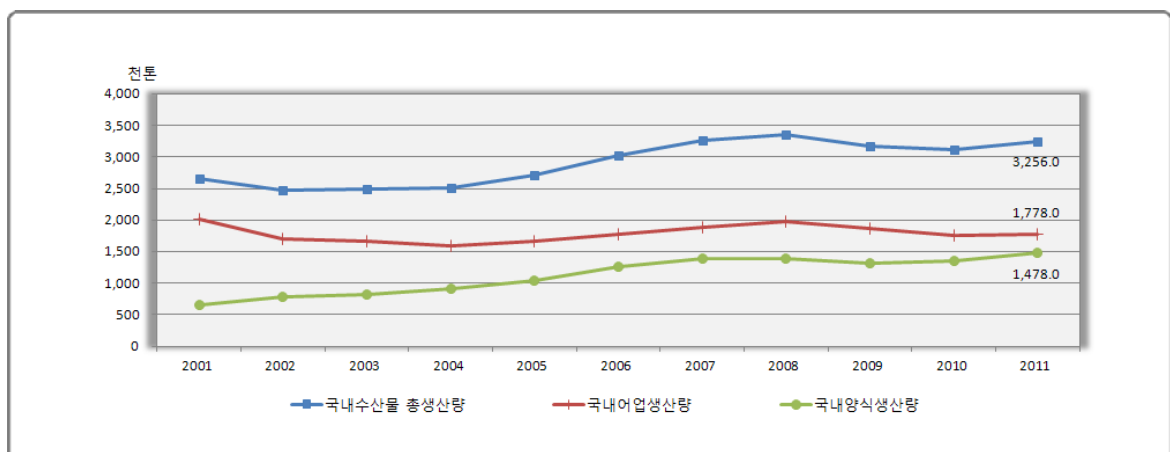


※ 자료 : FAO「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그림 2.13〉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 추이

2) 국내 양식

- 국내 양식어업 또한 세계 양식어업과 같이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2011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은 325.6만 톤으로 이 중 양식 수산물이 147.8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함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년」

〈그림 2.14〉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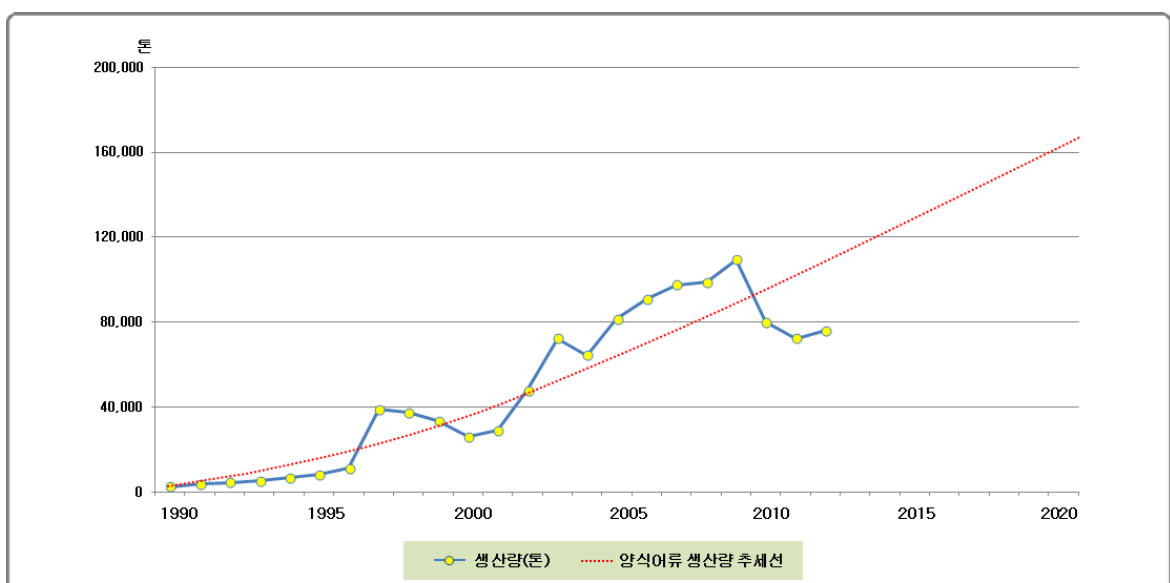
3) 양식어업 전망

- 전 세계 양식어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 및 국제협약(조업규제) 등으로 인해 양식어업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양식어류 생산 전망과 더불어 우리나라 역시 국내 수산물 소비 확산 추세 및 양식생산 기술력 향상에 따른 양식 생산량 증가추세가 전망되고 있음



※ 자료 :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0년」

〈그림 2.15〉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 전망



※ 자료 : 김대영외,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년

〈그림 2.16〉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 전망

2.2.3 국제규범의 강화

1) UN 해양법 협약

- 1994년 11월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자원 남획에 따른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된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일반감척과 특별감척)으로 국내 어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

2) FAO 책임 수산업 규범

- 1995년 FAO¹⁾ '책임 있는 어업' 규범을 채택한 이후, 국제 환경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과잉어획을 근절하기 위하여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과 생태적 접근(ecosystem approach)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해 TAC제도를 도입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하여 멸종위기의 수산자원을 번식·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2.3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 가속화

2.3.1 WTO²⁾/DDA³⁾ 협상

- 2012년 기준 WTO에 511개 지역무역협정(RTA⁴⁾)이 통보된 상황이며, 이 중에서 319개가 발효된 상황임
- DDA 협상 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율 및 수산물 관련 보조금 등이 금지보조금으로 채택될 경우 어업 경영비 상승, 어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수산물 글로벌 시장 개방 하에 국내 수산업 존립을 위해서는 수산물의 신선도 및 위생안전을 내세운 품질의 차별화로 수산물 브랜드화가 필요함

2.3.2 FTA 협상

-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시작으로 현재 9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임
-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RCEP 등과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한·호주 FTA가 사실상 타결되었으며,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한·중·일 FTA 협상 진행 중임
- 국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차후 협상에서 다루기로 협의됨

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3)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4) 지역 무역 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표 2.8〉 FTA 추진현황

구 분	국 가
발 효	• 칠레('04), 싱가포르('06), EFTA ⁵⁾ ('06), ASEAN ⁶⁾ ('07),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13)
서명 / 협상타결	• 콜롬비아('12)
협상 진행중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RCEP 한·중·일

※ 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 FTA 협상을 통한 수입 수산물의 관세인하는 국내의 경쟁력 열위 업종 및 품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제도개편 및 경쟁력 있는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어촌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수의 FTA 협상으로 관세에 의한 국내 수산산업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신선도 및 위생 안전 등 부가가치 제고 방안이 필요함

2.3.3 TPP 협상

- TPP는 2010년 1차 협상을 시작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및 여타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여 현재 12개국이 참여함
-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2013년 내 타결 목표로 협상에 임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견해차이로 협정이 미뤄진 상황임
- TPP 참여국에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물론, 미체결 국가 중 수산 강국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수산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필요함

2.4 시사점

- 기후변화로 태·폭풍, 고파랑, 고조위 등이 복합적으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방파제 등 어항시설의 피해는 물론 어촌지역의 피해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21조 2,145억 원의 65.1%인 13조 8,158억 원이 태풍에 의한 피해
 - 어선의 피해는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를 제외하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어항시설의 피해규모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대형태풍의 내습과 어항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5) 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6) 동남아국가연합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나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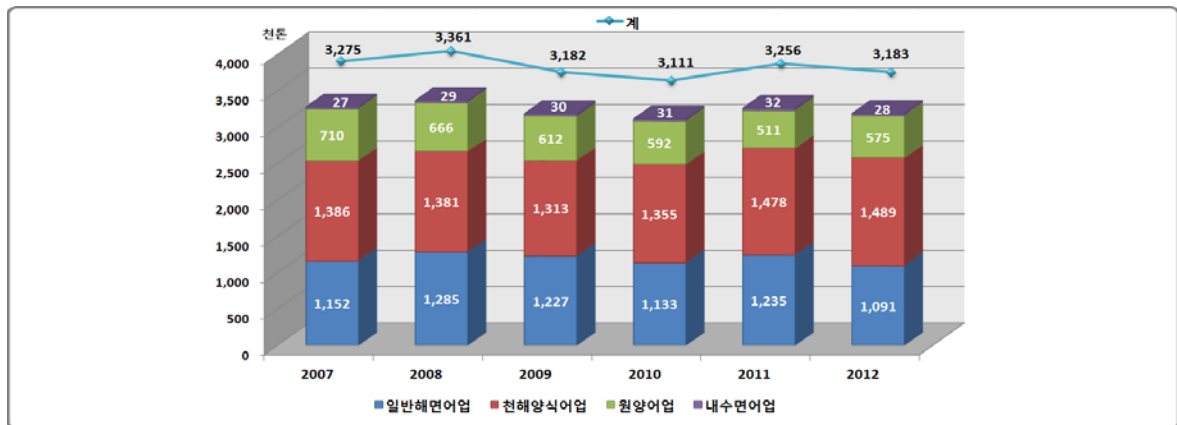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환경 변화로 어장 위치 및 해역별 주요 어종 변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어장 위치 변화에 따른 지역별, 해역별 새로운 어항 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외래어선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어항의 개발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국내외 수산업 동향은 어선어업에 의한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양식어업의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어장축소 및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양식어업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태풍 및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12년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남해안의 전복 양식장 등 양식어업에 약 556억 원의 피해가 발생
 - 2013년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247억 원으로 199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피해 발생
- 국제규범의 강화 및 시장개방 가속화로 수산자원 보조금 감소 및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우위의 수산물 수입으로 국내 어업활동 위축, 어가소득 감소가 우려되므로 새로운 교역 환경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등 전략적 대응과 어촌관광 등 어업외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대내 여건변화

3.1 국내 수산업 여건 변화

3.1.1 수산물 생산량 정체

-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2007년 3,275천 톤에서 2012년에는 3,183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생산량의 감소와 증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2007년 1,152천 톤에서 2012년 1,091천 톤으로 5.5% 감소한 반면 양식어업 생산량은 2007년 1,386천 톤에서 2012년 1,489천 톤으로 7.5% 증가함
 - 2012년 수산업 생산량 중 일반 해면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3%인데 반해, 양식어업의 비중은 46.8%로 앞으로 수산업의 양식어업 의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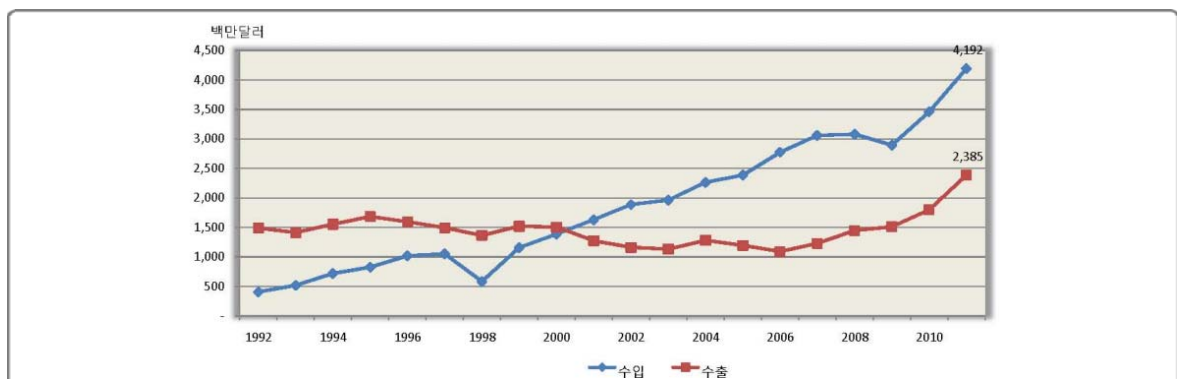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년」

〈그림 2.17〉 연도별 업종별 생산 추이

3.1.2 수산물 무역 적자 폭 증가

- 수산물 시장 개방(1998년) 이후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산물 수출은 2001년 이후 정체되어 무역적자가 증가되고 있음



※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2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12년」

〈그림 2.18〉 수산물 수출입 현황

- 수산물 수입증가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의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산물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수출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3.1.3 어선세력 감소

1) 척수·톤수·마력 수 변화

- 어선 척수는 2010년 76,974척에서 대비 2012년 75,031척으로 1,673척 감소하였고, 주원인은 어선감척사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감척실적 : ('10년) 1,256척 → ('11년) 546척

- 감척실적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어선 총톤수는 610,005톤으로 2010년 600,622톤 대비 9,383톤 증가하여 최근 어선의 척당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선종별로는 동력선이 전체 어선척수의 97.2%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동력선은 2.8%임
 - 동력선은 전년대비 약 0.7% 감소한 72,922척으로 조사됨
 - 무동력선은 전년대비 약 4.4% 감소한 2,109척으로 조사됨
- 어선 성능향상과 더불어 기상예보의 정확성 제고 등으로 대피가 용이해졌으며, 이로 인해 도서지역 국가어항의 대피기능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분석됨

2) 어선의 노후화

- 어선의 평균 선령은 2008년 11.2년에서 2012년 12.8년으로 증가하였으며,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44.2%에서 53.5%로 증가한 반면 5년 이하 신규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서 18.0%로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어업인구 감소 및 어업여건 악화로 신규선박 건조는 줄어들고 어선 노후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표 2.9〉 어선의 선령별 척수

구 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계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008년	17,311	73,182	22,356	77,333	20,931	96,156	10,428	99,970	9,740	274,696	80,766	621,337
	21.4%	11.8%	27.7%	12.4%	25.9%	15.5%	12.9%	16.1%	12.1%	44.2%	100%	100%
2009년	16,048	66,607	19,693	75,335	21,538	85,347	10,813	91,156	9,621	276,327	77,713	594,772
	20.7%	11.2%	25.3%	12.7%	27.7%	14.3%	13.9%	15.3%	12.4%	46.5%	100%	100%
2011년	13,910	65,597	16,040	69,341	20,499	71,846	13,739	74,744	11,441	325,099	75,629	606,627
	18.4%	10.8%	21.2%	11.4%	27.1%	11.8%	18.2%	12.3%	15.1%	53.6%	100%	100%
2012년	13,478	69,723	14,406	62,829	20,587	75,381	13,856	75,623	12,704	326,449	75,031	610,005
	18.0%	11.4%	19.2%	10.3%	27.4%	12.4%	18.5%	12.4%	16.9%	53.5%	100%	100%

※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내부자료 (2012년 기준)

3) 감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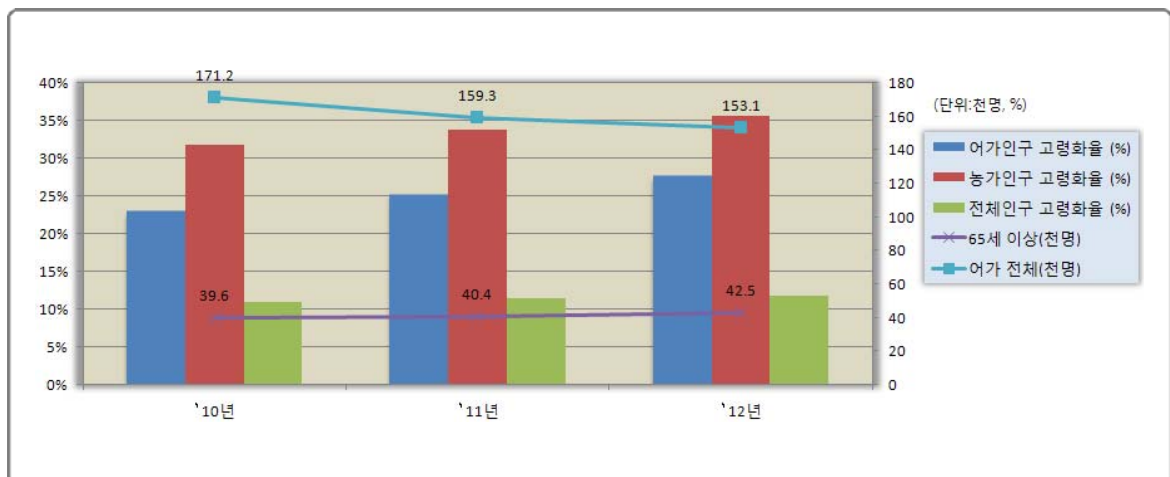
- 정부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7,922척의 어선을 감척한 것으로 나타남
 - 연안어선 15,305척(85.4%), 근해어선 1,309척(7.3%), 국제감척 1,308척(7.3%)
- 1994년부터 시작한 감척사업에 2012년까지 총 1조 5,81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대부분 2006년 이후에 감척사업이 이루어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감척된 어선의 비중이 78%를 차지함

3.2 인구구조 및 식품소비 변화

3.2.1 인구구조 변화

1) 고령화

- 2012년 전체 인구수는 50,948천 명이고 그중 어가인구는 153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0.3%로 나타났다
- 어가인구 고령화율은 2012년 기준 전체인구 고령화율 11.8%보다 2배 이상 많은 27.8%로 조사되었으며 증가 폭 또한 전체인구 고령화율이 0.4% 증가한 것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어촌의 고령화율은 농촌 35.6%보다 8.2% 낮지만 어촌의 고령화 증가율은 농촌 1.9%보다 0.5%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어가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증가하고 어가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촌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청장년층의 인적자원 유입대책과 인력육성이 절실히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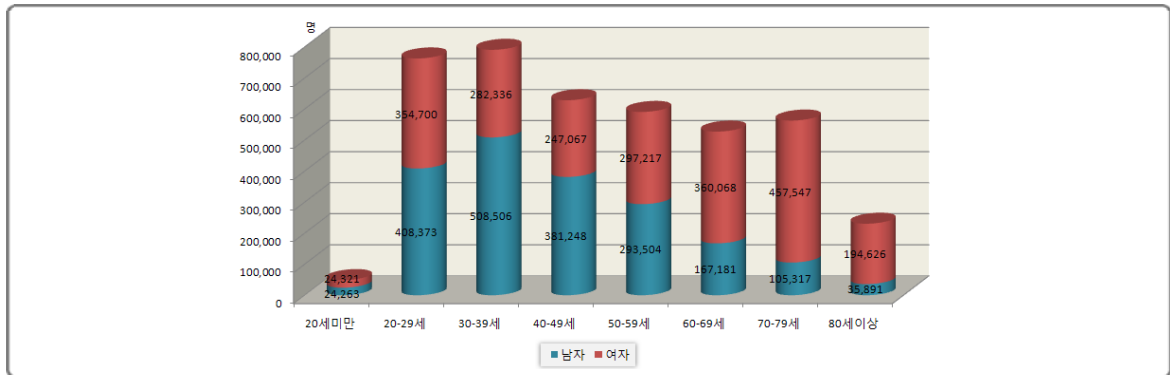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농림어업총조사, 2013년」

〈그림 2.19〉 어가인구 연령별 변화 추이

2) 1인 가구 증가

-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4,142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23.9%로 조사
 - 그중 남자는 1,924천 가구(46%)이며 여자는 2,218천 가구(54%)로 여성 1인 가구 수가 294천 가구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는 30~39세가 가장 많으며 여자는 20~29세에서 1차 정점에 달한 후 혼인으로 감소했다가 사별로 점차 증가해 70~79세에 2차 정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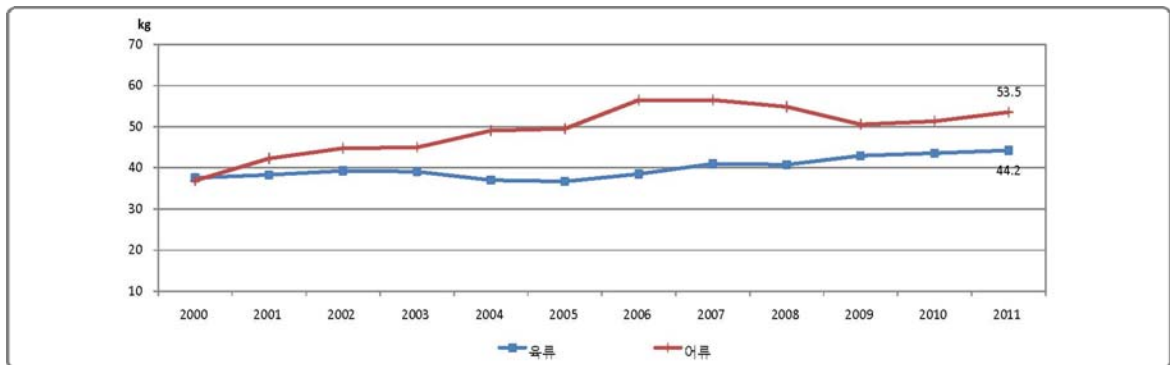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0년」

〈그림 2.20〉 1인 가구 분포

3.2.2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생활여건 개선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성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 2011년 기준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53.5Kg 으로 육류소비량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인구 연령이 고령화될수록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문화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고령층으로 변화함에 따라 식품 소비패턴도 변화됨
 - 육류와 달리 어류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어, 앞으로 어류의 소비패턴은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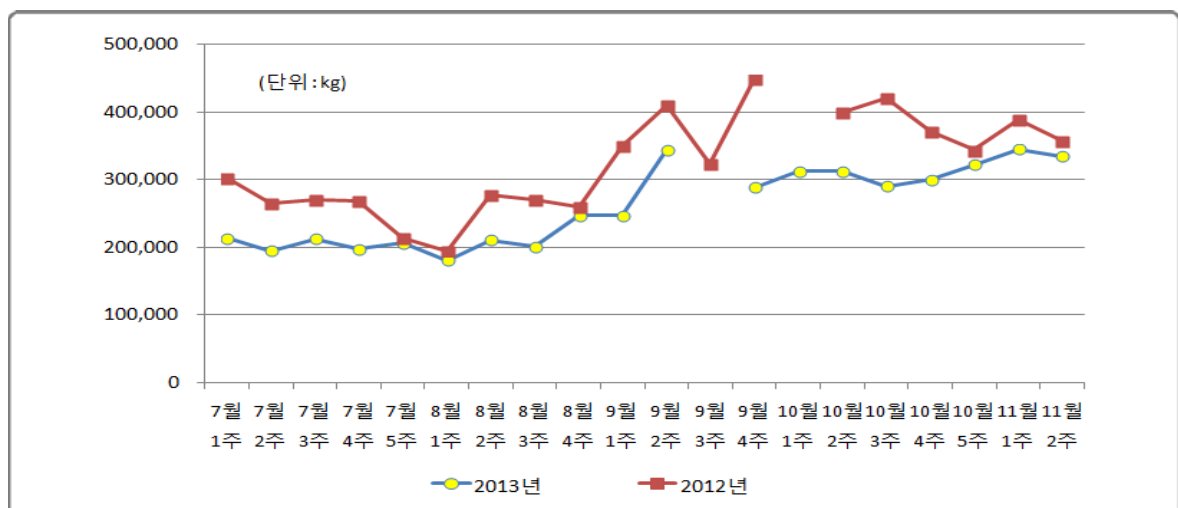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1년」

〈그림 2.21〉 연간 1인당 수산물·육류 소비량

3.2.3 수산물 위생, 안전에 대한 인식 고조

- 일본 원전사고, 지정해역 내 노로 바이러스 검출 등으로 인해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됨
 -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수산물의 부정적 인식이 소비 감소로 이어져 어가 경제에 타격
- 한·EU,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수산물 위생관리 국제규제 강화, 수입 수산물 증가로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고조

- 2012년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1호, 2호)의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수출중단 위기
- 노랑진 수산시장의 2013년 수산물 거래동향은 전년 동기 대비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됨
- 11월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 9~10월 대비 거래물량 감소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됨



※ 자료 : KMI 일본 원전 방사능 대책 TF 내부자료(2012년 기준)

〈그림 2.22〉 노랑진 수산시장의 주별 수산물 거래물량 동향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평소 먹거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 수가 39.2%로 조사되었으며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57.8%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수산물 위생 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 수산물의 위생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항 내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위생관리기준 마련 필요
 - 어항구역 내 산지위판장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개인위생,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 Pest Control 등 위생기준과 관리방안 부재
 - 수산물의 양륙에서 위판·가공 및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인증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수산물 위생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3.3 어촌관광수요 변화

3.3.1 어촌관광 수요의 다변화

1) 어촌관광의 특성

- 어촌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점이지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해양, 해변, 평야, 산 등에 부존되어 있는 머드(Mud), 소금, 해수, 심층수 등 다양한 자원과 물범, 고래,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어촌관광활동을 개발할 수 있음
- 어업시기와 레저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현재 어업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해양 및 해변을 어한기(漁閑期)에 관광객에게 레저활동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2) 어촌·어항 관광구조 및 유형

- 어촌은 기본적으로 전면에 어장이 있고, 어장과 어촌을 연계하는 어항시설로 구성됨
 - 어촌의 공간 특성상 육상·해상·해양생태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어촌에서는 다양한 관광활동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장-어항-어촌공간을 연계시킬 수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함
- 어촌은 생산 공동체로서 대부분의 자원이 공동 재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어업공동체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공간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촌·어항관광개발과정에서 어업공동체 혹은 마을이 중심 역할을 수행함
 -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 및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여, 본래의 어촌·어항관광 개발의 주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 사업주체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됨

3) 항별 축제 및 행사 현황

- 전국 109개 어항 중 33개 항에서 36개의 축제 및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산물 관련 축제 및 행사인 것으로 조사됨
 - 동해안 지역은 주변 관광지에서 축제 및 행사가 개최되는 것에 반해 서·남해안 지역은 어항에서 축제 및 행사가 다수 개최되며 어항이 지역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어항구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 수요가 충남지역이 1,354,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매출액 또한 충남지역이 314억 원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음
 - 이는 충남지역이 수도권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수의 어항에서 수산물 중심의 축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선한 해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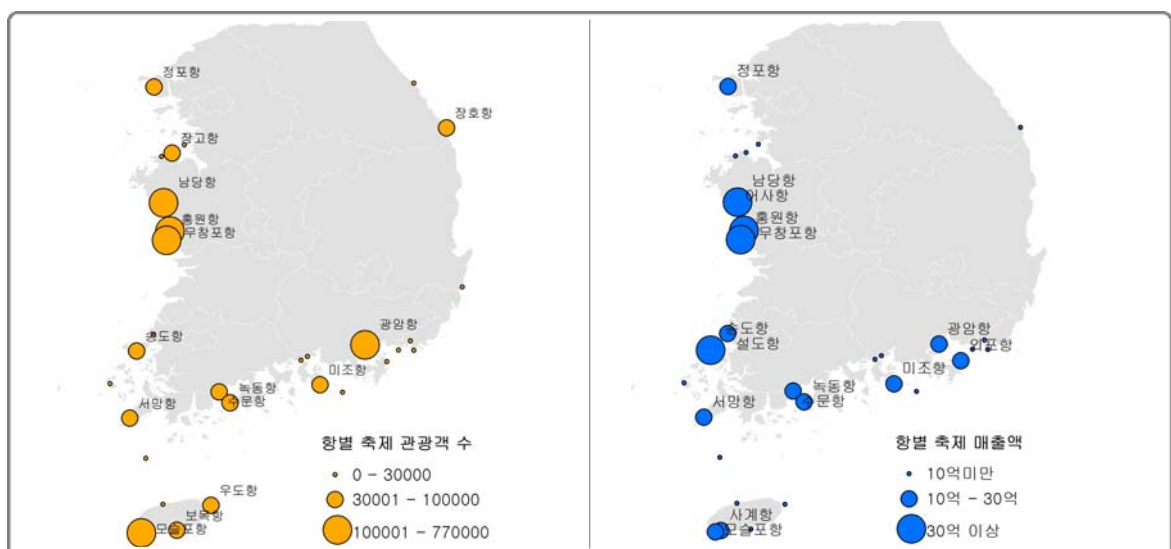
〈표 2.10〉 항별 축제 및 행사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 원)

구분	항 명		축제 및 행사		관광객	매출액
계	33		36		2,474,380	59,925,940
부산	3	다대포항(국), 대 하 항(지) 하 단 항(소)	3	다대포 어항 문화축제 등	23,000	110,000
인천	1	정 포 항(지)	2	강화도 세우젓 축제	75,000	1,601,000
경기	1	궁 평 항(국)	1	궁평항 풍어제 등	1,000	40,000
강원	2	장 호 항(국), 안인진항(정)	2	장호항 어촌체험마을 여름페스티벌 등	38,099	349,740
충남	6	무창포항(지), 삼길포항(국) 장 고 항(국), 홍 원 항(국) 남 당 항(국), 어 사 항(지)	8	무창포항 대하, 전어 축제 등	1,354,000	31,400,000
전남	6	녹 동 항(국), 서 망 항(국) 수 문 항(지), 설 도 항(지) 송 도 항(지), 화 도 항(지)	6	수문항 키조개 축제 등	226,500	14,370,000
경북	2	읍 천 항(국), 저 동 항(국)	2	울릉도 오징어 축제 등	8,061	1,800,000
경남	6	광 암 항(국), 욱 지 항(국) 외 포 항(국), 미 조 항(국) 노 랑 항(국), 술 상 항(지)	6	욕지 섬 문화 축제 등	402,000	6,239,200
제주	6	도 두 항(국), 추 자 항(항) 모슬포항(국), 우 도 항(지) 사 계 항(지), 보 옥 항(소)	6	도두 오래물 축제 등	346,720	4,016,000

주 : (국) 국가어항, (지) 지방어항, (정) 어촌정주어항, (소) 소규모항포구, (항)항만

※ 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2013년 기준



〈그림 2.23〉 항별 축제 관광객 수 및 축제 매출액

3.3.2 어촌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등 여가활동을 둘러싼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광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1박 2일 이상의 체류숙박형 해양관광에 대한 시장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민관광 총 수요는 2017년 1,026,452천 명으로 전망되며 그중 해양관광 수요는 37%인 379,787천 명으로 전망하였음
 - 국민관광 총 수요 대비 해양관광 수요 비중⁷⁾은 2007년 31%에서 2017년 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활동 특성상 여름 휴가철의 관광객 집중현상이 나타남
한편, 여름철 관광수요의 대부분은 해양관광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요소의 제공과 함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4 시사점

- 국내 수산물 총생산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수산물 무역 적자 폭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어선세력 및 어가인구의 감소 등 수산업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므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공장 또는 수산물을 이용한 타 산업(미용, 건강식품 등)과의 융복합(6차 산업화)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 창출이 필요함
- 일본 원전사고 및 대장균, 0-157, 노로바이러스 검출 등으로 인해 수산물의 위생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어항에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적인 어항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에게 국내 수산물의 위생 안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 어촌지역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경제활동 인력 감소로 어촌·어항의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어촌지역의 신규인력 투입을 위한 대책 마련 및 노인 복지대책도 필요함
-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다양한 수요 증가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어항 이용의 활용성을 제고
 - 관광은 물론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항 특화개발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중심축 역할이 가능함
 - 또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력 육성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함

7) 자료 :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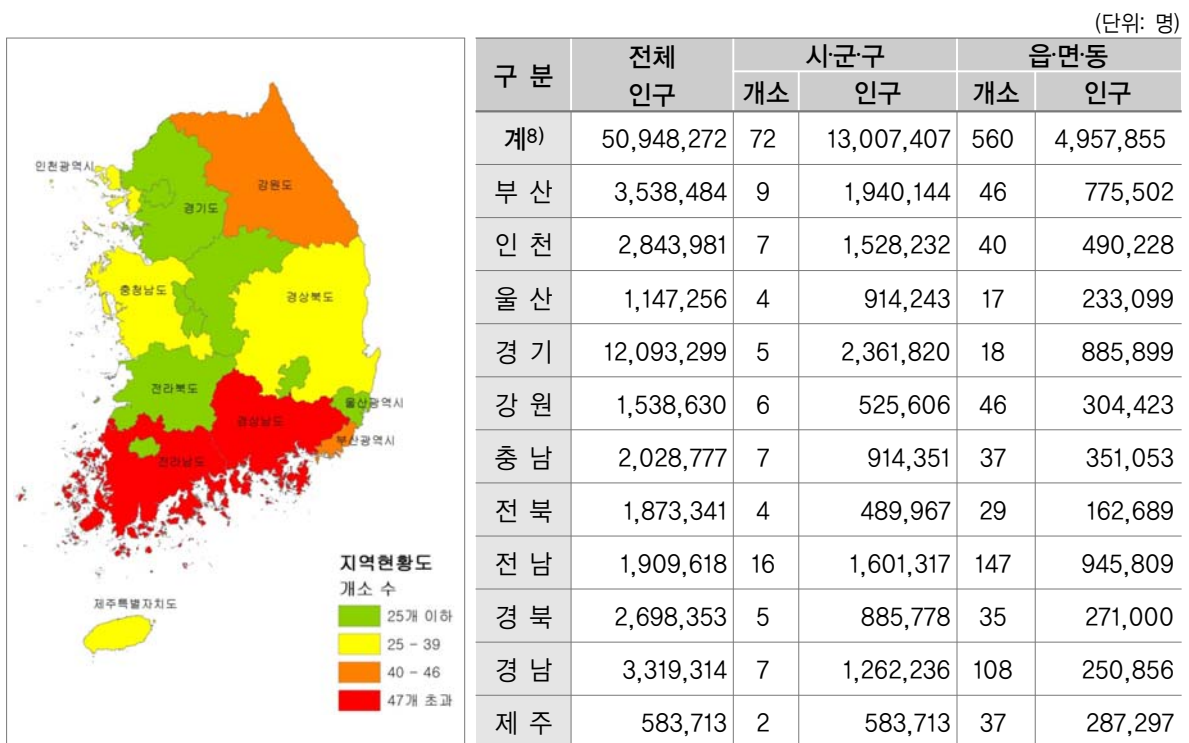
제3절 현황 및 문제점

1 어촌 부문

1.1 어촌의 분포 및 특징

1.1.1 행정구역별 분포 및 특징

- 2012년 기준 연안 시·군·구는 72개로 전국 시·군·구 226개 중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560개로 전국 읍·면·동 3,538개 중 15.8%를 차지함
- 전남지역의 시·군·구는 개소 수가 16개소(26.3%)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행정구역을 차지하며, 읍·면·동 또한 147개소(22.2%)로 어촌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의 특징으로 바다와 접하는 지선이 길어 어촌의 분포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어촌지역의 읍·면·동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이 전체 191만 명 중 95만 명(49.5%), 제주 58만 명 중 29만 명(49.2%) 순으로 어촌지역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KOSIS), 2013년

〈그림 2.24〉 어촌의 행정구역별 현황

1.1.2 입지유형별 분포

- 어촌의 입지유형은 도시근교형, 연안촌락형, 취락지구형(도서어촌)으로 분류됨
 - 도시근교형은 시·군·읍 소재지 및 인접의 어촌계로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
 - 연안촌락형은 도시근교형 및 취락지구형이 아닌 어촌
 - 취락지구형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 벽지 및 접적지역 내에 위치한 어촌
 - 낙도는 교량이나 제방에 의하여 연륙되지 아니한 도서 (면 단위 이하 도서)
 - 벽지는 정기 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편도 3회 이하 운행하고 있는 군·면사무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

1) 도시근교형

- 도시근교형 어촌은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으로 어촌체험, 어촌찾아가기 등 배후 연계성이 높아 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특성을 보여줌
- 전년 대비 강원지역 증가 폭이 가장 컸으나, 경남지역은 24개소로 가장 많이 감소됨

〈표 2.11〉 도시근교형 어촌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부산	경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년	374	41	34	35	7	5	84	22	102	44
'11년	327	41	32	29	9	2	75	16	78	45
증 감	△47	-	△2	△6	2	△3	△9	△6	△24	1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년도

2) 연안촌락형

- 입지유형별 분포 중 연안촌락형 어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전남(126개소)이 가장 많이 증가함

〈표 2.12〉 연안촌락형 어촌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부산	경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년	1,095	-	40	39	115	39	443	119	257	43
'11년	1,281	-	42	45	131	44	569	129	275	46
증 감	186	-	2	6	16	5	126	10	18	3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년도

8) 전체인구 계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청북도 등 내륙지역 포함

3) 취락지구형 (도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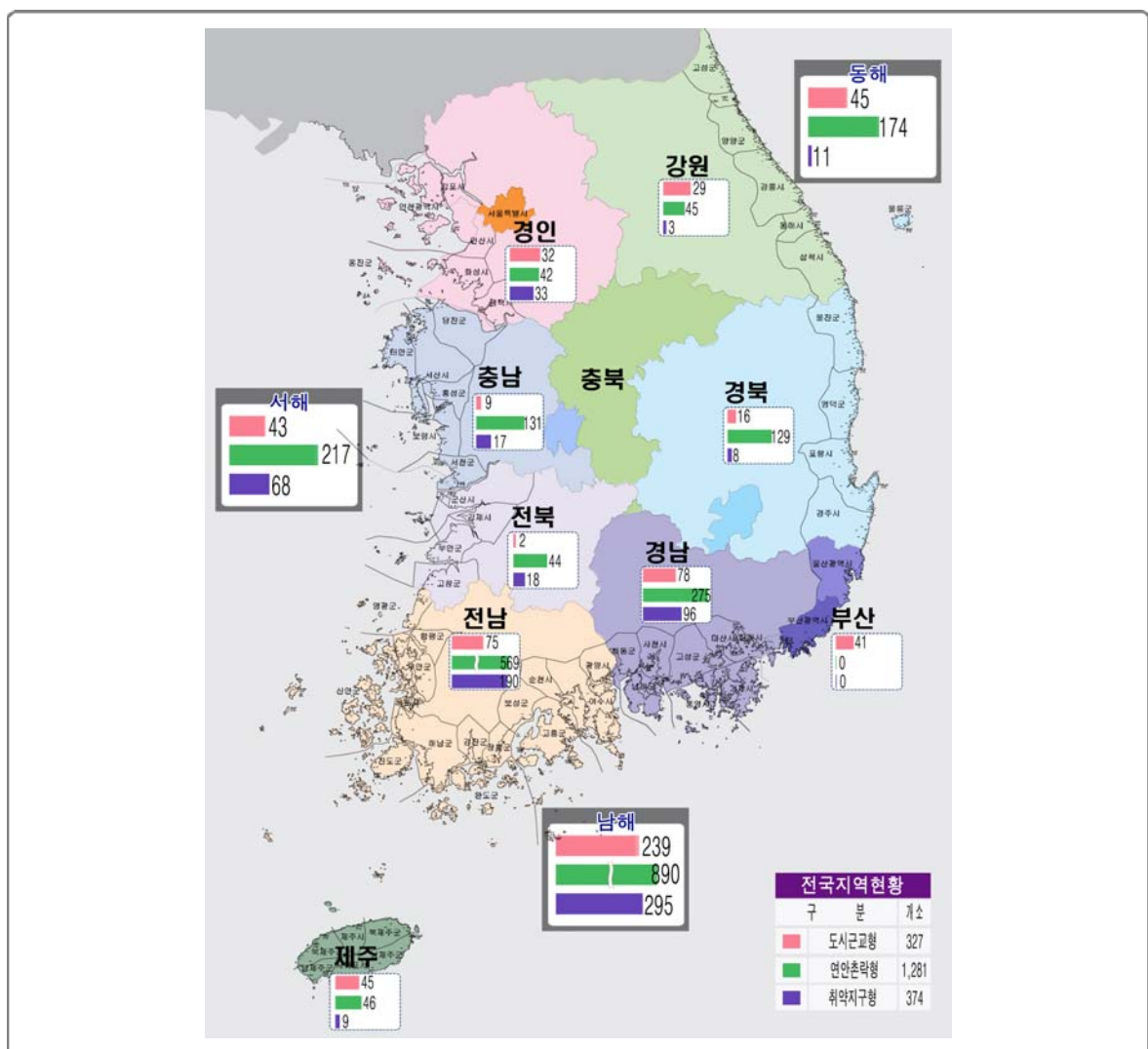
-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 벽지 및 접경지역 내에 위치한 어촌으로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복지여건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전년 대비 전남지역의 감소가 가장 컸으나, 경남지역은 오히려 7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취락지구형(도시어촌) 어촌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부산	경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년	405	-	33	2	31	20	205	12	89	13
'11년	374	-	33	3	17	18	190	8	96	9
증 감	△31	-	-	1	△14	△2	△15	△4	7	△4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년도



〈그림 2.25〉 어촌의 입지유형별 분포현황

1.2 어촌 사회

1.2.1 인구 및 가구현황

1) 어가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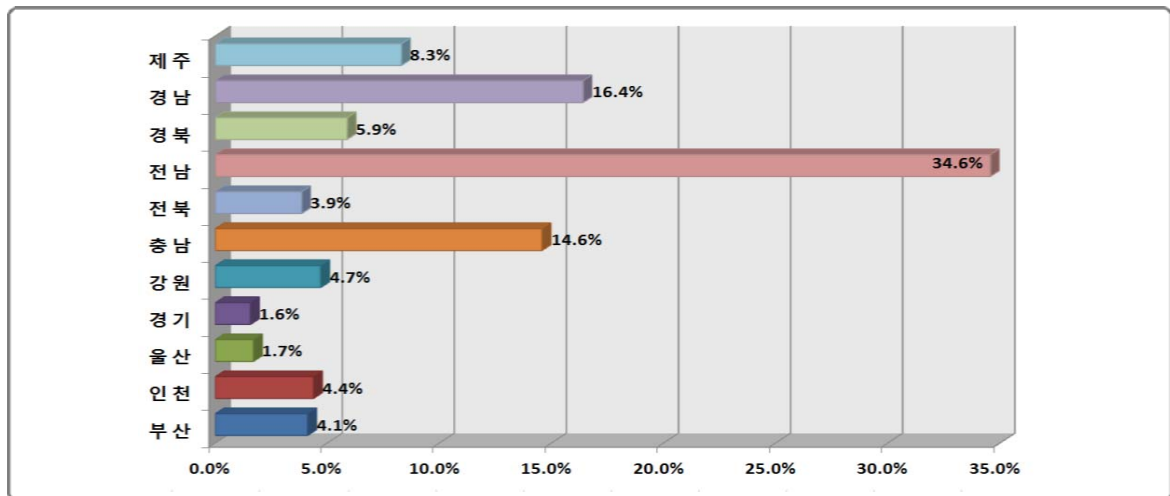
- 총 인구는 2012년 기준 50,948천 명이며, 그중 어가인구는 15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3%의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어가인구 중 가장 많은 어가인구가 분포된 지역은 전남지역 비중이 34.6%이며, 경남지역 16.4%, 충남지역 14.6% 순으로 나타남
- 어촌지역 인구는 소폭 증가(0.6%)한 것에 비해, 어가인구는 감소(-4.4%)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감소율을 보면 경기(-9.9%), 전북(-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가인구 비중은 전남(34.6%), 경남(16.4%) 순으로 조사됨

〈표 2.14〉 어가인구

(단위: 천 명,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시·도·별 어가인구비중	연평균 증가율
총 인구(A)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50,948	-	0.6
어가인구(B)	201	192	184	171	159	153	100	△4.4
부 산	9.0	8.2	6.5	7.4	6.9	6.3	4.1	△5.8
인 천	7.9	7.8	7.2	7.0	7.1	6.7	4.4	△2.7
울 산	3.3	3.1	2.8	2.9	2.8	2.6	1.7	△3.9
경 기	4.5	4.3	4.2	2.5	2.5	2.4	1.6	△9.9
강 원	12.2	10.6	9.2	8.3	7.6	7.2	4.7	△8.4
충 남	26.9	26.2	28.5	27.3	24.2	22.3	14.6	△3.1
전 북	10.4	9.5	9.3	6.8	5.9	5.9	3.9	△9.0
전 남	61.8	61.6	58.8	55.0	53.0	52.9	34.6	△2.6
경 북	13.9	12.4	11.1	10.4	9.7	9.0	5.9	△7.0
경 남	32.3	30.2	27.0	28.9	26.5	25.1	16.4	△4.1
제 주	19.2	18.5	18.7	14.6	13.4	12.7	8.3	△6.7
B/A(%)	0.4	0.4	0.4	0.3	0.3	0.3	-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3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3년」

〈그림 2.26〉 시·도·별 어가인구 비중

2) 어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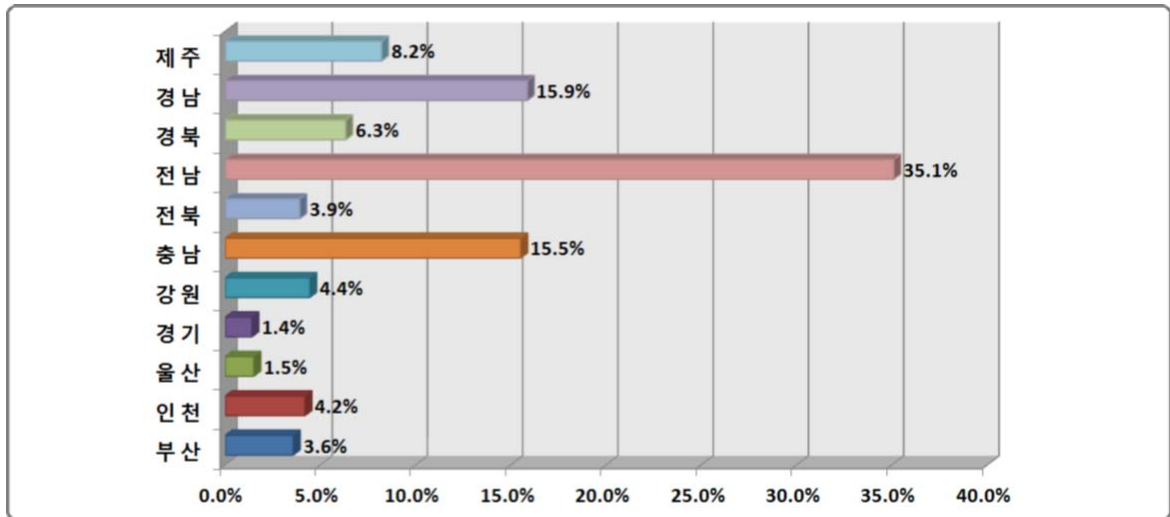
- 전체 어업가구는 2012년 기준 61,493호로 전년도에 비해 1,758호(3.0%) 감소함
- 전체 어업가구 중 가장 많은 어업가구가 분포된 지역은 전남지역 비중이 35.1%이며, 경남지역 비중 15.9%, 충남지역 비중 15.5% 순으로 어가인구와 동일한 패턴을 보임

〈표 2.15〉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시·도·별 어업가구 비중	연평균 증가율
어업가구	73,934	71,046	69,379	66,775	63,251	61,493	100%	△3.0
부 산	2,818	2,689	2,291	2,469	2,393	2,197	3.6%	△4.1
인 천	2,885	2,777	2,630	2,678	2,663	2,575	4.2%	△1.9
울 산	1,123	1,083	1,013	1,021	966	922	1.5%	△3.2
경 기	1,484	1,466	1,420	844	862	861	1.4%	△8.7
강 원	4,237	3,866	3,470	3,039	2,757	2,731	4.4%	△7.1
충 남	10,094	9,871	11,132	11,021	10,169	9,538	15.5%	△0.9
전 북	3,568	3,504	3,463	2,633	2,354	2,406	3.9%	△6.4
전 남	22,939	22,827	22,181	21,809	21,804	21,578	35.1%	△1.0
경 북	5,173	4,633	4,207	4,069	4,113	3,887	6.3%	△4.7
경 남	12,567	11,688	10,523	10,768	10,055	9,753	15.9%	△4.1
제 주	7,046	6,642	7,049	5,393	5,116	5,046	8.2%	△5.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3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3년」

〈그림 2.27〉 시·도·별 어업가구 비중

3) 고령화

-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2012년 기준 153,106명으로 전년 대비 6,193명(3.9%) 감소함
- 2012년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7.8%로 전국 고령화율 11.7%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이미 초고령화⁹⁾단계에 진입함
- 어촌지역 초고령화 진입으로 복지 및 어촌 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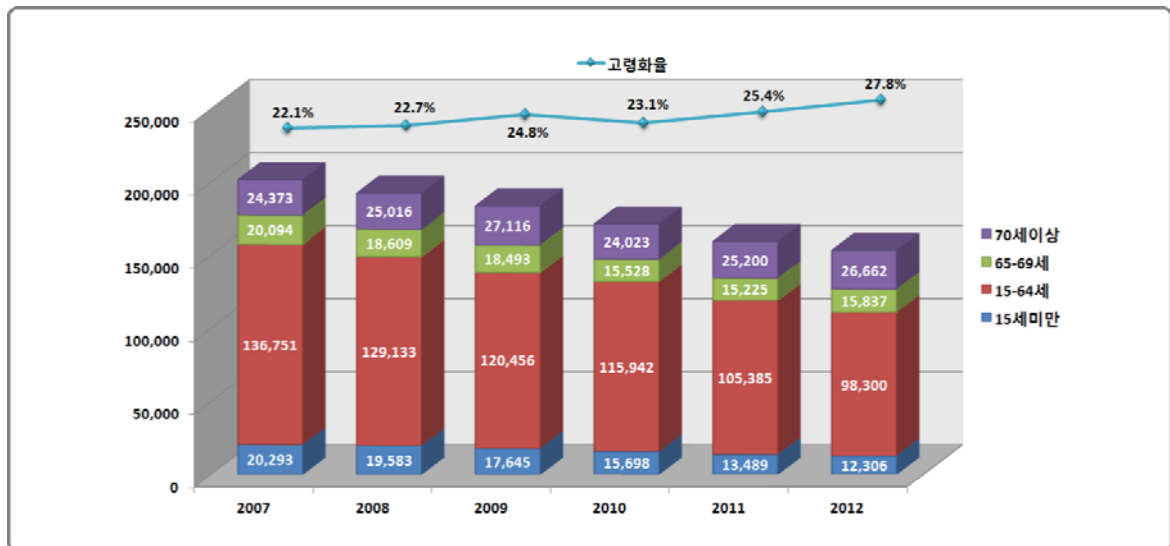
〈표 2.16〉 연령별 어가인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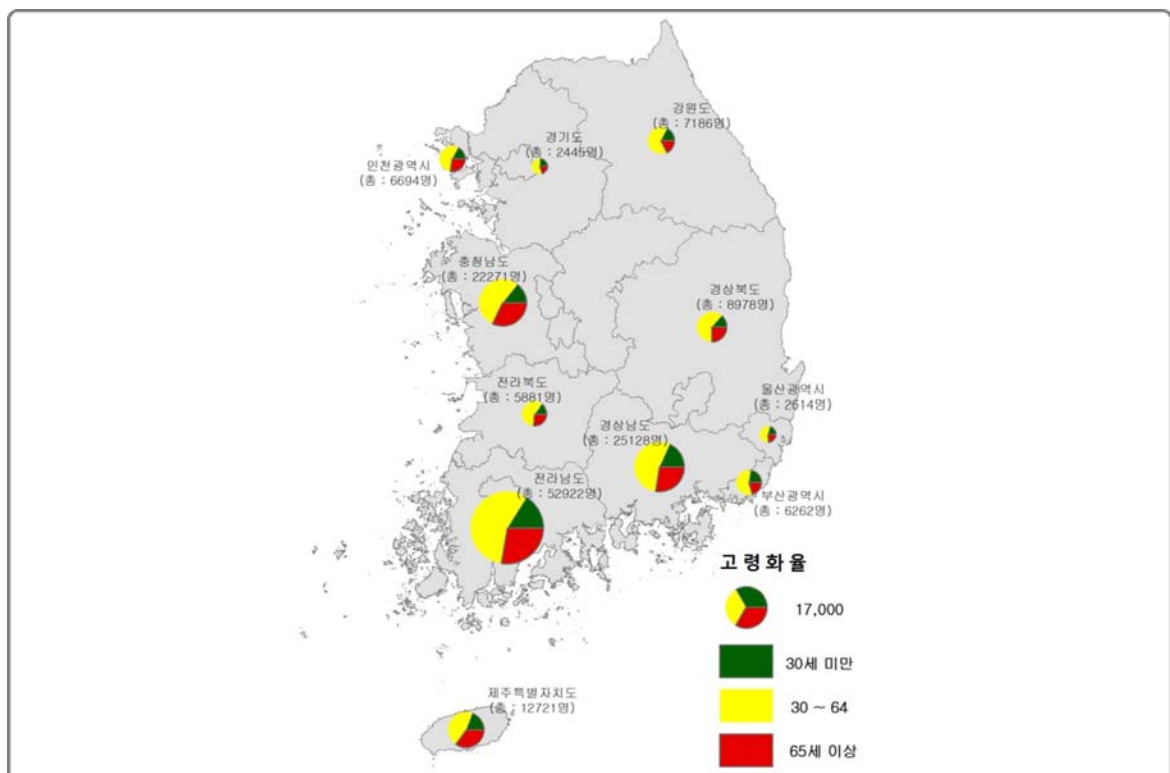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국
계	201,512	192,341	183,710	171,191	159,299	153,106	50,948,272
15세미만	20,293	19,583	17,645	15,698	13,489	12,306	7,624,687
15-19세	8,457	7,384	6,689	7,049	6,346	5,866	3,491,303
20-29세	15,030	13,386	11,873	12,002	9,467	7,654	6,626,948
30-39세	15,251	14,322	13,109	12,873	9,952	9,425	8,168,943
40-49세	32,717	28,967	24,548	24,280	20,458	18,277	8,836,158
50-59세	45,027	43,914	43,373	40,607	40,710	38,540	7,791,570
60-64세	20,269	21,160	20,864	19,131	18,452	18,538	2,428,603
65-69세	20,094	18,609	18,493	15,528	15,225	15,837	1,899,933
70세이상	24,373	25,016	27,116	24,023	25,200	26,662	4,080,127
고령화율 (65세이상)	22.1	22.7	24.8	23.1	25.4	27.8	11.7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3년」

9)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4%에서 7% 미만의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aged) 사회', 고령사회에서 더욱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함(국제연합)



〈그림 2.28〉 어가인구 연령별 변화 추이



〈그림 2.29〉 시·도별 고령화율

1.2.2 다변화된 어촌사회

1) 어촌계

- 어촌계는 2011년 기준 1,982개이며, 전년대비(1,874개)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형 : 지속적인 성장 결과 경영기반이 우수하여 계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어촌계

- 자립형 :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해야 할 어촌계
- 성장형 : 신설 또는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어촌계
- 복지형 어촌계의 경우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성장형 어촌이 차지하는 비율(2011년 기준 59.6%)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촌계의 경영능력 등 전반적인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함

〈표 2.17〉 어촌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어촌계(개소)	1,972	1,978	1,993	1,874	1,982
(전년대비 증가율,%)	(0.2)	(0.3)	(0.8)	(-6.0)	(5.8)
- 복지형	157	164	177	159	200
- 자립형	602	546	567	543	600
- 성장형	1,213	1,239	1,249	1,172	1,182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2012년」

주) '10년 완도금일수협 이전 대상 어촌계(125개소) 인가미비로 급감

2) 자율관리공동체

- 자율관리공동체는 증가 추세이며, 2012년 기준 989개로 전년대비 57개소(6.0%) 증가함
 - 마을어업이 490개소로 4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참여어업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전년대비 66,537명(4.2%) 증가함
- 정부의 지원강화, 자율관리방법의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한 자원관리를 바탕으로 어촌소득증대와 연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표 2.18〉 자율관리공동체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동체(개소)	579	659	758	863	932	989
(전년대비 증가율,%)	(30.1)	(13.8)	(15.0)	(13.9)	(8.0)	(6.0)
-마을어업	294	341	391	438	465	490
-양식어업	72	78	80	85	89	96
-어선어업	102	115	135	156	175	183
-복합어업	94	102	124	143	153	165
-내수면어업	17	23	28	41	50	55
참여어업인(명)	44,061	50,728	56,100	60,902	63,860	66,537
(전년대비 증가율,%)	(29.9)	(15.1)	(10.6)	(8.6)	(4.8)	(4.2)
공동체당 평균 구성원수(명)	76.1	77	74	70.6	68.5	67.3

자료 : 자율관리공동체 통계, 2013년

3)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임
 - 영어조합법인은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년대비 증가함
 - 어업회사법인은 전남지역이 15개소(59.4%)로 가장 많이 차지함
- 2012년 영어조합법인 889개소 중 법인신용평가를 한 법인 수는 423개(47.5%)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영어조합법인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
 - 전문경영인 부족, 농촌대비 정부지원금 및 지원대상 미약의 문제로 유통·가공 강화를 위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함

〈표 2.19〉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현황

(단위 : 개)

구분		소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년	영어조합법인	490	9	7	-	28	14	3	55	33	234	10	32	65
'08년	영어조합법인	501	9	13	-	23	15	6	39	39	236	11	29	81
'09년	영어조합법인	481	6	12	-	23	18	10	43	45	198	11	32	83
'10년	영어조합법인	762	11	20	-	30	27	10	75	58	334	16	43	138
	어업회사법인	11	-	-	-	-	-	-	-	1	6	-	-	4
'11년	영어조합법인	799	12	18	-	21	28	10	80	54	352	14	47	163
	어업회사법인	23	-	1	-	-	-	-	1	-	12	1	1	7
'12년	영어조합법인	889	9	23	1	22	27	13	91	67	373	17	57	189
	어업회사법인	14	-	-	-	1	1	-	4	2	3	-	1	2
전년대비 증감	영어조합법인	90	△3	5	1	1	△1	3	11	13	21	3	10	26
	어업회사법인	14	-	-	-	1	1	-	4	2	3	-	1	2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2013년」
어업회사법인은 2010년부터 분류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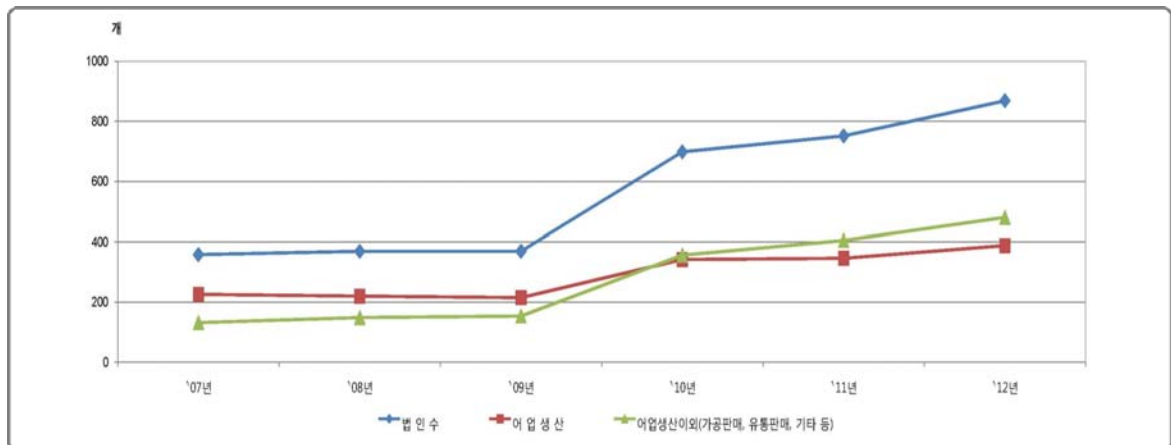
- 사업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의 비율이 388개(44.7%)를 차지하며, 어업생산 이외의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은 480개(55.3%)로 2차 산업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20〉 사업유형별 어업법인 수

(단위 : 개)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법 인 수	358	369	369	698	751	868
어업생산	226	220	215	342	346	388
어업생산이외 (가공판매, 유통판매, 기타 등)	132	149	154	356	405	480

자료 : 자율관리공동체 통계, 2013년
어업생산에는 어로어업, 양식업을 포함



〈그림 2.30〉 사업유형별 어업법인 수

4) 지역별 어촌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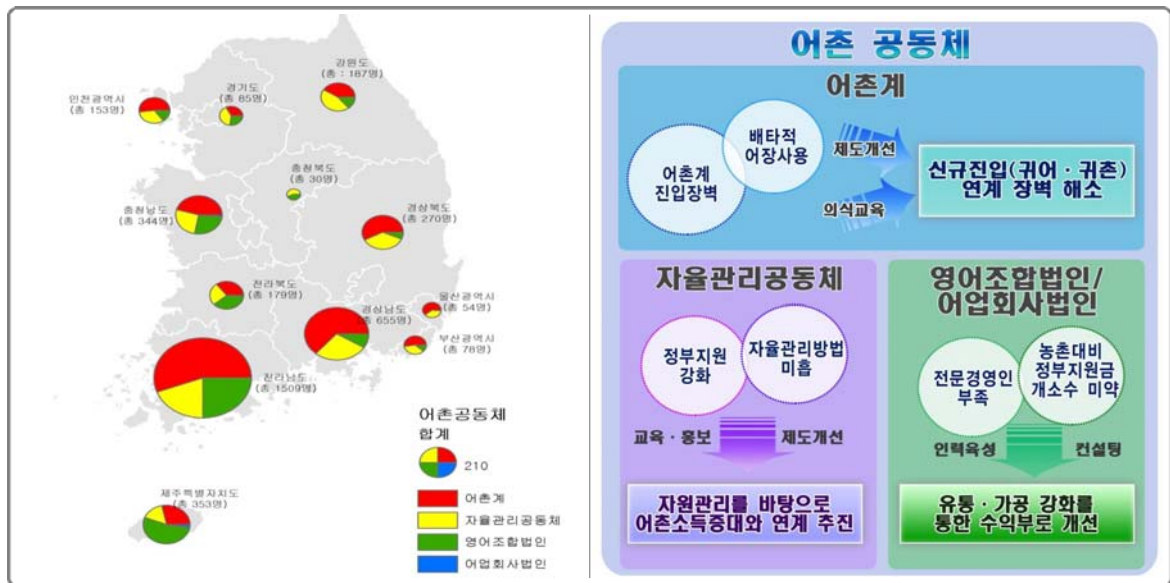
- 지역별 어촌공동체 현황을 보면 전남의 비중이 38.7%인 1,50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남이 많은 것은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의 특징으로 전통적인 어촌취락지구의 형성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21〉 지역별 어촌공동체 현황

(단위 : 개)

구분	소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897	78	153	54	85	187	30	344	179	1,509	270	655	353
어촌계	1,982	41	79	33	28	77	-	157	64	832	155	416	100
자율관리 공동체	989	28	50	20	34	82	17	91	46	289	97	180	55
영어조합 법인	889	9	23	1	22	27	13	91	67	373	17	57	189
어업회사 법인	37	-	1	-	1	1	-	5	2	15	1	2	9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12년」, 통계청 및 해양수산부, 2013년



〈그림 2.31〉 어촌공동체 시·도별 현황(좌) 및 어촌공동체 해결과제(우)

5) 귀어·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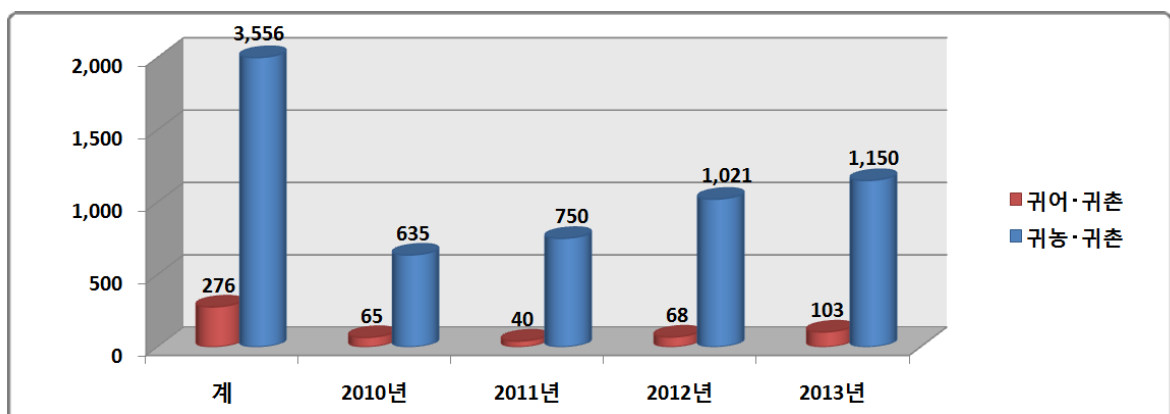
- 귀농·귀촌의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1,021가구이고, 귀어·귀촌은 68가구로 귀농·귀촌에 9.1% 수준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에 비해 귀어·귀촌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진입 장벽제거 및 정책적 보완 대책이 필요

〈표 2.22〉 귀어·귀촌 지원 현황

(단위: 가구)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귀농·귀촌	3,556	635	750	1,021	1,150
귀어·귀촌	276	65	40	68	103

자료: 해양수산부, 2013년



자료: 해양수산부, 2013년

〈그림 2.32〉 귀어·귀촌 지원 현황

6) 다문화가정

- 전국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국적 미 취득자가 취득자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으며, 그 중 동북아 국적이 20,016명(52.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함
 - 동북아 국적의 나라로는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순으로 높음
- 다문화가정의 수는 점점 증가 추세이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문화·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경기, 전남 지역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수요 조사가 필요함
- 다문화 가정 증가로 인한 생활복지 증진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표 2.23〉 전국 다문화가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적 미 취득자							국적 취득자						
	소계	동북아	동남 아시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미국	기타	소계	동북아	동남 아시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미국	기타
계	42,045	20,016	18,720	720	784	513	1,292	24,805	16,844	7,469	182	142	6	162
부 산	3,963	1,631	1,706	97	78	117	334	2,135	1,419	635	17	10	1	53
인 천	3,066	1,698	1,012	104	83	41	128	1,723	1,391	271	29	15	1	16
울 산	2,751	1,204	1,320	22	61	24	120	1,765	1,026	714	7	11	1	6
경 기	12,106	7,892	3,380	216	214	137	267	7,252	6,025	1,063	93	38	2	31
강 원	1,130	443	598	14	18	20	37	580	375	195	-	4	-	6
충 남	3,469	1,525	1,763	24	74	19	64	3,871	2,486	1,338	17	24	-	6
전 북	1,356	648	635	15	36	9	13	688	424	261	1	1	-	1
전 남	5,402	1,949	3,263	38	70	25	57	2,605	1,310	1,265	4	8	-	18
경 북	2,215	724	1,337	25	34	37	58	1,088	563	508	1	4	1	11
경 남	4,784	1,744	2,700	69	84	41	146	2,478	1,404	1,032	9	24	-	9
제 주	1,803	558	1,006	96	32	43	68	620	421	187	4	3	-	5

※ 자료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2013년」

1.3 어촌 경제

1.3.1 어가소득

1) 어가소득 동향

- 어가 평균소득은 2012년 기준 37,381천 원이며, 전년 대비 1,242천 원(3.2%) 감소함
 - 어업경영비는 증가하는 반면 어업총수입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추정됨
-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 비중은 2007년 39.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52.3%로 나타남
 - 이는 어업가구 수 감소에 따른 가구당 생산량의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어업외소득의 비중은 2007년 35.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30.4%로 나타남
- 비경상소득의 비중은 2007년 15.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8.6%인 3,210천 원으로 나타남

〈표 2.24〉 연도별 어가소득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년대비
어가소득	30,668	31,176	33,945	35,696	38,623	37,381	△3.2
경상소득	25,868	26,344	30,213	31,729	35,119	34,171	△2.7
어업소득 (구성비)	11,975 (39.0)	13,801 (44.3)	16,220 (47.8)	16,607 (46.5)	20,432 (52.9)	19,539 (52.3)	△4.4
어업외소득 (구성비)	10,981 (35.8)	10,120 (32.4)	11,136 (32.8)	11,931 (33.4)	11,378 (29.5)	11,360 (30.4)	△0.2
이전소득 (구성비)	2,913 (9.5)	2,423 (7.8)	2,857 (8.4)	3,191 (8.9)	3,309 (8.6)	3,272 (8.8)	△1.1
비경상소득 (구성비)	4,799 (15.6)	4,831 (15.5)	3,732 (11.0)	3,968 (11.1)	3,504 (9.1)	3,210 (8.6)	△8.4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2

2) 어업소득률 추이

- 어가의 어업경영 성과가 향상된 것은 어업소득률(어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에서 확인되는데 2009년 45.9%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12년 43.2%로 하락 추세에 있음
 - 어업총수입은 2007년 26,535천 원에서 2012년 45,228천 원으로 연평균 9.3%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어업경영비 지출 역시 2007년 14,560천 원에서 2012년 25,689천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한 어업소득률 감소로 귀결됨

- 어업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업소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어업외소득 창출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25〉 어업소득률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년 대비
어업총수입(A)	26,535	33,457	35,350	37,682	45,875	45,228	△1.4
어로수입	16,837	19,957	21,247	22,083	24,566	23,802	△3.1
양식수입	9,162	12,801	13,542	15,081	20,212	19,672	△2.6
어업잡수입	536	700	561	518	1,097	1,754	17.4
어업경영비	14,560	19,656	19,129	21,076	25,444	25,689	0.9
어업소득(B)	11,975	13,801	16,220	16,607	20,432	19,539	△4.4
어업소득률(B/A)	45.1	41.2	45.9	44.1	44.5	43.2	△1.3

자료 : 통계청 「20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2013년」

3) 도시가게 대비 어가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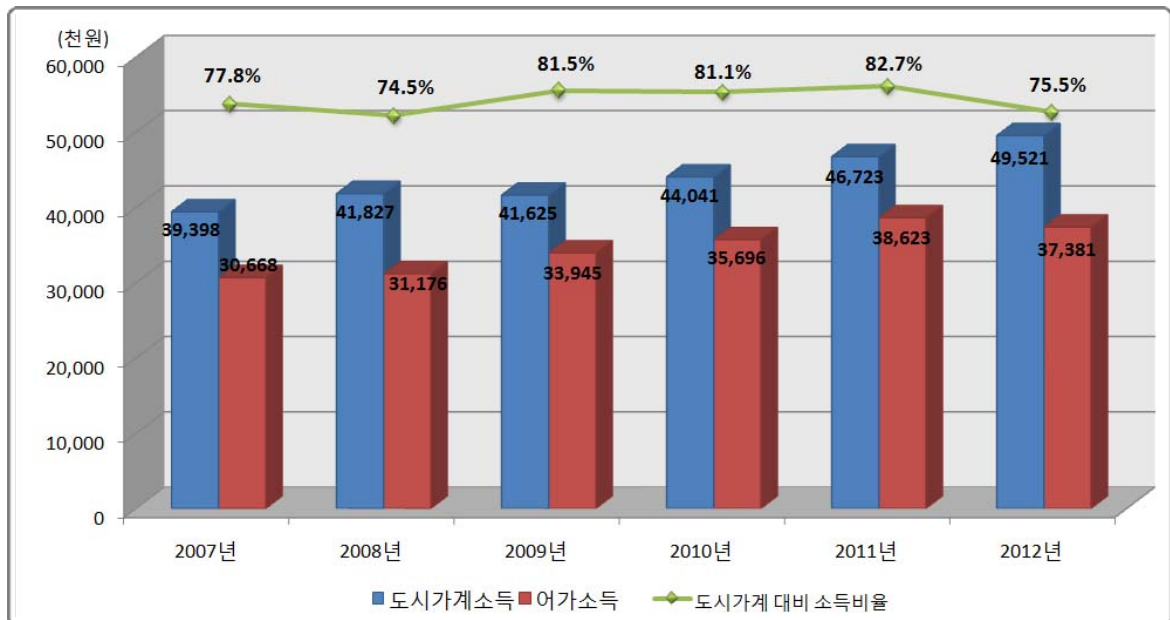
- 2012년 기준 어가소득은 37,381천 원으로 도시가게소득 49,521천 원의 75.5% 수준임
- 도시가게 대비 소득격차는 2011년까지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2년에는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등의 감소로 인해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와 어촌의 가게 소득 격차를 해소시킬 신사업, 체험프로그램, 자원 조성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

〈표 2.26〉 연도별 가게소득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년 대비
어가소득(A)	30,668	31,176	33,945	35,696	38,623	37,381	△3.2
도시가게소득(B)	39,398	41,827	41,625	44,041	46,723	49,521	6.0
A/B	77.8	74.5	81.5	81.1	82.7	75.5	-

※ 자료 : 통계청 「20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2013년」



〈그림 2.33〉 연도별 가계소득

4) 조건불리지역 소득격차

- 최근 3년간 조건불리지역¹⁰⁾과 비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 평균 차액은 1,189천 원으로 조사됨
- 조건불리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물류비, 유통비 등의 추가 지출 항목이 필연적이므로 소득 차를 보전할 수 있는 조건불리지역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표 2.27〉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 소득차액

(단위: 천 원)

구 분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비중(%)	비 조건불리지역 어업소득	조건불리지역 어업소득	차 액
\04년	45.7	9,334	9,420	△85
\05년	43.0	8,905	8,885	19
\06년	39.0	8,904	8,733	171
\07년	39.0	9,718	9,005	713
\08년	44.3	11,078	10,098	979
\09년	45.8	11,756	10,838	917
\10년	44.0	11,780	10,287	1,492
\11년	44.5	13,124	11,514	1,160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 이격거리 산출 등 용역, 2012년」

10) 어업생산성이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제주특별자치도의 본섬에 있는 어촌은 제외)과 8km 미만 떨어진 어촌으로서 하루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가 3회 미만인 어촌으로 연육교가 없는 섬의 어촌

1.3.2 어가지출

1) 어가지출 동향

- 어가지출은 2012년 29,16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이는 어가소득 감소율 3.2% 보다 조금 낮은 수치임
- 2012년 어가소득 감소가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어가경제잉여 또한 5.8% 감소함
- 어가의 저축률이라 할 수 있는 어가경제잉여율은 2012년 26.4%로 전년 대비 0.6% 감소함

〈표 2.28〉 어가지출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년 대비
가계지출(A+B)	22,963	25,405	27,065	28,700	29,906	29,169	△2.5
소비지출(A)	18,263	20,051	20,656	21,982	23,524	22,943	△2.5
비소비지출(B)	4,700	5,354	6,409	6,719	6,382	6,226	△2.4
처분가능소득(C)	25,968	25,822	27,537	28,978	32,241	31,155	△3.4
어가경제잉여 (D=C-A)	7,704	5,770	6,881	6,996	8,717	8,212	△5.8
어가경제잉여율 (D/C)	29.7%	22.3%	25.0%	24.1%	27.0%	26.4%	△0.6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13년」

2) 어업경영비

- 어업경영비는 2007년 14,561천 원에서 2012년 25,689천 원으로 연평균 9.9% 증가함
- 어가소득은 2007년 대비 22% 증가하는 데 비해 어업경영비는 2007년 대비 43% 증가하여 경영여건 악화의 큰 원인으로 분석됨
- 전체 어업경영비 지출 중 광열비 비중은 2007년 16.4%에서 2012년 18.0%로 1.6% 상승하였으나, 금액으로는 2007년 2,383천 원 대비 93.8%가 상승한 4,618천 원으로 나타남
 -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한 선박용 유가상승에 따른 광열비 지출금액 급등
- 전체 어업경영비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은 2007년 22.1%에서 2012년 21.1%로 감소하였으나, 금액에서는 2007년 대비 63.0% 증가한 5,429천 원으로 나타남
 - 특히 양식지출 노무비는 2007년 808천 원에서 2012년 2,579천 원으로 219.2% 급증하여 어업경영 여건악화로 어가경제에 어려움이 야기

〈표 2.29〉 어업경영비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어업경영비 (비중)		14,561 (100)	19,653 (100)	19,128 (100)	21,076 (100)	25,445 (100)	25,689 (100)
지출 항목	종묘비	1,194 (8.2)	1,819 (9.3)	2,164 (11.3)	2,608 (12.4)	3,373 (13.3)	2,650 (10.3)
	인건비	3,220 (22.1)	4,264 (21.7)	3,957 (20.7)	4,408 (20.9)	5,416 (21.3)	5,429 (21.1)
	광열비	2,383 (16.4)	3,996 (20.3)	2,945 (15.4)	3,064 (14.5)	4,390 (17.3)	4,618 (18.0)
	어구구입 보수비용 등	2,709 (18.6)	2,686 (13.7)	2,955 (15.4)	3,306 (15.7)	3,454 (13.6)	3,494 (13.6)
	조세 및 이자	2,434 (16.7)	3,893 (19.8)	4,162 (21.8)	4,410 (20.9)	4,662 (18.3)	5,456 (21.2)
	기 타	2,621 (18.0)	2,995 (15.2)	2,945 (15.4)	3,280 (15.6)	4,150 (16.3)	4,042 (15.7)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13년」

1.3.3 어가부채

- 2012년 기준 어가부채는 39,51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됨
 - 용도별 기준으로 껌업용 부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채 비율 중 어업용 및 껌업용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어가의 부채는 어업용(51.1%)과 가계용(26.2%)부채 순으로 나타남
 - 어업용 부채는 20,177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됨
- 부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로 구분하면, 단기부채인 유동부채는 22.6% 감소한 반면, 장기부채인 고정부채는 8.7% 증가됨
- 어촌지역 경제여건의 악화로 소득구조 개선을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표 2.30〉 어가부채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년대비
어가부채		34,407	33,587	35,864	35,640	37,862	39,518	4.4
용 도 별	어업용	16,690	18,207	19,038	18,277	18,631	20,177	8.3
	가계용	10,178	9,484	10,618	10,347	10,816	10,363	△4.2
	껌업용	5,443	4,755	4,598	5,026	5,382	6,392	18.8
	기타용	2,095	1,141	1,610	1,991	3,032	2,586	△14.7
기간 별	고정부채	28,669	30,237	31,238	29,910	32,581	35,430	8.7
	유동부채	5,738	3,350	4,625	5,730	5,280	4,088	22.6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13년」

1.3.4 일자리

1)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수산 관련 사업체 수는 2012년 61,493개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100,173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는 2012년 기준 16,571개소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16,571명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됨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인력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함

〈표 2.31〉 종사자 및 사업체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종사자 수	122,916	118,879	111,532	107,163	103,903	100,173
	사업체 수	73,934	71,046	69,379	65,775	63,251	61,493
어선 어업	종사자 수	54,510	51,038	47,421	45,156	42,504	41,327
	사업체 수	34,139	31,803	29,989	28,632	27,196	26,363
양식 어업	종사자 수	44,951	42,858	43,428	29,712	32,038	30,188
	사업체 수	23,486	22,225	22,703	16,188	17,435	16,571
나잡 어업	종사자 수	46,260	49,172	48,726	31,395	28,611	27,912
	사업체 수	32,214	33,680	33,059	20,629	18,508	18,433
기타	종사자 수	650	794	638	900	750	747
	사업체 수	404	356	313	326	112	125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13년」

2) 수산계 고교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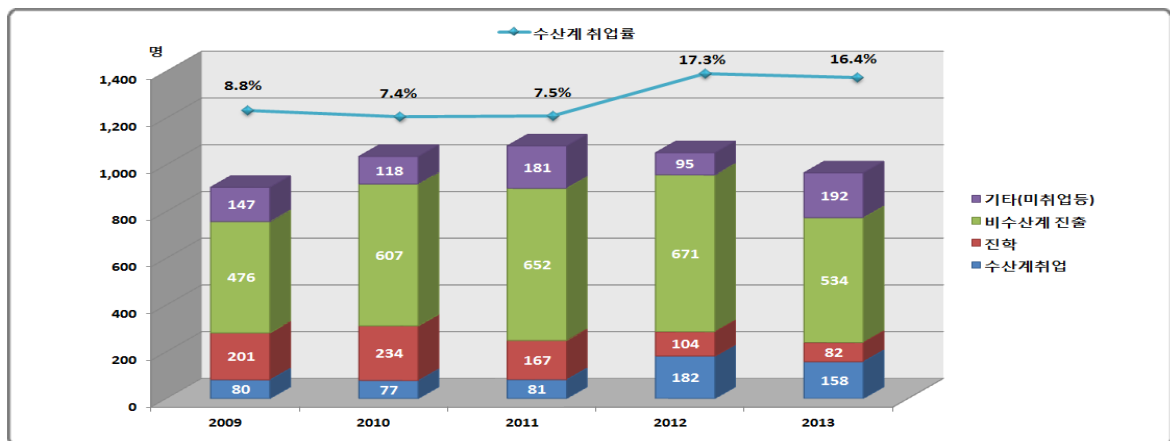
- 2013년 기준 수산계 고교 졸업생 중 수산계 취업률은 16.4%에 불과하며 수산계 고교 졸업생이 비수산계로 진출이 과반수를 넘고 있음
 - 비수산계 진출의 증가로 수산업 여건 악화 해소를 위한 수산계 인력지원 정책이 필요함
-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수산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표 2.32〉 수산계고교 졸업생 연도별 취업현황

(단위: 명)

구 분	졸업년도					
	소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졸업생수(A)	5,039	904	1,036	1,081	1,052	966
수산계 취업(B)	578	80	77	81	182	158
진출 진학	788	201	234	167	104	82
비수산계 진출(C)	2,940	476	607	652	671	534
기타(미취업등)	733	147	118	181	95	192
B/A(%)	11.5	8.8	7.4	7.5	17.3	16.4
C/A(%)	58.5	52.6	58.6	60.3	63.8	55.3

※ 자료: 해양수산부, 2013년



※ 자료: 해양수산부, 2013년

〈그림 2.34〉 수산계 취업 현황

3) 외국인 어선원 현황

- 외국인 선원은 2012년 21,327명으로 2007년 대비 9,916명에서 급증 추세임
- 업종별로 보면 외항선이 9,672명(45.3%)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선원이 종사하며, 내항선이 597명(2.8%)로 가장 적은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양어선과 연근해 어선에서의 외국인 종사자 수도 지속적 증가 추세임

〈표 2.33〉 외국인 어선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연근해 어선	원양어선	내항선	외항선
'07년	9,916	2,877	3,696	345	2,998
'08년	12,777	3,379	3,586	391	5,421
'09년	13,789	4,141	3,435	426	5,787
'10년	17,558	5,156	4,006	497	7,899
'11년	19,550	5,409	4,540	564	9,037
'12년	21,327	6,411	4,647	597	9,672

※ 자료: 한국선원통계연보, 2012년

1.4 정주환경 · 복지

1.4.1 정주환경

1) 상수도

- 전국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95.7%로 조사되었고, 연안 사·군·구 지역은 전국 대비 2.9% 낮은 92.8%로 나타남
- 어촌 상수도 보급현황에서 급수도시 내 총인구는 2007년에 비해 3.8% 상승하였고, 급수인구 및 보급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연차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13.5%)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건불리지역의 상수도 설치가 경제성이 낮아 도서지역 어촌 주민의 식수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표 2.34〉 연도별 상수도 보급 현황

구 분		급수도시 내 총인구(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급수량 (㎥/일)	1인/1일 급수량(ℓ)
전 국		51,716,745	48,937,688	95.7	-	-
연 안 시· 군· 구	'07년	14,023,852	12,513,153	89.2	4,817,037	4,166
	'08년	14,209,594	12,808,565	90.1	5,060,960	4,461
	'09년	14,372,630	13,098,775	91.1	5,140,123	4,405
	'10년	15,191,586	14,100,135	92.8	5,394,747	4,372
	'11년	14,580,397	13,531,216	92.8	4,240,190	3,920

※ 자료 : 사·군·별 통계연보, 2012년

〈표 2.35〉 어촌유형별 사용식수 현황

(단위 : %)

구 분	상수도	지표수 이용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 지하수	해수정화 식수	식수 부적합으로 생수구입
전 체	46.1	42.7	7.3	3.1	0.8
도 서 형	13.5	66.9	11.8	6.2	1.7
도시근교	100.0	0.0	0.0	0.0	0.0
연륙도서	66.7	29.2	4.2	0.0	0.0
연안촌락	66.7	29.0	4.3	0.0	0.0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

2) 하수도 및 오수분뇨처리 현황

- 전국지역 하수처리 보급률과 연안 시·군·구의 하수도 보급률을 비교해보면, 2011년 기준 전국지역 대비 4.8% 낮은 86.1%의 보급률을 보이며, 상수도 보급률보다 낮은 실정임
- 어촌유형별로 생활오수의 경우 조건불리지역은 바다에 방류하는 비율이 높고 도시근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연륙도서는 마을 하수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분뇨 처리의 경우 도시근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용, 연안촌락은 다양한 처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은 분뇨차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하수도 및 오수분뇨처리 시설의 경우도 하수도 시설과 같이 어촌의 보급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도서지역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 있음

〈표 2.36〉 연도별 하수도 보급 현황

구 분		총인구(명)	하수처리인구 A+B+C(명)	물리적(1차) (A)	생물학적(2차) (B)	고도(3차) (C)	보급률 (%)
전 국		51,716,745	46,709,748	3,772	16,622,839	30,083,137	90.9
연 안 시· 군· 구	'07년	12,774,907	10,103,735	3,572	5,333,585	4,765,662	79.1
	'08년	13,208,679	10,363,515	4,443	4,543,922	6,243,397	78.5
	'09년	13,836,375	11,386,958	856	4,268,615	7,082,705	82.3
	'10년	14,738,541	12,382,035	46,927	3,532,127	7,792,078	84.0
	'11년	14,907,003	12,836,002	50	2,596,748	9,743,735	86.1

※ 자료 : 시·군·별 통계연보, 2012년

〈표 2.37〉 어촌유형별 오수분뇨별 처리방법

(단위 : %)

구 분	유 형	하수종말 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재래식	바다에 방류	기 타
생활오수	전체	26.8	34.9	11.7	27.4	2.5
	조건불리	6.2	30.3	19.1	44.9	2.2
	도시근교	69.8	25.4	3.2	0.0	1.6
	연륙도서	12.5	62.5	8.3	16.7	8.3
	연안촌락	40.9	43.0	4.3	15.1	2.2
분 뇨	전체	26.8	19.3	8.1	9.2	48.6
	조건불리	6.2	19.7	11.8	16.3	61.8
	도시근교	69.8	12.7	3.2	0.0	14.3
	연륙도서	12.5	8.3	8.3	0.0	79.2
	연안촌락	40.9	25.8	4.3	4.3	38.7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년」

3) 빈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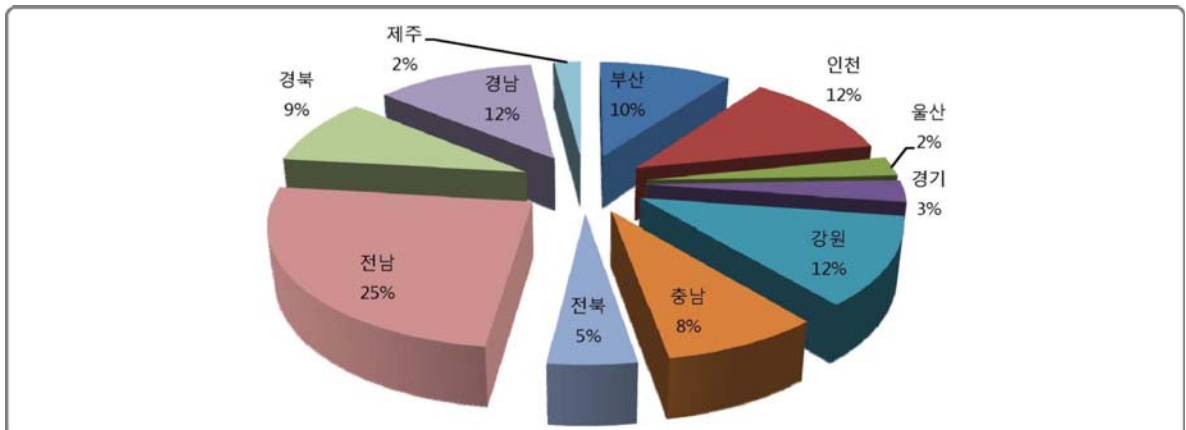
- 전국 빈집은 798,848호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연안 사군구는 101,745호(12.8%)를 차지하고 있음
 - 연안 사군구 중 전라남도 지역이 25,354호(24.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제주도 지역이 2,058호(2.0%)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지역의 경관 저해요소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 빈집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예 : 리모델링을 통한 어촌민박 운영, 마을 공동쉼터 방, 예술 공방 등)

〈표 2.38〉 전국 빈집 현황

(단위 : 호)

구 분	전국	연안 사군구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호	798,848	101,745	10,111	12,045	2,656	2,978	11,875	8,480	4,736	25,354	9,311	12,150	2,058

※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3년



〈그림 2.35〉 전국 빈집 현황

1.4.2 복지현황

1) 교육

(1) 학교현황

- 전국 학교 수는 20,090개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연안 사군구 지역은 35.0%인 7,032개로 나타남
 - 시도별 학교 수는 전라남도가 1,307개(18.6%)로 가장 많으며 울산광역시 354개(5.0%)로 가장 적은 학교 수를 보임

(2) 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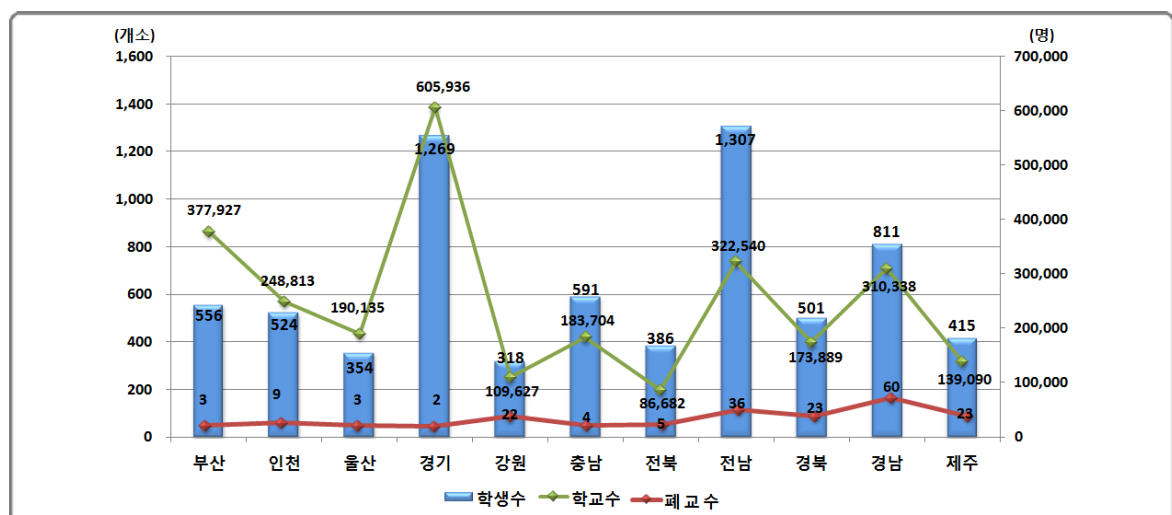
- 전국 지역 폐교 수는 1,059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연안 시·군·구 지역은 17.9%인 190개소로 나타남
 - 전남 지역이 23개소(18.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지역이 2개소(1.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폐교 활용방안 마련 필요함(예 : 어촌체험시설, 어촌리조트, 아트센터, 안내소 등)

〈표 2.39〉 시도별 학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폐 교 수
전 국	20,090	10,537,027	534,704	1,059
소 계	7,032	2,748,681	154,409	190
부 산	556	377,927	18,939	3
인 천	524	248,813	14,095	9
울 산	354	190,135	10,740	3
경 기	1,269	605,936	29,831	2
강 원	318	109,627	6,496	22
충 남	591	183,704	11,172	4
전 북	386	86,682	5,892	5
전 남	1,307	322,540	21,466	36
경 북	501	173,889	9,821	23
경 남	811	310,338	18,108	60
제 주	415	139,090	7,849	23

※ 자료 : 시·군별 통계연보, 2012년



〈그림 2.36〉 시도별 교육시설 현황

(3) 교육서비스 현황

- 입지 유형별로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은 도시근교 및 연륙도서의 경우 대부분이 살고 있는 마을을 이용하나, 도서형 어촌의 경우 타 유형의 어촌보다 외지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도서형 어촌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시설이 폐교 또는 폐원, 통학거리, 교육의 질 등의 문제로 외지유학이 타 유형별 어촌보다 높게 나타남

〈표 2.40〉 초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위치

(단위 : %)

구 분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외지 유학	이웃마을
전체	52.6	29.5	3.2	12.6	2.1
도서형	46.8	27.7	2.1	23.4	0.0
도시근교	76.5	17.6	0.0	0.0	5.9
연륙도서	83.3	16.7	0.0	0.0	0.0
연안촌락	40.0	44.0	8.0	4.0	4.0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

- 어촌 주민들의 경우 교육시설의 위치는 대부분 살고 있는 마을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입지여건 등이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지유형별 정책 마련(예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교육 질 향상이 필요함

〈표 2.41〉 교육기관·시설의 적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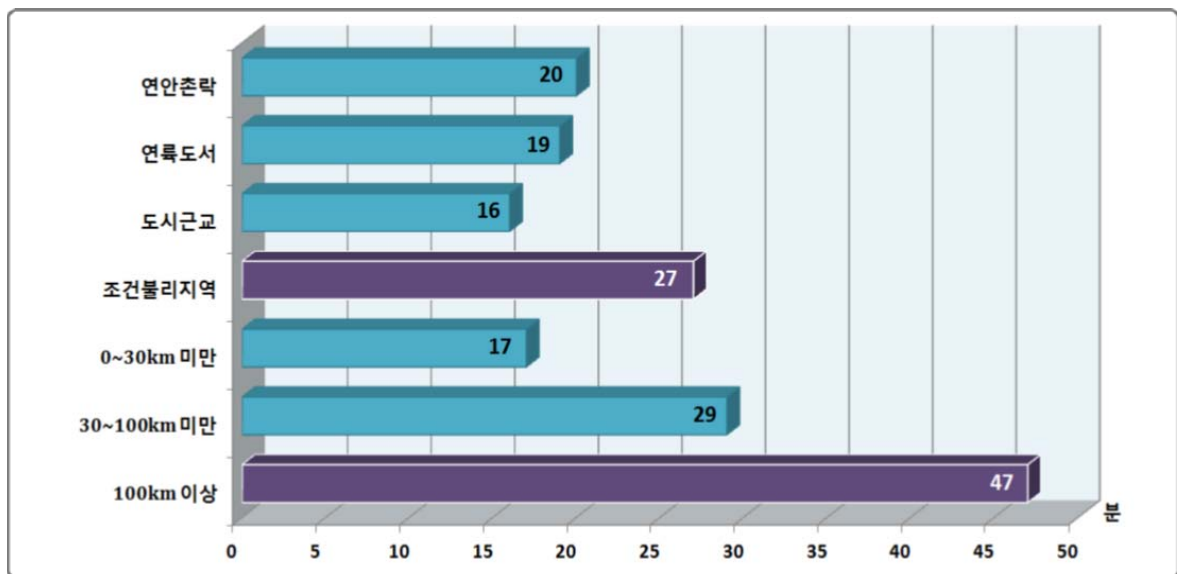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의 다른 시·군	교통서비스만 제공되면 상관없음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70.7	24.9	0.0	0.0	4.5
	도서형	73.6	19.1	0.0	0.0	7.3
	도시근교	81.0	19.0	0.0	0.0	0.0
	연륙도서	79.2	20.8	0.0	0.0	0.0
	연안촌락	55.9	40.9	0.0	0.0	3.2
초등학교	전체	69.3	25.7	0.0	0.3	4.7
	도서형	71.3	20.8	0.0	0.6	7.3
	도시근교	79.4	20.6	0.0	0.0	0.0
	연륙도서	83.3	16.7	0.0	0.0	0.0
	연안촌락	54.8	40.9	0.0	0.0	4.3
중·고교	전체	41.1	50.0	3.4	0.8	4.7
	도서형	41.6	47.2	2.2	1.7	7.3
	도시근교	52.4	46.0	1.6	0.0	0.0
	연륙도서	50.0	41.7	8.3	0.0	0.0
	연안촌락	30.1	60.2	5.4	0.0	4.6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

2) 문화¹¹⁾

-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건불리지역 어민이 소요하는 시간은 약 27분으로 다른 어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도서형 어촌의 경우 문화시설은 거의 없어 시설 이용 기회가 더욱 낮으며, 도시근교 및 연륙도서 주민들은 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문화여건 개선을 어촌의 입지유형별, 주민 필요도 반영, 문화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2.37〉 문화여가 시설까지 소요시간

〈표 2.42〉 문화 시설 이용 빈도

(단위 : %)

구 분	1주 1~2회 이상	1달 2~3회 이용	1년 4~5회 이용	1년 1~2회 이하	1년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음	관련시설 없음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0.6	1.4	1.7	5.0	8.7	37.7	53.6
도서관	1.4	1.4	1.4	3.9	8.1	47.5	44.4
영화관, 공연장	0.6	2.8	3.4	4.5	11.2	35.5	53.4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0.6	0.0	0.6	3.1	4.2	38.5	57.3
실내외 체육시설	4.5	3.4	1.4	2.2	11.5	49.4	39.1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

11) 본문: 2) 문화 3) 의료 부문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인용

3) 의료

- 전체 취약 공공서비스에서는 34.4%의 응답자가 의료서비스가 취약하게 나타남
- 어촌의 유형별 취약 공공서비스 현황을 보면 도서형 어촌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하다고 응답했으며 연안촌락과 도시근교 순으로 취약하게 나타남

〈표 2.43〉 어촌 유형별 취약 공공서비스

(단위 : %)

구 분	의료서비스	교통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전 체	34.4	19.6	15.4	9.5	5.6
도서형	52.2	19.1	11.8	2.8	1.1
도시근교	15.9	22.2	12.7	19.0	7.9
연륙도서	0.0	16.7	25.0	12.5	20.8
연안촌락	21.5	19.4	21.5	15.1	8.6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

- 도서형 어촌지역 어민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사용하는 경우 평균 93분이 소요되어 연안촌락 어민이 배로 이동할 때보다 3.7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조건불리지역의 육지와의 거리를 고려할 경우 육지와의 이격거리가 0~30km 떨어진 지역은 배로 이동시 60분이 소요되며, 30~100km 떨어진 경우는 95분, 100km 이상 떨어진 경우는 153분이 소요되어 도서형 어촌 지역 주민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이동 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44〉 의료 현황

(단위 : 명, 분)

구 분		소요시간
전 체		91
어촌유형	조건불리지역	93
	도시근교	-
	연륙도서	-
	연안촌락	25
육지와의 거리	0~30km 미만	60
	30~100km 미만	95
	100km 미만	153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년」

4) 사회복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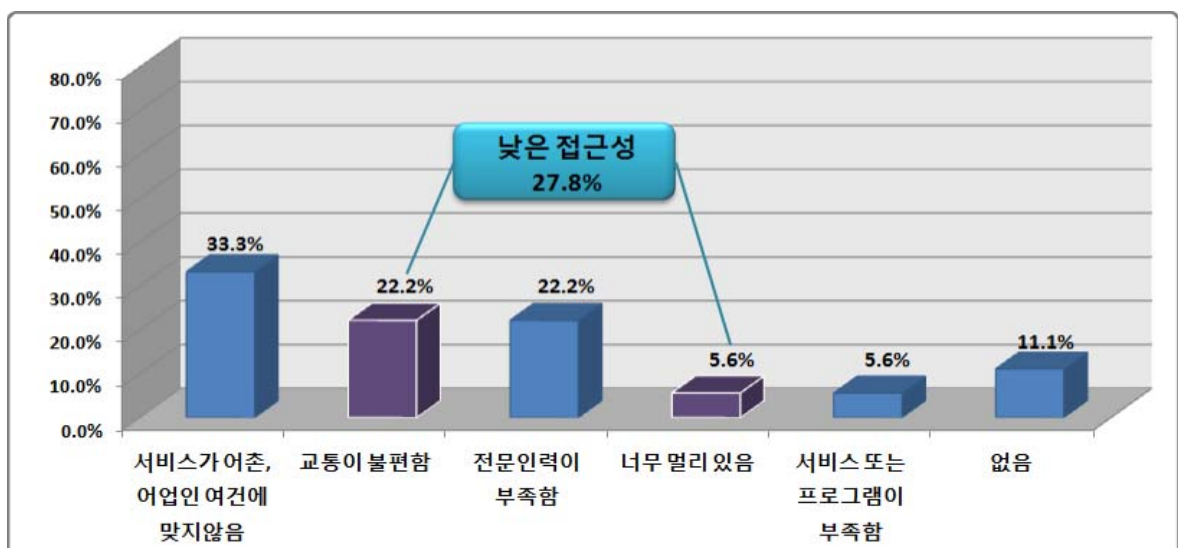
- 어촌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복지시설 이용 문제점으로는 서비스가 어촌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접근성, 전문인력 부재,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이에 어촌지역의 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어촌여건에 맞는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어촌지역의 사회복지사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어촌의 노령화로 인한 건강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개설, 레저·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5〉 복지 서비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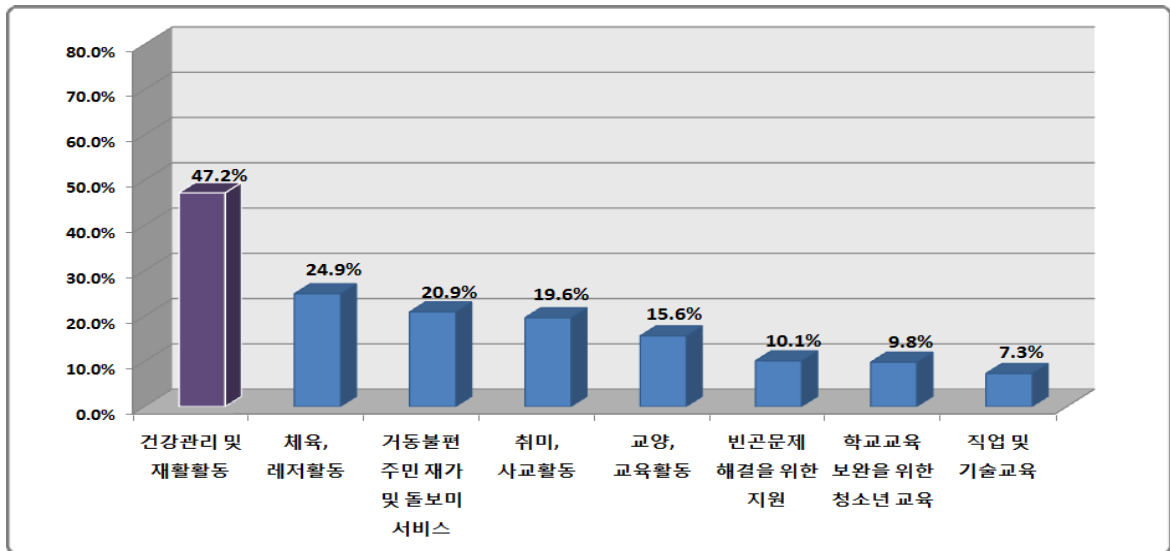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1주 1~2회 이상	1달 2~3회 이용	1년 4~5회 이용	1년 1~2회 이하	1년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음	관련시설 없음
종합복지시설	0.8	1.7	0.6	0.6	3.4	42.5	53.9
노인복지시설	0.3	0.3	0.0	0.3	0.8	48.0	51.1
아동복지시설	0.0	0.0	0.3	0.0	0.3	41.6	58.1
청소년복지시설	0.0	0.0	0.3	0.3	0.6	40.5	58.9
여성복지시설	0.3	0.3	0.3	0.0	0.8	41.3	57.8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



〈그림 2.38〉 복지시설 서비스 문제점



〈그림 2.39〉 복지시설 희망 프로그램

1.5 관광 · 홍보 · 인재육성

1.5.1 관광

1) 어촌체험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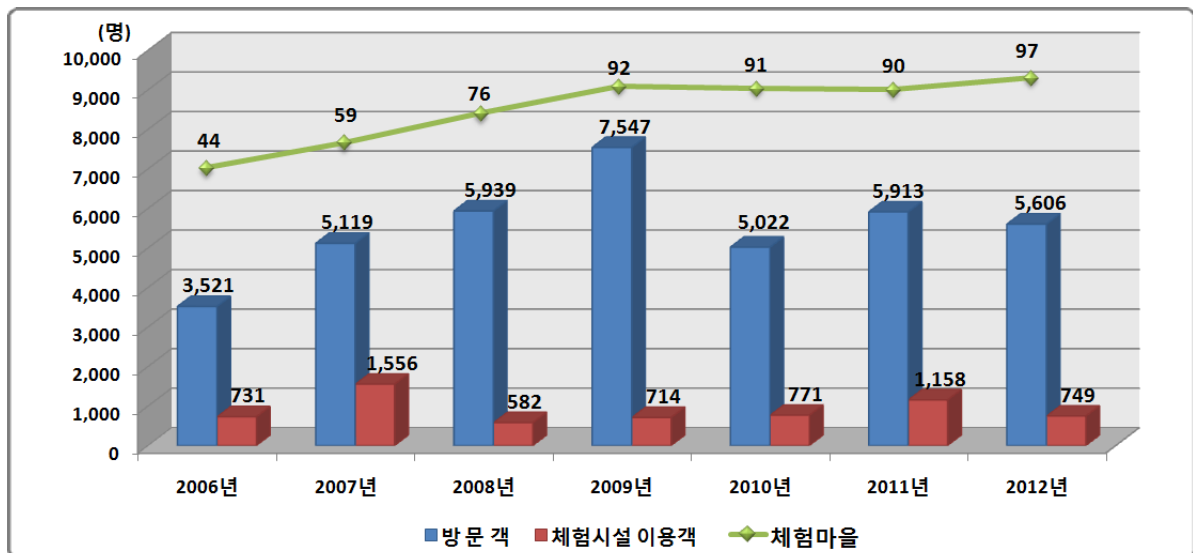
-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실적을 보면, 방문객 수가 2006년 3,521천 명에서 2012년 5,606천 명으로 59.2% 증가하였으며, 체험시설 이용객 수 또한 2.5% 증가됨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 부적합한 사업지역 선정, 체험프로그램과 운영주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체험안내센터 등 하드웨어 시설이 활용되지 않거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됨
- 사업예산 규모가 5억 원 정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결형 모델로서의 개발은 어려운 실정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운영·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운영수익금의 재투자가 체험시설에 되지 않고 있음

〈표 2.46〉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단위 : 개소, 천 명)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체험마을	44	59	76	92	91	90	97
방 문 객	3,521	5,119	5,939	7,547	5,022	5,913	5,606
체험시설 이용객	731	1,556	582	714	771	1,158	749

※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2012년



〈그림 2.40〉 체험마을 이용객수 현황

2) 관광기반시설

- 연안 시·군·구의 관광기반 시설은 총 1,376개소이며 그중 유적·사적지가 645개소로 가장 많으며, 해수욕장이 391개소, 지역 축제가 312개소, 공원·휴양림이 79개소임
- 관광객 흡입력이 높은 해수욕장은 강원지역, 축제는 전남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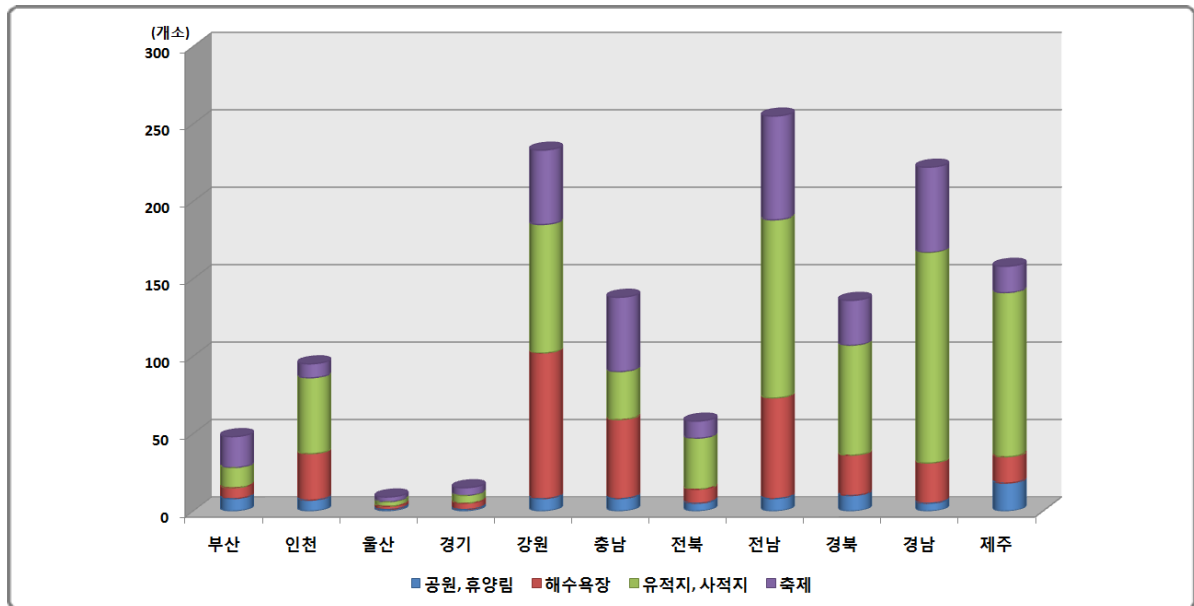
〈표 2.47〉 관광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행정구역	관광 기반시설					
	공원, 휴양림	해수욕장	유적·사적지	축제	계	비율(%)
전국	79	391	645	312	1,376	100
부산	8	7	13	20	48	3.5
인천	7	30	49	9	104	7.6
울산	1	2	3	3	9	0.7
경기	1	4	5	5	15	1.1
강원	8	94	83	48	233	16.9
충남	8	51	31	48	138	10.0
전북	5	9	33	11	58	4.2
전남	8	65	115	67	255	18.5
경북	10	26	71	29	136	9.9
경남	5	26	136	55	222	16.1
제주	18	17	106	17	158	11.5

※ 자료 : 공원, 축제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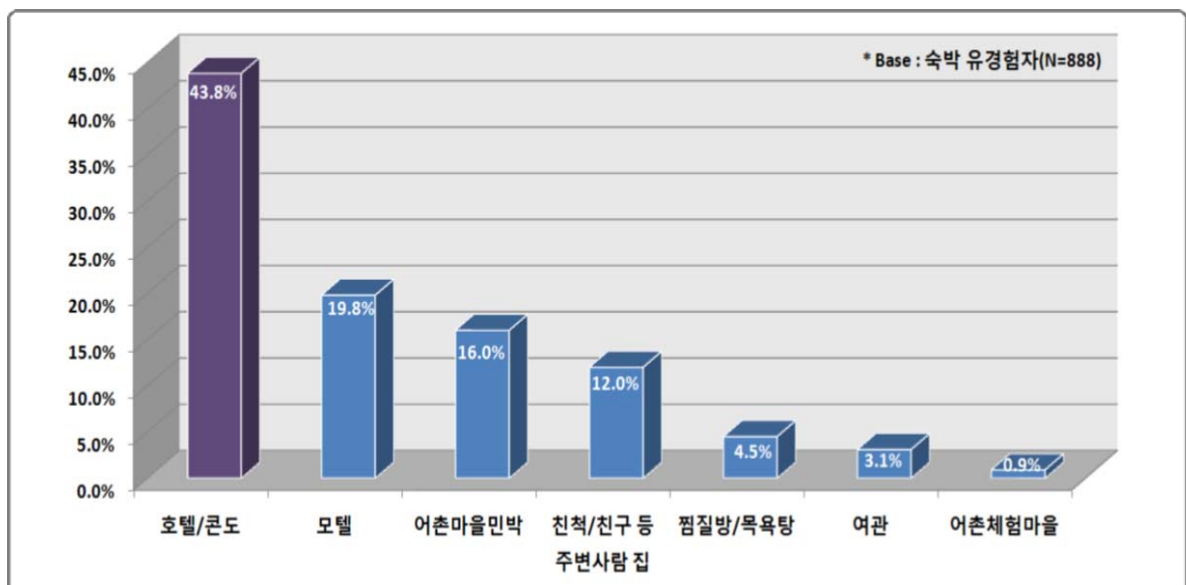
해수욕장 : 국토교통부 해수욕장 정보 (<http://korbeach.go.kr>)유적지, 사적지 :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국문화유적총람 (<http://all.nricp.go.kr>)



〈그림 2.41〉 관광기반시설 현황

3) 어촌 숙박시설 만족도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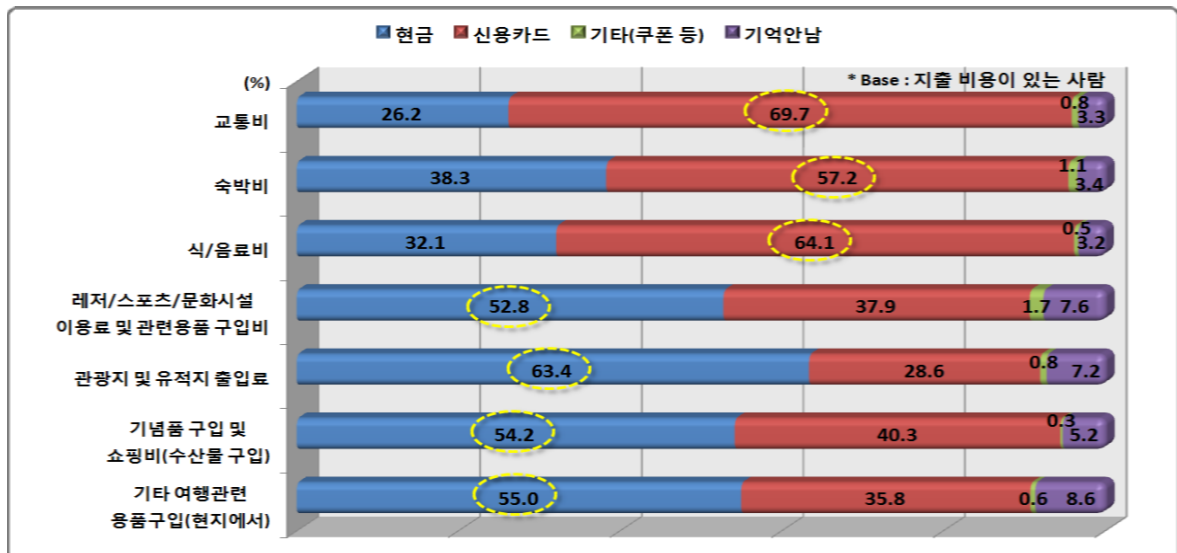
- 어촌의 숙박시설 이용현황은 호텔/콘도 이용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텔 19.8%, 어촌마을 민박 16.0%,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 집 12.0% 등으로 나타남
- 어촌지역의 입지적 특성상 체류형 관광의 경우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쾌적성, 예약시스템, 이용대금 지급 편리성(카드결제) 등의 사유로 호텔/콘도의 이용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2〉 어촌 이용 숙박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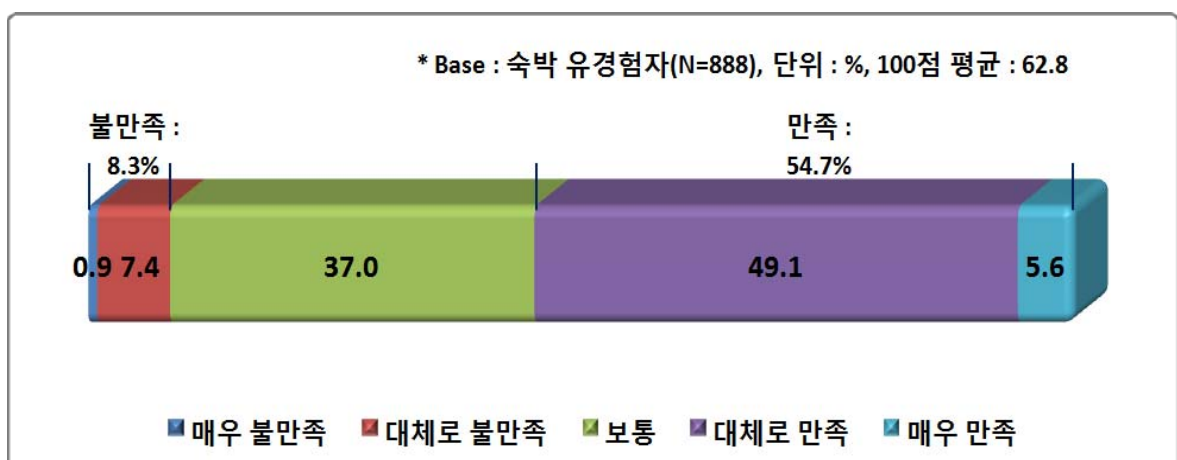
12)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어촌관광 실태분석 및 관광객 추정 조사 보고서」, 2012년

- 이용 현황은 어촌마을 민박 및 어촌체험마을 등과 같은 곳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워 이용률이 낮고, 호텔/콘도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숙박비 결제를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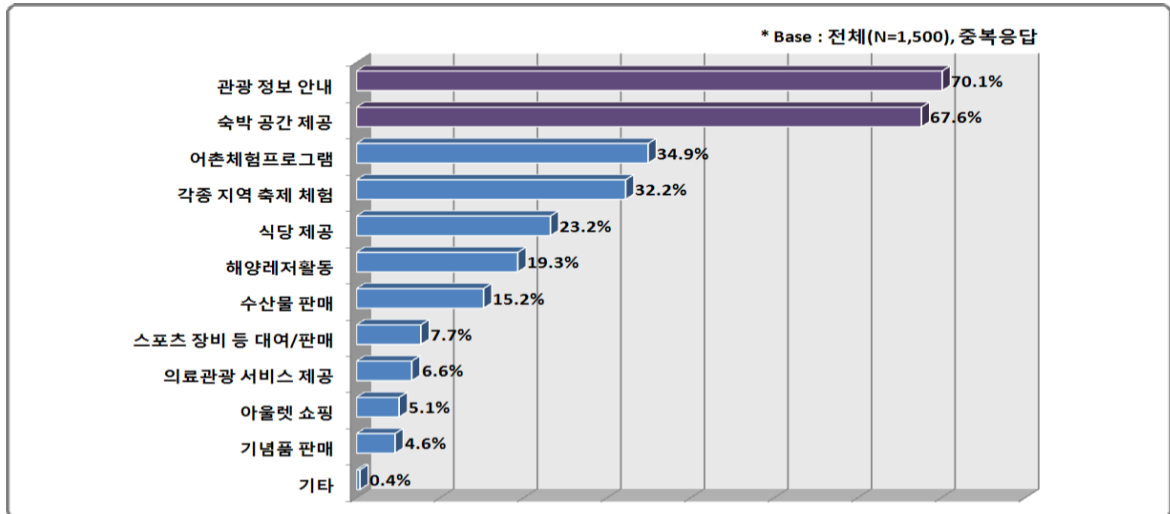
〈그림 2.43〉 어촌방문 지출 수단

- 어촌지역 숙박 시설 만족도는 만족이 54.7%, 불만족이 8.3%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호텔/콘도 같은 경우 시설 만족도가 높은 반면 모텔 및 민박 이용객들은 불만족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숙박시설의 불만족 사유로는 숙박시설의 가격, 청결, 시설 노후화, 숙박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나타남



〈그림 2.44〉 어촌 숙박시설 만족도

- 어촌관광 시 필요한 정보로는 관광정보 안내 70.1%, 숙박공간 제공이 67.6%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어촌숙박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



〈그림 2.45〉 어촌관광 희망 정보제공

4) 관광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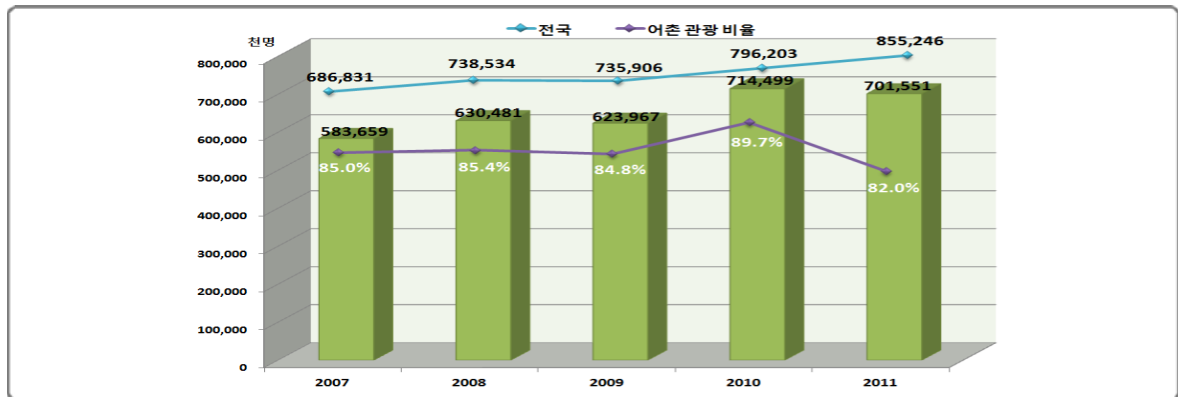
- 전국 관광객 수는 2007년 686,831천 명에서 24.5% 증가한 855,246명이며, 그중 연안 시·군·구의 관광객은 82.0%인 701,551천 명으로 대부분 연안을 관광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가 20.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부산광역시가 0.3%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표 2.48〉 연도별 관광객 방문 현황

(단위 : 천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연평균 증감율(%)
전국(A)	686,831	738,534	735,906	796,203	855,246	4.5
소계(B)	583,659	630,481	623,967	714,499	701,551	3.7
부산	48,917	51,550	53,342	54,808	49,746	0.3
인천	14,555	32,382	10,225	12,179	36,644	20.3
울산	12,913	12,534	12,358	15,270	15,888	4.2
경기	60,159	62,429	60,348	63,935	68,021	2.5
강원	83,736	90,933	83,390	91,715	86,026	0.5
충남	86,579	76,176	90,311	104,848	99,510	2.8
전북	39,055	47,457	51,909	63,357	63,501	10.2
전남	82,855	92,091	92,324	89,905	87,540	1.1
경북	78,952	85,862	87,864	95,932	104,516	5.8
경남	59,221	61,841	63,559	102,424	68,900	3.1
제주	16,713	17,219	18,330	20,119	21,259	4.9
B/A(%)	85.0	85.4	84.8	89.7	82.0	-

※ 자료 : 시·군별 내부자료, 2012년



〈그림 2.46〉 관광객 현황

1.5.2 해양레저시설 현황

1) 해중레저

- 스킨스쿠버 동호회는 2013년 기준 268개 동호회가 활동 중이며 2010년(194개)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스킨스쿠버 동호회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강원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광주, 부산, 대구지역의 활동은 미약함
- 어촌체험마을 : 현재 101개 어촌체험마을 중 스킨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14개 마을 운영 중임
 - 경기 2개소(국화, 백미리), 강원 4개소(오호, 외옹치, 장사, 장호), 경북 3개소(대진1리, 거일1리, 나곡1리), 경남 1개소(유동), 제주 4개(중문, 강정, 사계, 위미1리)

〈표 2.49〉 전국 스킨스쿠버 클럽 및 동호회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스킨스쿠버 클럽 현황				스킨스쿠버 동호인 현황			
	'10년	'11년	'12년	'13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194	254	262	268	4,533	6,890	7,470	7,740
서울	5	6	6	6	114	116	116	116
부산	1	1	1	1	91	91	91	91
대구	1	1	1	1	18	18	18	18
인천	7	14	14	14	274	1,158	1,158	1,158
광주	-	-	-	-	-	-	-	-
대전	9	13	13	13	106	206	206	206
울산	12	15	15	15	469	565	565	565
경기	30	44	47	48	740	966	1,393	1,426
강원	46	46	46	46	1,300	1,300	1,300	1,301
충북	13	14	14	14	212	225	225	225
충남	16	17	20	23	366	459	536	769
전북	15	26	27	27	178	631	632	632
전남	8	10	10	10	104	206	206	206
경북	8	15	16	17	151	345	404	406
경남	12	20	20	21	185	329	345	346
제주	11	12	12	12	225	275	275	275

※ 자료 : 국내 마리나 및 요트산업 통계지표 개발, (사)한국마리나산업협회, 2013년

2) 마리아

(1) 전국 마리아 시설 현황

- 전국 마리아 시설은 총 63개 항이 계획 및 개발·운영 중이며, 운영 중인 항은 22개소, 개발 중인 항은 13개소, 계획 중인 항은 28개소임
- 그 중 어항구역 내 마리아 시설은 26개 항이며 국가어항 19개소, 지방어항 3개소, 어촌정주어항 4개소가 시설치 또는 계획 중이며, 물건항과 지세포항은 운영·증설계획 중임
- 마리아 시설 중 계류시설현황은 해상 1,073척, 육상 563척이며, 계획된 계류시설의 완공 시 해상 3,951척, 육상 2,352척으로 총 6,303척의 계류시설이 확보됨

〈표 2.50〉 전국 마리아 시설 조성항 현황

(단위: 개 항)

구 분		운영 중	개발 중	계획 중	합 계	비 고
어항구역	국가어항	9	1	7 (9)	17 (19)	
	지방어항	2	-	1	3	
	어촌정주어항	1	3	-	4	
	소 계	12	4	8 (10)	24 (26)	
항만 및 기타연안		10	9	18	37	
합 계		22	13	26 (28)	6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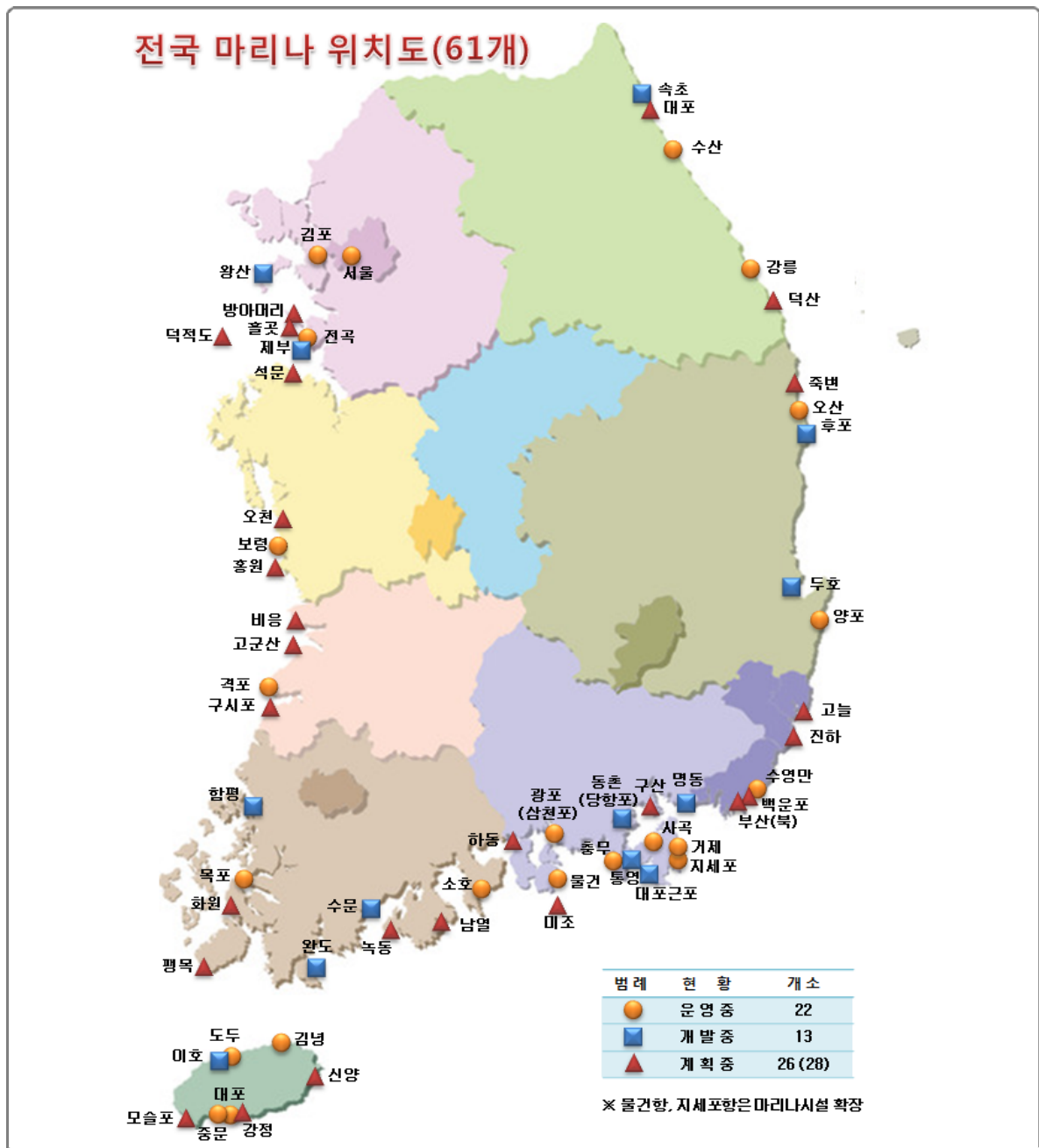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자료, 2012년
제1차(2010~2019)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2010년
제1차(2010~2019)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변경, 2012년
※ 물건항, 지세포항은 마리아 시설 운영 중이며 확장 계획이 수립

〈표 2.51〉 전국 마리아 계류시설 규모 현황

(단위: 척)

구 분		운 영 중		개 발 중		계 획 중		합 계		
		해 상	육 상	해 상	육 상	해 상	육 상	해 상	육 상	계
어항구역	국가어항	275	90	60	40	444	185	779	315	1,094
	지방어항	144	53	-	-	23	10	167	63	230
	어촌정주어항	22	20	86	110	-	-	108	130	238
	소 계	441	163	146	150	467	195	1,054	508	1,562
항만 및 기타연안		632	400	585	394	1,680	1,050	2,897	1,844	4,741
합 계		1,073	563	731	544	2,147	1,245	3,951	2,352	6,303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자료, 2012년
제1차(2010~2019)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2010년
제1차(2010~2019)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변경, 2012년



〈그림 2.47〉 전국 마리아 위치도

(2) 어항구역 내 마리아 시설 현황

- 어항 내 마리아 시설이 조성·개발·계획 중인 항은 24항이며, 운영 중인 항은 국가어항 9개 항, 지방어항 2개 항 어촌정주어항 1개 항이고, 개발 중인 항은 국가어항 1개 항, 어촌정주어항 3개 항, 계획 중인 항은 국가어항 9개 항, 지방어항 1개 항 이며, 물건항과 지세포항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차후 마리아 시설 확장 계획함
- 어항구역 내 마리아 계류시설은 운영 중인 항 604척, 개발 중인 항 296척, 계획 중인 항은 422척으로 계류시설의 완공 시 총 1,562척의 계류시설이 확보됨

〈표 2.52〉 어항 내 marina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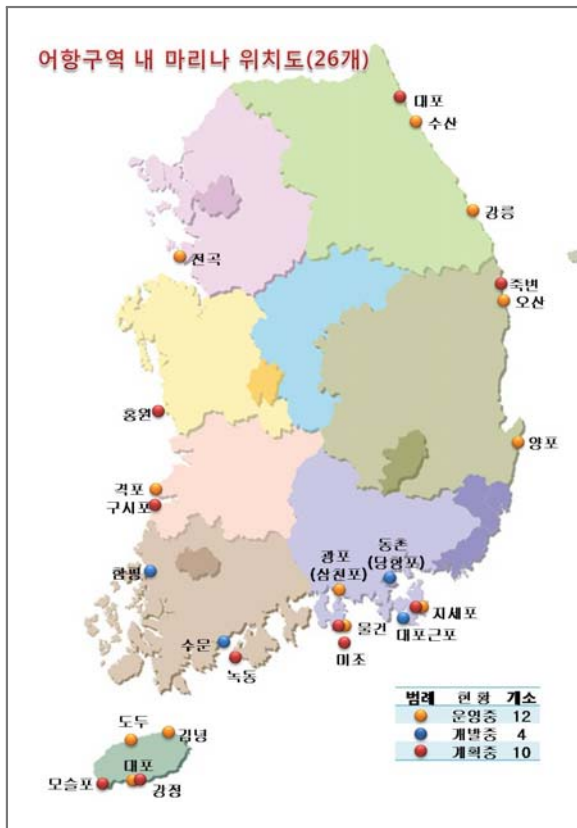
(단위: 척)

구 분		운 영 중				개 발 중				계 획 중			
		항 명	시설규모			항 명	시설규모			항 명	시설규모		
			해상	육상	계		해상	육상	계		해상	육상	계
국가 어항	강원	수산항	60	80	140	-	-	-	-	대포항	50	-	50
		강릉항	33	-	33	-	-	-	-	-	-	-	-
	경북	양포항	36	-	36	-	-	-	-	죽변항	16	20	36
		오산항	20	10	30	-	-	-	-	-	-	-	-
	경남	물건항	25	-	25	대포근포항	60	40	100	(물건항)	50	50	100
		지세포항	14	-	14	-	-	-	-	(지세포항)	170	-	170
		-	-	-	-	-	-	-	-	미조항	18	-	18
	전남	-	-	-	-	-	-	-	-	녹동항	50	50	100
	전북	격포항	37	-	37	-	-	-	-	구시포항	10	15	25
	충남	-	-	-	-	-	-	-	-	홍원항	50	50	100
	제주	김녕항	25	-	25	-	-	-	-	모슬포항	30	-	30
		도두항	25	-	25	-	-	-	-	-	-	-	-
	계	9개 항	275	90	365	1개 항	60	40	100	7개 항 (9)	444	185	629
지방 어항	경기	전곡항	139	53	192	-	-	-	-	-	-	-	-
	제주	대포항	5	-	5	-	-	-	-	강정항	23	10	33
	계	2개 항	144	53	197	-	-	-	-	1개 항	23	10	33
어촌 정주 어항	경남	삼천포항	22	20	42	당항포항	46	100	146	-	-	-	-
	전남	-	-	-	-	함평항	20	-	20	-	-	-	-
		-	-	-	-	수문항	20	10	30	-	-	-	-
	계	1개 항	22	20	42	3개 항	86	110	196	-	-	-	-
합 계	12개 항		441	163	604	4개 항	146	150	296	8개 항 (10)	1,054	508	1,562
	항수 : 24(26)개 항 계류시설 : 해상 1,054척, 육상 508척, 총 1,562척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자료, 2012

국토해양부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변경, 2010/2012년)

※ 물건항, 지세포항은 마리나 시설 운영 중이며 확장 계획이 수립



구 분	운영 중	개발 중	계획 중
강원 (3개 항)	수산항	-	대포항
	강릉항	-	-
	2개 항	-	1개 항
경북 (3개 항)	양포항	-	죽변항
	오산항	-	-
	2개 항	-	1개 항
경남 (8개 항)	물건항	대포근포항	미조항
	지세포항	당항포항	물건항
	삼천포항	-	지세포항
	3개 항	2개 항	3개 항
전남 (3개 항)	-	함평항	녹동항
	-	수문항	-
	-	2개 항	1개 항
전북 (2개 항)	격포항	-	구시포항
	1개 항	-	1개 항
충남/경기 (2개 항)	전곡항	-	홍원항
	1개 항	-	1개 항
제주 (5개 항)	김녕항	-	모슬포항
	도두항	-	강정항
	대포항	-	-
	3개 항	-	2개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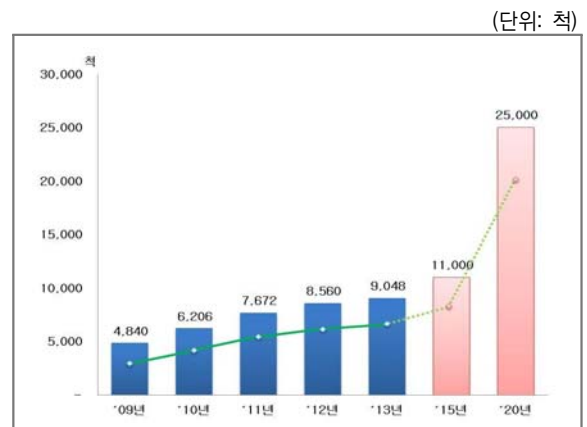
〈그림 2.48〉 어항구역 내 마리나 위치도

3) 레저보트 등록 현황

-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른 최근 5년간 레저보트 등록 현황은 2009년 4,840척에서 2013년 9,048척으로 87% 증가함
- 최근 5년간 레저보트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레저보트 수요는 2015년 11,000척, 2020년 25,000척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53〉 국내 레저보트 등록 현황

구 분	등록현황	비고
'09년	4,840	
'10년	6,206	
'11년	7,672	
'12년	8,560	
'13년	9,048	
'15년	11,000	추정
'20년	25,000	추정



※ 자료 :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경찰청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4) 낚시

- 국내 낚시인구는 2008년에 652만 명(이희찬, 2010)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5년의 573만 명(이광남 외, 2005)에 비해 18.3% 증가함¹³⁾
- 낚시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수산업과 낚시레저의 조화를 통한 어촌 소득기반 창출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1) 낚시어선 현황

- 2011년 기준 각 지자체에 등록된 낚시어선 중 국가어항 소재한 낚시어선 수는 전체 30개 어항에 638척인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 공현진항이 55척으로 가장 낚시어선이 많이 등록되어있으며, 전남 회진항이 48척, 경남 물건항이 45척, 강원 아야진항 42척 순으로 동해안 및 남해안 지역에 낚시어선이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낚시어선 등록 수가 적음
- 톤수별로는 전북 격포항이 216.7톤으로 가장 어선 규모가 컸으며, 공현진항 186톤, 다대포항 176톤, 위도항 174톤 순으로 서해안 지역의 낚시어선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54〉 국가어항 낚시어선 등록현황

(단위: 척, 톤)

항명	척수	톤수	항명	척수	톤수	항명	척수	톤수
공현진항	55	186.3	아야진항	42	163.1	회진항	48	79.1
물건항	45	130.7	미조항	41	120.4	다대포항	39	175.9
격포항	37	216.7	대진항(강원)	30	100.8	서망항	25	114.0
오천항	20	89.2	장호항	24	85.3	원전항	23	58.4
거진항	23	74.5	남애항	20	73.6	위도항	27	173.9
양포항	13	71.6	삼덕항	12	82.7	국동항	12	86.4
삼길포항	12	47.8	금진항	11	53.8	노량항	11	28.8
강릉항	18	62.0	임원항	12	32.4	오산항	6	10.4
저동항	5	21.0	육지항	10	72.5	죽변항	8	25.1
광암항	4	12.2	김녕항	3	16.2	대포항	2	13.2

※ 자료 :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13) 본문 : (2) 낚시 인구 부문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인용

(2) 낚시잔교(공원) 현황

- 최근 다기능어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낚시공원(잔교)을 설치하여 국민 레저공간으로 활용
- 낚시공원(잔교)이 설치된 국가어항은 5개 항으로 홍원항, 격포항, 국동항, 지세포항, 궁평항 등이며, 지방어항은 1개 항으로 경기도 제부항에 설치함
- 경북 울진 나곡리 낚시공원, 전남 장흥 정남진 낚시공원 등 어항구역 인근 지역에 낚시공원을 조성하여 수익을 창출함

구 분	항 명	시설연장	비 고
국가어항	궁평항	193m	
	홍원항	100m	
	격포항	100m	
	국동항	1식	
	지세포항	150m	시공중
지방어항	제부항	77m	

〈그림 2.49〉 낚시잔교 현황

1.5.3 홍보

1) 어촌 찾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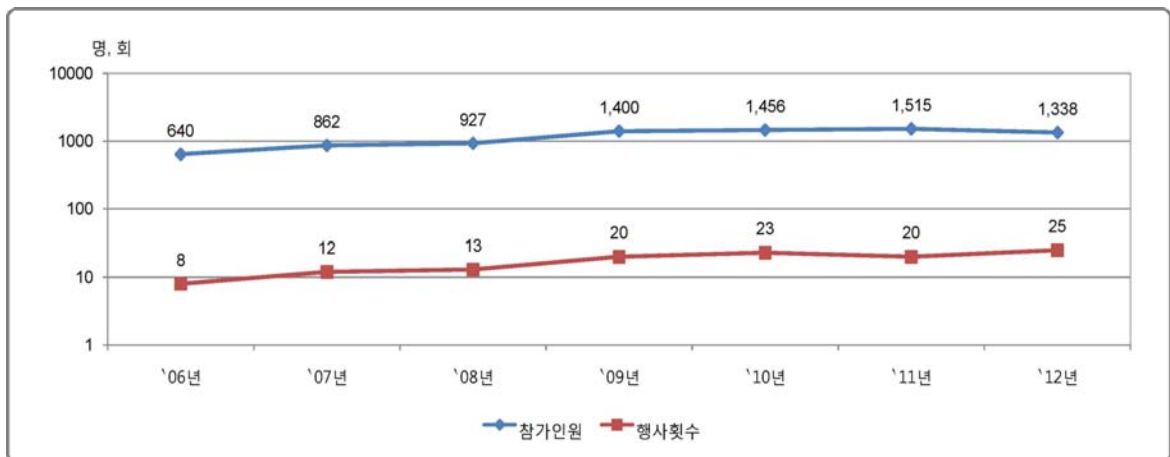
- 어촌고유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마을별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지역행사와의 연계·운영으로 전국적인 어촌관광 붐 조성을 목적으로 행사 추진 중임
- 전국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2012년까지 총 121회 개최 8,138명이 참가함
- 도시민이 지정된 어촌체험마을에 한해 방문한 경우 1인당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한정된 정부재원(1억 원/년)으로 연간 마을당 2회 지원, 총 12회로 어촌찾아가기 행사로 인한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어촌찾아가기 활성화를 통한 재능기부 및 도어교류 확대 필요함

〈표 2.55〉 어촌 찾아가기 현황

(단위 : 명, 회)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참가인원	8,138	640	862	927	1,400	1,456	1,515	1,338
행사횟수	121	8	12	13	20	23	20	25

※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2013년



〈그림 2.50〉 어촌찾아가기 현황

2) 바다여행 사이트

- 2012년 현재 총 회원 수는 55,161명으로 2006년도 6,212명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바다관광 사이트의 누적 이용자 수도 1,276,673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함

〈표 2.56〉 바다관광 사이트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신규 회원 수	2,303	2,358	4,061	5,011	5,703	11,935	8,045
총 회원 수	6,212	8,570	12,631	17,642	34,950	47,116	55,161
총 이용자	416,488	432,075	905,546	966,325	1,042,245	1,408,236	1,276,673

※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2013년

※ 2012년에 공통된 사이트 페이지를 13,671개 → 약 2,500개로 줄여 페이지뷰의 절대수치는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실제 연간이용자 수는 증가하였음

1.5.4 인재육성

1) 사무장 교육

- 지역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기초회계교육,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원 발굴 및 운영, 사무관리, 홈페이지 운영, 응급조치, 서비스 교육 및 해설 기법, 바다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고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함
- 매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70명 내외 교육 진행하고 있음

2) 바다해설사 교육

- 어촌 고유의 생태·자연·문화자원 등을 안내하는 해설인력을 양성하여 어촌관광 만족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일자리 창출함을 목적으로 함
- 어촌관광 해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어촌과 관련된 전문지식(자연과학·인문사회)과 관광마인드를 동시에 함양하는 내실 있는 교육 시행 중에 있음

〈표 2.57〉 바다해설사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65	-	37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3년

※ 주 : 2011년 사업 중단

3) 수산업 경영인 육성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해 유능한 미래수산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함
- 매년 700명 수준의 후계 수산업 경영인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음

〈표 2.58〉 수산업 경영인 양성 현황

(단위 :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504	985	864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3년

4) 수산전통식품 명인 지원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음

- 현재 51명이 지정되어 활동 중이며 수산부문에는 2명만 지정되어 수산전통식품 판매증진을 위해 수산분야 명인 발굴이 필요함

〈표 2.59〉 명인 지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지정현황
주류부문	18	송화백일주, 금산인삼주, 안동소주(2), 문배주, 전주이강주, 옥로주, 구기자주, 계명주, 가야곡왕주, 김천과하주, 한산소곡주, 추성주, 옥선주, 송순주, 계룡백일주, 감홍로주, 죽령고
식품부문	24	매실농축액, 엿, 차류(6), 한과류(4), 전통부각, 배추김치, 속황장, 조청, 진장, 어육장, 순창고추장, 전주비빔밥, 동국장, 떡, 감식초, 대맥장, 홍삼
수산부문	2	어란, 옥돔
합 계	5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3년

1.6 시사점

1.6.1 어촌의 분포 및 특징

- 어촌계 대부분이 연안촌락형 및 취락지구(도서형) 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도별 입지 유형의 차이로 획일적 정책지원이 아닌 입지 여건을 반영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조건불리형의 경우 물류비, 유류비 등 추가 지출에 의한 비(非)조건불리지역 대비 소득격차가 발생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1.6.2 어촌사회

- 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 및 과소화 지속 등으로 어촌 정주환경 저하 및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규 인력 유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어업인구 감소 등 어촌 공동화 심화로 저하된 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어촌 진입장벽 완화 대책이 필요함
 - 공동자원을 이용하는 어촌공동체의 배타적인 특성과 일자리 부족으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는 것에 한계를 보임
 - 신규 인력 진입을 위한 귀어·귀촌 홍보·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어촌 소요인력 Matching System 구축 마련이 필요

1.6.3 어촌경제

- 어가소득 감소, 지속적인 어가지출·어가부채 증가로 어촌 경영여건 악화의 악순환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소득구조 개선 대책이 필요함
 -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어업외소득 발굴이 필요하며 지역적 특색(특산물 등)을 반영한 어촌의 신사업 발굴이 필요함
 - 어업경영비 증가로 어가의 실질 소득 및 수산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수산업 관련 일자리 수 감소, 수산계 고교생의 비수산계 진출 증가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급여·복지 등 근로여건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어촌지역의 인력 유입이 필요함

1.6.4 정주환경·복지

- 어촌의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어촌주민들은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 어촌 공동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빈집 및 폐교 등은 지역 슬럼화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촌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복지서비스 향상 대책 마련 및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가 필요함
 -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ICT 기술을 결합한 복지증진 정책이 필요함
 - 부처별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에 맞춰 어촌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1.6.5 관광·홍보·인재육성

-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가로 인하여 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어업외소득 증대를 위해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 분야 사업의 지원 및 정책 마련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가 필요함
- 반면 현재의 어촌관광이 기반시설 설치 위주, 갯벌체험 등 자원고갈형 체험관광에 편중되어 다양성과 지속성이 부족함
 - 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영컨설팅 지원 등 소프트웨어(SW)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체험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원관리를 병행하여야 하며, 스킨 스쿠버·요트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함
- 전문인력양성 확대, 체계적인 홍보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어업외소득 증대를 위한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컨텐츠 개발, 교육 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어항이 휴양·레저 공간으로서 잠재력이 증가됨에 따라 수산지원 기능 외에 휴양·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중심 역할 수행이 필요함

2 어항 부문

2.1 어항의 분포 및 특징

2.1.1 어항의 종류 및 현황

1) 어항의 종류

- 어항¹⁴⁾은 크게「어촌·어항법」제2조 제3항에 의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됨

〈표 2.60〉 어항의 종류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정 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사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개발주체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청	광역시장, 시장군수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원조건	국비 100%	국비80%, 지방비20%	국비80%, 지방비20%	국비80%, 지방비20%
항 수	109개 항	285개 항	595개 항	지정항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13년

2) 어항 지정현황

- 법정어항은 989개소(2012년)가 지정되어 있으며, 항종별로는 국가어항 109개 항, 지방어항 285개 항, 어촌정주어항 595개 항이며, 마을공동어항은 0개 항임

14)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어촌·어항법」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어촌·어항법」제2조(정의)제3항)

- 마을공동어항은 2012년 「어촌·어항법」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된 법정항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어항은 없으나 비법정항인 소규모항포구의 마을공동어항 지정으로 법정어항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61〉 항종별·연도별 어항지정 현황

(단위 : 개 항)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국가어항	104	110	110	110	109	109
지방어항	289	284	284	285	285	285
어촌정주어항	579	575	574	576	576	595
계	2,306	2,293	2,290	2,287	2,286	2,298

자료 : 해양수산부, 2013년

3) 소규모항포구 현황

- 법정항 이외 소규모항포구는 1,309개소(2012년)가 전국 연안에 분포되어 있음

〈표 2.62〉 연도별 소규모항포구 현황

(단위 : 개 항)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소규모항포구	1,334	1,324	1,322	1,316	1,316	1,309

자료 : 해양수산부, 2013년

2.1.2 어항의 분포 및 특징

1) 지역별 분포 현황

(1) 해역별 분포 현황

- 해역별 어항 분포는 전체 어항 2,298개(소규모항포구 포함) 중 동해안이 235개소로 28.4%를 차지하며, 서해안이 1,206개소로 52.5%, 남해안이 857개소로 37.3%를 차지하고 있음
- 서해안에 전국 어항의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해역별 특성상 도서의 수가 많아 규모가 작은 소규모항포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 해역별 법정 어항 분포는 동해안이 123개소로 12.4%, 서해안이 205개소로 20.7%, 남해안 661개소로 66.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어항 분포와는 약간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남해안은 어촌정주어항의 지정 수가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2) 시·도별 분포 현황

- 시·도별 소규모항포구를 포함한 어항 분포는 전라남도가 1,099개로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가 567개로 24.7%를 차지, 전체의 72.5%로 대부분 어항이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 소재(72.5%)하고 있음
- 법정어항의 시·도별 분포는 경상남도가 422개로 42.7%, 전라남도가 206개로 20.8%로 전국 법정어항의 63.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어촌정주어항 지정현황에서 경상남도 지역이 342개소, 전라남도 지역이 84개소로 경상남도 지역이 약 4배 정도 많이 지정되어 있음
- 항종별 분포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전라남도에서 각각 28.4%, 31.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나, 어촌정주어항은 경상남도에서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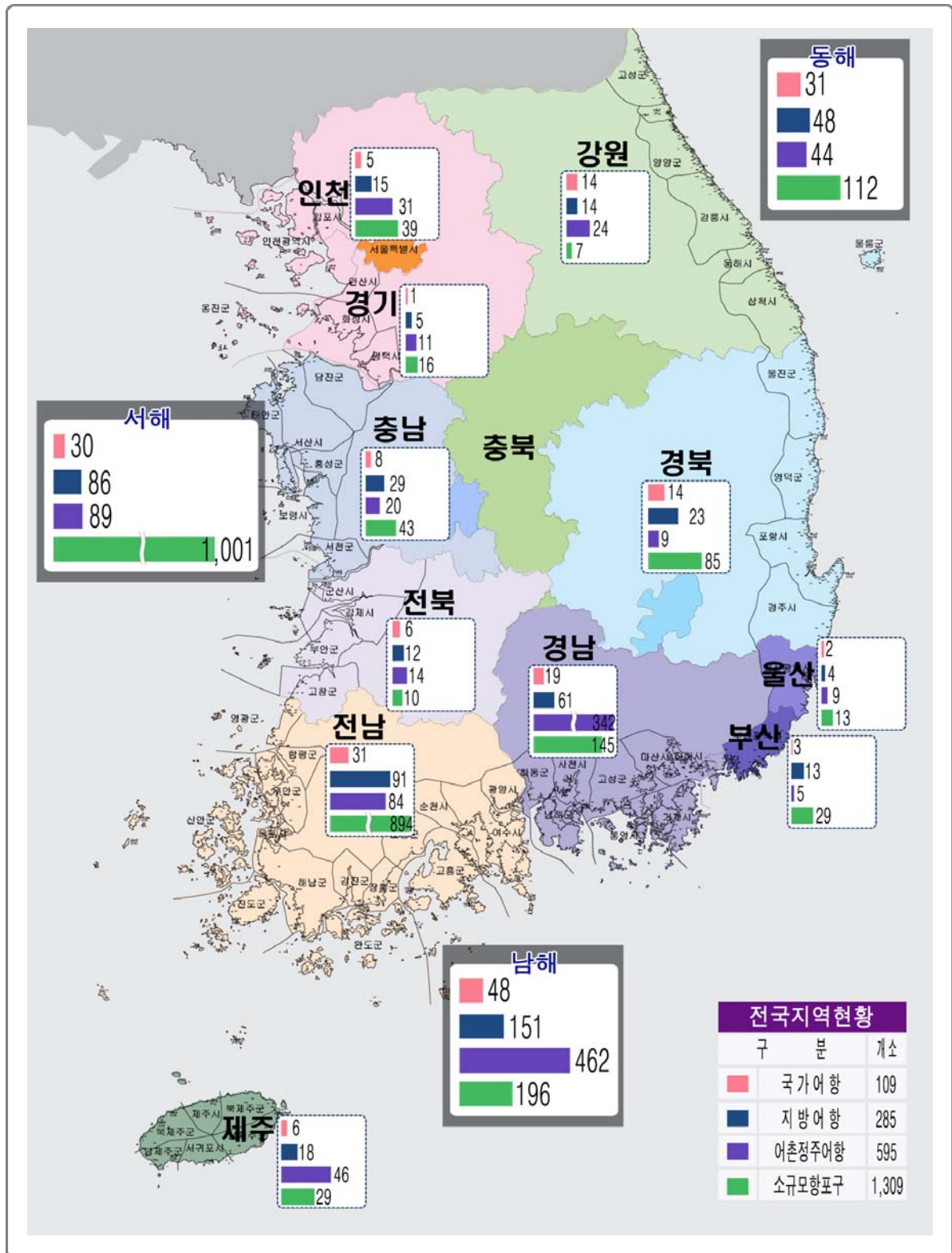
〈표 2.63〉 시·도별 항종별 분포현황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비 고
부산광역시	3	13	5	29	
인천광역시	5	15	31	39	
울산광역시	2	4	9	13	
경 기 도	1	5	11	16	
강 원 도	14	14	24	7	
충청남도	8	29	20	43	
전라북도	6	12	14	10	
전라남도	31	91	84	893	
경상북도	14	23	9	85	
경상남도	19	61	342	145	
제 주 도	6	18	46	29	
계	109	285	595	1,309	

2) 지역별 분포에 따른 특징

- 항종별, 해역별, 시·도별 어항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어항은 서·남해안,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남해안 지역이 아니라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길고 도서가 많으며, 어업인구 및 어선 세력 등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두 지역에 전국 어항의 절반 이상의 어항이 소재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어항으로 인해 어항 개발에 따른 완공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많은 수의 어항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 어선세력 등 수산 세력보다 어항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1〉 어항의 항종별·지역별(해역별) 분포 현황

2.2 어항 지정

2.2.1 어항 지정기준의 변천

- 우리나라의 어항은 일제 강점기에 현대적 어항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자연적 지형조건을 이용한 포구로 존재하였음
 - 어항은 수산물의 집산, 운송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30년대 정어리, 명태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2개 포구의 현대적인 어항으로 개발하였음
- 1969년 5월 19일 「어항법」이 제정·공포되며 체계적으로 어항의 지정 및 개발을 시작하였음
 - 1971년 최초로 1종 및 3종 어항 62개 항을 지정하였으며, 그중 저동항, 소흑산도항 및 서거차항 등 3개 항을 수산업 전진기지로써 우선 개발
 - 어항 지정기준은 1976년 최초 마련되었으며, 이 후 지역여건, 수산여건 등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현재까지 8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음
- 2001년 어항법 개정에 따른 항종 명칭이 변경되며 기존 1, 3종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2종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항종 명칭이 변경되었음

〈표 2.64〉 어항지정기준 변천

구 분		기 준	변경내용
최초 지정	1971.12.21 고시 제44호	-	연근해어선 이용편의를 위한 제1종37개, 긴급 대피어항 25개(총 62개 항) 최초 지정
지정 기준 마련	1976.12. 1 수산청 예규 제67호	◦ 지정기준	제1종 : 동일한 행정구역 내 제1종 어항이 없을 것 제3종 : 항간거리 30km 이상
		◦ 특례기준	제1종 : 어획량 1,000톤 이상, 지방어선 80척 이상
1차 개정	1985. 7.16 수산청 예규 제110호	◦ 지정기준	제1종, 제3종 : 변경 없음
		◦ 특례기준	제1종 : 변경 없음 제3종 : 외래어선 1,000척 이상 이용 예상
2차 개정	1989.10.19 수산청 예규 제126호	◦ 지정기준	제1종 : 동일 행정구역 내 제1종 어항이 2개소 이내이거나 항간 거리가 10 km 이상 제3종 : 항간 거리가 20 km 이상
		◦ 특례기준	제1종, 제3종 : 변경 없음
3차 개정	1994. 8.19 농림수산부령 제1152호	◦ 지정기준	제1종 : 10km 이내 제1,3종 어항이 없고, 5km 이내 제2종 어항이 없으며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곳 제2종 : 항간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곳 제3종 : 10km 이내 제1,3종 어항이 없고 어선 대피항이 필요한 곳

〈표 2.65〉 어항지정기준 변천(계속)

구 분		기준	변경내용
4차 개정	1994.10.19 수산청훈령 제612호	어항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정기준 세부사항 규정	
		◦ 지정기준	제1종 : 어획량 500톤 이상, 지방어선 60척 이상, 총톤수 200톤 이상, 외래어선 100척 이상 이용이 예상되는 항 제2종 : 지방어선 20척 이상, 총톤수 50톤 이상 제3종 : 외래어선 1,000척 이상 이용 예상
		◦ 특례기준	제1종 : 국가의 주요사업 시행으로 대체어항 개발 필요 시 수산자원의 연구·보호 관리를 위해 어항 개발 필요 시 어항, 어장, 어촌, 해양관광 등을 연계한 어촌 정주생활권 조성 시 제3종 : 도서지역 면 단위 행정구역 내 제3종 어항이 없고 연안 어선의 안전 도모를 위해 어항 개발 필요 시
5차 개정	1995.11.10 수산청훈령 제644호	◦ 지정기준	변경 없음
		◦ 특례기준	연안항 중 어선의 이용이 많아 어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제하는 항은 제1·3종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음
6차 개정	1998. 8.18 해양수산부령 제62호	◦ 지정기준	제1종 : 현지어선 60척 이상, 총톤수 200톤 이상, 외래어선 연간 100척 이상 이용 예상 제2종 : 현지어선 20척 이상, 총톤수 50톤 이상 제3종 : 현지어선 20척 이상, 대피 외래어선 20척 이상 예상
		◦ 특례기준	상시 이용어선 20척 이상일 때, 다음 항·포구 어항으로 지정 가능 어업근거지,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 또는 생활근거지가 형성된 경우 국가의 주요사업 시행으로 대체어항 개발이 필요하거나 수산자원의 연구·보호관리를 위해 어항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리청이 아닌 자가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7차 개정	2001. 9.18 해양수산부령 제204호	◦ 지정기준	제1종 : 현지어선 60척 이상, 총톤수 200톤 이상, 외래어선 연간 100척 이상 이용 예상 (도서항)대피항 기능, 평상시 보급항 및 어장 개발·관리 지원 현지어선 20척 이상, 대피 외래어선 20척 이상 예상 제2종 : 현지어선 20척 이상, 총톤수 50톤 이상 제3종 : 현지어선 20척 이상, 대피 외래어선 20척 이상 예상
		◦ 특례기준	변경 없음

- 2005년 어촌·어항법 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8차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법정어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 지정기준은 해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지어선의 총 톤수를 동·서·남·해안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도서소재 어항의 경우 이용 실태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지어항 지정 기준의 50%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2.66〉 현행 어항지정기준 (8차 개정)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현지어선	척수	70척	30척
	총톤수	450톤 이상(동해), 280톤 이상(서해), 360톤 이상(남해)	90톤 이상(동해), 70톤 이상(서해), 80톤 이상(남해)
외래어선이용(년간)		100척 이상	-
위판고		연간 200톤 이상 (어선이용어업)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현황		여객선 및 유·도선의 운항 횟수가 일일 4회 이상 왕복	여객선 및 유·도선의 운항 횟수가 일일 2회 이상 왕복
구 분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지정기준		현지어선의 척수가 20척 이상인 항·포구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10척)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

주 : 1) 도서항의 경우 기준항목의 50% 이상 충족

2) 국가어항은 지정기준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지방어항은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척수 및 총톤수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함

2.2.2 현행 지정기준의 문제점

1) 현 국가어항 지정기준 검토

- 현 국가어항 지정기준은 현지 어선척수, 현지 어선톤수, 외래어선, 위판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실적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 최근 수산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어항 이용실태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이용 실태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외래어선(100척)기준에 미달된 항은 79개 항으로 72.5%로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음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기준(왕복 4회)에 미달되는 항은 76개 항임
 - 위판고(연간 200톤 이상)기준에 미달되는 항으로는 62개 항으로 조사됨
-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외래어선 및 위판고로 나타남
 - 이는 기후변화로 어항 변화 등 수산여건 변화와 어선 동력 고속화에 따른 외래어선의 어항 이용 패턴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위판고 실적을 살펴보면 국동항, 다대포항, 방어진항과 같이 배후 지역에 도심지나 관광지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항이 자연적으로 거점화됨을 알 수 있음

- 또한 서남해안 어항의 지정기준 항목에 대한 부족 항 비율이 외래어선 수, 위판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순으로 나타나며, 동해안은 대부분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실적이 없음
- 현 지정기준은 해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67〉 국가어항 지정기준 항목별 미달 항

(단위 : 개 항)

구 분	국가어항 지정기준항목					국가어항 지정기준 미달 항
	현지어선 척수	현지어선 톤수	외래어선 수	위판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전 국	14	30	79	62	76	45
서해안	3	4	24	21	17	7
남해안	4	9	34	28	28	20
동해안	7	17	21	13	31	18

2) 문제점

- 국가어항 지정기준 항목별 검토 결과, 수산업 여건변화, 어선의 동력화 및 통신기술 발달 등 어항 이용 및 개발여건 변화 등의 반영이 미흡함
 - 육지와 도서 국가어항에 대한 이용패턴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 적용이 필요함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실적이 없는 동해안 어항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므로 해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정기준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어장 위치 변화, 외래어선 이용 및 위판이 일부 어항에 집중되는 거점화 현상에 따라 위판고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어선 적당 평균 위판고, 비계통 출하 수산물 생산량 추정 등
- 주 5일제 정착 등 어항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어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수산업 위주의 항목에서 어항 이용인구, 교통, 물류, 문화, 관광 등 인문·사회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용 어선만 고려 시,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국가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범위는 주로 한 개의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용범위가 실제로는 지역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어항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음
 - 어항 이용자가 국민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연간 이용자 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3 어항 개발

2.3.1 개발사업의 종류

- 어항개발사업은「어촌·어항법」 제2조제6항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어항기본사업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 해양관광 지원을 위해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2.3.2 어항 기본사업

1) 항종별 개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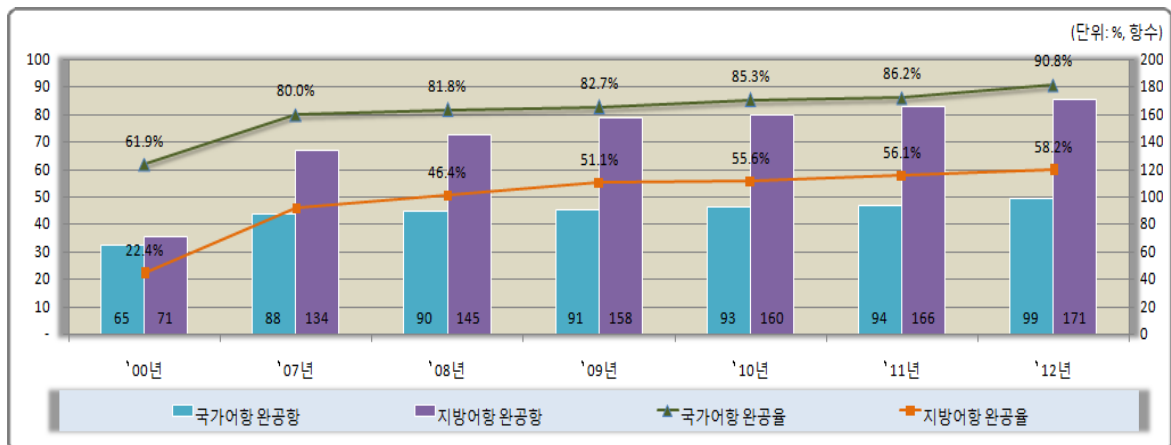
- 국가어항의 완공률은 91%로 높은 반면, 지방어항의 완공률은 60%, 어촌정주어항의 완공률은 25%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는 국비80%와 지방비20%로 개발되는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지방 재정자립도 및 포괄보조사업제도에 따른 예산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검토됨
- 이 때문에 특히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한 인프라의 조기 확보가 어려우며, 수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어항 개발의 탄력적인 대응이 미흡함

(1) 국가어항

- 2012년 말 기준으로 109개 국가어항 중 99개 어항이 완공되었으며(완공률 90.8%), 현재 개발 중인 어항은 4개 항임
 - 2008년 신규 지정된 6개 항 중 궁평항, 노량항, 남포항 등 3개소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천성항, 장고항, 이목항 등 3개소는 2014년 착수 예정임

(2) 지방어항

-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어항을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개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1994년부터 농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개발을 추진 중임
 - 2012년 말 기준 171개의 지방어항이 완공되었으며(완공률 60%), 현재 114개 항에 대한 어항 기본사업을 추진 중임



〈그림 2.52〉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완공 현황

(3) 어촌정주어항

- 2012년 말 기준으로 595개 항 중 148개의 어항이 완공되어 25%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미완공된 항 중 개발계획이 수립된 어항은 305개 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어항도 142개 항에 달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4) 소규모항포구

- 2012년 말 기준으로 464개 항의 시설이 완료되어 35.4%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음

2) 투자현황

(1) 국가어항

- 국가어항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투자계획 3조 8,422억 원 중 2012년까지 3조 627억 원(79.7%)이 투자되었으며, 7,795억 원의 잔여사업비가 남아 있음
- 전체적인 시·도별 투자현황을 보면 울산과 전북이 90% 이상의 가장 높은 투자율을 보였으며, 충청남도는 68.8%로 가장 낮은 투자율을 보임
- 경기도는 균형항의 신규 국가어항 지정(2008.12)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중으로 투자실적은 없음
- 투자금액은 31개의 어항이 있는 전라남도가 9,34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2개 항이 있는 울산이 495억 원으로 가장 적은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잔여 사업비는 전라남도가 2,158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남았으며, 울산은 11억 원으로 투자가 거의 완료된 상태임
- 지역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항마다 평균 사업비가 512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경기도는 투자실적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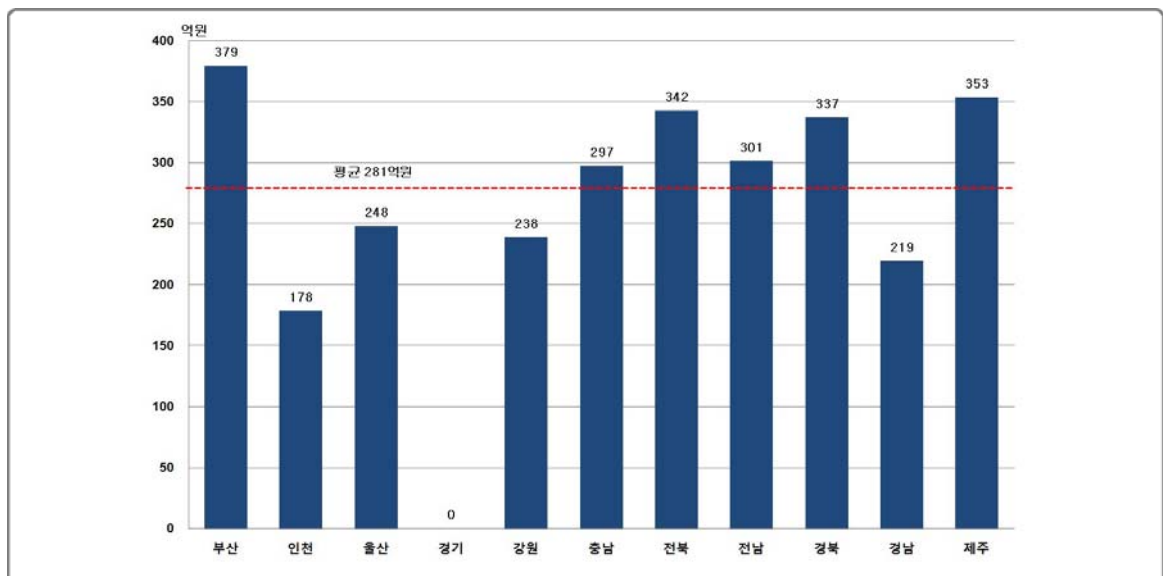
- 경기도를 제외하면 국가어항이 5개 항인 인천이 178억 원으로 가장 적음
- 전체 109개 항의 항별 평균 투자금액은 281억 원임

〈표 2.68〉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항수	총 투자계획	기 투자액 ('12년까지)	잔여 사업비	투자율	비고
계	109	3,842,291	3,062,767	779,524	79.7%	
부산	3	153,601	113,714	39,887	74.0%	
인천	5	104,756	89,211	15,545	85.2%	
울산	2	50,651	49,505	1,146	97.7%	
경기	1	11,054	-	11,054	0.0%	
강원	14	391,459	333,615	57,844	85.2%	
충남	8	345,279	237,589	107,690	68.8%	
전북	6	221,161	205,368	15,793	92.9%	
전남	31	1,149,779	933,984	215,795	81.2%	
경북	14	628,358	471,596	156,762	75.1%	
경남	19	546,519	416,174	130,345	76.1%	
제주	6	239,674	212,011	27,663	88.5%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기초조사, 2012년」



〈그림 2.53〉 시·도별 국가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

(2) 지방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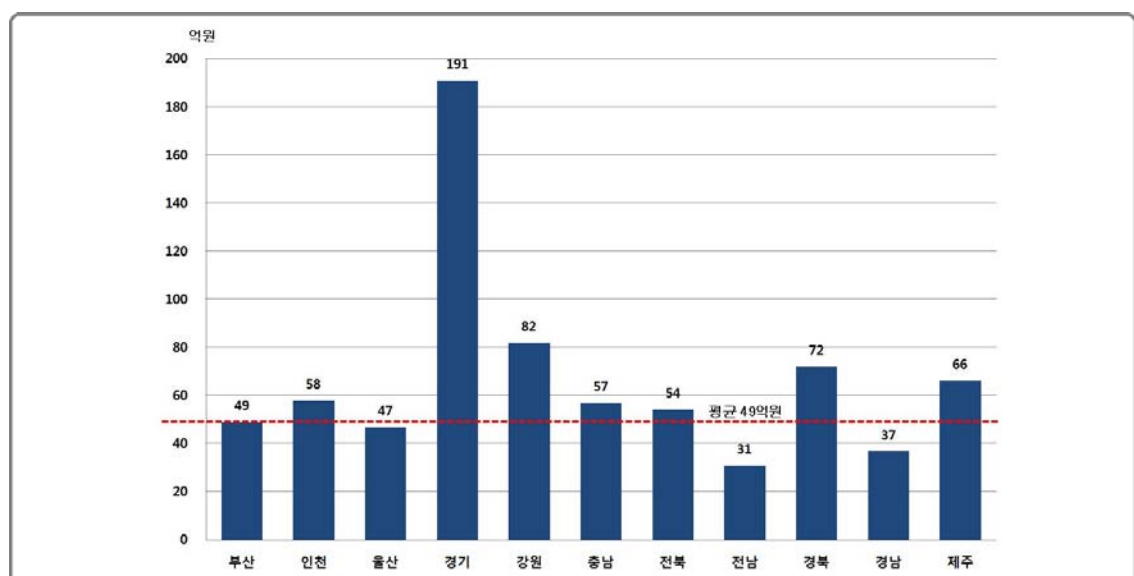
- 지방어항에 대한 총투자예정 금액은 2조 2,36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 말 기준 1조 3,983억 원이 투자되어 62.5%의 투자율을 보임
- 시·도별 투자 실적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80% 이상 높은 투자율을 보였으며, 제주도는 44.6%로 가장 낮은 투자율을 보임

〈표 2.69〉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항수	총 투자계획	기 투자액 ('12년까지)	잔여 사업비	투자율	비고
합계	285	2,236,320	1,398,300	836,085	62.5%	
부산	13	75,616	63,572	12,044	84.1%	
인천	15	151,632	86,832	64,800	57.3%	
울산	4	18,644	18,644	-	100.0%	
경기	5	123,192	95,492	27,700	77.5%	
강원	14	163,505	114,520	48,985	70.0%	
충남	29	241,418	165,164	76,254	68.4%	
전북	12	127,125	64,978	62,147	51.1%	
전남	91	582,578	280,464	302,114	48.1%	
경북	23	206,000	165,670	40,330	80.4%	
경남	61	279,218	223,823	53,460	80.2%	
제주	18	267,392	119,141	148,251	44.6%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기초조사, 2012년」



〈그림 2.54〉 시·도별 지방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

- 투자금액은 91개의 어항이 있는 전라남도가 2,80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4개 항이 있는 울산광역시 186억 원으로 가장 적은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잔여 사업비는 전라남도는 3,021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남았으며, 울산광역시는 지방어항에 대한 기본사업은 완료하였음
- 지역별로 항별 투자액은 지방어항이 5개가 있는 경기도 지역의 평균 사업비가 191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지방어항이 가장 많이 소재(91개소)한 전라남도가 31억 원으로 가장 적음
- 전체 285개 항의 항별 평균 투자금액은 49억 원임

(3) 어촌정주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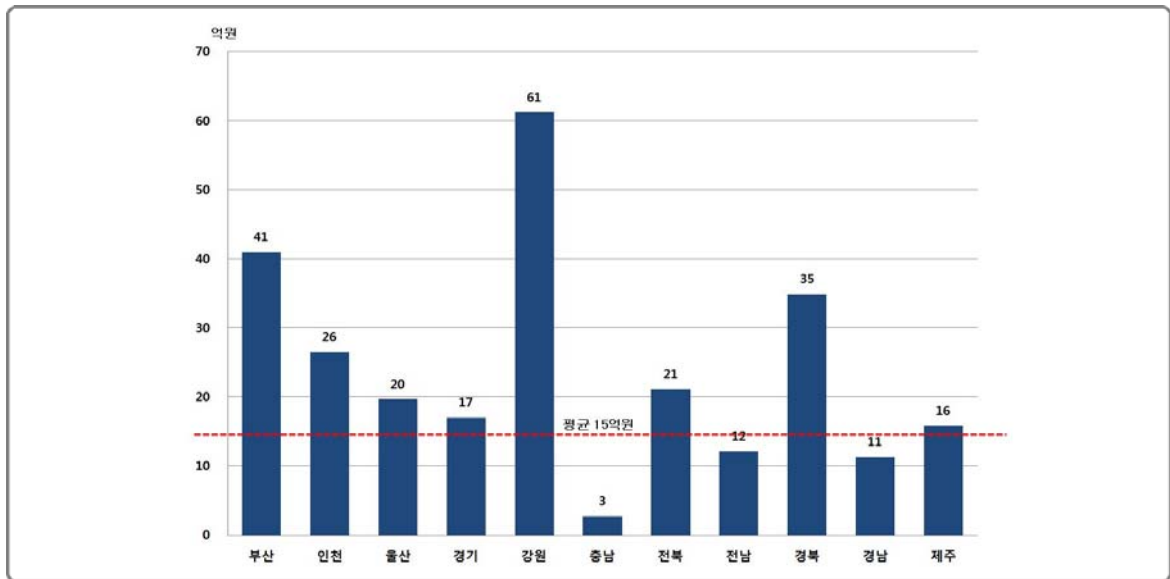
-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총투자예정 금액은 1조 5,008억 원으로 2012년 말 기준 9,113억 원이 투자되어 60.7%의 투자율을 보임
- 시도별 투자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80% 이상의 높은 투자율을 보였으며, 충청남도 17.8%로 가장 낮은 투자율을 보임
- 투자금액은 342개의 어항이 있는 경상남도가 3,849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20개 항이 있는 충청남도가 54억 원으로 가장 적게 투자됨
- 잔여 사업비는 제주도가 1,62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남았으며, 울산광역시는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의 투자가 완료됨

〈표 2.70〉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항수	총 투자계획	기 투자액 ('12년까지)	잔여 사업비	투자율	비고
계	595	1,500,832	911,270	585,366	60.7%	
부산	5	37,020	20,487	16,533	55.3%	
인천	31	97,503	82,072	15,431	84.2%	
울산	9	17,654	17,654	-	100.0%	
경기	11	20,604	18,695	1,909	90.7%	
강원	24	183,696	146,881	36,815	80.0%	
충남	20	30,601	5,438	25,163	17.8%	
전북	14	68,627	29,509	39,118	43.0%	
전남	84	232,387	101,606	126,585	43.7%	
경북	9	44,318	31,390	12,928	70.8%	
경남	342	533,209	384,909	148,300	72.2%	
제주	46	235,213	72,629	162,584	30.9%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기초조사, 2012년」



〈그림 2.55〉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

- 시도별 어항수를 고려하여 항별 투자액은 24개 어항이 있는 강원도의 평균 사업비가 61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어항이 20개가 있는 충청남도가 3억 원으로 가장 적음
- 전체 595개 항의 항별 평균 투자금액은 15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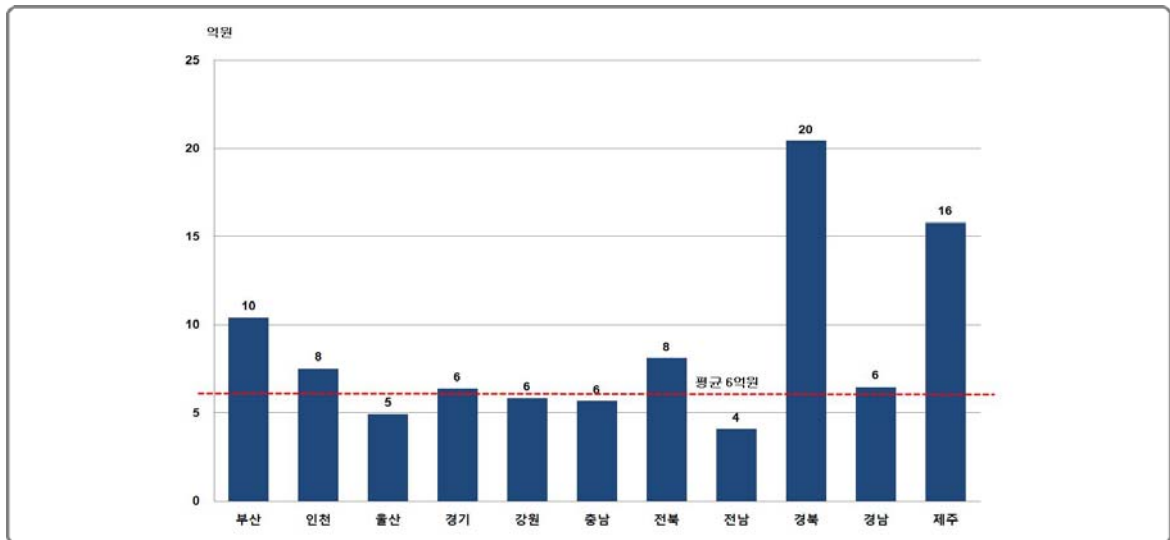
(4) 소규모항포구

〈표 2.71〉 소규모항포구 투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항수	총 투자계획	기 투자액 ('12년까지)	잔여 사업비	투자율	비고
계	1,309	1,306,320	788,949	517,371	60.4%	
부산	29	87,235	30,129	57,106	34.5%	
인천	39	41,850	29,253	12,597	69.9%	
울산	13	7,298	6,389	909	87.5%	
경기	16	10,163	10,163	-	100.0%	
강원	7	29,418	4,071	25,347	13.8%	
충남	43	33,428	24,281	9,147	72.6%	
전북	10	12,583	8,086	4,497	64.3%	
전남	893	645,232	363,892	281,340	56.4%	
경북	85	236,402	173,426	62,976	73.4%	
경남	145	111,249	93,516	17,733	84.1%	
제주	29	91,462	45,743	45,719	50.0%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기초조사, 2012년」



〈그림 2.56〉 시·도별 소규모항포구 항당 평균 사업비

- 비법정항인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총투자예정 금액은 1조 1,306억 원으로 2012년 말 기준 7,889억 원이 투자되어 60.4%의 투자율을 보임
 - 시도별 투자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80% 이상의 가장 높은 투자율을 보였으며, 강원도는 13.8%로 가장 낮은 투자율을 보임
 - 투자금액은 893개의 어항이 있는 전라남도가 6,452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3개 항이 있는 울산이 72억 원으로 가장 적게 투자됨
 - 잔여 사업비는 전라남도는 3,63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남았으며, 경기도는 투자가 완료되었음
- 지역별 항별 투자액은 경상북도의 항마다 평균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어항이 91개가 있는 전라남도가 4억 원으로 가장 적음
- 전체 1,309개 항의 항별 평균 투자금액은 6억 원임

2.3.3 어항 정비사업

1) 국가어항

-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어항기능 제고를 위해 기존 완공된 항 중 최근 4년 간 (2009~2012년) 약 1,623억 원을 투입하여 6개 항의 정비사업 완료하였으며 42개 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 2013년 현재 42개 정비계획 대상 항 중 18개 항은 계속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4개 항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개발우선순위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정비사업 실적이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포함하여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는 최근 4년간의 정비사업 추진 항이 7개 항으로 사업대상이 가장 많음

〈표 2.72〉국가어항 어항정비사업 투자실적(최근 5년간)

(단위:백만원)

시도	항명	총 계획	'08년 까지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소계	잔 사업비	사업 기간	비고
	계	1,486,033	800,806	30,053	45,707	46,837	64,019	102,454	265,770	423,127	-	
인천	선진포	39,231	32,211	-	-	-	1,960	3,800	5,760	1,260	-	
울산	방어진	27,937	22,539	-	-	-	-	500	500	4,898	-	
강원	대진	16,842	13,972	1,670	-	-	-	-	1,670	-	'07-'09	완료
	아야진	24,824	16,667	3,900	3,757	-	500	-	8,157	-	'05-'10	완료
	공현진	33,703	26,184	-	258	-	-	1,000	1,258	6,261	-	
	덕산	291	-	-	291	-	-	-	291	-	-	
	임원	32,635	18,425	-	1,000	1,859	2,230	6,000	11,089	3,121	-	
	장호	11,726	9,432	-	-	700	1,040	554	2,294	-	'11-'13	완료
	거진	18,313	13,877	-	-	-	700	1,000	1,700	2,736	-	
	궁촌	21,769	-	-	-	-	-	4,450	4,450	17,319	-	
충남	안흥	89,034	38,679	-	-	1,000	1,880	7,500	10,380	39,975	-	
전북	위도	15,496	9,308	2,000	2,940	1,248	-	-	6,188	-	'07-'11	완료
	어청도	9,661	-	-	-	-	1,500	-	1,500	8,161	-	
전남	가거도	295,488	150,207	800	-	-	10,000	14,500	25,300	119,981	'08-'09	완료
	초도	52,944	42,296	3,000	6,188	1,460	-	-	10,648	-	'08-'11	완료
	서망	24,802	15,442	-	1,000	1,500	2,500	4,360	9,360	-	'10-'13	완료
	녹동	54,661	23,591	-	1,000	4,830	3,940	6,000	15,770	15,300	-	
	청산도	18,866	9,346	-	-	-	1,000	1,000	2,000	7,520	-	
	계마	44,375	14,060	-	-	-	-	2,000	2,000	28,315	-	
	원평	13,766	113	-	-	-	-	1,000	1,000	12,653	-	
경북	죽변	77,535	17,863	200	2,999	6,360	6,360	6,300	22,219	37,453	-	
	오산	41,190	37,690	2,700	-	-	-	800	3,500	-	'13	완료
	구산	41,218	40,311	518	-	-	-	-	518	389	-	
	축산	34,763	26,847	1,000	1,633	-	300	3,000	5,933	1,983	-	
	구계	9,236	7,380	1,000	356	-	500	-	1,856	-	'08-'10	완료
	감포	66,305	31,124	500	2,000	3,550	6,250	11,000	23,300	11,881	-	
	저동	94,666	37,480	3,000	7,159	8,330	8,320	8,000	34,809	22,377	-	
	읍천	23,670	8,633	-	-	-	-	1,000	1,000	14,037	-	
	강구	5,190	-	200	1,990	3,000	-	-	5,190	-	'08-'11	연안항
	현포	82,350	59,612	-	-	-	-	1,000	1,000	21,738	-	
경남	구조라	37,320	13,764	2,518	3,000	3,310	3,273	4,000	16,101	7,455	-	
	미조	51,954	20,685	2,047	2,996	5,340	7,386	7,000	24,769	6,500	-	
	다대포	17,655	9,983	-	-	-	-	1,690	1,690	5,982	-	
제주	신양	57,817	27,985	-	4,000	-	-	-	4,000	25,832	-	

※자료:해양수산부,2013년

2) 지방어항

- 지방어항의 경우 어항기본사업에 한해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 어항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은 미흡한 실정임
- 어항 노후화 등에 대한 기능 개선보다 주로 태·폭풍 등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 및 노후시설 보수사업에 한 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2.73〉 지방어항 보수보강 실적(2009~2012년)

시도	항명	시설명	복구(보수보강)현황		
			복구자	복구내용	복구비(백만 원)
인천	선두	선착장	강화군	보수보강	124
	주문	선착장	강화군	보수보강	218
	정포	물양장	강화군	포장	39
	장곶	어항구역	강화군	준설	142
강원	봉포	방파제	강원도	21m복구	239
	문암1리	T.T.P	강원도	T.T.P 136개 복구	98
		방파제 외2	강원도	방파제 39m외	3,506
	가진	T.T.P	강원도	T.T.P 136개 복구	101
	호산	물양장	강원도	물양장 32m	9
		피복석	강원도	피복석 1,350㎡	164
	신남	방파제	강원도	방파제 15m	2
		방파제	강원도	방파제88m	6
		방파제	강원도	방파제25m	7
		T.T.P	강원도	TTP134개	47
	초곡	방파제	강원도	방파제23m	3
		방파제	강원도	방파제3m	22
		물양장	강원도	물양장32m	17
	물치	방파제	강원도	방파제16m	57
	동산	T.T.P	강원도	TTP20개	49
전남	성두	-	여수시장	콘크리트 보강	200
	손죽	-	여수시장	상치콘크리트보강	200
	용호	방파제	진도군	피복석복구	24
	창유	방파제	진도군	피복석복구	25
	벌포	방파제	진도군	피복석복구	33
	송평	-	해남군	물양장승상	200
	학가	-	해남군	상치승상	200
경남	포교	호안, 선착장	고성군	호안, 선착장	79
	당동	호안	고성군	호안	93
	중평	선착장	하동군	선착장복구, L=20.9m	276
		방파제	하동군	방파제복구, L=46.0m	1,000

※ 자료 : 지방자치단체, 2012년

- 1968년부터 2012년까지 45년간 지방어항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태풍에 의한 방파제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됨
- 지방어항 피해현황에 따른 보수보강 실적을 살펴보면, 45년간 약 72억 원으로 국가어항 1년간 정비사업 예산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
- 지역별로는 강원도 43억 원 경상남도 14억 원, 전라남도 9억 원, 인천 5억 원임

3) 어촌정주어항

- 어촌정주어항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어항개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사업은 태·폭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에 한정된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어항시설의 피해 원인은 태풍피해에 따른 보수보강이 가장 많음
- 어촌정주어항의 어항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은 총 66개 시설물에 대하여 276억 원을 투자하여 보수보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 지역이 194억 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47억 원, 경상남도 29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피해 원인에 따른 보수보강 금액은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12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었으며, 고파랑에 따른 복구비 77억 원으로 나타남

〈표 2.74〉 어촌정주어항 피해원인별 보수보강 실적(2009~2012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시 도	소 계	태 풍	너 울	고파랑	노후화	집중호우
합계	27,525	11,999	4,578	7,659	2,593	696
부산	-	-	-	-	-	-
인천	230	-	-	-	230	-
울산	4,660	2,297	-	-	2,363	-
경기	-	-	-	-	-	-
강원	19,430	7,193	4,578	7,659	-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304	304	-	-	-	-
경북	-	-	-	-	-	-
경남	2,901	2,205	-	-	-	696
제주	-	-	-	-	-	-

※ 자료 : 지방자치단체, 2012년

2.3.4 어항 환경개선사업

- 항 내 환경개선을 통해 공익기능을 갖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증진하고, 어업종사자들의 어로환경개선 및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공공재로서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는 어항개발은 정부의 투자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며, 다기능어항의 확대개발과, 수산물 유통·가공과 관련한 수익창출 기능 사업을 추가하는 어항의 개발방향이 필요함

1) 다기능어항 개발 시범사업

(1) 개요

- 국내·외 수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업여건 악화로 어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가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및 국내 해양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어항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촌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어업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유 기능강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해양관광의 명소화 및 지역문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 사업기간/사업비 : 2004 ~ 2014년(281,037백만 원)
- 지원시설 : 조정시설, 공연장, 특산물판매장 등 관광문화기반시설

(2) 추진현황

- 2004. 05 : 어촌 관광진흥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어업외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문화기능이 겸비된“다기능어항 개발”시범사업 추진(3개 모델 개발)
 - I 모델 : 어촌·어항 복합공간(7개소)
 - II 모델 : 다기능어항(6개소)
 - III 모델 : 어촌관광단지(11개소)
- 2007. 05 : 어촌관광모델 사업별 통폐합
 - I 모델+ II 모델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 I 모델+ III 모델 = 어촌관광 개발사업
- 2013. 현재 : 12개 항 완공 1개 항(어유정항) 공사 중

〈표 2.75〉 다기능어항 시범사업 현황

계	강원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인천	제주
13개항	강릉항	양포항	정자항	대변항	지세포항	마량항	격포항	홍원항	어유정항	모슬포항
	대포항				맥전포항	국동항				
	2개 항	1개 항	1개 항	1개 항	2개 항	2개 항	1개 항	1개 항	1개 항	1개 항

※ 자료 : 해양수산부 「다기능어항 성과평가, 2013년」

※ 주) 어유정항은 어항정비사업으로 추진 2015년 완공예정

(3) 사업 효과

- 어업인 평균소득은 증가하였으며 비교지역 보다 증가율이 높음
 - 완공된 항을 기준으로 완공항의 공사 전 평균소득은 28,222천 원이며 공사 후 34,364천 원으로 21.8%가 증가(사업 외 지역보다 1.2% 높음)
- 완공된 항 기준 평균 관광객은 2004년 1,182천 명에서 2011년 2,642천 명으로 124%의 증가율을 보였음
- 강릉항 개발에 따른 신규항로 개설로 여행객 수 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강릉~울릉 일반인 여행객 수 95,116명
- 다기능어항 사업은 어업생산 기반시설(어업인 중심)에서 친수공간으로 적극 개선(일반국민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음

(4) 사업 효용성 평가

- 다기능어항 개발 시범사업으로 어항을 어업인의 배타적인 공간에서 국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국민인식 개선효과와 함께 방문객 증대 효과가 나타남

(5) 향후 개선사항

- 다기능어항개발 시범사업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양한 어항시설의 기능 중 일부분의 기능이 포함되어 어항의 다기능화에 의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함
- 어항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경제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함
- 앞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존 시범사업은 어촌과 어장을 연결하는 공간, 주변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공간의 역할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이용고도화 사업

(1) 개요

- 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항의 기능 재배치 및 재개발로 어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공간으로 조성
 - 수산물 위생과 안전을 위해 노후 수산물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가공·판매시설 확충
 - 관광·레저시설, 친수시설 도입으로 국민의 휴식·휴양 공간 제공
 - 어촌 및 배후지역 연계 개발로 어항개발 효과 증대 등 시너지 창출
- 상향식 개발정책으로 수산 세력이 강한 거점어항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유치

(2) 추진현황

- 2011. 01 : 국가어항 기능활성화 방안 마련
- 2011. 02 :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설명회
- 2012. 01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4개 항)
- 2012. 05 :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013. 02 :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기본설계 용역 준공
- 2013. 07 :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표 2.76〉 이용고도화 사업 현황

어 항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 내용
거 진 항	'13~'18년	총 398억 원 국 가 : 197억 원 지자체 : 105억 원 민 자 : 96억 원	국 가 : 물양장, 돌제, 친수시설 및, 광장 등 지자체 : 어업인사무실, 직판장, 활어워판장 등 민 간 : 저온·건조저장시설, 제빙·냉동창고 등
방어진항	'13 ~ '18년	총 354억 원 국 가 : 224억 원 지자체 : 8억 원 민 자 : 122억 원	국 가 : 물양장, 선양장, 도로, 야적장등 지자체 : 외국인 선원숙소 민 간 : 저수산물가공공장, 수산문화센터 등
구시포항	'13 ~ '18년	총 494억 원 국 가 : 201억 원 지자체 : 84억 원 민 자 : 209억 원	국 가 : 물양장, 선양장, 도로, 야적장 등 지자체 : 다목적광장, 공원, 전망대 등 민 간 : 수산물가공공장, 수산문화센터 등
죽변항	'13 ~ '18년	총 534억 원 국 가 : 142억 원 국방부 : 34억 원 지자체 : 118억 원 민 자 : 240억 원	국 가 : 물양장, 방파제, 친수시설, 화장실 등 국방부 : 해군부두 지자체 : 조선소 이전, 여객터미널 및 직판장 등 민 간 : 경매체험장, 수산물가공공장 등

2.3.5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 「어촌·어항법」제2조제6항의 “어항개발사업”유형 중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을 위한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
- 관광·레저·문화 등에 대한 국민 수요를 맞추고 어항에 대한 민간 투자의 관심을 높여 상업·관광 기능이 복합된 체계적인 어항 개발 추진

2.4 어항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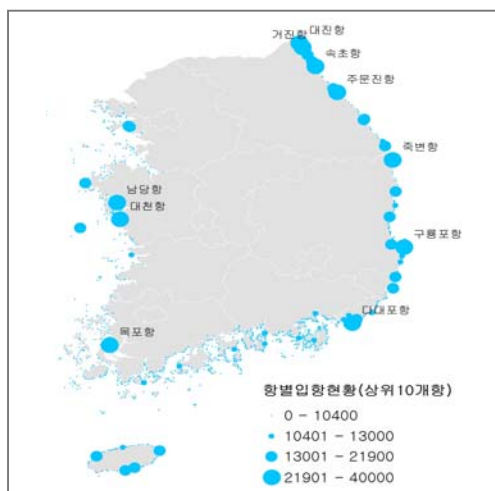
2.4.1 어항 이용현황

1) 항종별 어선이용 현황

- 어항의 어선 입출항 빈도는 어선 수 감소 및 어선감척 계획 등에 기인하여 어선의 이용현황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
 - 항만을 포함한 항종별 어선 이용실태 분석 결과, 상위 10개 항 중 5개 항이 국가어항이며, 나머지 5개 항은 연안항으로 검토됨
 - 최근 3년간 국가어항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연평균 665,217회로 연간 척당 41회의 입항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항포구는 연간 척당 15회 정도의 입항빈도를 보이고 있어 국가어항이 소규모항포구 보다 약 2.7배 정도 입출항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 여건변화 등에 따른 어항이용이 집중에 따른 거점어항이 형성된 반면에 여건이 좋지 않은 어항은 어선의 이용이 거의 없는 유헴 어항도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77〉 항별 입항빈도 상위 10개 항 분포도 및 항종별 어선이용실태

(단위 : 척, 회)



구 분		국가 어항	지방 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어항	계
평 균	척수	16,215	13,993	14,074	26,473	70,755
	빈도	665,217	492,576	341,918	399,963	1,899,674
'10년	척수	16,353	14,139	13,815	26,866	71,173
	빈도	677,130	511,619	354,223	420,359	1,963,331
'11년	척수	15,213	13,764	13,729	26,177	68,883
	빈도	661,266	482,450	353,019	401,942	1,898,677
'12년	척수	17,080	14,076	14,678	26,376	72,210
	빈도	657,254	483,659	318,513	377,588	1,837,014

※ 자료 : 해양경찰청 「입출항데이터, 2012년」

2) 도서·육지별 어선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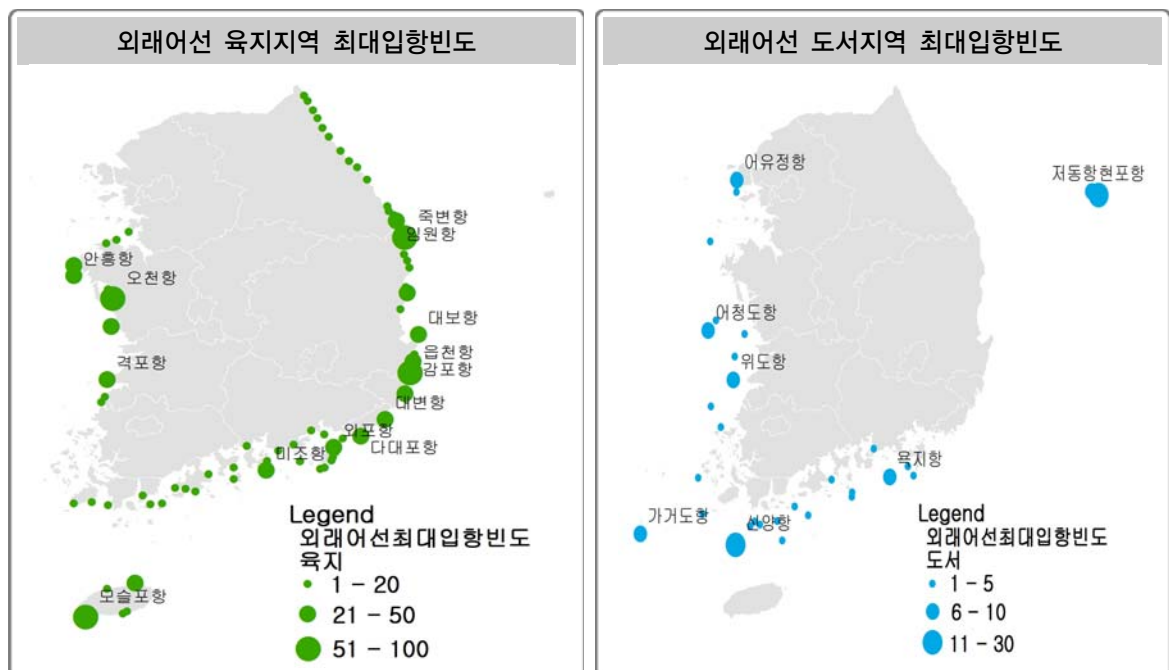
-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외래어선은 2010년 8,146척에서 2012년 7,693척으로 약 6% 정도 감소되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육지·도서소재는 국가어항의 외래어선 이용실적은 각각 4%, 17% 감소하였으며, 도서 국가어항의 외래어선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도서소재 국가어항의 외래어선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기상예보의 정확성 제고 및 어선 성능 향상 등으로 육지 거점어항의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임
- 척당 마력수 (2000년) 142마력 → (2010년) 173마력, 21.8% 증가¹⁵⁾

〈표 2.78〉 국가어항 도서·육지별 외래어선 어선이용실태

(단위 : 척)

구 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비 고
합 계	8,146	6,983	7,693	7,607	
육 지	7,241	6,122	6,942	6,768	
도 서	905	861	751	839	

※ 자료 : 해양경찰청 「입출항데이터, 2012년」



〈그림 2.57〉 육지·도서별 국가어항 외래어선 입항빈도 분포도

1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사이트 통계연보」

2.4.2 수산물 생산현황

1) 항종별 위판 현황

-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위판량은 82만 톤이며, 이 중 국가어항을 포함한 어항에서의 위판량은 41만 톤으로 전체 위판량의 49.8%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어항에서의 위판량은 45만 톤으로 51.6%를 차지하여, 어항에서의 위판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전국 평균 위판금액을 살펴보면, 전체 3조 1,607억 원 중 어항이 1조 2,254억 원으로 38.8%, 항만이 1조 9,353억 원으로 61.2%를 나타내어 위판금액은 어항보다 항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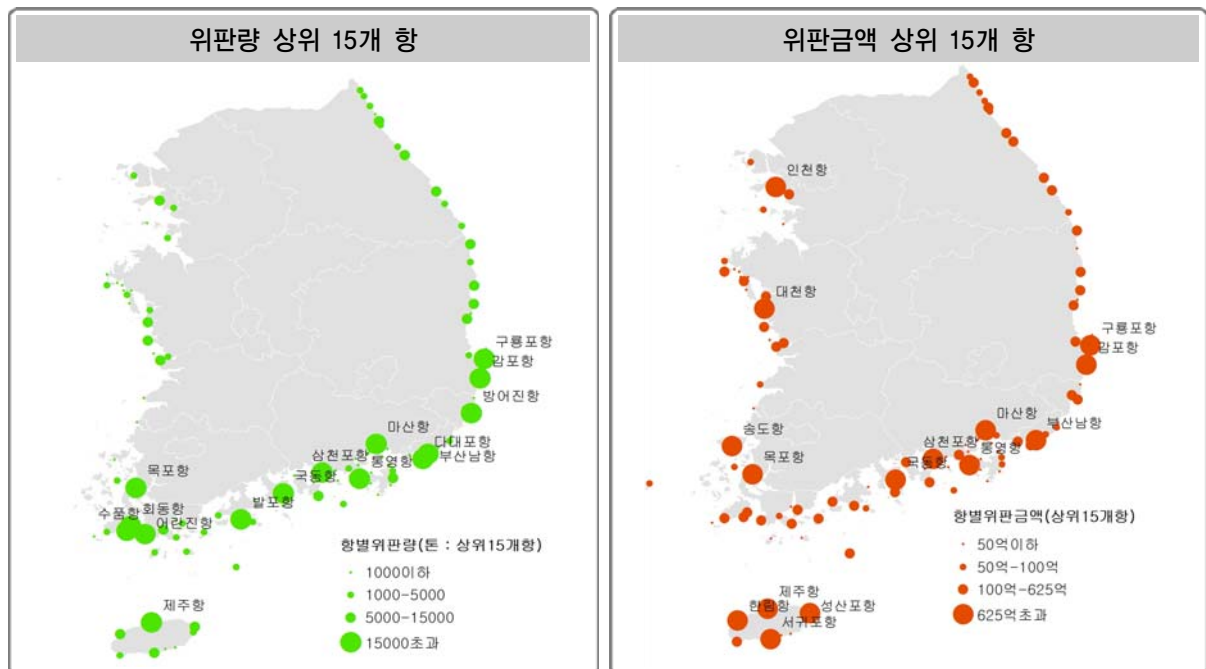
〈표 2.79〉 항종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 현황(최근 3년 평균)

(단위 : 톤, %, 억 원)

구 분		위판량(톤)	비율(%)	위판금액(억원)	비율(%)
합 계		819,043	100.0%	31,607	100.0%
어 항	소 계	407,487	49.8%	12,254	38.8%
	국가어항	295,246	36.0%	8,263	26.1%
	지방어항	17,118	2.1%	1,503	4.8%
	어촌정주어항	3,451	0.4%	498	1.6%
	소규모항포구	18,505	2.3%	264	0.8%
	기타	73,166	8.9%	1,725	5.5%
항 만	소 계	411,556	50.2%	19,353	61.2%
	무역항	263,136	32.1%	12,225	38.7%
	연안항	148,420	18.1%	7,128	22.6%

※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 2010~2012년

- 전국 위판실적이 있는 143개 항(항만 포함)중 상위 15개 항의 위판량 비중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거점항을 중심으로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중 국가어항 6개소, 무역항 5개소, 연안항 2개소 등으로, 항종별로 살펴보면, 국가어항이 수산물 공급의 관점에서 거점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위판금액을 살펴보면 상위 15개 항의 위판금액이 57.2%로, 분담률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주로 항만이 상위 항에 속하고 있음
- 국가어항이 2개소, 무역항이 7개소, 연안항이 5개소, 지방어항이 1개소로 위판금액 부문에서는 대부분 항만이 상위에 속하고 있음



〈그림 2.58〉 위판량 및 위판금액 상위 15개 항 분포도

2) 위판장 현황

(1) 시도별·항종별 위판장 조성 실태

〈표 2.80〉 시도별·항종별 위판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 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무역항	연안항	기타	계
부산	2	2	-	-	-	4	-	8
인천	-	2	-	-	3	-	1	6
울산	2	-	-	-	-	-	-	2
강원	11	9	4	-	4	1	1	30
충남	3	5	1	-	1	4	1	15
전북	-	-	-	-	1	-	1	2
전남	11	3	1	7	4	4	5	35
경북	11	3	-	-	2	6	-	22
경남	11	11	8	3	17	-	2	52
제주	2	-	-	-	2	4	-	8
계	53	35	14	10	34	23	11	180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산지 수산물 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8년」

- 전국의 위판장 현황은 180개소이며, 항종별로는 국가어항이 53개소, 29.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어항 35개소로 19.4%, 무역항 34개소로 18.8%, 연안항 23개소로 12.7% 순서임

(2) 위판장 노후 실태

- 전국 위판장의 평균 경과 연수는 23.7년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위판장이 75개소로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표 2.81〉 경과 연수별 위판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5년 이내	5 ~ 10년	10 ~ 20년	20 ~ 30년	30년 이상	미정	계
부산	-	1	1	3	3	-	8
인천	-	1	-	2	3	-	6
울산	-	-	1	-	-	1	2
강원	-	1	5	2	12	10	30
충남	-	4	7	3	1	-	15
전북	-	-	1	1	-	-	2
전남	1	2	16	6	7	3	35
경북	-	5	7	1	9	-	22
경남	1	9	20	10	8	4	52
제주	-	1	3	2	2	-	8
총합계	2	24	61	30	45	18	180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산지 수산물 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8년」,

(3) 위판장의 위생 실태

- 수산물의 특성상 양륙, 위판, 보관, 유통 등의 과정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기준 미비 등 위생·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108개 산지 위판장에 대해 식품 관련 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위생상태를 분석한 결과, 6개 항목에 대해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평균 40.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됨

〈표 2.82〉 위생기준별 위판장 현황

(단위 : 개소)

위생 평가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취수원과 지하수 오염시설과의 위치 적정거리 유지	99	44	37
정수처리된 해수 사용	52	87	41
외부오염 방지를 위한 위판장 구획차단	60	93	27
부수시설과 위판장과의 구획분리	93	51	36
소각시설 및 용융시설과의 적정거리 유지	36	37	107
수산물과 바닥사이의 적정거리 유지	96	53	31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산지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08년」

- 수산물 운송 및 하역에 필요한 팔레트와 지게차를 보유한 위판장은 40여 개소이며, 기타장비(컨베이어 벨트, 카고트럭, 하륙용 컨베어, 활어상자, 크레인)를 사용하는 위판장은 16개소로 조사됨
- 산지 위판장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산물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조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2.4.3 어항부지 이용현황

1) 국가어항 부지조성 현황

- 2012년 기준 국가어항의 부지조성 현황은 계획 4,287,699㎡ 중 3,729,929㎡로 87.0%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음

〈표 2.83〉 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현황

구분	시설별	용도별	계 획 면적(㎡)	조성 면적(㎡)	비 고
기능 시설	수송시설	도 로	897,651	766,789	
		주 차 장	405,570	329,495	
	어선어구 보전시설	어선건조, 수리장 등	77,433	66,595	
		어구건조, 야적장, 어업용창고 등	616,129	484,479	
	수산물 지원시설	급유, 급수 등	100,302	180,915	
		제빙·냉동·처리가공시설 등	122,193	155,662	
		위 판 장	150,381	142,849	
		수산물 유통·판매·보관시설 등	233,320	211,147	
		해양수산공공시설 등	149,549	126,759	
		어항정화시설 등	41,351	19,461	
		수산물자원육성시설 등	15,571	9,060	
	소 계		2,809,450	2,493,211	
편익 시설	이 용 자 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172,077	149,821	
		여객편의시설 등	35,910	47,767	
	어항환경 정비시설	광장조경시설 등	517,710	679,726	
	친수관광 시 설	관광레저·휴게시설 등	518,723	359,404	
	소 계		1,478,249	1,236,718	
유보지		선망어선용부지 포함	233,829	-	지세포함 (5,288)
총 계			4,287,699	3,729,929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항 부지이용 재수립 용역, 2012년」

2) 국가어항의 어촌관광구역 및 유보지 설정 현황

(1) 어촌관광구역 설정

- 최근 어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어항구역 내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어촌어항법」 제18조)
 -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별도의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민자유치 등 어항의 관광기능 활성화 도모
 - ※ 시설의 범위「어촌·어항법 시행령」(제19조) :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 운영 중인 어항 중에서 관광기능이 포함된 다기능어항과 지자체의 민자유치 계획이 있는 항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음
 - 속초 대포항 등 10개 항 503,220㎡에 대해 어촌관광구역 설정
- 어촌관광구역 중 신규 민자유치 가능면적(육역)은 기존 민자시설과 도로·주차장·광장조경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가 제외된 10개 항 188,700㎡임
 - ※ 민자유치를 위한 어항부지는 수요자 요구에 따라 매각 또는 임대

〈표 2.84〉 국가어항내 어촌관광구역 설정 현황

구 분	사군구	항명	설정구역(㎡)			비고
			전체	육역	수역	
부산	기장군	대변항	19,483	19,483	-	
울산	북구	정자항	7,430	6,772	658	
강원	속초시	대포항	95,477	95,477	-	
	강릉시	강릉항	39,205	17,418	21,787	
충남	서천군	홍원항	84,990	46,577	38,413	
	보령시	외연도항	10,558	10,558	-	
전북	부안군	격포항	14,696	14,696	-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	161,699	66,171	95,528	
제주	사천시	신수항	50,989	50,989	-	
	서귀포시	모슬포(남)항	18,693	18,693	-	
소계		10개 항	503,220	346,834	156,386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 2012년」

- 어촌관광구역 내 시설의 유치 및 사업관리
 - 어촌관광구역 내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 지자체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므로 지자체 주관하에 민자유치를 도모함
 - ※ 사업 시행은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추진 「어촌·어항법」(제23조)

〈표 2.85〉 어촌관광구역내 민자유치 가능부지

사도	사군구	항명	어촌관광 구역(육역,㎡)	민자유치 가능부지(㎡)	민자유치 계획(시설의 범위)
부산	기장군	대변항	19,483	2,954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 등
울산	북구	정자항	6,772	147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등
강원	속초시	대포항	95,477	46,008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어촌소득증대 및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
	강릉시	강릉항	17,418	6,343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
충남	서천군	홍원항	46,577	29,397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등
	보령시	외연도항	10,558	9,639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전북	부안군	격포항	14,696	14,003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	66,171	10,527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등
제주	사천시	신수항	50,989	50,989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
	서귀포시	모슬포 (남)항	18,693	18,693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등
소계		10개 항	346,834	188,700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 2012년」

(2) 어항 유희부지 현황

- 일부 어항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의한 부지 증가 및 계획 당시보다 변화된 수산여건으로 발생된 잉여부지가 유희부지로 방치되고 있음
- 방치된 유희부지는 항별 수산 및 관광 등 이용여건을 고려하여 유보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유보지 매각 우선순위〉

우선순위	시 설	내 용
1순위	수산 관련시설	수산자원 육성시설, 수산물 관련 유통·판매·보관시설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등
2순위	관광, 레저, 휴게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생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휴게시설
3순위	1순위, 2순위 이외의 시설	

※ 유보지내 사업은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으로 추진

- 이에 대해서는 매각을 위한 우선순위만이 선정되어 있으며, 수산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산 관련 시설 용도로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항별 여유부지 면적이 4,000㎡ 이상인 항을 대상으로 어항관리청과 이용단체(수협, 어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지 설정
- 대상항은 인천 옹진 선진포항 등 14개 항 228,541㎡임
- ※ 안흥(외)항의 일부부지(1,047㎡)는 어항배후도로 후면에 이격된 잉여부지로 어항 기능상 불필요하므로 유보지에 포함
- 설정된 유보지 이외의 여유부지는 미래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항부지로 지속 유지·관리

〈표 2.86〉 유보지 설정 대상항

구분	시·군·구	항명	면적(㎡)	지번
인천시	옹진군	선진포항	13,545	대청면 대청리 산47-1번지 4,720㎡, 산47-2번지 343㎡, 산47-3 329㎡, 지적 미등재 8,153㎡
충남도	태안군	안흥(외)항	1,047	근흥면 신진도리 75-13번지 1,047㎡
전북도	군산시	말도항	11,078	옥도면 말도리 144번지 11,078㎡
	부안군	위도항	4,930	위도면 진리 1-195번지 4,930㎡
전남도	영광군	계마항	36,881	홍농읍 계마리 894-25번지 22,908㎡, 894-12번지 10,347㎡, 894-6번지 298㎡, 894-5번지 3,328㎡
		안마항	10,914	낙월면 죽도리 산4-1번지 10,328㎡, 산4-2번지 586㎡
	신안군	전장포항	9,454	임자면 도찬리 25-41번지 9,454㎡
		원평항	59,804	비금면 신원리 593-97번지 11,409㎡, 593-98번지 10,731㎡, 지적 미등재 37,664㎡
	진도군	서거차항	22,783	조도면 서거차도리 210번지 13,541㎡, 213번지 9,242㎡
	완도군	득암항	10,388	약산면 득암리 567-42번지 9,775㎡, 341-4번지 613㎡
		여서항	3,000	청산면 여서리 200-1번지 3,000㎡
	고흥군	여호항	9,565	점암면 여호리 9,565㎡(지적 미등재)
	여수시	안도항	7,532	남면 안도리 1188-23번지 7,532㎡
		연도항	27,620	남면 연도리 172-1번지 737㎡, 172-4번지 139㎡, 지적 미등재 26,744㎡
소계		14개 항	228,541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 2012년」

2.5 어항 운영 · 관리

2.5.1 관리 실태

1) 관리인력 부족

- 어항관리청인 지자체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항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대상어항(법정어항) 989개소에 비하여 어항관리청 담당인원은 1~2명으로 관할 내의 어항을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어항관리청 인원 1인당 15~50여 개의 어항을 관리하고 있음

2) 부지 관리 실태

- 어항관리 인력 부족에 따른 부지 관리 실태 조사 결과, 크게 7가지 문제점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어구야적 및 방치(24.4%), 부지 활용도 저조(17.9%), 시설 무단점유(14.9%), 용도계획 불합리(14.9%), 항내 오물투기(13.1%), 주차면적 부족(10.1%), 노후시설 관리 소홀(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어항부지 불법 무단 점유시설 현황

- 어항 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강릉항, 지세포항, 구조라항 등 43개 항은 관리상태가 양호한 반면 대진항(강원), 거진항 등 31개 항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됨

- 어구보관용 임시천막 및 어구 무단 야적·방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항 세력이 큰 일부 어항은(거진항, 임원항 등) 불법·무단 점유실태가 심각함
- 어구야적용 임시천막 불법 설치 사례가 71개 항, 컨테이너 무단 설치 50개 항, 영업용 임시천막 불법 설치 27개 항, 무단 임시상가(난전) 조성 및 수산물 판매는 15개 항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부지의 무단시설 점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구창고 등을 설치하여 방치된 어구를 관리하고, 컨테이너 시설 등은 적절한 장소로 옮겨 점·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등 어항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표 2.87〉 시도별 불법·무단 점유시설 현황

구 분	무단점유시설(건수)						
	계	임시천막 (어구야적)	임시천막 (영업행위)	컨테이너	임시상가 (난전)	기타 (임시구조물)	어구 야적
계	1,611	893	107	306	101	204	
부산시	73	13	14	7	37	2	다수방치
인천시	79	66	1	4	1	7	다수방치
울산시	84	29	10	23	9	13	다수방치
강원도	118	30	1	42	40	5	일부방치
충남도	232	104	32	66	2	28	다수방치
전북도	66	25	5	22	1	13	다수방치
전남도	624	469	20	61	1	73	다수방치
경북도	81	27	6	33	1	14	일부방치
경남도	220	111	17	40	9	43	다수방치
제주도	34	19	1	8	0	6	일부방치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 2012년」

2.5.2 어항시설 점·사용 현황

- 부지이용계획 수립 면적(5,760,635㎡)의 83.4%인 4,324,233㎡를 현재 사용 중임
 - 수협에서 점·사용허가 전체부지(890,900㎡)의 45.7%인 406,835㎡를 차지하고 있음
- 부지 점·사용료는 개인사업자 등 민간에 부과하고 있고 수협(어촌계 포함) 및 해양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시도별 점·사용 건수는 전라남도가 30개 항 258건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점·사용료 징수는 전라북도가 48건 79,600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항별 점·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격포항이 44건 79,460천 원으로 가장 높고 그 외 다대포항, 안흥항, 도두항, 미조항 등 순임

- 점·사용료 징수항 : 44개 항, 275,155,527원
- 점·사용료 미 징수항 : 59개 항(수협, 어촌계 등에서 무상사용)
-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부지 면적은 전체 면적대비 15%이며, 허가 건수 대비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어항관리 재원 마련을 위한 징수가 필요함

〈표 2.88〉 이용 단체별 점·사용 현황

이용단체	점·사용건수		면적(㎡)	점·사용료(연간, 원)	비 고(이용단체)
	전체	징수			
계	997	200	890,900	275,155,527	
민간	253	184	147,265(16.5%)	272,587,077(99.1%)	개인사업자, 영어조합 법인 등
기타	53	16	50,504(5.6%)	2,568,450(0.9%)	기타 단체(협회) 등
수협	228	-	406,835(45.7%)	-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223	-	138,577(15.6%)	-	어촌계
공공	240	-	147,719(16.6%)	-	해경, 해군, 지자체, 소방서 등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 2012년」

2.5.3 국가어항 수역관리(퇴적) 실태

- 국가어항의 항내 매물현황 조사 결과, 약 20개 항에서 매물로 인한 어선 입출항 불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항내 산발적으로 암석, 토사, 폐기물(폐어망) 등이 산재하고 있는 어항이 많아 이에 대해 부분적인 유지준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표 2.89〉 매물이 진행중인 국가어항 현황

구분	항명	항수
동해안	사천진항, 남애항, 사동항, 오산항, 구산항, 죽변항, 강릉항, 수산항, 구계항	9개 항
서해안	원평항, 계마항, 안흥항, 서망항, 전장포항	5개 항
남해안	어란진항, 소안항, 사동항, 안도항, 돌산항, 미조항	6개 항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기초조사, 2012년」

- 일부 어항에서는 개발로 인해 인근 해안선 침식 등에 따라 항 입구를 통해 토사가 유입되거나, 방파제 기부측 제체를 투과하는 토사가 복합적으로 항내 매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과학적 원인 규명이 여전히 추진되지 못한 상태임

-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109개 국가어항에 대한 「국가어항 수리현상」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함



〈그림 2.59〉 국가어항 매몰사례

2.5.4 관련 정보 관리 실태

- 국가어항과 지방관리어항들은 개발·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담당자들의 업무가중 및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어항과 관련된 기초자료들은 해양수산부, 수협, 해양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항목과 내용간의 중복성, 호환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이 때문에 어항 개발과 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평가를 위한 DB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효과적인 정책 평가 및 수립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어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항의 항별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2.6 시사점

2.6.1 지정 및 개발

- 어선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어항의 완공 지연과 대피어항 부족으로 기상악화 시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고, 어항 이용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됨
 - 특히, 어항개발사업의 분산투자과 한정된 예산에 따른 계획대비 완공률이 낮어져 이용에 불편을 초래
 - 수산자원 변화 등으로 어선 이용이 늘어난 서·남해안권의 대피어항은 여전히 부족함
- 여가시간 증대로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어항의 다양한 기능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어항이 기존 수산지원 기능에서 다기능어항으로 확대 개발 필요

- 다기능어항 시범사업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다기능어항의 확대 개발이 필요함
- 2013년까지 다기능어항 시범사업 13개소 완료(전체 국가어항의 12%)
- 개발 완료된 다기능어항도 친수시설 위주의 개발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점이 노출됨
- 관광은 물론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개발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축 창출이 필요함
- 지자체의 적극적인 어항 개발·관리·운영 참여를 위해 공모에 의한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어항개발 주체가 정부+지자체(국비지원) 중심에서 정부+지자체+민간투자의 방식으로 전환 필요

2.6.2 이용 및 관리

- 어항수역의 수질 악화 및 어항구역 내 수산물의 위생처리시설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과 인식이 부족함
 - 어항구역 내 HACCP 및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산물의 양육·위판·보관·유통 등의 과정에서 수산물의 위생관리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어항정화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어항 수질 개선이 미비함
- 어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
 - 어항 관리청(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함
 - 어항시설 점·사용료 면제와 수익시설(주차장, 낚시공원 등) 발굴이 미흡함
 - 수협, 해경, 지자체 등 분산된 어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항정보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함

제4절 개발 여건분석

1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검토

1.1 관련법률 검토

1.1.1 관련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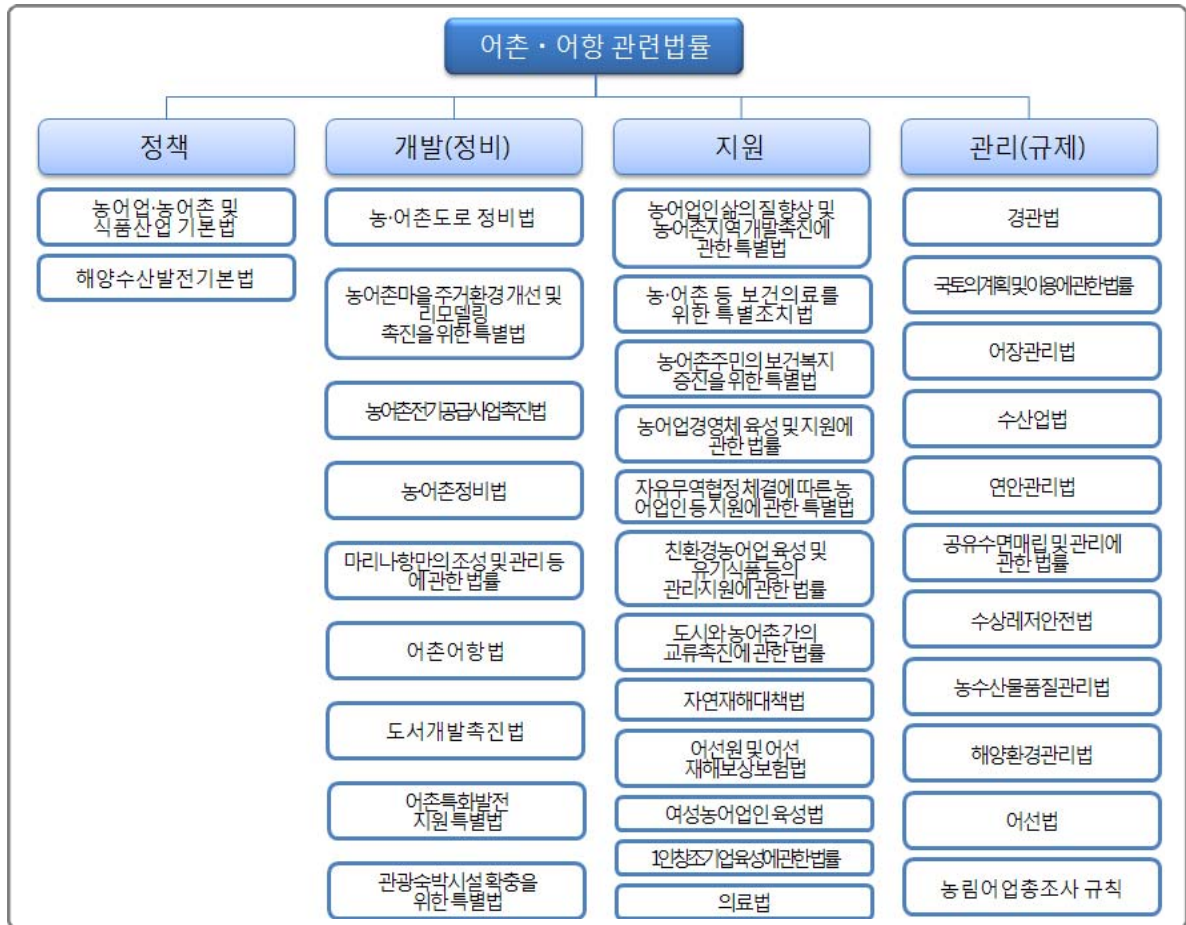
- 어촌·어항 관련 법률은 총 33개로 1951년부터 최근까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11개 정부부처가 소관하고 있음

〈표 2.90〉 어촌·어항 관련법률 현황

법률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의료법(국민의료법)	1951.12.25	보건복지부
수산업법	1953.12. 9	해양수산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1965.12.30	산업통상자원부
자연재해대책법(풍수해대책법)	1967. 6. 1	소방방재청
어선법	1979. 1. 1	해양수산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80.12.31	보건복지부
도서개발촉진법	1986.12.31	안전행정부
농어촌도로 정비법	1991.12.14	안전행정부
농어촌정비법	1995. 6.23	농림부/해양수산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999. 7. 1	농림부/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1999. 8. 9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0. 1. 1	농림부/해양수산부
수상레저안전법	2000. 2. 9	해양경찰청
어장관리법	2001. 1.29	해양수산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2001. 2.15	기획재정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002. 7. 1	농림부/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2002.11.14	해양수산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1. 1	국토교통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004. 1. 1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4. 4. 1	농림부/해양수산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4.30	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 6. 6	농림부/해양수산부
어촌·어항법	2005.12.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2007. 4.11	해양수산부
경관법	2007.11.18	국토교통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2008. 6.22	농림부/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10. 2	농림부/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9.12.10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10.16	해양수산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11.10. 5	중소기업청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2. 7.27	문화관광체육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2013. 5.24	해양수산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4. 6. 5	농림부/해양수산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어촌·어항 관련법률 현황을 각 개별법의 목적과 성격을 토대로 구분해 보면, 크게 i) 정책, ii) 개발(정비), iii) 지원, iv) 관리(규제)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2.60〉 어촌·어항 관련 법률 현황

1) 정책부문

- 정책부문의 어촌·어항 관련 법률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들 수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어업의 구조개선, 어촌주민의 복지증진, 어업 관련 단체 및 인력의 육성, 어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관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으로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와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개발(정비)부문

- 개발(정비)부문의 어촌·어항 관련법률은 2000년대 이전에 제정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도서개발촉진법」과 최근에 제정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으로 크게 나뉨
- 개발(정비)부문의 2000년대 이전 법률들은 대부분 정부주도의 낙후된 농어촌의 기반여건을 확충·정비하기 위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주민주도의 기반여건 확충·정비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와 어촌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2.91〉 개발(정비)부문 어촌·어항관련 법률의 특성

구분	관련법률(소관부처)	관련조문	지원내용
정부주도 농어촌 기반확충 및 정비	농어촌도로 정비법(안)	제5조(도로의 정비)	
	도서개발촉진법(안)	제3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주거환경 시설의 개선 도서 교통·통신 편의증진 재해예방 위한 방파제 지원 주민의 복지증진(의료/문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산)	제4조(전기사업자 사업계획) 제13조(자가발전 사업계획)	
	농어촌정비법(농/해)	제4조(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제5조(농어촌경관 보전관리) 제54조(생활환경 정비계획) 제64조(빈집정비)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지원)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어촌어항법(해)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수립)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어항기본사업(기반확충) 어항정비 어항환경개선(어촌관광) 레저관광개발
민간주도 농어촌 기반확충 및 정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해)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 내용)	교류, 관광, 미관, 휴양, 레저, 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농/해)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3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9조(보조 및 융자) 제40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해)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 자료 : 박상우 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p.19의 내용을 재구성

3) 지원부문

- 지원부문의 어촌·어항 관련 법률은 크게 삶의 질 향상과 인력육성으로 크게 나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삶의 질 향상 관련 법률

-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법률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의료법」, 「자연재해대책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음
 - 삶의 질 관련 법률은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원법이 어촌지역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수혜여부와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생활밀착형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인력육성 관련 법률

- 인력육성과 관련된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어촌지역의 인력육성과 관련된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영어조합법인, 영어회사법인 등 어촌비즈니스 인력육성과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어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참여와 지원방안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3) 기타 지원에 관련 법률

- 삶의 질 향상과 인력육성 이외에 어촌·어항 관련 법률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어교류를 확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력지원, 경영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어촌체험마을의 경영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와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위한 확대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표 2.92〉 지원부문 어촌·어항 관련 법률의 특성

구분	관련법률(소관부처)	관련조문	지원내용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해)	제5조(삶의 질 기본계획) 제8조(복지실태 등 조사)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보)	제15조(보건진료소 설치·운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보)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지원) 제12조(응급의료체계 구축) 제14조(민간의료기관의 육성)	
	의료법(보)	제34조(원격의료)	
	자연재해대책법(소)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해)	제4조(국고의 지원)	
인력육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해)	제4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제12조(직접지불금) 제16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9조(영어회사법인의 설립) 제20조(어업법인의 지원 등) 제21조(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2조(어업인단체 교육지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농/해)	제9조(여성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제11조(여성어업인 보육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2조(여성어업인단체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홍보사업 등 금융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해)	제5조(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수산물 생산, 유통 촉진 수산물 품종, 품질 등 R&D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 촉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해)	제5조(농어촌체험 육성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 지원)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기반정비 재해 대비 보험 및 공제사업 경영 지원 어촌체험교육 활성화 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어촌마을 해설가 교육과정

4) 관리(규제)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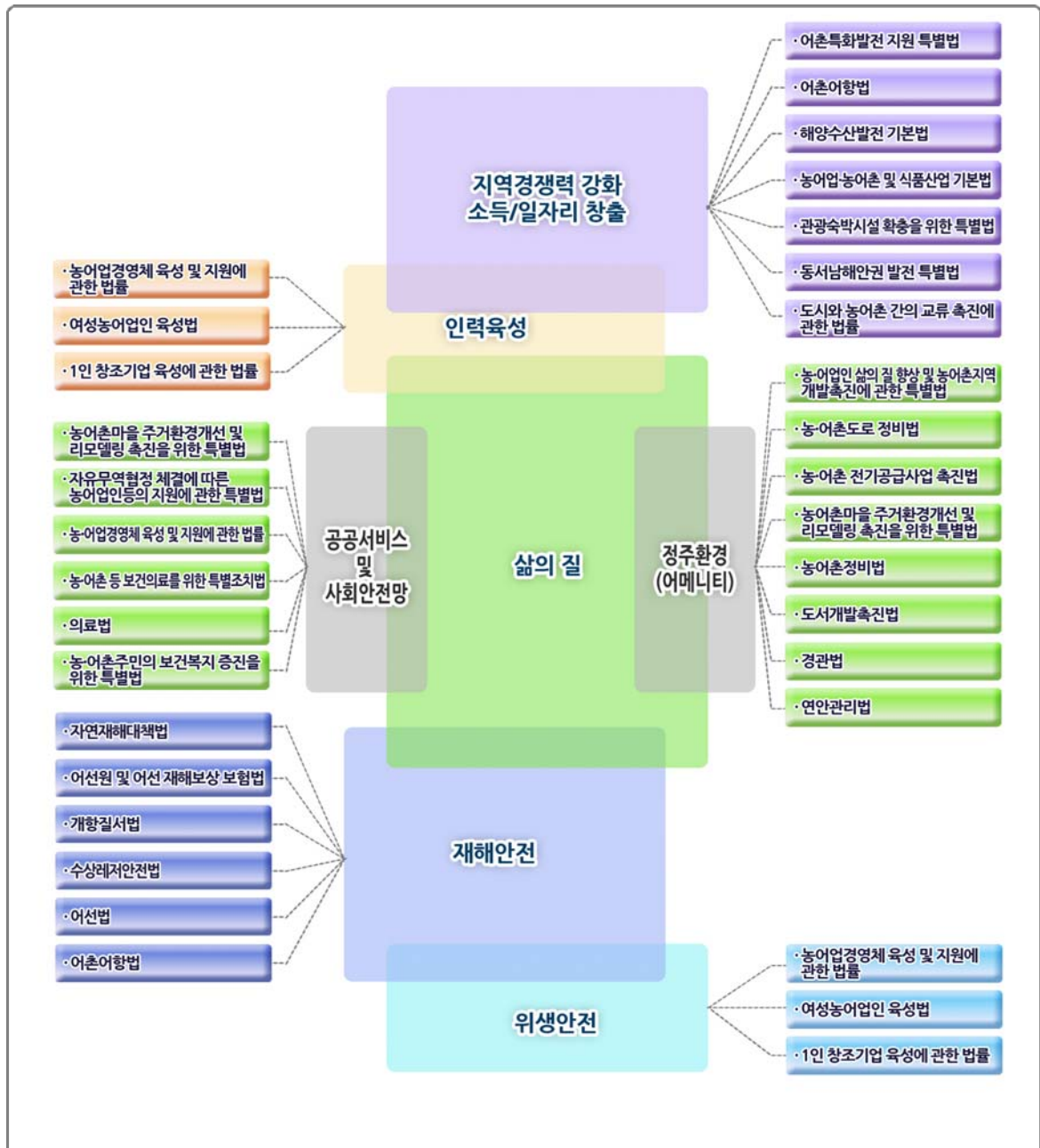
- 관리(규제)부문의 어촌·어항 관련법률은 <표 2.91>과 같이 어장, 연안, 공유수면 등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규제와 그 외의 법률로 대별됨
- 관리(규제)부문과 관련된 법률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소관법률로 세부적인 지역과 관리목적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음

〈표 2.93〉 관리(규제)부문 어촌·어항관련 법률의 특성

구분	관련법률(소관부처)	관련조문	지원내용
공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 내용)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어장관리법(해)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연안관리법(해)	제10조(연안관리지역계획 내용) 제15조(연안해역의 용도구분)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	제4조(공유수면 관리) 제8조(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13조(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제22조(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28조(매립면허)	
	해양환경관리법(해)	제14조(해양환경종합계획) 제22조(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기타	경관법(국)	제9조(경관계획 내용)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농어촌 경관 관리 가로환경 정비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역사문화적 경관 복원사업 어촌 자연경관 개선
	수산업법(해)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74조(수산진흥종합대책)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어선법(해)	제5조2(어선위치발신장치)	
	개 항질서법(해)	제5조(출입신고)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	제4조(조사사항) 제8조(조사구의 설정 등)	가구주 및 어업 종사기간 등 어법,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어선에 관한 사항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행정리 단위 실태조사 (대중교통/생활편의시설 정보화/생산자 조직 등)

1.1.2 관련 법률 검토

- 어촌·어항의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어촌·어항의 정책방향은 지역경쟁력 강화(소득 및 일자리 창출), 인력육성, 삶의 질 개선(정주환경 및 공공서비스 강화), 재해안전 및 위생안전 강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은 <그림 2.61>와 같음



〈그림 2.61〉 어촌·어항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관련 법률

1) 지역경쟁력 강화(소득 및 일자리)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촌·어항 관련 법률은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이 해당됨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2항에서는 해중경관지구의 지정과 제3항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마련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어촌관광 활성화 방향과 추진과제 마련의 근거가 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어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제1항에서는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업·어촌발전계획은 동법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계획과 같은 위상의 법정계획으로 어업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와 어촌·어항 정책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동할 필요가 있음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을 통해 마을정비와 휴양, 레저, 경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근 시행된 법률이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6차산업화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안)이 마련되어 입법 추진 중임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앞으로 어촌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법률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해안권 지역에 경제, 문화, 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 목적으로 2008년 6월 시행된 법률로 동법에 의해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2010년 완료되었고, 앞으로 서해안 및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될 예정임
 - 서해안 및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입안 시 제2차 어촌어항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함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어교류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지원,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관광 활성화 및 도어교류 활성화의 근거임
 - 특히, 어촌관광사업의 평가 및 등급화는 마을 간 선순환적인 경쟁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성고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표 2.94〉 지역 경쟁력 강화 관련법률 검토

관련법률 (소관부처)	조문내용	비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해)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어촌관광활성화 -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해)	제14조(어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①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어업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어업·어촌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해)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①지자체장은 어촌의 수산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어촌 6차 산업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국)	제5조(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입안) ①해안권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을 해안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 남해안권은 기수립('10년 5월)되었으며, 동서해안권은 2차 발전기본계획과 연계방안 마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와 지자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어촌현장체험, 어촌투자 활성화,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특화민박 조성 도어교류 활성화 - 자매결연 강화 - 어촌찾아가기 활성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문)	제14조(자금지원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호텔시설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특화민박 조성 (고급호텔화 방안)

2) 인력육성

- 어촌의 인력육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이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에서는 지자체가 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해 수산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수산계 고등학교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력이 어촌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어 특히 연근해어업과 어촌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노동강도, 보수 등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자회계시스템 지원과 보수교육을 지원하는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어업경영체의 부족한 경영, 기술, 컨설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 마련과 어업경영체와 전문컨설턴트 간 선순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함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어업인력 육성과는 달리 유무형의 어촌자원을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매우 의미가 있음
 - 6차산업화는 농림어업과 같이 전통산업을 미래산업화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촌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과제로 창조적인 외부의 인력과 어촌공동체가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1인 창조기업과 같이 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함

〈표 2.95〉 인력육성 관련법률 검토

관련법률 (소관부처)	조문내용	비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해)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어업관련 실습교육 또는 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어업경영체의 회계) ①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와 지자체는 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 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어업경영, 기술 또는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업인 중에서 전문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어촌산업경영활성화 - 인력육성 사업 어촌산업경영활성화 - 어촌경영컨설팅 지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농/해)	제9조(여성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어촌산업경영활성화 - 인력육성 사업 - 어촌경영컨설팅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융복합 어촌 - 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1인 창조기업과 정부지원 연계

3) 삶의 질 제고

(1) 정주환경(어메니티) 개선

- 어촌의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가 소관하는 법률이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실태조사를 농촌과 어촌의 별도 구분 없이 조사되고 있어 입지적 여건에 따라 삶의 질 여건 차이가 큰 어촌지역은 별도로 분리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어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도로 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 도서개발촉진법은 제정시기가 1970 ~ 1980년대로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이 농어촌지역을 통합하여 추진되었고, 사업성과도 완숙기로 접어들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연안관리법은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과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은 어촌·어항의 개발,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촌·어항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방향과 과제를 연안통합관리 계획과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어촌과 어항은 해안경관의 특성과 자연경관과 조화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창출이 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추진과제 도출에 있어서도 검토되어야 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 의한 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은 2014년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촌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함

〈표 2.96〉 삶의 질(정주환경) 개선 관련법률 검토

관련법률 (소관부처)	조문내용	비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농/해)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 마련 필요
농어촌도로 정비법(안)	제5조(도로의 정비)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농어촌정비법(농/해)	제5조(어촌경관의 보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64조(빈집정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자체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 어촌지역 내 빈집정비를 위한 근거조항 적용과 경관사업 시 세부적인 검토 필요
도서개발촉진법(안)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해)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와 친수공간 등 정주환경 개선 통합적 접근 필요
경관법(국)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어촌, 어항의 경관특성화 아름다운 어촌만들기, 3대미항 개발과 연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해)	제5조(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

(2) 공공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어촌의 공공서비스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에서 규정하는 전반적인 복지여건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특구 지정문제와 별도로 도서지역과 같은 조건불리지역에서는 원격의료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의 의료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서는 연근해 어업 등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공공서비스와 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어촌경영안정화, 어촌복지환경개선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표 2.97〉 삶의 질(공공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관련법률 검토

관련법률 (소관부처)	조문내용	비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농/해)	제12조(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촌어업인은 농촌과 달리 입지여건에 따라 복지실태가 달라 맞춤형 지원 필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보)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어촌 복지환경 개선 - ICT기반 원격의료 지원사업
의료법(보)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원격의료 특례제도 도입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보)	제7조(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복지기본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실태조사 시 어촌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체계 마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해)	제5조(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있다.	한중 FTA 등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연근해 소규모 영세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어촌어항발전계획과 연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해)	제12조(직접지불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양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어촌경영 안정화

4) 위생 및 재해안전 제고

- 어항의 위생·재해 안전성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법률에 대해서 정리하면 <표 2.98>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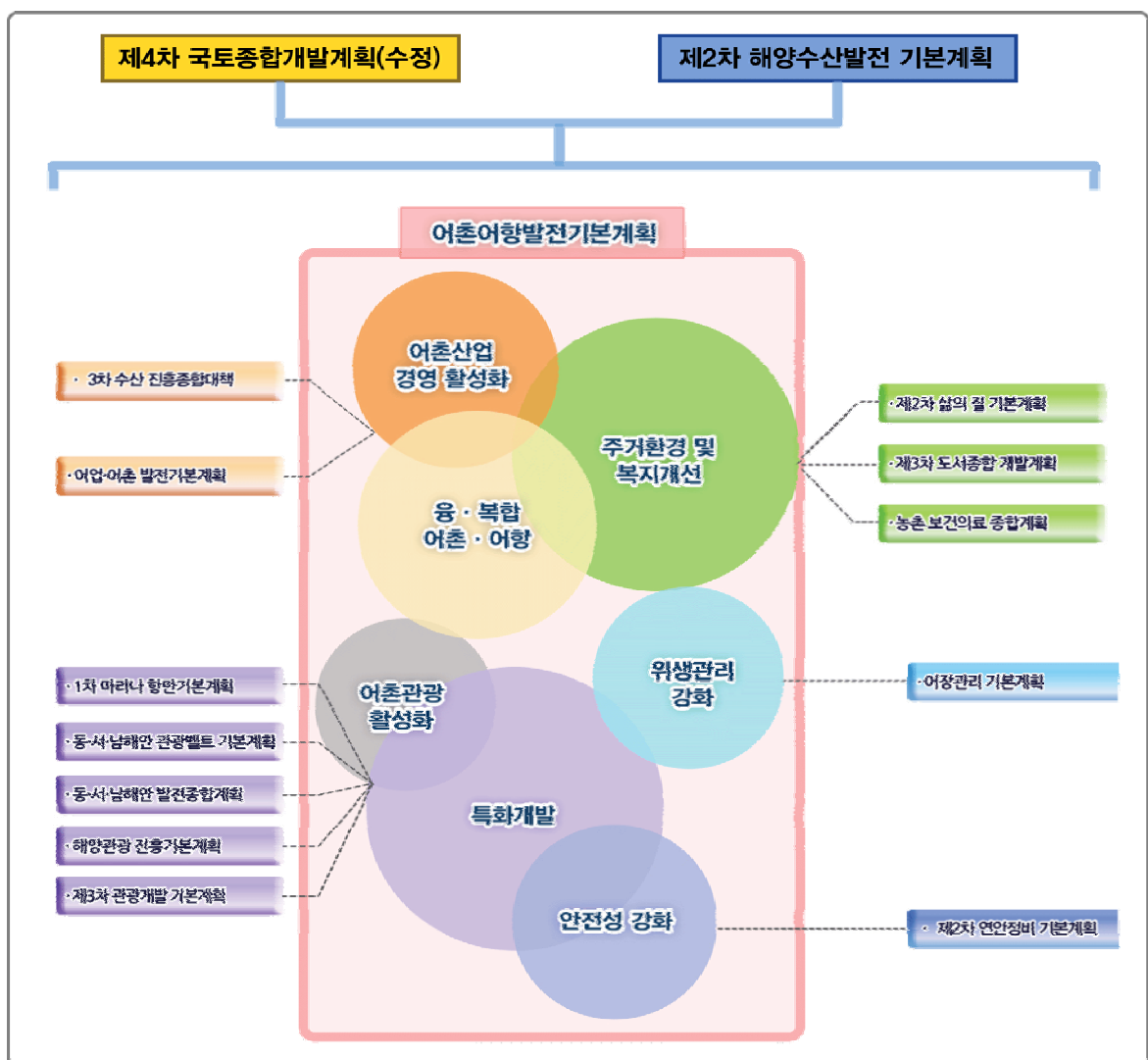
〈표 2.98〉 위생 및 재해안전 관련법률 검토

관련법률 (소관부처)	조문내용	비고
어장관리법(해)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 인식강화와 국제기준 강화에 따라 어장환경 기준에 대한 관리 강화 어항의 위생관리강화 -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해)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 부재로 기준마련 시급히 필요
개 항질서법(해)	제5조(출입신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구역시설에 출입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FIS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수상레저안전법 (해경)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무면허조정의 금지)누구든지 조정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항의 특화개발 - 다기능어항확대 개발 - 어촌역 어항 육성
자연재해대책법(소)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지자체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어항의 특화개발 어항 구조조정에 따른 창조적 활용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 어항개발

1.2 관련계획 검토

1.2.1 개요

- 2차 발전기본계획은 공간적 범주에서 연안의 경제활동 중심공간으로 그 범위가 국토 일부에 해당하지만 저기술, 전통산업의 중심인 어촌·어항이 새로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축으로서 중요한 관련 계획과 연계성을 높이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핵심내용과 2차 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
- 2차 발전기본계획과 관련된 국토 및 지역계획(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어촌·해양관광 관련 계획, 삶의 질 관련 계획, 위생·안전 관련 계획 등을 정리해 보면 <그림 2.62>과 같음



〈그림 2.62〉 2차발전기본계획과 관련계획 검토

1.2.2 국토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

(1) 개요 및 주요 내용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은 미래의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으로 대외적 개방과 국내지역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국토구조를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동·서·남해안에 대한 기본 발전전략이 제시되어 있음
- 남해안축 :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서해안축 :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동력 육성
- 동해안축 :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그림 2.63〉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주요 내용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전략별로 2차 발전기본계획과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표 2.99〉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융복합 어촌의 조성 급증하는 어촌해양관광 수요와 연계 방안 추진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산·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조성 	어촌, 어항의 안전성 제고

2)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년)

(1) 개요 및 주요 내용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해양개발, 해양환경, 해운항만, 수산 등의 합리적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국가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계획임
- 동 계획은 2020년 해양수산 비전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해양 강국 실현”을 제시하고, 6대 추진 전략에 33개 중점과제, 105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6대 추진전략 중 어촌·어항과 관련성이 높은 추진과제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실현과 미래형 해양문화관광 육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함
 -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실현에서는 어촌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 어촌공동체 법인화를 통한 어촌산업 육성의 기반구축, 도어교류를 통한 도시어촌 상생 기반구축,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2차 발전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시장은 해중레저 활동 저변 확대를 통한 어촌공동체와 민간사업자와의 협력거버넌스 마련, 소비자, 공급자의 관광서비스 수급을 매칭시켜 주는 어촌해양관광 스마트 가이드, 어촌의 입지적 특성과 기존 개발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어촌의 권역화와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방향성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표 2.100〉 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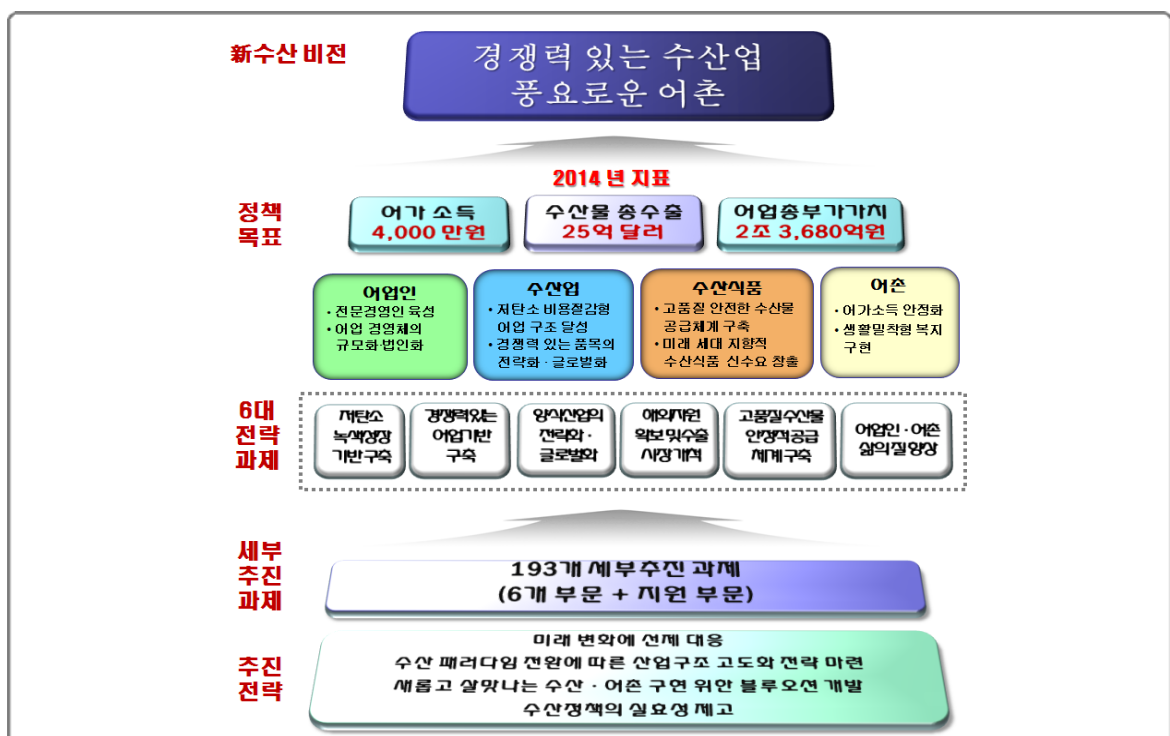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연안어촌 건설 - 어업경영체의 법인화 - 도시어촌 간 교류 활성화 -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 다변화 - 어촌복지 강화 	어촌공동체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어촌공동체 회사, 도시어촌상생 강화,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복지 환경 개선 등과 연계
미래형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스포츠 시장 육성 - 해양관광자원의 활용 기반구축 - 도서관광의 활성화 	해중레저 거점마을 어촌해양관광 스마트 가이드 어촌그랜드 디자인

1.2.3 수산·어촌 상위계획

1)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년)

(1) 개요 및 주요 내용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수산업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수산업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2014년까지“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총 193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新수산 비전 및 전략, 2009, p.66

〈그림 2.64〉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비전 및 과제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촌산업화와 생활밀착형 복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차 발전기본계획의 핵심과제와 연계됨

〈표 2.101〉 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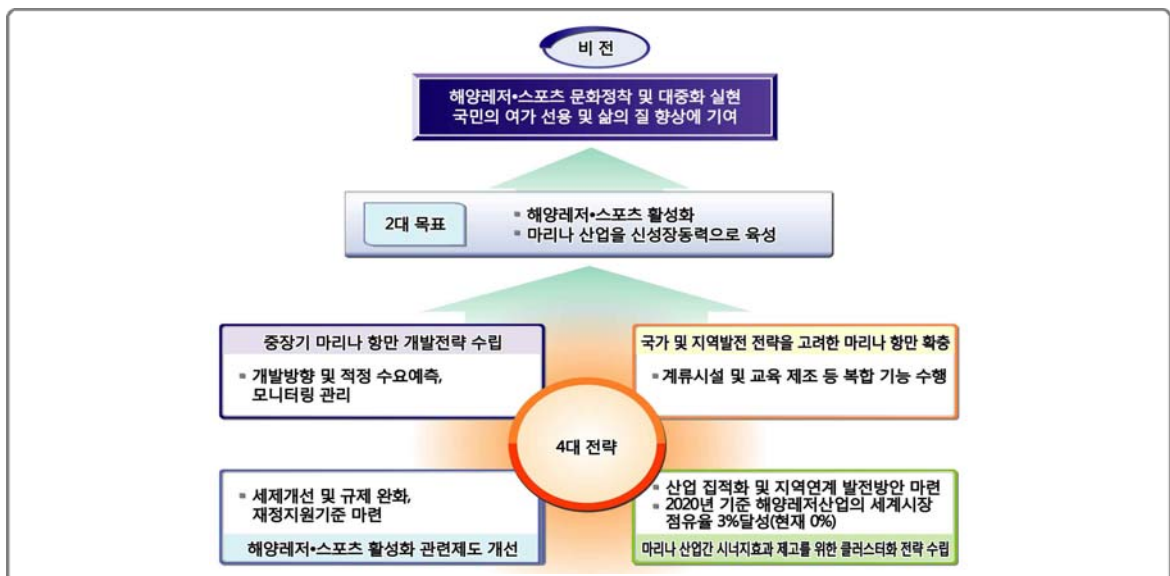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산업화를 통한 어가소득 안정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어촌복지 정책 구현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과 어촌복지환경 개선은 2차 발전계획에서 추구하는 핵심전략임

1.2.4 어촌·해양관광 관련 계획

1)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2019년) 변경계획

(1) 개요 및 주요 내용

- 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마리나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 동 계획은 2019년까지“해양레저·스포츠 문화정착 및 대중화 실현, 국민이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전략을 제시하였음



〈그림 2.65〉 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촌산업화와 생활밀착형 복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차 발전기본계획의 핵심과제와 연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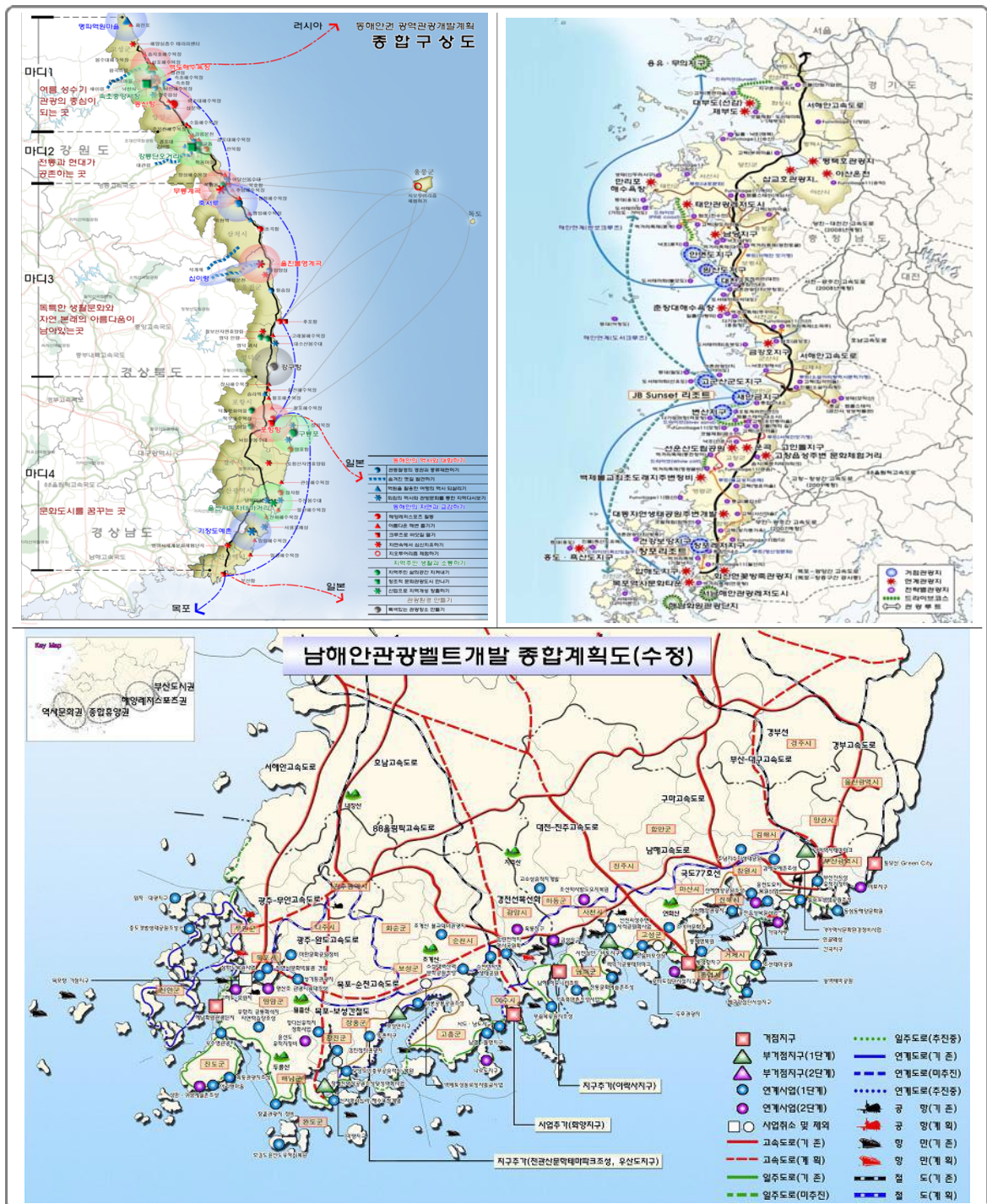
〈표 2.102〉 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전략 수립	- 마리나항만 개발방향 - 적정 수요예측 및 전국개발 모니터링 관리	어항의 특화개발을 통한 마리나항만과의 연계성 강화하고, '어촌 역' 조성을 통한 중간 정거장 개발로 어촌관광 활성화 유도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한 마리나항만 확충	- 지역민과 레저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개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마리나항만 개발	- 연안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구분 - 해역별 공공성 부여	
관련 법제도 및 규제 개선	- 자유로운 해양레저활동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2) 동·서·남해안 광역관광 개발계획

(1) 개요 및 주요 내용

- 동·서·남해안 관광벨트 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안의 자연, 문화,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어촌·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임



〈그림 2.66〉 동·서·남해안 광역관광 개발계획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동·서·남해안 광역관광 계획은 해당 시군 단위로 주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해역별 개념과 전략을 마련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어촌·어항의 집객력과 융·복합 가치를 통해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광역관광 계획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2차 발전기본계획 사업추진 시 타 부처 관광계획과도 연계시켜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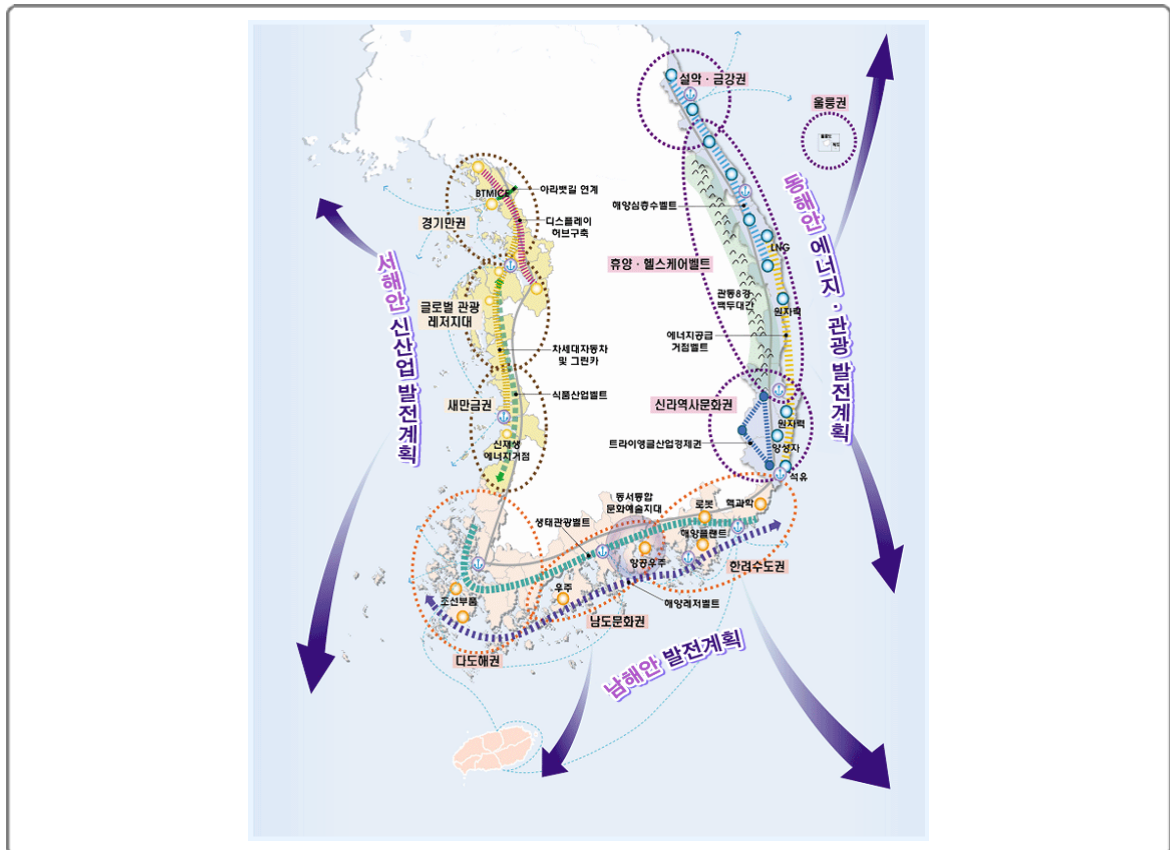
〈표 2.103〉 동서남해안 광역관광 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동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4개 광역시·도 11개 시·군)	<div> <div>기본컨셉</div> <div>개발목표</div> <div>비전</div> </div> <p>자연과 문화의 콘텐츠로 열아가는 신통해안 관광이야기 “Blue Ocean Expansion” Tourism · Culture · Anim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안의 역사와 대화하기 - 동해안의 자연과 교감하기 - 동해안의 지역주민 생활과 소통하기 - 관광기반 만들기 - 관광장소 만들기 	어촌·어항의 특화개발과 관광활성화 방향과 매우 밀접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마리나(어촌역), 경관사업 등 지역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사업성과를 확대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4개 도, 20개 시·군)	<p>21세기 웰빙사회를 위한 한반도 해양관광 중심축 형성</p> <p>자연환경과 생태,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활용한 자연·문화중심지역</p> <p>웰빙사회에 부합하는 국민유망 관광지대</p> <p>동북아 관광거점 지역</p> <p>3개 국립공원, 2개 도립공원 - 먹거리/축제 등 생활문화 - 고인돌 등 세계문화유산과 한국사에 빛나는 역사자원</p> <p>국민관광수요의 지속증대 - 해양, SIT, 문화 관광형태 중 대 - 관광자원개발의 선진화</p> <p>동북아중심/대 중추 교육관광대 - 고속도로, 국제공항 확충 등 접근성 향상 - 개방형 국토 개발축의 하나</p> <p>다양한 자연, 역사·문화자원</p> <p>관광·여가활동의 생활화</p> <p>서해안의 일지적 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 수도권 당일형 관광명소화 개발 - 충청남도 : 국제적 해양관광 중심지 조성 - 전라북도 : 자연, 문화 공존형 관광지대 - 전라남도 : 해양, 섬, 생태중심 테마관광 	
남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3개 광역시·도 23개 시·군)	완료	

3) 동서남해안 발전종합계획

(1) 개요 및 주요 내용

- 동서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안권별 발전구상 및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



〈그림 2.67〉 동서남해안 종합발전계획 기본구상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표 2.104〉 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화합 연안벚길 -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 해안경관 조망벨트 - 해안마을 미관개선(시범사업 4개소) 	<p>시범사업은 경관중심의 사업으로 어촌어항경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p> <p>중점사업은 지역별 거점개발로 어촌, 어항특화개발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p>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항 배후지 개발 -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 울산 진하 해양레저클러스터 - 동해 망상 웰빙휴양타운 - 영덕 고래볼 해양복합타운 - 강릉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4)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09~2017년)

(1) 개요 및 주요 내용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연안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동력으로서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그림 2.68〉 해양관광의 단계별·권역별 추진전략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표 2.105〉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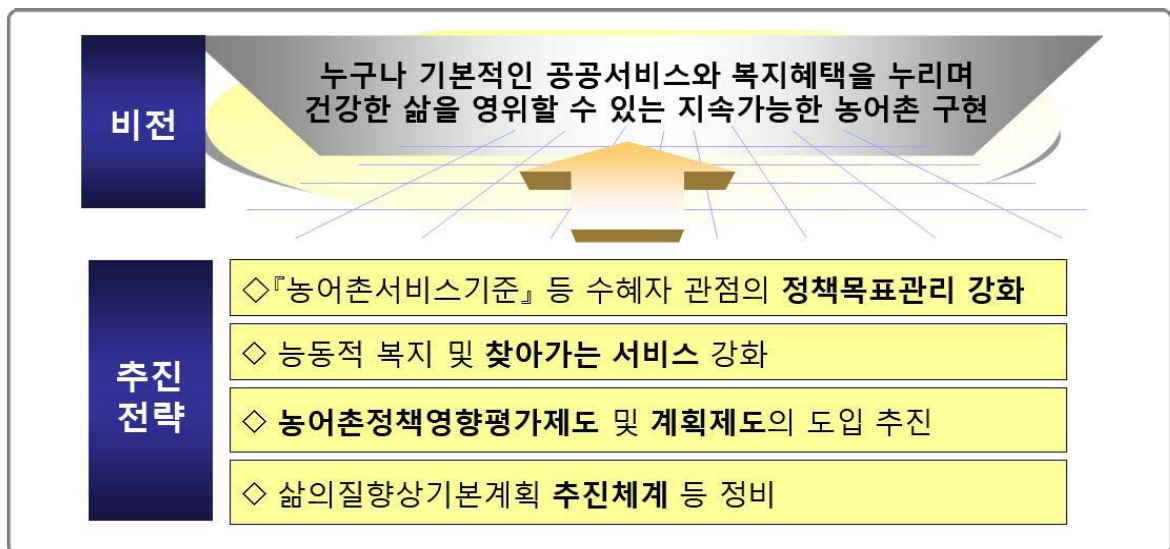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해양관광 기반구축	- 해양관광 자원조사 및 연계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해양관광 협의체 구성	어촌어항 특화개발, 어촌관광활성화, 융복합어촌, 어항의 구조조정을 통한 창조적 활용 통해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 개발 추진
해양관광 시장 활성화	- 차별화된 해양관광 공급시장 조성 - 해양관광 소비시장 세분화 - 해양관광 마케팅 강화	특히, 해중레저, 마리나개발 등과 연계
해양관광 복합산업화	- 1,2,3차 산업과 해양관광의 융합	

1.2.5 삶의 질 관련 계획

1)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2010~2014년)

(1) 개요 및 주요 내용

- 2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제5조(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한 법정계획임



〈그림 2.69〉 2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표 2.106〉 2차 삶의 질 기본계획 부문별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보건복지 증진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 응급의료 인프라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 업무상 재해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및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 다문화가정 복지 증진 - 농어촌형 능동적 복지시책 강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어촌의 복지, 교육,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삶의 질 기본계획과 2차 발전기본계획을 연계할 필요성 있음 특히, 어촌지역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개선목표 설정 및 사업추진 관리를 통해 어촌의 부족한 여건을 해소해 나가는 전략마련이 필요함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 농어촌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단위 자율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지원 -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 체계적 지역계획 수립 지역 특성화 생활여건 개선 - 명품마을 조성 - 기초생활여건 개선 지속 - 정보화 기반 구축 지속	

2)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년)

(1) 개요 및 주요 내용

-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근거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서지역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은 관련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도서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특성화하여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을 목표로 하였음



〈그림 2.70〉 제3차 도서개발계획의 목표와 방향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표 2.107〉 2차 삶의 질 기본계획 부문별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유형별 개발	관광자원형, 문화유적형, 농업자원형, 수산자원형, 체험관광형으로 세분화하고 획일화된 도서를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소득향상에 기여	2차 발전기본계획에서 도서지역은 어촌어항정책의 중요한 공간으로 어촌산업화와 새로운 권역화 개발에 따른 방향성과 도서 유형별 개발 연계 추진
인프라 확충	연륙, 연도, 어항개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서지역의 생활불편과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	특히, 부족한 도서어촌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연계하여 추진

1.2.6 위생·안전 관련 계획

1)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2~2016년)

(1) 개요 및 주요 내용

- 2차 어장관리기본계획은 「어장관리법」 제3조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어장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어장환경 보전 및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



〈그림 2.71〉 2차 어장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 2차 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표 2.108〉 2차 어장관리기본계획 추진전략 연계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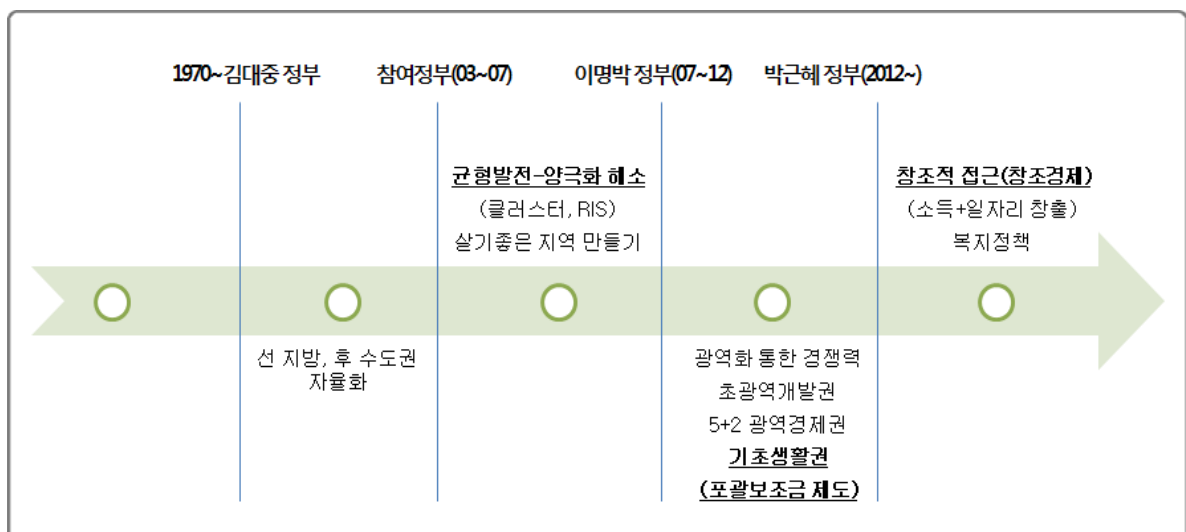
추진전략	주요 내용	2차 발전기본계획 연계방안
자율적인 어장관리 및 제도 정비	어업인 스스로 어장관리를 유도하되 양식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	2차 발전기본계획의 위생관리강화는 어촌-어항-어장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장환경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어장환경 개선	사후적 어장관리에서 예방적 어장관리로 전환	

2 국내외 사례 검토

2.1 국내 지역정책의 변화

2.1.1 정부별 지역정책

-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1960년)에서 22,489달러(2012년)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속한 압축 성장을 이루었으나, 오늘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살율과 낮은 국민행복지수에 머물러 있음
- 특히, 계층 간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27에서 2012년 0.31로 증가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1970~199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어촌 지역은 인구유출과 활력저하로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미 침체된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한계가 있음
- 지금까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그림 2.72>과 같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어촌지역은 이러한 균형적인 지역정책에서도 다소 소외되어 왔으며, 일자리 감소 → 활력저하 →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그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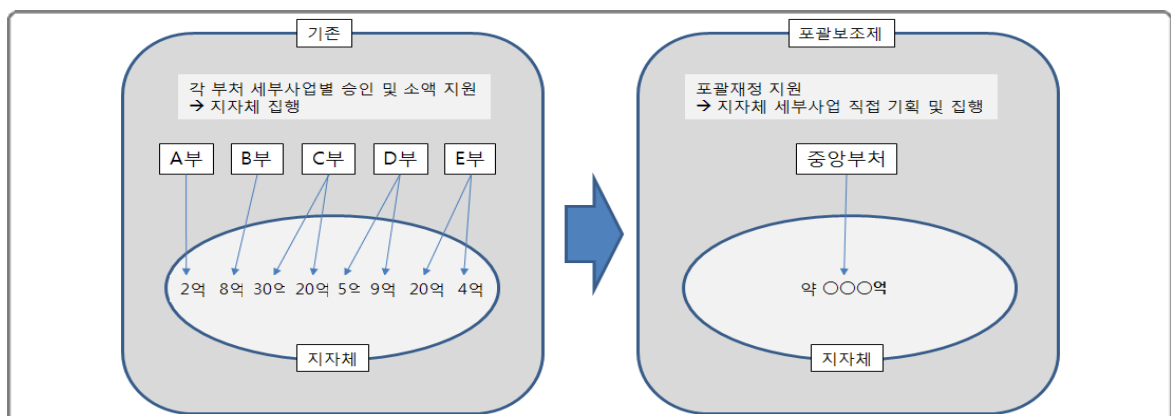
〈그림 2.72〉 국내 지역정책의 흐름

1) 참여정부(2003~2007년)

-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세부과제가 추진됨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농어촌은 인구유출, 고령화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지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놓임
- 각 정부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적시성, 적정규모성을 확보하는데 역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사업과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역개발계정사업에는 낙후지역 및 농어촌지역 개발, 지역문화·관광육성지역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지역혁신계정사업은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 R&D 육성이 해당됨

2) 이명박정부(2008~2012년)

-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은 4+ α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 163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농어촌지역은 정주, 주거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공되는 발전정책을 추진
 - 163개 시·군을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
 - 시·군 스스로가 공간적·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상향식 발전전략을 추진
- 특히 이명박정부에서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함



〈그림 2.73〉 포괄보조방식 개념도

3) 박근혜정부(2013~2017년)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란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였고, 3대 추진전략 6대 중점 추진방향 17개 실천과제를 제시



〈그림 2.74〉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비전

(1) 농어촌중심지 육성

- 농어촌중심지를 배후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육성시켜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
 - 농어촌복합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교육, 육아, 문화, 복지 등 통합서비스기능 제공

(2)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정비

- 농어촌 마을단위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나 농어촌주택개량 및 농촌마을 리모델링 등 각 부처사업들을 묶어 낙후지역 중심의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집수리나 지붕개량 등을 추진

(3) 낙후지역 중첩규제 개선

- 낙후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

(4) 주민 중심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개발을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성장촉진지역의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이들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중복 투자 등 종합적 관점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
- 정부는 앞으로 기존 사업들을 지역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주민과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개편하고,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해 지원을 차별화 함
 - 시·군·구 자율편성재원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창조지역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창의적 사업모델로 활용 예정

(5) 농어촌 일자리 확충

-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농어촌 복합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
 - 도농 인적자원 매칭 시스템, 마을 간 연계를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 지원, 농어촌관광 등급제 시행 등 지원

(6)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강화

- 초등학교의 경우 학령 아동, 통학거리, 1면 1교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이 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 중고교의 경우에는 적정규모화를 권장하고 학교 이전·증설비 등에 대한 재정을 지원
- 특히 ICT 콘텐츠,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 및 체험 기회를 제공

(7) 지역 간 협업관광 활성화

- 기존의 관광시설 조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인근 지역과 함께 공동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거나 연계하여 지역관광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

(8) 지역 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

- 일률적인 물리적 시설 위주의 공급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최첨단 문화예술교육버스 등을 어촌 등 소외지역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9) 생태, 역사문화 보전 및 자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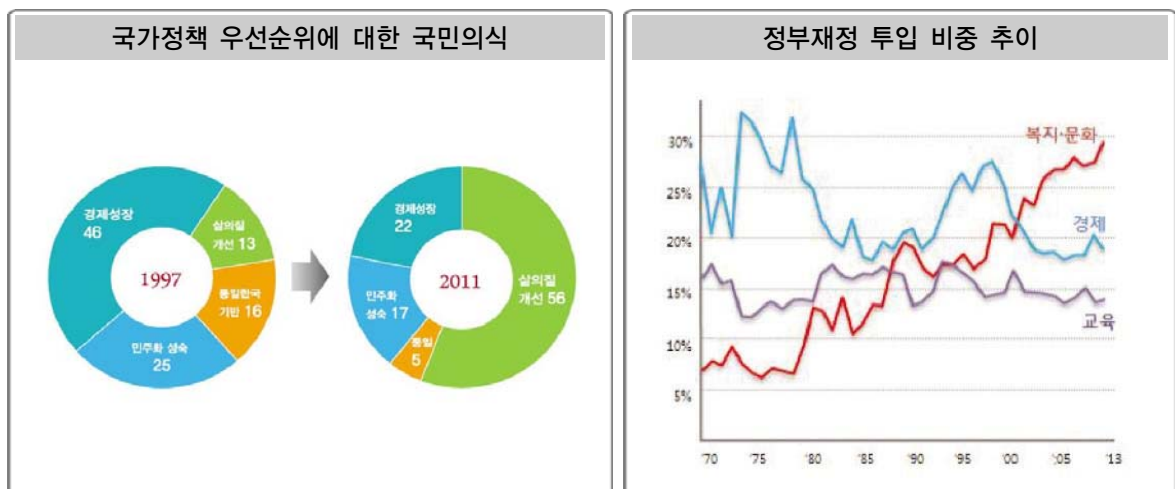
- 지역이 지닌 생태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발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

(10) 의료 취약지 지정, 관리

- 2년 마다 의료이용실태, 의료자원 분포 등을 평가해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13년까지 의료 취약지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종합의료취약지수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
- 의료 취약지에 U-Health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격의료이 가능하도록 지원

2.1.2 주민수요 및 정책환경의 변화

- 최근 들어 지역정책에 대한 수요가 물질적인 경제성장 보다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지자체의 역량이 높아져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역정책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자체 및 주민주도의 상향식·분권형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림 2.75〉 정책수요 변화 및 분야별 정부재정 투입 현황

2.2 어촌부문 해외 지역정책 사례

2.2.1 개요

- OECD 국가들에서도 지역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수단들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지역정책 필요성 제기
 - 낙후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재분배 중심의 지역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
 - 대부분의 보조금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 결과 그 효과가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면서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
 - 특히 선별적 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 개발방식은 중앙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지식이 해당 지역을 선정하는 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
 - 기존 지역정책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지역의 수동적인 행태로 인해 장기적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1) 영국(Big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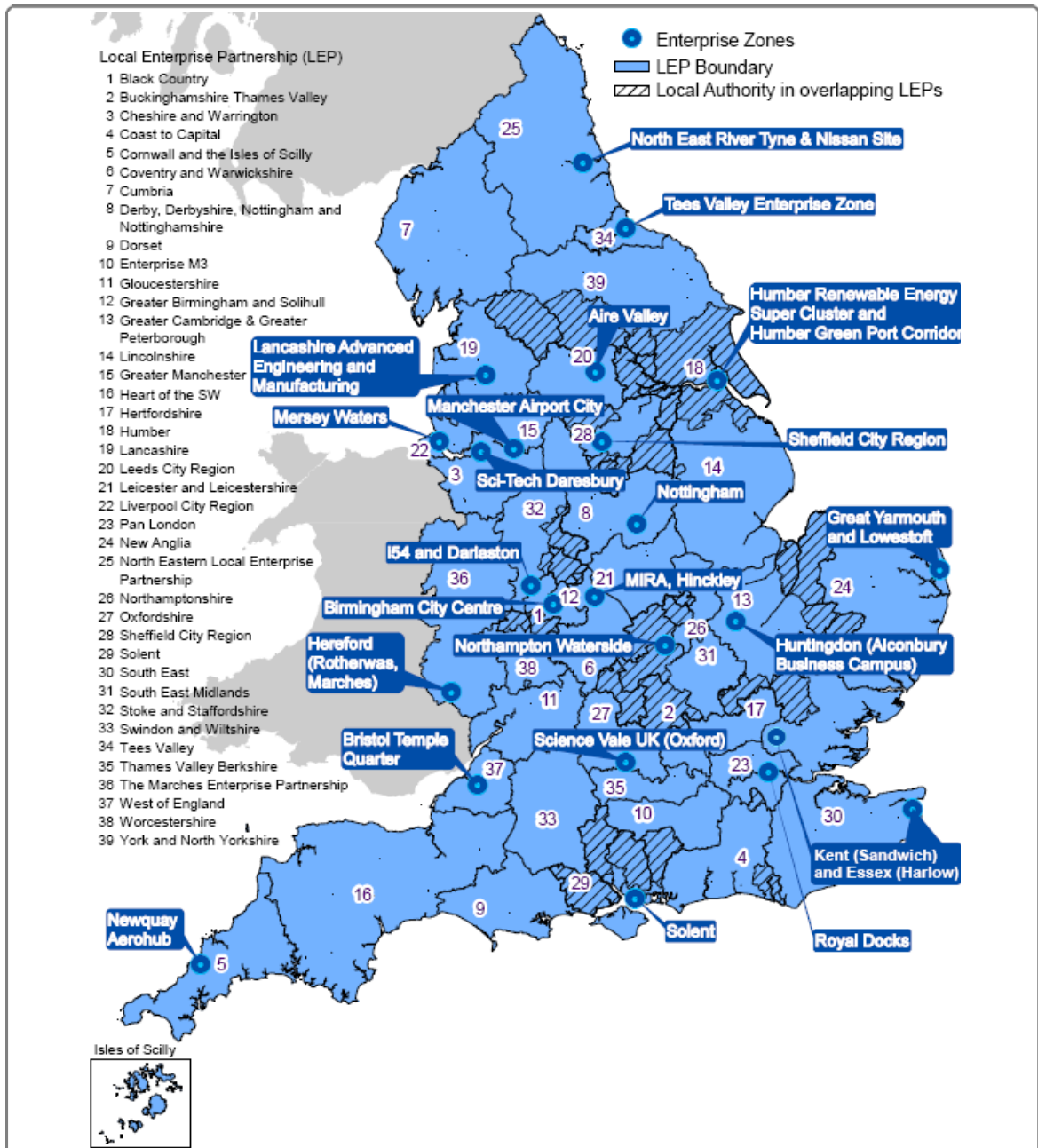
- 영국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간기반(Place-based)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노동당과 보수당 집권에 따른 세부전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표 2.109〉 영국 지역정책의 동향

구 분	광역단위 (Region)	로컬단위 (Local)	광역 재등장 (Region)	로컬 재등장 (Local)
기간	1970년대 (1974, 노동당)	1980~90년대 (1979, 보수당)	2000년대 (1997, 신노동당)	2010년 이후 (2010, 보수당 연정)
논리	공공관리	신로컬니즘 (New Localism)	신지역주의 (New Regionalism)	큰 사회 (Big Society)
추동력	민주화와 서비스 전달	행정기구 조정	경쟁력	경쟁력, 재정적자 감소
구조	공식적 : GLC, 6개 대도시	공동기구 : 런던. 대도시	다양 : 파트너십, 공동기구, GLA	다양 : 파트너십, 공동기구, 기능지역

- 2010년 이후 들어선 보수당 연정의 지역정책에 대한 기조는 큰 사회(Big Society)로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으로 이양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임
 - 영국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경쟁력 회복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재정의 안정을 달성하고,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

- 영국 지역경제에서 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
- 기존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가 광역 행정지역에 기반하고 있고, 도시권이나 기능적 경제권(functional economic area)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
- 실질적인 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위에 집중된 권한을 로컬단위의 지자체와 산업계로 이동시켜 로컬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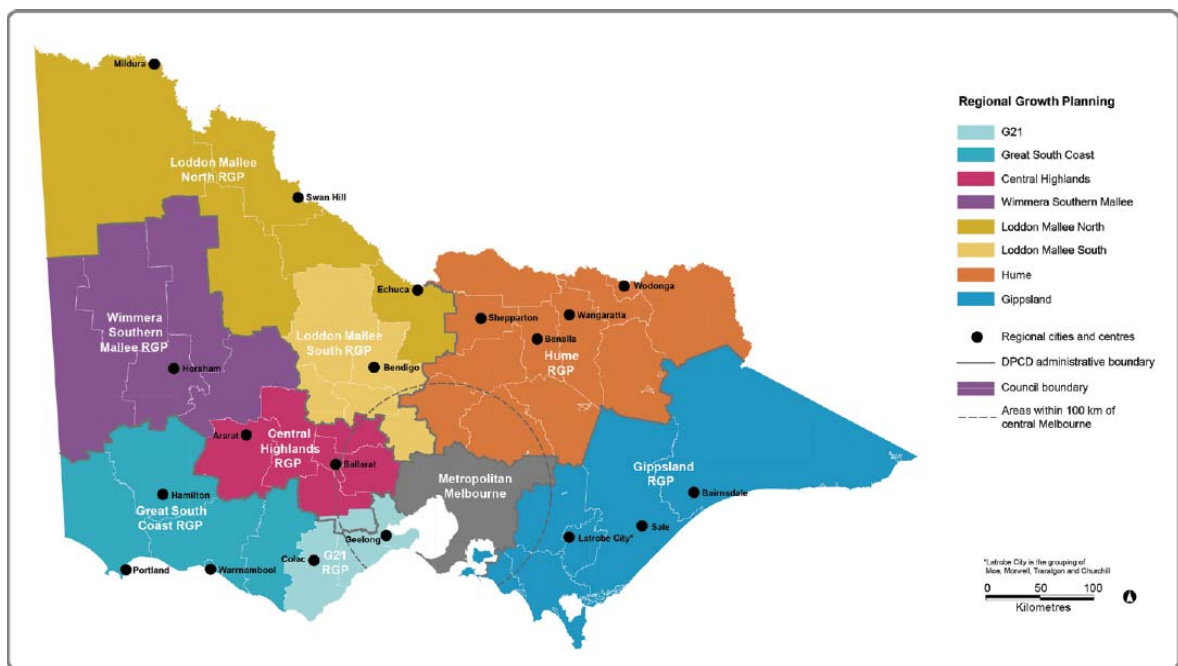


자료 : <http://www.bis.gov.uk/policies/economic-development/leps>

〈그림 2.76〉 영국 지역산업위원회(LEP)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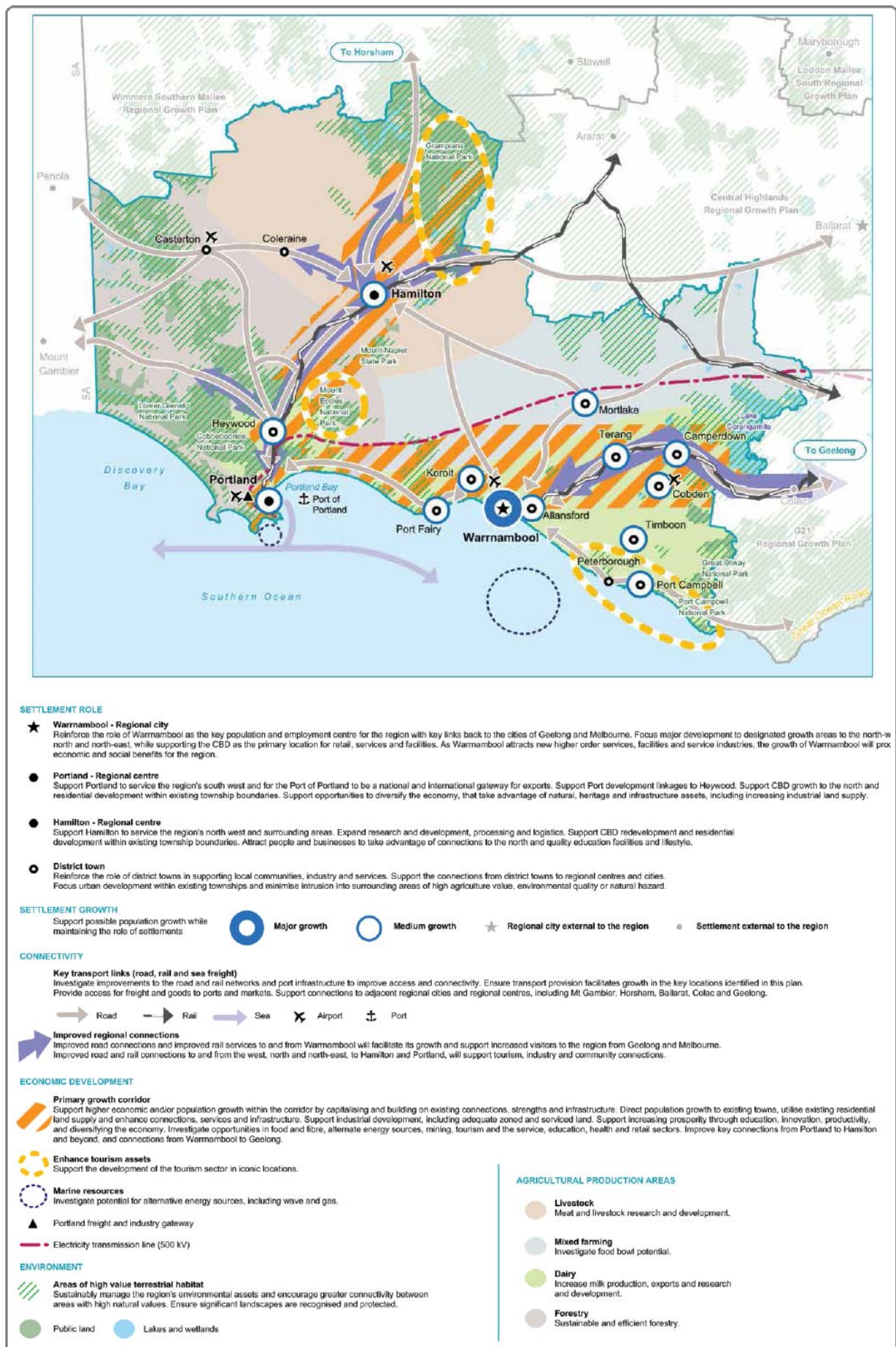
2) 호주 지역성장계획(Regional Growth Planning)

- 호주의 지역정책은 중심도시와 연계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정부 단위로 지역성장계획(Regional Growth Planning)을 수립
 - 지역성장계획은 주 정부별로 권역단위로 세분화하고 해당 권역별로 토지이용, 농어업, 관광, 주거, 상업, 산업개발, 환경보전, 교통 등 단기, 중장기 세부전략을 마련



〈그림 2.77〉 호주 빅토리아주 Regional Growth Planning

- 지역성장계획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지만 중앙정부,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수립함
 - 산업의 다양화,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강화
 - 지역의 매력성(장소적 브랜드화)을 높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조성
 - 건강, 교육, 정주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 제고
 - 지역 내 마을단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효율성 제고
 - 지역자원과 환경적인 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 농어업 생산 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및 관리
 - 토지와 기반시설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지역의 어메니티 향상



〈그림 2.78〉 빅토리아주 Great South Coast 지역성장계획(안)

3) 일본(농림어업 6차 산업화)

- 일본의 농산어촌이 직면한 문제는 국내 여건과 흡사한데, FTA 체결에 따른 개방의 압력, 농림수산물 가격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농어촌의 활력이 현저히 저하
- 일본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어업관련 지원은 수산물의 신규 시장 개척, 가공공장 등 수산업 공동이용시설, 어업관련 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융자, 어업경영 등에 필요한 단기 운영자금 등이 있음
- 신사업 창출과 관련된 지원은 관광객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전통요리 등을 기초로 한 신 메뉴 개발, 부당한 상표에 대한 대응,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 정보 확인, 농림수산물활동 홍보 등

〈표 2.110〉 일본 어촌6차산업화 사업 지원내용

어업 관련	신사업 창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의 신규 마켓 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수산업 강화계획에 의거 지원 · 가공공장 등 수산업 공동 이용 시설 · 어업 관련 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 융자 · 어업경영 등에 필요한 단기 운용자금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 · 전통 요리 등을 기초로 한 신 메뉴 개발 · 부당한 상표 대응 · 농림수산분야의 지적 재산 정보 확인 · 농림수산물활동 홍보



자료 : 일본 수산청(www.jfa.maff.go.jp)

〈그림 2.79〉 일본의 어촌 6차산업화 개념

2.2.2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OECD 국가들은 기존 지역정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인지하고 새로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음

- 첫째, 문제 인식과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기존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둘째, 정책범위에 있어서도 소득과 정주환경 위주의 부문별 접근에서 삶의 질 전반에 걸쳐 통합적·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셋째, 정책의 공간지향은 낙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기조에서 낙후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넷째, 정책개입의 단위가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기능지역으로 전환되어 자원, 동질성, 연계 등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음
- 다섯째, 접근방식에서도 소득, 정주환경, 인력 등 개별 문제 해소를 위한 단일방식에서 상황별, 지역별로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여섯째, 정책초점은 외생투자 및 이전 등 외부적 요인에서 내생적 지역자산·지식 등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어 발전의 잠재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 일곱째, 집행주체와 수단은 중앙정부 중심의 보조금 및 국가지원에서 지자체, 이해집단을 포함하여 외부의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자료 :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포럼 자료집”, p.47에서 인용, 이원섭, 2012년

〈그림 2.80〉 OECD 국가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

2.2.3 어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국내외 지역정책 동향과 현 정부의 국정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촌·어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지금까지 어촌은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지역균형발전의 범주에서 벗어나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되어야 함
 - 정책의 범위에서 있어서도 정주환경,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위생, 복지 등 어업인과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
 - 특히, 어촌·어항이 최근 국민 여가공간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행복을 위한 감성공간으로 지역의 브랜드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추진주체에 있어서도 정부, 지자체 중심에서 마을주민, 협동조합, 창조기업 등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그림 2.81〉 어촌·어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3 어항부문 해외정책 사례

2.3.1 개요

- 어항부문의 해외정책은 일본 제3차 어항·어장 정비계획(2012년~2016년)을 통해 주요 정책 기초를 살펴보기로 함
- 일본의 어항정책은 지난 2011년 3월 도호쿠(東北)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 방사능 유출로 인해 어촌·어항의 방재와 재해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산물의 국내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어항시설의 위생관리 강화와 어장환경 개선을 마련하고 있음

2.3.2 주요정책

1) 재해에 강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추진

- 후쿠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어항 및 어촌지역 복구와 자연재해에 강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
- 자연재해에 강한 지역만들기를 위한 사업은 어항구역 내 내진설계 반영, 어촌지역 내 방재시설 설치
- 내진설계 도입 양륙시설(수산물 유통 거점어항) : (2009년) 20% → (2016년) 65%
- 방재시설 설치된 어촌지역 인구비율 : (2009년) 44% → (2016년) 80%

2)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강한 수산업 만들기 추진

- 수산물 유통 거점어항을 중심의 위생관리와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위생관리형 어항에서 출하되는 수산물 비율 : (2009년) 29% → (2016년) 70%
- 어촌지역의 배수처리 인구(비율) : (2009년) 17만 명(29%) → (2016년) 24만 명(65%)

3)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어장환경 정비 추진

- 수산 동식물의 어장환경 정비와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통해 생태계 기반 접근의 연안어장 조성
- 새로운 어장조성으로 11만 톤 수산물을 신규로 공급

3 개발 수요검토

3.1 어촌부문 수요검토

3.1.1 어촌종합개발사업

- 2단계 사업 추진 중 2010년부터 포괄보조제도(광특회계)시행으로 미시행 권역(18개 권역) 발생
 - 인천(1권역), 경기(1권역), 전북(1권역), 전남(8권역), 경북(4권역), 경남(3권역)

〈표 2.111〉 어촌종합개발사업 잔여권역 현황

구 분	지역분류	권역명
농림축산식품부 (11개 권역)	일반농산어촌지역	서산 지곡, 사천 송포, 하동 동부, 하동 광양만 신안 증도, 신안 하의, 신안 압해, 해남 화원 고흥 여자북부, 고흥 오마, 해남 송지 2
국토교통부 (5개 권역)	도시활력증진지역	화성 서신, 포항 양포, 포항 석병, 포항 대포
안전행정부 (2개 권역)	특수상황지역 및 개발대상도서	강화 중부, 여수 초도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3년

3.1.2 어촌체험마을 조성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100개소(2013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34개소의 추가지정 필요
- 10년 이상(2001년 ~ 2003년 시설조성 28개소) 및 노후화된 체험마을 사용으로 체험객들의 안전·위생 보장을 위한 체험마을 재생 사업 필요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평가를 통한 퇴출마을(2013년 기준 21개소)들의 사업의지, 수요 등을 검토하여 어촌체험 회생프로그램 구축·활성화 기회 부여
- 또한 어촌체험마을 발전대책 수립 연구에서 조사된 장기수요는 351만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340개소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시·도별 분포된 어촌계수 비율로 환산하여 340개소에 대한 지역별 장기수요를 검토

〈표 2.112〉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지정 및 신규 수요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년	100	3	3	9	7	0	8	7	29	7	20	7
'18년까지	34	0	1	3	3	2	6	0	9	3	3	4
장기수요	340	10	13	6	13	0	27	11	143	26	77	17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발전대책 수립 연구, 2010, p.92

3.1.3 시·도별 개발계획 검토

1) 부산광역시

(1) 동북아 해양산업 선도도시

- 해양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전통해양산업 고도 효율화 추진 및 신흥 해양산업 성장 동력화)

(2) 품격있는 녹색·창조도시

-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북항재개발)
- 그린생활 인프라 구축(지역 간 갈맷길‘Green Way’구축)

(3)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 조성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 가덕도 4계절 관광·휴양지 조성,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설

(4) 어촌관련 발전축

- 해양관광·문화축(서면-해운대-기장-장안)
 - 벅스코, 동부산관광단지, 핵과학 특화단지, 마리나 산업 육성 등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 해양산업선도축(광복-하단-가덕·녹산)
 - 하단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신산업지대 육성
- 해양·내륙관광축(가덕도-녹산-강서)
 - 거가대교 개통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가덕도를 체류형 해양복합관광·휴양지로 조성
 - 해양과 내륙을 연계하는 관광발전의 교두보 형성

2) 인천광역시

(1) 정서진 일원 관광활성화 방안

- 정서진(경인항) 친수레저시설 조성
- 관광·문화·레저시설 및 모터스포츠파크 등 확충
- 경인항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수변 친수공간 조성

(2) 기반시설 계획

- 수상교통 네트워크 개발(인천 연안크루즈 노선 개발을 통한 관광상품화 기여)

(3) 도심 및 주거환경

- 역사문화공간에 기반을 둔 도시재창조
- 도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관광레저의 거점 육성 및 선착장 정비 등 도서지역 정주기반 마련

(4) 경관 및 미관

- 자연-해양-도시가 연계된 독창적 경관계획
- 역사문화삶이 연계된 경관계획

(5) 문화 및 관광

- 인천형 창조관광 진흥
- 해양·도서 및 녹색관광 육성
- 문화관광거점 조성 및 산업 육성
- 국내외 관광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
- 관광개발 차별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광소권역 설정

3) 울산광역시**(1) 산악·해양·생태·산업관광 육성 및 연계**

- 강동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개발 지속추진
- 관광레저형 기업연수시설 유치(영남알프스 인접지역, 강동 등 해안지역 입지)
- 해양관광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진하권 해양레포츠 기반 구축
 - 장생포권 고래생태관광지구 조성 : 고래테마거리 조성, 해양친화적 관광선 운행, 고래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 테마관광지별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도시 경관 및 이미지 관리 사업 추진
- 관광서비스 기반 육성(테마형 펜션, 캠핑장, 휴양림, 전통숙박시설 등)

(2) 녹색물길 문화도시조성

- 화야강을 중심으로 한 레저·휴게공간 조성사업(테마길, 해양레저시설 등)

(3) Brown Field의 생태자원화 사업

- 환경테마파크 및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

-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여천천 정화사업,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전시, 교육,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4) U-헬스케어시스템 ‘스마트홈닥터’ 프로젝트

- 울산형 U-케어모델로 ‘스마트 홈닥터’ 프로젝트 실시(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글로자 등)

4) 경기도

(1) ‘수퍼 경기만’ 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 특구 조성

- 동북아지역 해양 레저·관광의 중심지 형성(MICE관광, 의료, 역사, 요트장, 리조트시설 등)

(2) 서해안권역 산업육성 전략

- 융·복합 신 산업벨트 조성 및 기존산업 구조고도화
 - 해양+항공레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사업

(3)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경기 농어촌 건설

-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 형성(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농어촌테마공원, 녹색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 농어촌 체험형, 도시민 5都2村 생활유도, 낚시체험장 조성 및 바다낚시 부두시설 설치(피싱피어)

5) 강원도

(1) 동해안발전계획 추진

- 해양바이오 산업화 거점 조성(해양심층수, 해양바이오 R&D클러스터 등)
- 청정 농수산물 특화거점 육성(바다목장, 수산물 명품 벨트 및 브랜드화 등)
- 설악권 국제관광 교두보 구축
- 휴양 레포츠 벨트 구축과 창조지역·산업육성
- 생태관광기반 조성

(2) 융·복합으로 농·산촌 산업의 고도화

- 어촌·어항을 해양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
-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산업 육성(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 바다목장 사업 확대 등)
-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기반 조성(스쿠버다이빙, 크루즈, 요트 등)

(3) 스마트·문화 삶터 조성

-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 체계 구축

6) 충청남도

(1) 살기 좋은 도시·농촌정주기반 형성

-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지속가능한 농어촌환경·경관 조성)

(2)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어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3)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 관광명소의 발굴·육성과 상호 연계(해안과 내륙의 경관, 희귀한 생태계 등)
- 미래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웰빙문화로 한 먹거리 등)

(4)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

-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7) 전라북도

(1)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관광 창조지역 육성

- 관광산업 선진화를 통한 창조관광 거점 조성(문화관광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신규 관광자원 확충)

(2) FTA에 대응한 강한 농업, 활력 농촌 실현

- 고부가가치 신성장 농림수산업의 창출과 확대(수산자원 확보와 부가가치창출 기반확대)
-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농산어촌의 활력화 기반 구축(어촌지역 생활환경 정비 등)

(3) 국제교통물류망 확충과 토지연안이용 효율화

- 효율적인 연안이용과 관리체계 정착(갯벌복원 및 연안 경관관리 등)

(4) 생활복지와 농촌복지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농촌복지 인프라 확충(복지체계 수립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미래 융합형 인재양성

(5)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녹색 안전 도시(안전한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8) 전라남도

(1) 해양입도 지향 인프라 확충

- 전국 최대의 해양·도서자원을 보유한 비교우위 특성을 살려 '해양입도'의 기반을 구축
- 반도와 도서지역 2관문체계 구축(도서별 연륙 및 연도교 건설)
- 요트, 경비행기, 수상비행기 운항 활성화
- 도서민들을 위한 24시간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운영수지 보전방안 반영
- 도서 생활용수 확보

(2) 7대 역동적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

-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및 해양환경 등 해양관련산업 메카 육성

(3) 동북아의 문화관광 허브 조성

- 서해안 관광레저도시 및 국제해양관광레저타운 건설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과 영상·문화산업의 관광자원화
- 서/남해안 해양관광 루트 조성(해중공원, Sea-Food 타운, 에코스포츠 시설확충 등)

(4) 농어촌 개발 및 친환경생명복합산업 메카 육성

-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의 특화개발
- 행복마을 가꾸기(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5)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성 확보

- 환경오염 방지(폐수처리시설 등 수질 보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 생태환경 보존(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등 관리)

(6) 9988 보건복지네트워크 구축

- 시·군 지역에 문화복지클러스터 커뮤니티센터(보건소, 노인, 여성, 유치원 등) 조성

(7) U-환경을 구축한 정보 전남 구현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지역의 정보서비스 공급

(8)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하는 교육시설 확충

9) 경상북도

(1) 농어촌 정주기반

-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추진(어촌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녹색마을 개발사업 추진)
- 농어촌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교육환경 개선)
- 잘사는 부자농어촌을 위한 여건 마련(마을단위 공동 소득화 사업 추진 등)
-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프로그램 운영 및 정착자금 지원 등)

(2)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산업 진흥

-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복지 향상
- 수산업 부가가치 기반확충(대게, 과메기 명품화 사업, 블루골드사업 등)

(3) 강·산·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 3대문화권(신라·유교·가야)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 신라천년의 경주역사문화 도시 조성
- 지역 밀착형 관광자원 개발

(4) 쾌적한 생활 및 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의 개선(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및 확대)

(5) 보건·의료

-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전문성 제고(농어촌 과소 지역의 원격의료시스템 등)

10) 경상남도

(1) 동부권역 발전전략 : 진해만 환상도시권(로봇+기계+조선·해양플랜트+해양관광)

- 진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내해와 거제, 통영의 외해를 활용한 해양 및 문화관광의 발전 기반 구축
- 당항포 관광지·공룡엑스포·경비행기장을 연계한 신개념 복합휴양관광거점 육성

(2) 서부권역 발전전략 : 사천만 환상도시권(항공우주+소재+해양관광+광역연계)

- 여수, 광양의 산업 및 문화역량과 남해의 전략적 입지성을 연계 통합할 수 있도록 한려대교 등 광역인프라 구축

(3) 산악, 강변, 해양(섬)관광 특화개발

-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섬)관광 기반 구축 : 농산어촌 부문(깨끗한 농촌성 보전과 유지) 및 지역자원개발 부문(해양자원)과 연계

(4) 의료서비스의 지역간·계층간 격차 해소

-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도서지역의 이동의료시스템 강화 요구)

(5)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

- 생태 기반형 수산업 육성(어족자원보호, 양식산업 육성)
- 수산물 산지유통 가공센터 설립 지원

(6) 살기 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복지회관, 경로시설, 휴식공간 조성 등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전환
- 농산어촌에 적합한 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
- 귀농·귀촌 지원 및 친환경농업제공(귀농·귀촌 지원 및 어업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 어항개발사업 확대 정비(어항친수시설 종합적 개발, 지방어항 추가 지정 추진)
- 연안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재해에 훼손된 연안 보호 등)

(7)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지

-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해역 위생관리
- 농산어촌의 유희화 된 시설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수립
- 어촌·어항 관광단지 및 연안 여가휴양 시설 조성

11) 제주특별자치도

(1) 국제도시

-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 정비)

(2) 관광도시(체류·체험·체재 등을 위한 테마형 관광지 조성)

(3) 교통·물류계획(연안항 등 인근에 농·수·축산물 가공·유통단지 등 조성)

(4) 광역기반시설계획(도서지역 폐기물 처리계획(어구 등 특정산업폐기물 처리 방안 등))

(5) 산업진흥계획

- 기르는 어업의 육성(제주형 바다목장사업과 청정·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등)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수산물 보관 및 유통시설 확충, 제주 주변 회유성 어종 어획물 가공 및 유통산업 유치)
- (6) 환경보전 계획(연안 수질 보전 계획)
- (7) 사회개발계획(도서지역 특성감안 의료장비 및 인력 확충 등)
- (8) 읍면지역 정주환경 개선 계획(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수교사 유치 방안 강구 등)

3.1.4 시·도별 수요 검토

1) 어촌산업부문

- 7개 시·도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촌산업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촌이 가진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어촌산업창출을 위한 수요발생
 - 강원도 : 어촌·어항중심의 해양 6차 산업 전진기지, 청정 농수산물 특화거점 육성
 - 충청남도 : 웰빙문화 기반의 먹거리산업 발굴
 - 전라북도 : 고부가가치 신성장 농림수산업 창출 확대
 - 경상북도 : 수산업 부가가치 기반확충
 - 경상남도 :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수산물 산지유통 가공 지원)
 - 경상북도 : 잘사는 부자농어촌 여건 마련(마을단위 공동 소득화 사업 추진)
 - 제주도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수산물 보관 및 유통시설 확충)

2) 복지부문

- 5개 시·도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격의료 등을 이용한 생활복지 수요 발생
 - 울산광역시 : 울산형 U-헬스케어 시스템“스마트 홈닥터”프로젝트 실시(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 전라북도 : 생활복지와 농어촌복지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의료사각지대 해소, 평생학습 기반 구축 등)
 - 전라남도 : 문화복지클러스터 커뮤니티 센터(노인, 보건, 여성 등) 조성
 - 경상북도 : 농어촌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 교육환경 개선), 농어촌 과소 지역의 원격의료시스템
 - 경상남도 :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도서지역의 이동의료시스템 강화)

3) 관광부문

- 11개 시·도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광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레포츠, 숙박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요발생
 - 부산광역시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동부산 관광단지, 가덕도 관광·휴양지 조성, 마리나 산업 육성 등)
 - 인천광역시 : 정서진 친수레저시설 조성,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등 수변친수공간 조성
 - 울산광역시 : 강동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개발 지속추진, 해양관광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진하권 해양레포츠 기반 구축, 장생포권 고래생태 관광지구 조성, 테마형 펜션, 캠핑장, 전통숙박시설 등 조성)
 - 경기도 : 동북아지역 해양 레저·관광의 중심지 형성(리조트, 요트 등)
 - 강원도 :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기반 조성, 해양레저·스포츠산업 기반 조성(스킨스쿠버, 크루즈, 요트 등)
 - 충청남도 : 관광명소의 발굴·육성과 상호 연계(해안과 내륙의 경관, 생태계 등)
 - 전라북도 : 관광산업 선진화를 통한 창조관광 거점 조성(문화관광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신규 관광자원 확충)
 - 전라남도 : 서·남해안 해양관광 루트 조성(해중공원, Sea-Food타운, 에코스포츠 시설확충)
 - 경상북도 : 3대 문화권(신라·유교·가야)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개발
 - 경상남도 : 당항포 관광지, 공룡엑스포를 연계한 신개념 복합휴양 관광거점 육성, 남해안 경관체험형 해양(섬)관광 기반 구축, 어촌·어항 관광단지 및 연안 여가휴양 시설 조성
 - 제주도 : 체류·체험·체재 등을 위한 테마형 관광지 조성

4) 정주환경

- 7개 시·도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주환경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 등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수요발생
 - 부산광역시 :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그린생활 인프라 구축
 - 인천광역시 : 도서지역 계획적 관리(도서지역 정주기반 마련)
 - 경기도 : 농어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 형성(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농어촌테마공원, 녹색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 충청남도 :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경관 조성)
 - 전라남도 : 행복마을 가꾸기(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특화 개발 추진, 도서민을 위한 여객선 운항관련 운영수지 보전, 도서 생활용수 확보

- 경상북도 :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어촌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녹색마을 개발사업 추진), 주거환경의 개선(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 경상남도 : 변화된 여건에 맞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전환

3.1.5 권역별 개발 방향

- 전국 연안 어촌을 해역특성, 지리적 여건, 보유 자원,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8개 특화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방향 설정

1) 수도권 권역

(1) 권역의 특성

- 서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권역은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여 어촌관광 수요가 많은 권역임
- 보유 자원으로는 아라뱃길, 인천 월미도, 강화 새우짬, 전곡항 마리나, 어촌체험마을 등이 있어 개발 잠재력 또한 우수함

(2) 개발방향

- 수도권 및 대도시 접근성을 이용한 도시 연계형 관광추진
- 전곡항 마리나 등 해양레저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활성화 거점어촌 조성
- 인천국제공항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머드해수탕 등 어촌체험(투어)형 관광 추진

2) 충청 권역

(1) 권역의 특성

- 서해안 중부에 위치하고, 인근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 충청인근 도시와 연계되는 교통네트워크 구축으로 타 권역과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며, 해안경관이 우수하여 어촌관광수요가 많은 권역임
- 보유자원으로는 천수만, 홍성 대하·새조개, 보령머드축제, 안면도, 서산 해삼·김 양식 등이 있어 양식 및 휴양·힐링단지 개발 잠재력 우수
- 태안 갯벌참굴 양식단지, 서산 대하 양식단지 등 충청권역의 대단위 양식단지 분포

(2) 개발방향

- 갯벌(머드), 해안경관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어촌, 휴양·힐링 어촌 조성 추진
-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물 양식산업 지원

3) 전라 권역

(1) 권역의 특성

- 서해안 남부에 위치한 다도해 지역으로 어촌정주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나 풍부한 수산물과 해안 절경이 우수한 권역임
- 보유 자원으로는 새만금, 고창 복분자·풍천장어, 영광 법성포 굴비, 무안낙지, 여수엑스포 등 어촌개발 잠재력이 풍부함

(2) 개발방향

- 조건불리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교육·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지원 추진
- 전국에서 어촌체험마을(28.7%)이 가장 많이 소재한 전라권역을 살고 싶은 어촌, 오감만족 체험어촌의 거점으로 조성

4) 남서부 권역

(1) 권역의 특성

- 남서부권역은 굴 등 패류양식 및 어류양식이 활발한 곳이며, 남해안의 우수한 해안절경을 보유하고 있는 권역임
- 보유자원으로는 통영바다목장, 패류생산 지정해역,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으로 해양관광 개발 잠재력 우수

(2) 개발방향

- 권역 내 대량 생산되는 굴 양식 등 대국민 위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 어촌 조성
- 한려해상 국립공원, 바다목장 등 다양한 어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어촌 조성

5) 남동부(도시근교) 권역

(1) 권역의 특성

- 산업화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부산·울산광역시의 직접적 어촌관광수요 및 항공·여객·교통의 발달로 어촌관광 수요가 많은 권역임
- 보유자원으로는 울산 고래박물관, 방어진항, 해운대, 자갈치시장, 국제크루즈 등이 있어 개발 잠재력 우수

(2) 개발방향

-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시장, 방어진 등의 자원을 활용한 도시근교형 어촌 조성
- 국제크루즈, 울산 고래박물관, 생태, 문화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 거점어촌 조성

6) 동해남부 권역

(1) 권역의 특성

- 고부가가치의 수산물, 역사 및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
- 보유자원으로는 울진 홍게, 영덕 대게, 포항 과메기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개발 잠재력 우수

(2) 개발방향

-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신라역사문화권 등 보유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어촌 구축
-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활용한 산업화 어촌 조성

7) 동해북부 권역

(1) 권역의 특성

- 태백산맥의 특수한 지형조건으로 청정지역으로 관광수요가 많은 권역임
- 보유자원으로는 고성 해양심층수, 속초 대포항, 설악산, 양양 연어, 정동진, 장호어촌체험마을, 임원항 등이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 보고

(2) 개발방향

- 설악산 등 내륙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해안·내륙 연계 관광어촌 조성
- 스킨 스쿠버 등 해중레저 수요가 많은 동해북부권역에 해중레저 거점어촌 조성

8) 제주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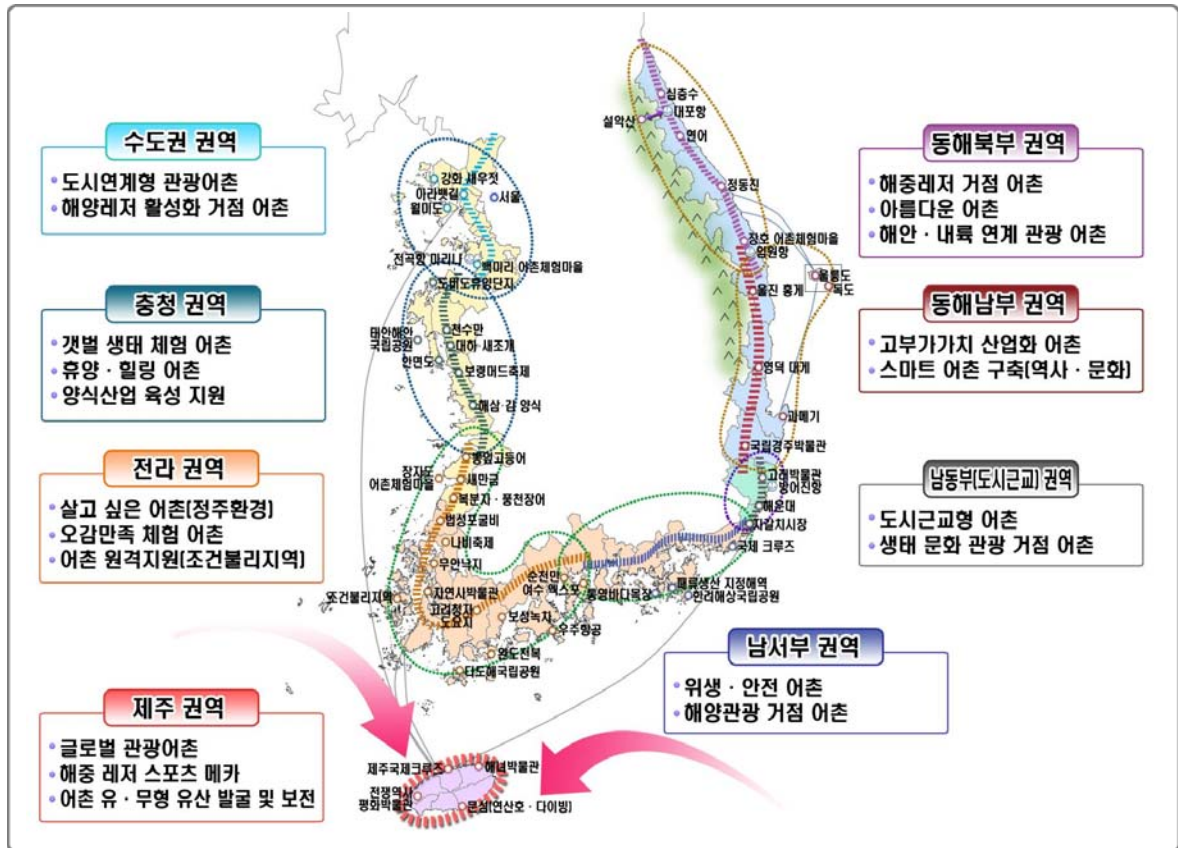
(1) 권역의 특성

- 친환경·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로 글로벌 관광의 메카
-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국제크루즈, 해녀박물관, 전쟁역사평화박물관, 문섬(다이빙), 제주 특화 민속자원(방언, 토속문화 등) 등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보유

(2) 개발방향

- 최근 급증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광어촌 조성
- 서귀포 문섬 등 해중레저로 특화된 제주권역을 해중 레저 스포츠 메카로 육성

- 제주지역만의 유·무형 문화유산(해녀, 방언, 전통어법, 어로요 등)을 활용한 어촌 유·무형 유산 발굴 및 보전 추진



〈그림 2.82〉 권역별 어촌 개발방향

3.2 어항부문 수요검토

3.2.1 항종별 기능 및 역할

- 어항의 항종별 이용범위 및 위상에 부합하여 과다한 개발 및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종별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적절한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1) 국가어항

(1) 육지소재 국가어항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거점 기능 및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안전 정박
- 유통·가공 및 문화, 물류, 상업 등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중심 역할 수행
- 해양 관광·레저인구 증가로 국민의 휴식·레저 공간으로 기능 부여

(2) 도서소재 국가어항

- 대피어항 기능 위주에서 도서주민의 생활 중심공간으로 여객·물류 기능 부각
- 낙도관광 증가추세로 일부 지역의 경우 해양 관광·레저 기능 분담

2) 지방어항

-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안전 정박 및 현지어선의 휴게·보급 기능 담당
- 지역별 여건이 양호한 어항은 지역의 관광·레저 중심 기능 부여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평상시 현지어선의 휴게·출어 기능 및 어촌지역 산업의 중심 역할 수행
- 수도권 또는 대도시 인접 지역의 경우 횃집 등 관광 기능 부여

3.2.2 항종간 구조조정 수요

- 국민의 새로운 수요, 수산여건 변화 등으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등 지방관리어항 중 어선의 이용이 많고, 교통, 주민 생활 등 어촌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어항이 다수 존재
- 이 중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방관리어항은 국가어항으로 항종 조정하여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필요

1) 국가어항의 현 지정기준 충족여부 검토**(1) 지정기준 검토**

-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따른 충족 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전체 109개 항 중 64개소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2) 육지·도서별 지정기준 검토

- 국가어항은 육지에 위치한 항은 72개소이며 도서지역에 위치한 항이 37개소로 그 중 육지지역 43개소, 도서지역 21개소임

〈표 2.113〉 시·도별 국가어항 지정기준 부합 현황(국가어항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계
적 합	3	2	2	1	4	6	6	22	6	9	3	64
육지	3	-	2	1	4	5	2	11	5	8	2	43
도서	-	2	-	-	-	1	4	11	1	1	1	21
부적합	-	3	-	-	10	2	-	9	8	10	3	45
육지	-	-	-	-	10	2	-	2	6	6	3	29
도서	-	3	-	-	-	-	-	7	2	4	1	17
총합계	3	5	2	1	14	8	6	31	14	19	6	109

2) 지방관리어항의 국가어항 지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1) 시·도별 국가어항 지정 검토 대상항

〈표 2.114〉 시·도별 국가어항 지정 검토 대상항

구 분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비 고
부산광역시	13	5	29	
인천광역시	15	31	39	
울산광역시	4	9	13	
경 기 도	5	11	16	
강 원 도	14	24	7	
충청남도	29	20	43	
전라북도	12	14	10	
전라남도	91	84	893	
경상북도	23	9	85	
경상남도	61	342	145	
제 주 도	18	46	29	
계	285	595	1,309	

3) 지방관리어항 중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항

- 전국의 지방관리어항 2,189개를 대상으로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어항을 조사한 결과 12개 시·군·구에서 19개(지방어항 18개 항, 소규모항포구 1개 항)어항이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됨

〈표 2.115〉 국가어항 지정기준 부합항 비교

시 도	시 군 구	2008년 타당성 조사		금 회	
		항 명	항 종	항 명	항 종
7개	19개	25개 항	-	19개 항	-
부산	수영구	민락항	지방어항	민락항	지방어항
	강서구	천성항	국가어항	국가어항 지정	
		명지항	소규모항포구	-	-
인천	옹진군	진두항	지방어항	진두항	지방어항
경기	화성시	궁평항	국가어항	국가어항 지정	
충남	보령시	장고도항	지방어항	장고도항	지방어항
		고대도항	지방어항	효자도항	지방어항
		호도항	지방어항	원산도항	지방어항
		삼시도항	지방어항	삼시도항	지방어항
	태안군	백사장항	지방어항	백사장항	지방어항
		영목항	지방어항	-	-
	당진시	장고항	국가어항	국가어항 지정	
		-	-	난지도항	지방어항
전북	군산시	선유도항	지방어항	선유도항	지방어항
		개야도항	지방어항	개야도항	지방어항
		-	-	무녀도항	지방어항
		-	-	신시도항	소규모항포구
전남	영광군	법성항	지방어항	법성항	지방어항
	해남군	-	-	어불항	지방어항
	여수시	-	-	서도항	지방어항
	완도군	이목항	국가어항	국가어항 지정	
	신안군	재원항	지방어항	재원항	지방어항
		수대항	지방어항	수대항	지방어항
		웅곡항	소규모항포구	-	-
경남	창원시	-	-	진동항	지방어항
	통영시	견유항	지방어항	-	-
		진촌항	지방어항	-	-
	거제시	장목항	지방어항	장목항	지방어항
	고성군	남포항	국가어항	국가어항 지정	
	남해군	단항항	어촌정주어항	-	-
	하동군	노량항	국가어항	국가어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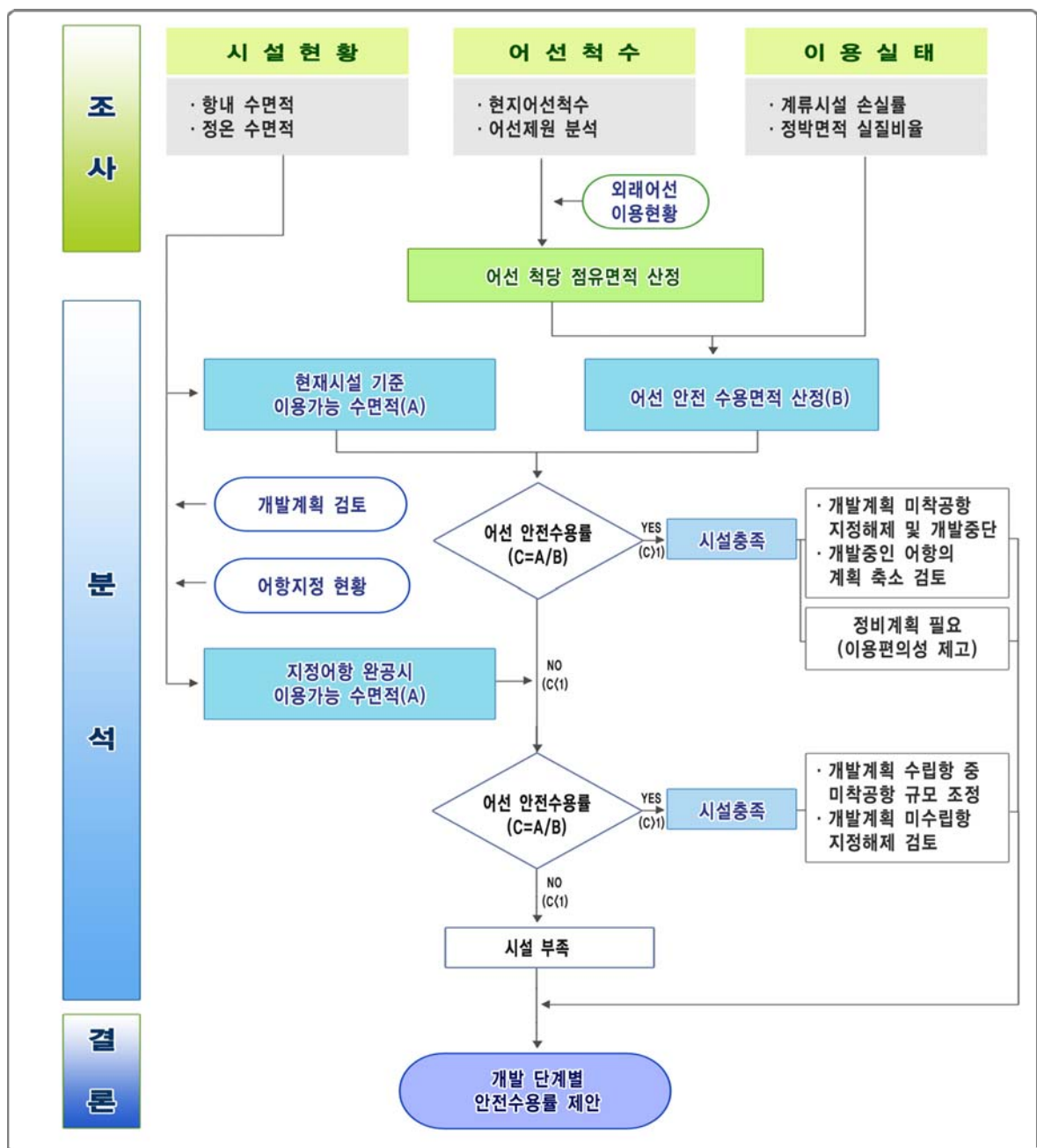
※ 명지항(소규모항포구-부산광역시 강서구)은 자연보호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에 위치하여 금회 검토대상에서 제외

※ 속천항(소규모항포구-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홍도1항(소규모항포구-전남 신안군)은 항만구역(진해항)에 포함되어있어 금회 검토대상에서 제외

3.2.3 기본시설 확충 수요

1) 어선 안전수용률의 개요

- 어선의 안전수용률이란 기상악화시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선의 안전 정박을 위해 필요한 어항시설 규모를 말함
- 산정방법은 각 지역별 평균 톤급의 어선 규모를 결정하고, 사군구 단위의 어항시설(국가어항, 지방어항, 항만)로 기상악화시 어선을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을 검토



〈그림 2.83〉 어선 안전수용률 산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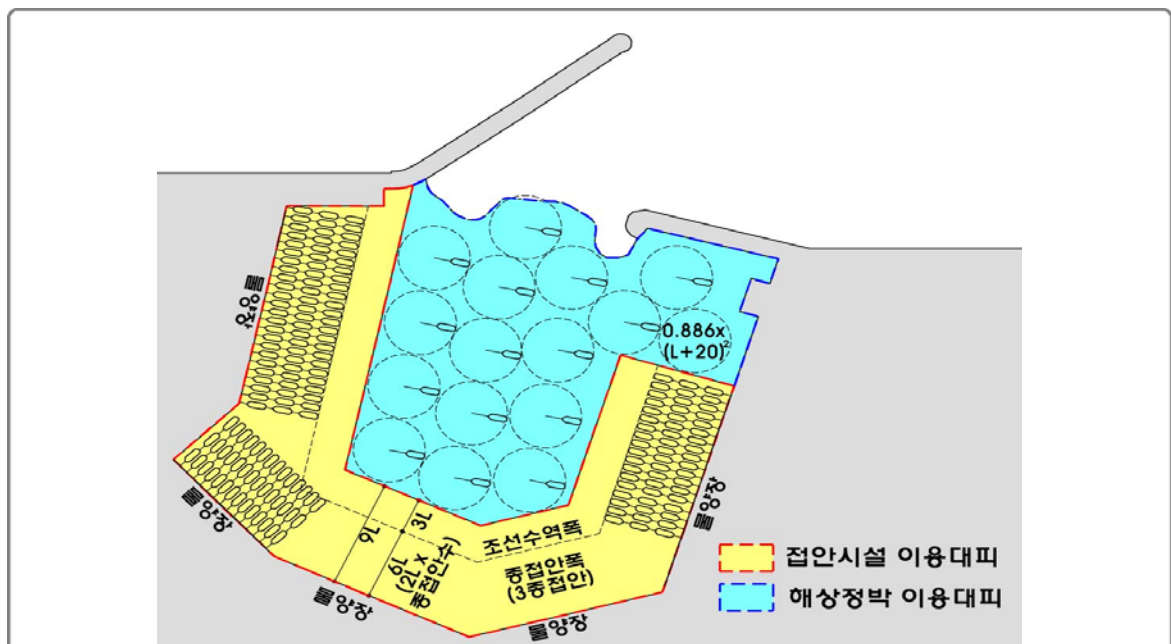
(2) 기상악화시 어선수용이 가능한 어항 및 항만 현황

- 태·폭풍 등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가 가능한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항만¹⁶⁾이며, 총 435개소로 어항이 394개, 항만이 41개임

〈표 2.116〉 어선수용이 가능한 어항 및 항만현황

구 분	계	어 항			항 만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계	무역항	연안항
계	435(447)	394	109	285	41(53)	19(28)	22(25)
부산광역시	17(18)	16	3	13	1(2)	-(1)	1(1)
인천광역시	23(23)	20	5	15	3(3)	1(1)	2(2)
경기도	6(7)	6	1	5	-(1)	-(1)	-
울산광역시	6(7)	6	2	4	-(1)	-(1)	-
강원도	32(34)	28	14	14	4(6)	3(5)	1(1)
충청남도	40(43)	37	8	29	3(6)	1(4)	2(2)
전라북도	19(19)	18	6	12	1(1)	1(1)	-
전라남도	132(136)	122	31	91	10(14)	3(4)	7(10)
경상남도	87(87)	80	19	61	7(7)	7(7)	-
경상북도	42(42)	37	14	23	5(5)	1(1)	4(4)
제주도	31(31)	24	6	18	7(7)	2(2)	5(5)

주 : ()는 전체 항만 수입



〈그림 2.84 항내 어선 대피 방법〉

16) 어항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어선 전용부두가 있는 항만을 말함

2) 지정항 완공 시 어선안전수용률 산정

-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가 가능한 국가·지방어항, 항만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어선 안전수용률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어선 이용에 따른 어항시설 추가 수요 산정

(1) 수용가능 어선척수 산정

- 현 계획된 시설이 모두 완공되었을 경우 수용이 가능한 어선 척수는 55,866척임
 - 접안시설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어선 척수 : 50,213척
 - 항내 해상정박에 의해 대피하는 어선 척수 : 5,653척

〈표 2.117〉 지정항 완공시 수용가능 어선척수

구 분	계	국가어항(109개)	지방어항(285개)	항만(55개)
계	55,866	31,475	12,035	12,356
접안시설 이용	50,213	28,317	9,540	12,356
동 해	6,289	3,786	563	1,940
서 해	16,014	7,800	3,715	4,499
남 해	27,910	16,731	5,262	5,917
해상정박 이용	5,653	3,158	2,495	-
동 해	205	170	35	-
서 해	2,104	1,172	932	-
남 해	3,344	1,816	1,528	-

(2) 수용대상 어선척수 추정

- 수용대상 어선 척수는 총 등록 어선에서 원양어선,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연근해에서 활동 중인 어선과 외래어선을 대상으로 함

$$\text{수용대상 어선} = \text{총 어선} - \text{원양어선} - \text{무동력어선} - \text{내수면어선} + \text{외래어선}$$

- 최근 어선의 감척 추이는, 자연 감소에 따른 어선 감척보다 연근해 어선 감척계획에 의한 감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어선 감척에 완료되는 2018년 어선척수를 추정하여 수용대상 어선 척수를 결정하였음
 - 목표 연도의 어선 척수를 추정하기 위해 2000년~2012년의 어선 통계자료를 적용하였으며, 연근해 어선 감척계획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추정된 수용대상 어선 척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존‘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구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의 추정 척수와 비교 검토 실시하였음
 - 추정 어선척수는 약 7,600여 척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7~2009년 어선 감척계획에 의해 어선의 급감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표 2.118〉 수용대상 어선척수 추정치 비교

구 분	'06년	'12년	'18년	비 고
지정타당성 조사(2008)	86,113척(실적)	74,189척(추정)	70,795척(추정)	
2차 기본계획(2013)	86,113척(실적)	71,295척(실적)	63,123척(추정)	
오차	-	△2,894척	△7,672척	

(3) 전국 어선안전수용률

○ 어선 안전수용률 산정

- 산정방법

$$\text{어선 안전수용률} = \frac{\text{수용가능 어선척수}}{\text{수용대상 어선척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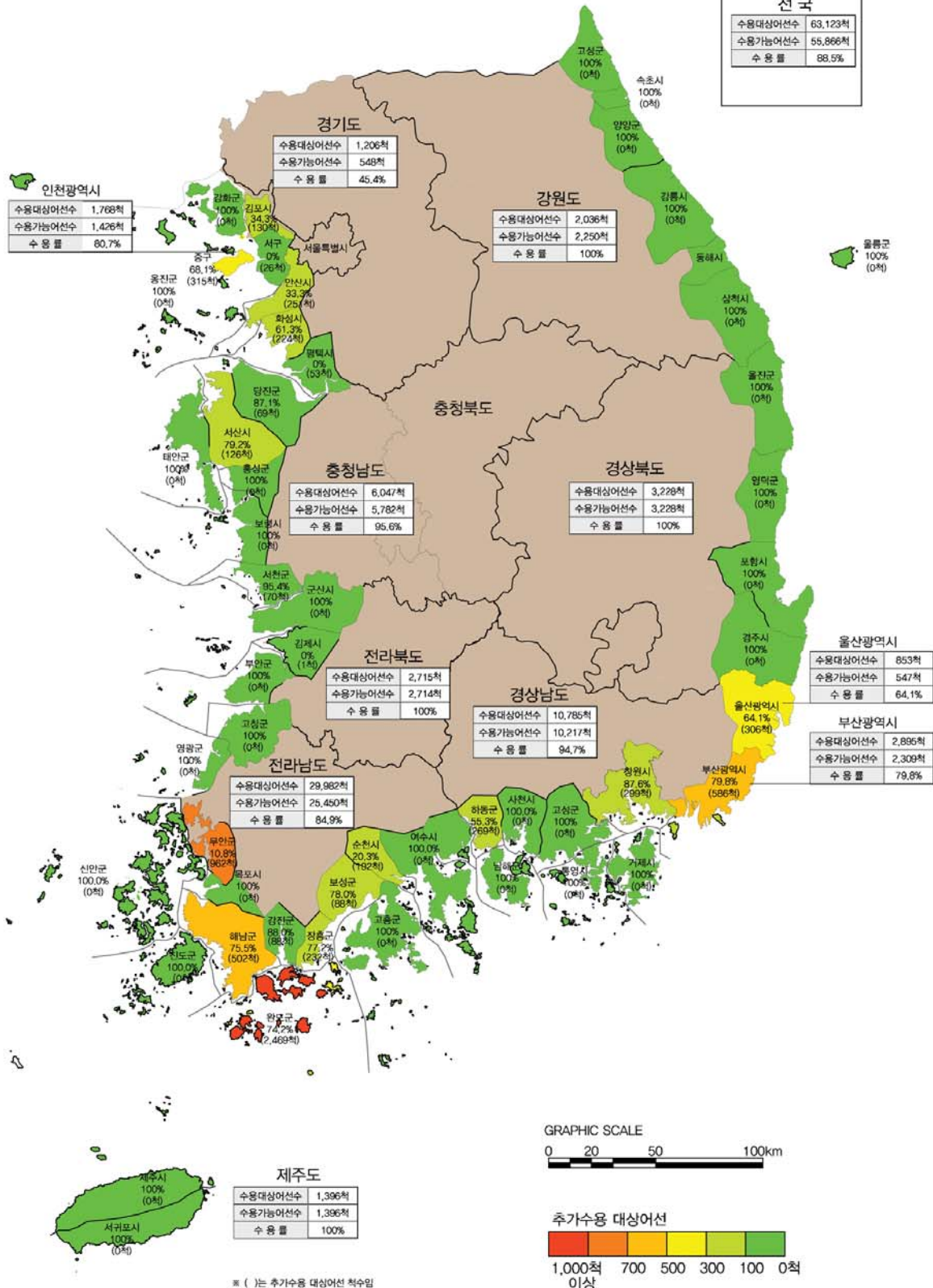
- 전국 수용대상 어선척 수는 63,123척이고, 수용가능 어선척 수는 55,866척으로 어선 안전수용률은 88.5%로 산정됨
- 추가 수용대상 어선은 전라남도가 4,532척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658척, 부산광역시 586척, 경상남도 568척, 인천광역시 342척, 울산광역시 306척 등으로 이들 지역은 기상악화 시 어선이 대피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표 2.119〉 어선의 안전수용률(지정항 완공 시)

구 분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 안전수용률(%)	추가수용 대상어선(척)	비 고
계	63,123	55,866	88.5	7,257	
부산광역시	2,895	2,309	79.8	586	
인천광역시	1,768	1,426	80.7	342	
울산광역시	853	547	64.1	306	
경 기 도	1,206	548	45.4	658	
강 원 도	2,250	2,250	100.0	-	
충청남도	6,047	5,782	95.6	265	
전라북도	2,715	2,714	100.0	1	
전라남도	29,982	25,450	84.9	4,532	
경상북도	3,228	3,228	100.0	-	
경상남도	10,785	10,217	94.7	568	
제 주 도	1,396	1,396	100.0	-	

※ 수용대상 어선척수는 2018년 추정 어선척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시·도별 어선의 안전 수용률(국가/지방어항 완공시)



〈그림 2.85〉 전국 어선안전 수용율(지정항 완공시)

3) 어항개발 수요 산정

(1) 산정 방법

- 어항개발 수요 산정은 기존‘국가어항 지정 타당성조사(구)농림수산식품부, 2008년’용역의 수요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검토

(2) 어항개발 수요 산정(국가어항 규모)

- 국가어항 해당 수용가능 어선 수 산정
 - 국가어항 평균 계류시설 연장에 대피 시 접안방식인 3중 종접안을 고려하여 해당 평균 수용가능 어선척수를 산정하였음
 - 해상정박에 의한 해당 평균 수용어선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용규모 결정
- 개발규모 산정
 - 시·군·구별 추가 수용대상 어선수를 국가어항 해당 수용가능 어선수로 나누어 국가어항 개발 항수 산정

$$\text{개발 어항 수} = \frac{\text{추가 수용대상 어선수}}{\text{국가어항 해당 수용가능 어선수}}$$

- 전국적으로 국가어항 규모로 개발 시 15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2.120〉 국가어항 규모 개발수요

(단위 : 개 항)

시도	항 수	추가 수용 대상 어선(척)
계	15	
부산광역시	1	
강서구	1	405
인천광역시	1	
중 구	1	315
울산광역시	1	
울주군	1	306
경기도	2	
안산시	1	251
화성시	1	224
전라남도	9	
해남군	1	502
무안군	3	962
완도군	5	2,469
경상남도	1	
창원시	1	299



(3) 시·군·구별 어항개발 수요

- 기상악화 시 어선의 대피가 가능한 국가·지방어항, 항만 개발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약 2018년 어선 척수 추정치를 적용할 경우 7,300여 척의 어선을 추가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국가어항 신규 개발을 통한 시설 확충 시 전국적으로 15¹⁷⁾개 항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 여건상 국가어항 신규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기존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확장하는 방안이나 지방어항의 신규개발 등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별 신규 어항개발 시에는 어선 이용실태에 따른 수요 검토 뿐 아니라, 국민의 수요변화, 지역의 개발잠재력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신규 어항 개발이 필요
 - 앞으로 어항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다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어항개발 규모(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4 어항 정비 수요**1) 설계파 증가에 따른 취락시설 보강 수요****(1) 개요**

- 최근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변화 등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자연재해가 증가 추세임
 -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재산정한‘전해역 심해파 추산보고서Ⅱ(한국해양연구원, 2005년)’결과를 근거로 국가어항의 설계파고 재추정 및 외곽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2) 보강 수요검토 결과

- 국가어항 중 59개 항에 대한 외곽시설 보수·보강 및 정온도 개선
 -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외곽시설 보수·보강 대상항 : 56개 항
 - 설계파향 변화에 따른 항내 정온도 개선 대상항 : 27개 항
 - ※ 외곽시설 보강 및 정온도 개선이 모두 필요한 대상항 : 24개 항
- 우선순위 평가에 따라 5그룹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보강 추진

17) 지방어항 규모로 개발시에는 97개 지방어항 신규 개발이 필요함

〈표 2.121〉 우선 순위별 대상항

외곽시설 보수·보강				항내 정온도 개선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그룹
죽변항 가거도항 도장항 호두항 장호항 축산항 사천진항	외포항 방어진항 덕산항 청산도항 연도항(전북) 모항항 금진항 사동항(경북) 대포항	선진포항 외연도항 말도항 위도항 여서항 시산항 안도항 매물도항 양포항 수산항 도두항 모슬포(남)항	울도항, 덕적도항 안흥항, 홍원항 안마항, 우이도항 보옥항, 서거차항 사동항(전남) 마량항, 풍남항 여호항, 초도항 연도항(전남) 욕지항, 맥전포항 능양항, 원전항 능포항, 지세포항 정자항, 대진항(강) 오산항, 구산항 구계항, 김녕항 위미항	울도항, 선진포항 안흥항, 덕적도항 위도항, 외연도항 안마항, 우이도항 보옥항, 서거차항 사동항(전남) 여호항, 시산항 욕지항, 매물도항 원전항, 양포항 위미항, 대포항 금진항, 덕산항 축산항, 청산도항 외포항, 수품항 대보항, 궁촌항
7개 항	10개 항	12개 항	27개 항	3(27)개 항
56개 항				

※ 자료 : 국가어항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평가,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

※ 항내 정온도 개선 대상항 중 _항(24개소)은 외곽시설 보수·보강 대상항과 중복

2) 완공항의 기능개선을 위한 정비 수요

(1) 여건변화에 따른 정비 수요

- 어항개발 완료 후 어항시설의 노후화뿐 아니라 수산업, 교통, 물류, 관광 등 다양한 수요의 변화에 따른 어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어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국가어항 109개 항 중 18개 항에 대한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항은 24개 항임
 - 개발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9개 국가어항은 시설 노후로 인한 기능저하 뿐 아니라, 다양한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 어항 정비의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
 - 개발사업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10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된 어항의 정비사업 완료 후 정비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122〉 국가어항 개발사업 경과연수 현황(2012년말 기준)

구 분	완 공 경과연도	항수	항 명
정비계획 수립항 (24)	10년 미만	5	모항항('04), 공촌항('12), 풍남항('04), 울도항('06), 공현진항('07)
	10년 이상 ~ 20년 미만	6	어청도항('03), 말도항('99), 전장포항('98), 전남 사동항('99), 옥지항('96), 물건항('98)
	20년 이상	13	아야진항('89), 장봉항('93), 금진항('87), 원평항('86), 덕산항('90), 전북 연도항('89), 읍천항('86), 어란진항('89), 외포항('85), 돌산항('90), 대보항('84), 덕적도항('81), 안도항('83)
정비계획 미수립항 (41)	10년 미만	22	삼길포항('11), 우이도항('10), 득암항('05), 여호항('06), 낭도항('05), 전남 연도항('12), 초도항('05), 구산항('07), 원전항('07), 호두항('12), 매물도항('05), 하효항('12), 오천항('09), 위도항('11), 남당항('13), 외연도항('06), 오산항('07), 경북 대진항('04), 남애항('08), 광암항('04), 보옥항('10), 여서항('03), 공현진항('07)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	안마항('94), 수품항('01), 삼덕항('03), 김녕항('99), 도두항('99), 위미항('96), 수산항('02), 발포항('97), 시산항('90), 경북 사동항('96)
	20년 이상	9	강원 대진항('90), 서거차항('84), 구계항('91), 능포항('89), 능양항('87), 신수항('85), 소안항('90), 사천진항('88), 다대포항('81)

(2)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

○ 어항시설 노후화 현황

- 최근 어항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
- 국가어항의 경우 전체 시설물 765개소 중 완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158개소로 전체의 20.7%를 차지

〈표 2.123〉 국가어항 시설 노후화 현황(2012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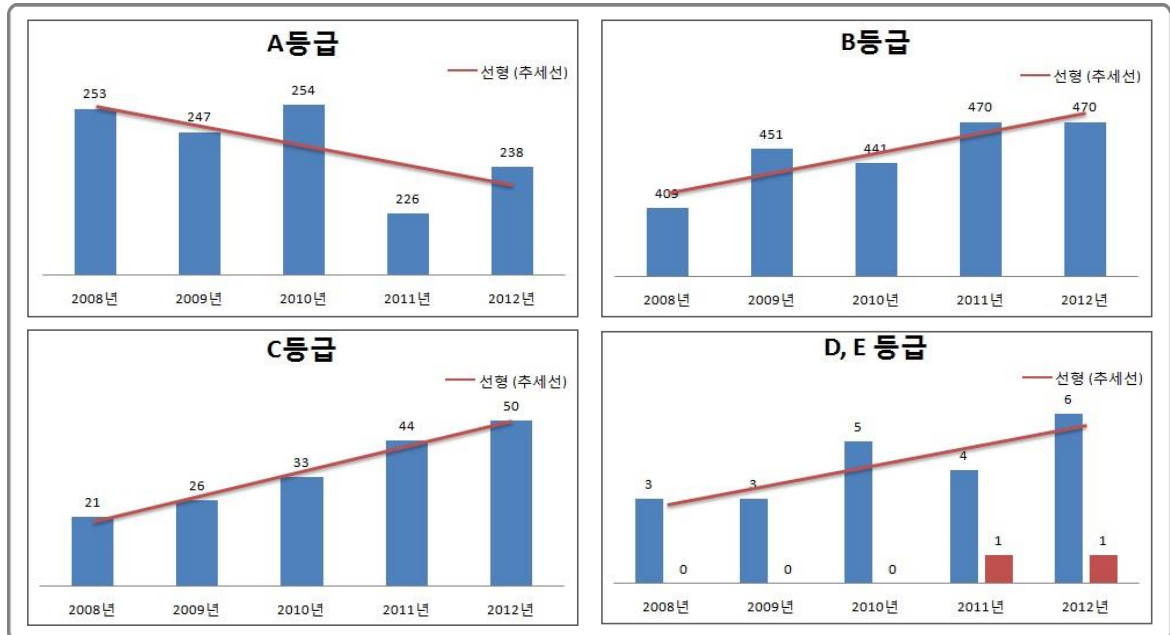
경과연도	30년 이상	20~30년	10~20년	10년 이내	시공중	합계
시설물 수	53	105	298	301	8	765

※ 출처 :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한국어촌어항협회, 2012년

○ 국가어항 유지보수 소요검토 결과

-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B등급 이하 시설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 보수대상 시설도 매년 증가 추세임

- 유지보수대상(B등급 이하) 시설 증가 : 433개소(2008년) ⇨ 527개소(2012년)
- 긴급보수대상(C등급 이하) 시설 증가 : 24개소(2008년) ⇨ 57개소(2012년)



〈그림 2.86〉 최근 5년간 국가어항 시설물의 등급별 변화 추이

3.2.5 어항 특화개발 수요

- 최근 어항은 어선의 안전 정박 및 수산물 생산·유통 공간에서 가공, 문화, 관광·레저, 상업 등 복합기능을 겸비한 어촌 6차산업의 중심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과 지역 여건을 파악하여 각 항별 특성에 맞는 기능 및 역할을 부여한 특화개발 필요

1) 어항 기능 다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

- 국민 소득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어항의 다양한 기능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다기능어항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2013년까지 다기능어항 개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전체 국가어항의 12%에 불과함 (13개 항/109개 항)
 - 2013년 어항 내 개최되는 지역 축제로 인한 방문객은 250만 명이며, 이로 인한 매출액은 600억에 달하고 있어 어항을 찾는 관광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해양관광수요 증가 및 체험형 관광으로 패턴 변화로 마리나 시설 및 바다낚시 체험 시설 등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어항 방문객 수,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어업외소득 증대 등을 위해 개발 여건 분석을 통한 특화개발 수요를 추정한 결과 46개소의 개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산정

〈표 2.124〉 다기능어항 개발 수요 검토 항목

구 분	복합형	자원조성형	피서리나형	낚시관광형
검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 이용현황 수산물 생산현황 관광자원 수 관광객 수 여객물류 현황 도로 접근성 배후도시 인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양식현황 해양 생태환경 항내 여유수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 수 체험마을 현황 레저시설 현황 인접 마리나현황 도로 접근성 마리나 민자유치 계획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낚시어선 현황 해양 자연환경 도로 접근성 관광자원 레저시설 등

- 개발 잠재력이 양호한 46개 국가어항에 대해 관광·레저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중심지로서의 개발 필요

〈표 2.125〉 다기능어항 개발 수요

지 역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46	1	1	1	9	6	2	11	4	8	3

2)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수요

- 최근 국민의 소득과 의식수준 향상, 위생관련 문제 대두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가치 기준은 양적 충족에서 ‘웰빙’과 ‘그린’이라는 질적 만족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건강 먹거리인 수산물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단백질 섭취량 중 수산물의 비중이 26.1%를 차지
-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어항에서의 양육·위판·보관·유통 등이 위생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위판금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위판량이 2,000톤 이상으로 수산물 공급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어항은 총 13개소로 산정됨
 - 상기 13개소 어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필요함

〈표 2.126〉 수산물 공급 거점어항

지 역	합계	부산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13	1	1	2	5	2	1	1
항 명	-	다대포항	방어진항	안흥항, 홍원항	서망항, 수품항, 어란진항, 발포항, 국동항,	감포항, 죽변항	미조항	모슬포 항

3.2.6 권역별 개발 방향

- 전국 연안 어촌지역을 해역 특성, 지리적 여건, 수산업 여건, 어항 이용 특성,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방향 설정

1) 공 통

- 어선의 안전 정박을 위한 어항 인프라 지속 확충·정비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어항시설물의 조기보강 추진

2) 수도권 권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1) 권역의 특성

- 서해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충남을 포함한 수도권 권역은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여 해양레저 수요가 많은 권역임

(2) 개발방향

- 수도권 및 대도시의 관광·레저·여가 수요에 따른 도시 연계형 어항 개발
- 해양레저, 휴양·힐링, 갯벌생태 어촌 등 어촌체험과 연계된 관광형 어항 개발

3) 전라도 권역(전라남도, 전라북도)

(1) 권역의 특성

- 우리나라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도서가 많은 지역으로 전국 어선의 약 47%, 어업생산량의 약 45%가 본 권역에 밀집되어, 전국에서 수산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

(2) 개발방향

- 어선의 안전 정박을 위한 어항 시설물의 지속 확충 강화
- 양식어업이 발달한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자원관리형 어항 개발

4) 동해남부 권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 권역의 특성

- 동해남부에 위치하고, 부산·울산광역시 등 대도시의 직접적인 해양관광레저 수요 및 항공·철도·도로 등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권역으로 어류, 굴 등의 양식산업이외에도 해양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임

(2) 개발방향

- 부산·울산광역시를 기반으로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근교형 관광어항 개발
- 어항의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5) 동해북부 권역(강원도, 경상북도)

(1) 권역의 특성

- 동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내륙 관광지와 연계가 좋으며, 수려한 해안절경이 우수한 청정 해역으로 해수욕장, 스킨스쿠버 등 해양 관광레저 수요가 많은 지역임

(2) 개발방향

- 스킨스쿠버, 요트 등 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어항의 재개발·리모델링
- 동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된 관광 미항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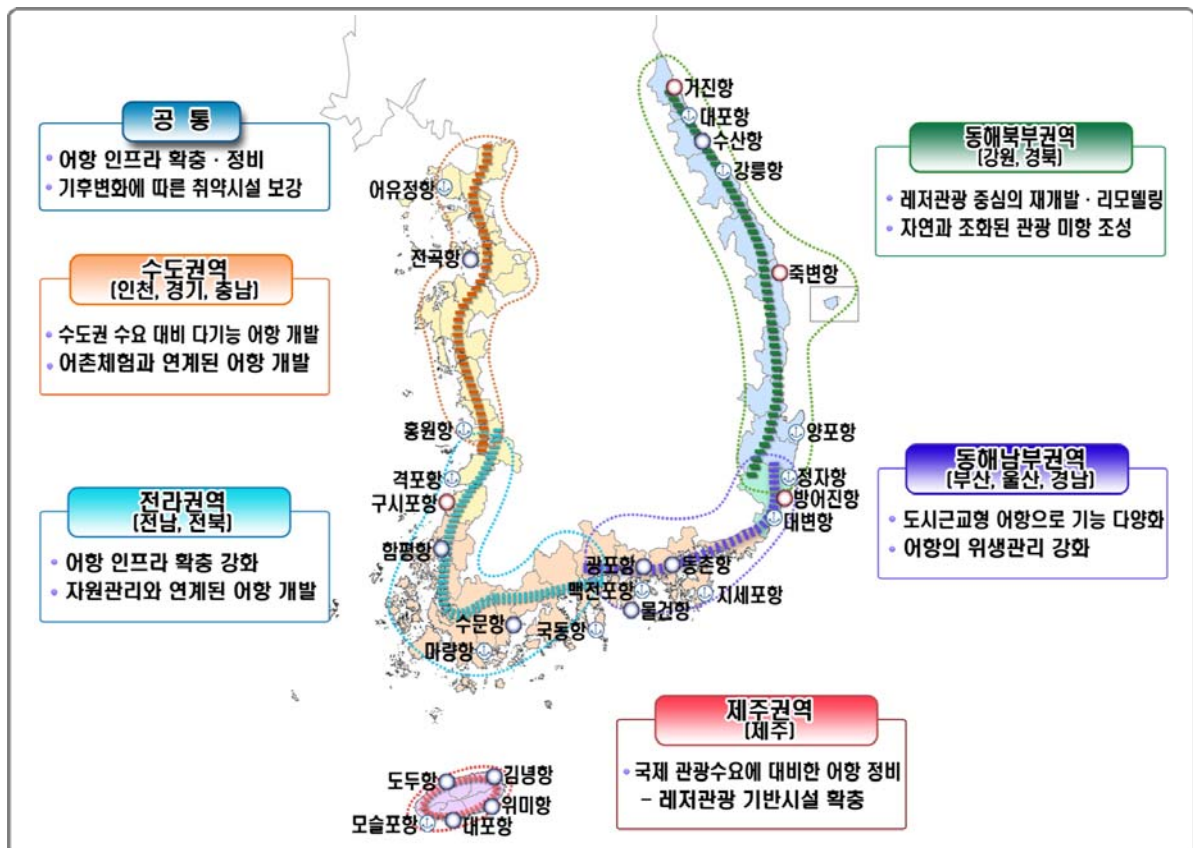
6) 제주 권역(제주특별자치도)

(1) 권역의 특성

- 우리나라 제일의 도서로 이국적인 정취로 인해 내국인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글로벌 관광메카임

(2) 개발방향

- 최근 급증하는 해외 관광수요에 대응한 글로벌 관광어항 구축
- 해중 레저로 특화된 지역성(Locality)과 연계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 확충



〈그림 2.87〉 권역별 어항 개발방향

제5절 종합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1 종합분석

- 1장 3절의 1차 발전계획의 평가와 2장의 어촌·어항 위상, 대내외 여건 및 전망, 현황 및 문제점,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정책사례 시사점 등을 종합하여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로 하고자 함

1.1 긍정적인 요소

- 어촌·어항정책의 긍정적인 요소는 i) 어촌관광의 수요증가 및 다변화, ii) 융·복합을 통한 어촌산업의 잠재적 가치 창출, iii) 어항기능 다양화를 통한 어촌경쟁력 강화 등이 있음

1)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 1차 발전기본계획이 추진되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촌개발은 사실상 어촌체험 조성과 어촌관광사업, 다기능어항 개발 등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들 사업들은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어촌관광 수요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촌관광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제고 등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어촌개발은 지역정책의 관점에서 관광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촌산업 전체가 융성해야 하며, 이는 수산업·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어야 함

2) 융·복합을 통한 어촌산업의 잠재적 가치 창출

- 수산업은 지난 60년 간 자원고갈,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으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통산업이 새로운 기술과 영역 간 융·복합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 정부는 창조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사업발굴과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정부는 6차산업화를 위한 근거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모델 정립과 사업지원을 통해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어촌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음

3) 어항기능 다양화를 통한 어촌경쟁력 강화

- 어항은 어업생산 기반시설로 수산물의 양륙과 위판, 가공 등 수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외에도 여가공간 제공, 교통·물류기능, 생활중심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어항에 대한 수요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고, 어항의 복합적이고 차별화된 기능을 창출하면서 어촌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창조경제에 대응하여 어항의 창조적 활용은 수산업적인 이용이 떨어지는 어항의 구조조정이나 유희부지 임대(매각) 등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가치 창출이 가능함
-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다기능어항 13개소에 대한 사업성과는 매년 943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적인 가치는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더욱 파급될 것으로 보임
- 강릉항은 강릉~울릉 구간의 여객선사를 유치하면서 10만 명 내외의 연간 이용객을 유치하면서 강릉항 주변에는 카페, 식당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고, 울릉군은 관광객이 10만 명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음

1.2 부정적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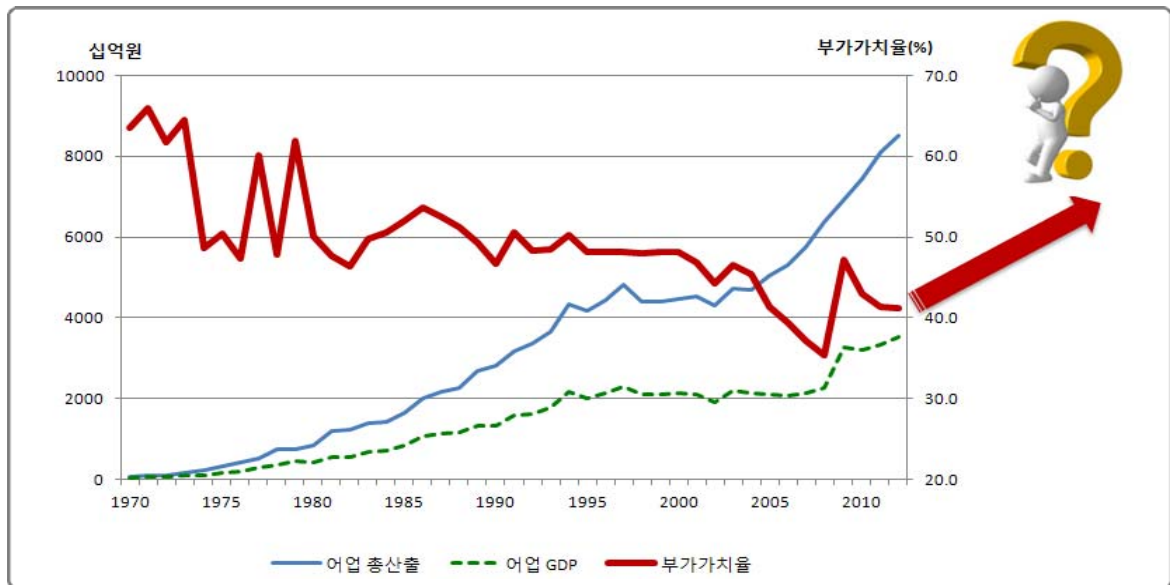
- 어촌·어항정책의 부정적인 요소는 i)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 ii) 위축되고 있는 어촌경제, iii) 낮은 삶의 질, iv) 어항의 운영관리 기반 취약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음

1)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

- 어촌·어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어장변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중 FTA 등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연근해어업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어촌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이상기후,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대형태풍, 어장변화, 해파리 등 해적생물 발생 등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어항에 큰 위협요소임
- 또한, 글로벌 시장개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한·중 FTA 체결이 임박해 있어 수산업·어촌에 미칠 영향에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위축되고 있는 어촌경제

- 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일자리·소득 감소가 악순환(vicious cycle) 되면서 어촌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어업의 총산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율은 정체·감소되고 있음



주 : 총산출 = 중간투입 +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산출) × 1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년 해양수산전망대회 발표자료

〈그림 2.88〉 어촌산업의 부가가치 전망

3) 낮은 삶의 질

- 어촌의 정주,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농촌과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서어촌의 경우 입지적 여건과 공동화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음
- 농어촌의 삶의 질에 개선은 삶의 질 계획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실상 각 부처의 계속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어촌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는 농어촌으로 묶여서 이루어져 어촌에 대한 열위성과 차별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4) 어항의 운영관리 기반 취약

- 어항은 항종별로 개발과 관리주체가 지정되어 있고, 모든 어항에 대한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인력,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어려움
- 특히,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국내외 여건으로 볼 때 어항의 추가적인 개발과 아울러 어항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1.3 어촌·어항 여건의 종합

〈표 2.127〉 어촌·어항 여건의 종합

구분	어촌부문	어항부문
대내외 여건 및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 - 생산량 정체, 어선세력 감소 -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에 따른 어촌경제 위축 - 인구구조 변화 및 식품소비 변화 - 어촌관광 다변화 및 지속적인 수요 증가 	
1차 발전계 획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및 심의절차 마련 필요 - 지자체/민간 적극 참여 유도 필요 - 포괄보조지원에 따른 어촌개발 어려움 - 어촌산업 경영 및 전문인력 부족 - 어촌 삶의 질 취약 - 다양한 잠재적 가치 - 마을단위 개발방식의 한계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민간 적극 참여 유도 필요 - 어항 운영관리 제고를 위한 사업발굴 필요 - 어항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상항식 개발방식 및 체계 마련 필요 - 지방어항 집중개발을 통한 안전수용률 제고 -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항지정기준 필요 - 어항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부족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구축 필요
어촌·어 항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규모 0.3% - 고령화율 27.8% - 어가소득(도시가계) 69.4% - 의료인력 1인당 인구 545명 - 하수도보급률 52.9% - 수산업 부가가치 정체 - 어촌관광 1인당 지출비용(농촌 2.5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어항이용률 76% - 어항 수산물 양륙량 비율 51.6% - 어항 수산물 양륙금액 비율 40.4% - 어항관광 250만 명(600억 추정) - 어항부지 m²당 24만 원 - 어항 토지가치 2.8km² 3,062억 원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 고령화 - 열악한 정주복지 - 어촌 경영여건 악화 - 전문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인프라 부족(안전수용, 기능·편익) - 어항관광수요 급증(다기능어항, 관광어항) -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지자체 운영관리 미흡(예산, 인력, 시스템)

2 SWOT 분석

2.1 개 요

- SWOT 분석은 앞서 검토하였던 제1장의 3절 1차 발전기본계획의 평가, 제2장의 1절 어촌·어항의 위상, 2절 대내외 여건과 전망, 제3절 현황과 문제점, 제4장 개발여건 검토, 마지막으로 어촌·어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음

2.2 SWOT 분석

2.2.1 요소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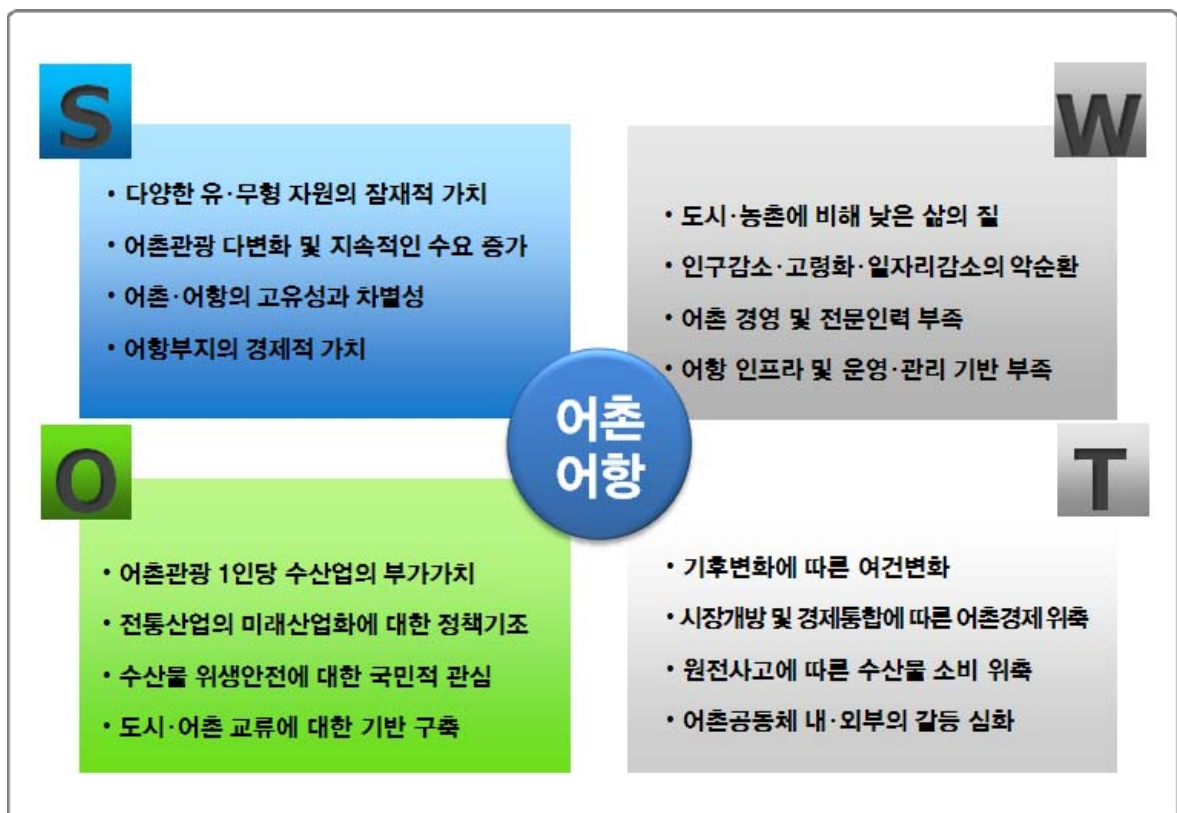
- 어촌·어항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과 문제점을 토대로 강점요소, 약점요소, 기회요소, 위협요소로 도출하였음
- 어촌·어항의 여건 상 약점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거나 해소하는 정책의 발굴이 요구됨
- 기회요소도 강점요소나 위협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는데, 2차 발전기본계획에서 맞춤형 정책발굴과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어촌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임

〈표 2.128〉 어촌·어항 SWOT 요소 도출

구분	어촌	어항
강점 요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어항)관광 다변화 및 지속적인 수요 증가 - 어항부지의 경제적 가치(㎡당 24만 원) - 다양한 유무형 자원의 잠재적 가치 - 어촌·어항의 고유성과 차별성 	
약점 요소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 초고령화 / 일자리 수 감소 - 도시, 농촌에 비해 삶의 질 여건 열악 - 포괄보조지원에 따른 어촌개발 어려움 - 어촌산업 경영 및 전문인력 부족 - 마을단위 개발방식의 한계 - 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 개발방식 및 체계 - 어항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부족 - 어항 인프라 부족 - 지자체 운영관리 미흡 -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개발수요 변화
기회 요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민간 참여 - 어촌관광 부가가치 - 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에 대한 정책기조 (창조경제, 융복합) -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귀어귀촌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어항이용률 76% - 어항 수산물 양륙량 비율 51.6% - 지자체/민간 적극 참여 유도
위협 요소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 -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에 따른 어촌경제 위축 -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 어촌공동체 내외부 갈등 심화 	

2.2.2 SWOT 분석 결과

- 어촌·어항의 SWOT 요소를 도출한 내용에서 중복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기요소를 각각 4개씩 도출하여 <그림 2.89>와 같이 제시하였음
- 강점은 다양한 유·무형의 잠재적 가치, 어촌관광 다변화 및 지속적인 수요 증가, 어촌·어항의 고유성과 차별성, 어항부지 경제적 가치 등으로 도출
- 약점은 도시·농촌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인구감소·고령화·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어촌경영 및 전문인력의 부족, 어항 인프라 및 운영·관리기반 구축으로 도출
- 기회는 수산업과 어촌관광의 부가가치, 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에 대한 정책기조,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도시·어촌 교류에 대한 기반 구축으로 도출
- 위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건변화,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에 따른 어촌경제 위축,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어촌공동체 내외부의 갈등 심화로 도출



〈그림 2.89〉 어촌·어항 SWOT 분석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어항 정책방향 도출은 SWOT분석에 따라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살리고, 위기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자 함

3 정책방향 도출

3.1 강점 키우기

- 어촌·어항의 강점을 키우는 정책은 SWOT분석의 강점요소에 대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그림 2.90>과 같이 제시함



<그림 2.90> 어촌·어항의 강점 키우기

3.1.1 어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잠재적 가치 창출

1) 융·복합을 통한 어촌산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 어촌산업의 미래산업화는 수산업·어촌의 저기술·전통산업의 가치를 ICT 등 첨단기술과 새로운 영역의 만남을 통해 미래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및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함
- 어촌산업화의 정책방향은 수산부문의 영역 내 융·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촌고유의 6차 산업화를 정립해야 함

2) 바다의 시각에서 어촌개발의 새로운 권역개발 추진

- 지금까지 어촌개발은 육지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져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바다의 시각에서 어장, 어항, 어촌, 농촌에 통합적 관점으로 권역화를 추진하되 공간, 콘텐츠, 사람에 대한 융·복합의 통합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함

3.1.2 어촌관광 다변화 및 지속적인 수요 증가

1) 기 추진된 어촌관광사업의 문제진단과 개선

- 2001년 어촌체험마을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어촌개발을 선도해 왔으며, 가시적인 양적·질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아직 다수의 어촌관광사업은 내부갈등, 경영부족,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 수립된 어촌관광사업들의 문제진단과 평가를 통해 경영개선 등 기반시설 지원이 아닌 경영,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연성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2) 새로운 어촌관광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

- 어촌관광은 해중레저, 문화·예술, 경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과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1.3 어항부지의 높은 경제적 가치

1) 어항 유희부지 활용을 통한 창조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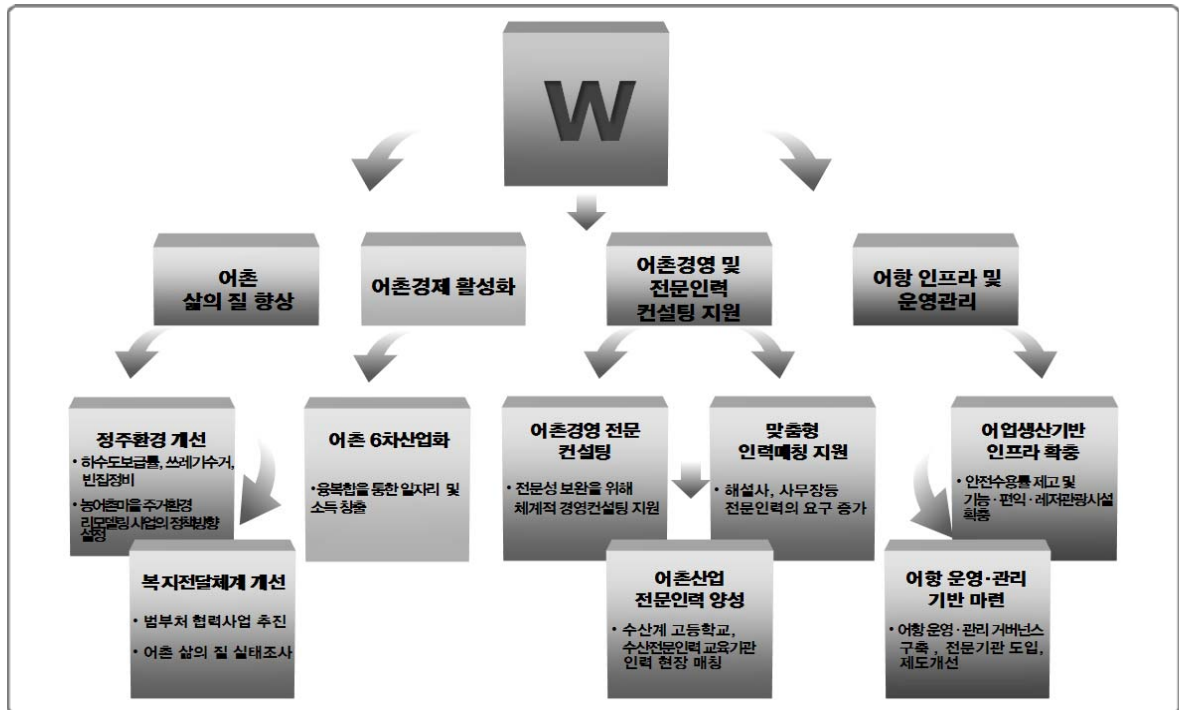
- 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내 어항부지는 m^2 당 2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창조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어항부지는 계절,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춰 어항의 유희부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함

2) 어업기능을 상실한 어항부지 민간매각을 통한 창조적 접근

- 일부 어항은 당초 어업여건에 맞춰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로 인해 더 이상 어업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지역어업인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매각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고, 매각대금은 어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3.2 약점 보완하기

- 어촌·어항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은 SWOT분석의 약점요소에 대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그림 2.91>과 같이 제시함



<그림 2.91> 어촌·어항의 약점 보완하기

3.2.1 도시·농촌에 준하는 어촌의 삶의 질 향상

1) 어촌의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

- 어촌의 삶의 질은 도시와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특히 하수도보급률, 쓰레기수거, 빈집정비 등 어촌다움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이 필요함
- 정주환경개선은 기존 어촌종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2014년 6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2) 어촌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 어촌의 삶의 질은 해양수산부만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사업범위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어촌의 삶의 질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3.2.2 인구감소, 고령화, 일자리 감소 해소를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 마련

1)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어촌은 다양한 부존자원과 유희시설을 기반으로 수산업뿐만 아니라 이 업종 간에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이 가능
- WTO/DDA, FTA 등 대외적인 위협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소어촌(强小漁村)’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함
- 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어가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에서 어촌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3.2.3 어촌경영 및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을 통한 인력부족 해소

1) 어촌경영 전문 컨설팅 지원

- 어촌공동체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마을공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 유통·가공, 관광,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담기구의 마련과 경영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함

2) 현장 맞춤형 어촌산업 인력매칭 지원

- 어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전문적인 해설사, 사무장 등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외부의 잉여인력과 어촌현장의 수요를 매칭(Matching)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어촌산업 전문인력 양성

- 어촌산업분야에서 종사할 양질의 전문인력이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 현장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2.4 어항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관리 기반 마련

1)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

- 어항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추가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어항구역 내 기능시설과 편익시설 등 어항기능이 다양화되고 특화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안전수용률 제고와 어항 기능의 다양화를 위한 기능시설과 편익시설, 레저관광기반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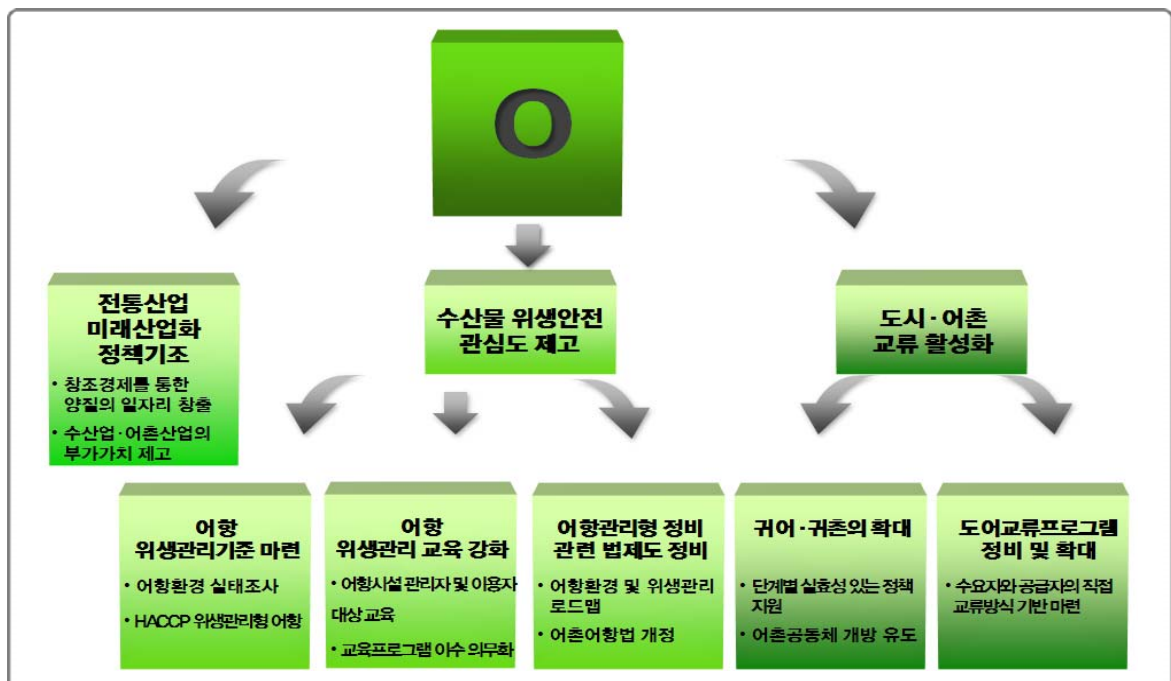
2) 어항의 운영·관리기반 마련

- 효율적인 어항 운영·관리를 위해 어항 운영·관리 거버넌스 구축, 전문기관 도입 및 관리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함

- 어항 운영·관리, 홍보, 마케팅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도입
- 사용자의 비용 부담원칙에 따른 점·사용료 확대 등 관리재원 확보
- 어항관련 기초자료의 분산 및 신뢰성 저하, 개별 어항단위 정보 구축을 통한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및 효율적인 어항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3 기회 살리기

- 어촌·어항의 기회를 살리는 정책은 SWOT분석의 기회요소에 대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그림 2.92>와 같이 제시함



〈그림 2.92〉 어촌·어항의 기회 살리기

3.3.1 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에 대한 정책기조

- 정부의 정책기조는 창조경제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업·어촌산업과 같이 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는 기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1인 창조기업 등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창출과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3.3.2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도 제고

1) 어항 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단계별 확대 추진

- 어항구역 내 수산물 처리, 도입시설, 항내수질,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등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위생관리기준을 위한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 1단계(2014~2018년) : 어항의 여건을 고려한 어항환경개선 추진
 - 2단계(2019년 이후) : HACCP 위생관리형 어항 도입 및 확대 추진

2) 어항 위생관리 교육 강화

-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어항시설의 관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항 위생관리지침 교육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어항 위생관리 교육은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교육에 따른 성과를 제고시켜야 함
- 어항 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업 허가갱신 시까지 정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3) 어항관리형 정비 확대 및 관련 법제도 정비

- 정부가 어항의 환경관리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어항환경 및 위생관리 대책 등 중장기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
-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과 어항 위생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어촌·어항법을 개정하여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함

3.3.3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1)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귀어귀촌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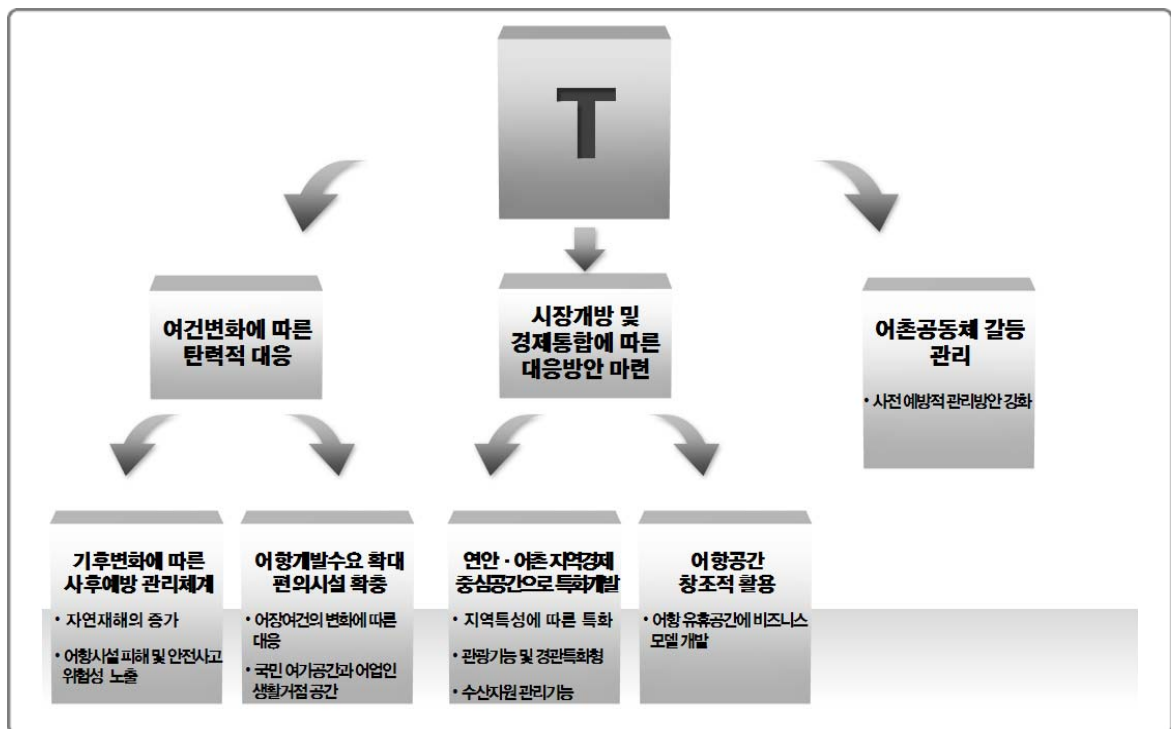
- 귀어와 귀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이원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귀어·귀촌인이 어촌공동체에 안정화되기까지 단계별로 지원이 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귀어·귀촌인에게 마을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촌공동체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어촌공동체가 고령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칭시켜 침체되고 있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기존 도어교류프로그램 정비 및 확대방안 마련

- 기존 도어교류사업은 1사1촌, 1교1촌, 어촌 찾아가기를 중심으로 수협에 위탁하여 이루어졌으나 재능기부를 포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교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3.4 위기 극복하기

- 어촌·어항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은 SWOT분석의 위기요소에 대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그림 2.93>와 같이 제시함



<그림 2.93> 어촌·어항의 위기 극복하기

3.4.1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1)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예방 관리체계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설계파 상향, 태풍의 강도 증가 등 자연재해 증가로 어항시설 피해 확대 및 안전사고 위험성 노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설계파 증가에 따른 취락 외곽시설(방파제 등) 보강 및 항내 정온도 개선 추진
 - 어항시설물의 노후화 진전 및 안전등급 하향 등에 따라 시설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 및 사전 재해예방 강화

2)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개발수요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증가뿐만 아니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어장여건이 최근 20년 간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당초 수립되었던 어항개발수요가 지역별로 변화하고 있어 장기변화 예측을 고려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어항이 어업생산 지원기능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공간과 어업인의 생활거점 기능으로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3.4.2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에 따른 어촌활성화 대응방안 마련

1) 어항을 연안·어촌의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특화개발

- 어장축소 및 어업자원 감소 등 어업여건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어항의 특화개발로 어촌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필요
 - 지역 특성에 따라 항별 고유한 기능을 특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서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반 마련 필요
 - 해양관광 인구 증가, 체험관광 요구 증대, 레저보트 증가 등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광기능 및 경관 특화형 어항 개발 추진
 - 수산자원 감소, 양식어업 활성화, 수산물 소비 증대 등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 기능을 갖는 어항 개발 필요성 증대

2) 어항공간의 창조적 활용

- 어항기능이 상실되어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항의 어항부지와 어항 유휴공간을 어촌의 새로운 활력과 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

3.4.3 어촌공동체 갈등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도모

- 어촌공동체 갈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이행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제 3 장

비전 및 정책방향

제3장 비전 및 정책방향

제1절 어촌·어항 정책방향 검토

1 정부의 국정기조

1.1 비전과 국정기조

1.1.1 비전과 목표

1) 비전

-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2차 발전기본계획이 추진되는 2014년~2018년은 창조경제(성장)와 국민행복(복지, 안전)의 틀 속에서 어촌·어항의 비전과 정책목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야 함
 - 어촌·어항의 시각에서 창조경제는 융·복합을 통한 미래산업화뿐만 아니라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안전, 교육 등 어촌사회가 갖고 있는 해결과제에 대해 정확한 목표설정과 세부과제를 마련해야 함

2) 국정기조

-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첫째 경제부흥(3대 전략, 42개 과제), 국민행복(4대 전략, 64개 과제), 문화융성(3대 전략, 10개 과제), 평화통일 기반구축(3대 전략, 13개 과제)으로 구분됨
 - 특히, 창조경제 시대에 어촌·어항정책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저기술, 전통산업을 미래산업화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물적기반 뿐만 아니라 인력, 시스템, 법제도 정비 등 어촌산업 전반에 걸쳐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비정상화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으로 인해 성장을 가로막고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기조를 갖고 있음
 - 수산업과 어촌 역시 관행으로 인해 지역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국정과제와 2차 발전기본계획이 상호 연동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그림 3.1〉 정부의 국정기조

1.2 어촌·어항관련 주요 국정과제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어촌·어항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3대 분야 8대 전략, 총 15개 과제로 나타났다
- 국정과제와 관련된 어촌·어항 분야는 전통산업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어업인의 소득 제고, 수산물의 안전·안정적인 식량수급, 맞춤형 복지, 기후변화 등 재해예방,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공공갈등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 관광 활성화 등이 제시됨
- <표 3.1>에서 제시된 현 정부의 어촌·어항 관련 국정과제는 2차 발전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서도 큰 틀을 유지하여 수립하고자 함

〈표 3.1〉 정부의 어촌·어항관련 국정 | 과제

구 분		세부 국정과제
경제부흥	창조경제	신산업신시장 개척
	민생경제	서민생활 안정
		안정적 경제운영
국민행복	맞춤형 고용·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	재난재해 예방·관리
		쾌적·지속 가능한 환경
		통합과 화합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문화융성	문화참여 확대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 진흥	생활문화공간 조성
	문화와 산업의 융합	문화유산 보존 강화
		고부가 관광 실현

제2절 어촌·어항 미래상 설정

1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 2차 발전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 행복과 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어촌”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는 「살고 싶고 부유한 어촌 키우기(어촌)」, 「가치 있고 안전한 어항 만들기(어항)」로 구분
- 어촌·어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로 구성하고, 어촌부문 2개, 어항부문 2개 지표를 제시하였음



〈그림 3.2〉 2차 발전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2 어촌·어항의 미래상

- 2차 발전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 기준으로 어촌·어항의 미래상은 <표 3.2>와 같음
 - 어촌·어항의 미래상은 수산, 소득, 일자리, 어촌관광 및 도어교류, 어항개발 및 이용으로 구분하여 13개 지표에 대해서 미래상을 제시하였음
- 2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어촌·어항 총 35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어촌·어항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주요지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어촌부문은 어촌산업 인구 150만 명으로 정책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어가소득도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 어항부문은 어선의 안전수용률이 88.5%, 다기능어항 23개소, 마리나항 40개소 등 어업생산기반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로서도 크게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표 3.2〉 어촌·어항의 미래상(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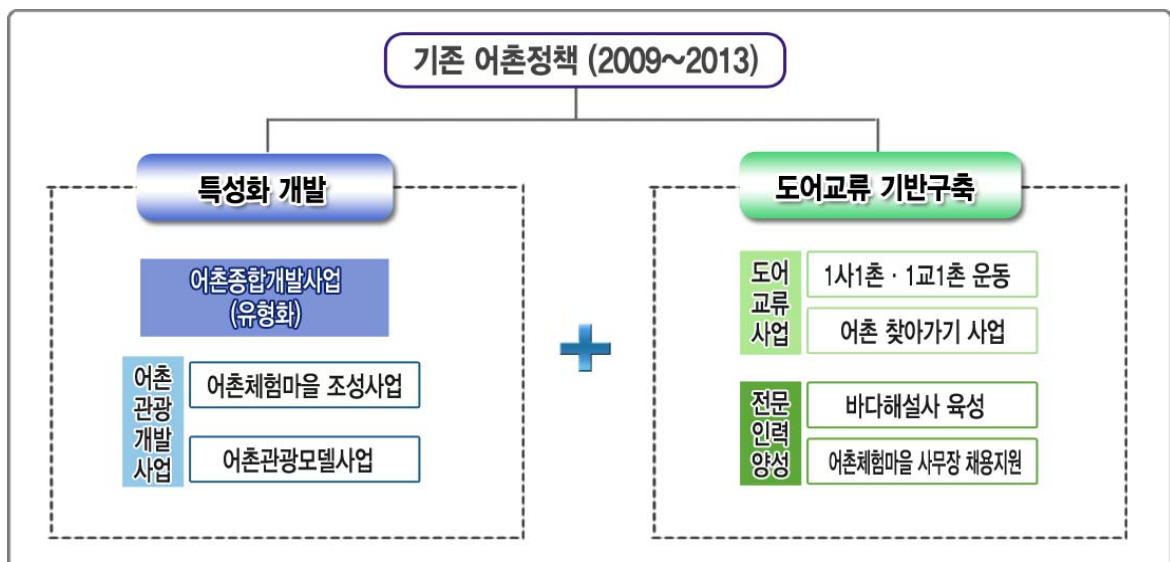
구분	주요지표		2006년	2012년	2018년
수산	어촌산업 인구(명)		-	1,382,099	1,500,000
	자율관리공동체		445	989	1,123
	영어조합법인 (종사자 수)		359 (2,303)	832 (5,327)	963 (6,413)
		어업회사법인 (종사자 수)	-	36 (342)	73 (713)
	어선수(척)		86,113	75,031	74,026
소득	어가소득(천 원)		30,668	37,381	50,000
일자리	전체 사업체 수 (종사자수)		861 (31,302)	343 (5,740)	800 (30,000)
어촌관광 / 도어교류	체험마을 방문객 수 (천 명)		731	749	1,500
	귀어귀촌		-	173	1,000
어항개발 / 이용	어선 안전수용률(%)		67.0	77.1	88.5
	어항 완공률(%)	국가어항	80.0 (84개항)	90.8 (99개항)	94.5 (103개항)
		지방어항	39.4 (113개항)	60.0 (171개항)	74.0 (211개항)
		어촌정주어항	22.6 (118개항)	24.9 (148개항)	33.3 (198개항)
	다기능어항 개발		-	13개항	23개항
	마리나시설항 수		-	15개항	40개항

3 어촌·어항 정책방향

3.1 기본방향

3.1.1 기존 어촌정책(2009~2013년)의 문제점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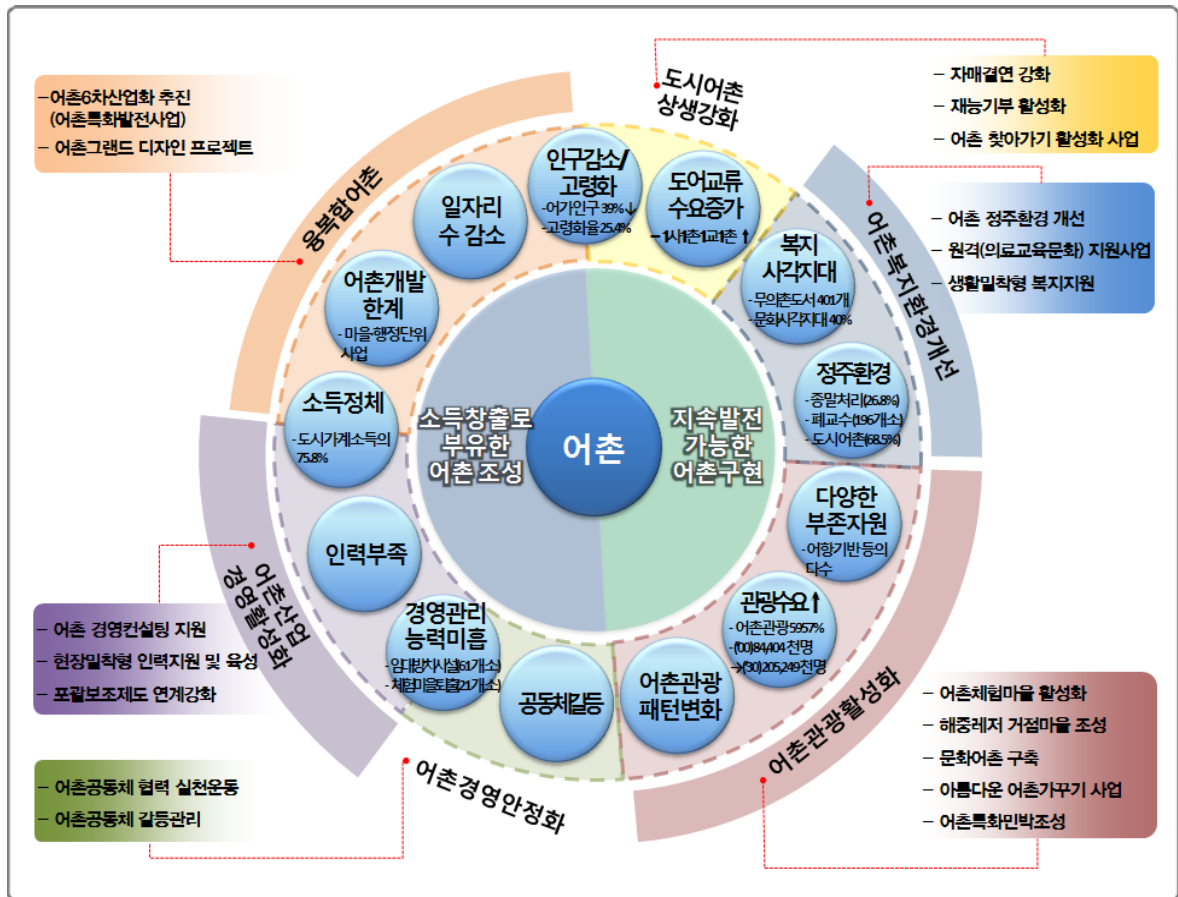
- 기존 어촌정책은 크게 특성화 개발과 도어교류 기반구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어촌의 특성화개발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유형화 추진,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관광모델사업), 도어교류 기반구축은 도어교류사업과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이 추진되었음
- 기존 어촌정책은 사실상 지역정책으로서 정주, 환경, 복지(의료, 문화) 등 전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부정책의 기조가 변화될 때 이들 정책수단이 다양하지 못해 탄력적으로 사업들의 재편과 통합, 세분화 등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 어촌지역의 특성화 개발과 도어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나 어촌지역의 문제점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발굴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3.1.2 새로운 어촌정책(2014~2018년)의 추진방향

1) 어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정책은 융·복합을 통한 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어촌경영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 도어교류의 강화, 어촌·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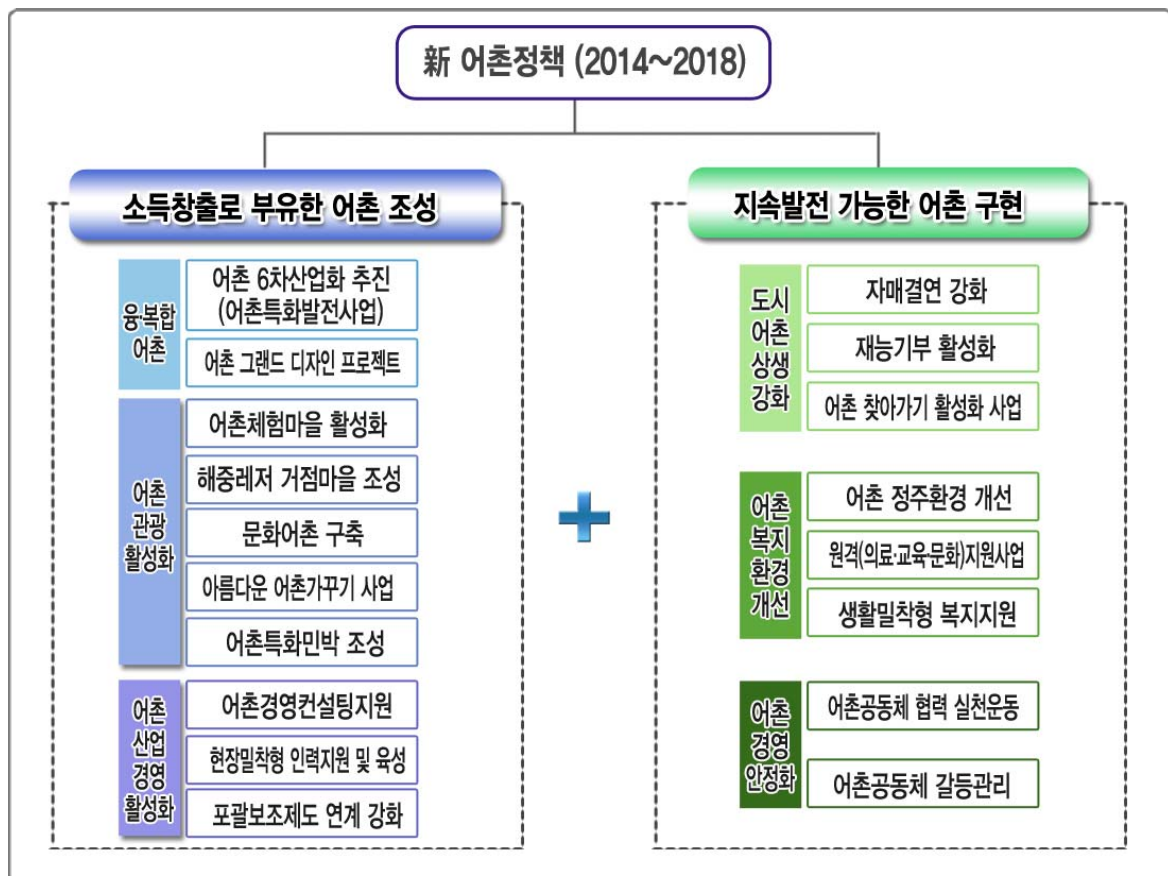


〈그림 3.3〉 어촌의 여건에 따른 발전방향

2) 어촌의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 새로운 어촌정책은 크게 소득창출을 통한 부유한 어촌 조성 and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구현의 두 축으로 나누어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융·복합 어촌 추진,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로 세분화되며,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구현은 도시·어촌 상생 강화, 어촌복지환경 개선, 어촌경영 안정화를 마련
 - 첫째, 융·복합 어촌 추진은 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어촌 6차산업화와 어촌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 둘째, 어촌관광 활성화는 기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문화어촌 구축, 아름다운 어촌가꾸기(경관사업), 어촌특화민박 조성 등 도시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여 다양한 어촌관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셋째, 어촌산업 경영활성화는 정부지원의 마을(공동체)공동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발전하기 위한 경영지원, 현장 맞춤형 인력지원 및 육성 등으로, 지자체와 어촌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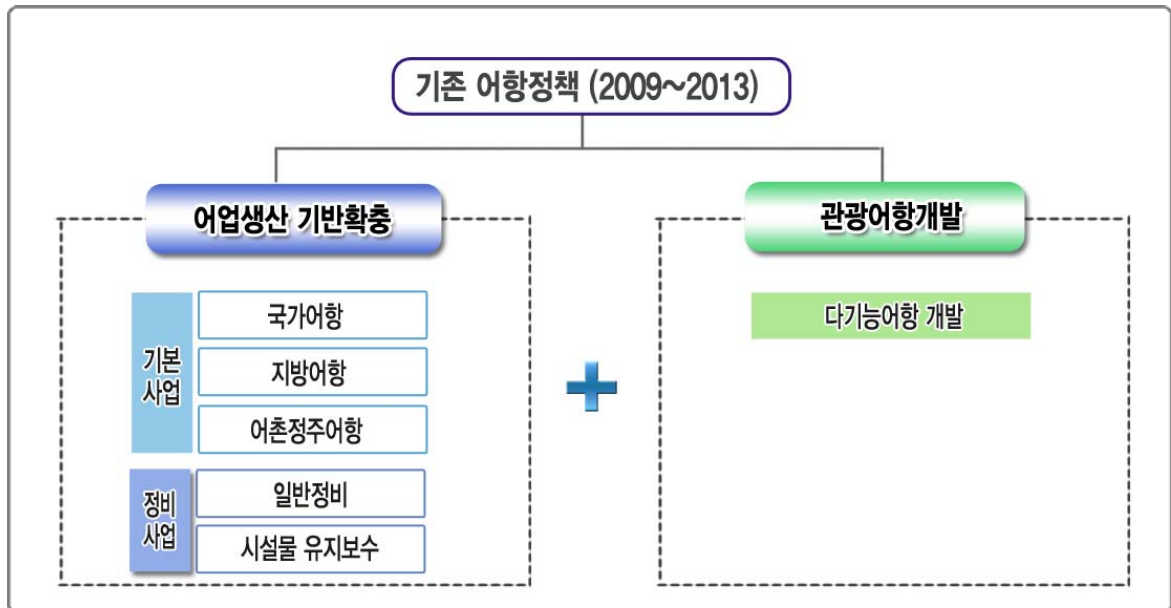
- 넷째, 도시·어촌 상생 강화는 1차 발전기본계획의 도어교류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자매결연 성과 관리, 재능기부 활성화, 어촌 찾아가기 활성화를 보완하였음
- 다섯째, 어촌 복지환경 개선은 2차 발전기본계획이 지역계획으로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주환경, 의료·교육·문화 원격지원,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어촌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 마지막으로 어촌경영 안정화는 사회·경제 여건변화로 다변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갈등문제와 어촌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어촌공동체 협력실천,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함



3.1.3 기존 어항정책(2009~2013년)의 문제점과 한계

- 기존 어항정책은 어항의 기본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한 어업생산 기반 확충과 다기능어항 개발이라는 관광어항개발로 구분됨
- 어항정책은 2000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어촌특별세 7,800억 원을 비롯하여 2004년까지 2조 4,000억을 투입하면서 어항개발이 양적 성장을 통해 최근까지 어업생산 기반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응은 2005년 이후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어항은 국가 기반시설로서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되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통한 활성화는 크게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특히, 2005년부터 도입하여 완료단계에 있는 다기능어항 개발은 어항의 다원적 기능을 토대로 종합적인 어항개발보다는 어항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에 초점을 두면서 관광어항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¹⁾가 나타났으나 지역개발 수요와 시장가치 창출에서는 한계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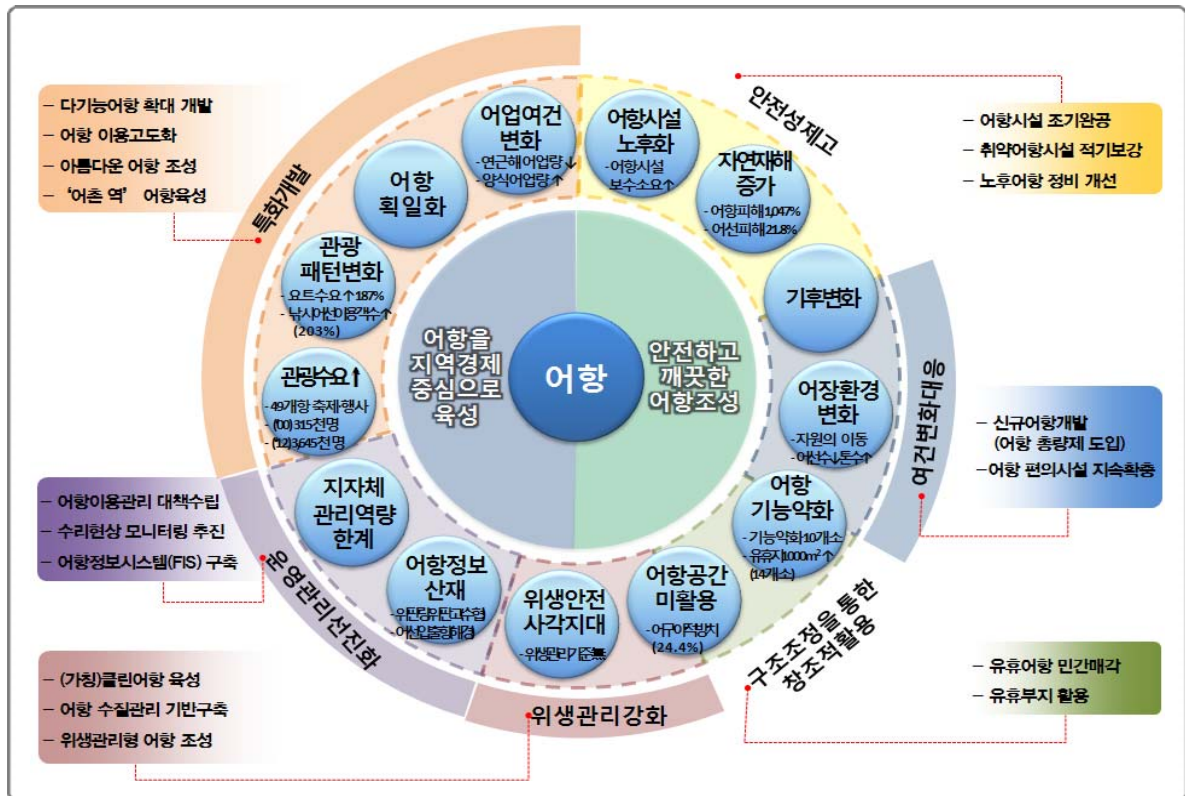


3.1.4 새로운 어항정책(2014~2018년)의 추진방향

1) 어항의 여건에 따른 발전방향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항정책은 시설배치, 기능, 브랜드 가치 관점에서 획일화된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특화개발하고, 수산업적 이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어항은 과감히 구조조정과 창조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또한, 지금까지 다소 미흡했던 어항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안전·위생관리 강화,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음

1) 강릉항('09년 완료)은 다기능어항 개발과 동시에 강릉~울릉구간 여객선사를 유치하면서 2013년 말 기준 267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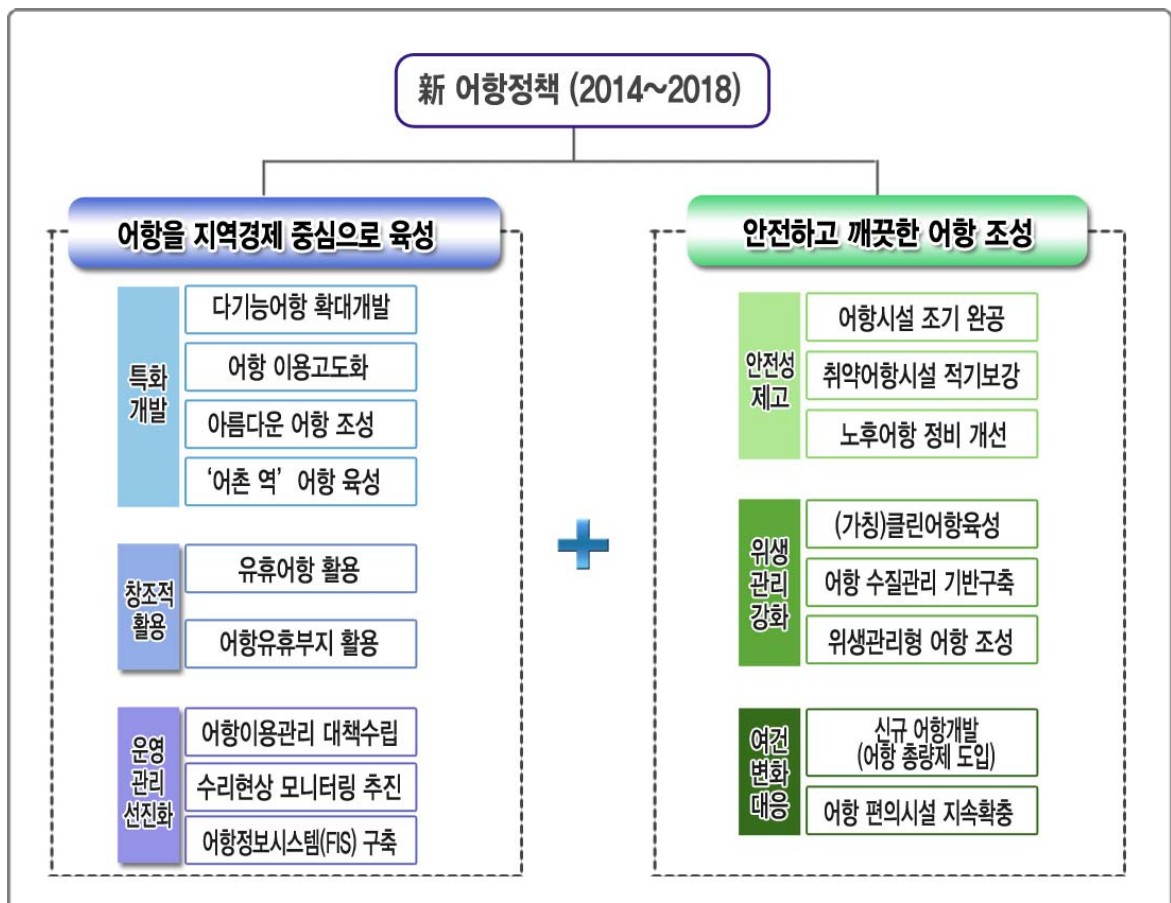


〈그림 3.4〉 어항의 여건에 따른 발전방향

2) 어항의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 새로운 어항정책은 크게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과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의 두 축으로 나누어 어항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어항의 특화개발, 구조조정을 통한 창조적 활용, 운영·관리 선진화로 세분화되며,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은 어항의 안전성 제고, 위생관리 강화, 여건변화에 대응을 도출하였음
 - 첫째, 어항의 특화개발은 획일화된 어항개발을 어항의 기능과 입지적 특성, 지역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어항 이용고도화, 아름다운 어항(미항), '어촌 역(驛)'으로 특화
 - 둘째, 어항의 창조적 활용은 어항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어항의 경우 민간매각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거나 어항구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촌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함
 - 셋째, 어항의 운영·관리 선진화는 예산, 인력 등 지자체의 열악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어항 운영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어항시설 사용자 부담원칙, 어항구역 내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어항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및 활용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 넷째, 어항시설의 안전성 제고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어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 즉 어항시설 조기완공, 취약어항시설 적기보강, 노후어항 정비 개선 등을 통해 피해를 줄여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업생산 기반시설 제공
- 다섯째, 어항의 위생관리 강화는 수산물 양류부터 산지위판장에서 출하되기까지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항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처리를 위한 기반구축, 관리체계를 제고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 공급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여건 변화와 국민의 어촌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어항개발과 어항구역 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함



3.2 추진전략

3.2.1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1) 융·복합 어촌 추진

- 기존 어업생산기반 확충이나 어촌관광을 통한 어업외소득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는 침체되고 있는 어촌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추진

- 어촌 6차 산업회는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촌지역 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등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
-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촌지역에 어장, 어항 및 배후의 농산촌을 포함한 새로운 권역단위 어촌개발정책 도입
 - 기존 행정단위 등 육지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연안의 어장생태,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바다의 시각에서 새로운 권역화와 권역별 개발방안 마련
 - 어촌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바다의 시각에서 권역화, 권역별 사업계획 구상, 사업의 효과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 권역별로 어촌산업, 어메니티, 자연재해 예방,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주기반 강화 등 어촌중심의 미래성장계획을 마련

2)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

- 기존 어촌체험마을 등 어촌관광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중레저, 아름다운 어촌만들기, 어촌특화민박(SEA STAY)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어촌·어항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중레저, 문화(감성) 충족, 경관감상, 쾌적한 숙박시설 조성 등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에 윈-윈 할 수 있도록 추진
 - 특히,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어장 이용·관리를 둘러싼 갈등관리를 풀어냄으로써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3)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추진

- 어촌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촌공동체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촌경영개선 지원방안을 마련
 - 어촌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은 전담기구(어촌경영 지원센터)를 통해 생산, 유통, 가공, 수출, 관광, 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맞춰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해당 어촌공동체가 안정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 어촌경영 컨설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컨설팅을 통한 성과가 컨설턴트와 지역발전기금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어촌의 공동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전담기구를 통한 어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매칭시켜 주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들이 현장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

3.2.2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1) 도시·어촌 상생 강화

- 정부 3.0(해양수산 3.0)과 연계하여 어촌의 의료·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지역의 재능기부자를 확보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반 마련
-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대 및 일회성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이원화된 사업추진을 일원화하고 사업의 문제점,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 어촌의 자원,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을 ICT 공간기반에 기초한 ‘어촌 관광 스마트 가이드’를 구축하여 정보검색, 예약, 이용후기, 기초통계 수집 등 활용성을 제고

2) 어촌 복지·환경 개선

- 열악한 어촌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등) 간에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 부처 간 협력사업을 통해서도 어촌의 복지·정주환경 개선이 미흡할 경우 해양수산부 차원의 신규사업 발굴·추진
- 어촌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도서등지의 어업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3) 어촌경영 안정화

- 주민 스스로 깨끗한 어촌만들기, 어촌발전계획서 작성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실천운동 확산
 -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확산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촌공동체의 체질 개선
- 어촌 내부의 갈등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공동체 정착을 지원
 - 어촌공동체의 갈등은 경영·운영의 투명성 문제, 어장·이권 분쟁, 어촌개발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등 원인에 맞춰 사전예방, 갈등 초기, 갈등 심화단계별로 대응

- 특히, 갈등의 특성상 사전예방을 위한 전자 경영장부 시스템 구축 및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확보
- 보다 체계적인 어촌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해서 갈등관리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추진

3.2.3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1)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 기존 어항개발은 어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특성화가 미흡하였으나, 어항구역 내 수산물 위생처리, 다기능어항, 테마어항 등 기능과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어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추진, 미항 만들기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특화개발의 다양성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발방식도 상향식 공모로 전환

2)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창조적 활용

- 어항으로 본래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곳은 어항지정을 해제하고 민간에게 매각하여 해양관광, 양식장 등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전환
- 현행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어항 지정해제 및 매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어항구역 중 활용도가 높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에 친환경 자연재생 에너지, 주말토요시장, 어촌문화센터 등 어항의 활용도를 제고
-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항종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권역 내 총량제에 의한 관리 필요
- 새로운 지정기준(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른 어항의 탄력적 조정과 이해관계 조정

3)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 어항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한 어항 점·사용료 부과, 어항시설 이용료 부과방안 검토
- 어항부지 매각 시 매각대금을 어항의 운영·관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3.2.4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

1) 어항의 안전성 제고

- 어선의 안전수용률 제고를 위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어항에 대해서는 2~3년 내 집중투자를 통해 완공함으로써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은 적기에 보강
 - 태풍피해 등 취약 어항시설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 추진

2) 어항의 위생관리 강화

- 어항의 위생·안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관리형 어항 시범사업 추진
 - 항내 수질, 산지위판장 위생기준, 부산물 처리기준, 제빙시설 등 공급시설 위생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
 - 수산물 위판량, 위판금액이 많아 위생관리에 대한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항에 대해 클린어항 도입

3)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어항 개발

- 지방관리 어항 중 일정 수요에 대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을 추진하여 어장의 여건변화, 서남해안권의 어선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 어항의 다양한 관광수요와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 추진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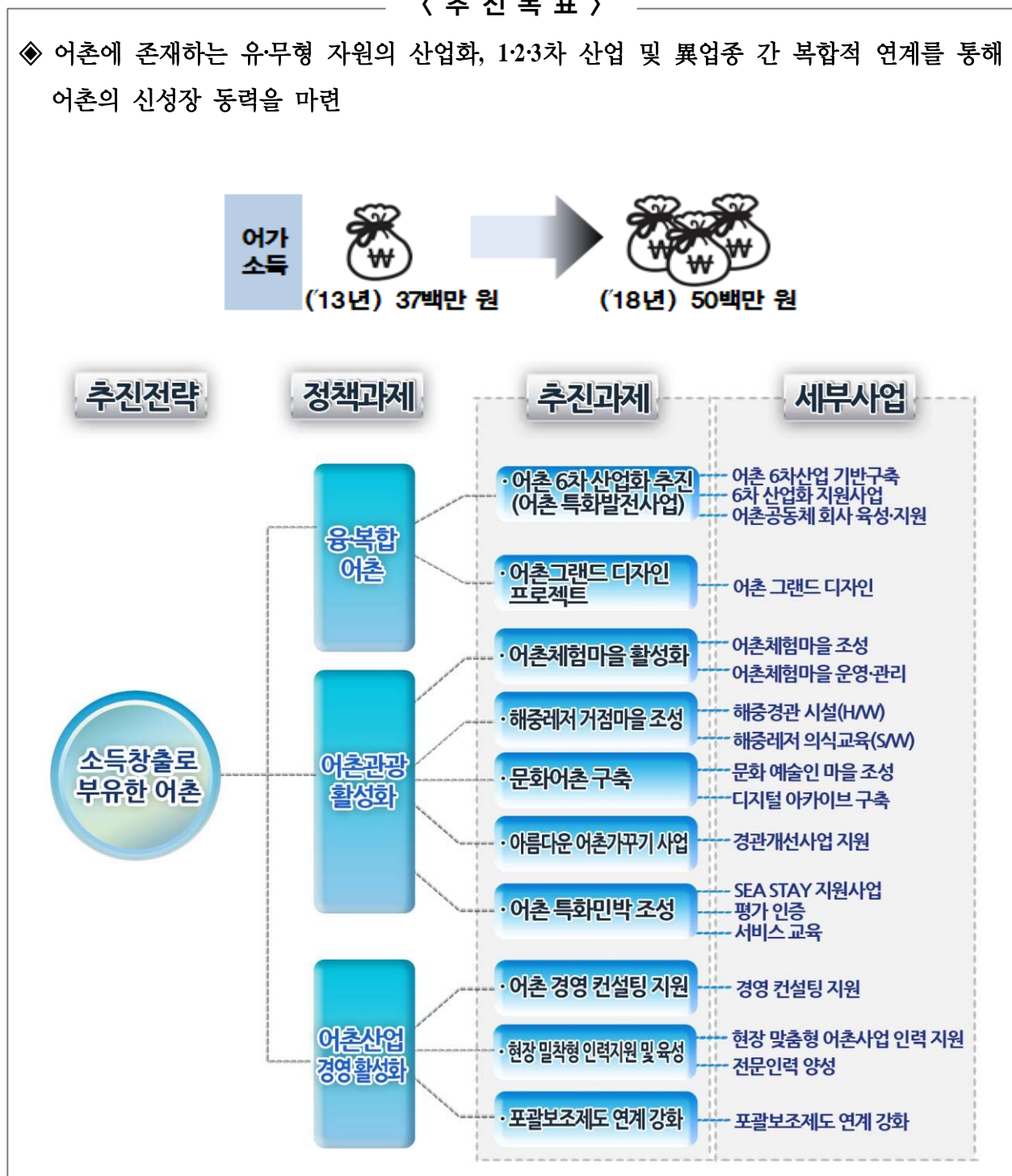
부문별 추진과제

제4장 부문별 추진과제

제1절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추진목표〉

◆ 어촌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의 산업화, 1·2·3차 산업 및異업종 간 복합적 연계를 통해 어촌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



1 융·복합 어촌개발 추진

1.1 어촌 6차산업화

1.1.1 추진배경

1)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어촌산업의 지속적인 위축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수출 지향적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립가공산업, 1990년대 IT산업을 거치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촌산업은 수산물 생산 및 저차가공 등 전통산업으로 정체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인력을 도시지역으로 흡수시키면서 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침체
 - 어가인구는 2000년 251,349명에서 2012년 153,106명으로 35.2%나 감소하였고, 고령화율도 같은 기간 12.2%에서 27.8%로 증가하여 어촌발전의 동력원이 부족한 실정

2) 시장개방과 어업여건 악화로 어촌경제 위협

- WTO/DDA, FTA, TPP 등 세계화와 함께 글로벌시장의 개방화가 급진전 되고 있고, 특히, 한중 FTA 협상 진전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영세 소규모 어업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어촌경영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연안오염 및 매립간척 및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등 어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음

3) 저기술·전통산업의 미래산업화로 정책기조 전환

-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차 산업과 IT, BT, NT, E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등 융·복합화 추진을 정부의 새로운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전통산업으로서 어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촌경제를 활성화 하고 젊은 층 인구의 유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지난 2013년 4월 해양수산부 VIP보고 시“수산업의 영역을 생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로 확대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 할 것을 지시
- 농촌은 마찬가지로 농업의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농촌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 6차산업화 추진을 법률제정 추진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농촌 6차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농림수산성과 경제 산업성이 협력해 '농·공·상 연대'를 추진해 왔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어업관련 사업과 신사업 창출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1.1.2 목적 및 필요성

- 어촌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촌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어촌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과 시장의 확대, 신 시장 창출이 필요
- 어촌의 새로운 산업화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어촌 6차산업화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해 추진이 필요함
- 어촌 6차 산업화는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촌지역 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등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림 4.1〉 어촌 6차산업화의 필요성

1.1.3 관련법규

1) 지원근거

- 어촌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 산업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음

2) 관련법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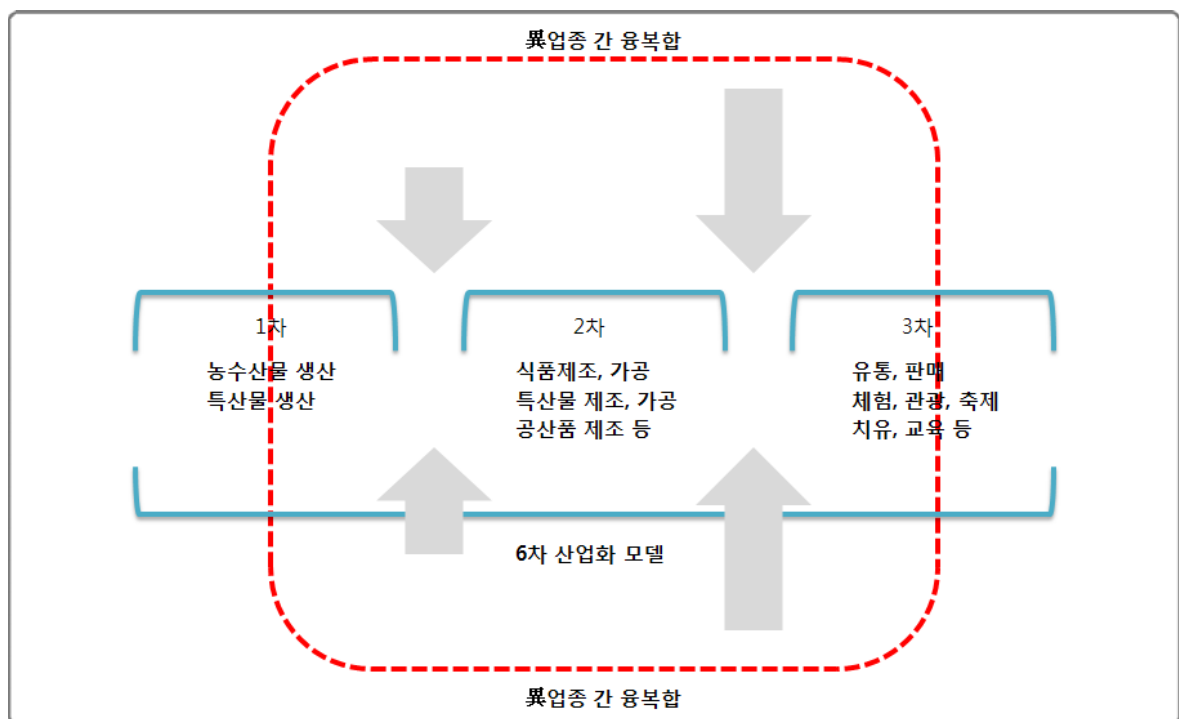
- 어촌 6차산업화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이 시급히 필요
- 어촌 6차 산업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안)은 2014년 입법예고 후 입법절차 추진

1.1.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1) 어촌 6차산업화 개념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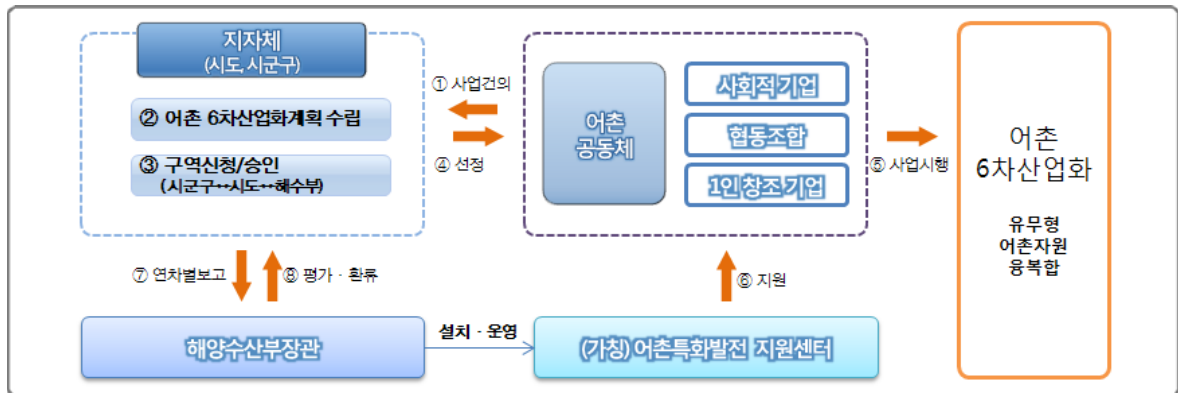
- 어촌 6차산업화란 어촌자원(인적·물적 자원 또는 특산물을 포함)을 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어촌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함¹⁾



〈그림 4.2〉 어촌 6차산업화 영역간 융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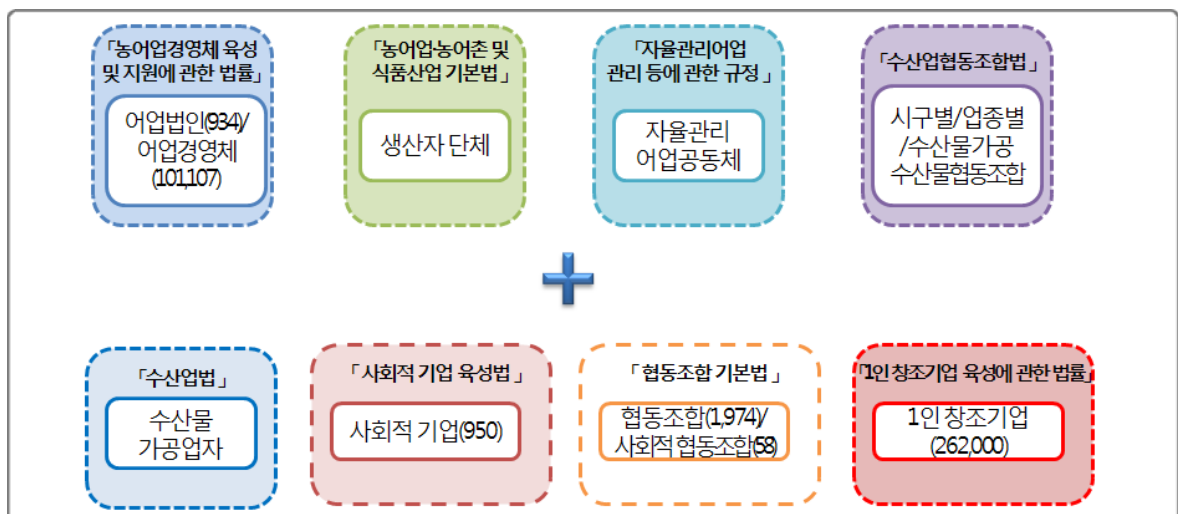
-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구성하고, 사업자가 (가칭)어촌특화발전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어촌자원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는 것임

1) 박상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p.35



〈그림 4.3〉 어촌 6차산업화 사업추진 개념

- 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사업자는 어촌공동체(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생산자단체, 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1인 창조기업 등이 그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



〈그림 4.4〉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안)

(2) 어촌공동체 자생적 성장기반 및 상향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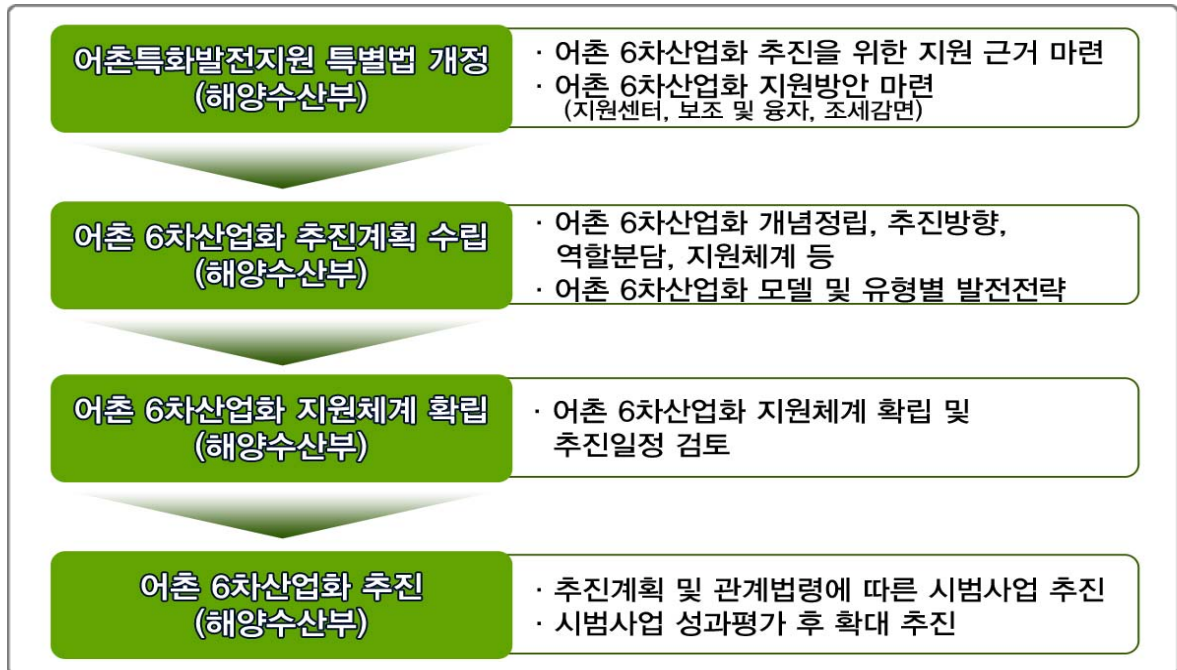
-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공동체가 사업의 중심 주체가 되어 계획 수립과정부터 사업추진, 성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생적 성장기반을 갖추며, 창출된 수익의 재투자 등을 통해 추가 정부지원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사업추진의 관리·감독 및 평가체계 강화

- 어촌 6차산업화는 초기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추진 과정과 연차별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이행
 -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과관리를 위해서 필요 시 보고 및 검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
 - 연차별 성과평가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해서 지원

2) 추진절차 및 체계

- 중앙정부 주도의 관련법 개정 및 어촌 6차 산업화 추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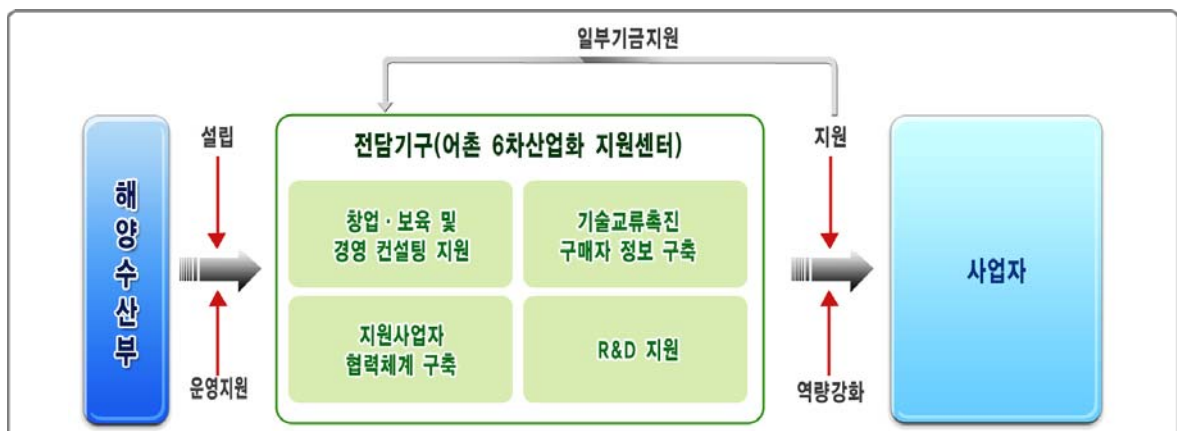


〈그림 4.5〉 어촌 6차 산업화의 추진절차 및 내용

1.1.5 사업내용

1)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운영

-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자원을 기반으로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인큐베이팅(Incubating) 지원하는 전담기구 마련과 운영이 필요함



〈그림 4.6〉 어촌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안)

- 전담기구는 사업자의 창업·보육 및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구축, 기술교류 촉진 및 정보구축, R&D 연구 지원 등 사업자의 자립적인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전담기구의 초기 설립과 운영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지만 안정화 이후 운영자금은 사업자들로부터 확보하여 운영
- 전담기구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24명 규모로 정책지원팀, 사업지원팀, 관리팀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그 업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1〉 전담기구의 인력 및 업무분장(안)

조 직	업 무	인원	구성원
센터장	센터 업무총괄	2	센터장 1인, 비서 1인
정책지원팀	어촌특화발전 총괄 예·결산, 인사, 물품·시설관리 등	6	팀장 1인, 팀원 5인
어촌특화발전 사업팀	창업보육 및 컨설팅 지원 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 기술교류 촉진, 구매자 정보 구축 지원	8	팀장 1인, 팀원 7인
어촌특화발전 관리팀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풀 구축 등	8	팀장 1인, 팀원 7인
합 계		24	

2)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 지원

(1) 보조 및 융자

- 보조 및 융자는 어촌 6차산업화의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자에게 6차산업화에 필요한 공동생산, 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공동연구 개발 및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홍보·판매지원, 창업자금 융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조세 감면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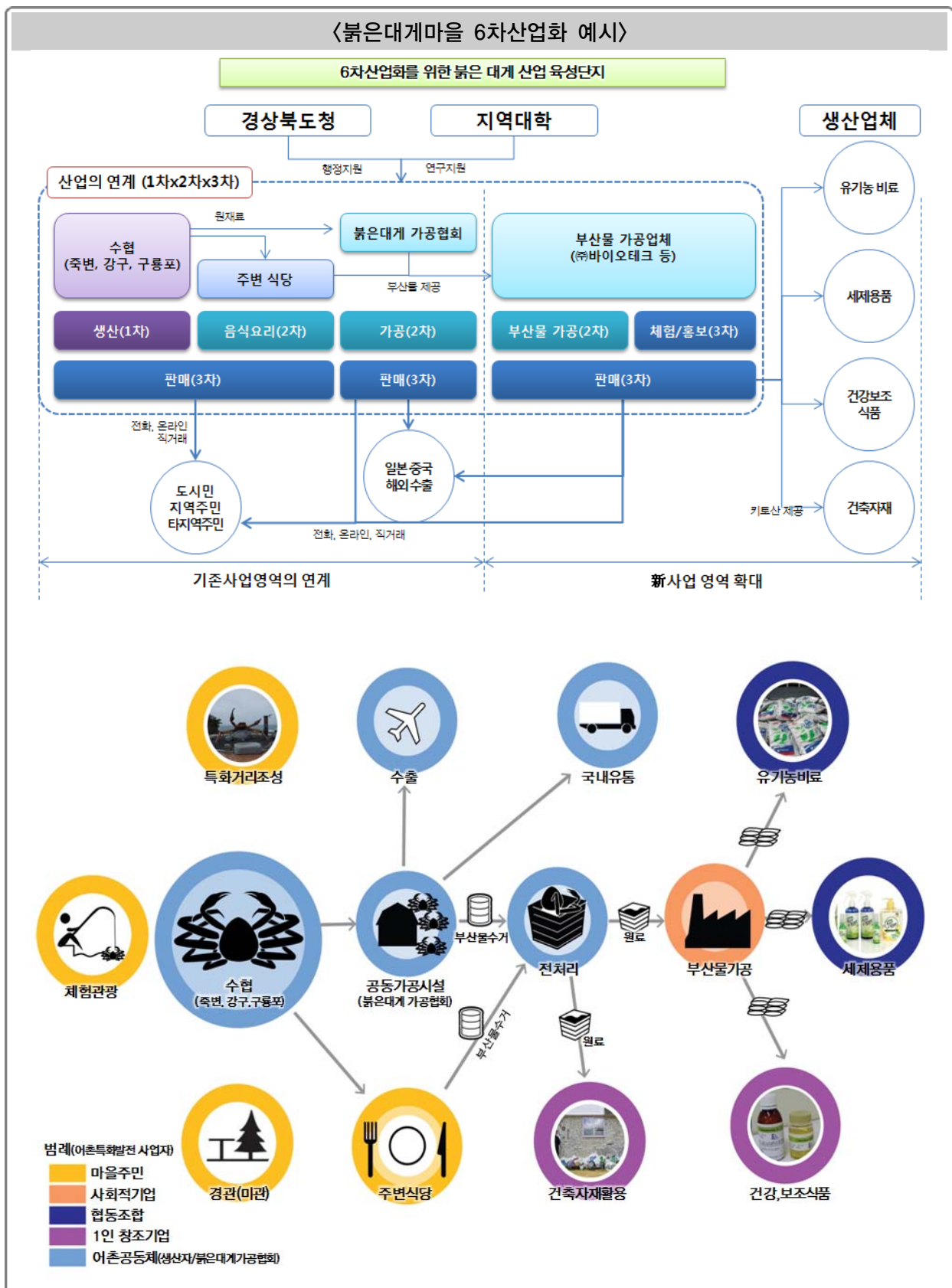
-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3) 어촌공동체 회사 육성 지원

(1) 법인화 설립 지원 및 역량강화

- 어촌 6차산업화의 사업주체로 기반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인화를 위한 지원과 컨설팅, 재무·회계·경영·마케팅 등 역량교육을 통해 자립기반과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

〈붉은대게마을 6차산업화 예시〉



1.1.6 주체별 역할분담

- 상향식 개발방식인 어촌 6차산업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 전담기구(지원센터) 간 역할분담이 필요

1) 중앙정부

- 해양수산부는 어촌 6차산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념정립, 추진방향, 사업평가·관리 등을 담당
 -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목표 및 범위, 추진방향, 개념화 및 유형별 모델 정립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 6차산업화 시행 후 연차보고에 의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6차산업화 지원을 조기종료, 확대, 지속추진 등을 결정

2) 지자체

- 지자체는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할 어촌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의 사업을 집행·관리 및 보고
 - 중앙정부의 어촌 6차산업화 추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공모
 - 사업자가 제출한 어촌 6차산업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채택여부 결정
 - 지정된 사업자를 감리·감독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이를 중앙정부에 연차별로 보고

3) 사업자

-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내외부 연대를 통해 사업자를 구성하고, 어촌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 수립·제출하여 추진
 - 전담기구(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사업 명칭, 사업자 명칭, 어촌자원 활용방안 및 개요, 사업지역, 사업내용,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 사업추진 성과를 절차대로 지자체에 보고

4) 전담기구

- 선정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보고
 - 사업자에 대한 창업보육 및 컨설팅, 사업자 간 협력체계 및 인력풀 구축, R&D 개발 지원, 기술교류 및 구매자 정보 구축 등 제공

1.1.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 6차산업화	65,500	2,500	3,700	11,900	16,200	31,200	14,400
	○ 어촌 6차산업화 전략 수립 연구	1,900	300	1,000	200	200	200	2,400
	○ 지원센터 설립·운영							
	○ 6차산업화 지원	61,000	2,200	2,200	11,200	15,200	30,200	2,000
	○ 어촌공동체 회사 육성·지원	2,600	-	500	500	800	800	10,000
일 정	○ 어촌 6차산업화 전략 수립 연구							
	○ 지원센터 설립·운영							
	○ 어촌6차산업 시범사업		4개소	(계속)				
	○ 어촌6차산업 본 사업				11개소	15개소	30개소	
	○ 어촌6차산업 평가 및 관리							
	○ 어촌공동체 회사 육성·지원		27개소	30개소	60개소	80개소	160개소	

1.1.8 기대효과

-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사업은 수산업의 생산, 유통·가공,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이(異)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어촌산업을 저기술·전통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일자리와 어촌의 소득 제고에 기여
-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 5년 간 사업비 총 655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357개, 어촌공동체 회사 357개소가 늘어나 총 800개소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공동체가 사업 전부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고 필요시 전담기구의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 내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음
- 기존 영어조합법인, 영어회사법인 이외에도 어촌체험마을, 자율관리공동체 등 어촌공동체 회사를 육성함으로써 어촌공동체의 투명성과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시켜 어촌산업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됨

1.2 어촌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 프로젝트

1.2.1 추진배경

- 현행 어촌정책은 기반시설 확충과 어촌관광을 통한 소득창출에 국한되어 어촌산업의 다양화 및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 한계
 - 인구감소, 고령화, 어업소득 정체 등 악순환으로 어촌경제 위축
 - ※ 어가인구 : (2000년)251천 명→(2012년)153천 명 / 고령화율 : (2000년)12.2%→(2012년) 27.8%
 - ※ 어업소득률 : (2000년)54.5%→(2012년)43.2% / 어업외소득률 : (2000년)28.1%→(2012년) 30.4%
 -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 등 하향식(Top-down) 지역균형발전의 마을단위 개발방식으로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지역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증가,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인프라 부족

1.2.2 목적 및 필요성

-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촌지역에 농산촌을 포함한 새로운 권역단위 지역정책 도입 필요
 -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특성과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체제로 개편됨
 - 수산·어촌자원을 토대로 창조적 접근(이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
- 어촌의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권역단위 종합적 접근
 - 어업생산 증대와 어촌관광 등 부문적 접근에서 소득, 일자리, 안전, 복지, 정주기반, 관광 등 권역단위 종합적 개발을 위한 칸막이 행정 극복
-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공간, 사업, 부처별(칸막이)로 분절화된 사업을 바다의 시각에서 새로운 권역화를 마련하고, 공간·콘텐츠·사람에 대한 통합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어촌개발 방식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1.2.3 관련법규

-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어장, 어항, 연안, 어촌, 농촌의 공간을 권역화하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접근하기 때문에 해당 단위공간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이 해당됨

1.2.4 추진방향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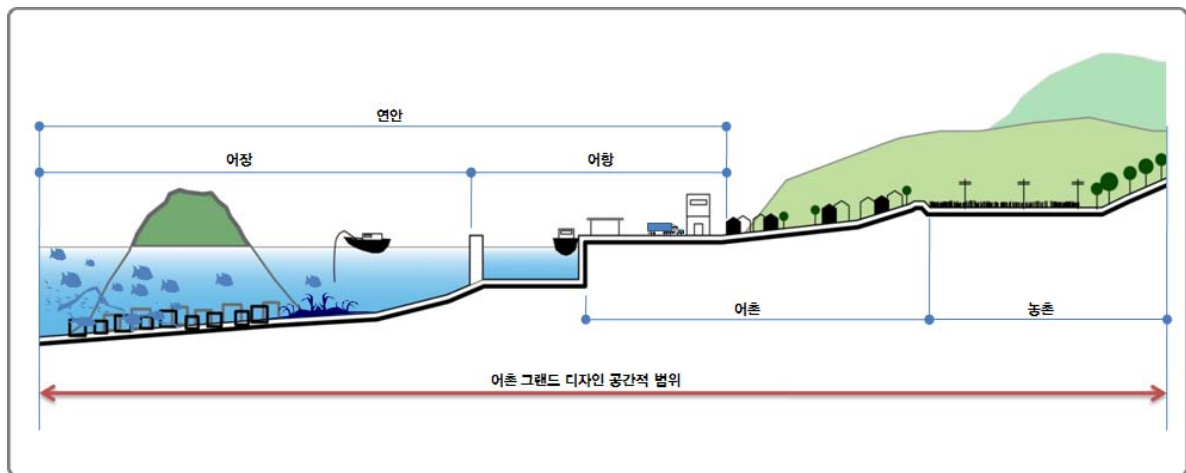
1) 추진방향

(1) 어촌 그랜드 디자인 개념정립

- 어촌 Grand Design이란 정부·주도 행정단위(읍면, 마을)의 지역균형발전에서 벗어나 바다의 시각에서 새로운 기준의 권역설정과 공간·콘텐츠·사람에 대한 융복합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어촌개발 전략을 의미함

(2) 어촌 그랜드 디자인의 공간적 범위

- 어촌 그랜드 디자인은 어장, 어항, 연안, 어촌, 농촌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입지적·공간적·브랜드화 특성에 따라 유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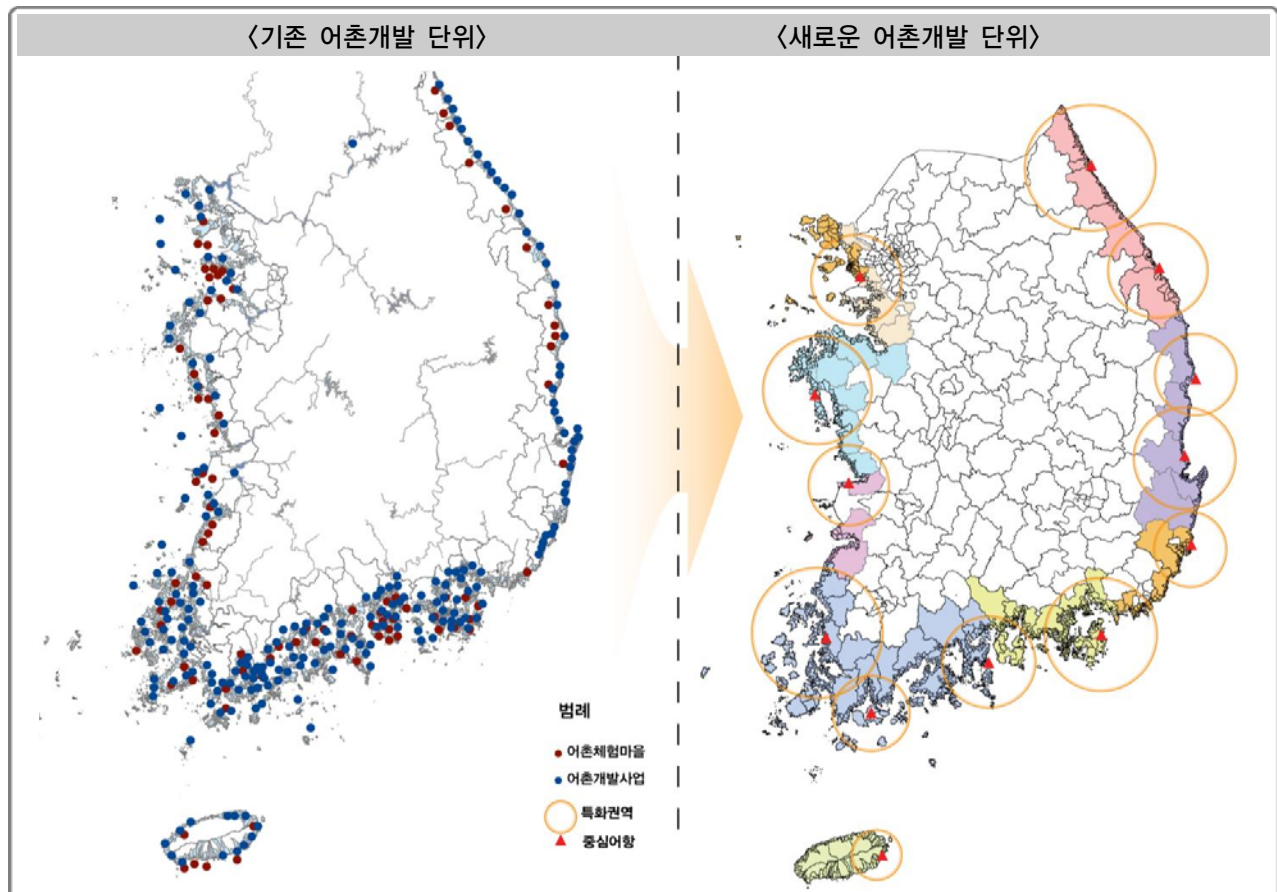
〈그림 4.7〉 어촌 그랜드 디자인 공간적 범위

(3) 어촌 그랜드 디자인 권역화 방향

- 어촌 그랜드 디자인의 권역화는 행정구역 및 어촌공동체 경계를 넘어 바다의 시각에서 주요 만(灣), 섬, 연안도시, 내수면, 내만, 해중, 농어촌통합 등 이용세력권과 어촌자원의 동질성 및 연대 등을 통해 새로운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규모화, 특성화 추진



〈그림 4.8〉 어촌 그랜드 디자인 권역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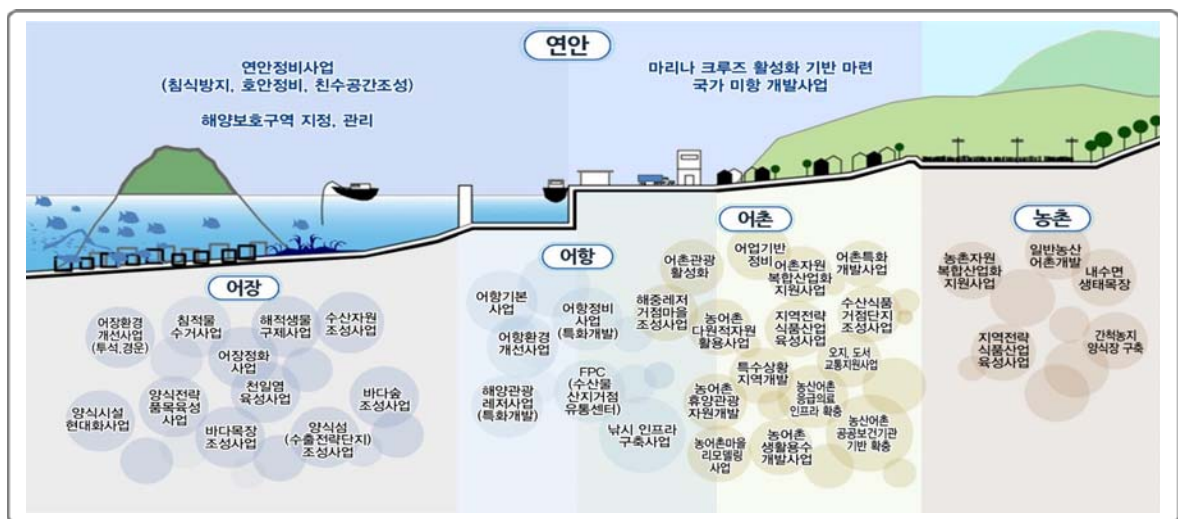


주 : 세부 권역화 방향은 KMI ‘어촌 그랜드 디자인 개념정립 연구’ 결과를 추후 반영

〈그림 4.9〉 어촌 그랜드 디자인 권역화 방향(안)

1.2.5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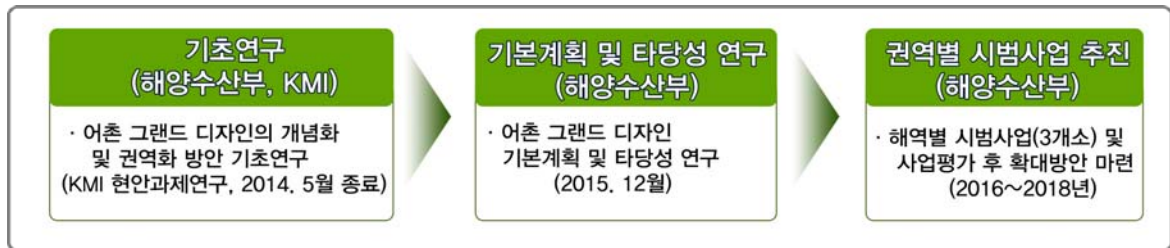
- 어촌 Grand Design은 해당 권역의 어촌산업, 에너지, 어메니티, 재해예방, 환경복원,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위한 세부전략을 포함
 - (어촌산업) 수산·어촌자원을 토대로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 (브랜드화) 역사, 문화, 생태, 관광, 경관 등 지역의 핵심 콘텐츠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브랜드화 전략으로 육성
 - (관광) 어촌 그랜드 디자인의 전략을 통해 국내관광객 뿐만 해외관광객을 목표 시장으로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부각
 - (에너지) 풍력, 태양력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Eco 어촌 조성
 - (어메니티) 연안·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보존, 개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재해예방)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시설 재배치, 완충녹지 조성, 어항시설 적기보강 등 사전적 예방 강화
 - (환경복원) 어장환경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밀집지역 배후의 어촌 환경 개선, 자연해안 복원 등 추진
 - (지역 인프라) 교육, 의료, 복지, 주거, 교통, 상하수도 등 공공인프라의 효율적인 배분 및 전달체계 강화



〈그림 4.10〉 어촌 Grand Design 사업내용

1.2.6 추진계획

- 어촌 그랜드 디자인은 2014년까지 개념화 및 권역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2015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을 확보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그 세부일정은 <그림 4.11>과 같음



〈그림 4.11〉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

1.2.7 연차별 투자계획

- 어촌 그랜드 디자인 시범사업은 2014년 기초연구(KMI 자체연구), 2015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2016년 사업기본방침 마련 후 연도별로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함
-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총 920억이 소요되며, 연차별로는 2015년 어촌 그랜드 디자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20억 원, 각 해역별 시범사업에 300억 원씩 투자되는 것으로 수립하였음

〈표 4.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	92,000	-	2,000	30,000	30,000	30,000	-
일 정	○ 기초연구(개념정립 및 권역화 방안연구)							-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
	○ 사업기본방침 마련							-
	○ 시범사업 추진				1개소	1개소	1개소	-

1.2.8 기대효과

-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정체 등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촌지역에 새로운 어촌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권역별 중점개발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92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일자리 361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어촌」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과제로 어장, 어항, 어촌, 농촌을 연계한 새로운 권역단위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어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지금까지 농어촌정책은 육지의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바다의 시각에서 새로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2 어촌관광 활성화

2.1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1.1 추진배경

1) 어촌체험마을 소득 및 방문객수 증가

- 2013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평가에 의하면 어촌체험관광의 수요와 체험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어촌체험마을 관광소득과 어가소득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어촌체험마을 관광소득이 어가소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어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어업소득에만 의존하는 어촌공동체와 어촌체험마을 운영으로 어업외소득(관광소득)을 창출하는 어촌공동체와는 향후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어촌체험마을 관광소득 증가율 (2007년) 152백만 원 → (2012년) 198백만 원(30.2%증가)
- ※ 전국 어촌계 어업소득 증가율 (2007년) 24백만 원 → (2012년) 28백만 원(16.6%증가)
- 도시민의 소득과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어촌체험마을을 찾는 가족단위 중심의 도시민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 (2006년) 3,521천 명 → (2012년) 5,606천 명(59.2%증가)

2) 운영능력 미흡과 내부갈등으로 활성화 한계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원된 마을 중 운영능력 미흡과 내부갈등으로 매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2012년까지 21개소 체험마을이 퇴출됨
 - 운영실적 평가에서 퇴출된 21개소 체험마을은 대부분 체험프로그램 부실, 어촌관광 리더의 부재, 마을내부 갈등 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음

3) 체험마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 된 마을은 직접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어촌계장, 사무장 등 일부 간부들의 통장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4) 홍보·마케팅 전략의 변화

- 현재 어촌체험마을의 홍보는“바다여행”사이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함
 - 특히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활용한 불특정 다수에서 마케팅 전략을 통한 목표 타겟팅을 통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2.1.2 목적 및 필요성

- 증가하는 어촌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어촌체험마을 자생적 성장을 위한 추진체계 재편
 -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완료후 평가를 통해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 그 동안의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이 양적성장에 집중했다면 질적성장 도모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투명한 운영시스템 구축
 - 획일적 체험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관광수요(역사, 문화 등)에 대응하는 콘텐츠 개발 필요
- 어촌체험마을의 투명한 경영질서 확립을 위한 전산시스템 지원 및 관리 필요
 - 불투명한 경영회계로 인하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자에 대한 마을 내 불화 발생

2.1.3 관련법규

1) 지원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2.1.4 추진방향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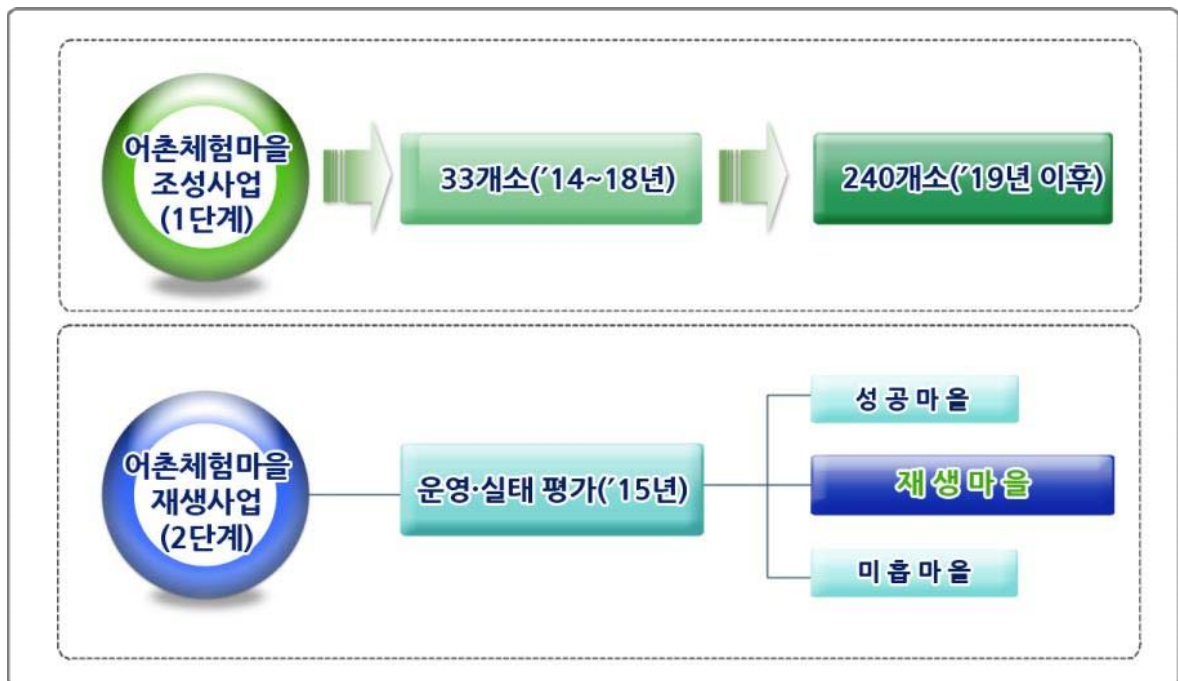
1) 추진방향

(1)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1단계) 지속 추진

- 어촌체험마을은 현재까지 121개소를 지원하여 2013년말 기준 21개소가 퇴출되어 100개 마을에서만 운영 중에 있음
 - 퇴출된 어촌체험마을의 사업의지 및 주민역량 등의 지표를 마련하여 2015년부터 매년 2개 마을에 대해 회생프로그램 운영
 - 어촌체험마을 신규 26개소 조성 및 회생프로그램 8개소로 총 134개소로 지정 운영사업 이후 18년 동안 총 134개 마을이 완료될 예정임
 - 정부는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를 현재 개소당 5억 원에서 2015년부터 개소당 7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을 높여 사업주체의 책임성을 강화
- 지자체와 어촌공동체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가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어촌관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조사 후 확대 추진
 -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기 추진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수요를 재조사하고 이에 따라 신규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하여 추진
 - 어촌체험관광의 장기적인 수요를 고려한다면 현 공급 수준에서 351만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340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이 추가로 필요함²⁾

(2) 어촌체험마을 재생사업(2단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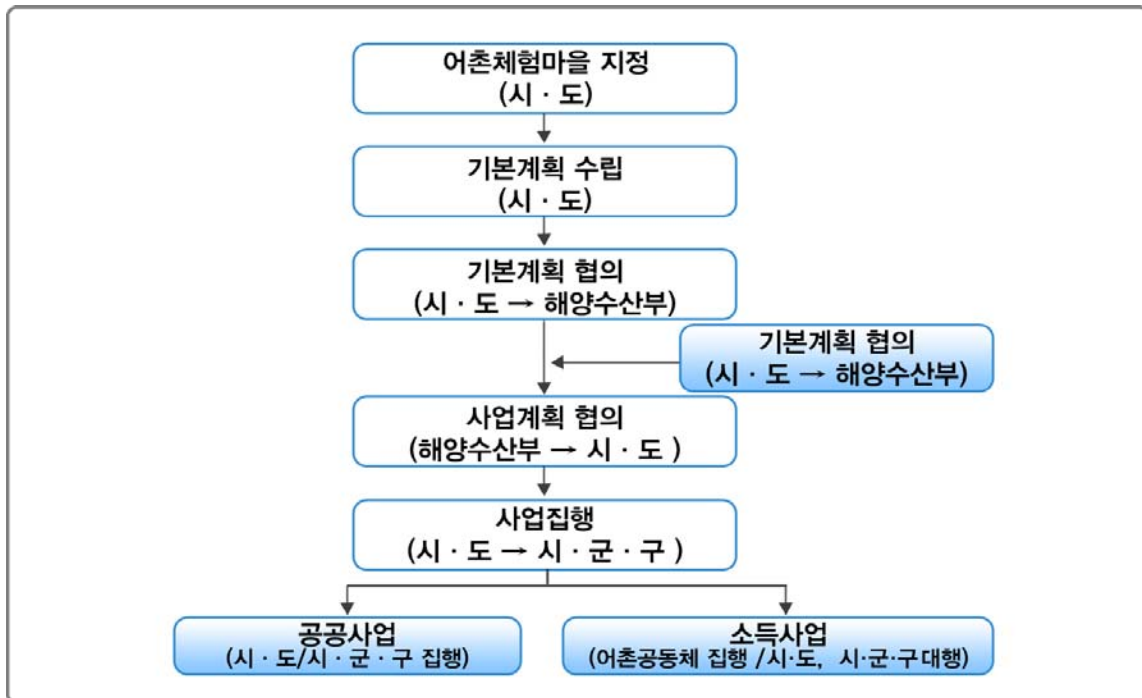
- 1단계 어촌체험마을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공마을, 재생마을, 미흡(퇴출)마을 등 세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어촌체험마을 재생사업(2단계)을 추진함
 - 성공마을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여 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 어촌공동체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마을로 2단계 사업에서 제외
 - 재생마을은 외부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성공마을 진입이 가능한 마을로 2단계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
 - 미흡(퇴출)마을은 체험마을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로 과감히 퇴출



2)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발전대책 수립 연구」, 2010. p.92

2) 추진체계

- 시·도에서 어촌체험마을 지정·기본계획수립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평가하여 예산 지원



〈그림 4.12〉 추진절차 및 내용

2.1.5 사업내용

1) 경영·회계·회사설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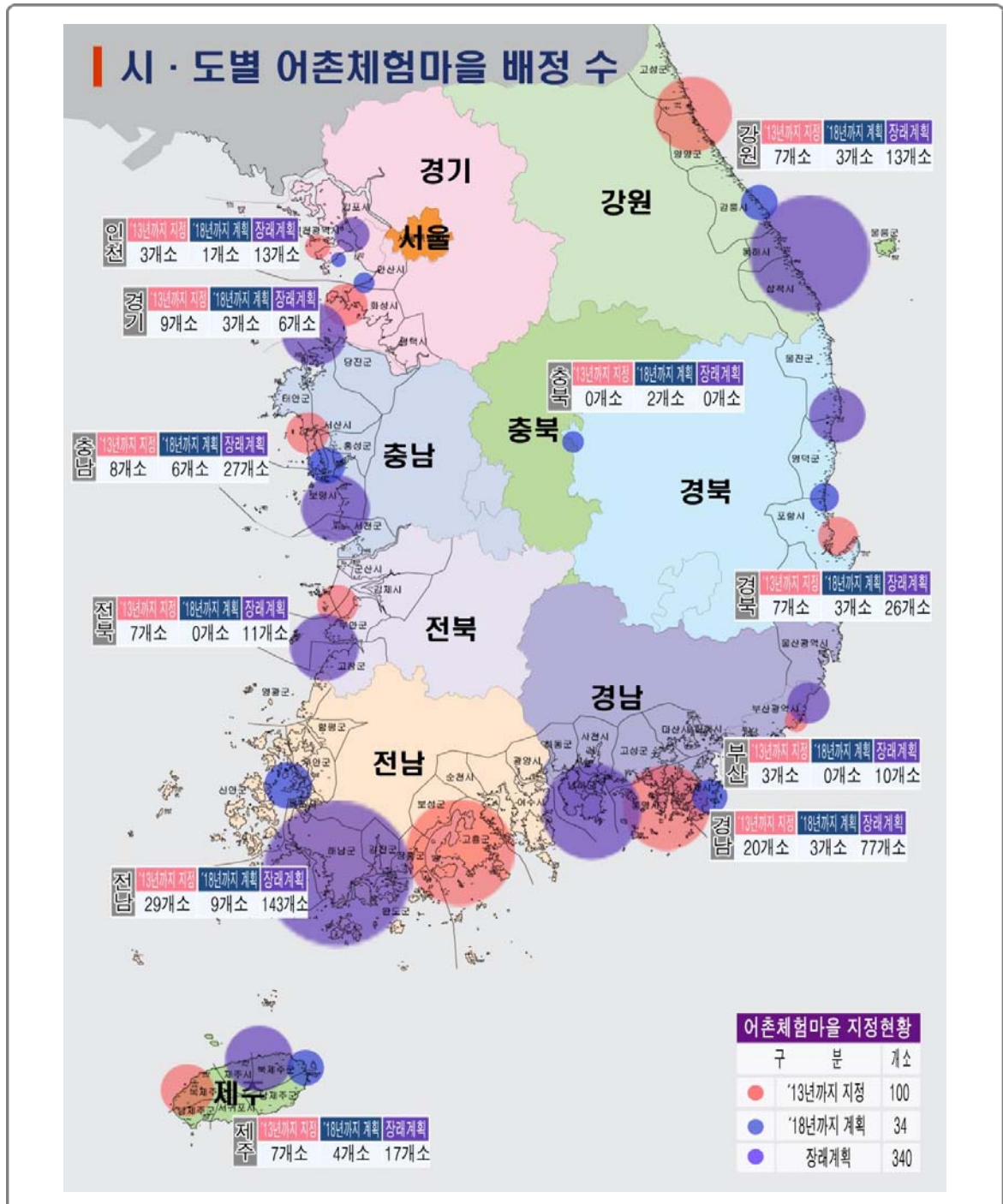
- 경영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장부 시스템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 어촌체험마을이 어촌공동체 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법인화를 위한 법적 절차, 서류작성, 법률상담, 교육 등 인큐베이팅 지원

2)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 재생마을로 선정된 대부분의 어촌체험마을은 바지락 등 수산물을 단순 채취하는 유희형 체험에 한정되어 있어 맛(음식), 역사·문화, 생태(학습) 등 다양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연 프로그램 활동 지원
- ※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시 어장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어장관리방안 마련 필요

3) 스마트 홍보·마케팅 지원

-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체험상품, 가격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비용으로 높은 홍보성과를 유도



〈그림 4.13〉 어촌체험마을 지정 및 계획(안)

2.1.6 추진계획

- 2014년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6개소), 인증제도 도입(부처협의), 사전예약제 도입
 -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 개최,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재능기부,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 2015~2018년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연간 5개소), 운영실태 평가,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 경영·회계·회사 설립지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스마트 홍보·마케팅 지원

2.1.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3,500	4,000	4,500	5,000	5,000	5,000	
	○ 어촌체험마을 조성	16,500	3,000	3,000	3,500	3,500	3,500	
	○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7,000	1,000	1,500	1,500	1,500	1,500	
일 정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6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2.1.8 기대효과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차 발전기본계획 사업기간 중 총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21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어촌마을조성사업은 어촌개발 모델 가운데 지자체와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수요와 부가가치 창출로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어촌체험마을 재생사업(2단계)이 추진되면 그 동안 취약했던 운영·관리 투명성 제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져 더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2.2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2.2.1 추진배경

1) 해중레저관광 수요의 증가

- 해중레저활동은 과거 해외 원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중관광활동을 위한 전문업체(다이빙숍)가 전국에 189개소가 있고, 동호회도 119개 7,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³⁾

- 한국잠수교육대표자협의회 2010년 스킨스쿠버 자격증 발급현황에 따르면 약 34만 명으로 다이빙 참여인구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해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중레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울진 오산항 잠수센터, 울진 직산항 일원 바다목장교육관), 강릉시(해중공원), 울릉군(해중전망대), 스킨스쿠버 어촌체험마을이 14개소에 달함

2)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중레저 활동이 활발한 국가는 주요 거점별로 해중레저 교육기관과 다이빙포인트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중앙부처를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다이빙포인트 1,100개소(연간 이용객 170만 명)와 23개의 교육기관(PADI Japan의 점유율 약 70%)이 있으며, 경제 산업성 서비스 정책과에서 스킨스쿠버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한편, 국내에는 해중레저 교육기관이 2개에 불과해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볼 때 부족한 실정이며, 안전한 해중레저 활동을 위한 법·제도 기반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다이버의 이동수단인 선박의 경우 지금까지 낚시어선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유선 및 도선사업법」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3) 어업인과 해중레저 활동자 간 갈등으로 활성화 한계

- 해중레저활동은 해중경관이 수려한 수중포인트 개발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안지선에 마을어장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와 해중레저 사업자 간에 갈등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
- 해중레저 활동자가 마을어장 내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절도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건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20건으로 나타났음
- 또한, 다이버의 이동수단인 선박의 경우 낚시어선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해경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어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2.2.2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중레저활동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기반시설과 법제도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 어촌공동체, 민간사업자 간 상생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촌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중레저 거점 마을 조성이 필요함

3) 해양경찰청 내부자료(2010년 기준)

- 특히,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외부의 민간사업자 간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적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어촌의 새로운 상생발전을 개발하고자 함
-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 산호초, 아열대 어종이 출현하면서 해중경관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높고, 미래의 어촌·해양관광 산업을 선도적으로 실현시키는 시범모델 사업으로 시급이 추진이 필요함
- 해중레저 거점마을은 바닷속 해중경관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해중림, 방류사업을 통해 어장의 생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마리나, 쇼핑센터, 해상낚시터 등 민자유치를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2.2.3 관련법규

1) 지원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 국정과제 11번(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관리) 세부과제 1(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바다생태관광, 레저, 낚시, 관상어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 확대

2) 관련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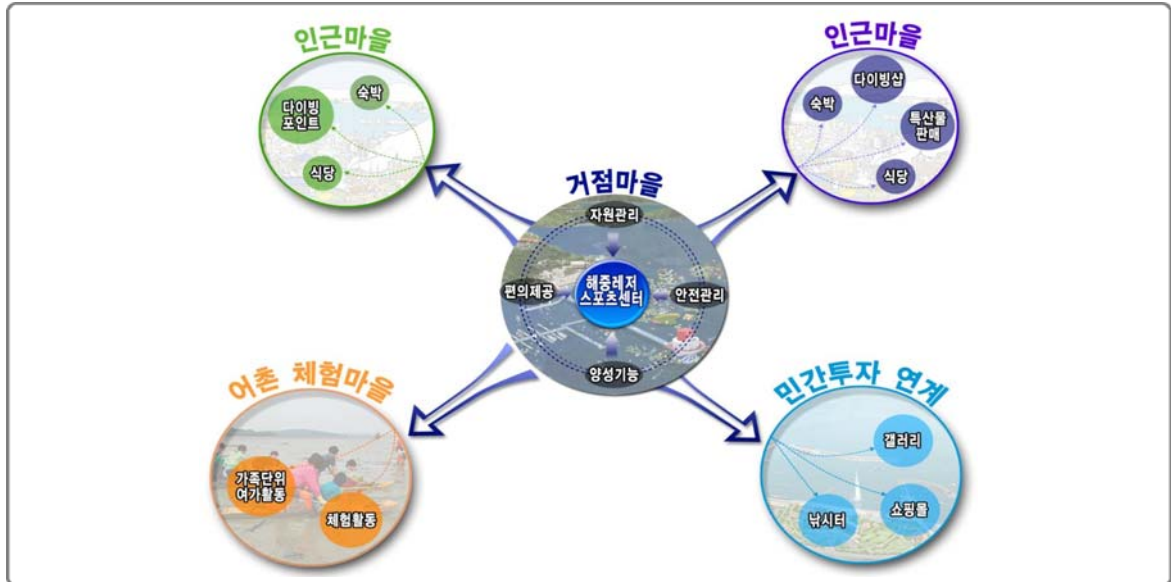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장비 등)
-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 「수산업법」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

2.2.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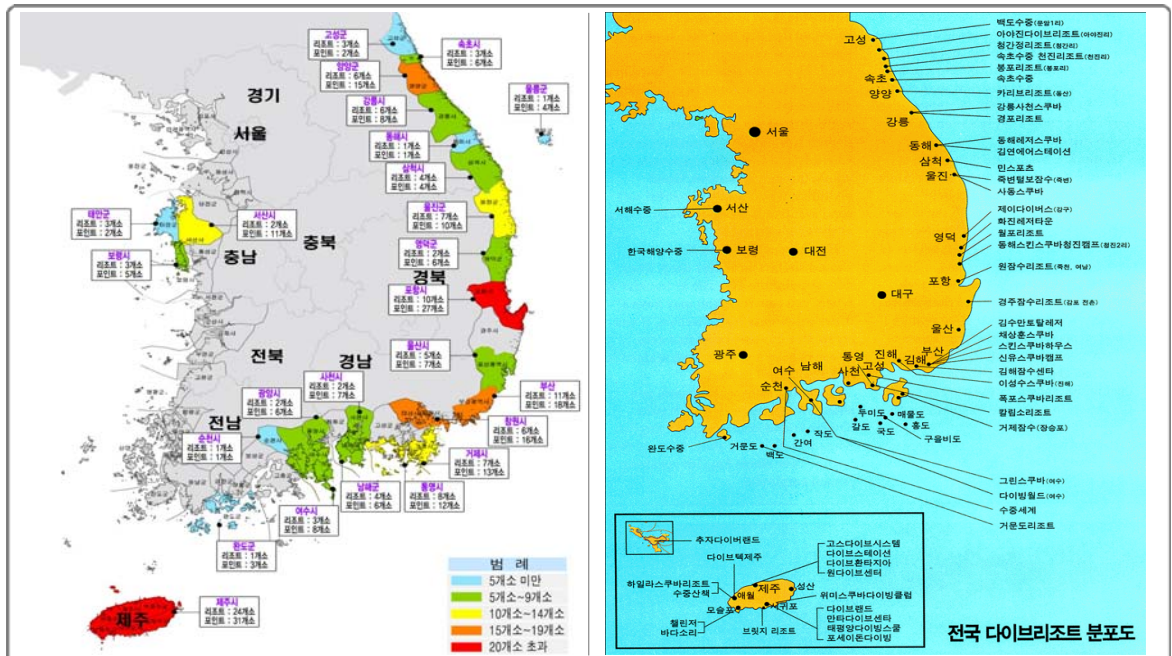
- (1) 어촌·어항·어장의 통합적 접근과 민간개발과 연계 추진
 - 해중레저 거점마을은 공공영역의 기반시설 구축과 민간부문의 수익사업을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유발
 - 인공어초, 해중전망대, 안내센터(교육장) 등 공공시설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해중레저마을 개발 시 민자유치(쇼핑몰, 갤러리, 낚시터 등)를 통해 관광객의 집객력을 높여 어촌공동체에서 수산물판매, 식당, 펜션 등 어촌비즈니스로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림 4.14〉 해중레저 거점마을 연계개발 모델(안)

- 해중시계를 고려하여 동해안 및 제주남해안 일부 지역을 해양레저 거점마을 후보지로 지정하고,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



〈그림 4.15〉 전국 다이빙 리조트 및 포인트 위치도

(2) 이해당사자 간 신뢰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해중레저활동 이용객, 다이빙숍, 마을어장 내에서 생계를 영유하는 어업인, 해당 지자체 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
 - 스킨스쿠버 дай버들과 같이 해중레저활동 이용자들은 마을어장 내 진입 시 다이빙숍과 어촌공동체와의 협약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
 - 특히, 해중레저활동 이용자들은 마을어장 내 이용 시 불가사리, 어장쓰레기 등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해중관찰, 촬영 이외에 포획, 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준수
 - 다이빙숍, 해중레저활동 이용객들은 반드시 해중레저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어촌공동체와 함께 참여하는 마을어장 오리엔테이션 제도 운영
 - 바닷속 해중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수산업법 제65조에 근거한 유어장을 지정하고 입어료 징수 등 어촌공동체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

(3) 유어장 지정 등을 통한 바닷속 해중경관 조성

- 연안바다목장, 해중립 조성, 인공어초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해중경관을 조성



〈그림 4.16〉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사업의 개념도

2) 추진체계

- 어촌공동체와 스쿠버업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신청(어촌 공동체, 스쿠버업체→시·군→시·도→해수부)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정하고 예산 지원
- ※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그림 4.17〉 추진절차 및 내용

3)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중경관 조성사업 지원(인공어초, 해중조형물, 해중전망대, 자원조성 등) - 어촌지역 경관 정비사업(해중레포츠 센터, 진입시설 등) - 관광·레저 기반시설(선착장, 방파제 등) ※ 어항부문에서 담당 	
어촌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공간 제공(유어장 등) - 편의제공을 위한 수익사업(식당, 민박, 수산물 판매 등) 무분별한 포획 방지 감시 수산자원 보호(저장정화, 치어방류 등) 	
전문업체 (다이빙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킨스쿠버 교육 및 체험객 유치 - 체험다이빙, 전문다이빙 교육을 통한 수요자 육성 - 건전한 다이빙 인구 양성(Eco-diver) - 안전관리(장비, 잠수병 예방 등) - 환경,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과의 갈등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어촌·어장의 환경보호(해적생물퇴치 및 어장환경개선) 실시 - 인근 관광 안내 및 다이빙 전문업체 소개 	

2.2.5 사업내용

1) 해중레저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

(1) 해중레저교육센터

- 해중레저교육센터는 해중레저 거점마을의 중심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 안내, 해중레저교육, 실습, 해중레저활동 이용자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
 - 해중레저 거점마을의 숙박, 식당,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다이빙숍 연계 지원



〈그림 4.18〉 해중레저교육센터 예시(울진해양레포츠센터)

(2) 관광기반시설 지원

- 어촌·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로 해중전망대, 바다낚시터, 피서리나 계류시설 등으로 일반국민 모두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한정함



〈그림 4.19〉 해중레저 관광기반시설 예시

(3) 해중경관 조성사업

- 바닷속 해중경관 조성사업은 인공구조물(부처, 남근형상 등), 난파선, 비행기 등 독특한 경관을 조성하고, 이러한 구조물이 인공어초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류, 해조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성
- 해중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나 인공어초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함



자료 : 해양수산부, 동서제주 바다목장 사업 2단계 2차년도 연구, 2007.

〈그림 4.20〉 해중경관 조성사업 예시

(4) 해중레저 공공기반시설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 해중레저 공공기반시설을 위해 관광잠수정, 쇼핑센터, 숙박시설, 바다낚시터, 스노클링(Sea Walking) 사업 등이 유치되도록 민간투자 설명회 등 추진

2) 해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 지원

(1) 해중레저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 해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갈등예방과 상생적 비즈니스 구축을 위해 해중레저 활동 시 필요한 이용자, 관리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2) 해중레저활동 시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쓰레기 청소

- 해중레저활동 이용자가 희망 시 마을어장 내 해적생물 구제와 어장쓰레기 수거를 통해 어촌공동체와의 신뢰관계 강화
- 해중레저활동 이용자가 수거한 해적생물과 어장쓰레기를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어장환경 개선을 유도

2.2.6 추진계획

- 2014년 : 어촌공동체와 해중레저사업자 간 상생모델 마련하여 시범사업 추진(1식)
 - ※ 연 5억 원, 2개년 투자
- 2015년 : 해중레저 거점마을 시범사업 및 해중레저거점 수요 및 타당성 연구 수행
 - ※ 해중시계, 해중경관자원,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중 레저거점 수요 및 타당성 조사
- 2016~2018년 :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사업(3개소) 추진

2.2.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00	500	1,500	30,000	30,000	30,000	
일 정	○ Pilot 시범사업		1식	(계속)				
	○ 타당성 조사							
	○ 본 사업				3개소	(계속)	(계속)	

2.2.8 기대효과

-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2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총 361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자유치 등이 원활하게 유치될 경우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됨
- 바다 속 자원을 기반으로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회복, 어촌공동체와 민간의 상생적 비즈니스 구축 등 복합적인 어촌의 미래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2.3 문화어촌 구축

2.3.1 추진배경

- 최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문화예술가 마을공동체로 들어가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최근 낙후된 지역이 문화예술이라는 새로운 재생방식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도시화·산업화를 겪으면서 유·무형의 전통과 가치 있는 ‘수산업·어촌유산’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음
 - 어촌정책이 생산기반확충을 통한 어업소득과 어촌관광 등 어업외소득 제고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져 가치 있는 ‘수산업·어촌 유산자원’이 저평가되거나 훼손·소멸되고 있음
 - 특히, 어업 노동가요(어로민요), 전통어법, 어촌설화 등 무형의 유산자원은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
 - 수산업·어촌유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교육활동 전개가 미흡
 -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국가 농어업유산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수산업·어촌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은 부족
 - 어촌유산은 독살, 갯벌 및 염전, 죽방렴, 해녀, 원담 등 6개 유형자원에 한정되어 추가적인 발굴과 지정이 필요하며, 특히 무형자원은 소실되면 복원할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해외의 경우 관련 기관 간에 문화유산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지역중심의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다양한 플랫폼 전시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 해외사례 : 호주의 판도라, 미국의 VOAHA(The Virtual Aural History Archive), 영국 국립 아카이브(TNA)

2.3.2 목적 및 필요성

- 어촌은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폐교, 빈집 등이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시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는 문화체험 기회 제공하고자 함
- 급속히 소멸하고 있는 어촌의 유·무형 유산 등 다양한 어촌자원의 자료수집과 영구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촌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국내 어촌자료의 통합관리 기능 확대 및 향후 어촌자료 연구, 교육, 원자료에 창의성을 더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련이 필요

2.3.3 관련법규

1)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9조(농어촌 거점 지역의 육성)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제45조(전통 농경·어로 문화의 계승 등), 제46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4조(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 국정과제 112번(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세부과제 1(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 어촌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자원화

2.3.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1) 문화예술인마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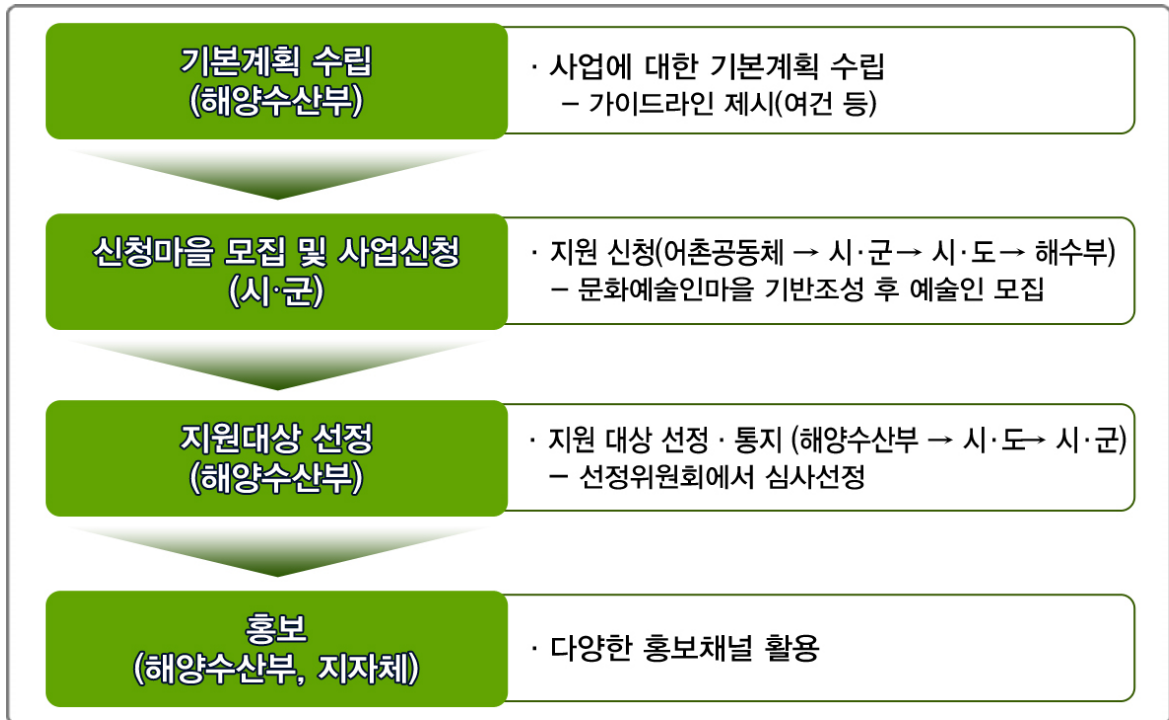
- 문화예술인의 어촌 정착지원 및 도시민과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여건 조성 추진
- 도·어간 문화 향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어촌지역의 폐교·빈집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공간으로 활용
- 문화예술인 정착 후 지역민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문화복지 공유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창작물이 지역 커뮤니티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원으로 활용
- 문화예술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명소화 추진

(2) 어촌 유·무형 문화재 활용·보존

- 수산업·어촌의 유·무형 문화재 발굴을 통한 어촌민속전시관, 국립농어업박물관과 연계하여 추진
- 어촌 유·무형 유산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현장관리인,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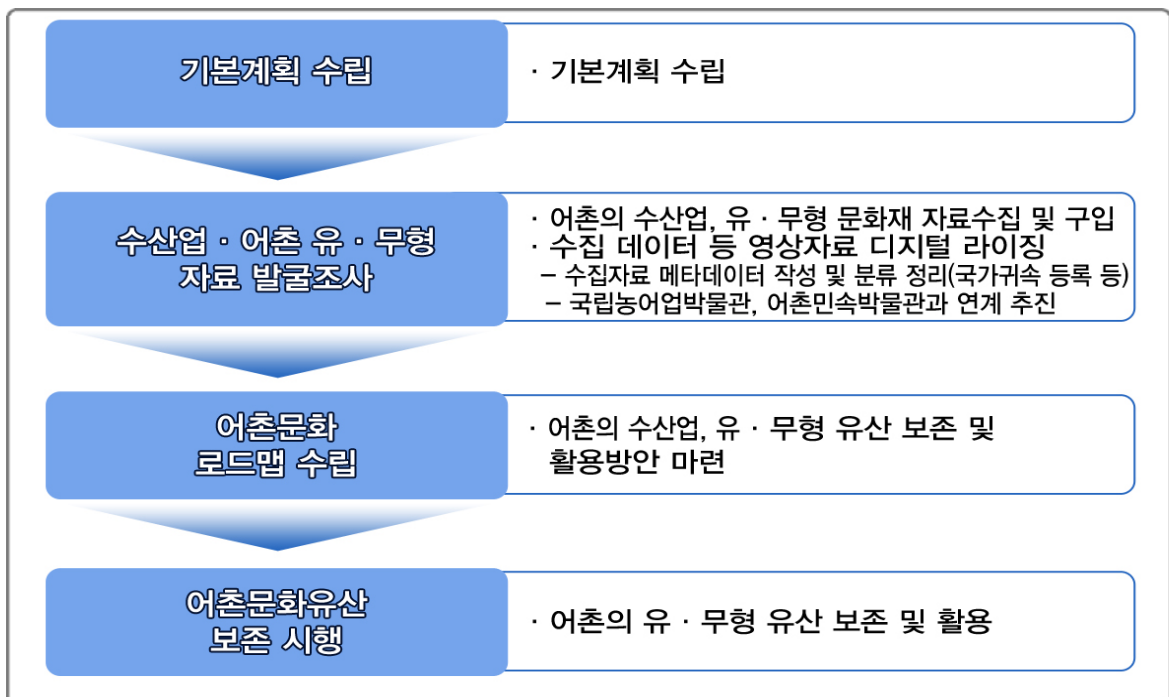
2) 추진체계

(1) 문화예술인마을 기반조성



〈그림 4.21〉 추진절차 및 내용

(2) 어촌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그림 4.22〉 추진절차 및 내용



〈그림 4.23〉 어촌 유·무형 자원 발굴·보존·활용 프로세스 예시

2.3.5 사업내용

1)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수립

- 전국 어촌지역의 유희자원을 조사하고,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화방안 제시

2)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 문화예술인들의 정착유도를 위한 기반조성
 - 빈집·폐교 등 리모델링을 통한 창작·전시·거주공간 제공
 - 문화예술인과 지역민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어촌지역 주민의 문화체험기회 제공
 - 문화예술인의 창작물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지역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지역민의 문화복지 여건 향상 및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문화예술인 정착 후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관광 명소화 추진
- ※ 소설가 이외수의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 정착 후 관광지로 발돋움



〈그림 4.24〉 문화예술인 마을조성 예시(헤이리·저지 마을)

3) 어촌유산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s) 구축

- 어촌 유·무형 유산 보존에 필요한 전국단위 어촌 실태조사
 - 수산업·어촌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 어촌 유·무형 유산에 대한 디지털 저장 및 발굴로 어촌관광에 활용하며, 어촌민속전시관 및 2018년 개관 예정인 국립농어업박물관과 연계
 -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규교육기관 배포 및 홍보 진행
 - 사용자가 원자료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생산할 수 있도록 창조적 접근 유도
- ※ 호주 판도라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PANDORA 3’를 통해 호주 웹자원을 목록화, 뉴질랜드의 ‘Digital NZ’, 미국(The Virtual / Aural History Archive), 영국 TNA 등

〈표 4.6〉 다양한 어촌의 유·무형 자산 종류 예시

구 분		분 류	자 원 종 류
자 연 문 화 자 원	자연 환경	관광기반	어촌지역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해안공원, 전망대, 명승지, 사적지, 유적지 등)
		동식물	해당 마을의 특별한 동식물 자원 (천연기념물 포함) (유채꽃, 모감주 나무 군락지, 동백나무 군락지 등)
		어촌경관	바다에 연접한 어촌지역이 경관자원 (수려한 어촌경관, 특이한 바위, 절벽, 폭포 등의 자원)
		농산촌 경관	어촌지역과 연계가능한 농촌 경관자원 (유채단지, 다랭이논, 특수농업작물(녹차, 유자 등))
	사회 문화	사회관습	어업 생산체계의 유지 활동 (당제, 갯제 등)
		문화체험	어업 생산과 관련된 문화적 활동 (마을 축제 등) 어촌 체험을 위한 시설 (어촌 체험마을 등)
수 산 활 동 자 원	어업 공간	어장	해당 마을 특산 수산물 생산 어장 (자연산 바지락 어장, 참돔 낚시터 등)
		어항	해당 마을의 어항시설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포구 등)
	생산 수단	생산기술	어업방법의 지식과 기술, 어구제작의 지식과 기술
		어촌공급 재화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도구(어선, 어구, 사료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의식주생활도구(의복, 식료품 등)
	수산물 생산소 비	해수산물	해당 마을의 대표적 해수산물 (영덕 대게, 목포 홍어 등)
		가공유통	수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시설(가공공장 등) 수산물을 유통하는 소비시설(수산시장, 수산식당 등)
인 적 자 원	역사인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지역의 대표 인물 (이순신 장군, 장보고 장군, 신사임당 등)
	문화인물		문화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지역의 대표 인물 (유명 시인, 소설가, 조각가, 화가 등)
	전통인물		과거의 우수한 전통을 잇는 지역 대표 인물 (인간문화재, 판소리, 전통도자기 등의 전수자 등)
기 타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원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자원조사」, 2011년

2.3.6 추진계획

- 2015년 : 문화예술인 마을 기반조성 시범사업(1개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 2016~2018년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3개소/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실태조사
- 2019~2030년 : 지속적 홍보,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및 관리

2.3.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7〉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문화어촌 구축	12,100	-	1,300	3,500	4,000	3,300	3,600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10,000	-	1,000	3,000	3,000	3,000	-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2,100	-	300	500	1,000	300	3,600
일 정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 문화예술인 마을 시범사업			1개소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3개소	3개소	3개소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2.3.8 기대효과

- 문화어촌과 어촌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4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어촌 구축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 문화어촌 구축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전사공간이 조성되어 어촌지역의 문화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역공동체의 콘텐츠로 개발되어 관광명소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어촌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는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어촌의 유·무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가상의 공간에서 어촌유산을 접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

2.4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사업

2.4.1 추진배경

- 어촌·어항의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중앙정부,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해안마을 미관개관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이 추진 중임
- 독특한 해안경관을 보존하고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마을단위의 경관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여건은 미흡한 실정임
-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해안마을 경관사업은 어촌사회의 특수성과 수산업에 기반을 하는 어촌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관사업을 통한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국토교통부 등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모두 일회성에 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함
- 그리스 산토리니·에기나, 이탈리아 카프리 섬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 지역들은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경관사업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글로벌 시대에 연안·어촌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2.4.2 목적 및 필요성

- 다시 찾고, 살고 싶은 쾌적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성(Locality)을 살릴 수 있는 마을 경관개선사업 필요
- 어촌관광을 어촌관광기반시설(해수욕장, 해양레저시설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관 재정비를 통한 신(新) 어촌관광 명소화 추진 필요
- 관광시설 노후화, 슬럼화되고 있어 리모델링 등 부가적인 정책이 필요
- 공간재생을 통한 친환경적 관광환경 정비 필요

2.4.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어촌·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존)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특별법」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2.4.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1) 상향식 사업추진

-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
- 획일화된 사업지침을 지양하는 마을 및 지자체의 자체사업계획(안)을 수립
- 사업내용을 심의·평가하여 30개 마을 지원
-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연안·어촌경관 관리에 참여하며, 지자체 경관행정 경험을 토대로 내실 있는 경관관리 도모

(2) 마을의 독창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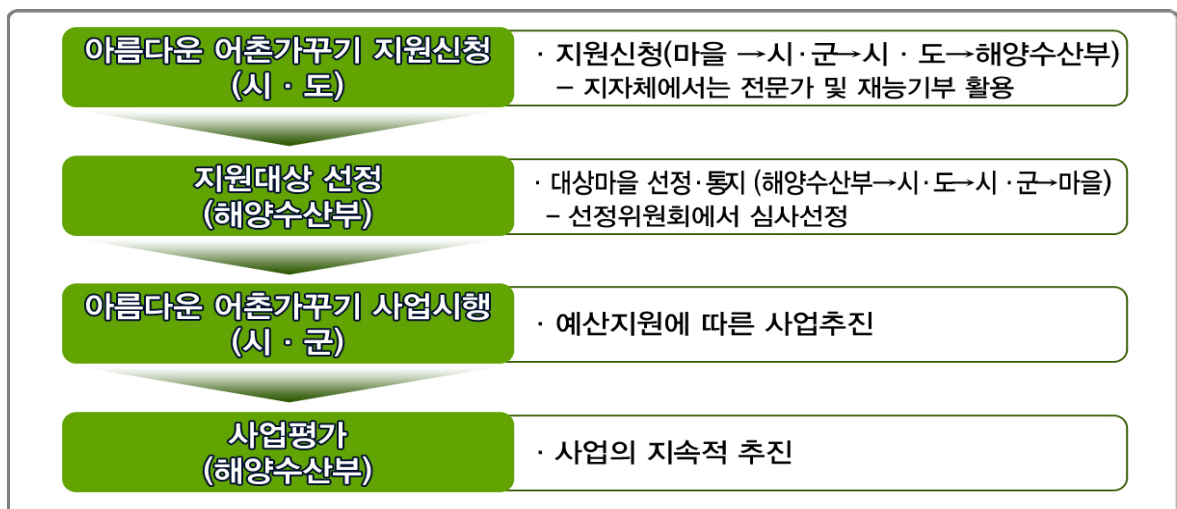
- 지역전문가를 통한 마을만의 고유성·독창성 발굴 중점

(3) 민간협력 및 역할 확대

- 대기업의 사회공헌마케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민간이 사업을 주도
- 재능기부 등 민간역할 확대

2) 추진체계

- 마을·지자체에서 사업계획(안)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심의·평가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 사업은 3년 단위(1년 : 계획수립, 2년 : 사업집행, 3년 : 사업완료 후 평가)로 추진하여 완결성 제고



〈그림 4.25〉 추진절차 및 내용

2.4.5 사업내용

1) 경관개선사업 지원

- 건축물, 색채, 지붕, 담장, 조경, 옥외광고물 등 민간부문 지원
- 공공건축물, 어항, 해안가로, 마을길, 옹벽, 가로시설물, 국·공유지 등 공공부문 지원
-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이미지 확립
 -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 제공
- 어촌마을 중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하여 자연경관 담장, 지붕 등 문화적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전문가 및 대학, 기업 등 재능기부가 가능한 대상을 어촌과 교류 매칭 지원



〈그림 4.26〉 재능기부를 통한 경관개선 예시

2) 아름다운 어촌 홍보지원

- 미디어, 바다여행 사이트, 포털사이트, 잡지 등 언론 홍보방안 지원

2.4.6 추진계획

- (1) 2014~2015년 :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시범사업
- (2) 2016~2018년 : 시범사업 대상마을 선정(29개소)

〈 국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 시범마을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개발(바다 디자이너 발굴), 홍보(바다마을 기자단), Seaty Festival 개최 등 아름다운 어촌조성 과정에 국민참여 지원

2.4.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아름다운어촌 가꾸기 사업	90,000	-	3,000	27,000	30,000	30,000	
일 정	○아름다운어촌가꾸기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							
	○ 시범사업			1개소				
	○ 본 사업				9개소	10개소	10개소	

2.4.8 기대효과

-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90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361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연안·어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어촌 가꾸기를 통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함으로써 어촌발전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

2.5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

2.5.1 추진배경

1) 어촌숙박시설의 부족

- 어촌관광이 단순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숙박문제 선결 필요
- 해양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응한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안내센터를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어촌지역 숙박시설(민박+펜션)은 2012년 기준 1,431가구로 농촌지역 숙박시설 4,158가구의 34%는 수준임

〈표 4.9〉 숙박사업 비교(어촌VS농촌)

(단위 : 가구)

구 분	어 촌	농 촌	(A/B)%
	어촌숙박(A)	농촌숙박(B)	
2010년	1,322	4,468	29.5
2011년	1,260	4,279	29.4
2012년	1,431	4,158	34.4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3년」

- 「어촌관광 실태분석 및 관광객 추정 조사 보고서, 2012년」에 따르면 어촌 숙박 만족도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 등에서 호텔 및 콘도 이용 빈도가 높으며 그에 따른 숙박시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불만사유로는 숙박시설의 높은 가격 및 청결·불편사항·낙후시설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향후 희망 정보제공의 경우 관광정보 안내와 숙박공간 제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어촌민박의 용자지원을 통하여 청결사항 및 낙후시설 개선으로 방문객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어촌지역의 고유특징을 살리면서 내부는 현대식 인테리어 조성으로 방문객 불편 최소화
- 어촌민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어촌민박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어촌민박의 Data Base Marketing의 자료로 활용 필요함

2) 어촌지역 폐교·빈집 방치

- 어촌지역의 폐교된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의 미비
- 어촌지역의 빈집이 2012년 기준 101,754호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2.5.2 목적 및 필요성

- 어촌관광의 증가하는 수요에 걸 맞는 안정적 숙박시설의 공급이 필요한 시기이며 열악한 관광기반여건을 강화로 어촌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 어촌 민박시설의 경우 권역내 타 숙박시설(콘도, 호텔, 모텔 등)에 비하여 시설이 상대적 열위를 보이며 특히 위생문제, 시설 노후화, 대금지불 수단(카드결제)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현대화된 어촌민박을 위한 용자지원, 서비스 교육,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
- 어촌지역의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 부재

2.5.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0조(민박농가의 지정육성)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2.5.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1) 어촌공동체 주도적 사업추진

- 개인사업자가 아닌 어촌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어촌민박사업 추진
- 어촌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체운영으로 어촌체험과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기대

(2) 평가 인증제도 마련

-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한 SEA STAY 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마을은 인센티브 제공

(3) 어촌지역 활용가능 자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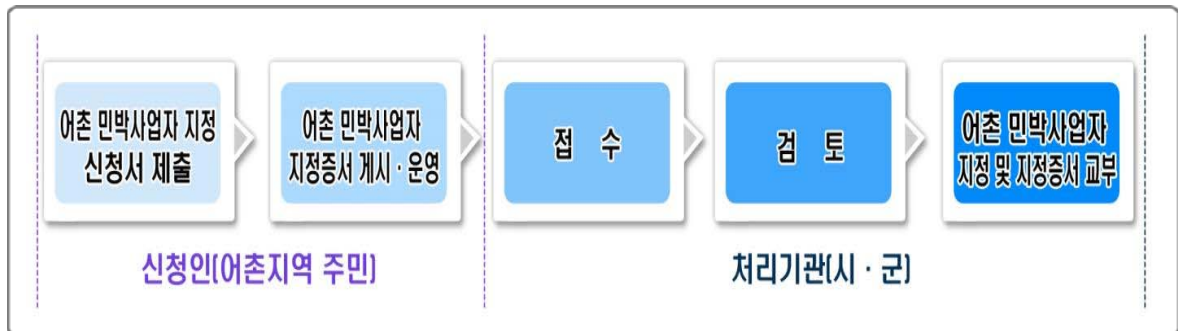
- 유희시설(폐교, 빈집, 민박가능 주택 등)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4) 민간 숙박업체와 차별화

- 대규모 인원수용이 가능한 양질의 중저가 숙박시설(폐교 등 활용)개발로 경쟁력 확보
- 지역별 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체험(갯벌, 어선어업체험, 낚시 등)과 어촌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체계 마련
 - ※ 활용예시 : 전통한옥체험과 과일수확, 장담그기, 김치담그기, 떡만들기 체험 등과 연계
- 시설(숙박)과 프로그램(체험)이 결합된 자연친화형, 교육체험형 숙박휴양 모델을 개발하며,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의 시설운영도 병행 추진

(5) 어촌숙박시설의 질적향상 도모

- 기존 일반 숙박시설을 재정비하여 우수 숙박시설 브랜드로 신규 지정
-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인증 숙박시설인 베니키아, 이노스텔, 굿스테이 등 운영 중인 중저가 우수 숙박시설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숙박시설의 질적 제고를 추구
- 콘텐츠 부재,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지역숙박·유희시설을 리모델링·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어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족휴양촌 조성
- 가족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 특정가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중 가족이용객들의 이용률을 높임



〈그림 4.27〉 어촌특화민박 신청 절차

2) 추진체계

- 어촌 공동체가 사업 신청(어촌 공동체 → 시·군 → 시·도 → 해수부)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정하고 예산 지원
-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해 전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어촌체험마을과 체험프로그램 연계)



〈그림 4.28〉 추진절차 및 내용

3)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지원대상 선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홍보지원 - 숙박시설 리모델링 용자 지원(민박신청 주택, 폐교, 빈집 등)	
어촌공동체	- 숙박시설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제공(어장체험, 갯벌체험, 어선어업체험 등)	
위탁기관	- 평가인증제도 마련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2.5.5 사업내용

1) SEA STAY(어촌특화민박)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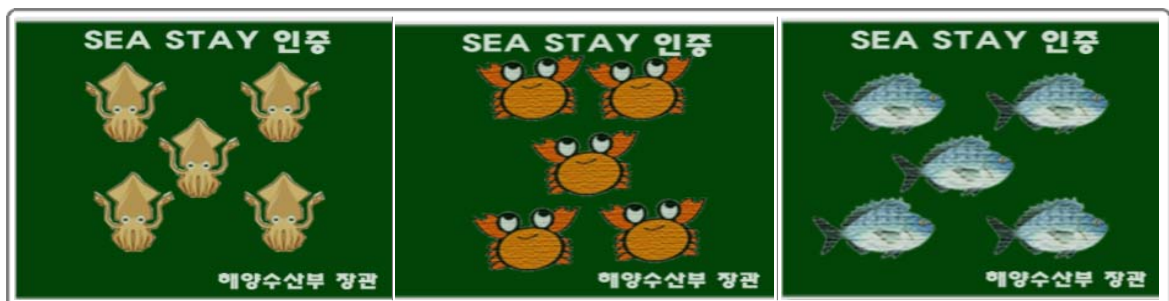
- 노후화된 주택 및 폐교·빈집을 민박사업 가능토록 리모델링 용자지원
- 시설(숙박)과 프로그램(체험)이 결합된 자연친화형, 교육체험형 모델 개발

〈 유사사업 예시 〉

- 농어촌 민박지원 내용
 - 개·보수 지원(연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 운영자금(연 3%, 2년 이내 상환 조건)
-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업” 지원내용
 - 도비 2,000만 원 지원, 시·군 2,000만 원 지원
 - 최대 4,000만 원 용자지원 (연 2%, 7년 분할상환 조건)

2) 평가인증제도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시설 및 위생관리 부분, 고객 서비스 부분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 후 완료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 실시
- 평가 인증 후 상위 등급 어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지원사업 우선배정) 부여



〈그림 4.29〉 SEA STAY 인증(안)



〈그림 4.30〉 평가인증제도 관련 예시(문화체육관광부:GOOD STAY)

3) SEA STAY(어촌특화민박) 맞춤형 홍보

- 웹(Web)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방문시기, 가격, 인원), 여행정보(지역축제, 주변관광지, 특산물 등 연계) 등 이용객 맞춤형 예약서비스 제공
- ‘바다여행’사이트 개편 : 어촌민박 선택적 예약시스템(지역별, 등급별, 서비스별, 가격별 등)과 홍보 연계 추진

〈그림 4.31〉 선택적 예약시스템 예시

4) 서비스 교육실시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교육 실시

2.5.6 추진계획

- 2015년 : SEA STAY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SEA STAY 조성(1개소)
- 2016년 : SEA STAY 조성사업(3개소)
- 2017년 : SEA STAY 조성사업(3개소), SEA STAY 모니터링 및 평가인증
- 2018~2030년 : SEA STAY 조성사업(3개소), 모니터링 및 평가인증, 서비스 교육

2.5.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10〉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	20,400	-	1,300	6,000	6,500	6,600	79,200
	○ SEA STAY 조성	19,300	-	1,300	6,000	6,000	6,000	72,000
	○ 모니터링 및 평가인증	1,000	-	-	-	500	500	6,000
	○ 서비스 교육	100	-	-	-	-	100	1,200
일 정	○ 기본계획 수립							
	○ 조성 사업			1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 평가인증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교육							
	○ 예약서비스 제공							

2.5.8 기대효과

- 체험과 연계한 숙박시설 마련으로 어촌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 대국민 어촌관광서비스 질 개선
- 어촌 공동체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
- 5년간 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78개 창출 기대

3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1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3.1.1 추진배경

- 지금까지 정부는 어촌공동체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제고를 위해 정부주도 방식의 하드웨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
-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투자된 공동이용시설이 어촌공동체 내부적 갈등이나 경영전략 미흡으로 인해 시설의 매각, 임대, 전용, 방치 등 운영·관리상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국무총리실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2009년 12월)’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실태를 자체 평가한 결과 2012년까지 21개소 퇴출되어 운영이 중단
 - 1994~2006년까지 추진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수익시설 중 61개소가 임대·방치 되는 등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어촌체험마을에 한해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문 컨설턴트의 부족, 컨설팅 분야의 한계성, 컨설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1.2 목적 및 필요성

-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어촌공동체의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신규 지원을 받을 어촌공동체를 대상으로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어촌공동체의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 어촌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기반시설 지원 보다는 경영컨설팅, 회계·재무교육,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S/W지원을 통해 기 투자된 공동 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어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초기 안정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S/W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3.1.3 관련 법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어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 해당 법률에서는 어촌경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4.11〉 농어촌정비법 연도별 사업대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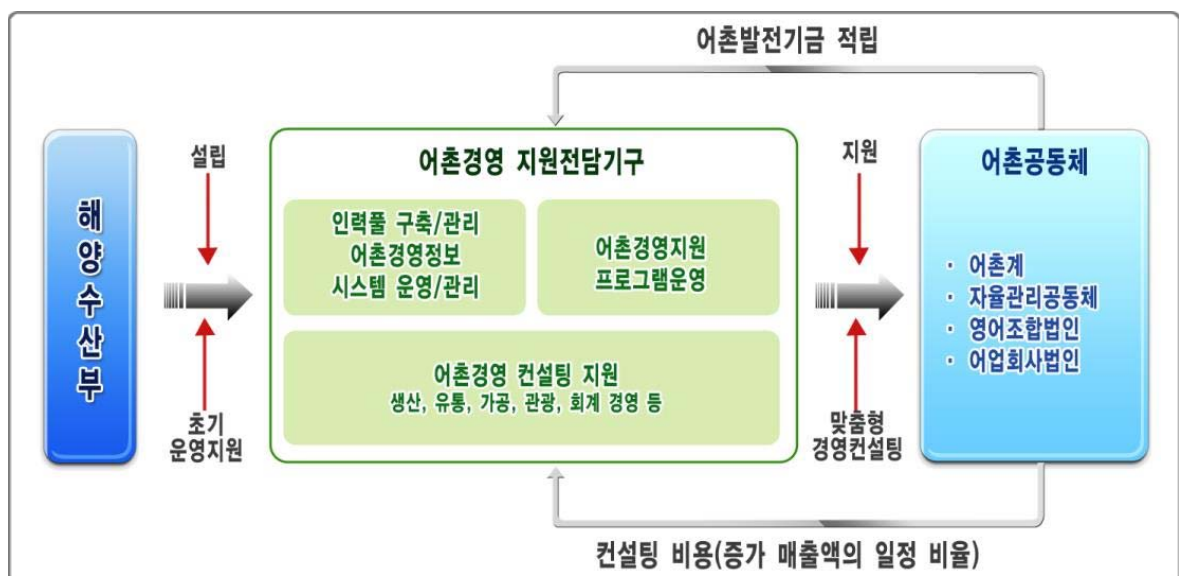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8. <u>농어업 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u> ·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1.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1) 전담기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어촌경영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화·조직화된 전담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
- 전담기구는 마을공동사업 등 기 투자된 지역과 신규 투자될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그림 4.32〉 어촌경영지원 개념도

(2) 적은비용 투자로 큰 성과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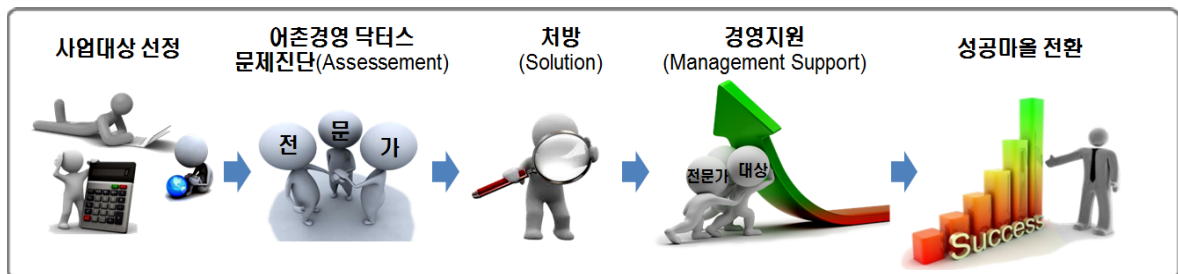
- 어촌경영 지원사업은 전담기구 설립과 전문컨설턴트 육성·관리를 제외하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운영·관리

(3) 수익자 부담의 원칙

- 어촌경영 지원사업을 통해 어촌공동체의 매출이 늘어난 경우 일정비율에 대해 수익자가 컨설팅 비용과 어촌발전기금을 부담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창출

2) 추진체계

- 어촌공동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가칭)‘어촌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어촌공동체의 문제진단(Assessment) → 처방(Solution) → 경영지원(Management Support) 까지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을 지원
- 어촌경영 컨설팅은 해당분야 경영컨설팅 전문가들이 어촌내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처방하고 실천계획 마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촌경영의 안정화를 도모



〈그림 4.33〉 어촌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의 추진 프로세스

3.1.5 사업내용

1) 어촌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어촌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은 어촌공동체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기 투자했거나 투자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 유통·가공, 관광, 경영, 디자인, 계획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해당 어촌공동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해당 어촌공동체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증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전문가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컨설팅의 지속성을 유도

〈표 4.12〉 어촌경영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5 ~ 2030년
사업대상	어촌공동체 중 어촌경영 지원이 필요한 곳
지원 내용	경영컨설팅, 회계·재무 교육,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원자격 및 조건	어촌공동체

3.1.6 추진계획

- 2015~2017년 : 어촌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10개소)
- 2018년 : 어촌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12개소)
- 2019~2030년 : 어촌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40개소)

3.1.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1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700	-	400	400	400	500	19,200
일 정	○ 운영계획수립 · 전문가 인력풀 구성							
	○ 경영활성화 지원			10개소	10개소	10개소	12개소	(계속)

3.1.8 기대효과

- 기 투자된 사업이나 투자 예정인 어촌공동체에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어가소득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어촌공동체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다른 어촌공동체에 성공요인이 파급되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주도의 컨설팅 사업으로 어가경영의 안정화 도모
- 5년간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6개 창출 기대

3.2 어촌 현장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

3.2.1 추진배경

- 어촌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인적자원 부족
 - 단기적으로 어촌의 현장수요에 맞춰 기본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성과 전문성 문제로 효과 미비
- 수산계 고졸인력의 비수산계 진출 증가
- 어선어업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어업생산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와 후계인력 양성에 한계
 - 어가인구 (1995년) 370천 명 → (2012년) 153천 명, 약 60% 감소로 공동화 심화
 - 40세 미만 경영주 (1995년) 14.5% → (2012년) 2.4% 급감한데 반해 60세 이상 경영주 (1995년) 25.6% → (2012년) 55.2% 증가해 고령화 심화
- 연근해 어선어업의 열악한 조업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현장에서 어선원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3.2.2 목적 및 필요성

- 어촌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 필요
- 수산계 고졸인력 신규 진입 촉진과 관련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어업인력 지원센터를 통한 전담기구 마련을 통해 도시지역의 잉여 인력과 해외 산업 연구생 등을 어촌산업별 필요 업종에 매칭시켜 신규인력으로 투입·관리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해소 및 어촌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

3.2.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 「직업안정법」제3조(정부의 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3.2.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해양수산부와 어촌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 도시와 어촌의 잉여 인력을 알선하고 인력 육성을 통한 실무현장 투입 가능 프로그램 개발
-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인력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일부 추진(어촌 관련 인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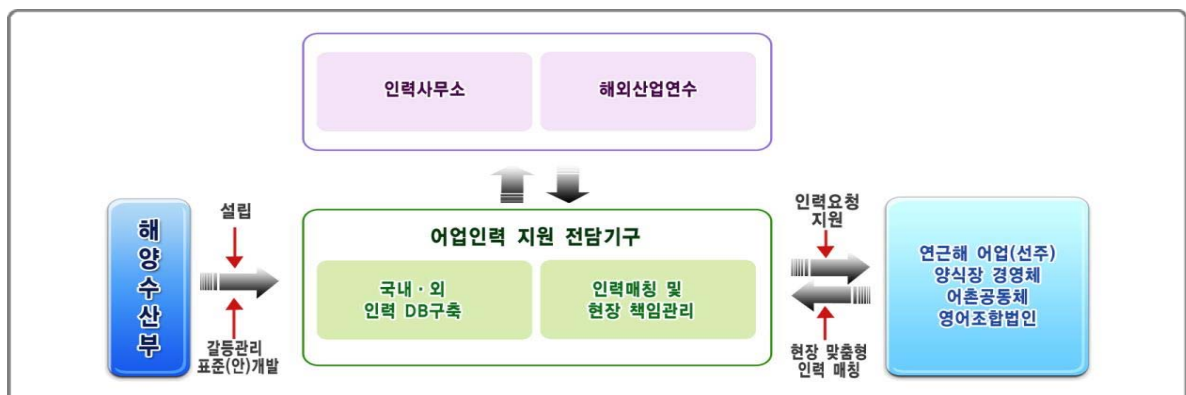
〈현장 맞춤형 어촌산업 인력지원〉

- 분야별(어업, 관광, 서비스 등)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인력수급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가칭)‘어촌산업 지원전담기구’의 지원을 받아 도시 잉여인력 및 어촌지역 유희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어촌산업에 매칭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바다해설사, 어선원 등 어촌산업분야 필요 인력의 양성
- 수산업을 포함한 기피업종에 ‘급여매칭보조’, 직업능력교육 등 지원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 어촌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인력 발굴 및 어촌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
 - 어촌공동체 리더교육, 증·양식 분야 교육
- 창의적인 어촌 핵심인력 양성
 - 정부 중심의 인력육성·공급에서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인력 육성·공급 전환
- 어촌공동체 활력 증진 및 마을발전을 견인할 인적 동력 확보

2) 추진체계



〈그림 4.34〉 어업인력지원 전담기구 운영방향

3.2.5 사업내용

1) 어촌 산업인력 전담기구(지원센터) 설립·운영

- 업종별 고용인력 수요(고용기간, 성별, 내·외국인, 작업별 소요인력, 기간, 임금 등)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촌현장에 맞춤형 인력공급 시스템(Matching System) 구축
- 인근 도시,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현장투입 가능한 인력 D/B 구축 및 인력수급을 관리하고, 현장에 배치된 인력을 직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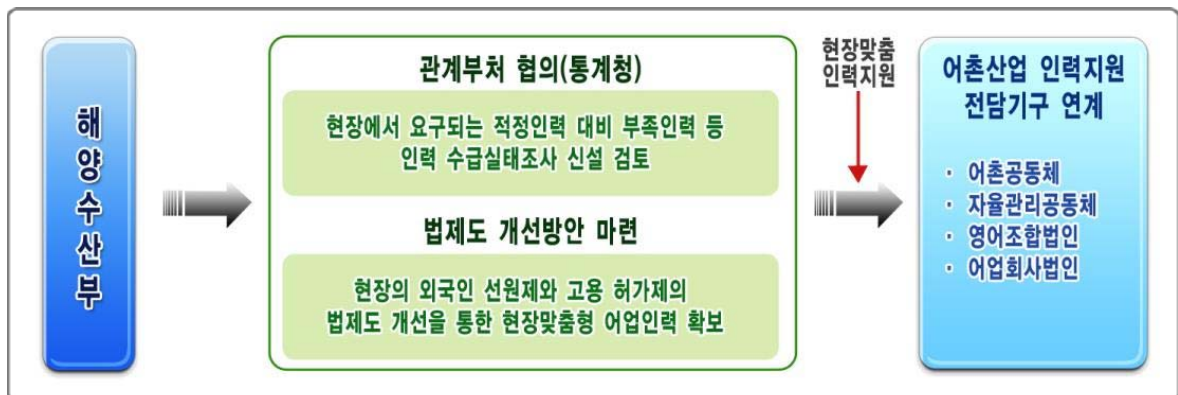
〈현장 맞춤형 어촌산업 인력지원〉

2) 현장필요 인력수급 실태조사 실시

- 어촌 산업별(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바다해설사, 어선원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적정인력 대비 부족인력 등 인력수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5년 어업총조사 실시에 앞서 통계청 협의를 통해 조사항목 신설을 검토

3) 어선원의 잠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산업연수제도의 전면 폐지로 인한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정책의 이원화 발생(2007년) 되었고, 고용허가제는 수산정책 부처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등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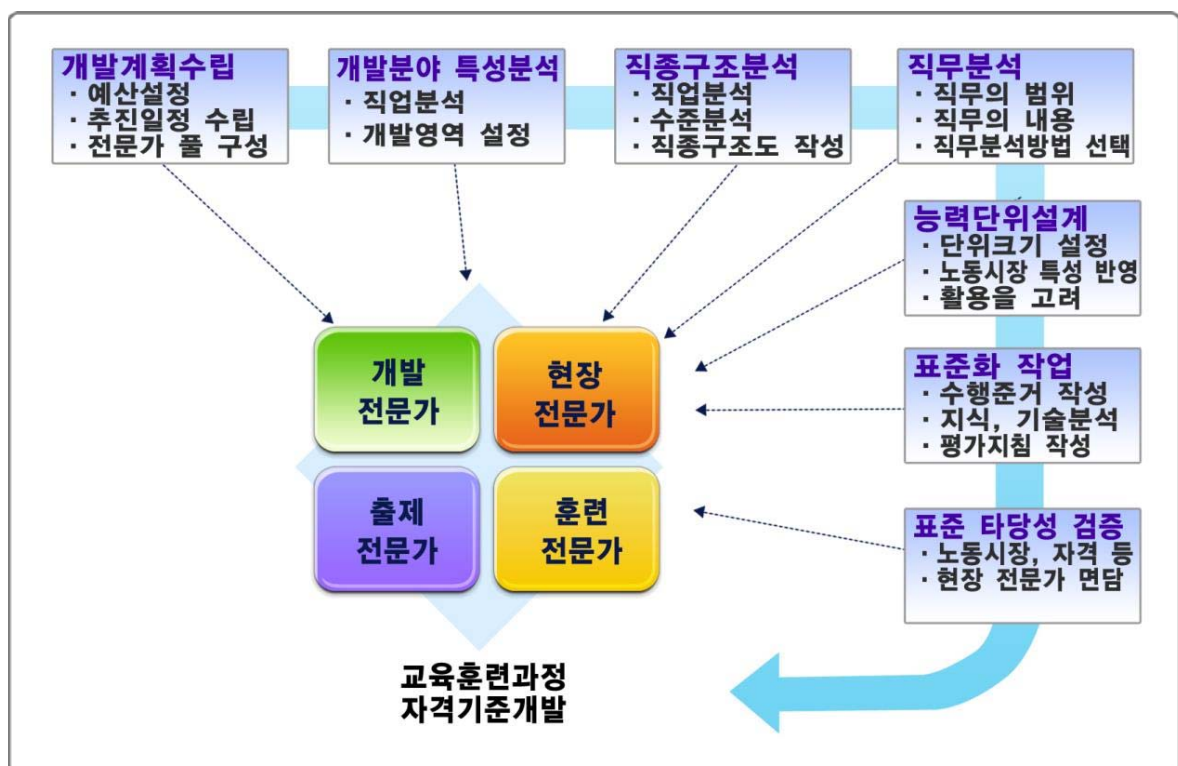
〈그림 4.35〉 현장 맞춤형 어업인력 지원 추천체계

〈전문인력 양성〉

4)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개발

- 어촌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양성
 - 수산업 종사 청장년 발굴 및 기반조성 자금 지원
 -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2014년) : 800명(500억 원, 1인당 최고 0.7억 원, 연리 3.0%)

- 수산계 고교 인력 신규진입 촉진 연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현장실습 전문교육(학교 및 공통), 마이스터고 교육실습장비, 노후 교육 실습장비 지원 등
 - 어가 및 어촌어업체와 수산계 고교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조기 정착 지원
-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지원 연계 추진
 - 현장의 요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후계어업경영인과 우수어업 경영체와 연계한 품목별 전문교육 지원
 - 유형별 역량요소·측정지표 및 역량강화 모델 개발 및 인력 육성



〈그림 4.36〉 전문인력육성 추진체계

3.2.6 추진계획

- 2015년 : [단기] 유형별 역량요소 측정지표 마련,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교육 훈련 관계부처 협의, 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6~2030년 : [장기] 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 육성

3.2.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1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현장 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	1,800	-	300	500	500	500	6,000
일 정	○ 관계부처협의							
	○ 관계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유형별 역량 요소·측정지표 마련							
	○ 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육성							

3.2.8 기대효과

- 어촌의 전문인력 육성으로 어촌의 관광·산업·공동체협력 등 자생력 제고
- 수산계 졸업자를 전문 어업인력으로 육성,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성화 제고
- 도시 유희인력과 전문인력 도입을 통한 어촌 일손 부족 해소
- 현장의 부족한 어촌산업 인력을 현장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부족한 어촌 산업인력 수급 해소를 통한 어촌경영 안정에 기여
- 5년간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6개 창출 기대

3.3 포괄보조사업 연계강화

3.3.1 추진배경

1) 지역발전 정책 추진방향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설계를 위하여 세출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포괄보조금제 도입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활력 강화 도모
 - 주민 참여나 자치를 통한 공동체 형성 우선 지원
 -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 기획,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

2)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정체성 미확립

-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1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물리적 분리에 그쳐, 해양수산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지원형태 잔존 및 농어촌 정책이 혼재
 -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체계적 추진에 대한 정보교환 부재로 포괄보조사업 별 취지,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이해부족
-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의 예산 집행 관리 등 제도적 문제점 발생
 - 다양한 사업의 지연요인으로 연례적인 예산 실집행을 부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유사·중복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 발생
 - 포괄보조사업 추진 시 중장기 발전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소규모 시설 등 단편적 지원

3) 중앙·지방간 연계성 미흡

- 사업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의 상위계획 및 지역 내 타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 수산의 경우 '10년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출발(포괄보조), '13년부터 해양수산부로 물리적 분리에 그쳐, 아직 전반적인 사업추진체계 미흡 및 수산(어촌·어항)에 특화된 정체성 미확립
 - 수산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지원형태 잔존,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시행 지침 및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부재
 - 중장기 발전계획 하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보다는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소규모 시설 등을 지원

3.3.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정부와 정책공조 및 수산분야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필요
 - 창의적인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기획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지역발전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어촌·수산 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수부,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 필요

3.3.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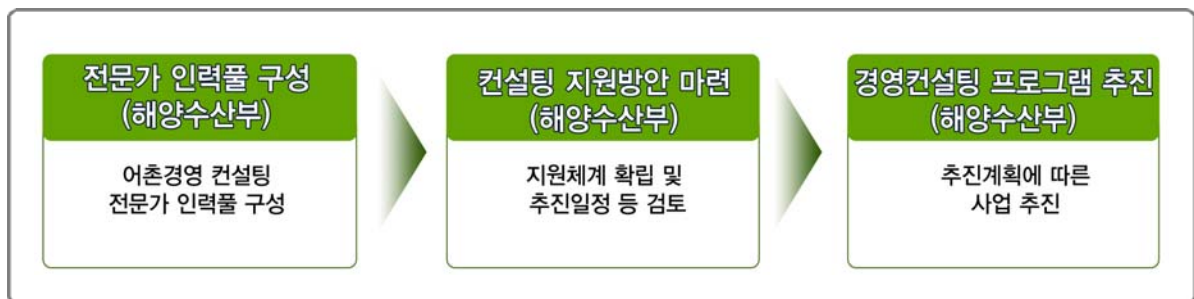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2조2(지역경제 활성화 성과평가 등)

3.3.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등 포괄보조 제도의 취지와 강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
 - 예산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시후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신청토록 재편
 - 사업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한 사전 사업성 검토 추진
-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제고를 고려한 평가시스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2) 추진체계



〈그림 4.37〉 추진체계 및 내용

3.3.5 사업내용

1) 신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지역 내 타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지방정부와 정책공조 및 포괄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제시
 -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시설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종합적인 투자효과 창출
- ※예시) 수산분야에 특화된 사업화모델 발굴 및 생산·제조가공·마케팅 등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연계사업 추진

2)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신규사업의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완료지역 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도입
 -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연계된 신규사업 등의 소요 예산을 우선 반영토록 유도

3.3.6 추진계획

1) 2014년 추진

- 포괄보조사업별 시행지침 마련 및 가이드 라인 제시
- 신규사업평가 검토
-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표 4.15〉 연차별 추진일정

(단위 : 백만 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일 정	○ 신규사업평가 지침 마련						
	○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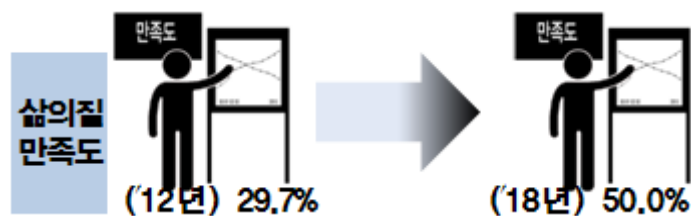
3.3.7 기대효과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통하여 단위사업들을 정책방향과 지방의 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 포괄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내역사업 사전 제거
-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 도출

제2절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 추진 목표 〉

- ◆ 도시·어촌 상생강화,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 및 어촌공동체 재생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1 도시·어촌 상생강화

1.1 자매결연 강화

1.1.1 추진배경

- 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 등 도어교류 활동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전체의 62%)으로 지속성 한계 및 2012년까지 1,200건에 달하지만, 특정 지역·어촌에 편중 심화
 - 자매결연 총 1,200건 중 정인·강원·충청 654건(54.5%) 차지
 - 일부 우수어촌으로 편중 : 1교1촌, 1사1촌 → 다교 1촌다사 1촌으로 변형
 - 특히, 1교1촌의 경우 재방문 포함하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매결연 유도 프로그램 및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시키는데 한계를 보임
 - 1교1촌 실적 : (2009년) 4건 477명 → (2012년) 60건 9,129명 → (2013년) 66건(254개소 신청)
 - 1교1촌 재방문율 : (2011년) 22.2% → (2012년) 35.0%
- ※ 자료 : 수협중앙회, 2012년

1.1.2 목적 및 필요성

- 수산업 및 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및 관심 제고 필요
-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시와 어촌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해증진과 상생의 기반구축 마련필요
- 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 등 도어교류활동이 추진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어촌공동체 편중 심화로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 필요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확산되고 있으나 어촌지역 자매결연으로의 연결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임

1.1.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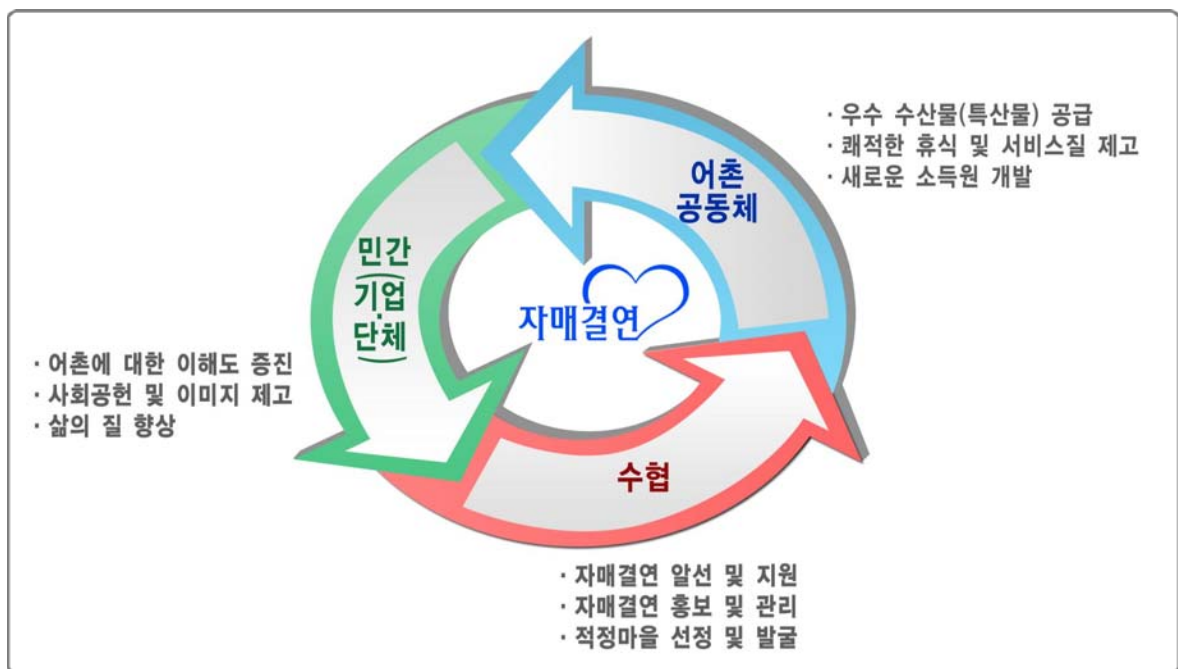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 교류활동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국정과제 115번(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세부과제 2(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대국민 홍보를 통한 어촌 문화·관광 흡인력 강화

1.1.4 추진방향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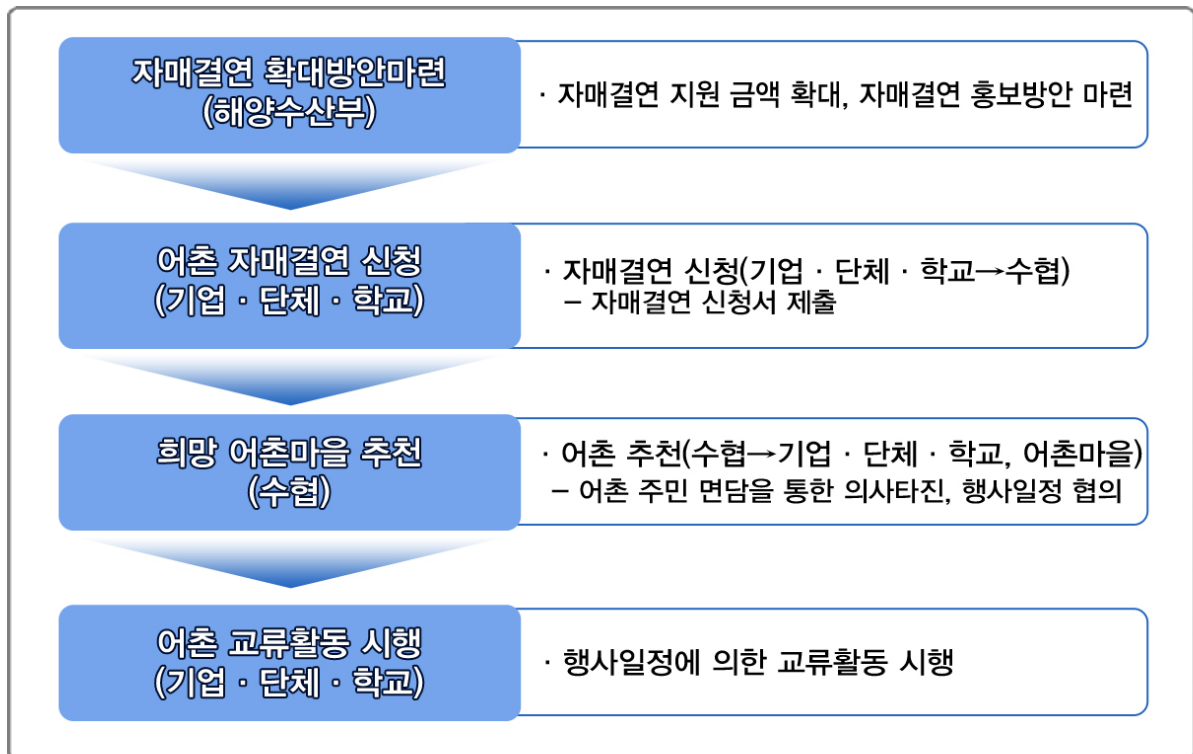
1) 추진방향

- 어촌의 보편적 가치 및 중요성을 바탕으로 도시와 어촌이 함께 만들어가며, 어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어상생 교류현장 조성
- 단순 봉사의 1회성 자매결연을 벗어나, 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한 기업(단체), 아파트 부녀회 및 도시와 자매결연 확대 추진
-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CSR)을 활용한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
 - 자매결연 이후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어촌활력 증진 도모
- 현행 오프라인 홍보(도시 홍보관, 리플렛, 가두홍보 등)와 온라인 대중매체(TV 프로그램 기획, 포털사이트,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SNS 전파 등) 연계하여 개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유발
- 어촌이 단순 수산업생산 공간만이 아닌 다원적 가치의 공간임을 알릴 기회 제공



〈그림 4.38〉 자매결연 활성화 체계도

2) 추진체계



〈그림 4.39〉 추진절차 및 내용

3)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예산확보를 통한 자매결연 지원 금액 확대	
수협	- 자매결연 신청, 자매결연지도 및 지원, 적정어촌마을 선정, 홍보지원 등	
어촌공동체	- 우수한 수산물(특산물) 공급, 쾌적한 휴식 및 서비스 질 향상 제고	
민간 (기업·단체 등)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자매결연 체결 추진 - 어촌에 대한 이해 및 경관보존 등	

< 성공사례 : 충남 서천 월하성 어촌마을 >

- 자매결연 단체 : 서울시 공무원노조, 한국전력 서천지점 등
- 자매결연 단체의 직원들은 월하성 마을의 수산물(꽃게, 김, 젓갈 등)을 직거래로 구입하고, 햇불문화축제 개최 시 4~5천 명이 참여

1.1.5 사업내용

1) 다각적인(온라인-오프라인) 홍보사업

- 오프라인 홍보(지역 축제 및 행사시 자매결연홍보 부스 운영, 어촌, 도시 홍보관, 브로슈어, 가두홍보 등)와 온라인 대중매체(포털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및 SNS 활용 등) 연계 추진

2) 맞춤형 Matching System 및 관리 체계 구축

- 현재 수협의 “어촌사랑”운동으로 추진중인 자매결연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수요자·공급자 간의 효과적 매칭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 할 수 있는 전략 추진
 - 기존 프로그램의 구성 후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지속적 관계강화
 - 정기적인 정보발송(안내책자 등) 및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자매결연 대상구성원들의 관심 유도

3) 전문 인력 배치

- 자매결연 행사 추진 시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행 스텝을 어촌관광 전문인력(바다 해설사, 사무장 등) 활용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추진

1.1.6 추진계획

- 2014~2018년: 기존 자매결연 체계 지속 및 지원금액 확대(연간 200건 유치)
 - 연 6억 원 내외의 규모의 예산투자(전국 자매결연 어촌마을 및 단체 등)

1.1.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1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자매결연 강화	3,000	-	600	800	800	800	9,600
일 정	○ 자매결연 확대						1,000건 유치	

1.1.8 기대효과

- 정기적인 도시·어촌 교류를 통한 어촌의 다원적 가치 홍보 기대
- 인적교류를 통한 어촌의 위상 증대 기여
- 어촌관광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광 잠재수요를 실질 관광상품 구매 계층으로 유도
- 5년간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10개 창출 기대

1.2 재능기부 활성화

1.2.1 추진배경

1) 기부문화의 변화

- 1990년대 초반까지는 기업기부가 민간기부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00년 이후 개인기부의 비중이 증가하여 기업기부의 비중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임(개인 대 기업 비중 약 6:4)
 - 개인기부는 전체 소득 중 약 2.8%를 차지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다른 종류의 기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과 기부금은 분야별로 볼 때 사회복지, 교육학술, 문화예술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에 집중되어 있음⁴⁾
- 한편 지난 20여 년간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은 저조함
 -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⁵⁾ : (2005년) 4.5% → (2006년) 5.7% → (2007년) 6.9% → (2008년) 8.7% → (2009년) 10.2% → (2010년) 11.9% → (2011년) 12.9% → (2012년) 14.6%
 - 자원봉사 활동자의 대부분이 특정 인구집단(학생, 주부)에 편중되어 있고 비정기적 행사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편중되어 있고(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환경보전 및 범죄예방,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사회 행사지원 순),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며, 대부분이 일상생활 보조 및 단순 봉사 수준에 그침

2) 소극적 어촌지역 재능기부 활동

- 어촌지역 재능기부는 2013년 14개 마을 1,030명이 참여⁶⁾
 - 농촌대비 어촌지역 재능기부자 비율 : 2.94%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함께하는 우리농촌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재능기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사회봉사단체와 기업체 등을 포함한 35,000명이 재능기부자가 1,144개 마을에서 활동 전개
 - 2013년 전국 375개 농촌마을에 재능기부할 52개 직능, 사회봉사단체와 기업체, 대학 선정 (선정된 단체는 10백만 원, 기업·대학은 5백만 원 이내 실비 일부 지원)

4) 자료 : 손원의 「한국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2010년

5)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2013년

6)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2013년

〈표 4.17〉 어촌지역 재능기부 인원현황

구분	대상마을	재능기부 단체	일시 (2013년)	재능기부 내용	참가 인원 (명)
1	안산 선감	계원예술대학교 VMT	6.07~6.09	신선노리 축제, 벽화그리기 등	120
2	거제 다대	대학생 단체 ‘느리게 걷자’	9.14~9.15	벽화그리기, 홍보 동영상 제작	84
3	남해 유포	송의여자대학 관광과	10.05~10.06	홍보·마케팅 교육, 레크리에이션 진행	84
4	통영 연명	렛츠다이빙동호회	10.12~10.13	어장 수증정화, 마을 주변 환경개선	60
5	거제 도장포	영산대학교 호텔경영학과	10.25~10.26	서비스 매뉴얼 제작, 마을 주변 환경개선	92
6	사천 대포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10.26~10.27	홍보·마케팅 교육, 마당 스테이 방안 제시	70
7	속초 장사	(사)지속가능한관광 사회적 기업네트워크, 와바다다 주식회사	11.14~1.15	어촌관광 토론회, 마을 주변 환경개선	70
8	태안 병술만	경북대학교 실용음악학과	11.16~1.17	작은 음악회 개최, 마을 주변 환경개선	62
9	군산 선유도	인천재능대학교, (주)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11.16~1.17	벽화그리기, 마을 주변 환경개선	72
10	무안 송계	여행카페 ‘따사모’, 여행작가 졸업생 모임	11.23~1.24	홍보·마케팅 교육, 마을 주변 환경개선	78
11	거제 이수도	영산대학교 평생학습교육원	11.23~1.24	홍보·마케팅 교육, 운영 활성화 교육	82
12	제주 구엄	어촌관광 전문가 모임, 제주도 문화지킴이	11.30~2.01	홍보·마케팅 교육, 운영 활성화 교육	56
13	강진 서중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1.30~2.01	홍보·마케팅 교육, 마을 주변 환경개선	60
14	태안 대야도	‘슬링’ 봉사 동호회	12.07~2.08	폐교 및 마을 주변 환경개선	40
		합 계			1,030

1.2.2 목적 및 필요성

- 정부 3.0과 연계한 의료·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자를 확보하고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재능기부자의 증가로 인한 공급자와 어촌이 필요한 수요부분을 쌍방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
- 다양한 재능기부를 발굴하고 기부자에게 인센티브제공 등의 제도적 운영 필요

1.2.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전략 3(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7(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정과제 115번(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세부과제 2(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 복지 실현) 대국민 홍보를 통한 어촌 문화·관광 흡인력 강화

1.2.4 추진방향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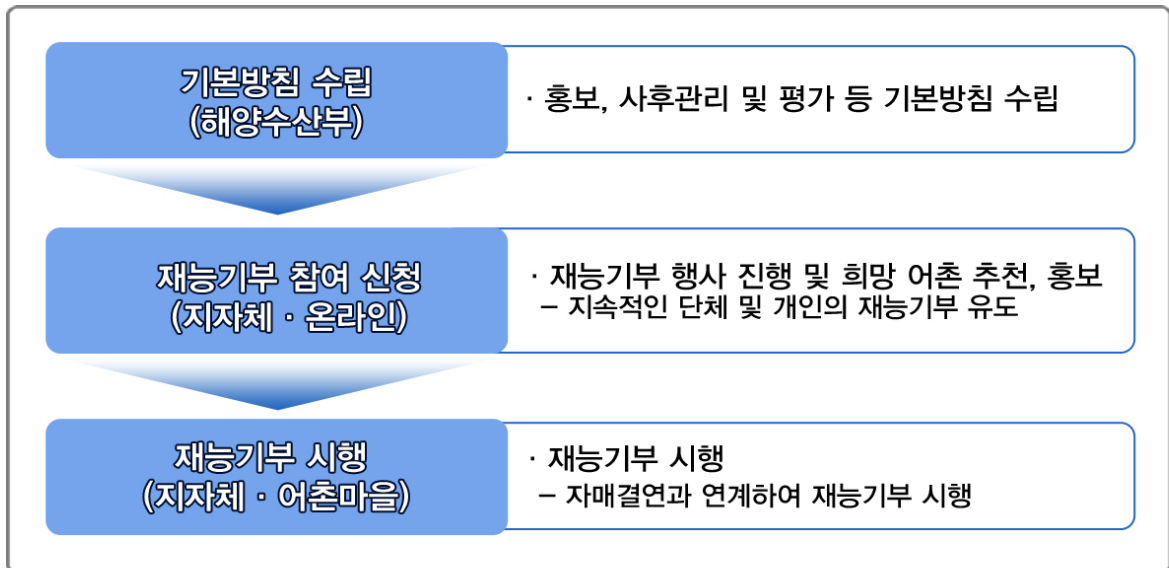
1) 추진방향

- 도시민 재능기부자를 어촌으로 유치하여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도어교류 촉진
- 대상마을에 복지향상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능기부 단체 선정 및 참가단체와 마을 간의 자매결연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능기부 유도
-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활용하여 공익서비스 확대 추진
 - 온라인상에서 재능기부자와 수요자(마을)간 자율적 연계 가능토록 추진
-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기업·사회봉사단체의 재능기부 활동 지원



〈그림 4.40〉 재능기부 활성화 체계도

2) 추진체계



〈그림 4.41〉 추진절차 및 내용

3)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재능기부 활성화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	- 재능기부 행사 진행 및 희망어촌 추천, 재능기부 홍보	
어촌공동체	- 재능기부 행사 지원 및 서비스 질 향상 제고	
재능기부인	- 지역 중심의 이슈와 연계되는 재능기부 활동 확산	



〈그림 4.42〉 재능기부 사례

1.2.5 사업내용

1)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 기존 주민들과의 융합을 위한 귀어·귀촌인의 재능기부 연계 방안 추진
 - SNS, 스마트 폰 교육, 예·체능, 건설·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 추진
 - 귀어·귀촌인 중 도시에서 현업에 종사하던 분야에 대하여 재능기부자가 되어 지역 주민과의 갈등완화 및 성공적 어촌 정착 도모
-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사업 : 재능기부 연계를 통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
- 사회봉사활동 인증제도 및 포상을 추진하여 재능기부자 확대

2)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재능기부 공급자와 수요 어촌이 쌍방향으로 정보제공 및 매칭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바다여행 포털 개편을 통한 쌍방향 재능기부 정보 제공

1.2.6 추진계획

- 2015년 : 재능기부자 확보, 인증 및 포상 지원에 2억 원 내외의 예산 투자
 - 재능기부자 확보, 인증 및 포상 포함
- 2016~2018년 : 재능기부자 확보, 인증 및 포상 지원에 2억 원 내외의 예산 투자
 - 재능기부 온라인 시스템 구축(5억 원), 운영(1억 원) 내외의 예산 투자

1.2.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1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재능기부 활성화	1,500	-	200	700	300	300	3,600
	○ 재능기부 활성화	800	-	200	200	200	200	2,400
	○ 온라인 시스템 구축	700	-	-	500	100	100	1,200
일 정	○ 인증 및 포상							
	○ 재능기부자 확보						1,000명 확보	
	○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1.2.8 기대효과

- 도시-어촌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도 제고 및 국민 대통합
- 재능기부 행사를 어촌 지역 내에서 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직·간접 소득 향상에 기여
- 어촌지역 노인 및 아동의 복지 향상 기여
- 자매결연과 연계한 어촌에 필요한 인력 공급
- 5년간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1개 창출 기대

1.3 어촌 찾아가기 활성화 사업

1.3.1 추진배경

1) 어촌특화 관광수요 증가

- 어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마을별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지역 행사와의 연계 운영으로 전국적인 어촌관광 붐이 조성
- 국정과제 12번(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세부과제 1번(농식품의 6차산업화) 지역자원을 이용한 어촌관광 활성화

2) 한정된 정부지원

- 현행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는 도시민(관광객)이 지정된 어촌체험마을에 한해 방문한 경우 1인당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어촌체험마을에 한정됨에 따라 인근 어촌관광지와의 연계 미흡
- 한정된 정부지원으로 연간 마을 당 2회 지원, 총 12회(1억 원)로 한정되어 사업의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1.3.2 목적 및 필요성

- 고품격 어촌관광을 위해서 어촌찾아가기 행사의 질적 향상(숙박 등 각종 편의제공) 필요
 -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년~2021년) 비전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 수도권 및 도시권 국민들의 지속적인 어촌관광 수요 증가
- 어촌찾아가기 행사의 방문자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서비스 향상 제고 방안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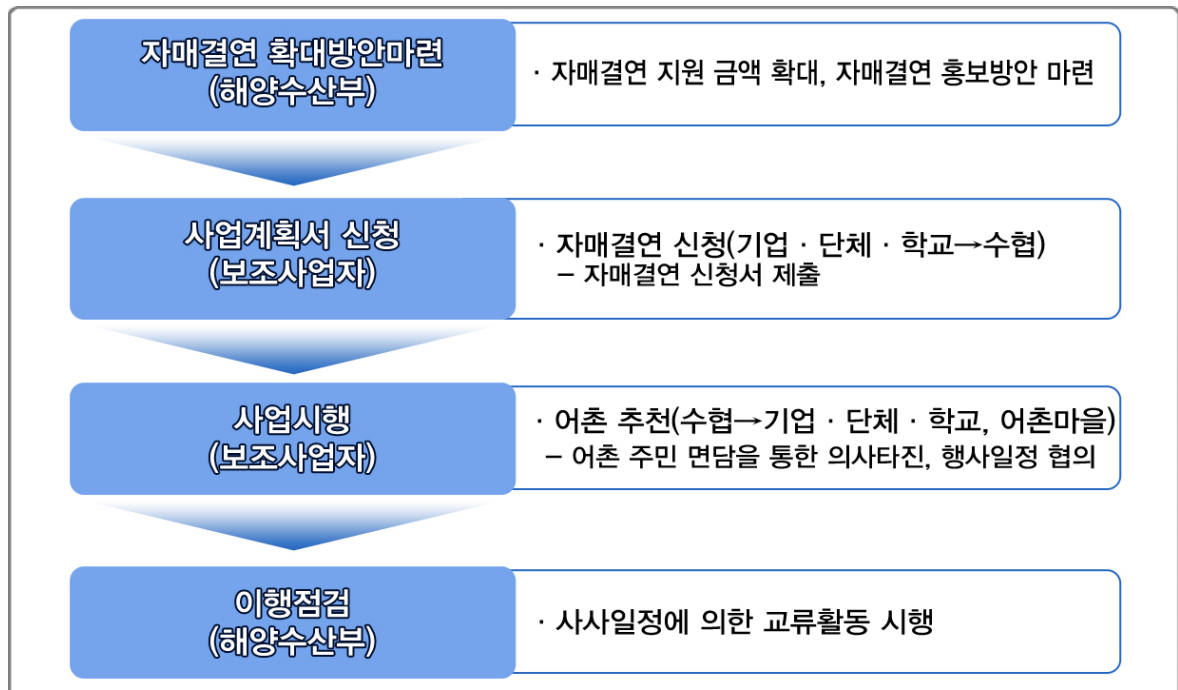
1.3.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1.3.4 추진방향

- 고품격 여행 지향
 - 어촌관광 서비스(숙박 등 각종 편의제공) 질적 향상 추진
-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어촌관광 경쟁력 제고



〈그림 4.43〉 추진절차 및 내용

1.3.5 사업내용

1) 어촌 찾아가기 확대 추진

- 현행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확대(예산 등)시행
- 어촌 찾아가기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맞춤형 콘텐츠 개발)
 - 시·도별 여행상품개발, 어촌마을별 특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전문화된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자폐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출청소년 등)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촌관광 서비스(숙박 등 각종 편의제공) 수준 개선

어촌찾아가기(기존)	어촌찾아가기(변경)
어촌체험마을 및 단순 찾아가기 프로그램에 한정	질적성장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어촌찾아가기 행사의 프로그램 다변화 필요	○ 지역별·마을별 특성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행사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대상자 계층의 다변화 - 취약계층, 수학여행 등 특화 프로그램 개발

2) 스마트 가이드 구축

- 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역명소들을 국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 개인별로 특성화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 안내로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관광지, 음식, 숙박, 교통정보를 검색·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발
- 통합적 관광정보 활용기반 마련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스마트 안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여행계획 및 예약서비스, 4D 실감형 안내서비스를 제공



〈그림 4.44〉 스마트 폰 활용사례

1.3.6 추진계획

- 2014년 : 현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 4,000명 이상에 해당하는 75개 마을 중 15개 마을
 - 시범사업은 개소당 11백만 원 규모의 예산 투자(연 165백만 원)
 - ※ 방문객 상위 75% 체험마을(75개소) : 부산(2개소), 인천(2개소), 경기(8개소), 강원(5개소), 충남(6개소), 전북(7개소), 전남(17개소), 경북(6개소), 경남(17개소), 제주(5개소)

- 2015~2030년 : 2014년 사업추진 후 잔여마을 60개소 대상 선발
 - 어촌찾아가기 사업은 개소별 10백만 원 내외 규모의 예산 투자(연 200백만 원)
 - 스마트 가이드 사업은 구축에 10억 원 내외 규모의 예산 투자(연 500백만 원, 2개년)
 - 스마트 가이드 사업은 운영에 2억 원 내외 규모의 예산 투자(연 200백만 원)

1.3.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19〉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찾아가기 활성화 사업	2,365	165	700	700	400	400	4,800
	○ 어촌찾아가기 활성화	965	165	200	200	200	200	2,400
	○ 스마트 가이드	1,400	-	500	500	200	200	2,400
일 정	○ 어촌찾아가기 행사		15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 콘텐츠 개발							
	○ 스마트 가이드 구축·운영							

1.3.8 기대효과

- 고품격 어촌찾아가기 행사를 통한 어촌관광의 질적 향상
-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어촌관광 소득증대 및 어촌의 위상 제고
- 관광 잠재수요를 실질 관광상품 구매 계층으로 유도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5년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3개 창출 기대

2 어촌 복지·환경 개선

2.1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2.1.1 추진배경

- 2010년부터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미시행권역 발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요구 전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함에 따라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는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발생
- 신규사업성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등 전반적으로 농촌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어촌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

- 2014년 6월 5일 시행예정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에 위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어촌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1.2 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정주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 등으로 어촌의 공동화 심화
- 어촌 정주여건개선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열악한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생활 환경을 개선시켜 온 어촌종합개발사업 잔여권역 시행으로 사업 완결 필요
 - 잔여권역 해당 지자체 및 어촌계원들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완료에 대한 지속적 요구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복지에 대한 요구증대와 더불어 귀어·귀촌 촉진을 위한 농어촌지역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 요구됨
 -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 필요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별도 세부지침 수립전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으로 어촌마을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
 -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선점하여 어촌지역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

2.1.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2호(기초생활권 정의), 제2조 제9호(농산어촌의 정의),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4조 제2항(지역발전 계정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4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 생활개선), 제38조(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49조(사업비 지원)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에 위한 특별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기준보조율 등)

2.1.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사업

-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귀어·귀촌하는 추세에 있어 농어촌지역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 요구됨
 - 역사적 유물·전통 건축물 보존계획,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개량
-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

(2) 어촌종합개발사업

- 계속사업으로 타 부처 협업을 통하여 낙후된 어촌 정주환경 개선
 - 권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여 타 부처 협업사업 추진 유도
- 2018년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정비사업)으로 지속추진 유도
- 자연마을 ↔ 소생활권 ↔ 읍·면소재지 ↔ 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주민 정주체계를 감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 체계적 정비
- 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추진
 - 도로포장, 마을 상하수도 보급, 교량, 주차장, 버스정류장, 소공원, 산책로, 마을하수 처리시설, 마을회관, 복지시설, 빈집철거·정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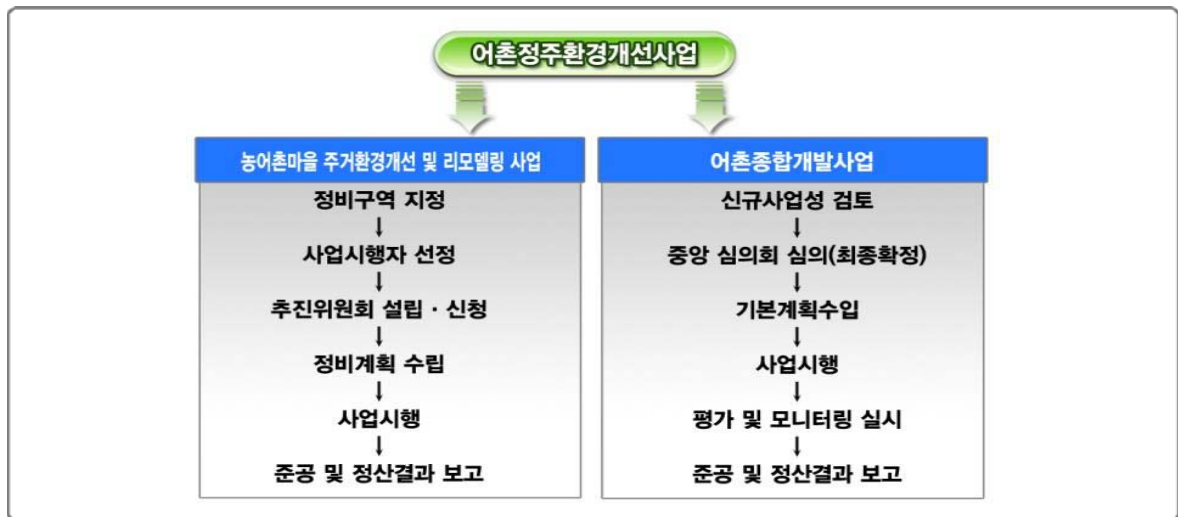
〈표 4.20〉 어촌종합개발사업 잔여권역 현황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11개 권역)	국토교통부 (5개 권역)	안전행정부 (2개 권역)
지역분류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개발대상도서
권역명	서산 지곡, 신안 증도, 신안 하의, 신안 압해, 고흥 여자북부, 해남 화원, 해남 송지2, 고흥 오마, 하동 광양만, 하동 동부, 사천 송포	화성 서신, 포항 대보, 포항 칠포, 포항 석병, 포항 양포	강화 중부, 여수 초도

- 기존의 계속사업지구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지정을 받은 사업
 - 유사사업의 통합으로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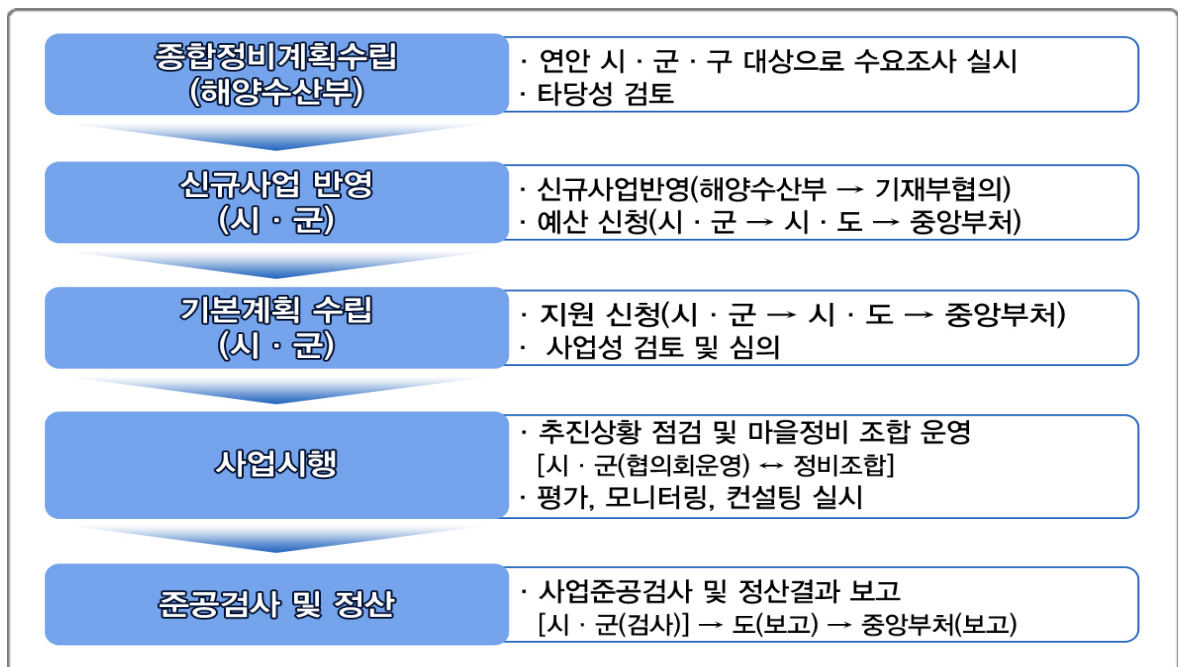
- 도시와 어촌을 연계한 통합적인 개발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의 기초서비스 기능분담 및 연계발전을 유도
- 어촌 생활오수 처리시설사업은 환경부 협의 후 미설치 행정리(2,379개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추진

2) 추진체계



〈그림 4.45〉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체계도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정비 계획수립을 수립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



〈그림 4.46〉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추진체계

2.1.5 사업내용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사업

(1) 공동이용시설사업

- 화장실, 경로당, 어린이집, 판매장, 주민운동시설 등 관련 시설

(2) 정비기반사업

-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의 정비·개량,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 등

(3) 환경보전사업

- 농어촌마을 경관개선사업

2)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1)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정주여건 개선)

-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시설

(2) 지역경관 개선(경관개선사업)

- 권역의 정주여건 개선, 어메니티 증진 및 어촌다움의 유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사유 시설물의 경우 집단적 정비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3) 지역역량 강화(소프트웨어사업)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4) 어촌 생활오수 처리시설 지원

- 환경부 협의 후 생활오수처리시설 미설치 행정리에 대한 시설 지원

2.1.6 연차별 투자계획

〈표 4.2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정주환경개선	25,000	(20,000)	(20,000)	(25,000)	(25,000)	25,000	300,000
일 정	○ 어촌종합개발사업 잔여 권역완료		4권역	4권역	5권역	5권역		
	○ 어촌정주환경 개선						5권역	

※ () : 타부처 예산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정비사업 비율 적용(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포함)

2.1.7 기대효과

- 열악한 생산기반시설(진입로 포장, 부잔교 등) 확충을 통한 어촌정주환경 개선
- 수산업을 위한 지원시설로 어업생산의 효율성 증대
- 장기적으로 어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정주의사를 고양
- 어업소득 및 어업 외 소득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소득증대효과 유도
- 낙후어촌의 위생문제 해결로 어촌정주환경 개선에 기여
- 5년간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301개 창출 기대

2.2 어촌 원격지원 사업

2.2.1 추진배경

- 어촌은 입지적 여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 여건이 다르며, 특히 도서어촌의 경우 육지와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 교육, 문화 혜택에서 조건불리 지역에 해당됨
- 도서어촌은 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수준이 도시와 농촌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거점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전체 464개소 유인도서 중 의사의 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어촌이 전체의 86.4%에 이르고, 병원선도 월 1회 미만의 병원선에 의존하는 실정임
 - 도서어촌은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동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데 진료비용은 평균 6배, 이동시간은 평균 4.5배 더 소요됨
 - 미국, 노르웨이,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등의 지역은 소규모·분산지역,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음
- 어촌지역의 초·중·고 및 평생교육도 도시지역에 비해 낮고,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폐교되거나 원거리 통학으로 안전 및 교육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어촌은 평생교육의 경우 90% 가량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초등학교의 폐교 수가 196개소에 달함

2.2.2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고용복지, 문화참여 확대를 제시하고 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ICT 기술발전을 토대로 원격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있음
- 어촌 원격사업은 의료, 교육, 문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열악한 도서어촌지역에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공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2.2.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6조(재정지원)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제53조(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2) 관련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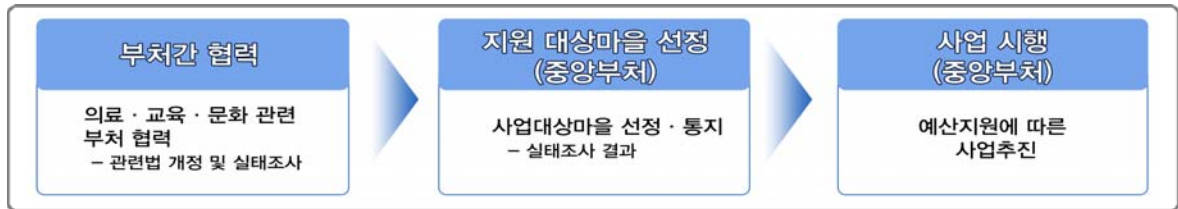
- 용어 정의에 관한 개념확립 :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 반면 원격진료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
- 현행법상 의료인과 의료인의 원격진료는 가능하나 의료인과 환자의 원격진료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대한의사협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의료법」 등을 개정 및 협의하여 명확한 추진근거 마련 필요

2.2.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1) 어촌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
 - 조건불리지역(도서어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추진

2) 추진체계



〈그림 4.47〉 추진절차 및 내용

〈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방안 연계 〉

- 교육부는 2013년 8월부터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학생 학습여건 개선으로 300개 학교를 지원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광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ICT 콘텐츠의 연계지원 방안을 추진 중

3)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원격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타 부처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조건불리지역 특례적용으로 원격의료이 가능토록 법적 기반 마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연계방안 구축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원격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2.2.5 사업내용

1) 원격 의료 사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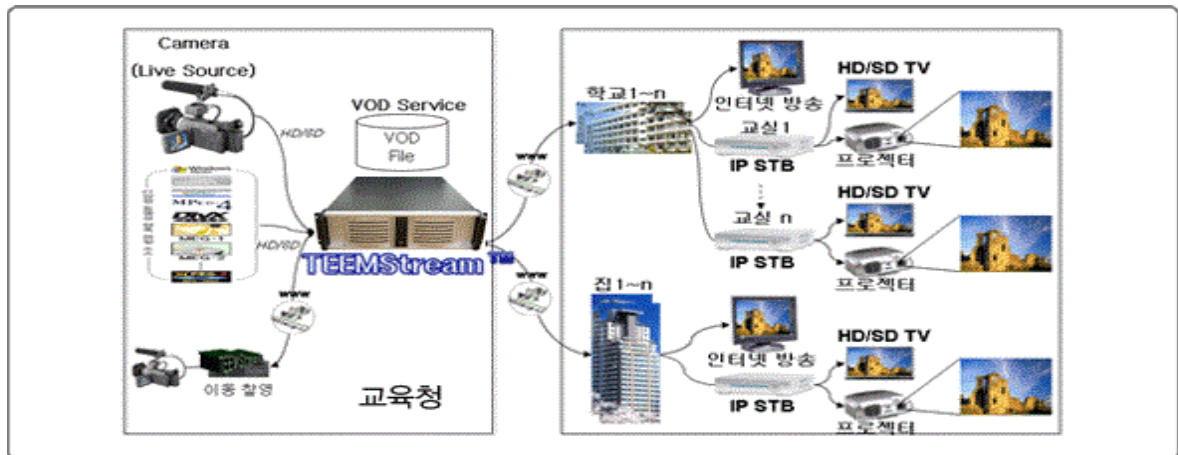
- ICT기반으로 의료(도서지역 보건진료소와 도시지역 거점병원을 연계하여 진료·처방), 교육·문화 시설 보급 지원
- 도서어촌 지역 중 해당 행정리에서 의료시설까지 소요시간이 60분 이상 소요되는 행정리 대상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원격의료지원이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그림 4.48〉 원격의료진료 시현

2) 원격 교육·문화 사업(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ICT기반의 교육·문화사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연계 지원 추진
 - 2013.8월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300교 지원(교육부)



〈그림 4.49〉 교육 및 문화지원 프로세스 및 시현

2.2.6 추진계획

- 2014년 : 관계부처 협의(T/F 구성)
- 보건복지부 : 조건불리지역 원격의료 특례조항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개발·보급(부처별 5억 원)
 - 어촌 내에서도 접근성이 열악한 도서지역(조건불리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2.2.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2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	-	-	(1,500)	(1,500)	(1,500)	-	-
일 정	○ 관계부처 협의							
	○ 원격지원 시범사업			5개소	(계속)	(계속)		

주 : ()는 타부처 예산

2.2.8 기대효과

- 건강 생활 실천 제고를 통한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 및 질병의 악화 방지

-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입을 통한 건강 증진 업무의 체계화 및 개선
- 열악한 도서 어촌지역(조건불리지역 등)의 복지여건(의료·교육·문화) 강화
- 도서어촌의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

2.3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사업

2.3.1 추진배경

- 조건불리지역의 열악한 복지여건으로“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 전국적으로 스마트 폰 대중화 등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고령화된 어촌지역 주민들에 필요한 정보 제공 수단 미흡
- 기존 단순 상담지원 센터에서 탈피한 어촌고객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마련

2.3.2 목적 및 필요성

- 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민생활 현장에서 행정·민원·주거 등에 대한 현장밀착형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필요
 - 고령화(2012년 고령화율 27.8%)된 어촌 도서지역의 행정민원, 독거노인의 복지, 각종 시설물(공공기반시설 및 어업용 개인 시설)에 대한 보수·서비스 문의, 어촌생활 전반에 문의사항, 외국인 선원에 대한 통역 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미비
 - 외국인 선원 급증 : (2007년) 9,916명 ⇒ (2011년) 19,550명(97.2%)⁷⁾

2.3.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제53조(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교부)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7) 한국선원통계연보,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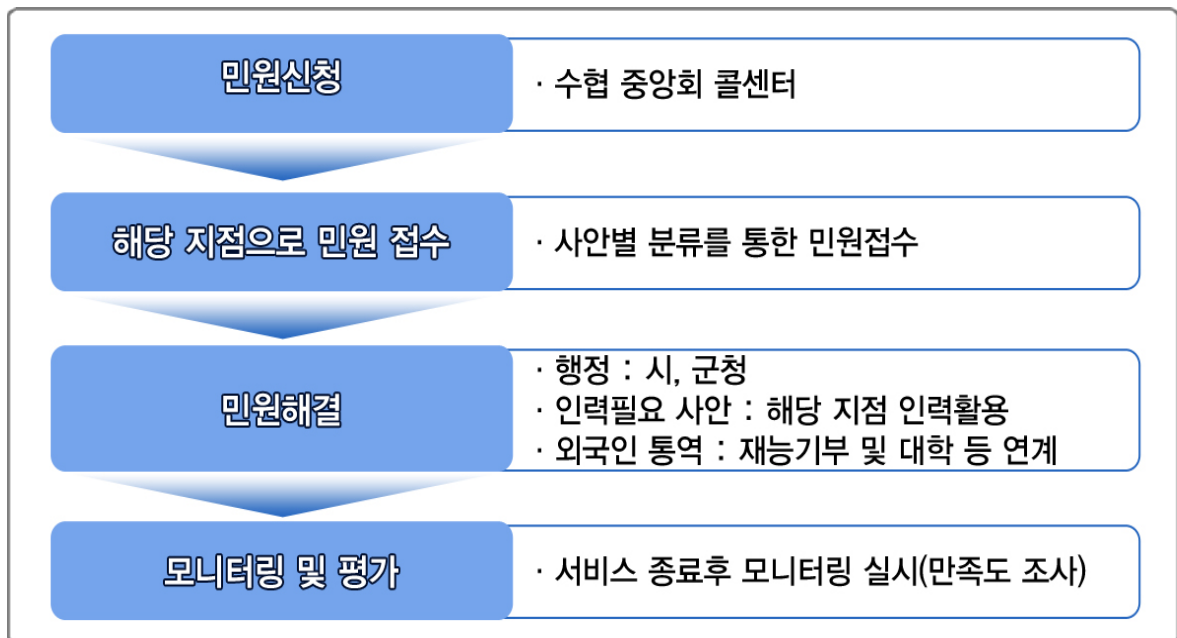
2.3.4 추진방향 및 주체별 역할

1)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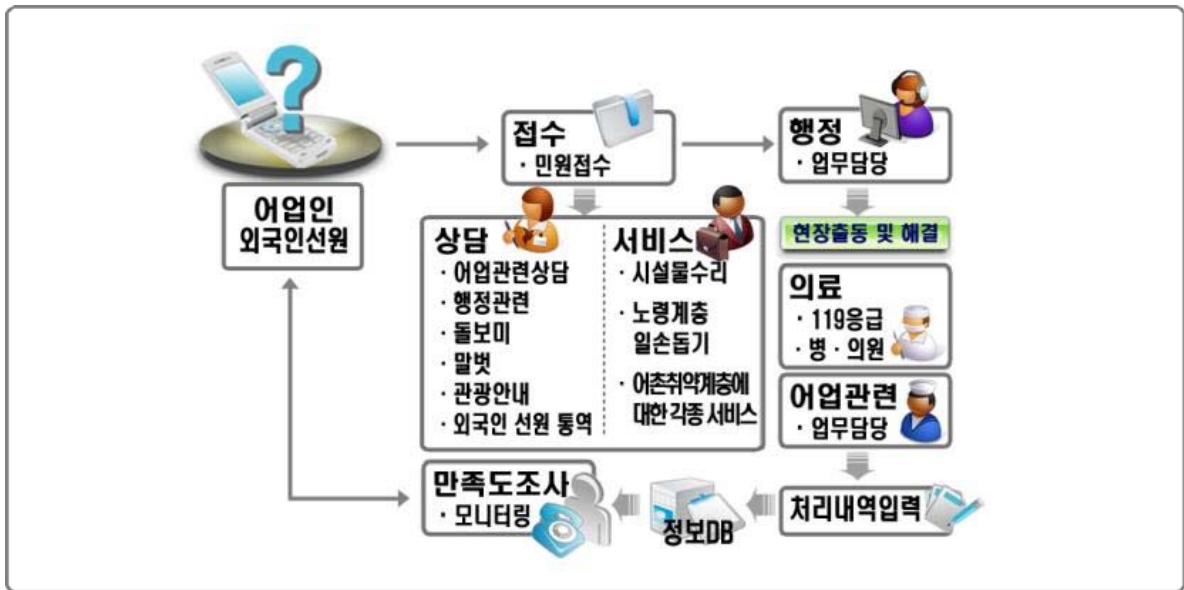
- 어촌지역 취약계층(독거·고령노인, 장애인, 외국인선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민생활 현장에서 행정·민원·주거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 전국 조직을 갖춘 수협중앙회의 콜센터를 활용하여 장보고 퀵 서비스센터의 본부
 - 본부에서 접수된 민원을 지역본부별 해당 지점에서 처리

2)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 퀵 서비스 센터 운영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관리 	
수 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중앙회 장보고 퀵 서비스 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역별 지점을 활용하여 실행조직 운영 	



〈그림 4.50〉 장보고 퀵 서비스 센터 민원해결 시스템(안)



〈그림 4.51〉 정보고 킥 서비스 센터 활용 개념도(안)

2.3.5 사업내용

1) (가칭)정보고 킥 서비스 센터 운영

- 센터 상담을 통한 행정민원사항 및 궁금증 해결
- 외국인 선원을 위한 전문상담 및 통역서비스
- 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 지원(생산기반시설 A/S센터 지원 서비스)
- 독거노인들을 위한 주 2~3회 안부전화 및 말벗, 응급상황시 긴급 대처 서비스
- 어촌원격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어업인 교육
- 전국 수협에 설치하여 접근성 제고
- 어촌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간단한 수리, 노령계층이 하기 어려운 소일거리 등을 지원

〈 정보고 킥 서비스 센터 개요 〉

- (설치) 전국 수협에 설치하여 접근성 제고
- (기능) 어촌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간단한 수리, 노령계층이 하기 어려운 소일거리 등을 지원



〈그림 4.52〉 (가칭) 장보고 킷 서비스 센터 운영

2.3.6 추진계획

- 2015년 : 장보고 킷 서비스센터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 수협중앙회 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본부별 지점에 실행조직 운영

2.3.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2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7,100	-	100	1,000	3,000	3,000	16,800
일 정	○ 운영계획 수립							
	○ 시범사업				10개소			
	○ 장보고 킷 서비스센터 설립·운영					30개소	30개소	

2.3.8 기대효과

- 장보고 킷 서비스센터를 통한 낙후도서 어촌지역주민들의 복지여건 개선
- 어촌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 5년간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39개 창출 기대

3 어촌공동체 재생 촉진

3.1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확산

3.1.1 추진배경

- 어촌은 각종 생활 쓰레기, 어구 방치 등으로 쾌적하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
- 그간 하향식 관료화된 정책추진에서 주민 교육 및 참여를 통한 상향식 사업추진 필요
- 자조·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재생 촉진방안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3.1.2 목적 및 필요성

- 쓰레기, 어구 방치된 공간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촌공동체의 자율적인 정화활동보다 정부주도의 공공근로사업 및 봉사단체에 의존하여 어촌공동체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상향식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방안 부재
 - 주민 참여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발전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주민 주도의 아이디어 제시·구체화하는 사업발굴 필요
 -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발굴, 소규모 마을 단위 사업 활성화(지역개발사업과 연계)

3.1.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 산업육성 등),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8조(주민제안 등)

3.1.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1)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 주민 자발적 깨끗한 어촌만들기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실천운동 확산 추진
 - 추진위원회 운영하여 어촌공동체 참여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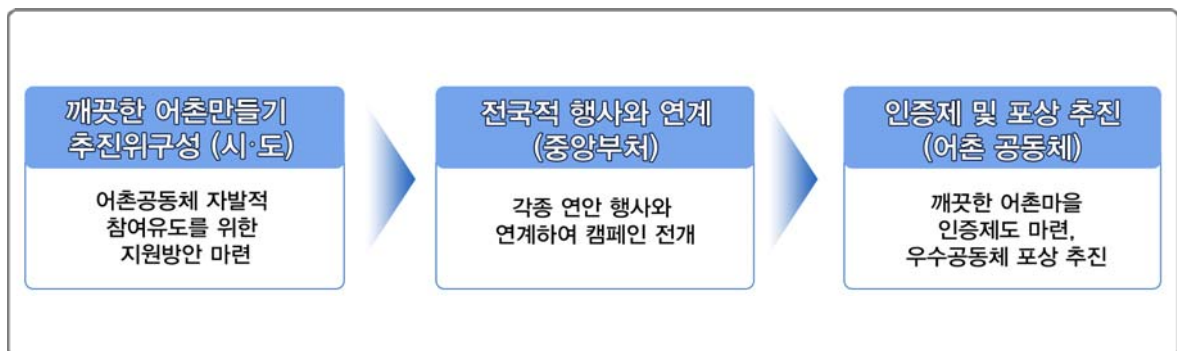
- * (위원회) 15인으로 구성하고 수협중앙회에 설치(2013.11), 매년 상반기 정기회 개최
- * 참여 어촌공동체에 청소도구 구입비 등 일부비용 지원(수협)
- 전국적인 바다행사와 연계하여 깨끗한 어촌만들기 캠페인 전개
 - * 바다의 날(5.31), 국제연안정화의 날(전국 바다대청소: 9월 셋째 주)과 연계하여 실시
 - * (1단계) 쓰레기 수거 → (2단계) 앞마당 가꾸기, 꽃길 조성 등
- 자긍심 고취 및 홍보를 위하여 깨끗한 어촌마을 인증제도 및 포상 추진

(2) 주민 역량강화 교육

- 주민주도 계획마련 및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현장밀착형 정책방안 수립 마련
- 주민이 현장활동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권역의 사업발굴하고 마을 발전과제 계획화 지원
- 전문가 및 지자체와 연계로 마을·권역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권역사업의 효과 증진

2)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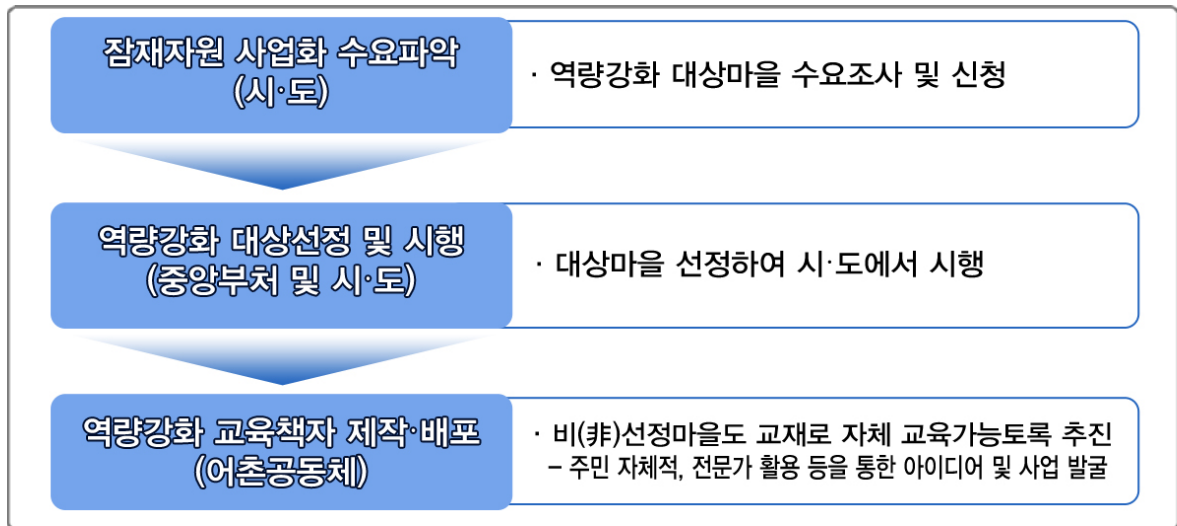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그림 4.53〉 추진절차 및 내용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어촌만들기 캠페인 지원 및 인증제, 포상제 마련 - 전국 행사와 연계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어촌만들기 추진위 구성 지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



〈그림 4.54〉 추진절차 및 내용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역량강화교육 지침 수립 - 역량강화 대상마을 선정 및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 역량강화 수요조사 및 신청	

3.1.5 사업내용

1)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 깨끗한 어촌만들기 캠페인 추진위원회 지원
 - * (위원회) 15인으로 구성하고 수협중앙회에 설치(2013.11), 매년 상반기 정기회 개최
- 전국적인 바다행사와 연계하여 깨끗한 어촌만들기 캠페인 확대
- 깨끗한 어촌만들기 인증제(2018년까지 선도마을 400개 육성), 포상제 마련

2) 주민역량 강화 교육

- 주민이 함께 마을의 잠재자원을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 유무형의 자원발굴 및 자원지도 만들기, 마을만들기 선진사례 학습 등
- 역량강화사업 대상이 되지 못한 마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기록한 책자를 발간배포 및 홍보(2014년~)

3.1.6 추진계획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 2015~2018년 : 전국 어촌공동체 대상으로 깨끗한 어촌만들기 캠페인 지원
 - 깨끗한 어촌만들기 인증 및 포상실시
- 2019~2030년 : 깨끗한 어촌만들기 캠페인 확대시행

〈주민역량 강화 교육〉

- 2014~2018년 :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교육과정 교재 제작
 - 역량강화사업 대상이 되지 못한 마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기록한 책자를 발간배포 및 홍보
- 2019~2030년 : 역량강화 교육 확대

3.1.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2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00	500	700	700	700	700	8,400
	○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800	-	200	200	200	200	2,400
	○ 주민 역량강화 교육	2,500	500	500	500	500	400	6,000
일 정	○ 깨끗한 어촌만들기 지원방안 마련							
	○ 깨끗한 어촌만들기 확대시행		20	8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 인증 및 포상							
	○ 주민역량강화 교육		8개소	8개소	8개소	10개소	10개소	
	○ 역량강화 교육과정 교재 제작							

3.1.8 기대효과

-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어촌 어메니티(Amenity) 강화
- 공동체 화합 및 지역 자긍심 고취
- 주민 자주적 지역개발로 역량강화 도모
-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어촌지역 발전 도모
- 5년간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7개 창출 기대

3.2 어촌공동체 갈등 관리

3.2.1 추진배경

- 어촌공동체는 정부 정책지원, 내부 수익사업 추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중재자 부재
- 어촌공동체 내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공동체가 사회문제로 대두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소매물도 어촌공동체 갈등 등 전국적 갈등사례 다수 발생
- 어촌 공동체 이해 관계자들 간 갈등의 다양화·복잡화
- 또한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 지원으로 어촌 인력문제 해소 및 어촌 활력 증진

3.2.2 목적 및 필요성

- 어촌사회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어촌 공동체의 갈등해소로 어촌사회 대화합 방안 필요
-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복잡화, 세분화·전문화가 이루어지면 사회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
- 주민의견 수렴 없이 정책의 결정·추진으로 갈등 증폭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불신 해소 대안마련 필요
- 귀어·귀촌인과 기존 어촌 공동체 구성원간의 융합 어려움
- 귀농·귀촌과 차별화된 어촌·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3.2.3 관련 법규

1) 지원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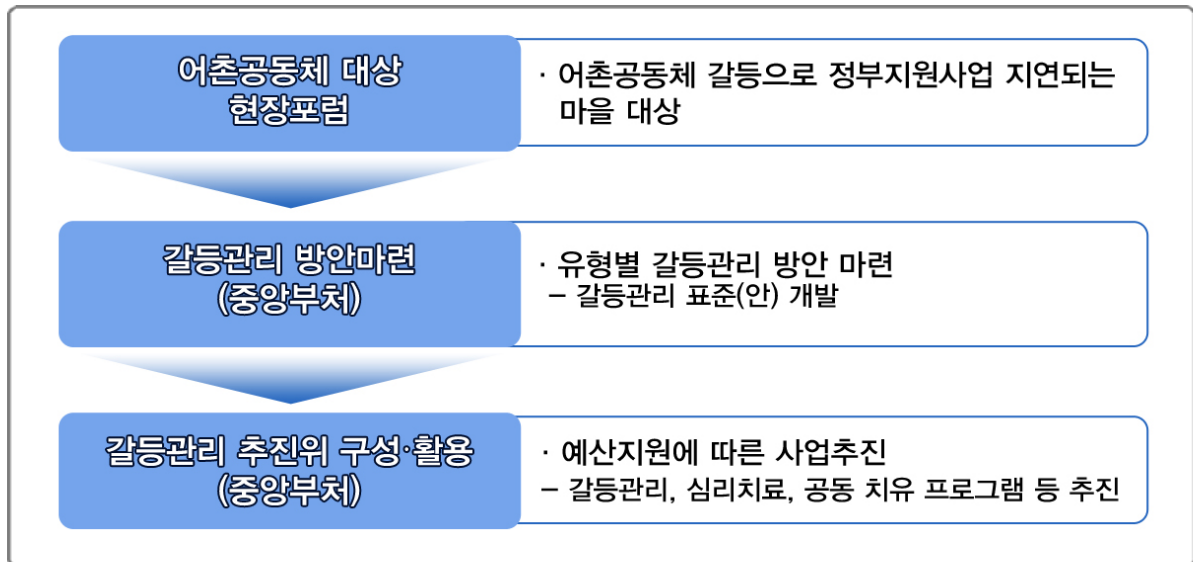
3.2.4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어촌공동체의 갈등관리는 내부적인 문제로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이나 합의형성 접근 추진
 - (예시)산업통상자원부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민간주도 선제적 갈등관리 시스템)
- 빈집·일자리 등 D/B구축과 병행하여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연계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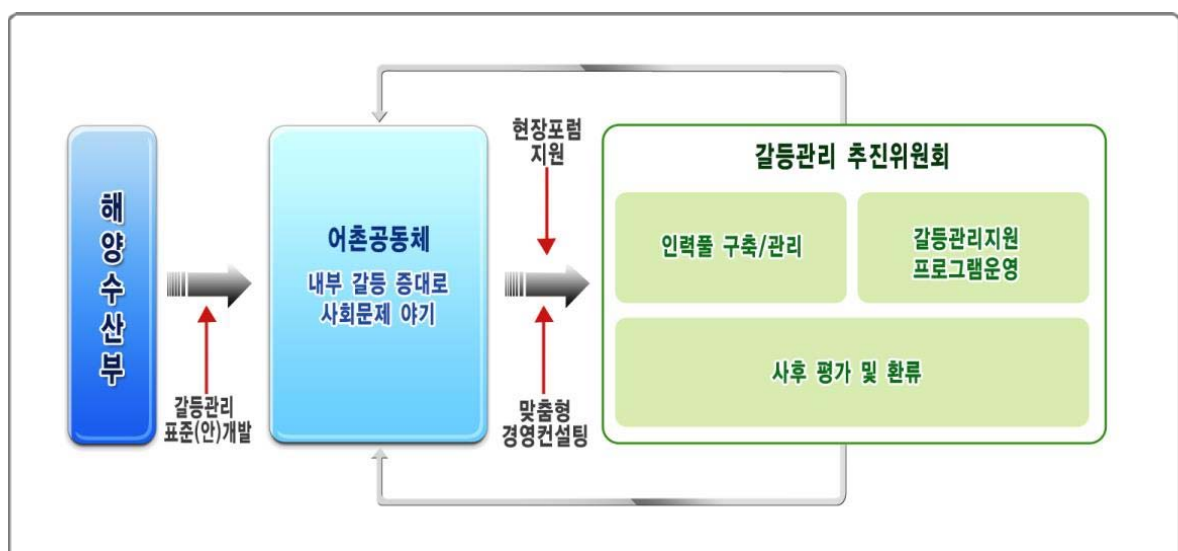
2)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현장포럼 및 갈등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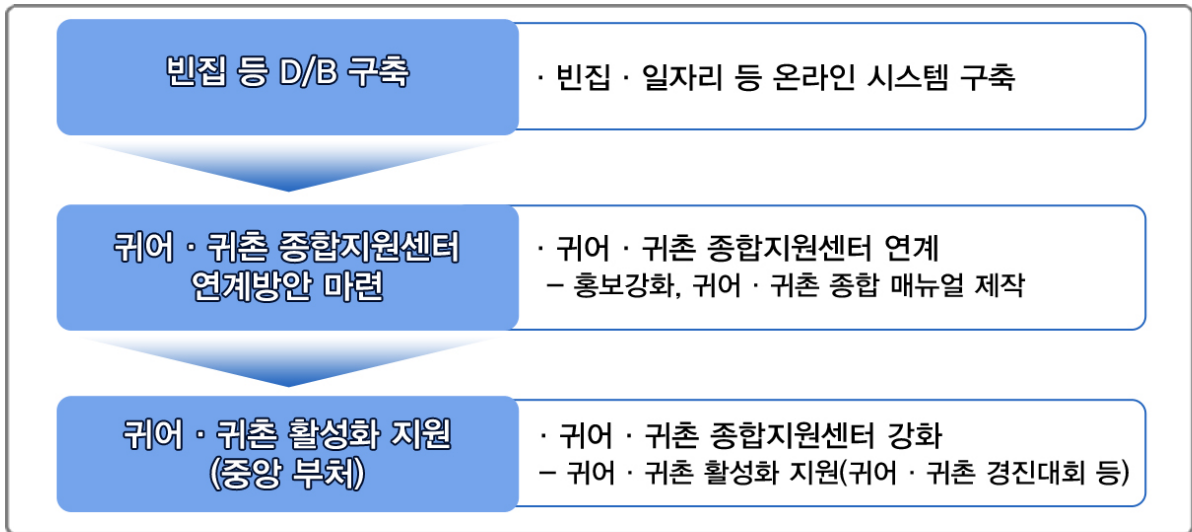
〈그림 4.55〉 추진절차 및 내용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어촌 공동체 대상 현장포럼 실시, 갈등관리 표준(안) 개발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 갈등관리, 심리치료, 공동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	



〈그림 4.56〉 갈등관리 방안 체계도

〈빈집 등 정보제공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림 4.57〉 추진절차 및 내용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어촌 빈집·일자리 D/B 구축·활용(귀어·귀촌 활성화 촉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귀어·귀촌 강화를 위한 센터 연계방안 마련 - 홍보(포털사이트 및 SNS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귀어·귀촌 종합 매뉴얼 제작·배부 - 귀어·귀촌인 경진대회 등 ※ 국립수산물과학원에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2014년)를 설치하여 귀어·귀촌 상담, 금융지원,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3.2.5 사업내용

1) 어촌공동체간 갈등해소 현장포럼 실시

- 전국 연안 시·군의 어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포럼 실시
 - 어촌공동체 갈등으로 정부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마을을 우선대상

2) 갈등관리 표준(안) 개발

- 갈등 유발요인 분석 실시 후 갈등의 유형별·단계별 갈등관리 표준(안) 개발
 - 중재 프로세스(Mediated Arbitration) 마련
- 갈등 빈도, 규모, 강도, 지속성 등 갈등영향 분석실시

3)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설립·운영

- 갈등관리 전문인력풀 구성 후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갈등관리, 심리치료, 공동 치유 프로그램 등 추진
- 갈등관리 전문가 구성
 - 지역 내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 가진 인사로 공정성, 이해관계자 존중, 비밀 유지 등의 자격이 필요

4) 어촌 빈집·일자리 정보제공

-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지역 빈집,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5)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연계방안 마련

- 귀어·귀촌 홍보강화
 -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매체 활용한 홍보 강화
- 귀어·귀촌인 경진대회 마련, 종합 매뉴얼 제작 등

3.2.6 추진계획

1) 현장포럼 및 갈등관리

- 2014년 : 어촌 공동체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포럼 실시
- 2015~2030년 :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설립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 공동치유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 추진

2) 빈집 등 정보제공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 2014~2018년 : 어촌 빈집·일자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 귀어·귀촌인 경진대회, 귀어·귀촌 종합 매뉴얼
- 2019~2030년 : 지속적인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와 연계 지원 추진

3.2.7 연차별 투자계획

〈표 4.2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14,400
일 정	○ 현장포럼 추진							
	○ 갈등관리 방안 마련							
	○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 빈집 등 정보제공							
	○ 귀어·귀촌 지원센터 지원							

3.2.8 기대효과

- 어촌 공동체 갈등해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
- 갈등해소로 활기찬 공동체 실현
- 어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증진으로 지역발전 기여
- 어촌 공동체 갈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신뢰회복 및 화합 기여
- 5년간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 자리 3개 창출 기대

제3절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추진목표〉

- ◆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어항 특화개발, 어항재생과 운영·관리 선진화를 통해 어항 이용 및 가치를 극대화



1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 특화개발



〈그림 4.58〉 어항 특화개발 개념

1.1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1.1.1 추진배경

1) 국민 관광수요 증가

- 국내 관광수요는 국민 소득 증가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임
 - 2017년 국민관광 총수요 7년 1,026,452천 명 중 해양관광 수요는 379,787천 명으로 전망
- 연안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내륙에서 해양 지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해수욕장, 갯벌, 관광어항, 유어낚시, 요트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어촌관광수요 (2005년) 95,389천 명 → (2013년) 167,195천 명(연평균 8.4% 증가)
 - 2012년 현재 어항 내에서 개최되는 수산물 관련 축제는 36개(33개 항)로 2,448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이로 인한 매출액은 약 596억 원인 것으로 추산됨

2) 체험형 관광으로 패턴 변화

- 해양관광 패턴이 과거 단순 관람형에서 해양테포츠, 어촌체험 등 체험형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어촌체험마을 방문 및 바다낚시 등의 수요 증대

-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 : (2007년) 5,119천 명 → (2012년) 6,179천 명
- 낚시어선 이용객수 : (2000년) 667천 명 → (2012년) 2,155천 명
- 해양레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은 부족
- 최근 5년간 요트 수요 급증 : (2009년) 4,840척 → (2013년) 9,048척, 187% 증가
- 조정면허 취득자수 누계 : (2000년) 6,966명 → (2010년) 98,518명, 14배 증가
-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12개소, 유람선 선착장 등 관광 관련 시설 196개소

3) 어항기능 다양화를 통한 어업외소득 증대

- 다기능어항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어항은 배타적 공간에서 개방적 공간으로 전환되었음
- 시범사업의 성과
 - 시범사업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어업인 평균소득은 21.8%, 관광객 수 124%, 관광 및 문화시설은 100% 이상 증가
 - 사업 대상 지역의 어가 수(어업인구)는 사업 전·후 3.4%(46.8%) 감소한 반면 비사업 지역 어가 수(어업인구) 감소율 7.2%(48.8%)에 비해 낮게 나타나 다기능어항 개발이 어가 및 어업인구 감소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시범사업의 문제점
 - 시범사업은 친수·관광시설 위주의 개발로 어항의 기본적 기능인 수산분야 활성화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향후 사업 확대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등 수산관련 기능시설에 대한 정비 제외로 인해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였음
- 개선방향
 - 다기능어항 운영·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어항의 관리 책임성 강화
 - 다기능어항 개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향후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이 필요

1.1.2 목적 및 필요성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 개발로 어촌지역 발전 및 소득증대 기반 마련
- 어장축소 및 어업자원 감소 등 어업여건 악화에 따른 어업외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어촌 6차 산업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어항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지로 전환
- 어항이 어업인의 생산공간에서 벗어나 국민의 여가공간,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 다양화 요구에 따른 관광레저 및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증대

1.1.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시범사업 개선을 통한 확대 개발

사 업	추진 방향	주요 사업내용
다기능어항 시범사업 (기존)	· 어업여건 악화에 따른 어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 문화 등 어항이 복합적 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개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	· 수산업 + 관광 등 어항기능 다양화 (친수시설 위주 개발)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개선)	· 지역특성 및 항별 이용실태에 따른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여 특화개발함 으로써 지역경제 중심으로 재창조 (상향식 개발방식 도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유형 선정 및 이에 따른 다기능어항 개발 · 생산, 유통 · 가공, 문화, 관광, 상업 등 어촌 6차 산업 중심공간으로 조성

- 수산업 지원 기능 외에 지역특성에 따라 항별 고유한 기능을 특화하여 개발함으로써 물류유통, 관광, 휴양, 문화·복지 등 어촌정주 생활거점어항으로서 연안지역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항 조성
 - 계획수립 시 시설 계획 외 소프트웨어 개발과 휴먼웨어 개발계획 포함
 - 주민 지자체 등 이용·관리 주체가 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어항 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각각의 지역 특성에 따른 항별 고유한 기능을 특화하여 개발(4가지 유형 우선 선정 및 확대 개발 추진)



〈그림 4.59〉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유형

- 어선 이용, 위판 등 수산기능 뿐 아니라 지역 중심지로서의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합형 유형 선정

- 수산여건 악화에 따라 항 내 발생하는 여유 수역을 효율적으로 활용, 어항 이용성을 제고하고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자원조성형 유형 선정
- 2012년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남해안의 전복 양식장 등 양식어업에 약 556억 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됨
- 최근 국민관광 수요 및 체험형 관광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어항을 통한 어업외소득 증대를 위해 피서리나형 및 낚시관광형 유형 선정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어장·배후지역과 연계된 지역개발로 어촌지역 경제중심 개발을 위한 지자체 참여 유도 · 지자체의 의견반영 및 적극적인 어항개발 참여 및 관리운영으로 상향식 개발방식 추진 · 다기능어항 개발 : 대상항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다기능어항 개발 추진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건에 맞는 다기능어항 개발모델 제시 · 효율적 어항 운영·관리방안 마련(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발굴) ※ 다기능어항 완공 후 시설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 포함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서리나, 수익형 휴게시설, 씨푸드 레스토랑 등 관광객을 위한 수익성 시설조성 및 운영관리 	

1.1.4 사업 내용

1) 복합형 다기능 어항

○ 어항기능 재배치

- 어항을 기능별 구역화 하여 어항 이용성 확대 및 효율적 관리 강화
- 수산복합지구 : 위판장, 판매장, 주차장, 부잔교, 어구야적장 및 보관창고
- 해양관광지구 : 친수공간, 전망대, 해안 산책로, 씨푸드 레스토랑(민자유치)
- 해양레저지구 : 마리나, 낚시터, 스킨스쿠버 체험장, 어촌 체험마을 조성

○ 시설 현대화

- 노후화된 기본시설 정비 및 확충 : 물양장 등 기본시설 안전성 확보
- 위판·판매장 등 수산 기능시설 정비 및 리모델링을 통한 어항 부가가치 제고

○ 주변지역과의 연계 개발

- 지자체의 어항 배후 도시·어촌 정비계획, 각종지역개발 및 관광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개발 추진

- 관광 및 친수시설 조성
 - 광장, 친수시설, 해양박물관, 해양공원 등 관련 시설 조성
- 레저 및 체험시설 조성
 - 낚시, 스쿠버 및 해상레저 등 체험형 관광수요에 맞춰 어항시설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

2)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 어항주변 자연조건이 양호한 수역을 활용하여 양식장 조성 및 보호방파제 설치 또는 방파제 구조물 신축·보강 시 자원조성과 연계한 구조물 설치
 - 전복 및 해삼 등 부가가치가 높고 자연조건에 부합하는 양식종을 우선순위로 선정
- 어항 내 여유수역을 양식장으로 활용(어촌·어항법상 금지행위 제도개선 후 추진)
-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 증식하기 위한 인공어초 등 자원조성
 - 어패류에 산란 장소 및 어린 고기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3)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 민자유치 여건 마련을 위해 진입도로, 외곽시설, 준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조성
- 레저 및 편의시설은 민간자본을 통한 시설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국가에서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 계류시설 설치 및 기능시설(클럽하우스 등) 유치를 통한 레저 인프라 구축
- 어촌계 및 민간투자자와의 갈등해소 및 MOU 체결 유도

4)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 낚시 잔교 및 공원 설치
 - 관광객이 낚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낚시잔교 설치
 - 일반 관광객의 낚시체험을 위한 낚시장비 대여점 및 휴게시설 설치(민간 운영)
- 낚시어선 전용부두 설치
 - 낚시어선이 많은 어항은 어업인의 어항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용부두 설치
 - 낚시어선 전용부두 배후지역에 낚시전문점(민자유치), 낚시이용객 편의시설 조성
- 인공어초 설치
 - 바다 속에 어류조장시설인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어족자원 육성

1.1.5 예비 후보지 선정

1) 선정기준

- 수산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 관광·문화 등 개발 잠재력 및 유형별 전문화된 지표를 평가하여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예비 후보지 선정
- 복합형 다기능어항 후보지 선정 시 시범사업을 추진한 13개소와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4개 항, 신규 개발대상 6개 항을 제외한 86개 항을 대상으로 검토함
- 그 외 유형의 후보지 선정 시에는 시범사업 13개 항을 포함한 99개 항을 대상으로 검토

〈표 4.26〉 유형별 다기능어항 선정기준

구 분	복합형	자원조성형	피서리나형	낚시관광형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이용현황 ◦ 수산물 생산현황 ◦ 관광자원수 ◦ 관광객수 ◦ 여객물류 현황 ◦ 도로 접근성 ◦ 배후도시 인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양식현황 ◦ 해양 생태환경 ◦ 항 내 여유수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수 ◦ 체험마을 현황 ◦ 레저시설 현황 ◦ 인접 마리나현황 ◦ 도로 접근성 ◦ 마리나 민자유치 계획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 현황 ◦ 해양 자연환경 ◦ 도로 접근성 ◦ 관광자원 ◦ 레저시설 등

2) 사업대상 후보지

- 46개 예비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한 대상항 평가 및 10개소 선정
- 지자체의 지역 여건 및 이용실태를 고려한 개발방안 구상 및 제시
- ※ 대상항 평가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배후지역과의 연계 개발 계획을 제시하는 어항을 우선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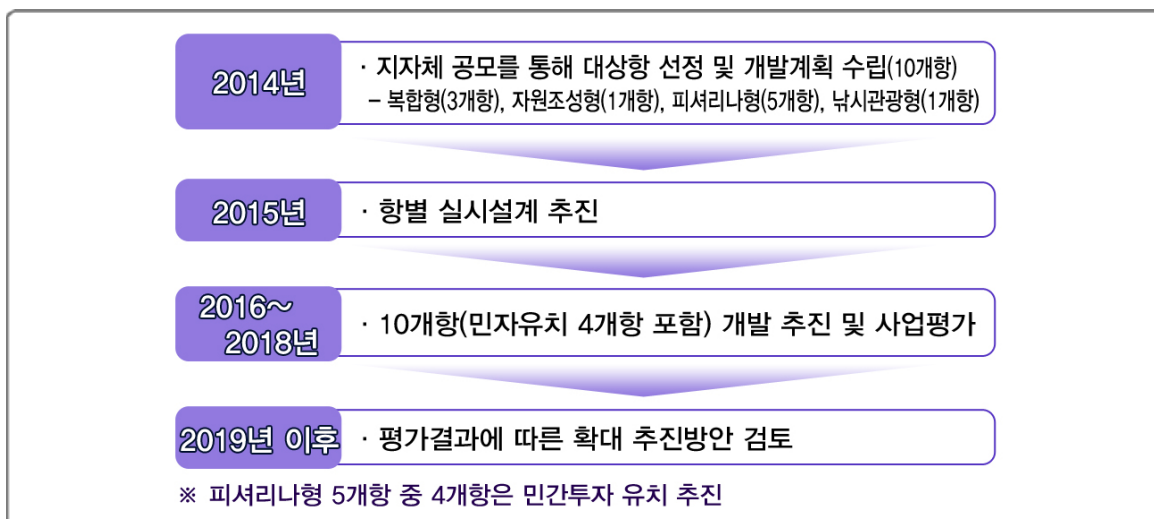
〈표 4.27〉 유형별 다기능어항 예비 후보지 및 위치도

사도	복합형	자원조성형	피서리나형	낚시관광형
계	13개 항	10개 항	8개 항	15개 항
부산	다대포			
인천		덕적도		
울산				
경기	궁평			
강원		사천진 수산	대포, 금진	공현진, 남애 아아진, 대진 장호
충남	남당, 장고 안흥		홍원	오천, 삼길포
전북		연도		위도항
전남	돌산, 녹동	청산도, 수품 발포, 풍남 보옥, 도장		서망, 계마 회진
경북	감포, 저동		오산	양포
경남	광암, 미조 외포		지세포, 삼덕 구조라	욕지, 노량
제주	도두		모슬포항	신양

※ 피서리나형은 기존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내용에 포함된 미추진 마리나(민자)계획을 반영
 ※ 예비 대상항은 이용실태에 따른 분류로 추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1.1.6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60〉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 복합형 다기능어항 : 항당 400억 원(국비)
-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 항당 200억 원(국비)
-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 항당 200억 원(민자유치 : 4개 항)
-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 항당 200억 원(국비)

〈표 4.2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소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189,300	3,000	6,000	30,000	60,000	90,300	968,000
일정	○ 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 다기능어항 개발				5	5(5)	(완료)	(사업확대)
	○ 사업평가						1식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1.1.7 기대효과

- 주변지역과 연계된 특화개발로 어촌 6차 산업 중심공간으로 조성하여 어항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 체험형 관광 및 해양 레포츠와의 연계로 도시민들의 관광 및 휴식 공간으로 어항을 제공하여, 어업외소득 증대, 도어교류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5년간 사업비 1,893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1,087개 창출 기대

1.2 어항 이용고도화

1.2.1 추진배경

1) 어항 기능 효율성 저하

- 어항 내 각종 기능 시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분산 배치되어 어항의 기능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각종 기능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통한 어항기능 활성화 및 어촌소득 증대도모 필요
- 어장 변화, 어선의 성능 증대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항 이용이 일부 어항에 집중되어 거점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어항의 수산기능 저하로 이용불편 발생
 - 위판장 등 수산 관련 기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

2) 수산업 기능의 집중화 필요

- 현재 어항에서 수산물의 양륙·위판·보관·유통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수산기능 강화를 통한 수산업 지원기능의 고도화가 필요함
- 종합처리시스템 및 수산업 지원시설의 정비를 통해 양륙시간의 단축, 출하가격의 상승 등으로 어업의 부가가치 창출 도모
 - 일본 타노우라항은 시설정비를 통해 출하시간 단축 : (정비전)1.5시간 → (정비후)0.75시간, 산지가격 388엔/kg → 420엔/kg 으로 상승하여 어업소득 증대

3) 어항 기능 활성화 도모

- 어항의 수산기능을 단순 수산물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소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기능시설 정비를 통한 수산기능 강화를 위해 어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2011년, (구)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시범사업 대상항 4개소 선정(2011.6)
 - 4개소 기본계획 수립(2012년) 및 실시설계(2013년)
 - 시범사업 착수(2014년)

1.2.2 목적 및 필요성

- 수산시설의 리모델링 및 시설 확충으로 어항 수산기능 강화에 따른 어업소득 증대 도모
-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 내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수산물 종합처리시스템 도입으로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제고
- 어항 내 산재되어 있는 기능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어항개발의 효율성 도모 및 기능 고도화

1.2.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기존 어항의 단순 수산지원 기능에서 어항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해 어항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추진체계

- 주체별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운영·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재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이용고도화사업비 지원 · 안전하고 종합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시설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은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해 직접 관리·감독하여 추진	
지자체	· 민간 위탁시설 및 운영·관리 전문기관 관리·감독 · 이용고도화사업 및 어항과 연계된 지역 개발사업 추진	
전문기관	· 어항 이용 고도화를 위한 전문적인 운영·관리 추진	
민간 (수협 등)	· 위판시설의 수탁 관리·운영 · 상업시설투자(냉동·냉장시설, 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 등)	

1.2.4 사업내용

1) 어항시설 정비 및 재배치

- 어항구역 내 시설 정비 및 재배치를 통한 어항기능 극대화
 - 물양장 및 위판구역 정비·확장에 의한 양륙대기 및 양륙시간 단축으로 수산물 신선도 유지 및 양륙량 증가 도모
 - 위판시설 인접구간에 냉동·냉장시설 및 가공시설 배치로 어항시설 효율성 향상
 - 기타 기능시설을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설 집중을 통한 어항기능 효율성 제고

2) 수산업 지원을 위한 시설 지원

- 양륙, 위판, 운송의 Non-stop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생관리형 위판시설 정비, 연계 차량 적재구역 조성 및 어항구역 내 수송도로 정비
- 어구 건조·야적장 등 어업시설물은 위판시설과 구분하여 구역을 재배치,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필요시 어항 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물클러스터(FPC) 조성

3) 연계사업 지원

- 관광, 도로신설 등 기반시설 정비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종합개발 유도
- 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개발 지원
- 어항과 연계된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조성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4) 운영·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 정부, 지자체, 어촌계, 수협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체 거버넌스 구축
 - 협의체는 관리주체와 이용주체로 대별하여 거버넌스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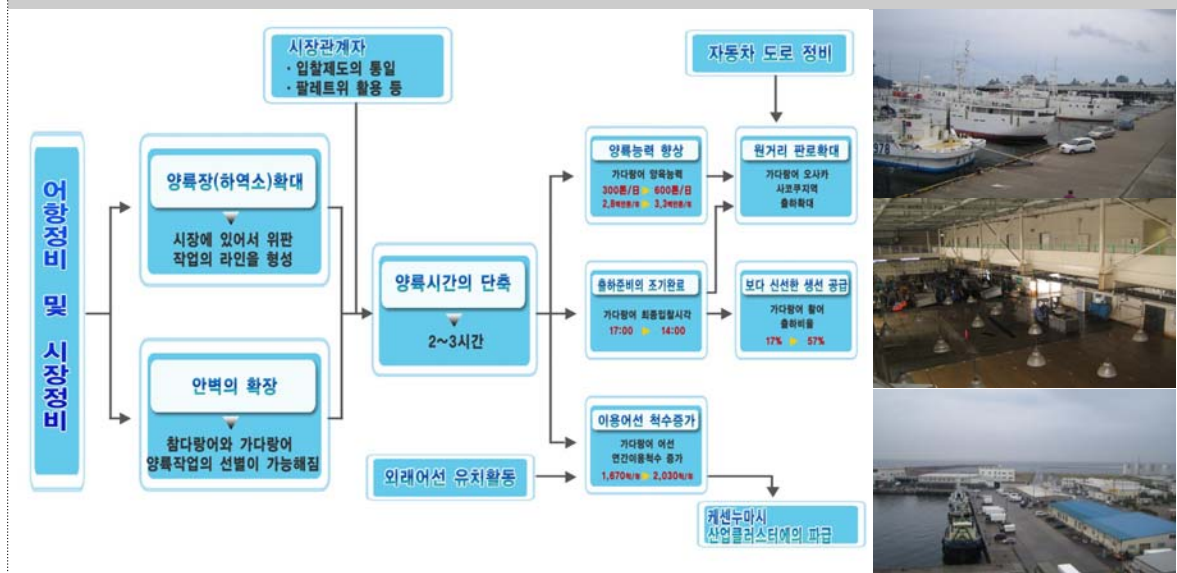
○ 전문 운영·관리기관 도입

- 대상항의 기획·통계·운영·관리·홍보·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운영·관리 전문기관을 도입하여 업무 위탁

〈 어항 기능고도화 정비 사례(일본 미야기현 케센누마항) 〉

- 사업 목적 : 어항정비사업으로 물양장 및 양륙시설, 배후지역 도로망 정비를 통한 양륙시간 단축 및 양륙능력을 향상시켜 수산물류 기능 고도화
- 사업 내용 / 사업비
 - 양륙 물양장 및 양륙시설 정비 : 66.8억 엔(약 668억 원)
 - 어항용지 정비 및 어시장 신축 : 33.5억 엔(약 335억 원)
- 사업기간 : 1988~2001년

[기능 고도화에 따른 효과분석 및 시설 정비 현황]






1.2.5 대상항

- 수산업적 이용이 활발한 거점어항을 대상으로 4개 항(강원 거진항, 경북 죽변항, 울산 방어진항, 전북 구시포항)을 선정하여 어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거진항〉

- * (사업내용) 수산물 판매장, 활어 판매장, 활어 유통 보관소, 해수 인입시설, 저온 건조저장시설, 어구어망 보관창고, 어구보수 건조장 등 수산기능 고도화
- * (사업규모) 총 398억 원
 - 국가 197억 원, 지자체 105억 원, 민자 96억 원

	<p><죽변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수산물 가공시설, 수산물 종합처리장 (FPC), 수산물 경매체험장, 위판장 및 직판장 구축 등 * (사업규모) 총 534억 원 국가 142억 원, 지자체 118억 원, 국방부 34억 원(부대 이전) 민자 240억 원
	<p><방어진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수산물 가공시설, 수산문화센터 조성, 어구창고 및 야적장, 수산관련 시설 재배치를 통한 기능 고도화 * (사업규모) 총 354억 원 국가 224억 원, 지자체 8억 원, 민자 122억 원
	<p><구시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활어 직판장, 수산문화센터, 어구 보관창고, 어구 건조보관장 등 조성 * (사업규모) 총 494억 원 국가 201억 원, 지자체 84억 원, 민자 209억 원

〈그림 4.61〉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1.2.6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 2014년 ~ 2018년 :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4개소 추진
- 2018년 : 이용고도화 사업 4개 항 사업 완료 및 사업평가

2) 투자계획

〈표 4.29〉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소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어항 이용고도화	71,330	4,340	12,000	12,000	20,000	22,990	-
일정	○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추진		3	1(3)	(4)	(4)	(완료)	
	○ 사업 평가						1식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1.2.7 기대효과

- 수산물의 양륙, 위판, 가공, 유통의 일괄(Non-stop)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 개선, 부가가치 제고
- 어항에서의 수산물의 종합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외래어선 이용 증가 등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수산물의 소비판매 촉진 및 경제인구 유입으로 고용 창출
 - 조선, 어구 관련 산업, 숙박 등 이용자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 5년간 사업비 713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228개 창출 기대

1.3 아름다운 어항 조성

1.3.1 추진배경

1) 어항 이용자 확대

- 어항은 수산물 공급의 전초기지로서 어선의 접·이안 및 수산물 양륙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었으나, 최근 해양관광, 레저 등을 위해 어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어항은 단조로운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어구들이 방치되고 있어 방문객의 불쾌감 조성



〈그림 4.62〉 어항의 현황(어구 방치 및 회색조의 단조로운 어항시설)

2) 어항의 가치 창출

- 우리의 바다는 각 해역마다 특색이 있으며 그곳에 자리한 어항은 각각의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음
 - 동해는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으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지니고 있음
 - 서해는 세계적인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 수산자원의 보고
 - 남해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수많은 도서가 산재하고 있음

- 최근 정비되는 항(다기능어항)은 수산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친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추세로 이는 어항에서의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경관사업에 따른 관광객 증가 사례

- 시드니항은 1984년 달링하버 항만청법을 통해 재개발을 진행하여 방치된 부두 정비 및 컨벤션센터와 쇼핑센터, 엔터테인먼트 센터, 크루즈 선착장, 마리나 등이 조성됨
 - 이와 더불어 리모델링 및 경관사업을 통해 해양개발 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
 - 2012년 기준 연간 2,400만 명의 관광객 방문

1.3.2 목적 및 필요성

- 어항이 국민의 관광·레저·여가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주변 자연경관과 어루어진 어항의 어메니티(Amenity) 창출을 통한 어항의 가치 제고
- 단조롭고 정체된 어항에 색과 이야기를 입혀 어항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부각시켜 관광객 증대를 통한 어항 홍보 및 어업외소득 증대

1.3.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어항을 획일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공간에서 탈피하여 주변 자연경관, 어촌의 문화·예술과 융합된 아름다운 테마 공간으로 조성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8년까지 우선적으로 3대 미항 조성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3대 미항조성 프로젝트’ 개요 〉

- 주변의 자연경관, 어촌의 문화·예술이 어항과 융합된 스토리를 가진 한국형 미항 개발
- 인공적인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미항 개발
 - 휴양과 자연을 조망하는 숙박·휴게시설, 수변산책로, 해상교량, 전망시설 등
 - 색과 이야기를 이어주는 포토존, 야간 조명시설, 어항의 이야기를 담은 랜드마크 조형물(조형 등대, 안내판) 등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3대 미항 프로젝트” 추진방안 수립 · 지자체 공모를 통한 대상항 선정 및 개발	
지자체	· “3대 미항 프로젝트” 계획(안)에 따른 개발 모델 제시 ·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과 연계 개발(어촌·어항 연계사업)	
민자	· 수익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	

1.3.4 사업 내용

1) 경관사업

- 방파제 및 어항 시설 외벽 벽화 및 디자인 도입
 - 어항 또는 어촌의 설화 또는 전설 등을 담은 벽화
 - 어항을 캔버스로 제공하여 지역 예술가의 재능기부 적극 활용
- 자연경관을 활용한 수변산책로, 해상교량 및 전망시설 설치
 - 동해의 일출, 서해의 낙조, 남해의 다도해 풍경 등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 제공
- 색과 이야기를 이어주는 포토존, 휴게시설, 야간 조명시설 등



〈그림 4.63〉 경관 및 조명사업 정비사례

- 어항의 이야기를 담은 랜드마크 조형물(어항 안내표지판 등) 설치
 -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어항의 역사, 어항시설, 어항환경, 수산물유통, 관광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태·폭풍 등 재난 시에는 위험인지시설의 역할 수행
 - 향후 어항종합정보시스템(ISP)과 연계한 다양한 정보제공 역할
 - 랜드마크 조형물(어항 안내표지판) 콘텐츠 구성
 - 어항 및 관광정보, LED 전광판, CCTV모니터 및 동영상 광고 및 홍보매체 모니터 삽입



〈그림 4.64〉 어항 유형별 컨셉에 따른 조형물 설치 예시

- 어항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중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어항의 브랜드 또는 테마에 맞는 조형물 설치

2) 관광코스 개발

- “3대 미항” 구성에 따른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주변 해안경관, 어촌체험마을, 관광지 등과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촌 찾아가기 행사”등과의 연계방안 검토

3) 훼손 경관 복원

- 방파제 등 인공 구조물 조성으로 훼손된 생태경관 복원, 경관 저해시설 정비 등 경관 복원 사업 추진

1.3.5 예비 후보지 선정

1) 선정 기준

- ‘어촌 View Point 100선((구)농림수산식품부, 2012년)’에 선정된 장소 중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
 - ※ 예비 대상항은 추후 지자체 공모 시 개발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 선정 및 평가기준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 마련
- 지자체 공모, 실사 등을 통해 3대 미항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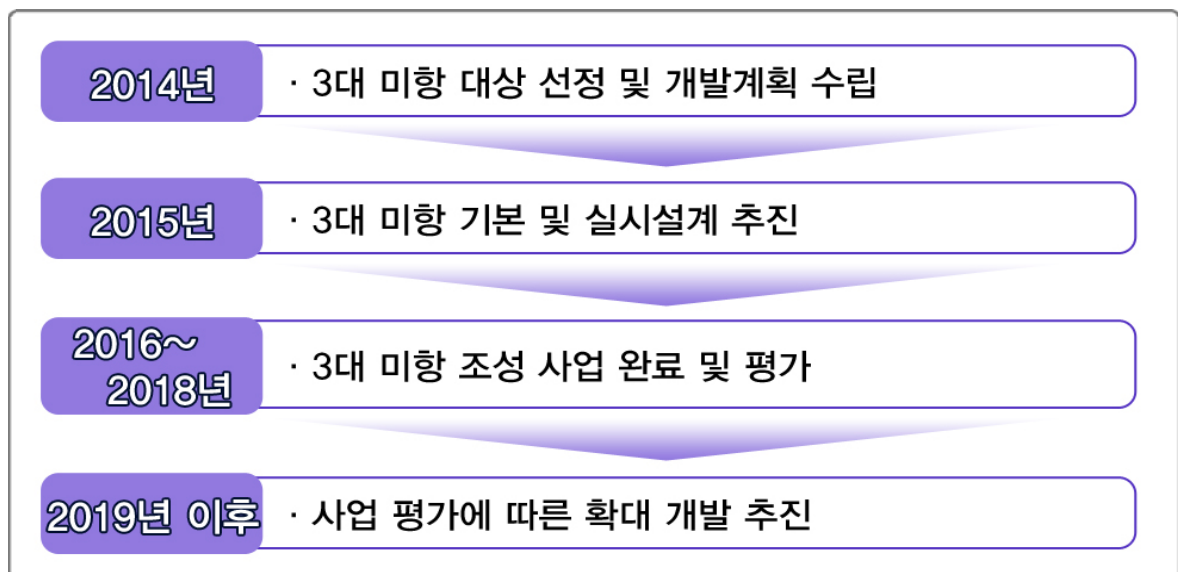
2) 사업대상 후보지

〈표 4.30〉 아름다운 미항 예비 후보지 및 위치도

재미있다 (10개 항)	
국가어항	남해항, 장호항, 안흥(외)항, 대대포항
지방어항	대항항, 무창포항, 장고도항, 법성항, 태하항, 은점항
맛있다 (11개 항)	
국가어항	대진항, 강릉항, 청산도항, 마량항, 대보항, 저동항
지방어항	소돌항, 간월도항, 도리포항, 지족항, 연화항
멋있다 (10개 항)	
국가어항	삼길포항, 물건항, 위미항,
지방어항	광명항, 주전항, 오호항, 방포항, 울포항, 도장포항, 사계항
색이있다 (13개 항)	
국가어항	홍원항, 격포항, 가거도항, 축산항, 감포항, 읍천항, 원전항
지방어항	민락항, 두무진항, 신남항, 늑도항, 대포항, 가파항

1.3.6 추진 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65〉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 아름다운 어항 : 항당 100억 원(국비)

〈표 4.3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아름다운 어항조성	30,700	-	500	9,000	9,000	12,200	170,000
일정	○ 공모 및 선정							
	○ 개발계획 수립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 3대 미항 조성				3	(3)	(완료)	(확대)
	○ 사업평가						1식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1.3.7 기대효과

- 어항의 아름다움, 어메니티의 향상 및 어촌·어항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재미와 흥미를 부여하여 2차 관광수요 증가 기대
- 테마화된 조형물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어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 브랜드로의 활용가치 제고
- 5년간 사업비 307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146개 창출 기대

1.4 '어촌 역(驛)' 어항 육성

1.4.1 추진배경

1) 마리나산업 육성정책 추진

-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마리나 허브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
 -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마리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레저장비 제조업 및 음식·숙박·해양레저 등 관광서비스업 등과의 파급효과 유도

2) 요트 산업 활성화

- 세계 해양레저산업시장의 규모는 2012년 9,383억 달러⁸⁾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핀란드의 해양레저 장비 점유 비중이 87%임
- 레저 보트(yacht & boatbuilding)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4년 124억 유로(한화 약 19조원)에서 2010년 173억 유로(한화 약 25조원)로 40%가량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8) 「항만재개발지구의 복합형 마리나 개발에 관한 연구」, 이형하 외, 2012.

- 국가별 인구당 레저기구 보유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스웨덴이 11명당 1척, 호주가 28명당 1척, 미국이 20명 당 1척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상당수의 레저기구를 보유
- 한국은 4,875명당 1척으로 레저기구 보유비중이 매우 낮으나,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국내 마리나 시설 현황

- 우리나라 마리나 시설은 86년 부산 요트 경기장과 제주 중문 마리나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 현재 18개의 마리나시설이 운영 중이며, 최근 마리나시설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거점 마리나는 수도권(전곡, 김포)에 2개소, 전남(소호)과 부산(수영만) 각 1개소 등 5개소가 구성되어 있으며, 3개소가 개발 중(왕산, 제부, 후포)에 있음
- 전국적으로 총 55개소의 마리나 시설이 추진 중에 있으나 거점형 마리나 만으로는 항간 거리가 멀어 레저 활동 시 연계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1.4.2 목적 및 필요성

- 국내에 조성되고 있는 마리나 시설은 대부분 클럽하우스, 보급시설(유류, 전기, 음식) 등과 연계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계획 또는 개발하고 있는 실정임
- 거점 마리나 개발 시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어항 내 여유수역을 활용하여 거점형 마리나와의 연계 및 휴식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 조성을 통해 어항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어업외소득 증대 필요



〈그림 4.66〉 전국 마리나 현황 및 소형 요트 접안시설 조성 사례

1.4.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요트 이용자의 휴식과 위험상황 발생 시 피항을 위해 거점 마리나항 중간 어항을 ‘어촌 역(驛)’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의 조성·운영을 통한 해양 레저 활성화 및 어항 방문객 유입을 통한 어업외 소득 증대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사업 대상항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소규모 요트 접안시설, 간이 편의시설 등 조성	
지자체	· 운영·관리방안 수립 및 전문 인력 육성	
민간	· 소규모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수익시설 조성 및 운영	

1.4.4 사업 내용

1) 요트 계류시설 조성

- 어항 내 여유 수역을 활용하여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 및 간이 편의시설 조성
 - 20척 내외의 소규모 계류시설 조성을 통해 요트 이용자들이 어항 방문 유인

2) 운영·관리 전문 인력 육성

- 방문한 요트 및 레저보트 등에 대한 간단한 수리·점검 및 마리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배치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1.4.5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 2014년 : 사업 대상항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5년 이후 : 매년 5개소 조성(2018년까지 20개소 조성 완료)

2) 투자계획

- 어촌역 어항 개발 : 항당 20억 원(국비)

〈표 4.3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어촌 역 어항 육성	40,700	500	10,000	10,000	10,000	10,200	-
	○ 기본계획 수립		1식					
일정	○ 어촌 역 어항 육성(20개소)			5	5	5	5	
	○ 사업평가						1식	

1.4.6 기대효과

- 선진국형 해양레저 활동의 유도를 위한 해양관광레저 상품 개발 및 홍보로 레저인구의 저변확대와 어항의 방문객 증가로 어업외소득 증대에 기여
- 기상이변 또는 선박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박으로 요트 이용자의 안전 제고
- 5년간 사업비 407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122개 창출 기대

2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창조적 활용

2.1 유희어항 민간 매각

2.1.1 추진배경

1) 수산여건 악화에 따른 어선세력 감소

- 수산자원 감소, 어선 감척계획 등으로 인해 어선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항의 수산기능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실정임
 - 어선척수 : (2000년) 95,890척 → (2012년) 75,031척, 21.8% 감소
 - 어선톤수 : (2000년) 923,099톤 → (2012년) 610,005톤, 33.9% 감소
 - 어선톤수는 2009년 이후부터 점진적인 증가 추세로 전환
- 주요 어종의 어장 변화로 인해 명태어장 소실, 오징어 및 꽃게 어장 위치 변화 등 어항의 이용여건은 급변

2) 어항 이용성 저하

- 어선세력 감소 등으로 어항의 어선 이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어장 위치변화,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어선어업인들의 어항 이용패턴은 거점어항 위주로 변화
 - 어선 성능 증가,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어가 등으로 육지 거점어항 선호
 - 어선 성능 : (2007년) 167.6마력/척 → (2012년) 186.0마력/척, 10.9% 증가
 - 척당 어선 톤수 : (2007년) 7.8톤/척 → (2012년) 8.1톤/척, 4.9% 증가

- 또한 외래어선의 이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국가어항 지정기준 항목 중 외래어선 이용기준(연간 100척)을 만족하는 항은 30개소(27.5%)항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도서 국가어항(대피항) 37개 항중 외래어선 지정기준(연간 50척 이상)을 충족하는 항은 7개 항에 불과하여 도서 소재 어항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임
- 어항 거점화에 따라 일부 어항은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현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은 45개소로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어선세력이 감소하여 현지 어선이 30척 미만인 국가어항이 10개소로 이들 어항은 수산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
 - 또한 접근성,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수산기능 외 관광·레저, 교통 등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 유향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나, 지정 해제의 애로로 인해 주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어선이용 감소 및 어항 기능 저하에 따라 유향어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어항은 방치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실정임

2.1.2 목적 및 필요성

- 여건변화에 따른 유향어항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수산업 및 관련 산업과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어항의 재창조가 필요함
- 어항개발사업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개발 정책이 필요함

2.1.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여건변화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어항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여 어항을 국민 공간으로 전환하고 이용의 효율화 추진
- 민간투자 추진으로 어항 관광단지 조성 등 어항의 재창조 기회 마련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매각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지역 공청회 추진 · 어항 매각 대상항 선정 및 계획 마련 · 어항지정 및 매각·활용에 관한 어촌·어항법 제정 · 매각 대금의 어항개발 재투자 방안 마련	
지자체	· 지역 여건에 부합한 활용 방안 마련 · 사업 설명회 개최 및 민간 투자자 모집	
민간	· 지역여건에 맞는 활용방안 및 투자 계획 수립 · 어항 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2.1.4 사업 내용

1) 유휴어항 매각방안 마련

- 이용 여건 분석을 통한 유휴어항 선정, 민간매각 및 활용방안 수립
 -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유휴어항에 대한 매각 타당성 및 적합성 여부 검토
- 적극적인 민간 투자자 모집을 위한 유휴어항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홍보 추진
- 유휴어항 매각을 통한 매각대금을 활용 및 어항 재투자 방안 마련

2) 민간매각에 따른 어항 활용

(1) 수산 관련 시설 조성

- 수역 : 해상가두리, 중간육성장, 양식장 등 관련 시설
- 육역 : 종패 및 치어 양식장, 축양장 등 관련 시설

(2) 해양레저시설 조성

- 종합 해양스포츠 레저센터
 - 레저보트, 낚시, 요트,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체험 등 해양레저 종합시설 마련
- 청소년 해양수련원
 - 어촌체험(갯벌, 낚시 등)시설, 해양소년단 교육장 등

(3) 레저·관광 단지조성

- 콘도 등 해양인접 숙소
 - 대규모 콘도미니엄, 숙박 리조트, 해양관광숙박 단지조성사업 등
- 해양관광 쇼핑센터 등 소비형 관광지 조성
 - 아울렛매장,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 조성사업 등
- 워터피아, 인공해수욕장 등 체험형 관광지 조성
 - 물놀이장, 머드체험장, 애견해수욕장, 누드비치 등 연계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2.1.5 예비 후보지 선정

1) 선정기준

- 5개 대상항은 현지어선 수, 총톤수, 연간 외래어선 수, 위판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횟수, 매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매각 대상항은 이용성 저하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 지역 공청회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필요

〈해역별 이용이 저조한 어항(1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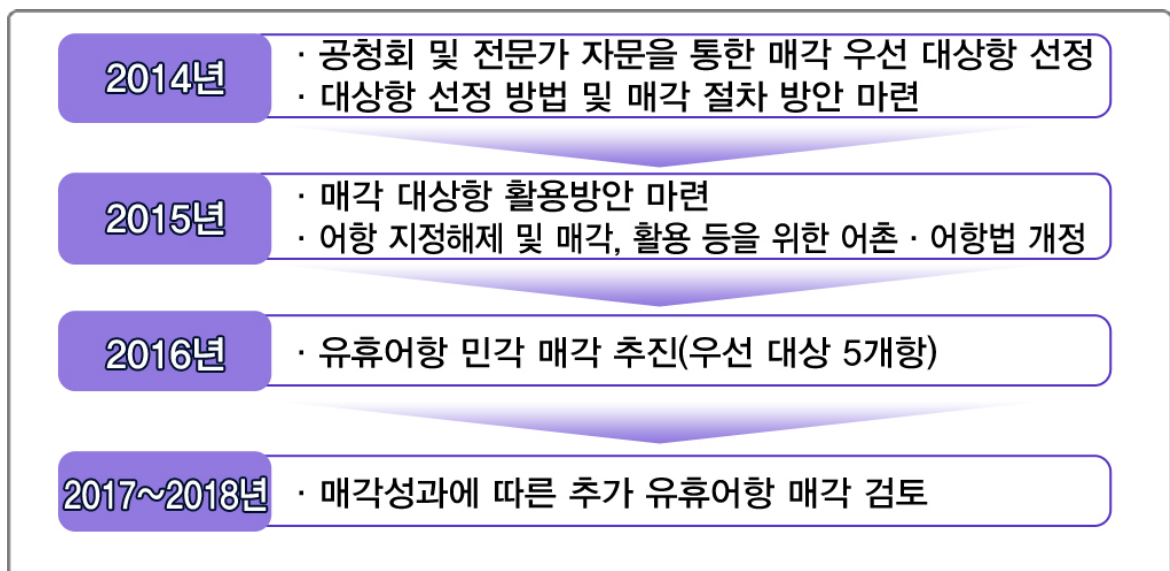
- 동해안(4개소) : 덕산, 궁촌, 사동, 남양
- 서해안(4개소) : 장봉, 덕적도, 울도, 원평
- 남해안(2개소) : 여서, 매물도

2) 사업대상 후보지

-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된 어항을 대상으로 매각 등 활용가능성 검토 및 대상항 선정을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추진
 - 현지 어선수가 30척 미만이며, 어항의 이용률이 낮은 어항을 대상으로 선정

2.1.6 추진 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67〉 연도별 추진계획

2.1.7 기대효과

- 유희어항 민간 매각을 통해 낙후된 어촌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어항의 민간 개발을 통해 이용 편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사회 거점 형성 및 지역 활성화 등 도모

2.2 어항 유희부지 활용

2.2.1 추진배경

1) 어항 유희부지 방치

- 국가어항 구역 내 유희부지 공간이 1,000㎡ 이상 어항은 14개 항으로 어항관리청과 이용단체(수협, 어촌계)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지로 설정
- 도서지역 및 도시지역과 거리가 먼 어항의 유희부지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불편감을 주며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

2) 유희부지 활용방안 미흡

- 수산업의 여건변화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에 따라 일부 어항의 경우 유희부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증가
 - 계마항 등의 일부 어항부지는 개발 당시 준설토 투기장 용도로 조성된 이후 별도의 용도를 찾지 못하고 방치됨
- 어항부지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접근성이 열악하고, 지역 여건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에서 유희부지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 및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항의 이용성 증대 도모가 필요함



〈그림 4.68〉 어항 유희부지 방치 현황

2.2.2 목적 및 필요성

- 수산업 여건변화 및 도서지역 어항 이용기피,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으로 발생하는 어항구역 내 유희부지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어항 이용 활성화 도모

2.2.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이용이 저조한 어항부지는 수산시설(양식장, 가공시설 등), 토요시장,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어촌문화센터 등 재생사업을 통한 이용 활성화 모색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항 선정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친환경에너지 발전 방안 마련 및 사업자 선정 · 토요시장 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추진 · 토요시장 기반시설의 정비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에 부합한 재생사업 신청 · 토요시장 행사주관 및 관리운영 · 토요시장과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 모색 · 어촌문화센터 민자유치 사업자 유입 및 관리운영 	
관 계 기 관	· 토요시장 홍보와 마케팅 (중소기업청, 한국관광공사 등)	

2.2.4 사업 내용

1) 친환경에너지 도입

- 어항 유희부지에 친환경(태양광 등)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을 도입
- 어항시설 및 주변 수산시설에 대한 자체 전력 공급
- 잉여 전력의 판매를 통한 어항 관리재원 마련



〈그림 4.69〉 친환경에너지 도입

2) 토요시장(Fisherman's wharf) 유치

- 다목적 광장의 조성을 통해 토요장터를 유치하며, 지역축제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지역축제와의 연계 사업 추진)



〈그림 4.70〉 토요시장

3) 어촌문화센터 건립

- 어촌지역주민 및 방문 도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서관, 사랑방, 수영장, 해수탕 등 시설 포함)



〈그림 4.71〉 어촌문화센터

〈 일본 고도모어항 유희부지 활용 사례 〉



* 〈사례〉 당초 수산기능이 활발한 어항이었으나 어항 기능 쇠퇴 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구역 일부를 해양레저 용도로 전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

* 〈주요시설〉 인공해수욕장, 인공호수, 이벤트광장, 친수호안, 공원 등 1만 명 이상 방문(7~8월)

2.2.5 예비 후보지 선정

1) 선정기준

- 유보지가 설정되어 있는 14개 항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선정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 중 활성 잠재력이 높은 시범사업 4개 항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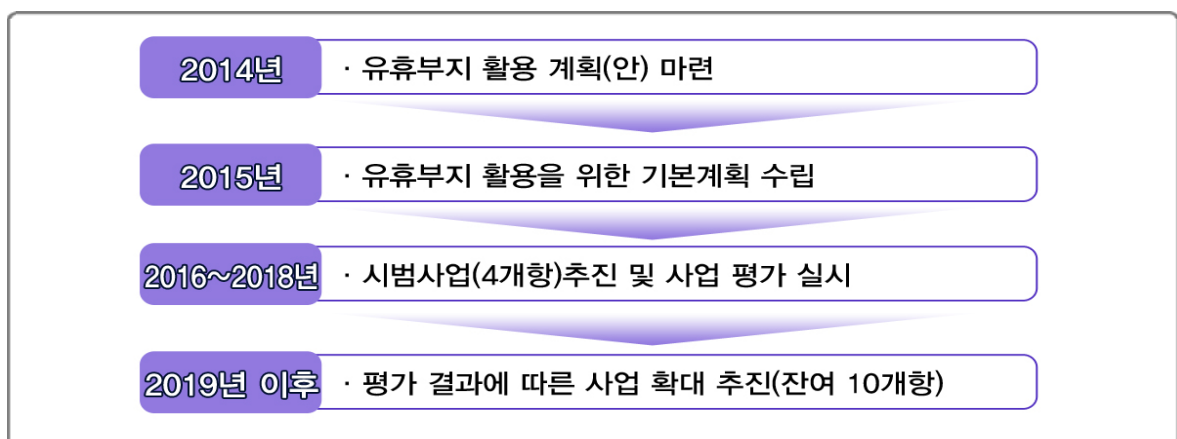
2) 사업대상 후보지

〈표 4.33〉 유휴부지 활용 예비 후보지 및 위치도

지역	항수	항명	유보지 면적(m²)
인천	1	선진포항	13,545
충남	1	안흥(외)항	1,047
전남	10	전장포항	9,454
		원평항	59,804
		회진항	39,500
		계마항	36,881
		안도항	7,532
		서거차항	22,783
		안마항	10,914
		여서항	3,000
		득암항	10,388
		연도항	27,620
		말도항	11,078
전북	2	위도항	4,930
계	14		228,541

2.2.6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72〉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 어항 유희부지 활용 : 해당 50억 원(국비)

〈표 4.3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어항유희부지 활용	20,700	-	500	2,500	10,000	7,700	50,000
일정	○ 기본계획			1식				
	○ 시범사업 조성(4개소)				1	3(1)	(완료)	
	○ 사업 평가 및 확대						1식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2.2.7 기대효과

- 어항의 유희부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어항 이용성을 제고하고 어촌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어항 부지를 주민 교류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도시·어촌 간 문화 불균형 해소에 기여
- 5년간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91개 창출 기대

3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3.1 어항 이용·관리 대책 수립

3.1.1 추진배경

1) 어항 관리 인원 및 자원 부족

- 어항관리청은 지자체가 유지·관리·운영토록 규정(어촌·어항법 제35조)
 - 어항관리청의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어항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실정으로 어항기능 활성화에 저해
 - 어항관리청 담당인원 1~2명이 20개 이상 어항관리 부담(국가어항 109개, 지방어항 285개, 어촌정주어항 595개, 소규모항포구 1,309개)
 - 어항 부지 내 폐어구 야적, 오물 투기, 무단점용 방치(노점, 난장 등), 노후 시설 방치 등으로 어항의 기능 저하



〈그림 4.73〉 국가어항 부지이용 실태

2) 어항부지 무단 점유 심각

- 어항부지에 어구보관용 임시천막, 어구 등을 무단으로 야적·방치한 사례가 많음
 - 국가어항 109개 항을 조사한 결과 임시천막(어구야적) 893건, 임시천막(영업행위) 107건, 컨테이너 무단 점유 306건, 임시상가(난전) 101건 등 무단 점유가 심각함

3) 점·사용료 징수 저조

- 점·사용허가 대상 어항부지 중 대부분(61%)을 수협·어촌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항관리 경비 충당을 위한 점·사용료 수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
 - 109개 국가어항 점사용 건수 997건 중 200건 징수 : 275백만 원
- 수협, 어촌계 등 이용자 단체의 어항유지·관리 보전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어항의 유지·관리는 국가 및 지자체가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

4) 민자유치를 통한 이용 활성화 여건 한계

- 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
 - 공공단체 : 수산업 협동조합, 어촌계, 어촌어항협회, 수산업경영인단체 등 (어촌·어항법 제23조제6항)
- 공공기능 시설용 부지 외 복지·문화·레저 등 상업·관광시설 이용부지까지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토록 규정
 - 대규모 상업자본 유치 및 개발능력 등 부족으로 어항의 관광활성화에 한계, 경합 시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곤란

3.1.2 목적 및 필요성

- 어항 관리재원 확보 및 인력 확충으로 선진화된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경제적 수요 대응 및 이에 따른 어항 부가가치 창출

3.1.3 선진화 방안

1) 어항 운영·관리협의체 거버넌스 구축

- 어항 개발, 이용, 관리주체간의 협의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국가, 지자체, 어촌계, 수협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권역 내(사도 단위 등) 어항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 운영·관리 재원 조달
 - 어항 점·사용료 징수 확대 및 어항시설 이용료 징수 등을 통한 어항 운영관리 재원 확보
 - 입지여건에 따라 수익형 어항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 전문 운영·관리 기관 도입
 - 대상 권역 내 어항의 운영·관리, 홍보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 기관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 추진

2)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 징수

- 어항시설을 이용하여 수익하는 단체의 어항시설 훼손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점·사용료 면제대상 시설을 비영리 공익사업 시설로 한정
 - 수산물 의무상장제가 폐지(1997년)되어 수익시설로 운영되는 수산물위판장 등은 점·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어항부지 이용구조 개선
- 어항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익을 어항 관리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어선의 입출항에 따른 이용료와 정박료 징수
 - 수입금을 어항관리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어항의 열악한 체계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3) 수익형 어항운영 시범사업 추진

- 어항구역 내 주차장, 유료낚시터·마리나 등 레저타운 운영 등 어항 내 상업·수익사업 활성화 추진, 성공모델 개발 후 단계적 확대 전파
 -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투자유치)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 어항관리청의 요청 또는 관리·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어항운영 수익모델 개발이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3.1.3 추진계획

- 2014년 : 어항관리, 인력·재원 확충 방안 마련
- 2015년 : 어항 유지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

3.1.4 기대효과

- 어항부지 이용구조 개선을 통한 관리경비 확보를 통한 어항의 이용질서 확립 및 관리경비 재원구조 개편을 통해 어항 운영·관리 체계 선진화

3.2 수리현상 모니터링 추진

3.2.1 추진배경

1) 어항 내 매몰 현상 발생으로 어선의 입출항 안전 저해

- 국가어항의 퇴적량은 1개 항당 약 5천m³/년으로 매년 심각하게 매몰현상이 진행되어 이용불편 및 어선전복 등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어항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도 어항 내 유지준설을 최우선 요청하고 있음
-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는 105개 국가어항 중 항 내 매몰현상이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13개 항을 선정하여 ‘어항 정밀조사(매몰조사) 용역’을 시행
 - ※ 연간 113,499m³(연간 평균 퇴적고는 5~29cm)의 퇴적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동해 45cm, 서해 16cm, 남해 34cm)
- 안흥외항 위판장 부근에 물양장 전면 매몰로 어선선저가 바닥에 앉히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거진항 항로 매몰로 해경·해군함정, 어선 등 입출항 시 안전운항에 장애를 초래

2) 어항 내 매몰발생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 미흡

- 동해안 일부 어항에서는 인근 해안선 침식 변형 등에 따라 항입구로부터 유입되는 토사뿐만 아니라, 방파제 기부측 제체를 투과하는 토사가 복합적으로 항 내 매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과학적 원인 규명이 여전히 추진되지 못한 상태임
- 제체 토사 통과로 인한 시설물 하부 공동발생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
- 또한, 항 내 및 인근 해안에 수심탐사 등을 통하여 항 내 유지준설시기 결정 및 항 내 긴급 유지준설을 위한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 제고 필요



〈그림 4.74〉 어항 매몰 및 어선 입출항 안전저해 현황

3.2.2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어항 항 내 및 인근 해역의 침·퇴적 발생에 따른 어항기능 및 이용성 저하 등의 항별 수리특성에 대한 과학적 규명 및 장기적인 저감 대책 수립
- 원활한 어항 및 연안이용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장기적인 침·퇴적 저감대책 수립 및 어선의 입·출항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저감

3.2.3 추진방향

- 수리특성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대상해역의 장기간 관측을 통한 해양수리특성 자료축적 및 분석을 통한 수리특성 변화 요인 검토
- 침·퇴적 원인 규명을 통한 친환경적 침식방지 대책 마련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어항 기능 제고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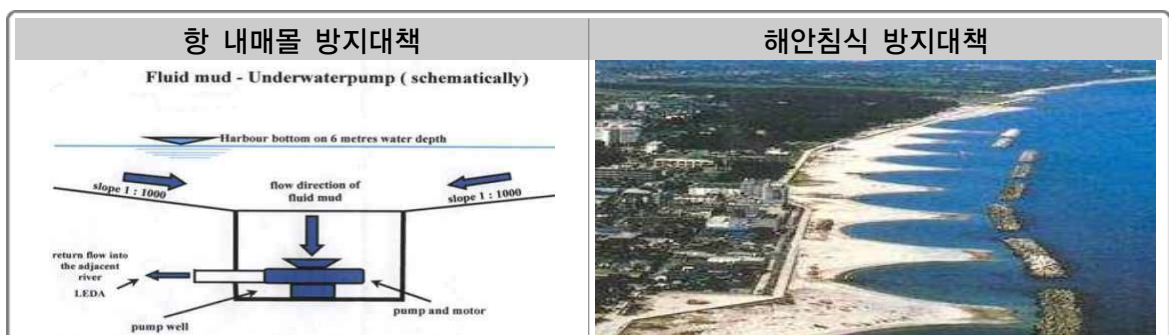
3.2.4 사업 내용

1) 해양수리현상 모니터링

- 전국 109개 항 대상으로 대상항별 침·퇴적 특성 등 해양수리현상에 따른 유형 분류 및 개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국가어항 모니터링 로드맵 구축

2) 해역별 침·퇴적 저감대책 수립

- 항 내 매몰원인 규명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 등을 동원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하여 침·퇴적 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을 수립
 - 최신 과학적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어항 중 우심어항을 대상으로 토사매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관측 및 수치해석 등을 구축하고 D/B화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유지준설 사업에 물량 및 소요사업비 등 자료 제공



〈그림 4.75〉 침·퇴적 저감대책

3.2.5 대상항 선정

- 대상항은 현재 추진중인 '국가어항 수리현상 조사용역(해양수산부, 2013)'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수리현상 모니터링 대상항은 침·퇴적 현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 관리어항, 중점 관리어항, 일반 관리어항으로 분류하여 모니터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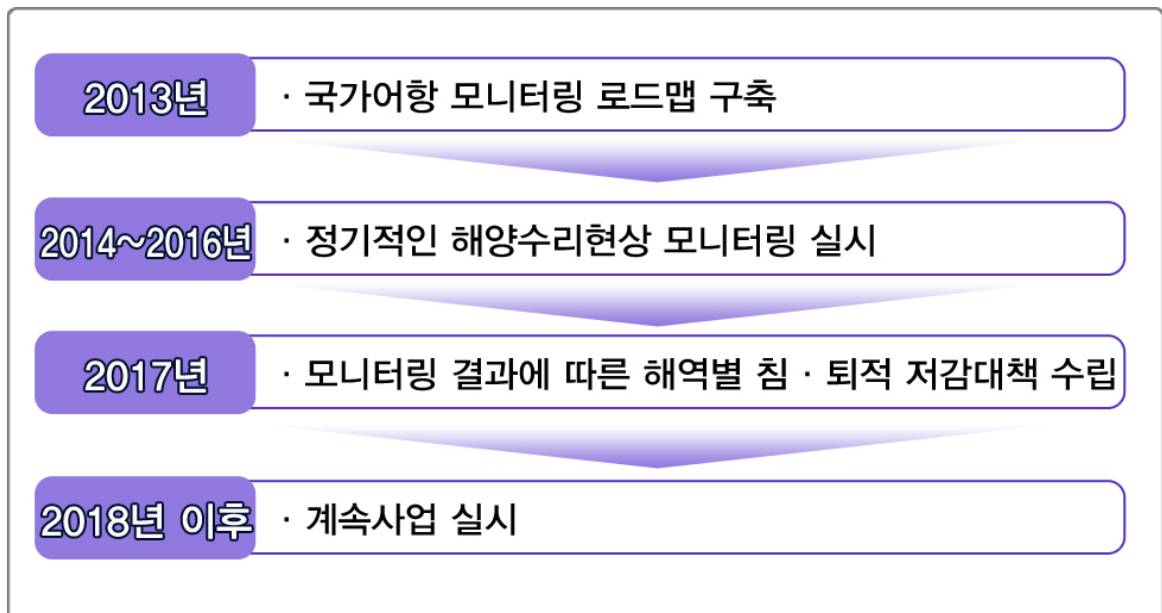
〈표 4.35〉 수리현상 모니터링 대상항

구 분	인천어항 사무소	서해어업 관리단	동해어업 관리단	강릉어항 사무소	합계
집중 관리 어항	어유정, 구시포	어란진, 회진	다대포	오산, 구산, 남애 수산, 거진	10개 항
중점 관리 어항	동해 6개 항, 서해 14개 항				20개 항
일반 관리 어항	동해 5개 항, 서해 15개 항				20개 항

※ 자료 : 국가어항 수리현상 조사용역(해양수산부, 2013) 검토 자료

3.2.6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76〉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 국가어항 수리현상 모니터링 조사용역 : 년 15억 원(국비)

〈표 4.3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수리현상모니터링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0
일정	○ 수리현상모니터링		10	(10)	(10)	10	(10)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3.2.7 기대효과

- 우심어항에 대하여 토사매물 현황을 D/B화하고 정부차원의 유지준설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와 동시에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어항 이용자 측면에서는 어업인 수산업 활동 손실률(매물로 인한 어선고장 등)을 고려하면 연간 20억 원 이상 절감 효과 기대
- 5년간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5개 창출 기대

3.3 어항정보시스템(FIS) 구축

3.3.1 추진배경

1) 개발과 관리의 이원화로 통합적인 관리 필요

- 정부 3.0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개발·관리·이용 주체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정보 제공에 정부차원에서 전략적 추진
- 국가어항,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는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가 서로 상의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가 이원화 되어있으며 전반적인 현황자료는 분산되어 집약적인 체계 관리 미흡
 - 지자체간 어항관리 담당자의 인력부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어항부지의 점·사용료 징수를 통한 어항의 유지관리비 집행 저조로 어항이용 효율화 저감 효과 초래
 - 어항구조물 등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적 관리의 부족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강 적정시기 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집약화 부족으로 예산 낭비 발생

2) 어촌·어항 관련 정보화 시스템 미비

- 항만의 경우 국가·지자체·항만공사 등 관리주체가 다양화로 인해 통합 건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건설사업, 실적관리, 인허가 등 정보화로 관계자의 업무효율 제고
 - 1998년 항만건설CALS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음

- 어항분야의 건설·유지관리 및 계약·실적, 인허가 등 정부의 관리업무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통합 운영전산망 미비로 인한 정보화 미비
 - 전국 법정어항이 987개나 있음에도 인·허가, 건설, 재해·안전·환경관리를 위한 통합 전산망 부재로 행정비용 및 국민불편 심화
 - 어항정보 네트워크망 부재로 기후·환경변화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개발 및 실시간 안전·환경 상태에 대한 적기 대응태세 지원 한계

3) 정부 3.0 정책 추진

- 어항 관련 정보의 개방·공유·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정보망 부재로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부족하고 어항정책 개발에 한계
- 어항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정보를 개방·공유·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필요
 - 어항시설의 건설 및 안전관리, 어항을 이용하는 어민과 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어항 관련 정보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미흡

- 어항 관련 자료의 분산화로 어항개발정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
 -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정책계획의 수립에 있어 지자체 보관 및 관리 자료가 각기 개별적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화된 자료의 관리 미흡
 - 어항에 관련한 연구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상호간 공유를 통하여 중복적인 연구 테마를 피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어항 연구 추진 필요

3.3.2 목적 및 필요성

- 어항 통합 운영전산망 및 정보시스템 부재로 어항의 개발·관리·운영 효율성 저하 및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한계극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필요
- 항종별 관리권자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 정보 시스템구축을 통한 자료의 신뢰성 향상 도모

3.3.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선진화된 어항 운영·관리를 위한 어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어항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정책적 수요 대응

2) 추진체계

- 국가에서 직접 어촌·어항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공을 통해 어항종합정보시스템(FIS) 구축, 운영·관리 체계 구축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분산된 어항 관련 정보의 표준화 및 취합관리 · 어항정보의 효율적 기반이 성립되도록 어항종합정보시스템(FIS)의 구축 및 운영·관리 모니터링	
지자체	· 어항 운영·관리에 따른 자료 입력 체계 수립	
전문기관	· 어항종합정보시스템(FIS)의 위탁 관·운영	

3.3.4 사업 내용

1) 지침 마련

- 어촌·어항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공을 할 수 있는 어항종합정보시스템(FIS)을 구축하여 운영·관리 지침 마련

2) 개발·이용·관리주체간의 거버넌스 구축

-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 등 정보 관리 및 이용단체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체계적인 자료 입력 체계 구축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3) 어항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1) 어항운영관리시스템 구축

- 어항분야의 모든 DATA, 문서, 도면, 이미지 등의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여 제공
 - 어항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관련 학술연구의 지식정보 자원을 지원

(2) 어항안전·재해예방시스템 구축

-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을 통합 관리하는 어항안전관리 체계 구현
- 어항시설 유지관리 내역을 정보화를 추진하여 어항인프라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

(3) 어항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어항별, 지역별, 연도별, 폐기물 성상별, 선박별 어항정화현황의 통합 DB관리 및 제공
- Clean 어항환경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4) 어항건설관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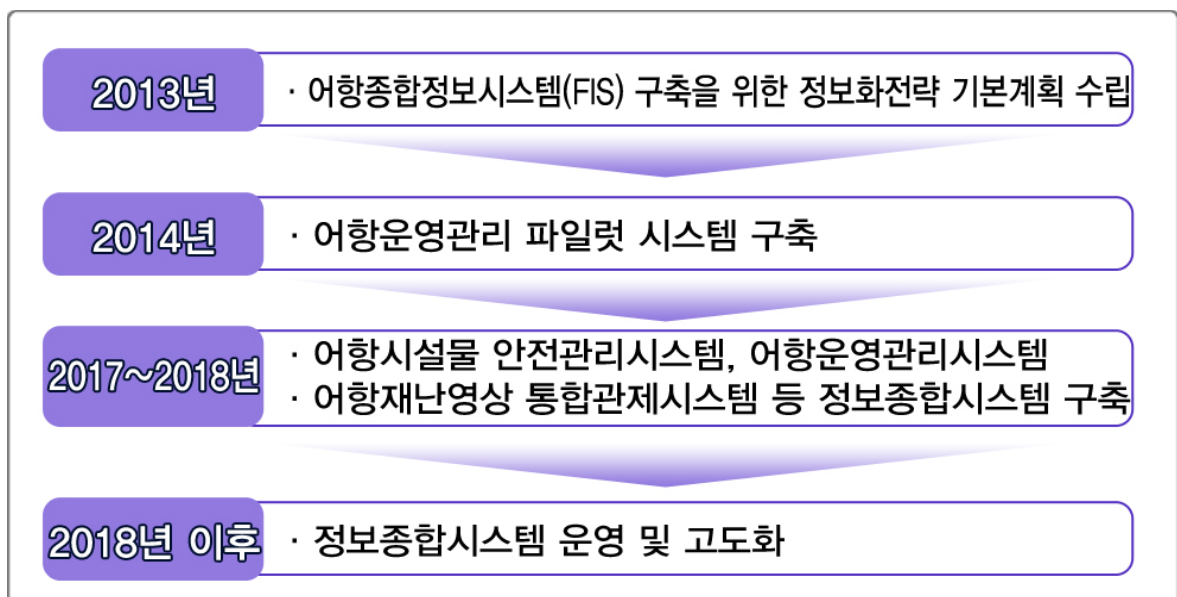
- 어항건설사업 전 과정(설계·시공·감리 등)의 정보화를 통해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IT기반의 전자적 처리환경을 도입하여 어항의 체계적 사업관리
- 매물현황 관리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준설훈 확보 방안 강구



〈그림 4.77〉 어항종합 정보시스템 개념도

3.3.5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78〉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표 4.37〉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어항종합정보시스템	9,100	400	650	5,850	1,200	1,000	10,000
일정	○ 시스템 구축		1식	1식	1식	1식		
	○ 운영 및 유지보수						(계속)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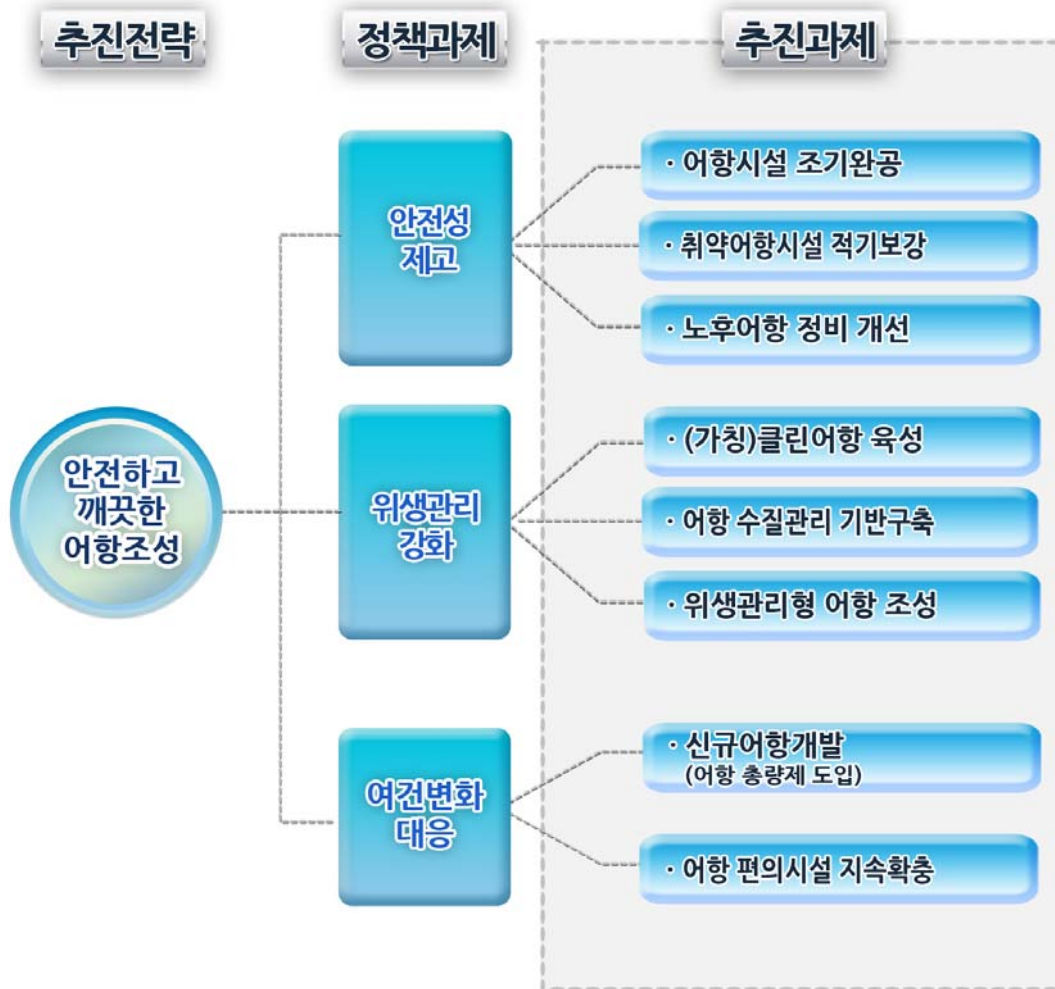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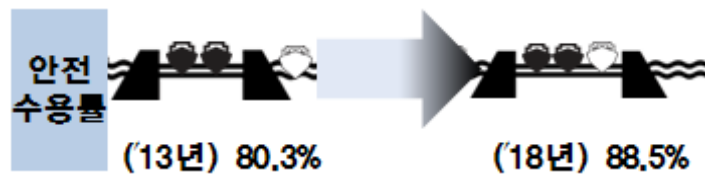
3.3.6 기대효과

- 어항 관련 각종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해 어항 관련 업무 효율화
 - 어항 개발 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적 정책개발 도모
 - 웹 기반 민원 처리로 대국민 민원 서비스 편익 증진
- 첨단 재난재해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
 - 재난 위험어항의 상시 감시체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조치
- 웹과 모바일 이용한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이미지 홍보 및 정보 제공

제4절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추진 목표〉

- ◆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찾고 싶은 깨끗한 어항을 만들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과 어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어항 구축



1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1 개발 중인 어항의 조기 완공

1.1.1 추진배경

1) 어항 완공현황

- 국가어항은 2012년까지 3조 1,142억 원을 투자하여 109개 항중 99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2013년 전남 회진항이 완공 예정임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2조 1,959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지방어항 171개 항, 어촌정주어항 148개 항을 완공하여 국가어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공률이 매우 저조
 - 지방어항 완공률 : 60%, 어촌정주어항 완공률 : 25%
 - 특히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항포구는 투자율에 비하여 완공률이 매우 저조하며, 이는 체계적인 개발보다는 지역민의 요구에 따른 분산투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 어선의 안전정박 필요

- 지속적인 투자와 어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전국어선 안전수용률은 80.3% 수준으로 수용대상어선 70,335척 중 56,465척만이 수용 가능함
 - 동해안은 94.6%로 안전수용률이 높으나, 서해안 83.7%, 남해안 75.9%로 지역별 편차가 심함
 - 전국적으로 13,870척의 어선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이 중 전라남도 지역의 추가 수용대상어선이 7,682척으로 55.4%를 차지



〈그림 4.79〉 어항의 역할(어선 안전수용, 어업활동 지원, 어촌의 중심지)

1.1.2 목적 및 필요성

-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안전 정박을 위해 현재 개발중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통한 어항 인프라 조기 확충
- 평상시 어선의 휴게 등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지역 정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어촌 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기본시설 조성

1.1.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공사 중인 어항의 조기완공으로 수산업 지원기능 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공사 중인 국가어항 3개소 조기완공 · 마을공동어항 지정을 위한 포괄보조사업 등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 공사 중인 지방어항 40개소 및 어촌정주어항 50개소 조기완공 · 마을공동어항 개발사업 추진	

1.1.4 사업 내용

1) 현재 개발 중인 어항시설의 조기완공

- 국가어항 : 현재 개발 중인 9개 항(2013년 회진항 완공예정)에 대하여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어선 안전수용률 제고
- 지방어항 : 현재 개발 중인 40개 항에 대하여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어선 안전수용률 제고
-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지속적 투자로 어촌의 정주생활 기반조성 및 어업활동 지원
 - 어촌정주어항 : 50개 항 완공
 - 마을공동어항 : 마을공동어항 지정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등 제도개선 추진(2015년)

1.1.5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 국가어항은 미완공 9개 항에 집중적인 완공위주 사업추진
 - 구시포항, 도장항, 대포근포항(이상 3개 항) 완공추진
 - 2008년 신규 지정된 6개 항(장고, 이목, 천성, 궁평, 노량, 남포) 집중 투자

〈표 4.38〉 국가어항 어항기본사업 대상지

년도	항수	대 상 항
'14년	9	대포근포항, (도장항, 구시포항, 장고항, 이목항, 천성항, 궁평항, 노량항, 남포항)
'15년	8	도장항, 구시포항, (장고항, 이목항, 천성항, 궁평항, 노량항, 남포항)
'16 ~ '18년	(6)	(장고항, 이목항, 천성항, 궁평항, 노량항, 남포항)

※ ()는 계속 투자항임

- 지방어항은 국가어항 대비 저조한 완공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40개 항을 완공하여, 완공률 74%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표 4.39〉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대상지

년도	항수	대 상 항
'14년	5	궁항항, 보남항, 이가리항, 부경항, 대보항
'15년	15	신암항, 후포항, 광명항, 창후항, 난지도항, 사리항, 세포항, 덕촌항, 태하항, 병곡항, 창포항, 유포항, 술상항, 강정항, 화북항
'16년	11	두무진항, 만대항, 다사항, 구도항, 방출도항, 손죽항, 오천항, 톱머리항, 향도항, 귀덕1리항, 고산항
'17년	5	사구미항, 지족항, 광천항, 수치항, 신천항
'18년	4	개야도항, 시락항, 한내항, 태흥2리항

- 어촌정주어항은 투자율 대비 저조한 완공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항 305개 항 중 50개 항을 완공하여, 완공률 33%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완공항수 198개 항)

2) 투자계획

〈표 4.40〉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개발중인 어항의 조기 완공	901,418	159,230	162,088	175,500	200,000	204,600	1,871,805
	○ 국가어항	158,218	25,330	23,888	23,000	43,000	43,000	778,405
	○ 지방관리어항	743,200	133,900	138,200	152,500	157,000	161,600	1,093,400
일정	○ 국가어항		1개소	2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계속)
	○ 지방어항		5개소	15개소	11개소	5개소	4개소	(계속)
	○ 어촌정주어항		10개소	15개소	10개소	9개소	6개소	(계속)
	○ 마을공동어항		-	-	10개소	10개소	10개소	(계속)

※ 사업량은 완공항 수 기준이며, 국가어항 사업량의 ()는 계속 투자항 수임

※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합계임(국비 80%, 지방비 20%)

1.1.6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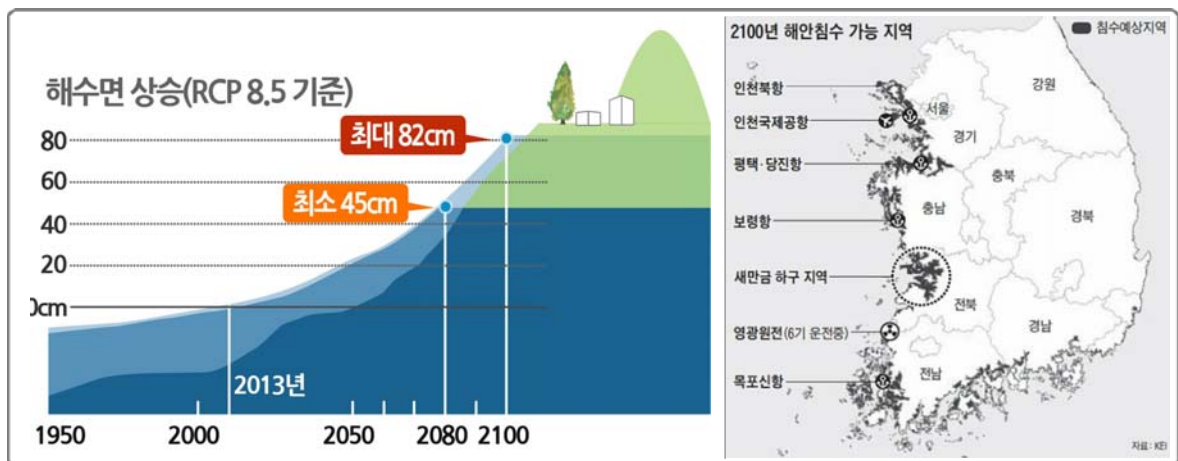
- 어항 인프라확보를 통한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어업활동 지원 기반의 구축 마련
- 5년간 사업비 8,729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326개 창출 기대

1.2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강

1.2.1 추진배경

1) 기후변화의 이변

-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증가 등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실정
 -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2100년 지구 평균기온 0.3~4.8℃, 해수면 최대 82cm 추가상승 예상
 - 우리나라 서해 및 남해 일부지역에서도 침수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그림 4.80〉 해수면 상승 변화 예상치

2) 어항 설계파고 상향

-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재산정한 ‘전 해역 심해설계파 추정보고서(해양수산부, 200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의 설계파가 증가 되고(최대 약 40%) 파향이 다변화됨
 - 동해안 남해안의 S, SE, E 파향의 내습파랑 증가로 기존 주파향(NE, SSE)의 다변화
- 어항의 설계파고는 2005년 대비 동해안은 평균 1.1m, 서남해안 평균 1.3m 상승
- ‘국가어항 외곽시설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평가(구)농림수산식품부, 2013년’결과, 검토 대상 82개 항 중 52개 항의 설계파고 증가 및 파향 변화
 - 설계파고 증가 : 가거도항, 청산도항 등 9개 항(2.0m 이상 증가)
지세포항, 말도항 등 13개 항(1.0m 이상 증가)
 - 설계파향 변화 : 43개 항 (과거 주파향 대비 45°이상 변화)
- ※ 어항에 내습하는 주파향의 변화로 정온 확보 불가

3) 태풍에 의한 어항시설 피해 증가

- 2000년대 이후 발생한 태풍의 수는 줄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및 강도의 증가로 재산피해가 증가
 - 최근 10년간 연평균 태풍 발생 수는 22.4개이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수는 연평균 2.8개임
-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태풍 중 1985년 태풍‘브랜다’,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매미’, 2011년 태풍‘무이파’ 내습 시에 가장 큰 피해 발생
- 최근 3년간 태풍으로 인한 국가어항의 피해 현황은 지난 2010년 7호 태풍‘곤파스’로 인해 가거도항 피해 발생, 2011년 9호 태풍‘무이파’로 인한 가거도항 및 어청도항 피해 발생
- 2012년에는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인한 어청도항, 연도항, 말도항, 외연도항, 가거도항 등의 방파제 파손 및 피복제이탈 피해 발생

〈표 4.41〉 태풍에 의한 어선 및 어항시설·양식장 피해 현황

구 분	어선 피해		어항시설 피해		양식장 피해	
	물량(척)	피해액(천 원)	물량(개소)	피해액(천 원)	물량(개소)	피해액(천 원)
’08년	1	55,197	-	-	1	12,523
’09년	-	-	-	-	-	-
’10년	82	2,643,931	51	7,018,206	601	9,165,352
’11년	196	1,439,925	206	32,407,779	1,069	8,354,780
’12년	480	3,583,747	651	82,629,761	4,956	61,286,566

※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 「재해연보, 2012년」



〈그림 4.81〉 태풍 무이파 내습현황(전남 가거도항)

- 국가재난정보센터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어항의 재해피해액은 82,822백만 원이며, 이 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82,630백만 원, 강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151백만 원, 호우로 인한 피해는 42백만 원으로 태풍으로 인한 어항시설 피해액이 99.8%를 차지함

〈표 4.42〉 2012년 자연재해로 인한 어항시설 피해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합 계	태 풍	호 우	강 풍
어항시설	개소	657	651	2	4
	피해액	82,822,256	82,629,761	41,539	150,956

※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 「재해연보, 2012년」

1.2.2 목적 및 필요성

-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통해 어항시설의 피해 예방 및 어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

1.2.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59개 대상항 중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포함한 15개 항 우선 보수보강 시행으로 선제적 재난 대비

2) 추진 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설계파고 상황에 따른 56개 항 기존 외곽시설 마루높이 증고 및 보수보강 · 재해에 취약한 59개 어항 중 15개 항 긴급 보수·보강 · 설계파향 변화에 따른 27개 항 항 내 정온도 개선	
지자체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의 설계파고 상황에 따른 어항시설 안전성 검토 및 이에 따른 보수·보강 추진	

1.2.4 사업내용

1) 외곽시설 보강

- 109개 국가어항 중 ‘전 해역 심해파 추산보고서Ⅱ(한국해양연구원, 2005년)’의 재원을 적용하여 82개 항을 대상어항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하였으며, 항 내 정온도 평가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35개 항을 대상으로 검토 수행
- 국가어항 82개 대상항 중 어유정항, 격포항, 강릉항 등 26개 항을 제외한 56개 항은 외곽시설 (방파제 등) 보수·보강 계획 수립

2) 항 내 정온도 개선

- 설계파향 변화에 의한 항 내 정온 확보가 어려운 항은 27개 항으로 이중 수품항, 대보항, 궁촌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항은 정온도 개선과 외곽시설 보수·보강을 동시에 병행
- 우선순위 평가 대상항은 공사 및 용역 중인 항과 피해이력 등에 의해 보수·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어항, 신규시설이 필요한 항 내정온도 개선 등 각 항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 그룹으로 구분,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 보강사업 추진

〈표 4.43〉 우선순위 평가 대상그룹 선정기준

구 분	항수	선정방식
1그룹	7개 항	◦ 시공 중 또는 보수보강예산이 반영된 어항
2그룹	10개 항	◦ 관련 용역이 시행 중이거나 시급히 필요한 어항
3그룹	12개 항	◦ 태풍 피해이력 등 시설물이 취약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어항
4그룹	27개 항	◦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어항
5그룹	3개 항	◦ 항 내 정온도가 불량하여 신규시설이 필요한 어항

〈표 4.44〉 보수보강 대상항 및 위치도

구 분	항 명
1그룹 (7개소)	죽변항, 가거도항, 도장항, 호두항, 장호항, 축산항, 사천진항
2그룹 (10개소)	외포항, 어청도항, 방어진항, 덕산항, 청산도항, 연도항(전북), 모항항, 금진항, 사동항(경북), 대포항
3그룹 (12개소)	선진포항, 외연도항, 말도항, 위도항, 여서항, 시산항, 안도항, 매물도항, 양포항, 수산항, 도두항, 모슬포(남)항
4그룹 (27개소)	울도항, 덕적도항, 안흥항, 흥원항, 안마항, 우이도항, 보옥항, 서거차항, 사동항(전남), 마량항, 풍남항, 여호항, 초도항, 연도항(전남), 옥지항, 위미항, 맥전포항, 능양항, 원전항, 능포항, 지세포항, 정자항, 대진항(강원), 오산항, 구산항, 구계항, 김녕항
5그룹 (3개소)	수품항, 대보항, 궁촌항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항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평가, 2012년」

※ 항 내 정온도 개선 대상항 : 울도항, 선진포항, 안흥항, 덕적도항, 위도항, 외연도항, 안마항, 우이도항, 보옥항, 서거차항, 사동항(전남), 여호항, 시산항, 옥지항, 매물도항, 원전항, 양포항, 위미항, 대포항, 금진항, 덕산항, 축산항, 청산도항, 외포항

※ ____항은 2018년까지 완료 예정항임(15개 항)

1.2.5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 2015년 : 4개 항 보강완료
- 2016년 : 4개 항 보강완료
- 2017년 : 2개 항 보강완료
- 2018년 : 5개 항 보강완료
- 2019년 이후 : 잔여 44개 항 대한 보강사업 완료

2) 투자계획

〈표 4.4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취락 어항시설 적기 보강	355,823	22,935	69,500	90,400	75,800	97,188	483,505
일정	○ 취락 어항시설 적기 보강		(3)	4(10)	4(11)	2(9)	5(6)	(계속)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1.2.6 기대효과

- 기상이변으로 인한 어항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항내 정온도 개선으로 어선안전 및 어항 이용 효율성 증대
- 노후어항 정비개선 사업과 함께 5년간 사업비 6,924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477개 창출 기대

1.3 노후 어항 정비 개선

1.3.1 추진배경

1) 국가어항 정비사업 현황

-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어항기능 제고를 위해 기존 완공항 중 42개 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표 4.46〉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현황

시·도	개소	정비사업 중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된 국가어항
계	42	18개 항	24개 항
부산	-	-	-
인천	4	선진포항	장봉항, 덕적도항, 울도항
울산	-	-	-
강원	8	거진항, 임원항, 장호항	궁촌항, 덕산항, 금진항, 아야진항, 공현진항
충남	2	안흥항	모항항
전북	3	-	어청도항, 연도항, 말도항
전남	12	계마항, 녹동항, 서망항, 청산도항, 가거도항	전장포항, 어란진항, 사동항, 풍남항, 안도항, 돌산항, 원평항
경북	6	축산항, 죽변항, 감포항, 저동항	대보항, 읍천항
경남	6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미조항	육지항, 물건항, 외포항
제주	1	신양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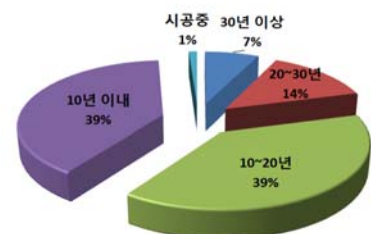
※ 미조항, 저동항, 감포항은 일반정비사업 중에 설계파 상항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

2) 국가어항 기본시설 노후화

- 2005년 이후 어항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단계적인 국가어항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정비사업의 중장기 소요(3.5~5년)로 노후된 시설물 방치(20년 이상 20.7%) 및 유지보수 적기 미 시행으로 인한 노후화 진전으로 시설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 증대
-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9개 국가어항 시설의 안전등급은 평균 6.5년마다 한 등급 하향
 - 전체 국가어항의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보수(기본시설+안전시설)비는 약 1,195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 국가어항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적정 성능 유지를 위한 노후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는 매년 약 1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표 4.47〉 국가어항 기본시설 노후화 현황

경과 년도	30년 이상	20~30 년	10~20 년	10년 이내	시공 중	합계
시설물 수	53	105	298	301	8	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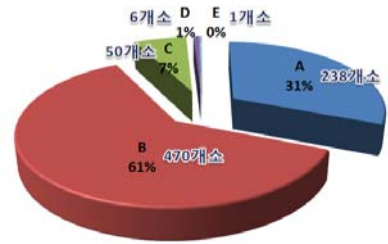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2012년」

〈표 4.48〉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등급 현황

시설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합계
시설물 수	238	470	50	6	1	765

C등급 이하 시설 : 24개소('08년) ⇨ 57개소('12년)



※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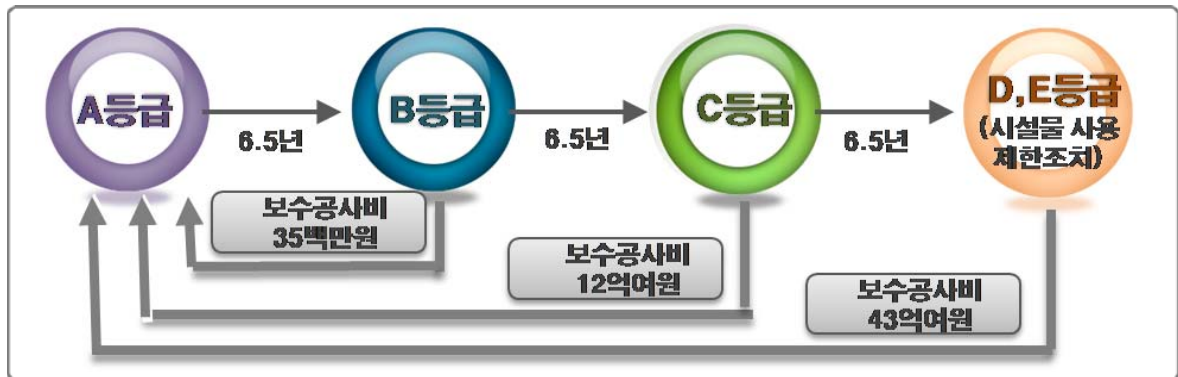
〈그림 4.82〉 어항 노후시설 현황

3) 어항시설 긴급보수 요청 증가

- 정비사업의 중장기 소요(3.5~5년)로 노후된 시설물 방치(20년 이상 23%) 및 유지보수 적기 미 시행으로 인한 노후화 진전으로 시설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 증대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태·폭풍의 횟수 및 강도 상승으로 긴급보수 시설 증가
-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보수 및 긴급보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부족으로 신속한 유지보수 시행 곤란
 - 유지보수대상(B등급이하) 시설 증가 : (2010년) 475개소 → (2013년) 533개소
 - 긴급보수대상(D·C등급) 시설 증가(최근 5년간) : 11개소 → 48개소
 - 시설물의 내용년수 평균 50년, 준공 후 평균 10~20년이 경과 되어 잔여 유지관리기간은 30~40년(LCC(Life Cycle Cost) 분석 상 적정예산 필요)



〈그림 4.83〉 노후화 및 태·폭풍 피해에 따른 시설물 긴급보수 사례



〈그림 4.84〉 안전점검 등급변화에 따른 보수공사비 증가현황

4) 어항 안전시설 부족

- 방파제 안전시설 장비는 낚시이용객 및 관광객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진국 수준이며 너울성 파도 등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태세가 미흡한 실정임



〈그림 4.85〉 안전시설의 미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 최근 설계파 상승 및 이상 파랑 등 기후변화와 어항의 안전시설 부족으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예방체계 강화 필요
 - 안전난간, 구난시설 등 설치율 21%~74%, 모서리보호공 설치율 66% 수준
 - ※ 최근 3년간 인명피해 120여명, 5년간 어선피해 200여건 발생 및 안전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사고자 법적분쟁 승소사례 증가

〈표 4.49〉 최근 3년간 방파제·갯바위 사고 현황

구 분	발 생(건)	인적 피해 (명)					구조(명)
		계	사망	실종	중상	경상	
'09년	51	44	12	-	5	27	54
'10년	24	18	0	-	1	17	28
'11년	45	33	8	-	6	19	44

※ 자료 :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2012년

- 어항 내 안전시설(경고판, 구난장비 등)이 파손 및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어항의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그림 4.86〉 어항 안전시설물 파손 및 방치사례

1.3.2 목적 및 필요성

- 수산업 여건 변화, 시설 노후화, 국민의 다양한 수요 증가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항 기능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
- 어항시설 정비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 및 어항시설의 내구성 연장, 재해에 대비한 사전예방 실현
- 최근 어항이 레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어항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 필요

1.3.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어항기능 제고를 위해 기존 완공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



〈그림 4.87〉 어항 노후시설 정비사례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시행 · 정비사업 추진 중이거나 기 수립된 17개 국가어항의 정비사업 조기완공 · 지방어항사무소 의견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보수 시행(유지보수)	
지자체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의 피해방지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보강 사업추진	

1.3.4 사업내용

1) 어항 정비사업

-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어항기능 제고를 위해 기존 완공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
 - 정비사업 대상 42개 항 중 17개 항 사업 완료(2018년까지)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태·폭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해방지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보강사업에 한해 정비사업 투자
- 항 내 매몰에 따른 어항기능 상실해소를 위한 항 내 소규모 준설 시행

2) 국가어항 유지보수사업

- 국가어항 긴급보수 시설의 유지보수사업 시행(기본시설 : 외곽시설, 계류시설, 기타)
- 어항안전시설(안전난간, 구난시설 등)에 대한 설치율 제고 및 표준화·규격화 추진



〈그림 4.88〉 안전시설물 설치 사례

1.3.5 대상항 선정

- 2013년 현재 어항정비사업 진행 중인 18개 항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24개 항(42개 항)
 - 어항 개발사업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어항(19개 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3년 이후 단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검토

〈표 4.50〉 정비사업 대상항 및 위치도

시도	항수	항 명
인천	4	선진포항, 장봉항, 덕적도항, 울도항
강원	8	거진항, 임원항, 장호항, 궁촌항, 덕산항, 금진항, 아야진항, 공현진항
충남	2	안흥항, 모항항
전북	3	어청도항, 연도항, 말도항
전남	12	계마항, 녹동항, 서망항, 청산도항, 가거도항, 전장포항, 어란진항, 사동항, 풍남항, 안도항, 돌산항, 원평항
경북	6	축산항, 죽변항, 감포항, 저동항, 대보항, 읍천항
경남	6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미조항, 옥지항, 물건항, 외포항
제주	1	신양항
계	42	

※ ____항은 2018까지 완료 예정항임(17개 항)

〈표 4.51〉 국가어항 개발사업 완공 현황(2012년말 기준)

(단위 : 개 항)						
완공연도	30년이상	20~30년	10~20년	10년이내	공사중	합계
항 수	1	6	23	62	17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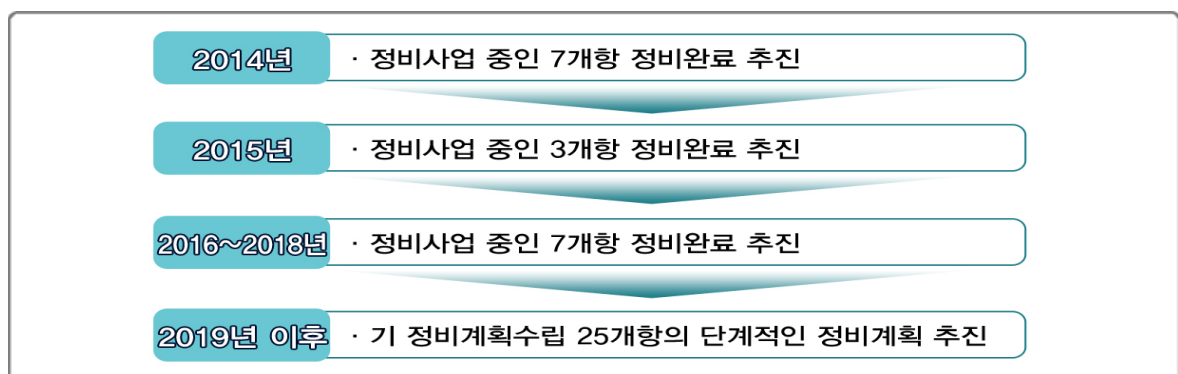
※ 어항개발사업 : 기본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다기능어항)

※ 자료 : 해양수산부

- 어항 유지보수사업(안전시설 설치 포함)은 매년 지방어업관리단(지방어항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한 어항부터 우선순위별로 사업진행

1.3.6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89〉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 노후어항 정비사업 : 계획된 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투자
- 어항 유지보수사업 : 년 100억 원 규모(국비) (2014년은 60억 규모)

〈표 4.5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노후어항 정비 개선	336,577	119,039	78,466	54,072	41,000	44,000	529,354
일정	○ 노후어항 정비 개선		7(22)	3(15)	7(10)	(10)	(11)	(계속)
	○ 어항 유지보수사업		1식	1식	1식	1식	1식	(계속)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1.3.7 기대효과

-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와 연계를 통한 긴급보수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 시행으로 어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어항의 적정기능 향상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사업 등 유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 및 인건비 절감
- 연차별 계획을 통한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일괄 발주 수행으로 업무의 효율성 확보
 - 어항의 주요 기본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노후화 및 안전상 문제가 되는 어항의 성능 제고
- 취약 어항시설 적기보강 사업과 함께 5년간 사업비 6,924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477개 창출 기대

2 어항 정화·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2.1 (가칭)클린어항 육성

2.1.1 추진배경

1) 어항 육역 관리 미흡

- 어구 무단 방치 및 각종 생활 쓰레기 투기에 따른 어항 내 악취 발생 등 어항환경오염 문제 심화
 - 어항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어구야적장 부족에 따른 어구야적 및 방치 사례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물양장 등 어항구역 내 방치된 어구는 어항 환경저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용도 폐기된 기능시설 건물 및 나대지 방치로 인하여 어항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발생 증가와 방문객에게 불쾌감 조성
- 어항 방문객 증가에 따른 어항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 증대



〈그림 4.90〉 어항 환경 실태(어구, 나대지, 용도 폐기 건물 등의 방치)

2) 어항 내 수질 오염 악화

- 어항 내 생활폐수 유입, 수산물 잔여물 배출, 이상기온에 의한 오염부하량 증가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는 갈수록 악화
- 현재 15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어항정화 전·후의 수질 및 저질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생태환경 조사로는 미흡한 실정
 - (2013년)어항정화 전·후 수저질 COD 비교분석(15개 항) → (2015년)조사대상 확대(30개 항) 예정

2.1.2 목적 및 필요성

- 어항 육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클린 어항 조성으로 대국민 이미지 개선
- 수질 및 저질개선조사, 조류현상 관찰 등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어항 수역 관리로 깨끗한 어항 조성

2.1.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국민들이 찾고 싶은 깨끗한 어항 조성을 위하여 어항 내 수역 및 육역 환경을 통한 어항환경 개선 체계 구축 및 홍보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어항환경실태 분석을 통한 클린어항 조성 대상지 선정 · 클린어항 홍보 및 인증제도 실시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자체	· 조성된 클린어항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추진	

2.1.4 사업 내용

1) 어항 환경개선시설 조성

- 어구, 어망 및 어업용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어구 보관창고 및 어구수리장 설치
 - 어업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항별 적정규모에 맞게 설치
- 항 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수소통구 설치
 - 해수소통구 규모 및 형식은 해역별로 상이
 - ※ 동해안은 고파랑을 이용한 해수 교환방식, 서남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
- 항 내 나대지, 용도 폐기 건물, 폐가, 미완공 건축물 등 항 내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요소들을 소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편익공간 조성

2) 항 내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

-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질변화 추세 파악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
- 수질상태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고 상시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

3) 항 내 오염원 제거

- 어항 수역 및 주변 해역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항 내 오니 준설 실시
-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 활동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 유지

4) 클린어항 인증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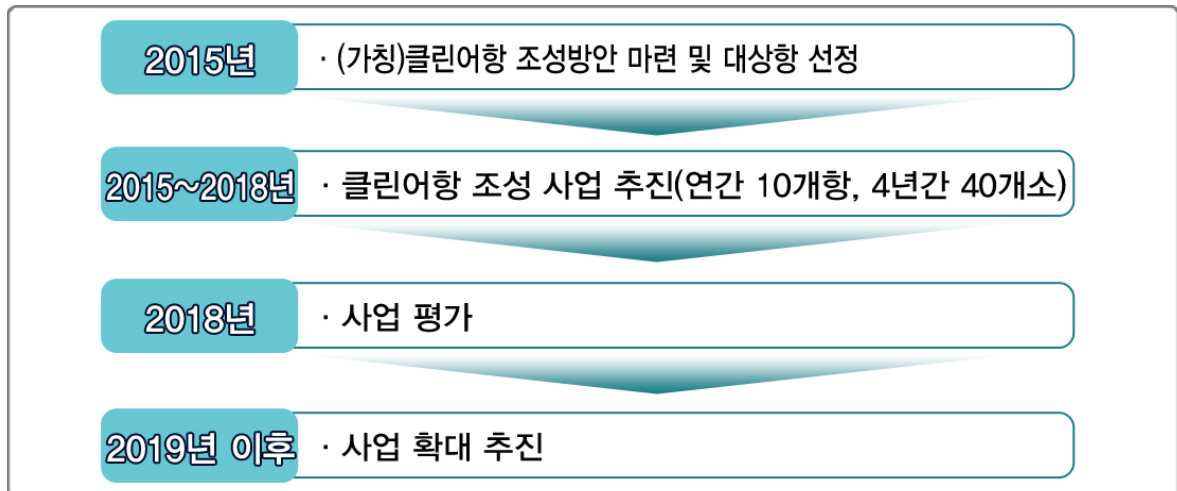
- 조성된 클린어항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우수 클린어항 선정 및 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현재 개발·운영 중인 항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부분에 주안점을 주도록 방향 전환



〈그림 4.91〉 강릉항 정비 사례

2.1.5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92〉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 클린어항 육성 : 항당 10억(국비)

〈표 4.5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가칭)클린어항 육성	40,200	-	10,000	10,000	10,000	10,200	110,000
일정	○ (가칭)클린어항 조성(40개소)			10	10	10	10	(계속)
	○ 사업평가						1식	

2.1.6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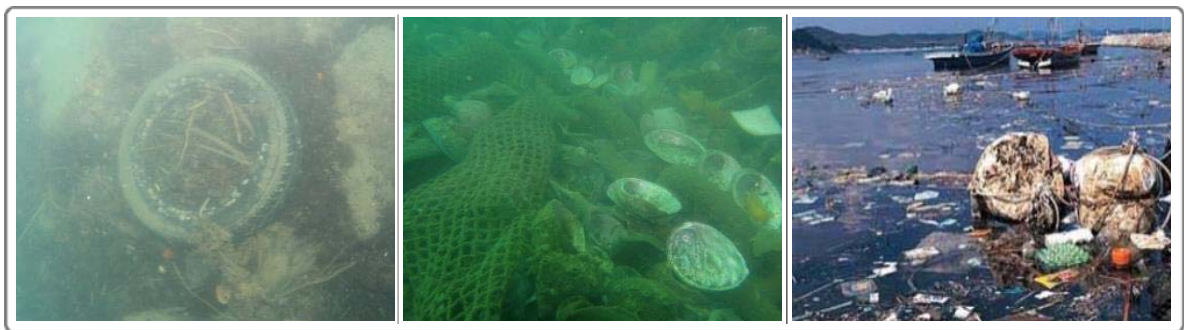
- 클린어항 조성을 통하여 항 내 수질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깨끗한 어항으로의 환경개선 실현
- 클린어항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어항 위생관리체계 강화
- 4년간 사업비 402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122개 창출 기대

2.2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2.2.1 추진배경

1) 어항 수역 환경관리 열악

- 어항은 폐어구 및 오니·토사 등 수역 내 해양폐기물 및 매물 심화(연 5천m³/항)현상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어로장애와 해난사고의 위험 증가 및 악취 심화
- 현 어항청소선(9척)으로는 394개 항(국가지방어항) 중 연간 160개 항(40%)만 운항 가능하고, 상시 준설 및 수질개선 체계도 부재한 실정
- 매년 육상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16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총 수거능력은 5~6만 톤 수준임
- ※ 어항 내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 (1995년) 84 → (2000년) 1,002 → (2005년) 1,959 → (2011년) 3,445 → (2013년) 4,008(계획)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



〈그림 4.93〉 어항구역 내 수역 오염현황

- 28개 무역항 청항선 19척에 비해 어항청소선 9척은 394개 어항을 담당하고 있어서, 척당 30배 (43.8개 항/1.5개 항)에 달하는 운항 부담을 가짐

2) 수저질 조사 미흡 및 환경개선 요구 증대

- 바다어항의 관광객 증가 및 환경관리를 위한 어항 내 수질·저질 개선 등의 관심 고조로 인한 어항의 질적인 환경개선 요구 증대
- 어항 내 해수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인근 생활폐수, 수산물의 잔여물이 여과 없이 배출됨에 따라 악취발생 등 어항환경오염 급속 진행
- 이상기온에 의한 기상이변, 어촌어항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오염부하량 증가 등으로 인한 어항 환경 악화

2.2.2 목적 및 필요성

- 어항청소선의 물리적인 오염물 직접수거와 수저질 악취개선장비를 이용한 화학적 수질개선을 통해 악취제거, 탁도 개선 등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2.2.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어항 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선의 증강 및 수저질 개선시스템의 도입으로 항 내 환경 및 수역 정화 시스템 구축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청소선 대체선 개발 등을 통해 수거량 및 정화어항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 생태환경 모니터링 실시(30개 항) 및 조사항목 확대·기반마련 - 수저질 및 악취개선시스템 시범 설치·운영 - 한국형 위생관리 어항 모델 개발 	
지자체	- 항 내 수역 오염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항 내 수질 관리	



〈그림 4.94〉 수질개선시스템 및 어항청소선

2.2.4 사업 내용

1) 청소선 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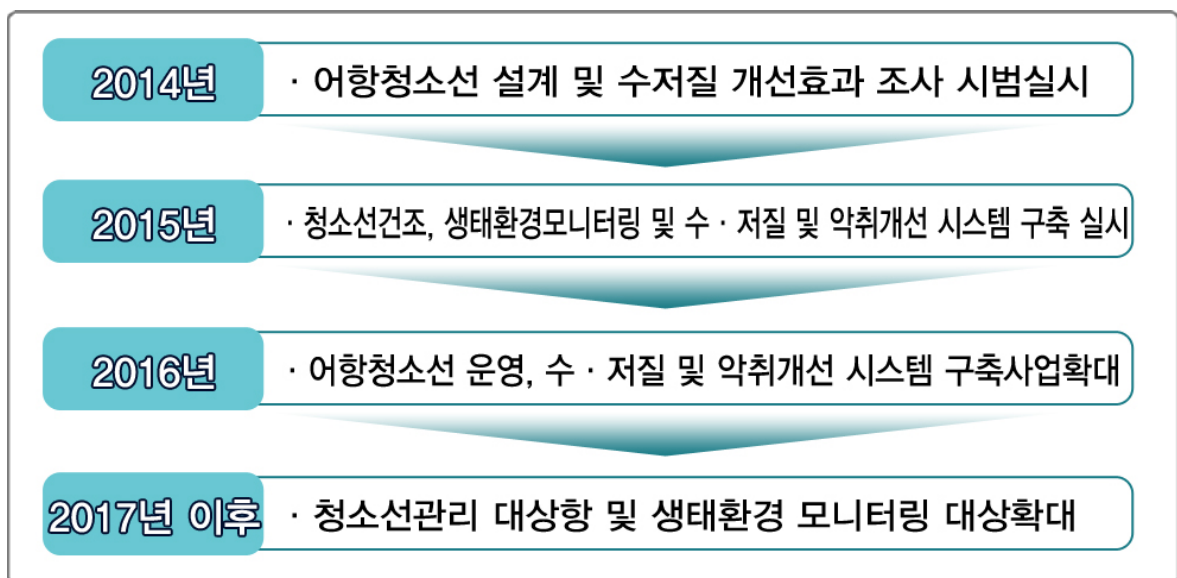
- 어항 내 해양쓰레기 처리 능력 개선을 위한 노후 청소선 7척 대체를 통해 수거량 및 정화어항 대상항수 확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체선 선형 개발
 - 50톤급으로 세력 증강하여 대체선 건조
 - 대체선 운항 및 관리 대상항 확대 : 160개 항 → 252개 항

2) 수저질 악취 개선시스템 구축

- 항 내 수저질 및 악취개선을 위해 오염이 심한 20개 항에 산소 마이크로 버블장치 등 수저질 및 악취개선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어항생태환경기반 개선
 - ※ 2015년부터 매년 5개 항씩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2.2.5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95〉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표 4.5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어항수질관리 기반구축	37,855	145	2,018	10,598	15,783	9,311	111,732
일정	○ 청소선 대체 건조		설계	3척	4척			
	○ 수·저질개선시스템 구축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계속)

2.2.6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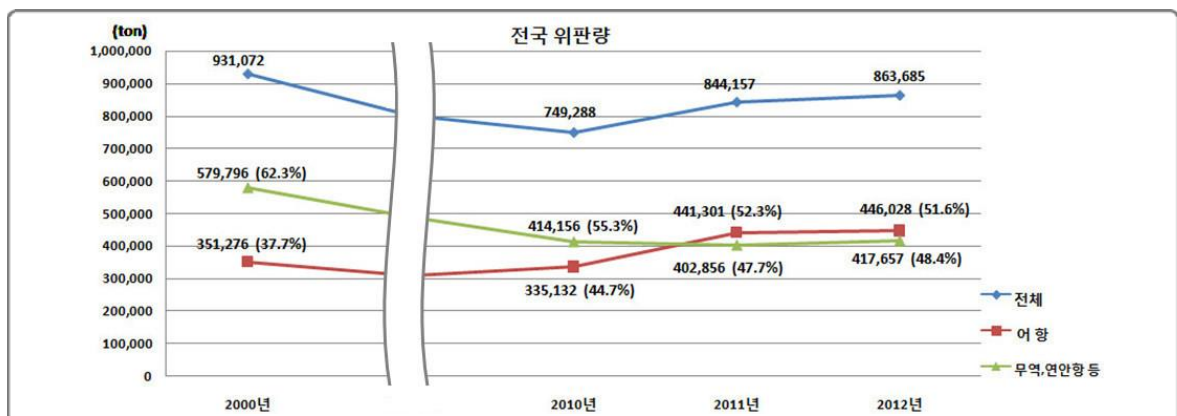
- 어항의 선진화된 환경관리를 통해 어항기능 고도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어촌지역 발전에 기여
- 민간 정화사업에 비해 어항청소선 운영(5,026톤 수거, 2014년)으로 연간 약 9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절감효과 도모
- 5년간 사업비 379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68개 창출 기대

2.3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2.3.1 추진배경

1) 어항의 수산물 위판량 증가

- 2012년 전국 수산물 위판량 863,685톤 중 어항에서 위판되는 양은 446,028톤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어항을 통한 수산물의 위판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4.96〉 어항이 차지하는 수산물 위판량 현황

2) 수산물의 위생관리 관심 고조

- 한미, 한·EU 등 8개국 FTA 체결, 한·중 FTA 협상 등에 따른 수입 수산물 급증으로 수산물 위생관리,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먹거리의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 급증
- 어항 및 항만의 위판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5개 항에서 취급되는 위판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국가어항 7개 항)
- 일부 어항의 경우 수산물의 양륙·위판·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위생 및 품질유지 미흡
 -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구)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결과 180개 산지 위판장중 바닥 위판이 84개소(46.7%)나 되었으며, 정수 처리된 해수를 사용하는 위판장은 52개소(28.9%)에 불과



〈그림 4.97〉 국내 수산물 위판 및 처리 실태

- 일본 원전사고(2011.03)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 일본 8개현(아오모리 등) 전 지역의 수산물 50개 품목 전면 수입 중단
 - ※ 2012년 기준 일본 수입량 15% 차지
- 일본의 경우 수산업의 진흥상 특히 중요한 어항을 특정 제3종어항(13개 항)으로 지정하여 국가어항 개발·관리에 개입하고 있으며, 수산 유통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수산물 유통거점 어항(제3, 4종 어항)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향상 등을 위한 정비 추진
 - 수산물의 안정 공급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에 이르는 일관된 수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도모(고도 위생관리형 위판장, 계류시설 등 정비)
-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HACCP 및 수산물이력제 등 위생관리기준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

2.3.2 목적 및 필요성

- 위생관리형 어항 개발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생·안전 확보
- 소비자의 수산물 위생·안전 요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 내 생산·유통·가공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제고 필요(인증제 도입)

2.3.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항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시설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위생관리 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	
지자체	· 위생관리형 위판시설의 관리·운영 점검 · 운영·관리 협의체 운영 및 이해관계자(경매사, 중도매인 등) 교육	
민간	· 위판시설의 수탁 관리운영 · 상업시설투자 (냉동·냉장시설, 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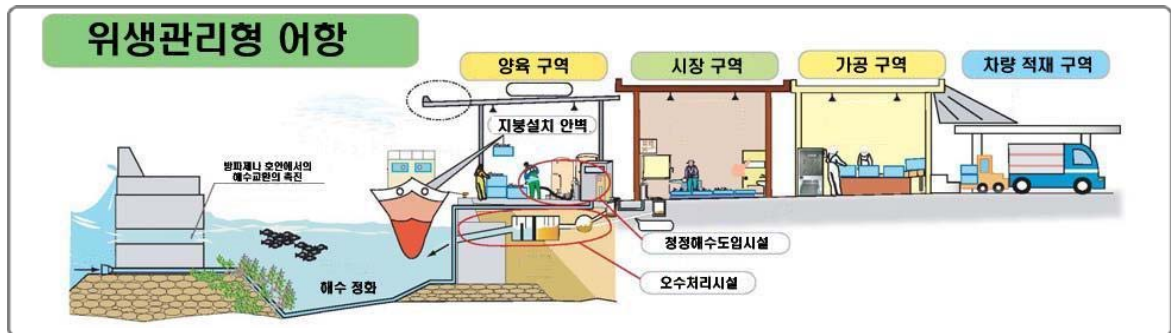
2.3.4 사업 내용

1) 어항 위생관리 기준 마련

- 어항 내 수산 기능시설 조성 및 정비 시 수산물의 양륙, 위판·보관 및 처리·유통시설 등에 대한 위생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2) 위생관리형 위판시설 정비

- 어획물의 양륙 및 화물 처리 시 수산물의 위생적인 취급에 대응하여 양륙구역 차양막, 일반인 및 차량 통제시설 등 설치
- 온도관리, 시간관리, 손상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선도 보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양륙선별장, 수산물 자동 선별기, 위생검사 시설 등 설치
- 자외선 살균시설, 오수처리시설(집수, 오수처리, 배출시설), 샤워스페이스 등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유해균 혼입 방지 대책 마련
- 어선에서 자동선별기를 거쳐 포장상자에 포장되기까지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위생적이고 정량화된 어획물 하역 작업 진행
 - 포장상태 확인 및 불량 수산물 확인과정에만 약간의 인력 필요



〈그림 4.98〉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개념도

3) 어항 수역 환경개선

- 송수관로, 급수관로 매설 등을 통해 외해의 청정해수를 도입 살균 및 여과과정을 거쳐 위판장, 횃집, 수산가공시설 등에 공급
- 육상 오염원 차단, 오염 퇴적층 제거, 해수유통 시설 설치 등 항내 수질개선 추진

4)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

- 수산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의 양륙부터 위판, 유통까지 전 과정이 HACCP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

5) 위생어항 인증제 도입

- 어항구역 내 양륙에서 위판·가공 및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인증제 도입을 통해 위생관리형 어항 육성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어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위생 고도화 관리어항 개발사례(일본 사가현 카라츠항) 〉

○ 사업 목적 :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요구에 대응한 고도 위생관리기능을 겸비, 사가현산의 어패류에 대한 안전, 선도면에서 타 산지화와 차별화를 통한 수산물 브랜드화

○ 사업 내용

위판시설	철골조 2층 건물(부지면적 : 3,453m ² , 건면적 2,441m ²)
시설현황	일반경매장 1,005m ² , 성게경매장m ² , 양륙선별장 189m ² , 육송입하지역 63m ² , 육송출하지역 120m ² , 창고 244m ²
취수시설	상온 살균해수 공급시설(공급량 : 30t/h) / 냉각 살균해수 공급시설(공급량 : 10t/day, 1℃)
부 잔 교	FRP제(폭 2.5m, 연장 15m, 두께 1.1m)
사업주체	일본 사가현
사업기간	2008. 07 ~ 2010. 05 / 4.8억 엔(약 52억 원)

주요시설

양륙선별장 : 어획물의 선도 보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외부와 단절
 위생관리입구 : 경매장 입구는 모두 소독조를 설치하여 장내의 위생관리 강화
 일반경매장 : 대형 셔터와 비닐커버로 완전 밀폐하여 새나 곤충의 침입 방지
 성게경매장 : 성게의 선도 유지를 위해 내부 온도 제어시설 설치
 샤워스페이스 : 어획물은 위생적인 플라스틱 어상자에 보관하고, 살균 냉해수의 공급에 의해 선도와 위생을 유지

정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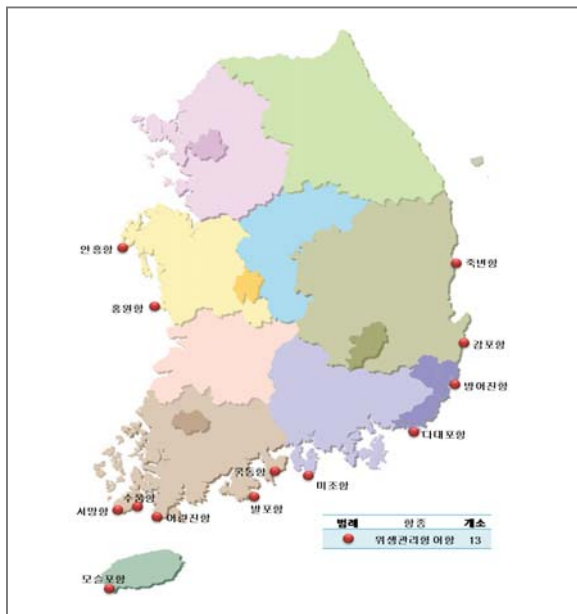
2.3.5 예비 후보지 선정

1) 선정기준

- 국민의 수산물 공급 거점어항 선정을 위해 수산물 생산현황을 고려하여 대상 어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
 -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위판 금액 200억 원, 위판량 2,000톤 이상인 국가어항
 - ※ 비계통 판매의 경우 데이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려하지 않음

2) 사업대상 후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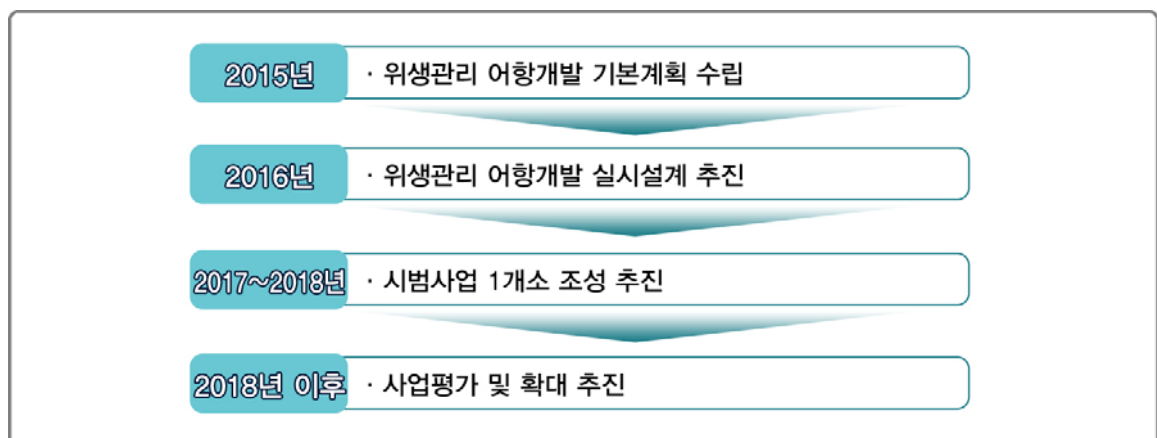
- 수산물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는 13개 항 중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지 역	항수	항 명
충남	2	안흥항
		홍원항
전남	5	서망항
		수품항
		어란진항
		발포항
		국동항
경남	1	미조항
부산	1	다대포항
울산	1	방어진항
경북	2	감포항
		죽변항
제주	1	모슬포항
계	13	

2.3.6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99〉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 위생관리형 어항 : 해당 100억 원(국비)

〈표 4.5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11,100	-	300	500	5,000	5,300	129,600
일정	○ 기본계획 수립			1식				
	○ 실시설계 추진				1식			
	○ 시범사업 추진(1개소)					1	(완료)	(계속)
	○ 사업평가 실시						1식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2.3.7 기대효과

- 수산물 양륙·위판·가공·유통의 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따라 외래어선의 이용증가 및 수산 관련 일자리 창출로 어항의 이용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5년간 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63개 창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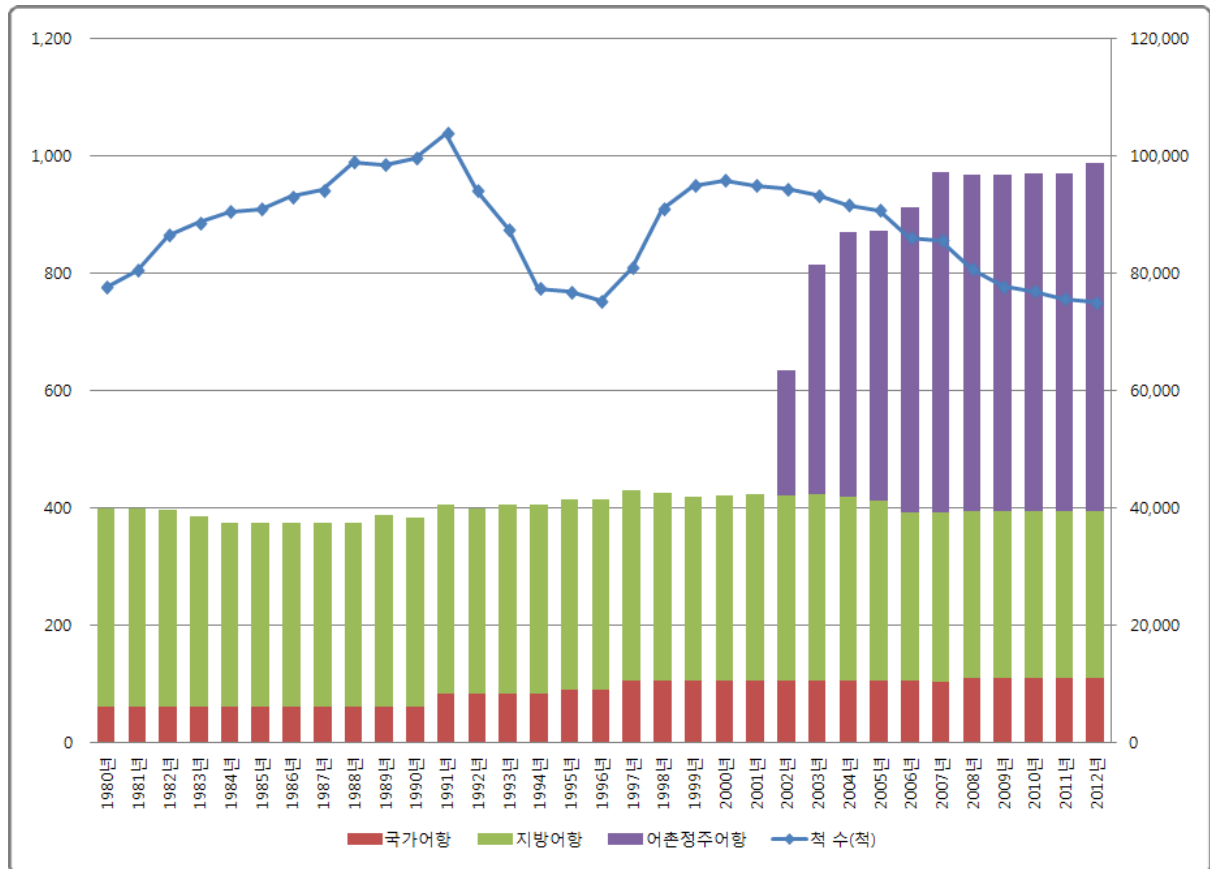
3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어항 개발

3.1 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어항개발 체계 개편)

3.1.1 추진배경

1) 어항의 적정 개발수요 관리 필요

- 어항은 1971년 최초로 62개소(국가어항 37개소, 지방어항 25개소)를 지정한 이후 최근까지 989개소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음
 - 특히,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1980년 이후부터 400개소 내외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 신규지정 이후 증가하다가 최근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어선척수는 1991년 103,848척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여 2012년 말 기준 75,031척까지 감소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4.100〉 어항 지정현황과 어선척수 추이(1980~2012년)

- 어항의 개발수요는 2012년 어촌정주어항이 신설된 이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마을공동어항 신설에 따라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정 수요 이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 도입 필요

(1) 국가어항

- 수산업의 여건변화 등으로 기 지정된 국가어항 중 45개소 어항의 항세가 약화되어 현행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어항 109개소 중 현행 지정기준에 충족하는 어항은 64개소로 전체의 58.7%에 불과하고, 입지여건별로 살펴보면 육지지역 43개소, 도서지역 21개소 충족비율은 각각 59.7%,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어항 지정기준은 크게 현지 어선척수 및 어선톤수, 위판량,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빈도, 외래어선 등 5개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외래어선(100척 기준) 79개소(72.5%),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빈도(왕복 4회) 76개소(69.7%), 위판량(연간 200톤) 62개소(56.9%)가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6〉 어항 지정기준 항목 및 미충족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어항수	국가어항 지정기준항목					지정기준 미충족 항수
		현지어선척수	현지어선 톤수	외래어선수	위판량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전국	109	14 (12.8%)	30 (27.5%)	79 (72.5%)	62 (56.9%)	76 (69.7%)	45 (41.3%)
서해안	31	3 (9.7%)	4 (12.9%)	24 (77.4%)	21 (67.7%)	17 (54.8%)	7 (22.6%)
남해안	47	4 (8.5%)	9 (19.1%)	34 (72.3%)	28 (59.6%)	28 (59.6%)	20 (42.6%)
동해안	31	7 (22.6%)	17 (54.8%)	21 (67.7%)	13 (41.9%)	31 (100%)	18 (58.1%)

- 국가어항 가운데 이용여건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항내 매물, 노후시설 정비 등 어항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음
- 어항이 어업생산 기반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요 증가 등 어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 지정기준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2) 지방관리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 지자체가 개발·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어항 중 여건변화 등으로 항세가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방관리어항은 19개소(지방어항 18개소, 소규모 항포구 1개소)로 나타났으나 항중 변경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지방어항의 경우 어장형성의 변화, 양륙어항의 어가(漁價) 형성에 따라 특정 어선이 어항에 몰리면서 항세가 커지고 거점화되는 양상이 서·남해안에 나타나고 있음

(3) 도서지역 대피어항

- 현행 도서지역의 국가어항은 기상예보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어선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대피기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3) 서·남해안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개발 수요 증가

-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은 과거 동해안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멸치, 오징어, 갈치 등 서·남해안 지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선들이 집중되면서 어항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해역별 어선 안전수용률은 동해안 94.8%, 서해안 83.3%, 남해안 76.1%로 나타났으며, 안전수용이 확보되지 못한 전체 어선 16,347척 가운데 15,971척(97.6%)이 서·남해안 지역의 어선으로 나타났음

3.1.2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지금까지 어항개발은 어업생산 기반시설로서 어선의 안전수용률 관점에서 확대·개발하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급격한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어항의 지정기준과 개발수요도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항개발이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물 양륙뿐만 아니라 유통·가공, 물류, 어촌경제활동, 어촌·해양 레저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어항 간 기능정립을 위한 새로운 어항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관리어항의 경우 낙후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후변화나 지역개발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항정책 체계 개편이 필요함

2) 목적

- 새로운 어항개발 체계 구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항개발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어항총량제와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종별·권역별 적정 개발수요를 추정하고, 권역 내 항 간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3.1.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현 시점에서 어항개발 체계는 수산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어선 안전수용률 관점에서 벗어나 i) 어항총량제 도입, ii)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 도입, iii) 지역별 개발수요 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함
- 첫째, 어항총량제 도입은 어항의 적정 개발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 등 어항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역내 어항 총수를 관리하는 제도임
- 둘째,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 도입은 기후변화, 어항 이용패턴 변화 등 급격한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어항 지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양륙 등 수산업 지원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등 지역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어항의 특화개발과 새로운 어항개발 체계의 틀을 마련함
- 셋째, 지역별 개발수요 산정은 어항총량제 도입과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 도입을 토대로 권역 내 항종별 어항개발 수요를 산정함으로써 과도한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국가의 개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함

〈 새로운 어항개발 체계의 추진방향 〉

- 어항총량제 도입 : 어선의 이용세력권에 따른 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권역별로 어항의 신설, 항중변경(증설), 해제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제도의 도입
-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 도입 : 수산업 지원기능과 함께 지역 개발, 지역주민의 편의 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지정기준 마련
- 권역별 어항 개발수요 산정 : 권역별 어선 불균형, 어항 위치변화, 도서어항 이용 기피 등 최근 어선 이용형태를 고려한 개발수요 검토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지정기준 재검토 및 어항 총량제 도입 방안 수립 · 어항 지정·해제에 따른 어촌·어항법 개정 검토 및 추진 · 권역별 신규어항 개발 수요 검토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내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항중조정 수요 검토 · 권역별 항중조정에 대한 어항 이용자 의견 수렴 · 이용 여건 및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한 항중조정 대상항 선정건의 	

3.1.4 사업내용

1) 어항총량제 도입 검토

(1) 어항총량제 개념

- 어항총량제도는 항중별·권역별로 어항 총수를 할당하고, 할당된 범위 내에서 어항의 신설, 항중변경(증설), 해제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 항중변경은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에 맞춰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간에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

〈 총량제 유사사례 〉

- 공장총량제 :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증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제도
(기존) 사안별 엄격한 심의 → (변경) 총량 한도내 자유로운 신·증축 가능
- 오염총량제 :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 광고총량제 : 법에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

- 어항총량제 도입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어항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① 도입의 필요성, ② 현행 개발방식과의 장단점 비교, ③ 추진방식(권역설정 및 권역별 어항수요 산정, 수립주체), ④ 소요예산, ⑤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이 향후 명확하게 검토되어야 함

(2) 어항 총수의 결정과 집행방법

- 어항총량제 시행을 위한 어항 총수의 결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여건, 어선수, 기타 종합적인 기초조사를 토대로 매 5년마다 (가칭)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권역별 어항 총수를 검토하여야 함
- 어항 총량산출방식은 현행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추세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표 4.57〉 어항총량제(안)

구분	어항총량제(안)	
개념	<p>항종별·권역별 어항 총수를 할당하고, 할당된 범위 내에서 어항의 신설, 항종변경(증설), 해제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제도</p> <p>· 1단계(단기적) :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에 한정해서 어항 총수 설정</p> <p>· 2단계(장기적) : 전체 어항에 대해서 어항 총수 설정</p>	
어항 지정기준과의 관계	<p>- 권역 내 국가어항, 지방어항의 총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항종 변경 가능</p> <p>-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 도입 필요</p>	
권역설정	어선의 이용세력권	
장점	<p>- 적재적소에 맞는 어항개발 추진 가능 (항종별 불균형 격차 해소)</p> <p>- 민원성 어항개발을 사전에 차단(무분별한 어항개발을 방지/예산절감)</p> <p>-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p> <p>- 어항개발 수요의 일원화(기본사업, 특화개발)</p>	
단점 (한계점)	<p>- 예산당국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합의 필요</p> <p>- 지자체의 부담 증가</p>	

2)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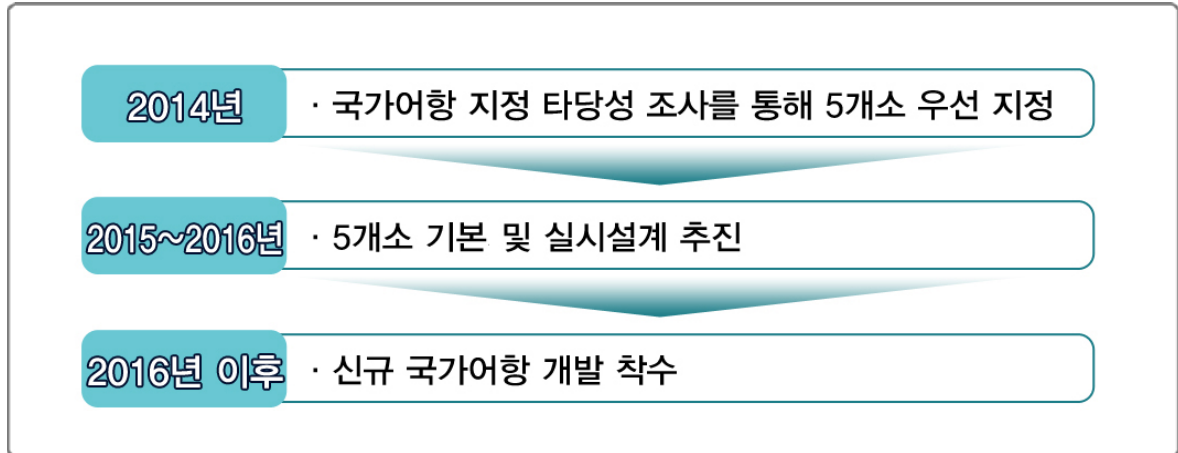
- 어항의 지정기준은 1971년 12월 최초 지정된 이래 8차 개정까지 이루어졌으며, 현행 지정기준은 해역별 특성과 도서지역 어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현행 어항 지정기준 항목은 현지어선 척수 및 톤수, 외래어선 수, 위판량,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빈도 등 5개 항목으로 국가어항 109개소 가운데 45개소(41.3%)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남해안과 최근 어장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서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어항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 어항은 단순 어업생산 기반에서 관광, 레저, 교통, 물류 등 다변화된 기능과 사회적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기준과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 어항 지정기준의 개편은 기존 항목의 개선과 새로운 지정기준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지정기준(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어항 구조개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 현행 지정기준 항목 가운데 현지어선과 외래어선 척수는 해양경찰청의 어선 입출항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어선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위판량의 경우에도 비계통 출하의 비중이 전체 위판량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새로운 지정기준 항목은 수산업 지표 항목뿐만 아니라 교통 및 물류지표, 생활중심지표, 문화관광지표 등 인문·사회적 지표도 개발하여 포함되어야 함

3) 권역별 어항 개발수요 산정

- 어항총량제, 새로운 어항 지정기준 등을 통해 권역별 어항 개발수요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어항개발 추진
- 어항 신설은 기존 어항구역이 아닌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어항을 개발
- 항종변경(증설)은 기존 어항 이용이 활성화되어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방관리어항을 대상으로 국가어항으로 승격하여 개발 추진
- 수산업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여건이 급변하여 항세가 위축되고 더 이상 어항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항에서 해제하여 민간매각, 임대 등 창의적인 개발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3.1.5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그림 4.401〉 연도별 추진계획

2) 투자계획

〈표 4.5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신규어항 개발	28,500	1,000	2,500	5,000	5,000	15,000	670,000
	○ 지정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 신규어항 개발 추진					5	(5)	(계속)

※ ()는 계속사업 개소수 임

3.1.6 기대효과

- 서·남해안 지역의 어항시설 확충으로 수산업 지원기능 강화 및 국민의 재산 보호
- 지역 특성 및 국민 수요 다양화를 반영한 어항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 5년간 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180개 창출 기대

3.2 어항 편익시설 지속 확충

3.2.1 추진배경

1) 어항의 기능 및 편익 시설 미비

- 어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각종 기능편익시설이 미비

- 국가어항 기능시설 및 편익시설 현황은 도로, 주차장, 가로등 등 31개 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207개 시설의 2,003,457㎡가 사용 중

※ 자료 : (구)농림수산식품부「어촌어항 기초조사, 2012년」

- 어업인의 작업여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기능시설 지원 미비

2) 큰 조위차에 따른 입출항 불편

- 서·남해안 지역의 어항은 조위차가 크고(2~8m) 수심이 낮은 곳이 많아 간조 시 어선의 접이안 및 수산물 양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잔교 시설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까지 부잔교 시설은 각 항별로 민원 등에 따라 산발적으로 설치하거나 이용 단체인 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어항 109개 항 중 총 56개 항에 182개소의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음
 - 182개소 중 147개소는 설치 및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실정임

※ 자료 : 한국어촌어항협회「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2011년」

3.2.2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어항 유지관리강화를 통해 기능편익시설 확충으로 어항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의 환경개선을 통한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

3.2.3 추진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어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어업인을 위해 이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어항으로 육성하여 어항 이미지 제고

2)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고
해양수산부	· 어항기능개선사업 계획에 따른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조성	
지자체	·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수요 검토 및 건의 · 조성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3.2.4 사업내용

1) 어항 내 편익시설 확충

- 어항을 찾는 관광객과 어업인을 위한 각종 어항편익시설(문화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 어선어구 보전시설, 보급시설, 부잔교 등) 확충

- 여객대합실이 미조성된 8개 국가어항은 2018년까지 조성 완료

○ 사업대상 시설

사업 내용	구 분	사업대상 항목
어항 기능 및 편의시설확충	수송시설	도로,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장, 광장·조경시설
	주민편익시설	여객대합실, 공동실
	어선·어구보전시설	어구건조·야적장, 기자재창고
	보급시설	급수시설, 해수인수시설
	기타시설	부잔교(신설), 해수소통구



〈그림 4.102〉 어항편익시설 유형

3.2.5 사업 대상항 선정

- 어항의 이용도, 방문객들의 안전,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 기 투자된 항 및 시설물 관련 공사 중(개발 중인 항포함) 이거나, 시설물 설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예정인 항은 후순위로 제외함
 - 시설물 관련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예정인 항은 제외
- 예산범위(사무소별 20억 원) 내에서 시설별로 설치완료 가능한 시설물의 우선 설치

3.2.6 추진계획

1) 연도별 추진계획

- 2014년 이후 : 어항편익시설확충(어항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계속 추진

2) 투자계획

〈표 4.59〉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사업비	○ 어항편익시설 지속 확충	34,316	2,316	8,000	8,000	8,000	8,000	100,000
일정	○ 어항편익시설 지속 확충		(1식)	(1식)	(1식)	(1식)	(1식)	(계속)

3.2.7 기대효과

- 어항 기능시설 확충으로 어항 내 환경개선 및 이용자 편익향상
- 조석간만의 차로 인한 어획물의 하선 등 어항이용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형어선 안전이용 편의를 제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5년간 사업비 343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일자리 24개 창출 기대

제 5 장

투자계획 및 효과분석

제5장 투자계획 및 효과분석

제1절 투·융자계획

1 어촌·어항 총괄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14~2018년까지 5년간 총 2조 5,36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1〉 어촌어항 총괄 투자계획

추진 전략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 원)						2019년 이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5,364	3,228	3,836	5,399	5,968	6,935	50,340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3,990	70	180	1,143	1,226	1,371	1,224
	융·복합 어촌개발 추진	1,575	25	57	419	462	612	144
	어촌관광 활성화	2,380	45	116	715	755	749	828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5	-	7	9	9	10	252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483	19	35	51	64	314	3,576
	도시·어촌상생 강화	69	2	15	22	15	15	180
	어촌 복지·환경 개선	321	-	1	10	30	280	3,168
	어촌경영 안정화	93	17	19	19	19	19	228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3,718	102	317	714	1,122	1,464	12,180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3,320	78	285	610	990	1,357	11,380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207	-	5	25	100	77	500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191	24	27	79	32	30	300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	(소 계)	17,173	3,037	3,304	3,491	3,556	3,786	33,360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892	1	123	211	308	248	3,513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5,996	3,024	3,156	3,230	3,198	3,388	23,147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285	10	25	50	50	150	6,700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어촌부문

〈표 5.2〉 어촌부문 투자계획

전략 과제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 원)						2019년 이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4,473	89	215	1,194	1,290	1,685	4,800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3,990	70	180	1,143	1,226	1,371	1,224
	어촌6차산업화 추진	655	25	37	119	162	312	144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	920	-	20	300	300	300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35	40	45	50	50	50	-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	5	15	300	300	300	-
	문화어촌 구축	121	-	13	35	40	33	36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900	-	30	270	300	300	-
	SEA STAY (어촌특화민박)조성	204	-	13	60	65	66	792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	17	-	4	4	4	5	192
	어촌현장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	18	-	3	5	5	5	60
지속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483	19	35	51	64	314	3,576
	자매결연 강화	30	-	6	8	8	8	96
	재능기부 활성화	15	-	2	7	3	3	36
	어촌찾아가기 활성화사업	24	2	7	7	4	4	48
	어촌정주환경 개선	250(900)	(200)	(200)	(250)	(250)	250	3,000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사업	(45)	-	(15)	(15)	(15)	-	-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71	-	1	10	30	30	168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	5	7	7	7	7	84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	12	12	12	12	12	144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 타 부처 예산

- 어촌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기 및 장기에 총 9,27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중기 사업비는 총 4,473억 원으로 그중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과제 3,990억 원, 지속가능한 어촌 구현 과제 483억 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어촌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의 산업화, 융·복합화 등이 업종 간 복합적 연계를 통해 어촌의 신성장 동력 마련 및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조성을 위해 투자 계획하였음
- 기존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활성화 등과 같은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대를 통한 사업 투자를 계획하였음
- 어촌의 정주환경개선 및 복지·문화공동체 관련 사업 등을 신설 투자 계획하였음
- 정부주도의 하향식 투자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상향식 투자개발방식을 지향하도록 계획함
- 최근 어촌의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 증대, 재정 건전성 회복 필요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어촌지역의 SOC 투자보다는 복지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어촌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SOC 투자확대가 필요함
- 도시·어촌 상생기반 구축,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 및 어촌공동체의 재생촉진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 어촌으로 구축 계획하였음

3 어항부문

3.1 전략과제별 투자계획

〈표 5.3〉 어항부문 전략과제별 투자계획

전략 과제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 원)						2019년 이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0,891	3,139	3,621	4,205	4,678	5,250	45,540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3,718	102	317	714	1,122	1,464	12,180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1,893	30	60	300	600	903	9,680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
	아름다운 어항 조성	307	-	5	90	90	122	1,700
	어촌역' 어항육성	407	5	100	100	100	102	-
	어항 유희부지 활용	207	-	5	25	100	77	500
	수리현상 모니터링추진	75	15	15	15	15	15	150
	어항종합정보시스템	116	9	12	64	17	15	150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구축	(소 계)	17,173	3,037	3,304	3,491	3,556	3,786	33,360
	(가칭) 클린어항 육성	402	-	100	100	100	102	1,100
	어항수질 관리기반구축	379	1	20	106	158	93	1,117
	위생관리 어항 조성	111	-	3	5	50	53	1,296
	어항시설 조기완공	8,729	1,582	1,596	1,705	1,950	1,896	12,018
	취약어항시설 적기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4,835
	노후어항 정비 개선	3,366	1,190	785	541	410	440	5,294
	신규어항 개발	285	10	25	50	50	150	6,700
	어항편익시설 지속확충	343	23	80	80	80	80	1,000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2 법정사업군별 투자계획

〈표 5.4〉 어항부문 법정사업군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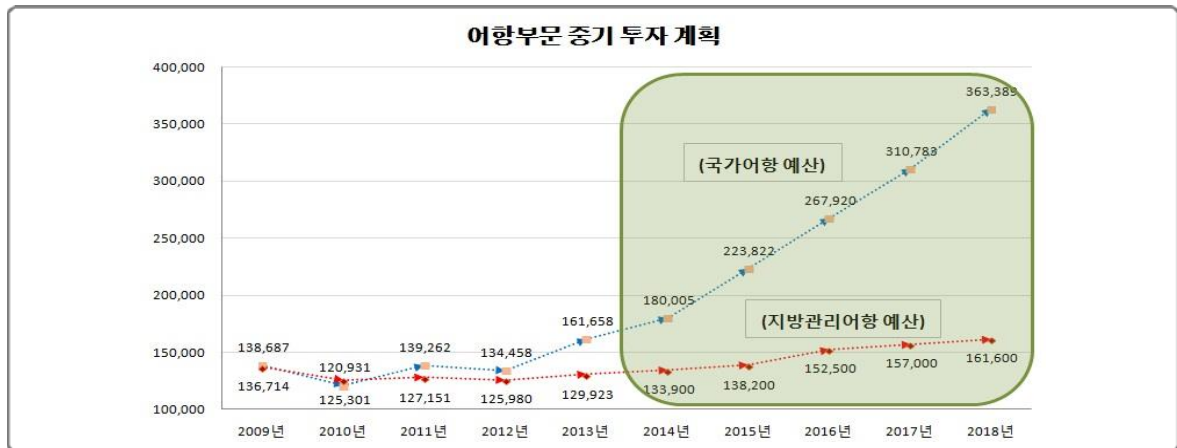
사업군	세부사업명	중기투자계획(억 원)						2019년 이 후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0,891	3,137	3,621	4,205	4,678	5,250	45,540
어항 기본사업	(소 계)	9,014	1,592	1,621	1,755	2,000	2,046	18,718
	국가어항	1,582	253	239	230	430	430	7,784
	지방어항	4,851	911	940	969	1,000	1,031	3,662
	어촌정주어항	2,281	428	442	456	470	485	3,841
	마을공동어항	300	-	-	100	100	100	3,431
	(소 계)	7,139	1,424	1,490	1,465	1,268	1,492	12,064
어항 정비사업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215	5	10	20	100	80	1,935
	어항노후시설정비사업	3,366	1,190	785	541	410	440	5,294
	취약 어항시설 적기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4,835
	(소 계)	3,331	81	343	600	920	1,387	9,761
어항환경 개선사업	복합형다기능어항	1,248	15	30	180	300	723	4,165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
	아름다운어항조성	307	-	5	90	90	122	1,700
	어항유희공간 재생사업	207	-	5	25	100	77	500
	(가칭) 클린어항 육성	402	-	100	100	100	102	1,100
	위생관리	111	-	3	5	50	53	1,296
	어항 편익시설 조성	343	23	80	80	80	80	1,000
	(소 계)	837	15	120	200	300	202	3,580
레저관광 기반시설 사업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215	5	10	100	100	-	600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215	5	10	-	100	100	2,980
	어촌 역' 어항 육성	407	5	100	100	100	102	-
	(소 계)	570	25	47	185	190	123	1,417
기타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100
	수리현상 모니터링 체계구축	75	15	15	15	15	15	150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379	1	20	106	158	93	1,117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50

- 어항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어항사업과 지방관리어항에 중기 2조 891억 원, 장기 총 4조 5,54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국가어항 투자계획에 포함된 법정사업군은 기존 3개 사업(계속사업) 어항기본시설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에서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신규사업)이 추가 되어 총 4개 사업을 중기, 장기에 계속적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국가어항사업에 소요되는 총 중기 사업비는 1조 3,459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9,278억 원, 신규사업은 4,18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전체 투자계획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을 하면 국가어항 부분은 전체가 국비지원이며, 지방관리어항부분이 국비80%, 지방비20%로 지원됨
- 지방관리어항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군은 3개 사업으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건설(계속사업)으로 중기에는 7,432억 원, 장기는 1조 934억 원을 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은 저조한 완공률을 고려하여 어항기본시설사업을 중기 및 장기에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5〉 항종별 어항개발 중기투자 계획

(단위: 백만 원)

항 종	사업 분류		중기 투자계획						'19년 이후	비고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089,119	313,905	362,022	420,420	467,783	524,989	4,553,996	
국 가 어 항	소 계		1,345,919	180,005	223,822	267,920	310,783	363,389	3,460,596	
	계 속 사 업	어항기본사업	129,718	24,330	21,388	18,000	38,000	28,000	108,405	
		어항정비사업	692,400	141,974	147,966	144,472	116,800	141,188	1,012,859	
		어항환경 개선사업	105,646	6,656	20,000	20,000	28,000	30,990	99,800	
	신 규 사 업	어항기본사업	28,500	1,000	2,500	5,000	5,000	15,000	670,000	
		어항정비사업	21,500	500	1,000	2,000	10,000	8,000	193,500	
		어항환경 개선사업	227,500	1,500	14,300	40,000	64,000	107,700	876,100	
		레저관광 기반시설사업	83,700	1,500	12,000	20,000	30,000	20,200	358,000	
		운영·관리	56,955	2,545	4,668	18,448	18,983	12,311	141,732	
지 방 관 리 어 항	소 계		743,200	133,900	138,200	152,500	157,000	161,600	1,093,400	
	계 속 사 업	지방어항	485,100	91,100	94,000	96,900	100,000	103,100	366,200	
		어촌정주어항	228,100	42,800	44,200	45,600	47,000	48,500	384,100	
		마을공동어항	30,000	-	-	10,000	10,000	10,000	343,100	



〈그림 5.1〉 어항부문 중기 투자계획

○ 2014년 이후부터 신규 추진 예정인 국가어항 사업은 중기 4,181억 원 투자예정

〈표 5.6〉 국가어항 신규사업 중기 세부 투자 계획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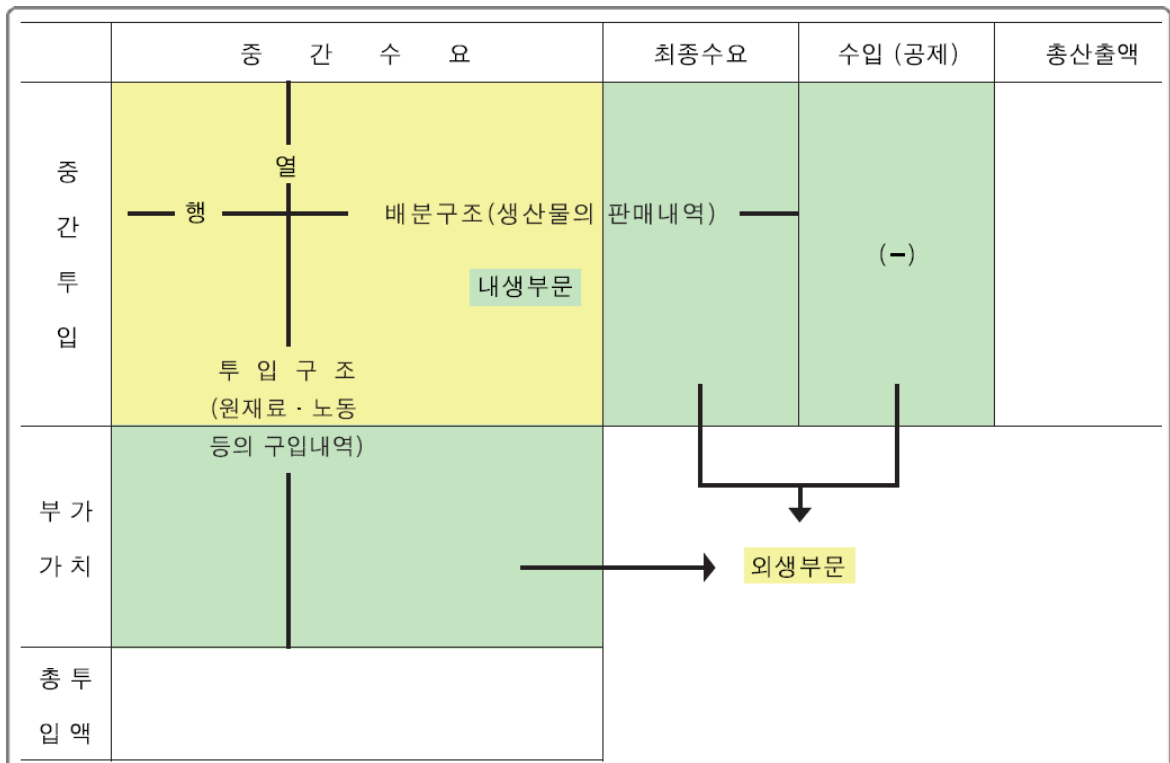
사업군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418,155	7,045	34,468	85,448	127,983	163,211	
어항 기본사업	소 계	28,500	1,000	2,500	5,000	5,000	15,000	
	신규 국가어항 개발	28,500	1,000	2,500	5,000	5,000	15,000	
어항 정비사업	소 계	21,500	500	1,000	2,000	10,000	8,000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21,500	500	1,000	2,000	10,000	8,000	
어항환경 개선사업	소 계	227,800	1,500	14,300	40,000	64,000	107,700	
	복합형 다기능어항	124,800	1,500	3,000	18,000	30,000	72,300	
	아름다운 어항 조성	30,700	-	500	9,000	9,000	12,200	
	어항 유희공간 재생사업	20,700	-	500	2,500	10,000	7,700	
	클린어항 육성	40,500	-	10,000	10,000	10,000	10,200	
	위생관리어항 조성	11,100	-	300	500	5,000	5,300	
레저관광 기반시설 사업	소 계	83,700	1,500	12,000	20,000	30,000	20,200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21,500	500	1,000	10,000	10,000	-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21,500	500	1,000	-	10,000	10,000	
	‘어촌 역’ 어항 육성	40,700	500	10,000	10,000	10,000	10,200	
운영관리	소 계	56,555	2,545	4,668	18,448	18,983	12,311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8,700	400	650	5,850	1,200	1,000	
	수리현상 모니터링 체계구축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37,855	145	2,018	10,598	15,783	9,311	
	대국민 홍보	2,500	500	500	500	500	500	

제2절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방법

1.1 산업연관분석 개요¹⁾

-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업 간의 투입과 산출의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특정 산업에서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산업연관표를 행(row)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즉 배분구조를 나타내며, 열(column)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생산을 위해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 물을 어디서 얼마만큼 구입하고 있는지, 즉 투입 구조를 의미함
- 총산출은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인 총수요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이며, 총 투입은 중간 투입에 노동 등 부가가치를 합계한 것임
-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년」

〈그림 5.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 산업연관분석 개요에 대한 내용은 한국은행(2007)의 산업연관분석해설서, 강광하(2000)의 산업연관분석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이때 각 산업 부문별로 총 투입액과 이에 대응하는 총 산출액은 항상 일치하는데, 총 산출과 총 투입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X_i = \sum_{j=1}^n z_{ij} + F_i - M_i = \sum_{j=1}^n a_{ij}X_j + F_i - M_i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X_j = \sum_{i=1}^n z_{ij} + V_j = \sum_{i=1}^n a_{ij}X_j + V_j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 여기서 n 은 산업부문을 의미하며, X_i 는 i 부문의 총산출, X_j 는 j 부문의 총 투입을 나타내며, z_{ij} 는 j 부문에 사용되는 i 재의 양, F_i 는 i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액, M_i 는 i 부문의 총 수입액, V_j 는 j 부문의 부가가치를 나타냄
-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 a_{ij} 는 z_{ij}/X_j 로 정의되며, j 부문의 총 산출액 중 i 부문에 투입된 중간재의 비중을 나타냄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에서 구한 투입계수를 통해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나 부가가치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를 이용하는 분석방법임
-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는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생산의 변동을 생산유발효과라 지칭하며, 산업연관분석은 이를 계측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생산유발효과를 계측함에 있어서 역행렬을 이용한 수학적 방법으로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는데,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냄
- 투입계수 및 생산유발계수의 유도과정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해설서를 참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자 함
- 한편,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할 경우, 순수한 국내생산과급효과와 수입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워짐
- 따라서 순수한 국내생산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제외된 국산거래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X = A^d X + F^d \quad \langle \text{식 3} \rangle$$

$$X = (I - A^d)^{-1} F^d \quad \langle \text{식 4} \rangle$$

- 여기서 A^d 와 F^d 는 국산거래표를 통해 도출된 투입계수와 최종수요를 의미하며, $(I - A^d)^{-1}$ 는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산출의 총 변화량을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임

1.2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부문의 산출(또는 투자)이 1원 만큼 증가하였을 때, 해당 부문을 제외한 타 산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액을 의미함
-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분석대상이 되는 산업을 외생부문으로 분리하여야 함. 예를 들어 분석대상이 되는 산업이 건설부문인 경우, 건설부문을 외생화하여 분석을 수행해야함
- <식 4>에서 최종수요가 변동이 없는, 즉 $\Delta F^d = 0$ 으로 가정하고, 건설부문을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하여 생산유발효과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X = X_o + X_c \quad \text{<식 5>}$$

$$X_o = (I - A^d)^{-1} \cdot A_c^d \cdot X_c \quad \text{<식 6>}$$

- 여기서, X = 총생산유발액
- X_o = 건설부문 생산(투자)이 타 산업부문에 미친 생산유발금액
- X_c = 건설부문 산출(투자)액
- A_c^d = 건설부문의 국산투입계수
- $(I - A^d)^{-1}$ = 건설부문이 외생화된 국산투입계수의 역행렬

1.3 부가가치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부문의 산출(또는 투자)이 1원 만큼 증가하였을 때, 해당 부문을 제외한 타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의미함
-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앞에서 예로 든 건설부문을 외생화하면 다음 식이 유도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A^v X = A_o^v X_o + A_c^v X_c \quad \text{<식 7>}$$

$$A_o^v X_o = \widehat{A_o^v} (I - A^d)^{-1} \cdot A_c^d \cdot X_c \quad \text{<식 8>}$$

- 여기서, $A^v X$ = 총부가가가치유발금액
- $A_o^v X_o$ = 건설부문이 유발한 간접 부가가치유발금액
- $A_c^v X_c$ = 건설부문을 통한 직접 부가가치유발금액

\hat{A}_o^v = 건설부문이 제외된 부가가치유발계수

X_c = 총사업비(투자금액)

A_c^d = 건설부문의 국산투입계수

$(I - A^d)^{-1}$ = 건설부문이 외생화된 국산투입계수의 역행렬

1.4 취업유발효과

- 노동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특정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 즉 노동계수뿐만 아니라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가 취업계수인지, 고용계수인지에 따라 취업자 수(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를 기준으로 한 취업유발계수, 그리고 피용자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계수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L = \hat{l}_w (I - A^d)^{-1} (X_c) \quad \text{<식 9>}$$

· 여기서 $\hat{l}_w (I - A^d)^{-1}$ = 취업유발계수행렬

\hat{l}_w =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X_c = 총사업비(투자금액)

2 분석자료 및 가정

2.1 분석자료

- 2차 발전기본계획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한국은행의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함
- 산업연관표에서 생산자가격평가표(국산거래표), 고용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별 파급효과도 분석이 가능하나, 이 경우 어촌부문 및 어항부문의 투자계획이 지역별로 수립되어야 함
- 2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어항부문은 지역별 투자계획이 구분되나, 어촌부문은 공모 사업 형태가 많고, 획일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업이 많음
- 따라서 총괄적인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차 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전국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한편, 한국은행에서 이미 공표된 지역산업연관표는 2005년판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약 10여 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이용하기에는 최근의 경제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2011년 산업연관표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16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 통합소분류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동 표를 분석목적에 맞게 총 28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였음

〈표 5.7〉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 산업 재분류

번호	산업분류	번호	산업분류
1	농림축산업(농림어업서비스)	15	수송장비
2	수산업(어획,양식)	16	기타제조업제품
3	광산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4	음식료품	18	건설
5	섬유 및 가죽제품	19	도소매
6	목재 및 종이제품	20	음식점 및 숙박
7	인쇄 및 복제	21	운수
8	석유 및 석탄제품	22	통신 및 방송
9	화학제품	23	금융 및 보험
10	비금속광물제품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1	금속제품(제1차 금속제품 포함)	25	공공행정 및 국방
12	일반 기계	26	교육 및 보건
13	전기 및 전자기기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4	정밀기기	28	기타

- 분류에 있어서는 대분류(28개 산업) 수준을 따르되, 수산업(수산어획, 수산양식)을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였음
- 총 28개 산업 중 파급효과 분석의 고려 대상이 되는 건설(농림수산토목 포함)부문은 18번째로 분류함

2.2 가 정

- 경제적 파급효과는 2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 가운데 건설(농림수산토목)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자 수 증가를 계량화하여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함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세부 사업들 가운데 건설(토목)사업으로 명확히 분류되는 사업 이외에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 홍보사업, 조사용역, 인력 육성, 자매 결연 등 산업연관표 상에서 특정 산업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일회성 정책사업은 사실상 비중이 미미하여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음²⁾

- 이와 같이 가정하면 산업연관분석 대상사업의 투자계획은 어촌부문의 경우, 중기 4,084억 원, 장기 3,936억 원으로 총 8,020억 원임. 어항부문은 중기 20,321억 원, 장기 44,123억 원으로 총 64,444억 원임

〈표 5.8〉 산업연관분석 대상 사업의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투자계획			분석 대상사업 투자계획		
	중기	장기	합계	중기	장기	합계
어촌부문	4,473	4,800	9,273	4,084	3,936	8,020
어항부문	20,891	45,540	66,371	20,321	44,123	64,444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3.1 어촌부문 투자효과

3.1.1 생산유발효과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중기(2014~2018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토목) 자체 투자금액 4,084억 원과 타 산업에 4,573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8,657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이후, 즉 장기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건설 투자액 3,936억 원에 타 산업의 생산유발액 4,408억 원을 합친 총 8,344억 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 세부 산업별로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금속제품 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2) 어촌부문 투자계획에서는 문화어촌 구축, 어촌경영 Doctors 지원사업, 인력육성 사업, 자매결연 강화, 재능기부 활성화, 어촌찾아가기 활성화,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사업,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사업,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확산, 어촌공동체 내외부의 갈등 조정사업이 제외되었다. 어항부문 투자계획에서는 어항정보 시스템 구축, 수리현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대국민 홍보 사업이 제외되었다.

〈표 5.9〉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 억 원)

구 분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금액		
			중기	장기	중장기 합계
1	농림축산업	0.0043	18	17	35
2	수산업(어획,양식)	0.0005	2	2	4
3	광산품	0.0077	32	30	62
4	음식료품	0.0063	26	25	50
5	섬유 및 가죽제품	0.0059	24	23	47
6	목재 및 종이제품	0.0208	85	82	166
7	인쇄 및 복제	0.0027	11	11	22
8	석유 및 석탄제품	0.0626	255	246	502
9	화학제품	0.0799	326	314	640
10	비금속광물제품	0.0923	377	363	740
11	금속제품	0.3625	1,480	1,427	2,907
12	일반 기계	0.0460	188	181	369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729	298	287	585
14	정밀기기	0.0028	12	11	23
15	수송장비	0.0087	36	34	70
16	기타제조업제품	0.0079	32	31	64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285	117	112	229
19	도소매	0.0625	255	246	501
20	음식점 및 숙박	0.0121	49	47	97
21	운수	0.0355	145	140	285
22	통신 및 방송	0.0136	55	53	109
23	금융 및 보험	0.0414	169	163	332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999	408	393	801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4	2	2	3
26	교육 및 보건	0.0096	39	38	77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101	41	40	81
28	기타	0.0225	92	89	180
합계(타 산업 생산유발금액)		-	4,573	4,408	8,981
건설부문 자체 투자금액		-	4,084	3,936	8,020
경제 전체 생산유발금액		-	8,657	8,344	17,001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3.1.2 부가가치 유발효과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중장기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토목)부문에서 4,860억 원과 더불어 타 산업에서 3,402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8,262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 산업별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금속제품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크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등의 순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표 5.10〉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 억 원)

구 분		부가가치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금액		
			중기	장기	증장기 합계
1	농림축산업	0.0034	14	13	27
2	수산업(어획,양식)	0.0004	2	1	3
3	광산품	0.0056	23	22	45
4	음식료품	0.0051	21	20	41
5	섬유 및 가죽제품	0.0033	14	13	27
6	목재 및 종이제품	0.0030	12	12	24
7	인쇄 및 복제	0.0010	4	4	8
8	석유 및 석탄제품	0.0488	199	192	392
9	화학제품	0.0330	135	130	265
10	비금속광물제품	0.0381	156	150	306
11	금속제품	0.1386	566	546	1,112
12	일반 기계	0.0302	123	119	242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556	227	219	446
14	정밀기기	0.0022	9	8	17
15	수송장비	0.0054	22	21	44
16	기타제조업제품	0.0035	14	14	28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159	65	63	128
19	도소매	0.0039	16	15	31
20	음식점 및 숙박	0.0028	11	11	22
21	운수	0.0057	23	22	46
22	통신 및 방송	0.0007	3	3	6
23	금융 및 보험	0.0026	10	10	20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072	29	28	58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1	0	0	0
26	교육 및 보건	0.0024	10	9	19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21	9	8	17
28	기타	0.0037	15	15	30
합계(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액)		-	1,732	1,670	3,402
건설부문 자체 부가가치 유발액		-	2,475	2,385	4,860
경제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	4,207	4,055	8,262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3.1.3 취업유발효과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중장기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토목)부문 자체의 취업유발인원이 6,920명, 그리고 투자를 통해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원이 3,757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10,676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1〉 어촌부문 투자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 명/십억 원, 명)

구 분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인원		
		중기	장기	중장기 합계
간접 취업유발효과	4.68	1,913	1,844	3,757
직접 취업유발효과	8.63	3,524	3,396	6,920
합계	13.31	5,437	5,240	10,676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3.2 어항부문 투자효과

3.2.1 생산유발효과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중기(2014~2018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토목) 자체 투자금액 2조 321억 원과 타 산업에 2조 2,756억 원의 생산을 유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4조 3,077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이후, 즉 장기적인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건설부문 투자액 4조 4,123억 원에 타 산업의 생산유발액 4조 9,409억 원을 합친 총 9조 3,532억 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표 5.12〉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 억 원)

구 분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금액		
			중기	장기	중장기 합계
1	농림축산업	0.0043	88	192	280
2	수산업(어획,양식)	0.0005	11	23	34
3	광산품	0.0077	157	342	499
4	음식료품	0.0063	127	276	403
5	섬유 및 가죽제품	0.0059	119	258	377
6	목재 및 종이제품	0.0208	422	916	1,337
7	인쇄 및 복제	0.0027	55	118	173
8	석유 및 석탄제품	0.0626	1,271	2,760	4,032
9	화학제품	0.0799	1,623	3,524	5,147
10	비금속광물제품	0.0923	1,875	4,071	5,946
11	금속제품	0.3625	7,366	15,993	23,358
12	일반 기계	0.0460	936	2,032	2,967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729	1,481	3,216	4,697
14	정밀기기	0.0028	58	125	183
15	수송장비	0.0087	177	384	561
16	기타제조업제품	0.0079	161	349	510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285	580	1,259	1,839
19	도소매	0.0625	1,270	2,758	4,028
20	음식점 및 숙박	0.0121	245	532	777
21	운수	0.0355	721	1,566	2,287
22	통신 및 방송	0.0136	276	599	875
23	금융 및 보험	0.0414	842	1,827	2,669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999	2,030	4,408	6,438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4	9	19	27
26	교육 및 보건	0.0096	194	422	616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101	206	446	652
28	기타	0.0225	457	993	1,450
합계(타 산업 생산유발금액)		-	22,756	49,409	72,165
건설부문 자체 투자금액		-	20,321	44,123	64,444
경제 전체 생산유발금액		-	43,077	93,532	136,60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3.2.2 부가가치 유발효과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중기(2014~2018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토목)부문에서 1조 2,314억 원과 더불어 타 산업에서 8,62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2조 934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이후, 즉 장기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건설부문이 2조 6,737억 원, 타 산업의 유발액이 1조 8,717억 원으로 총 4조 5,454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표 5.13〉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 억 원)

구 분		부가가치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금액		
			중기	장기	중장기 합계
1	농림축산업	0.0034	69	151	220
2	수산업(어획,양식)	0.0004	8	16	24
3	광산품	0.0056	113	246	359
4	음식료품	0.0051	103	225	328
5	섬유 및 가죽제품	0.0033	67	146	213
6	목재 및 종이제품	0.0030	62	134	196
7	인쇄 및 복제	0.0010	20	44	64
8	석유 및 석탄제품	0.0488	992	2,155	3,147
9	화학제품	0.0330	670	1,456	2,126
10	비금속광물제품	0.0381	775	1,683	2,458
11	금속제품	0.1386	2,817	6,117	8,934
12	일반 기계	0.0302	614	1,333	1,947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556	1,129	2,451	3,580
14	정밀기기	0.0022	44	95	139
15	수송장비	0.0054	110	240	350
16	기타제조업제품	0.0035	71	154	225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159	324	703	1,026
19	도소매	0.0039	79	172	251
20	음식점 및 숙박	0.0028	56	122	178
21	운수	0.0057	116	251	367
22	통신 및 방송	0.0007	14	31	45
23	금융 및 보험	0.0026	52	113	165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072	146	318	464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1	1	3	4
26	교육 및 보건	0.0024	48	105	153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21	42	92	134
28	기타	0.0037	76	165	241
합계(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액)		-	8,620	18,717	27,337
건설부문 자체 부가가치 유발액		-	12,314	26,737	39,050
경제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	20,934	45,454	66,388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3.2.3 취업유발효과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중기(2014~2018년)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토목)부문 자체의 취업유발인원이 17,533명, 그리고 투자를 통해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원이 9,518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27,051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4〉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 명/십억 원, 명)

구 분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인원		
		중기	장기	중장기 합계
간접 취업유발효과	4.68	9,518	20,667	30,186
직접 취업유발효과	8.63	17,533	38,069	55,601
합계	13.31	27,051	58,736	85,787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3.3 총괄(어촌+어항) 투자효과

3.3.1 생산유발효과

-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투자에 따른 중기(2014~2018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토목) 투자금액 2조 4,405억 원과 타 산업에 2조 7,329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5조 1,734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이후, 즉 장기적인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건설부문 투자액 4조 8,059억 원에 타 산업의 생산유발액 5조 3,817억 원을 합친 총 10조 1,876억 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표 5.15〉 어촌 및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 억 원)

구 분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금액		
			중기	장기	증장기 합계
1	농림축산업	0.0043	106	209	315
2	수산업(어획,양식)	0.0005	13	26	39
3	광산품	0.0077	189	372	561
4	음식료품	0.0063	153	300	453
5	섬유 및 가죽제품	0.0059	143	281	424
6	목재 및 종이제품	0.0208	506	997	1,504
7	인쇄 및 복제	0.0027	66	129	195
8	석유 및 석탄제품	0.0626	1,527	3,007	4,533
9	화학제품	0.0799	1,949	3,838	5,787
10	비금속광물제품	0.0923	2,252	4,434	6,686
11	금속제품	0.3625	8,846	17,419	26,265
12	일반 기계	0.0460	1,124	2,213	3,337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729	1,779	3,503	5,282
14	정밀기기	0.0028	69	136	205
15	수송장비	0.0087	213	419	631
16	기타제조업제품	0.0079	193	381	574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285	696	1,371	2,068
19	도소매	0.0625	1,525	3,004	4,529
20	음식점 및 숙박	0.0121	294	580	874
21	운수	0.0355	866	1,706	2,572
22	통신 및 방송	0.0136	332	653	984
23	금융 및 보험	0.0414	1,011	1,990	3,001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999	2,438	4,801	7,239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4	10	20	30
26	교육 및 보건	0.0096	233	459	693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101	247	486	733
28	기타	0.0225	549	1,082	1,631
합계(타 산업 생산유발금액)		-	27,329	53,817	81,146
건설부문 자체 투자금액		-	24,405	48,059	72,464
경제 전체 생산유발금액		-	51,734	101,876	153,610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3.3.3 취업유발효과

-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투자에 따른 중기(2014~2018년)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토목)부문 자체의 취업유발인원이 21,056명, 그리고 투자를 통해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원이 11,431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32,488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장기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직접적 취업유발인원이 41,465명, 간접 취업유발인원이 22,511명으로 총 63,975명의 취업을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표 5.17〉 어촌 및 어항부문 투자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 명/십억 원, 명)

구 분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인원		
		중기	장기	중장기 합계
간접 취업유발효과	4.68	11,431	22,511	33,942
직접 취업유발효과	8.63	21,056	41,465	62,521
합계	13.31	32,488	63,975	96,463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제3절 일자리 창출 효과

1 분석방법

1.1 추진배경

-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 70% 로드맵」을 비롯하여 각 부처에서 일자리 관련 주요 대책을 지속적인 발표에 따라 고용률 70% 달성가능성 및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그러나, 각종 대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부족
 - * “고용률 70% 맞춰라”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8.7. 동아일보)
 - 일관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성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부재
 - * 정책의 직접/간접효과, 순 일자리 창출효과, 부처간 중복 등 고려 미흡 /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에 대한 명시적, 구체적 근거 부재
-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자리 효과 추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후적 효과를 검증·평가 실시
 - ▶ 미국 : ARRA(American Recovery&Reinvestment Act) 일자리 창출계획 가이드라인
 - ▶ 호주 : NSW Government의 정부정책의 고용효과 산정 가이드라인
 - ▶ 영국 : 지역재생사업 등 추진여부 결정시 고용효과를 우선 고려
- 일자리 정책의 양적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에 활용
 - i) 각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ii) 과다 추산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제시하며 iii) 자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지침을 제공

1.2 일자리정책 유형과 일자리 창출 효과

1.2.1 일자리 정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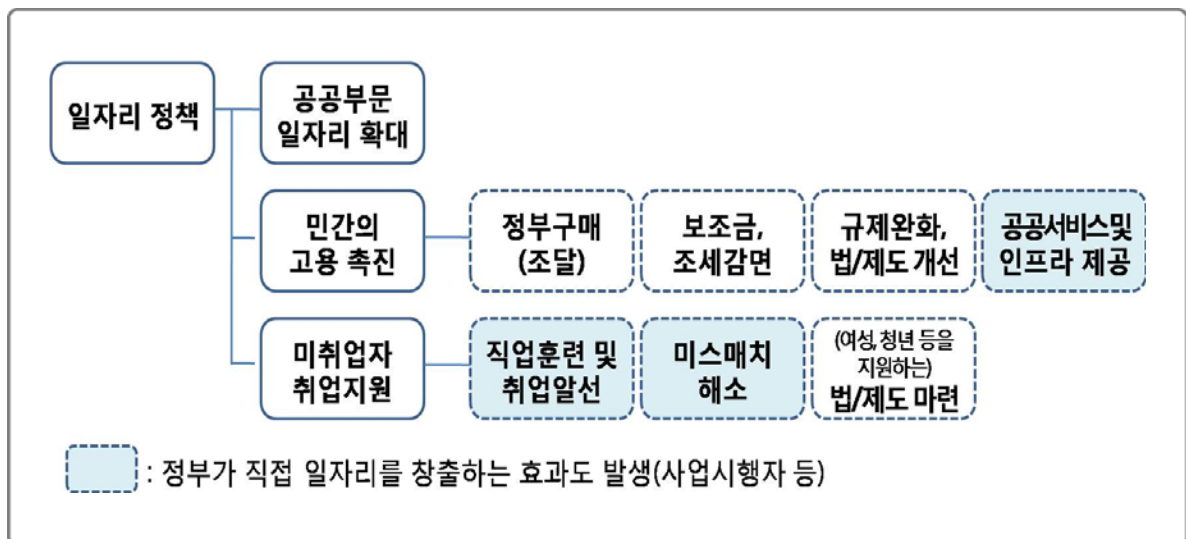
1) 일자리 정책의 분류

- (1)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공공근로 등) 일자리확대 정책
- (2) 민간부문(기업)의 신규고용 촉진 정책(새로운 시장조성 등)

- (정부조달 및 구매) 해당 물품 및 서비스 생산기업의 고용 증가
-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감면) 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제품·서비스 가격의 인하를 가져오고, 매출 및 고용 증가로 연계
-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 확대 및 고용을 촉진하거나 기업의 신규채용(고용유지)을 지원
-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기반시설 구축·R&D(기술개발)·컨설팅 등을 제공 → 이를 활용한 민간기업의 매출증가 및 새로운 시장 확대로 신규고용 창출

(3) 미취업자 취업애로요인 해소 및 미스매치 완화대책(공급측)

- 취업지원패키지 사업대상 확대, 여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 가능성 제고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상담·취업알선
 - ※ 다만,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공공과 민간부문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거나, 미취업자의 취업애로요인을 해소시키면서 직접고용을 창출하기도 함



〈그림 5.3〉 일자리 정책 분류

1.2.2 정책유형별 사례와 고용창출 메커니즘

1) 공공부문(위탁기관 포함) 일자리 확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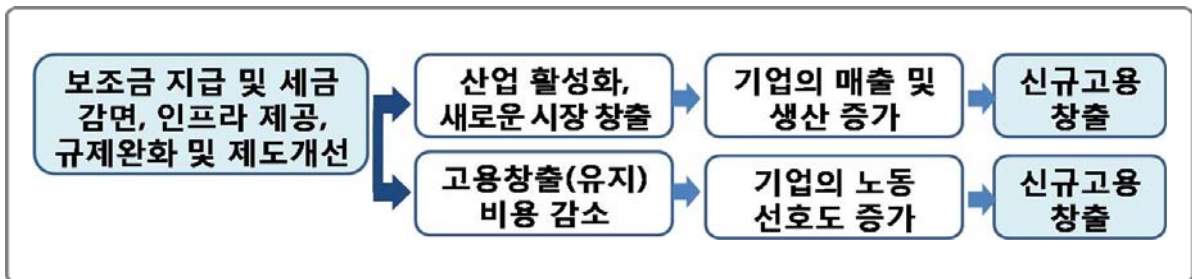
(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 채용
- 4대 사회서비스 (교육, 안전 등) 공공일자리 확대

(2) 정부 사업 참가자 모집 및 시행기관 종사자의 신규채용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 사회적기업 컨설팅 사업 위탁기관 종사 신규채용

2) 민간 부문의 신규고용 촉진(새로운 시장조성 등) 대책



〈그림 5.4〉 민간부문 신규고용 촉진 대책

(1) 정부조달 및 구매

- 조달청을 통한 비품 구매 : 비품 생산기업의 생산인력 증가
- SOC사업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구매 : 자재 생산업체의 일자리 증가

(2) 보조금, 세금감면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고령자 고용 유도
- 시간제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 기업의 시간제근로자 고용 촉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신규고용 촉진

(3)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법·제도 개선

- 사회서비스 가격규제 완화 : 신규수요 창출로 서비스업체의 신규고용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 장시간근로 해소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의 보전을 위해 신규고용, 여성고용 확대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손톱 및 가시 제거) : 중소기업의 운영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로 매출 증가와 신규고용 촉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대 : 1.5t 이하 트럭이 운송 사업자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신규고용 창출

(4)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제공

-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 창업보육시설 구축 : 시설 건설인력 투입 + 건설자재 생산인력 증가 + 보육시설을 활용한 신규 창업자

- 바이오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 지원센터 건설인력 투입 + 건설자재 생산인력 증가 + 지원센터 활용기업의 신규고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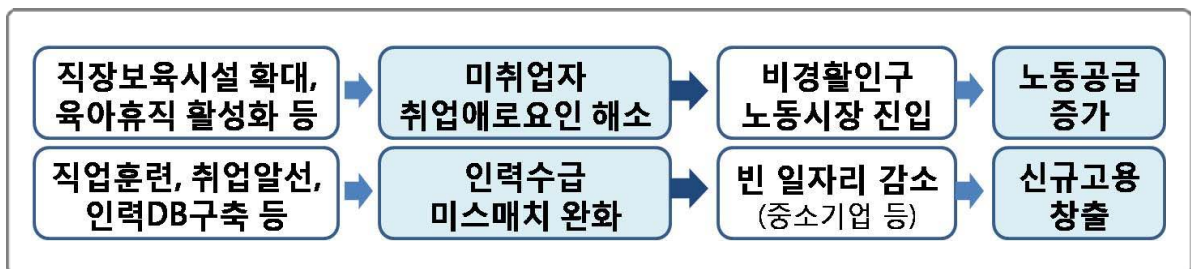
○ R&D지원

- 산학연 기술개발, 중소기업 R&D지원 : R&D 연구인력 채용+ 연구장비 생산인력 증가+기술 활용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촉진

○ 컨설팅, 정보제공, 자금 투/융자 등

-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 컨설팅 수행인력 투입 + 컨설팅 및 투자자금 수혜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촉진
- 정부 3.0 빅데이터 제공 : 시스템 구축인력 투입 + 정보제공 서비스 인력 고용 + 정보활용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촉진

3) 미취업자 취업애로요인 해소 및 미스매치 완화대책(공급측)



〈그림 5.5〉 미취업자 취업애로요인 해소 및 미스매치 완화대책

(1) 여성,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을 지원하는 법·제도 개선

-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 상향 : 경력단절여성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
- 정년연장 운영실태 지도감독 강화 : 장년 근로자의 60세까지 고용 유지

(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및 취업알선

- 직업훈련 사업 : 훈련 실시기관 훈련교사 신규채용 + 훈련 기자재 등 생산인력 투입 + 훈련참여 근로자 신규취업 촉진
- 취업성공패키지 : 위탁기관 담당자 채용 + 프로그램 참가자 신규취업

(3) 미스매치 해소대책

- 중소기업 인력DB 구축 : 빈 일자리에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1.3 정책의 일자리 창출 기여효과 산출방법

1.3.1 기본원칙

- (Rule 1)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취업자취업지속기간 1년 기준 산정
 -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파트타임도 1명으로 산정)
 - 일자리 지속기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
- * 예) 8천명을 3개월간 고용 → $8천명 \times \frac{3개월}{12개월} = 2천명$
 사업기간 3월~12월, 6천명 주1회 근로 → $6천명 \times \frac{10개월}{12개월} = 5천명$
- (Rule 2) 모든 정책의 순 고용창출효과를 산정(고용유지효과 배제)
 - 로드맵 목표(총 238만개)는 현재('12년) 일자리 수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가로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의 합(순증)
 - * 기존 일자리를 대체·구축하는 경우 창출효과에서 제외
 - * 신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모두 포함, 기존 정책은 예산 증액·대상 확대 또는 제도개선 시 그 추가분의 효과만을 포함
 - '13~'17년의 전년대비 고용증가분의 합을 순고용효과로 산정
 - * 예시)

구 분		'12	'13	'14	'15	'16	'17	순고용효과
A사업	일자리 개수 (일자리 순증)	2,000 -	3,000 (1,000)	4,000 (1,000)	5,000 (1,000)	6,000 (1,000)	7,000 (1,000)	5,000명

- (Rule 3)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만을 산정
 - 재정지출 또는 정책시행에 따른 정부의 직접고용, 정부의 재화·서비스 구매로 인한 해당 산업의 고용창출, (정책 시행에 따라) 해당산업 부문에 새로운 시장이 조성되어 발생하는 고용창출
 - 이외의 일자리 창출 지원 효과*는 모두 간접효과에 포함,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서 별도 관리
 - * 해당 산업 생산과정에 연계되지 않은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예: 온라인거래 활성화로 인한 택배업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산업 활성화), 근로자의 소득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증가 등
 - * 시장 추세와 구별하기 어렵거나, 다른 정책의 효과와 중복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간접효과로 간주
 - * 개별부처가 간접효과 산정·발표시 산출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함

- (Rule 4) 가급적 산업*을 기준으로 고용창출효과를 산정
 - 해당산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개수만 적시
 - * 기업 규모별, 대상(여성·청년·고령자)별 산정 시 중복 우려
 - **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상용·임시·일용, 전일·시간제 등)도 함께 표기
- (Rule 5) 정부재정지출의 구축효과*를 고려
 - * 정부재정지출로 발생하는 일자리의 40% 수준은 구축된 민간 일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추산 (복지서비스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2.6, 한고원)
 - 다만, 개별부처 단위에서 이를 고려하기는 어려우므로, 총 합계 또는 발표 단계에서 동 효과를 감안(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Rule 6) 정책시차와 일자리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R&D·SOC사업 등의 경우 신규고용이 창출되기까지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효과발생 시점을 예측하여 계상)
 - 해당년도 창출된 일자리가 익년도에도 유지될 경우 계산 시 주의
 - * 예시) '14년 일자리가 10개 창출되었고, '13년 창출된 일자리(10개)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
 - ▲ 총 일자리 개수: 20개, ▲ 일자리 순증: 10개 ('13년 창출된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총 일자리 개수: 10개, ▲ 일자리 순증: 0개)
- (Rule 7) 시행사업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확인
 -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등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 2> 참고)
 - * 근로계약 체결·근로조건 명시, 임금 적시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및 근로시간 한도 준수, 유급휴가·산전후휴가 보장 등

1.3.2 일자리창출 효과 산출절차

1) 대상사업 선정

- ‘고용률 70% 로드맵 과제’를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 정책여부 확인
 - * 동일한 사업이 중복하여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대상사업 Pool]
 - 고용률 70% 로드맵 과제 : 137개 과제의 세부 실행과제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기존 일자리 사업 : 예산사업 단위
 - 투자활성화대책, 서비스산업발전방안 등 새 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대책

2)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경로 확인

- 대상정책의 일자리 창출경로를 확인 후 고용창출효과 산출방법 결정

[일자리 창출경로]

- 공공부문(위탁기관 포함) 일자리 확대
- 민간 부문의 신규고용 촉진(새로운 시장 조성 등)
- 미취업자 취업으로요인 해소 및 미스매치 완화(공급측)

3)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 (1단계)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상 투입인원·인건비 규모 확인
- (2단계) 기존(유사) 사업의 신규고용 실적에 대한 경험차실태조사 결과 등을 확인·활용(필요 시
기타자료* 활용)
- * 기타 자료 활용 시 우선순위: 기존사업에 대한 논문 및 보고서 → 유사 국내외 사례 → 전문가 의견
- (3단계) 1·2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지출액(또는 매출액) 당 신규고용효과 등을 추정
하여 계산

2 어촌부문

2.1 어촌부문 총괄

- 어촌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다차원적인 소외 및 빈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롯해 삶의 질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귀어·귀촌인에게
어촌개발 투자를 통한 일자리 공급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실업과 삶의 질 저하 문제 해결
- 어촌 투자계획으로 단기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증가와 역량강화 및 인력육성사업으로
양질의 어촌인력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지역 공동체를 재정비함으로써 어촌주민 주도의 상향식 접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도모
 - 어촌에서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이같이 어촌지역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인프라, 제도, 네트워크
등의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향후 추가 확보
- 어촌부분 발전기본계획 수립으로 어촌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
- 어촌부분 일자리 창출 산정결과 중기 5년간(‘14~‘18년) 신규 일자리는 1,973개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8〉 어촌부문 일자리 창출

(단위 : 억 원, 명)

전략 과제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일자리 수 총 계	2,033 (1,973)	110 (50)	253 (143)	1,483 (1,185)	1,550 (112)	2,033 (483)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투 자 비	3,990	70	180	1,143	1,226	1,371
	일자리 수	1,649 (1,609)	82 (42)	209 (127)	1,374 (1,165)	1,467 (93)	1,649 (182)
지속가능한 어촌구현	투 자 비	483(945)	19(200)	35(215)	51(265)	64(265)	314
	일자리 수	384 (364)	28 (8)	44 (16)	64 (20)	83 (19)	384 (301)

※ 투자비의 () : 타 부처 예산

일자리 수의 () : 신규 일자리 창출 수

2.2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전략을 통하여 5년 동안 1,60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9〉 어촌부문 일자리 창출(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13	'14	'15	'16	'17	'18	계 ('14~'18)
계	예산 투입액	3,200	7,000	18,000	114,300	122,600	137,100	399,000
	(예산 순증액)		3,700	11,000	96,300	11,300	14,500	136,800
	일자리 개수	40	82	209	1,374	1,467	1,649	1,649
	(일자리 순증)		42	127	1,165	93	182	1,609
어촌6차 산업화 추진	예산 투입액	-	2,500	3,700	11,900	16,200	31,200	65,500
	(예산 순증액)	-	2,500	1,200	8,200	4,300	15,000	31,200
	일자리 개수	-	27	42	142	194	375	375
	(일자리 순증)	-	27	15	100	52	181	375
어촌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예산 투입액	-	-	2,000	30,000	30,000	30,000	92,000
	(예산 순증액)	-	-	2,000	28,000	-	-	30,000
	일자리 개수	-	-	21	361	361	361	361
	(일자리 순증)	-	-	21	340	-	-	361
어촌체험 마을 활성화	예산 투입액	3,200	4,000	4,500	5,000	5,000	5,000	23,500
	(예산 순증액)	-	700	500	500	-	-	1,700
	일자리 개수	40	49	55	61	61	61	61
	(일자리 순증)	-	9	6	6	-	-	21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예산 투입액	-	500	1,500	30,000	30,000	30,000	92,000
	(예산 순증액)	-	500	1,000	28,500	-	-	30,000
	일자리 개수	-	6	16	361	361	361	361
	(일자리 순증)	-	6	10	345	-	-	361
문화어촌 구축	예산 투입액	-	-	1,300	3,500	4,000	3,300	12,100
	(예산 순증액)	-	-	1,300	2,200	500	-700	3,300
	일자리 개수	-	-	15	41	41	40	40
	(일자리 순증)	-	-	15	26	-	-1	40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예산 투입액	-	-	3,000	27,000	30,000	30,000	90,000
	(예산 순증액)	-	-	3,000	24,000	6,000	-	33,000
	일자리 개수	-	-	36	325	361	361	361
	(일자리 순증)	-	-	36	289	36	-	361
SEA STAY (어촌특화 민박)조성	예산 투입액	-	-	1,300	6,000	6,500	6,600	20,400
	(예산 순증액)	-	-	1,300	4,700	500	100	6,600
	일자리 개수	-	-	15	72	77	78	78
	(일자리 순증)	-	-	15	57	5	1	78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투입액	-	-	400	400	400	500	1,700
	(예산 순증액)	-	-	400	-	-	100	500
	일자리 개수	-	-	5	5	5	6	6
	(일자리 순증)	-	-	5	-	-	1	6
어촌현장 밀착형 인력 지원 및 육성	예산 투입액	-	-	300	500	500	500	1,800
	(예산 순증액)	-	-	300	200	-	-	500
	일자리 개수	-	-	4	6	6	6	6
	(일자리 순증)	-	-	4	2	-	-	6

2.3 지속가능한 어촌 구현

- ‘지속가능한 어촌구현’전략을 통하여 5년 동안 36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20〉 어촌부문 일자리 창출(지속가능한 어촌 구현)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13	'14	'15	'16	'17	'18	계 ('14~'18)
계	예산 투입액	150	1,900	3,500	5,100	6,400	31,400	48,300
	(예산 순증액)		1,715	1,635	1,600	-300	25,000	29,650
	일자리 개수	20	28	44	64	83	384	384
	(일자리 순증)		8	16	20	19	301	364
자매결연 강화	예산 투입액	-	-	600	800	800	800	3,000
	(예산 순증액)	-	-	600	200	-	-	800
	일자리 개수	-	-	8	10	10	10	10
	(일자리 순증)	-	-	8	2	-	-	10
재능기부 활성화	예산 투입액	-	-	200	700	300	300	1,500
	(예산 순증액)	-	-	200	500	-200	-	500
	일자리 개수	-	-	-	6	1	1	1
	(일자리 순증)	-	-	-	6	-5	-	1
어촌 찾아가기 활성화 사업	예산 투입액	150	200	700	700	400	400	2,400
	(예산 순증액)	-	15	535	-	-300	-	250
	일자리 개수	20	20	25	25	23	23	23
	(일자리 순증)	-	-	5	-	-2	-	3
어촌정주환 경개선	예산 투입액	-	-	-	-	-	25,000	25,000
	(예산 순증액)	-	-	-	-	-	25,000	25,000
	일자리 개수	-	-	-	-	-	301	301
	(일자리 순증)	-	-	-	-	-	301	301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예산 투입액	-	-	100	1000	3000	3000	7,100
	(예산 순증액)	-	-	100	900	200	-	1,200
	일자리 개수	-	-	1	13	39	39	39
	(일자리 순증)	-	-	1	12	26	0	39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예산 투입액	-	500	700	700	700	700	3,300
	(예산 순증액)	-	500	200	-	-	-	700
	일자리 개수	-	5	7	7	7	7	7
	(일자리 순증)	-	5	2	-	-	-	7
어촌공동체 갈등 관리	예산 투입액	-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예산 순증액)	-	1,200	-	-	-	-	1,200
	일자리 개수	-	3	3	3	3	3	3
	(일자리 순증)	-	3	-	-	-	-	3

3 어항부문

3.1 어항부문 총괄

- 어항이 지역경제교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투자과 민간투자로 어항공간을 개발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어항투자로 인한 간접적인 효율성 증대 필요
-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어항 개발 등 어항과 주변 공간의 연계 강화 및 어항특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
 - 기존의 어항 기본시설 확충,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국한된 어항개발 사업에서 탈피하고 해양레저산업과의 연계, 지역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어항 안전 및 위생화에 따른 어항 개발의 투자로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
 - 공공부문의 예산투입과 함께 수익 부문의 활발한 민간 투자 유치로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 이같이 어항개발 분야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계법령 개편 등 행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
 - 특화 어항 개발 및 신규어항 개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분야의 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
- 어항분야 발전기본계획 수립으로 기반산업인 어항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어항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어항부문 일자리 창출 산정결과 중기('14 ~ '18년) 5년 동안 2,95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21〉 어항부문 일자리 창출(총괄)

(단위 : 억 원, 명)

전략 과제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일자리 수 총계 (신규 일자리 수)	6,245 (2,951)	3,754 (460)	4,307 (553)	4,974 (667)	5,532 (558)	6,245 (713)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투 자 비	3,718	102	316	714	1,122	1,464
	일자리 수 (신규 일자리 수)	1,751 (1,691)	112 (52)	362 (250)	843 (481)	1,342 (499)	1,751 (409)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투 자 비	17,173	3,036	3,304	3,491	3,556	3,786
	일자리 수 (신규 일자리 수)	4,494 (1,260)	3,642 (408)	3,945 (303)	4,131 (186)	4,190 (59)	4,494 (304)

※ () :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

3.2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통하여 5년 동안 1,69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22〉 어항부문 일자리 창출(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13	'14	'15	'16	'17	'18	계 ('14~'18)
계	예산 투입액	5,900	10,240	31,650	71,350	112,200	146,390	371,830
	(예산 순증액)	-	4,340	21,410	39,700	40,850	34,190	140,490
	일자리 개수	60	112	362	843	1,342	1,751	1,751
	(일자리 순증)	-	52	250	481	499	409	1,691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예산 투입액	-	3,000	6,000	30,000	60,000	90,300	189,300
	(예산 순증액)	-	3,000	3,000	24,000	30,000	30,300	90,300
	일자리 개수	-	31	62	361	722	1,087	1,087
	(일자리 순증)	-	31	31	299	361	365	1,087
어항 이용고도화	예산 투입액	4,600	4,340	12,000	12,000	20,000	22,990	71,330
	(예산 순증액)	-	-260	7,660	-	8,000	2,990	18,390
	일자리 개수	47	52	144	144	240	275	275
	(일자리 순증)	-	5	92	-	96	35	228
아름다운 어항 조성	예산 투입액	-	-	500	9,000	9,000	12,200	30,700
	(예산 순증액)	-	-	500	8,500	-	3,200	12,200
	일자리 개수	-	-	5	108	108	146	146
	(일자리 순증)	-	-	5	103	-	38	146
‘어촌 역(驛)’ 어항 육성	예산 투입액	-	500	10,000	10,000	10,000	10,200	40,700
	(예산 순증액)	-	500	9,500	-	-	200	10,200
	일자리 개수	-	5	120	120	120	122	122
	(일자리 순증)	-	5	115	-	-	2	122
어항 유희부지 활용	예산 투입액	-	-	500	2,500	10,000	7,700	20,700
	(예산 순증액)	-	-	500	2,000	7,500	-2,300	7,700
	일자리 개수	-	-	5	30	120	91	91
	(일자리 순증)	-	-	5	25	90	-29	91
수리현상 모니터링 추진	예산 투입액	1,000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예산 순증액)	-	500	-	-	-	-	500
	일자리 개수	10	15	15	15	15	15	15
	(일자리 순증)	-	5	-	-	-	-	5
어항종합정 보시스템 (FIS) 구축	예산 투입액	300	900	1,150	6,350	1,700	1,500	11,600
	(예산 순증액)	-	600	250	5,200	-4,650	-200	1,200
	일자리 개수	3	9	11	65	17	15	15
	(일자리 순증)	-	6	2	54	-48	-2	12

3.3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전략을 통하여 5년 동안 1,26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23〉 어항부문 일자리 창출(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13	'14	'15	'16	'17	'18	계 ('14~'18)
계	예산 투입액	269,714	303,665	330,372	349,070	355,583	378,599	1,717,289
	(예산 순증액)	-	34,251	26,407	18,698	6,513	23,016	108,885
	일자리 개수	3,234	3,642	3,945	4,131	4,190	4,494	4,494
	(일자리 순증)	-	408	303	186	59	304	1,260
(가칭) 클린어항 육성	예산 투입액	-	-	10,000	10,000	10,000	10,200	40,200
	(예산 순증액)	-	-	10,000	-	-	200	10,200
	일자리 개수	-	3	120	120	120	122	122
	(일자리 순증)	-	3	117	-	-	2	122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예산 투입액	-	145	2,018	10,598	15,783	9,311	37,855
	(예산 순증액)	-	145	1,873	8,580	5,185	-6,472	9,311
	일자리 개수	-	1	12	81	117	68	68
	(일자리 순증)	-	1	11	69	36	-49	68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예산 투입액	-	-	300	500	5,000	5,300	11,100
	(예산 순증액)	-	-	300	200	4,500	300	5,300
	일자리 개수	-	-	3	6	60	63	63
	(일자리 순증)	-	-	3	3	54	3	63
어항시설 조기완공	예산 투입액	162,098	158,230	159,588	170,500	195,000	189,600	872,918
	(예산 순증액)	-	-3,868	1,358	10,912	24,500	-5,400	27,502
	일자리 개수	1,947	1,900	1,915	2,045	2,338	2,273	2,273
	(일자리 순증)	-	-47	15	130	293	-65	326
취약어항시 설적기보강 및 노후어항 정비개선	예산 투입액	101,641	141,974	147,966	144,472	116,800	141,188	692,400
	(예산 순증액)	-	40,333	5,992	-3,494	-27,672	24,388	39,547
	일자리 개수	1,216	1,701	1,774	1,732	1,400	1,693	1,693
	(일자리 순증)	-	485	73	-42	-332	293	477
어항편익시 설 지속 확충	예산 투입액	5,975	2,316	8,000	8,000	8,000	8,000	34,316
	(예산 순증액)	-	-3,659	5,684	-	-	-	2,025
	일자리 개수	71	27	95	95	95	95	95
	(일자리 순증)	-	-44	68	-	-	-	24
신규어항 개발	예산 투입액	-	1,000	2,500	5,000	5,000	15,000	28,500
	(예산 순증액)	-	1,000	1,500	2,500	-	10,000	15,000
	일자리 개수	-	10	26	52	60	180	180
	(일자리 순증)	-	10	16	26	8	120	180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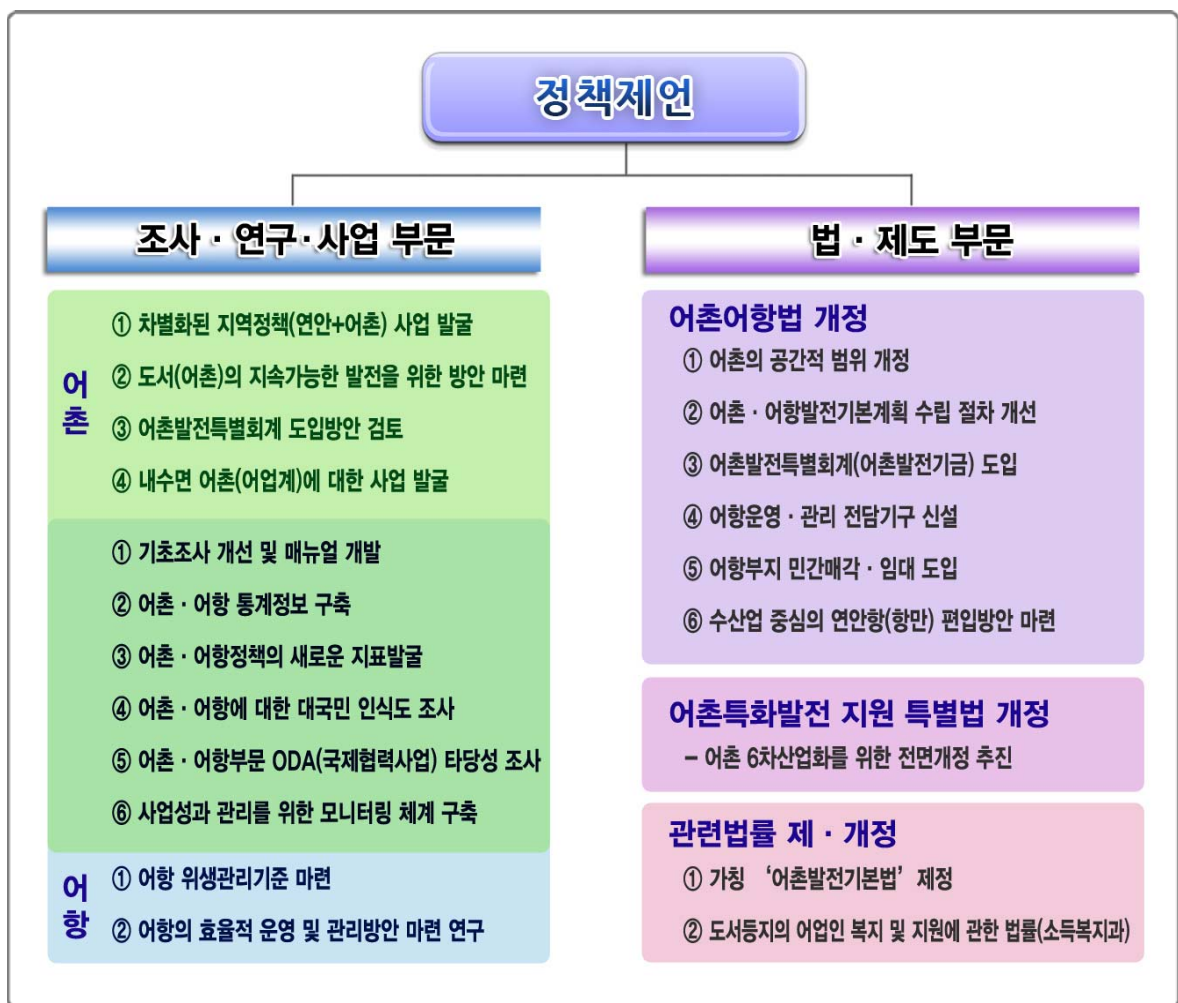
제1절 결론

- 지난 2008년 「어촌·어항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1차 발전기본계획(2009~2013년)이 수립되었고, 5년간 사업집행이 이루어져 성과와 한계도 나타났음
 - 1차 발전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는 어촌체험관광 및 전문인력 양성, 도어교류, 어선 안전수용률, 다기능어항 개발에서 나타났음
 - 반면 어촌·어항의 신규사업 발굴, 지자체·민간의 참여, 사업별 성과측정 등에서 한계를 보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음
- 2차 발전기본계획(2014~2018년)이 수립되는 2013년은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재출범하면서 어촌·어항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는 해로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음
- 2차 발전기본계획은 “국민행복과 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어촌”을 비전으로 「살고 싶은 부유한 어촌 키우기(어촌)」, 「가치 있고 안전한 어항 만들기(어항)」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4대 추진전략, 12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음
 - 어촌정책은 크게 소득창출을 위한 통한 부유한 어촌 조성 and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구현의 두 축으로 나누어 18개의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
 - 어항정책은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과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의 두 축으로 나누어 17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
- 2차 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2조 5,36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음
 - 어촌부문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473억 원으로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에 3,990억 원, 지속가능한 어촌 구현에 483억 원이 산출되었음
 - 어항부문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조 891억 원으로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3,718억 원,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구축에 1조 7,173억 원이 산출되었음
- 2차 발전기본계획의 어촌·어항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조 1,73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9,509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2,488명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2차 발전기본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어촌부문 1,933개, 어항부문 2,951개로 총 4,84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제2절 정책제언

1 개요

- 정책제언은 2차 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계와 향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연구·사업 부문과 법·제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먼저, 조사·연구·사업 부문은 공통, 어촌, 어항으로 세분하여 기존 조사체계에서 개선되거나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그림 6.1〉 2차 발전기본계획의 정책제언

- 법·제도 부문에서는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과 기타 관련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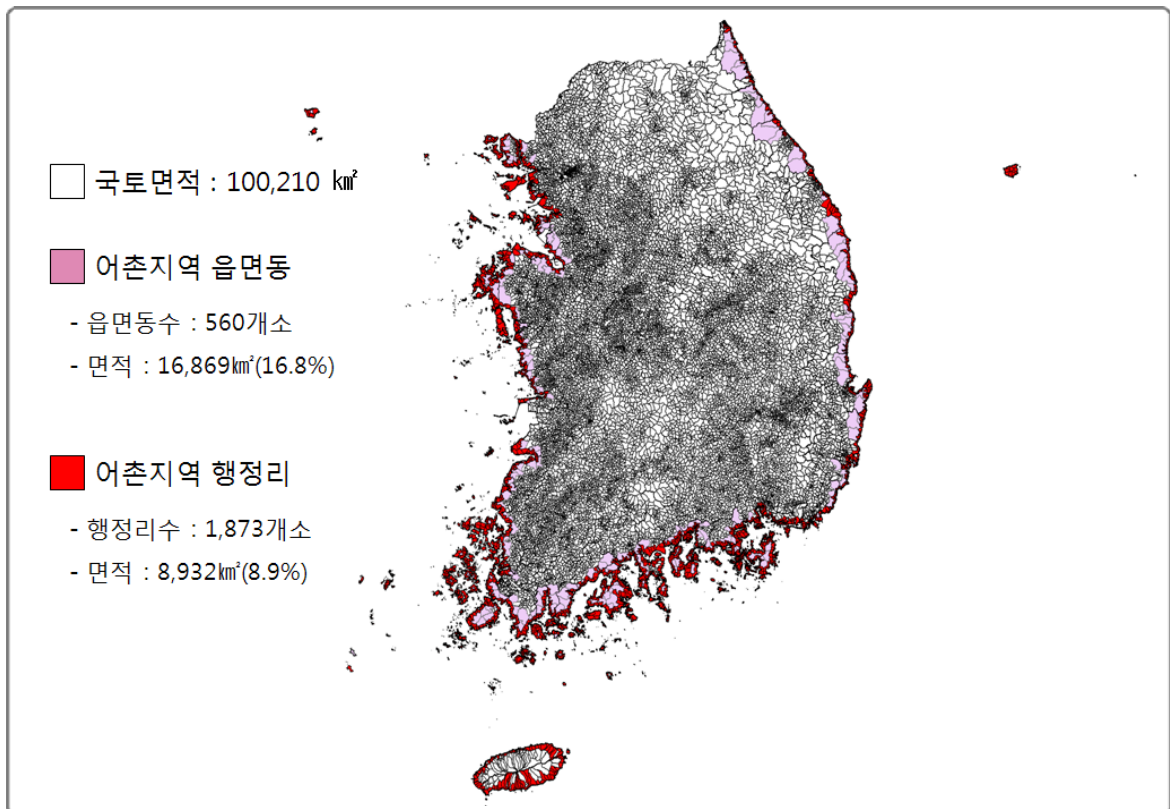
2 조사·연구·사업 부문

2.1 공통

2.1.1 기초조사 개선 및 매뉴얼 마련

1) 조사대상(범위)

- 현행 어촌의 공간적 정의는 읍·면·동으로 어촌의 특성과 실태가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조사(「어촌·어항법」 제3조)가 지금까지 두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어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난 두 차례의 기초조사에서는 시·군 통계연보 자료에 근거한 읍면별 통계자료를 다시 정리함으로써 기초조사의 성과물이 사실상 정책방향에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음



〈그림 6.2〉 행정구역별 어촌지역 비교

- 어촌에 대한 공간적 정의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촌의 고유성과 특성이 더욱 잘 드러나는 행정리 또는 일본의 어업집락(漁業集落)과 유사한 별도의 어촌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 특히, 어촌정책의 방향설정은 매 5년마다 시행되는 기초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향후 매우 중요한 과제임

2) 조사내용

- 기초조사의 조사내용은 「어촌·어항법」시행령 제3조(기초조사·정밀조사의 내용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항목과 조사결과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초조사는 매5년 마다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내용과 세부항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결과의 일관성과 상호 비교분석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6.1〉 기초조사의 조사내용

구분	현행		변경
기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 국제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본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기본 세부항목 +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항목 발굴
정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매뉴얼 개발

- 기초조사는 방대한 조사항목과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촌·어항정책의 패러다임이 변경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과 그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새로운 항목 등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 특히,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어업총조사(지역실태조사)를 고려하여 조사항목과 조사시점, 조사대상을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효과적으로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함
- 기초조사는 국가 및 정부승인 통계와 현장 실태조사 등 조사방법 및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계열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어촌·어항의 여건변화와 미래상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이 재정비되어야 함

2.1.2 어촌·어항 통계정보 구축

- 어촌·어항은 개발(지정), 운영·관리, 이용자, 국민(관광객) 등 다양한 주체가 관계된 복합공간으로 산업, 인력, 정주환경, 복지, 관광 등 세분화된 정보가 생성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함
- 어항은 어항정보시스템(FIS) 구축을 위한 ISP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나 어촌과 관련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계정보가 구축되어야 함
- 정부, 유관기관, 지자체 등 분산, 독립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2.1.3 어촌·어항정책의 새로운 지표 발굴

- 어촌·어항은 전통적으로 수산업의 생산기반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새로운 지표의 발굴이 필요함
- 지금까지 어촌의 어가소득, 어가인구, 어항은 어선의 안전수용률 등 기초적인 지표에 한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삶의 질, 어촌산업, 어촌관광 등 보다 정량적이고 질적인 어촌·어항정책의 새로운 지표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어촌·어항의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협의의 시성과 측정지표의 미비가 가장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어촌·어항정책의 새로운 지표 발굴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추진되어야 하며, 연구과제는 다음의 착안사항을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함

〈표 6.2〉 어촌·어항정책의 신규 지표 발굴 시 착안사항

구 분	내 용
현행 지표체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별 분류기준의 상이성 - 양적·객관적 지표에의 편중성 - 통계자료의 낮은 활용성 - 성과 측정지표의 미비성
신규 지표의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의 대표성 - 지표의 이용자 접근성 - 지표의 업무 활용도 - 지표의 정책 연계성 - 지표 분류체계의 적합성

2.1.4 어촌·어항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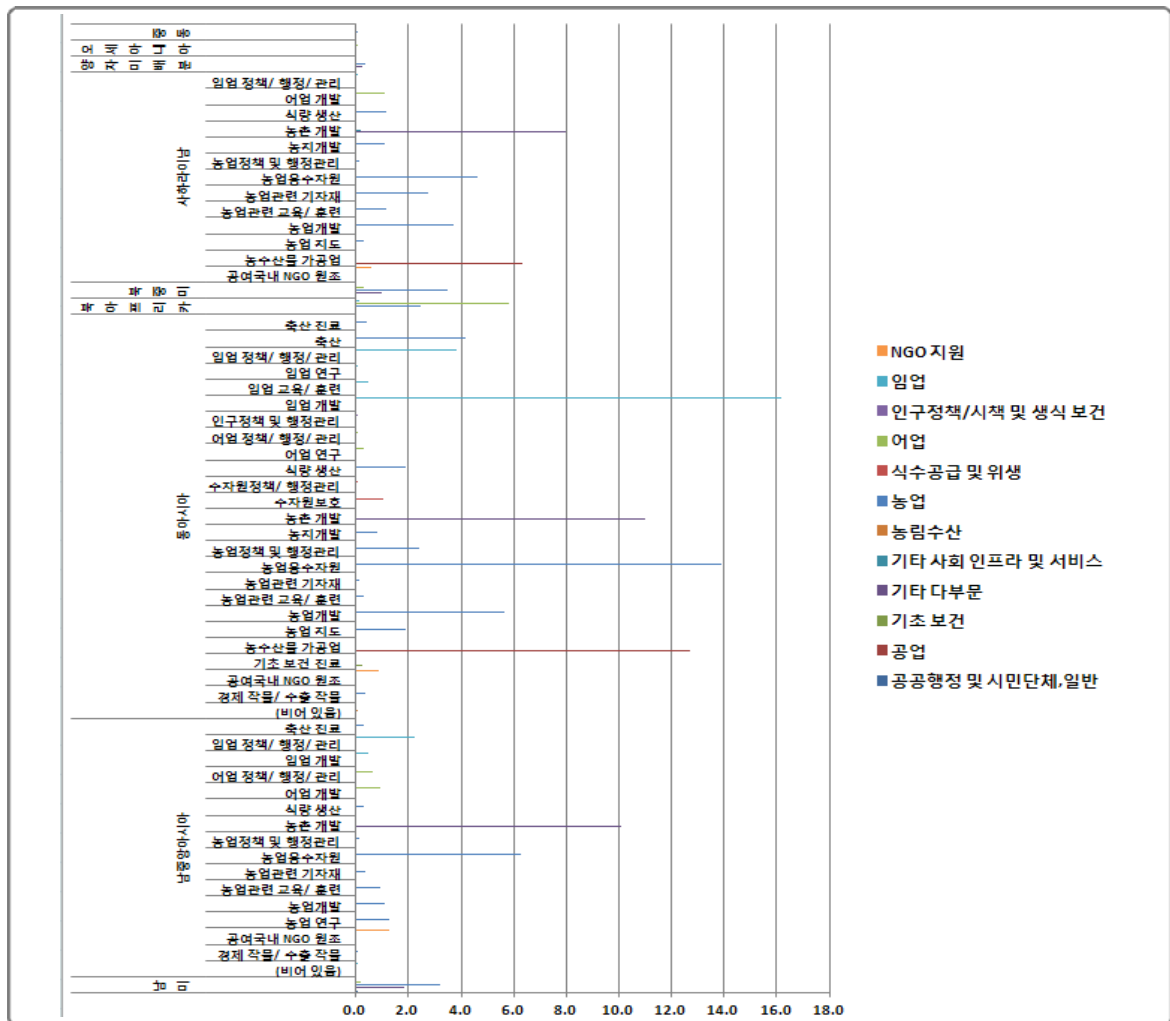
- 어촌·어항의 가치와 여가공간으로서 국민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어촌·어항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국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어촌·어항의 다원적 가치와 높은 국민적 수요보다 그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어촌·어항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는 어촌·어항에 대한 일반적 인식, 국민 행복시대의 어촌·어항 인식 변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다원적 가치에 따른 지불 의사 등을 설계하여 조사

〈표 6.3〉 어촌·어항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개요(안)

구분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 서울은 강남, 강북으로 구분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 20~49세 남녀 - 총 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 20~49세 남녀 - 총 500명
비고	어촌·어항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일반적인 이해도를 기준으로 조사	어촌·어항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자료를 보여준 후 조사

2.1.5 어촌·어항부문 ODA(공적개발원조) 타당성 검토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농림수산물분야 ODA 사업 가운데 농촌개발(32백만 달러), 농업용수자원(27백만 달러), 농수산물 가공업(19백만 달러), 임업개발(16백만 달러), 농업개발(13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어촌개발은 아직 ODA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ODA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경제규모 위상에 맞춰 지원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어항개발에 대한 ODA 지원 검토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적당한 수원국을 찾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자료 : 이대섭 외, 농림수산물 분야 ODA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p.34

〈그림 6.3〉 농림수산물분야 ODA 사업 지원현황

- 어촌·어항개발은 수산자원 확보와 소규모 영세어업인 지원 등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KOICA(국제협력단)와 협력방안 마련 및 적정 수원국 발굴이 중요한 과제임

2.1.6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어촌·어항분야는 다기능어항 개발, 어촌관광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정량적 성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과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금까지 모니터링 사업은 담당 공무원, 이해당사자(어업인 등)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과를 측정하였으나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각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함

2.2 어촌

2.2.1 차별화된 지역정책 사업 발굴

- 지금까지 어촌개발은 지역정책으로서 과거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해수부 차원의 독립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지금까지 지역정책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어촌정책은 사업수단이 다양하지 못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반면, 농촌정책은 다양한 사업수단으로 인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사업의 재편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 2차 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어촌정책은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차별화된 사업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2.2.2 도서(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1) 도서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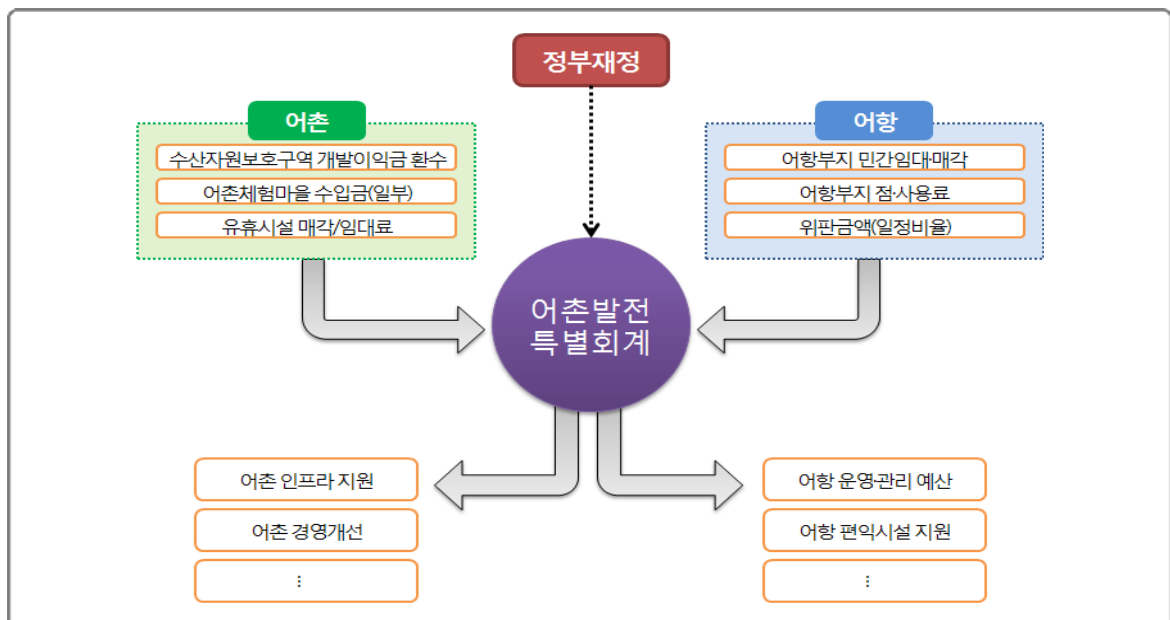
- 도서개발은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했으나 해양 디자인,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의 시각에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지금까지 도서개발은 안전행정부(도서종합개발사업), 국토교통부(국토 끝 섬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가고 싶은 섬 만들기) 등 관광개발, 정주기반 개선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함
 - 도서지역은 수산업을 기반으로 어촌경제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해양수산부가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도서개발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끌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도서어촌에 대한 기초연구 확대

- 지금까지 도서지역에 대한 기초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에서 과거 도서백서를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고 국가차원에서 통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연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해양수산부가 어촌산업, 삶의 질 제고, 기초 인프라 확충, 어촌·해양관광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2.3 어촌발전특별회계 도입방안 검토

- 어촌·어항의 개발은 과거 어업생산기반 확충에서 벗어나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수단과 예산은 한계가 있음
- 특히, 어항부지 점·사용료나 어항부지 민간임대·매각에 따른 예산은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되지만 이를 다시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있음
- 어촌발전특별회계는 어촌·어항의 다양화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어촌발전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지원된 유희시설의 매각/임대료, 어항부지 민간매각 및 임대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함
- 어촌발전특별회계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 어촌·어항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 유럽의 경우에는 지역발전기금(ERDF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별도로 마련하여 농어촌개발 및 어촌지역의 구조적응 지원에 한해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



〈그림 6.4〉 어촌발전특별회계 도입방안(안)

2.2.4 내수면 어촌에 대한 사업 발굴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에서는 어촌지역을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호수 등 내수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척농지에서도 어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내수면 어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내수면 어촌에 대한 사업은 관상어 분야에서 정책발굴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브랜드, 내수면 양식산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내수면 어촌개발은 농산어촌 통합형 지역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어촌정책의 범위와 영역 확대 측면에서 향후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그림 6.5〉 내수면 어촌 개발방향 예시

2.3 어항

2.3.1 어항 위생관리기준 마련

- 한·EU FTA 체결 등으로 수산물 위생관리 국제규제 강화, 수입 수산물 증가로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고조
- 어항구역 내 산지위판장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개인위생,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 Pest Control 등에 위생기준과 관리방안 부재
- EU, 일본 등 선진국은 어항구역 내 HACCP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륙부터 출하까지 철저히 관리
- 특히,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품질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위생관리형 어항정비사업 추진 및 어항의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1) 어항 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단계별 확대

- 어항구역 내 수산물 처리, 도입시설, 항내 수질,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등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위생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가 필요한 영역,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 수질관련(항내 수질, 물 공급, 얼음공급 기준)
 - 작업환경 관련(하역·위판장, 적재·반출, 관계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

〈표 6.4〉 일본 어항 위생관리기준 예시

위생품질평가항목	위생 품질 관리 기준
정박지 환경의 보전·폐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벽이나 위판장 등에서 배수와 다음 처리 시설의 정비 - 양륙 부두의 배출구 설치의 해결 - 필요에 따른 해수 교환형 시설로의 개량, 진흙 파설 실시
깨끗한 작업 환경 확보를 위한 세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바닷물 또는 음용적인 물의 공급 시설 정비 ※ 양호한 바닷물: PH, SS, 대장균군, COD, T-N
시설·기구 등의 세정수 수산물의 이용 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해수 또는 음용 적합 물 공급 시설의 정비 - 정기적인 수질 조사, 살균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 급수전의 적정 배치
깨끗한 얼음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해수 또는 음용 적합 물 공급 시설의 정비 - 정기적인 수질 조사, 살균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 얼음을 해산물에 공급될 때까지의 청결 유지의 철저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어패류와 분리하는 시설의 정비(필요에 따라) - 폐기물의 노출 방지, 정기적 반출, 정기적 용기 등 세척실시
방풍 방수 방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풍 방수 방진 시설 (지붕 등)의 정비 (필요한 경우)
조류 등 침입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치마, 위판장 등 바닥의 정기적 청소 - 조류 침입 방지 시설 (지붕, 지붕부근 피아노선 등)의 정비
차량 진입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작업 동선 관리 - 하역, 위판장에 차량 진입 방지의 철저
하역·위판장 환경의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환기, 조명 확보 - 교차 없는 작업 동선 확보 - 청정 해수 또는 마시기 적당한 물로 케이스·바닥 등의 청소 실시 - 케이스·바닥 등의 청소 후의 배수의 적정 관리 - 부두에서 낚시 장비 등의 세척·보관 금지 - 적정 수량 용기의 사용 - 창고의 노후화 대책 (필요한 경우) - 장화 소독탱크 등의 설치 - 해산물을 바닥 직접 두는 것 금지
적재·반출 환경의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해수 또는 마시기 적합한 물을 이용한 케이스, 기기류 등 청소 실시 - 하역, 위판장 및 적재 반출 부분의 분리 - 어패류의 차량 등에 의한 배기가스의 영향 방지 - 적재 반출시 노출 방지
운반 차량의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장의 운송 차량의 청소 실시 - 타이어 세척 실시 - 차체의 정기적인 청소 실시 - 적재 반출에 관련된 도로, 케이스 포장, 빗물 배수 대책의 실시
사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청결 - 깨끗한 옷차림 - 흡연실의 구분 등
화장실 등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위생적 배치 - 바닥에 식중독 균의 증식 방지

- 단기적으로는 어항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HACCP 위생관리형 어항으로 확대 추진
 - 1단계(2014~2018년) : 어항의 현재 여건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 2단계(2019년 이후) : HACCP 위생관리형 어항 도입 및 확대 추진

2) 어항 위생관리 교육 강화

- 어항관리자, 수협, 어업인 등 어항이용자를 대상으로 어항 위생관리지침 교육이수 의무화 추진
 - 어항 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업 허가갱신 시까지 연1회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2.3.2 어항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 어항은 항종별로 개발과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어항개발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의시설로 구분되며, 어항관리는 단순 시설관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까지 확장되어야 함
 - 현행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어항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운영·관리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 거점어항을 중심으로 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어항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 및 어항시설 이용자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운영관리가 필요함



〈그림 6.6〉 일본의 광역 거점어항 중심의 어항관리체계

3 법·제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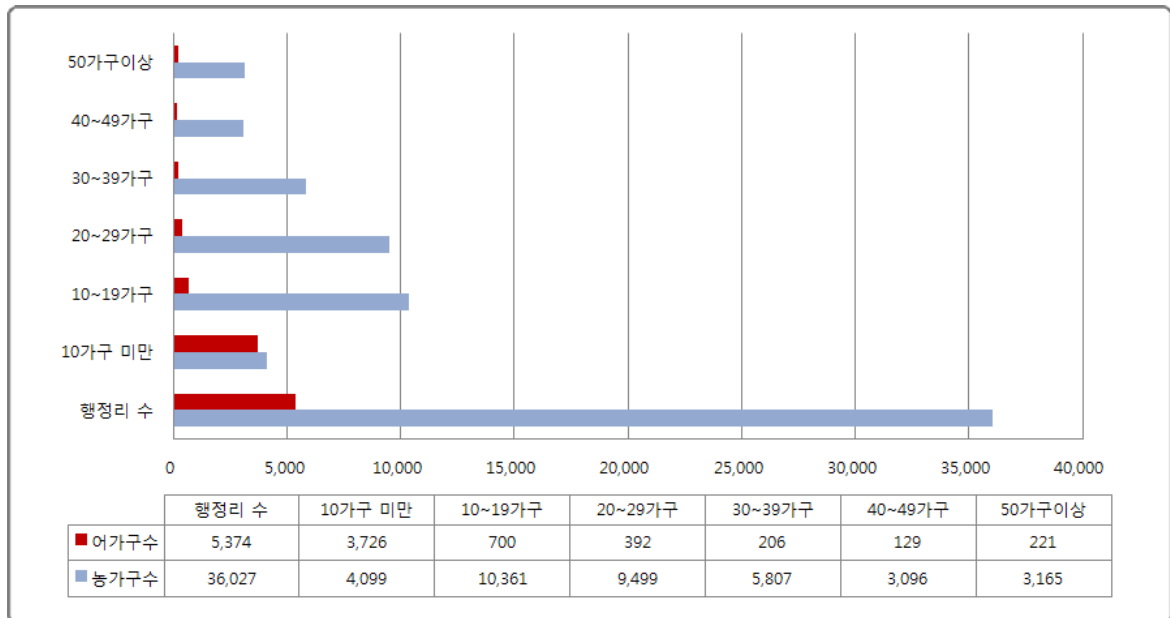
3.1 어촌어항법 개정

3.1.1 어촌의 공간적 개념 정립

- 현행 어촌의 공간적 정의는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어촌의 특성과 실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 현행 어촌어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의 전 지역은 사실상 농촌지역과 구분이 어렵고, 동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는 어촌의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구역 단위로 행정리로 한정하되 어가가 최소 10호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고시한 지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어항의 공간적 정의는 어항의 기본시설 위주로 명시되어 기능시설, 편익시설 등 어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항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방안까지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항만법의 항만에 대한 정의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성이 명시되어 있음

〈표 6.5〉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
제2조 (정의) 제1호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u>가. 행정리 중 어가 10호 이상인 지역</u> <u>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어촌지역으로 고시한 지역</u>
제2조 (정의) 제2호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어항이란 <u>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수산물 등 화물의 양륙 및 처리, 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u>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그림 6.7〉 농가·어가구별 행정리 수 비교

〈표 6.6〉 어가비율별 행정리 수

시·도	계	5% 미만	5~25%	25~50%	50% 이상
전국	5,374	2,661 (49.5%)	1,520 (28.3%)	727 (13.5%)	466 (8.7%)
부산광역시	40	22 (55.0%)	12 (30.0%)	6 (15.0%)	0 (0.0%)
인천광역시	128	46 (35.9%)	53 (41.4%)	19 (14.8%)	10 (7.8%)
울산광역시	40	31 (77.5%)	3 (7.5%)	5 (12.5%)	1 (2.5%)
경기도	343	292 (85.1%)	40 (11.7%)	8 (2.3%)	3 (0.9%)
강원도	317	192 (60.6%)	86 (27.1%)	31 (9.8%)	8 (2.5%)
충청남도	613	323 (52.7%)	96 (15.7%)	75 (12.2%)	119 (19.4%)
전라북도	510	271 (53.1%)	160 (31.4%)	46 (9.0%)	33 (6.5%)
전라남도	1,719	621 (36.1%)	544 (31.6%)	325 (18.9%)	229 (13.3%)
경상북도	421	236 (56.1%)	135 (32.1%)	43 (10.2%)	7 (1.7%)
경상남도	910	425 (46.7%)	283 (31.1%)	149 (16.4%)	53 (5.8%)
제주특별자치도	110	31 (28.2%)	60 (54.5%)	16 (14.5%)	3 (2.7%)

3.1.2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1) 국가와 지자체 간 관계정립

-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수립한 이후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계획수립과 이행계획에 대한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자체 간 관계가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어촌·어항발전시행계획을 마련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수립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2) 심의기구 개정

- 현행 어촌어항법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유사 법정계획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또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심의절차와 심의기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표 6.7〉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
제4조 제3항, 제4항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u>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3.1.3 어촌발전특별회계 도입

- 어촌발전특별회계는 어촌·어항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농어촌구조개선기금)이나 수산업법(수산발전기금)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어촌·어항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어촌발전특별회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재정된 유사사례를 통해 향후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촌발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어촌·어항정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입법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마련되어야 함

〈표 6.8〉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
어촌어항법 또는 어촌특화 발전 지원 특별법	-	제○조(어촌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어촌·어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어촌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어촌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보조금 2. ... ③ 어촌발전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어항정책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비 2. 어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비용 3. 어촌 인프라 지원 비용 4. 어촌 경영개선을 위한 비용 5. 어항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6.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구의 구성비 및 운영비 7. ...

3.1.4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구 설치

-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관리권자는 지자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인력, 예산의 여건과 정책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제대로 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담기구는 정부조직으로 별도의 관리청을 마련하는 방안과 민간조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정부조직으로 권역별 어항관리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항개발과 관리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동·서해어업관리단, 인천 어항사무소, 강릉 어항사무소를 기반으로 권역별 세분화에 따라 확대되어야 함
- 반면, 민간기구로 어항의 운영·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어항의 운영·관리 전담기구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예산 및 인력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어항시설 수익창출이 전제로 검토되어야 함

3.1.5 어항부지 민간매각·임대 방안 도입

- 어항부지 민간매각·임대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마련한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에 민간매각 및 임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다만, 어항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3.1.6 수산업 중심의 연안항 편입방안 마련

- 수산업 기능 중심의 연안항은 대부분 전국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지역에서 수산업 중심지 형성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어항정책에서는 배제되어 있음
 - 어항재생 사업으로 추진되는 연안항은 위판시설의 현대화와 위생고도화, 수산물 가공거점 단지,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 등 기존의 어항개발에서 미흡했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수산업 중심의 연안항을 어항정책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책적 타당성 검토와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수산업 중심의 연안항을 거점어항으로 전환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수산업 중심의 연안항(10개소)은 항만에서 어항으로 전환시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

3.2.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어촌 6차 산업화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침체된 어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가칭) ‘어촌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 관련법률 제·개정

3.3.1 (가칭) ‘어촌발전기본법’ 제정

- 현행 「어촌어항법」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어촌의 정비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어촌발전의 기본적인 이념과 방향성, 발전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어촌발전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지역정책의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어촌어항법」 제정 당시에는 어항법의 골격에 어촌종합개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으나 기본법적인 위상에서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정책에 있어서의 다원적 기능, 가치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골격으로 재정될 필요가 있음



〈그림 6.8〉 (가칭) '어촌발전기본법'의 위상

3.3.2 도서등지의 어업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영토 관리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서지역에서 열악한 생활환경과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지역개발 차원의 도서지역에 관한 제도와 일반적인 농·어업인 지원 제도는 있으나, 도서지역 어업인들에 특화된 지원 제도는 부재

〈지역개발 측면〉

-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도서지역 중 일부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 (372개 도서 - 제3차 도서개발종합계획)
 - 개발대상 도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성장촉진지역(186개 /국토부)과 특수상황지역(186개 /안행부)으로 구분, 지원사업 추진

〈정책대상 측면〉

-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특별법 등에 의거 전체 농어업인 및 농어촌 지원



〈그림 6.9〉 도시지역 지원관련 법률 체계

- 도시지역에 대한 정책은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안) 마련과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함

과업 참여자 명단

◎ 용역명 :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분야별	성명	소속	자격현황	비고
사업책임	이상기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토목 특급기술자	
여건분석 및 개발수요 검토	황철민	(주)대양건설터트	토목 특급기술자	
	서규학	(주)대양건설터트	토목 특급기술자	
	정성식	(주)대양건설터트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토목 특급기술자	
	오재우	(주)대양건설터트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토목 특급기술자	
	김형욱	(주)대양건설터트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토목 중급기술자	
	김남균	(주)대양건설터트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토목 중급기술자	
	김충현	(주)대양건설터트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토목 초급기술자	
정책방향 수립 및 경제성 평가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이현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고민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이승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학사	
	김현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학사	
기본계획 수립 (어촌부문)	이서구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연구소)	토목 특급기술자	
	최규철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연구소)	토목 중급기술자	
	심정남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연구소)	학사	
	김민경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연구소)	학사	
기본계획 수립 (어항부문)	남광훈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토목 고급기술자	
	정범수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토목 초급기술자	
	권오열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토목 초급기술자	
	강효균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경제학 석사	
	장재규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토목 초급기술자	